



東北亞歷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40호 2013. 6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차례

특집 |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 세계사 및 한국사와의 연계 방안

김기봉 | 한국 역사학의 재구성을 위한 방법으로서 동아시아사 11

윤해동 |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를 보는 방법

– 제국과 근대국가 그리고 지역 35

이근우 | 동아시아사 교과서 서술 내용에 관한 제언

– 동아시아의 문자 '한자'를 중심으로 65

박혜정 | 지구사적 관점으로 본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

– 인도양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토대로 109

박근철 |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기술 내용과 개선 방안

– 2012년판 〈동아시아사〉 전근대 부분을 중심으로 141

유용태 | 동아시아 지역사 서술의 현황과 과제

– 고등학교 『동아시아사』(2012) 근현대 부분을 중심으로 177

강신주 |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연계 방안 215

논문

홍승현 | 魏晉南北朝時期 中華意識의 변용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253

이동진 | 간도의 조선인 추구 - 마을과 학교에서 민족으로 313

연구윤리위원회 구성 · 운영 규칙 354

Contents

Special Issue Methodologies and Narratives of East Asian History: Connecting Korean History and World History

Kim Gibong ▮ East Asian History as a Methodology for Reconstructing History
in Korea 11

Yun Haedong ▮ Understanding “Korean History as East Asian History”
through Empire, Modern State, and Region 35

Rhee Kunwoo ▮ Korean History as East Asian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Chinese Characters 65

ParkHyejeong ▮ Searching for a Global Historical Methodology and a Narrative
of East Asian History: A Critical Review of Indian Ocean Studies 109

Park Geunchil ▮ The Descriptive Contents in 〈East Asian History〉 Textbooks
and Means of Improvement 141

Yu Yongtae ▮ Narrating the Regional History of East Asia in Korea’s Recent
Textbooks: The Present Situation and Tasks 177

Kang Sunjoo ▮ Incorporating World History in the High School East Asian
History Textbook 215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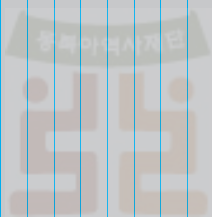
Articles

Hong Senghyun ▮ The Transformation of Sinocentrism in the Wei, Jin, Nan,
and Bei (魏晉南北朝) Period and the Regional Dynamics of East Asia 253

Lee Dongjin ▮ Soccer Games among Koreans in Gando: From Villages and
Schools to Ethnicity 313

특집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
세계사 및 한국사와의 연계 방안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서문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을 통해, 오랫동안 한국사와 세계사로 이원화되어 있던 고등학교 역사과 교과목에 ‘동아시아사’란 새로운 영역이 추가되었다. 청소년이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를 갖추 수 있는 역사인식을 배양한다는 취지에서 도입된 것이다. 비록 정부 주도였지만, 지역사로서 ‘동아시아사’라는 새로운 역사인식의 범주가 대두한 것은 향후 한국의 역사학과 역사교육의 맥락에서 큰 전환적 의의를 갖는 것이었다.

국사와 세계사의 이분법적 역사인식, 그것은 근대 서구에서 발흥한 역사적 산물이었다. 우리는 일제강점기에 배운 이분법적 역사인식을 해방 이후 반세기가 넘도록 답습해왔다. 근대화가 제1의 국가 목표였으므로, 서구 근대화 과정에 발달한 역사학이 그대로 연구와 교육의 기본 모델로 채택되었다. 국민국가 건설의 교육도구로서 국사를 강조하는 한편, 서구가 먼저 세계를 ‘발견’하고 ‘정복’하는 원인과 과정으로서 세계사를 당연시하며 배웠다. 그러나 20세기 후반부터 세계의 역사 환경이 달라졌다. 냉전종식과 함께 급박해진 시장자본주의의 세계화 추세, 탈근대, 탈식민주의 및 다문화주의 같은 문화운동의 확산 등은 역사학에도 큰 반향을 일으켜서 유럽중심주의적 세계사와 일국중심의 국사를 비판하고 수정하려는 움직임이 일어났다. ‘국사를 넘어서는(transnational)’ 동시에, 다중심적 세계를 구성하는 역사 공간으로서, ‘지역사(regional history)’라는 개념이 떠올랐다.

2007년 ‘동아시아사’라는 교과목이 신설된 것은 일견 세계 역사학의 최신 동향에 부합하는 것처럼 보였지만 몇 가지 문제가 있었다. 우선 동아시아사의 통사 서술을 위한 학계의 준비가 턱없이 부족했다. 지역사를 어떻게 개념화할 것이며, 특히 기존의 동양사 체계에서 압도적이던 중국중심주의적 경향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는 매우 미미한 상태였다. 1990년대부터 서울

의 몇몇 대학에서 동아시아사 관련 교과목이 개설되기 시작했으나, 대개는 다루는 시기나 주제가 한정된 것이었다. 동아시아사를 세계사처럼 통사적으로 구성하려는 시도는 전무했다. 오히려 전문 연구자들이 ‘동아시아사’ 교과목 신설을 계기로 비로소 그것의 개념화와 서술방식을 본격적으로 논의하기 시작한 것이 실상이었다. 동북아역사재단에서 발간한 『동아시아의 역사 I·II·III』를 위시해, 최근의 몇몇 연구서들이 그 성과다.

동아시아 지역사 서술을 위한 이론적 기반의 부재는 필연적으로 국사는 물론 세계사와의 관계에서도 문제를 드러냈다. 이런 문제점은 2007년도 개정 고등학교 『한국사』·『동아시아사』·『세계사』 교과서를 함께 읽어보면 바로 드러난다. 세 교과과정의 체계와 서술방식은 좀처럼 서로 연계되어 있지 않으며, 심지어 종종 서로 충돌하기도 한다. 가령 세계사는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기 위해 새로운 체계와 서술방식을 도입했다. 지역을 세계사의 기본 단위로 설정하고, 세계화(globalization)에 이르는 인류의 통합은 지역 간의 정복 전쟁보다 평화적인 인적·물적 교류에 따른 것임을 강조하는 방법을 택했다. ‘동아시아사’ 역시 중국 중심의 역사서술을 벗어나기 위해, 역내의 인적·물적 교류를 통한 공통문화의 형성과정을 중시하는 방식을 취했다. 그러나 중심주의 해체와 지역 간(혹은 지역 내) 평화적·수평적 이주와 교류를 강조한다는 방법적 유사성을 제외하면, 정작 동아시아 지역사의 체계와 서술은 ‘세계사’ 교과에서 동아시아 지역사가 취급된 방식과 거의 아무런 연관도 갖고 있지 않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동아시아 지역사와 한국사의 연계의 부재다. 동아시아 지역사 구성의 목표는 원칙적으로 이중적일 수밖에 없다. 중국 중심의 동양사를 해체하고, 다른 한편으로 한국사를 어떻게 그 지역사 속에 통합시키는가이다. 그런데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을 고안하는 과정에서 후자는 거의 고려 사항이 아니었다. 일국중심적 성격이 강한 ‘한국사’ 교과서와 탈중국중심적 ‘동아시아사’ 교과서 사이의 현저한 부조화와 간극은 거의 필연적인 결과였다.

탈근대 및 세계화가 대세인 21세기에, 지역사로서 ‘동아시아사’를 구상하고 그것을 고등교육에 도입한 것은 매우 시의적절한 시도였다. 1990년대 이래 미국에서 시도하고 있는 ‘새로운 세계사’ 혹은 ‘지구사’가, 전 인류가 하나로 통합

되는 세계에 대한 비전을 과거 속에 구현하려는 시도이듯, 적어도 한국에서 동아시아 지역사는 비슷한 의미를 갖는다. 한국이 당면하고 있는 중국, 일본과의 역사 분쟁을 해결하고 평화공존할 수 있는 방안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사는 한국의 역사학계가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하는 시급한 현안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을 개발하기 위한 한국사·동양사·서양사 세 분야 전문가들의 공동노력이 절실하다. 이번 공동연구는 그런 문제의식의 산물이며, 크게 세 가지 목표를 설정했다. 첫째로, 한국의 역사학연구와 교육에서 동아시아사가 갖는 의미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논의를 강화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두 방향으로 모색하였다. 하나는 공동연구자 김기봉이 제안하듯이, 해방 이후 현재까지 한국 역사학의 기본적인 지형을 형성해온 한국사·동양사·서양사의 3분 체제와 그 사이의 격벽을 허무는 것이며, 그 해체와 재구성에서 국사와 세계사의 중간 범주인 지역사로서 동아시아사의 가능성·불가피성을 이론화하는 것이다. 다른 하나는 한국사와 중국사 전문가, 그리고 한국사·중국사와 서양사 전문가들의 연계 토론과 협의다. 이는 이번 연구기획의 중심축 중 하나로, 동아시아사의 이론과 서술방법을 개발하기 위해 한국사·중국사·세계사(서양사)의 연계방안을 모색하려 했다.

이 연구의 두 번째 목표는 동아시아사 서술방법의 구체적인 사례들을 개발하는 것이다. 즉 과거 한국 혹은 중국의 일국사적 관점에서 논구되던 문제들을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재검토하여 후속 연구를 자극하고, 더 나아가 고등학교 동아시아 교과서 서술에 소재를 제공하려는 것이다. 공동연구자 윤해동은 한국 근대사를 동아시아사의 전망 속에서 어떻게 재구성할 것인가의 문제를 다루고, 이근우는 한민족의 찬란한 문화적 자산이라 할 수 있는 한글을 동아시아의 문자문화의 맥락에서 다시 볼 필요가 있음을 탐구한다. 한편, 박혜정은 동아시아 지역사를 지구사적 차원에서 조망할 필요성의 구체적 예증으로서 인도양 교역에서 동아시아의 위치를 검토한다.

마지막으로, 이번 연구는 보다 단기적으로 동아시아사 서술에 기여할 수 있는 방안으로, 2012년판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분석하고, 그것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박근철과 유용태가 각각 전근대와

근현대 부분을 맡았고, 강선주는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와 『세계사』가 서술의 체계와 소재라는 측면에서 서로 유기적인 연관을 갖게 할 방안을 검토했다. 특히 이 세 번째 연구목표가 거둔 소기의 성과는 다음 교과서 개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예상된다.

집필자들을 대신하여 김 경 현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한국 역사학의 재구성을 위한 방법으로서 동아시아사

김기봉 | 경기대학교 사학과 교수

I. 역사가로서 필자의 정체성

한국 역사학의 대분류는 한국사·동양사·서양사다. 그렇다면 역사학회 창립 60주년 기념학술대회에서 “한국 역사학의 재구성을 위한 방법으로서 동아시아사”라는 발표를 하는 필자의 역사가로서의 정체성은 이 셋 가운데 어디에 속하는가? 역사학 길드 내에서 어디에도 속해 있지 않는 연구자는 국적 없는 사람 처럼 역사학자로서의 대우를 받지 못한다. 분류는 권력이다.

독일에 유학하여 1996년 「역사주의와 신문화사: 포스트모던 역사서술을 위하여」라는 논문으로 박사학위를 받고 귀국한 필자는 독일 학계에 데뷔하자마자 은퇴한 꼴이 되었다. 한국어로 논문을 쓰는 필자의 학문적 활동무대는 한국으로 한정되고, 필자는 한국의 서양사학자 더 자세하게는 독일사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부여받았다. 하지만 지금까지 대학에서 독일사를 강의한 적은 한 번밖에 없다. 대부분의 대학 사학과 교과과정은 시대사 위주로 편성되었기

※ 투고일: 2013년 2월 20일, 심사일: 2013년 5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3년 5월 24일

때문에 독일사라는 과목을 따로 개설한 곳은 별로 없다. 이 같은 현실에서도 독일사 연구자로서의 정체성을 지키기 위해서는 독일사 논문을 써야만 한다. 하지만 그 논문을 몇 명이나 읽는가? 필자는 누구를 위해 그리고 무엇을 위해 독일사를 공부하는가? 역사연구와 역사교육을 위한 논문의 생산과 소비, 수요와 공급의 선순환 구조를 정착시키지 못하는 한에서, 한국에서의 독일사 연구는 본국인 독일 역사학의 해바라기 신세를 면치 못한다. 이런 회의적인 생각이 들면서 필자는 독일사학자로서의 정체성을 포기하고 한국의 역사가가 되는 길을 모색했다.

2011년 한국 독일사학회로부터 이민호 선생님을 추모하기 위해 출간한 『서양사학과 유럽중심주의』(강철구·안병직, 2011, 용의 숲)에 대한 서평을 써 달라는 의뢰가 왔다. 이민호 선생님은 한국 독일사학계의 대부다. 지난 세대 한국에서의 독일사 연구의 지류는 이민호 선생님이라는 호수로 모아졌다고 말할 수 있다. 1970년대 중반 독일 역사학은 역사주의에서 역사적 사회과학으로의 패러다임 전환을 했고, 이민호 선생님은 이 같은 독일사의 변화를 한국 역사학에 소개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주도적으로 했다. 그렇다면 그 이후 한국의 독일사 연구는 이민호 선생님이라는 호수에서 흘러나왔다고 말할 수 있는가? 그렇다고 말할 수 없다. 왜냐하면 한국의 독일사는 서양사의 일부이고 서양사연구는 자생적이지 않고 본고장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연구자들로 충족되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한국의 독일사연구 풍토를 한마디로 표현하면 ‘월인천강지곡(月印千江之曲)’이다. 독일 역사학이라는 달을 비추는 천 개는 커녕 수십 개에 불과한 개천으로 한국의 독일사학자들이 존재한다. 이민호 선생님은 그 같은 개천들을 배출한 호수에 불과하다.

이 같은 학문적 제국주의는 독일사뿐만 아니라 영국사·프랑스사·미국사 등의 서양사학 일반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이 현상을 타개하고자 최근 한국의 서양사학자들은 유럽중심주의로부터의 탈피를 주제로 하는 학술대회를 개최하고 저서를 출간했다(한국서양사학회, 2009). 한국의 서양사학이 유럽중심주의에서 벗어나야 한다는 것은 당위다. 하지만 아무리 그로부터의 탈피를 소리 높여 외쳐도 그건 ‘미션 임파서블(mission impossible)’처럼 보인

다. 이유는 한국의 서양사학 자체가 유럽중심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이다. 한국의 서양사학은 일제강점기에 태어난 ‘사생아’다. 19세기 말 일본사학자들은 서구 근대화의 거울로서 서양사를 발명했으며, 그렇기 때문에 서양사라는 자식을 버리지 않고 유럽중심주의라는 목욕물이 더럽다고 탓하는 것으로 문제가 해결될 수 없다.

한국 서양사학자들은 유럽중심주의라는 원죄를 가진 역사가들이다. 한평생 누구보다도 독일 역사학의 최신 연구경향을 소개하고 전파하는 안테나 역할을 했던 이민호 선생님은 말년에 그 원죄를 깨닫고 다음과 같은 자기 고백을 했다. “요즘처럼 역사의 ‘발명’이 유행어처럼 떠도는 시절도 없었을 것이다. 그런데 정말 유럽사가 이슬람 세계를 왜곡시켜 ‘발명’된 것이라면, 유럽(서양)을 사회 발전의 모델로 삼아 변경에서 유럽사를 평생 공부한 필자 같은 사람은 자신의 학문적 생애 자체에 대한 엄청난 회의를 가질 수밖에 없게 된다. 그리고 근대 학문 자체가 베버나 맑스의 개념 위에서 구축된 이상, 그리고 이 개념에 따라 학문해온 이상, 이 개념들 ‘바깥’ 사유의 공간을 탐사하는 게 지레 두려울 뿐만 아니라 그것이 가능하기라도 한지 의문스럽기만 하다.” (강철구·안병직, 2011: 58)

구미 역사학의 중심에서 똑같은 문제를 고민한 역사가가 터키 태생으로 중국현대사를 전공한 아리프 딜릭이다. 그는 이 문제를 화두로 해서 1999년 「유럽중심주의 이후 역사학은 존재하는가」라는 논문을 발표했다(Dirlik, 1999). 과거가 실재라면 역사는 그것을 지칭하는 이름인데, 세계의 지역을 나누고 시대를 구분하고, 그리고 사회 변동을 설명하는 거의 모든 개념이 유럽의 근대 역사학이 만든 것들이다. 결국 역사학이 과학의 한 분야 자체가 유럽중심주의라는 기의(signified)를 내포하고 있는 ‘근대의 기호(a sign of the modern)’로 만들어진 것이라면, 유럽중심주의 바깥에서 역사를 연구하고 서술한다는 것이 어떻게 가능할 수 있는가? 서양사학자도 한국사학자도 그렇다고 동양사학자도 아닌 필자는 역사학의 디아스포라가 되고자 한다. 디아스포라는 학문적 권력에서 배제될 수 있다는 두려움은 있지만 안과 밖의 경계선 상에서 가로지르기 사고를 할 수 있는 학문적 자유를 가진다.

지금 한국 대학의 사학과가 고집하는 국사·동양사·서양사라는 역사학 분류체계는 기본적으로 유럽과 근대 중심주의에 입각해서 성립했다. 이에 비해 2007년 역사교육과정에 ‘동아시아사’라는 교과목이 신설되면서 역사교육 체계의 변동이 생겨났다. 고등학교 역사교과서가 한국사·동아시아사·세계사로 나누어 서술됨으로써, 국사와 세계사로 양분된 역사교육 체계가 재편성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발생했다. 국사·동양사·서양사가 역사를 지역적인 공간으로 구분하여 병렬하는 분류방식이라면, 한국사·동아시아사·세계사는 나열적 병렬이 아닌 동심원적 확대를 지향한다. 동아시아사는 한편으로는 한 국사와 중복되고, 다른 한편으로는 세계사의 일부를 이룬다. 그렇기 때문에 일차적으로 문제되는 것이 동아시아사의 위상과 정체성이다. 이 글에서 필자는 논문은 동아시아사 탄생이 국사·동양사·서양사라는 분류체계를 흔드는 한국 역사학의 지각변동을 일으키는 계기가 될 수 있다는 문제의식으로 21세기 한국 역사학의 재구성을 위한 방법으로서 동아시아사에 대한 제언을 하고자 한다.

II. 역사지식의 고고학

과거에 대한 이야기로서 역사라는 서사를 구성하는 3요소는 인간·공간·시간이다. 어떤 역사를 연구하고 쓰느냐는 이 3요소를 어떻게 조합하느냐로 결정된다. 다시 말해 역사란 특정 인간, 특정 시간, 특정 공간을 중심으로 과거 사건들을 계열화하는 것으로 만들어지는 서사다. 계열화란 서로 관련되는 계통이나 조직을 구성해내는 일이며, 이 같은 계열화를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과거라는 사라진 세계는 역사라는 지식으로 체계화된다.

한국 역사학에서 역사라는 지식 체계의 계열화는 한국사·동양사·서양사의 3분과 체제로 이뤄진다. 이 같은 3분과 체제는 역사의 3요소 가운데 공간인 한국·동양·서양이라는 상상의 지리를 상수로 하여 구성된 것이다. 그런데

문제는 한국사를 정의하는 한국이란 무엇인가는 말할 것도 없고, 동양과 서양의 구분이 너무나 자의적이라는 사실이다. 예컨대 아프리카 대륙은 동양인가 서양인가? 기본적으로 유럽중심주의가 역사학의 ‘사물의 질서’를 그렇게 배열하도록 만든 에피스테메(episteme)이며, 이 같은 담론으로 유럽은 비유럽에 대한 지배를 정당화하는 권력을 생산해왔다.

유럽중심주의란 유럽인이라는 특정 인간들의 관점에서 과거 인간 삶의 궤적을 근대라는 시간성에 이르는 과정으로 보고, 이 같은 과정이 전 세계로 공간적인 확장을 하는 것이 보편사적인 인류 문명의 발전임을 주장하는 담론이다. 지난 한 세기 동안, 특히 제2차세계대전 이후 유럽중심주의는 역사서사의 인간·시간·공간의 조합을 결정하는 매트릭스(matrix)로 작동했다. 이에 근거해서 “구미인들은 세계를 정복했고, 지역의 이름을 다시 지었고, 경제·사회·정치를 재조정했으며, 시간과 공간 그리고 다른 많은 것들을 인식하는 전 근대적 방식을 지우거나 주변부로 몰아냈다. 그 과정에서 그들은 전례 없이 그들 자신의 이미지로 역사를 보편화했다. 이 같은 자아상에서 핵심은 합리적 인문주의의 주체를 역사 주체로 삼는 패러다임이 유럽의 계몽사상에 의해 정립됐다는 것이다. 이 패러다임은 이성과 과학을 무기로 보편적 이성이란 이름으로 시간과 공간을 정복하고, 합리성의 영역으로 모두 끌어들이도록 사회를 재조직하고, 인류 진보의 요구를 충족하기 위해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보편사를 만들어내기 위해 다른 대안적인 역사의 궤적들을 예측시켰다. 또한 이 패러다임은 구미의 역사적 경험을 인류의 운명으로 만들었으며, 그럼으로써 변화하려는 열망이 세계에 만연시킨 고통을 합리화하는 데 이바지했다.” (Dirlik, 1999: 3)

비유럽인들의 유럽중심주의가 설정한 근대 기획에 대한 복무는 자발적이었고, 오히려 그들 가운데 누가 먼저 자발적으로 복무하느냐로 근대로의 진입 순위가 결정되고 아류 제국주의 국가로 도약할 수 있는 기회를 획득했다. 동아시아에서 선두주자는 일본이었다. 일본 역사가들에 의해 주도된 국사·동양사·서양사로 범주화되는 근대 역사학 분류체계는 유럽중심주의를 내면화하려는 노력의 소산이었다. “오리엔트가 서양사를 창조하기 위한 ‘과거’를 제공했

던 것처럼, ‘동양’은 일본사에 대하여 정치적 발전, 사회적 이상, 군사적이며 문화적인 팽창, 문화적 가치와 같은 문제를 해명해주는 권위이고 선례가 되었다. 그러므로 역사가들은 일본의 기원과 아시아의 관계를 해결하기 위해 과거로부터 무엇인가를 끄집어내고 있었던 곳과 마찬가지로 ‘동양’을 구성해내고 있었다.”(다나카, 2004: 112)

일본은 지리적으로는 동양에 속하지만 문명적으로는 비서구로서는 유일하게 서구 근대에 진입했다는 脫亞入歐의 자의식으로 ‘동양사’를 발명했다. 이 같은 동양사의 중요한 발명자는 시라토리 구라키치[白鳥庫吉]다. 그는 중국을 ‘지나’로 바꾸고, 이를 조선에서 만주를 거쳐 중앙아시아와 서역 그리고 더 나아가 동유럽까지를 포괄하는 동양이라는 더 넓은 시공간 속에서 상대화시켜서 중화사상 대신에 일본식 오리엔탈리즘을 주입시킬 목적으로 ‘동양사’를 발명했다. 이렇게 일본의 근대 역사학은 ‘일본의 오리엔트(Japan’s orient)’로서 동양이라는 심상지리를 매개로 국사·동양사·서양사라는 서양의 역사학에는 없는 역사학의 3분과 체도를 정립했다. 이 같은 3분과 체도의 정착에는 1894년 청일전쟁과 1905년 러일전쟁의 승리 그리고 1910년 한국 병합이 깊은 연관성을 가진다. 먼저 일본은 청일전쟁의 승리로 중화질서를 해체하는 ‘탈아’를 증명해 보였다면, 러일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입구’ 했음을 전 세계에 과시했다. 그리고 마침내 아시아에서 패권을 장악한 일본이 아시아의 맹주로서 서구 제국주의와의 경쟁에서 동아시아 인민들을 동원할 필요가 생겼을 시점에는 동서양 문명충돌론에 입각해서 ‘대아시아주의’와 ‘대동아공영권’의 담론을 만들어냈다.

국사·동양사·서양사로 역사학 분과를 나누었을 때 문제는 조선사의 위상이다. 정치적으로는 국사인 일본사에 포섭되지만, 역사적으로는 문명화의 대상으로서 동양사로 자리매김되어야 했다. 식민지 조선의 관학을 대표하는 경성제국대학 사학과는 서양사 과목을 배제하고 대신 조선사 강의를 개설함으로써 국사·동양사·조선사의 3분과 체제를 유지했다. 식민지 조선인들에게 세계사적 시야를 열어주지 않기 위해서 서양사 과목을 개설하지 않았던 반면, 사학과에 입학한 일본인의 다수가 조선사를 전공으로 선택했다는 사실로부터 경성제대 사학과가 추구하는 3분과 체제의 의도를 읽을 수 있다(박광현,

2009).

해방 후 국사는 자연스럽게 일본사에서 한국사로 교체되었지만 동양사는 그대로 계승되었다. 그 결과로 일본사의 부재가 한국의 역사학에서 나타났다. 해방 후 일본사는 사학과 체제상으로는 동양사에 속하게 되었지만, 일제시대 경성제대를 졸업한 조선인 가운데 국사학 전공자는 전무했기 때문에 일본사 없는 동양사는 오랫동안 지속했다(고병익, 1969: 349). 일제하에서 일본사와 동양사 사이의 애매한 역사로 있었던 조선사가 해방 후에는 일본사의 위치로 전위됨으로써, 일본사는 정통 동양사가 아닌 주변부 동양사로 인식되었다.

일본의 근대 역사학 3분과 체제가 동양사를 자국사의 지배대상으로 삼는 황국사관에 입각해서 정립되었다면, 패전 이후 이에 대한 반성으로 둘 사이의 연계를 모색하려는 노력으로 동아시아세계론이 등장했다. 동아시아세계론의 주창자는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다. 戰前의 일본 역사학은 동양사와 분리된 지배의 유아독존적 주제로서 일본을 부각시킴으로써 '일본사 속의 동아시아사'를 추구했다. 이에 반해 니시지마는 일본사를 구축하는 장기지속의 구조로서 동아시아 지역세계를 중심축으로 하여 '동아시아사 속의 일본사'를 재구성하는 시도를 했다. 그는 전후 일본사의 정체성과 앞으로 나아갈 방향을 재설정한다는 문제의식으로 일본이 동아시아 지역세계와 어떤 깊은 연관을 맺어왔으며, 동아시아문화권에서 어떻게 존재했는지를 탐구했다.

그는 동아시아를 “중국을 중심으로, 주변의 한반도·일본·베트남 및 몽골에서 티베트고원 사이에 있는 서북회랑시대 동부의 여러 지역을 포함”한다고 정의했다(니시지마 사다오, 2008: 24). 이 지역들을 하나의 동아시아세계라는 문명권으로 묶었던 요인은 한자문화, 유교, 율령제 그리고 불교 네 가지다. 이 네 가지 가운데 특히 중요한 것이 한자다. 중국에서 제작된 문자인 한자가 언어를 달리하거나 아직 문자의 사용을 모르는 인접한 여러 민족에게 전파됨으로써 한자를 매체로 하여 상호 의사소통이 가능해짐과 동시에 중국의 사상과 학술이 전파될 수 있었다. “다른 공통 지표인 유교·율령·불교만 하더라도 한자를 매개로 하여 이 세계에 확대된 것이기 때문에, 한자는 동아시아세계의 가장 기본적인 지표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니시지마 사다오,

2008: 25)

동아시아가 이 같은 한자문화권을 형성할 수 있었던 바탕은 책봉체제였다. 원래 책봉체제는 중국에서 황제를 정점으로 귀족과 관료 간에 맺는 군신관계 체제로 탄생했다. 중국이 이 책봉관계를 주변의 여러 지역과 민족으로 확대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역사세계가 동아시아세계다. 전근대 동아시아에서 국제관계는 이 책봉체제를 매개로 실현되고, 또 일단 실현되면 그 논리에 따라 자기 운동을 시작하며, 문물제도의 전파도 이에 동반함으로써, 그것은 “단순히 중국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국제적 질서 수준을 넘어, 국제 정국을 움직이는 형식이자, 그것이 움직이는 무대 그 자체”였다(니시지마 사다오, 2008: 135).

조공·책봉 관계로 맺어지는 동아시아 세계질서에 가장 모범적으로 포섭되었던 왕조가 조선이라면, 그 질서의 안과 밖의 경계선 상에서 동아시아 천하 질서의 안정을 위협하는 세력은 일본이었다. 책봉체제에 도전하는 결정적인 사건이 1592년에 발발한 임진왜란이다. 책봉체제에 의거해서 명나라가 참전함으로써 전쟁이 소강상태에 빠졌을 때 열렸던 강화회담에서 히데요시가 요구했던 조건 가운데 하나가 감합무역의 부활이었다. 히데요시는 감합무역을 경제적 관점으로만 이해했다. 그는 감합무역이 일본이 책봉체제에 포섭된다는 전제조건을 충족할 때만 재개될 수 있다는 당시 국제관계의 질서에 대해 무지했다. 실제 역사에서 일본이 책봉체제에 실질적으로 포섭되었던 시기는 얼마 되지 않지만, 문화적으로 볼 때 일본은 한자문화권에 속했기 때문에 동아시아세계의 일원으로 존재했다.

화이사상적인 동아시아 세계질서가 중국문명의 문화적 우월성을 근간으로 성립했다면, 서구문명에 비해 중국문명이 열등하다는 것이 만천하에 드러나면서 동아시아세계는 붕괴하기 시작했다. 근대세계의 형성과 동시에 동아시아세계의 해체가 진행될 때 이 지역 국가들이 걸었던 역사의 길은 세 가지 방향이었다. 첫째, 일본은 스스로를 구미적 근대국가로 전화시켜 자본제 사회의 길을 추진하여 근대세계에 참가했다. 둘째, 중국은 국가로서의 구체제를 변화시키는 일 없이 근대세계의 중압을 계속 받는 형태를 지속했다. 셋째, 조선과 베트남은 근대세계의 압박을 받고 주권을 상실하고 식민지로 전락했다(니시지마

사다오, 2008: 275).

청일전쟁은 일본이 동아시아세계의 구체제인 책봉체제의 근간을 무너뜨린 전쟁다.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에서 승리한 일본은 동아시아세계에서 이탈하여 서구 근대로 진입했다는 명분으로 주변 지역을 침략했다. 이 같은 일본의 동아시아세계로부터의 이탈과 파괴를 니시지마는 일본 근대사의 비극이라고 규정했다. 일본은 지금까지 자기를 길러준 동아시아세계가 유럽제국주의에 파괴당할 지경에 이르렀을 때 제일 먼저 근대세계의 논리를 전유하여 스스로가 파괴자의 편에 서서 일익을 담당했다(니시지마 사다오, 2008: 284-285). 일본은 자기가 속한 세계가 붕괴하는 중대한 위기에 독창적인 가치체계를 가진 대안적 세계관을 창출하기보다 오리엔탈리즘을 내면화하여 서구형의 부국강병 논리로 침략전쟁을 감행했다.

주체적인 가치창출을 하지 않고 서구의 근대세계를 모순 없이 수용했다는 것이 동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일본이 서구 열강과 같은 자리로 도약할 수 있었던 성공 요인으로 지적되기도 했다. 하지만 민주주의와 인권과 같은 서구 근대성의 내용은 생략하고 형식적 모방을 통해 근대세계를 체현했다는 일본의 착각은 결국 서구 열강과의 전쟁으로 치닫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는 마치 히데요시가 명나라에 대해 감함무역의 재개를 주장하면서 책봉체제는 거부하고 정유재란(丁酉再亂)을 벌였던 것처럼 세계관의 무지가 빚어낸 비극이었다.

니시지마는 태평양전쟁 이전[戰前] 체제에서의 독선적이고 특이화된 일본사의 전개는 동아시아세계로부터의 이탈을 꿈꾸면서도, 탈피해야 할 동아시아세계의 잔재를 신체 여기저기에 남기고 있는 현실의 모순이 연출해낸 희극이라고 말했다. 동아시아세계는 정치적 세계로서는 유효 만료된 이후에도 망탈리테처럼 일본인들 속에 강고하게 체질화된 부분으로 잔존하고 있는 장기 지속의 구조였다. 따라서 그는 “어떻게 하면 일본사를 중국사·한국사·베트남사와 일체화시켜 이해하고 일본문화의 형성과 발전을 동아시아세계의 일환으로 이해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으로 동아시아세계론을 제시했다. 니시지마의 동아시아세계론은 1960~1970년대 냉전시대에서 일본사의 정체성과 방향정립에 대한 고뇌를 반영하는 역사적 사유였지만, 냉전 종결 이후 발생한 역사적 혼돈

속에서 일본인들이 미래에 살아갈 세계관을 어떻게 구상하느냐의 맥락에서 재사유되고 있다(니시지마 사다오, 2008: 296). 니시자마가 일본사를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의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는 인식틀로 동아시아세계론을 제안한 것처럼, 동아시아사는 오늘날 유럽중심주의를 에피스테메로 해서 구성된 국사·동양사·서양사라는 근대 역사학의 3분과 체제를 해체하여 재구성할 수 있는 방향키의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이 이 연구의 작업가설이다.

근대란 역사의 무대가 동아시아에서 세계로 바뀌는 전환점이다. 이 전환기에서 일본 근대 역사학은 유럽중심주의에 입각해서 동아시아세계를 망각하고 ‘유럽적’ 세계 개념을 전유하여 역사학의 3분과 체제를 정립했고, 그 체제가 한국의 역사학에 그대로 전수되어 오늘날에까지 3분과 사이의 소통과 융합을 막는 학문적 분류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 탈냉전을 맞이하여 한국 역사학에서는 동아시아사의 귀환이 일어나고 있고, 이를 계기로 적어도 역사교육에서는 한국사·동양사·서양사라는 공간적 구분을 지양하는 한국사·동아시아사·세계사라는 역사인식 범주상의 동심원적 연계로 개편되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필자는 21세기 한국 역사학의 재구성을 위한 방법으로서 동아시아사에 대해 생각해보고자 한다.

Ⅲ. 재구성을 위한 방법으로서 동아시아사

기본적으로 역사란 ‘우리는 누구인가’의 이야기이다. 이 같은 역사이야기를 구성하는 요인은 위에서 말했던 것처럼 인간·공간·시간이다. 예컨대 자국사의 공간적 범주를 어디로 설정하느냐로 우리가 누구인가가 다르게 이야기되며, 자국사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규정하느냐로 우리의 정체성이 달라진다.

한국사란 “한국인은 ……이다”에 대한 이야기이다. 여기서 한국인이 주어라면 ‘……이다’는 술어다. 예컨대 “한국인은 사람이다”에서처럼 한국인이라는 주

어가 개체라면, 사람이라는 술어는 보편에 해당한다. 그런데 전근대와 근대는 서주어와 술어가 관계를 맺는 방식이 다르다. 원래 주어라는 영어 단어 subject는 라틴어 문법에서 술어를 통해 무엇이라고 묘사되는 주어를 가리키던 *subiectum*이란 단어에서 유래했다. 문자 그대로 술어의 ‘아래에 *sub* + 던져진 것 *iectum*’이란 뜻으로, 술어에 종속되는 논리적 주어를 지칭하던 개념이었다.

전근대에서 한국사와 중국사의 관계는 이 같은 술어에 의한 주어의 종속관계로 구현되었다. 이것을 전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 현재 전하는 최초의 한국사인 김부식의 『삼국사기』다. 김부식은 『삼국사기』의 편찬을 끝냈다는 것을 왕에게 보고하면서 올린 글에서, “지금 학문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五經·諸子の 서적과 秦·漢 역대 사기에 대해서는 간혹 환하게 알며 자세하게 설명하는 자가 있지마는 자기 나라 일에 대해서는 그 전말을 알지 못하고 있음은 매우 개탄할 일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김부식(1145), 2004: 479]라고 썼다. 이 같은 김부식의 개탄은 고려 지식인들이 “본국사는 중국사다”라는 주술관계로 고려의 정체성을 인식함으로써, 개체사로서 본국사를 보편사로서 중국사에 해소시켰다는 사실을 알려준다.

조선시대까지의 교육은 千字文을 배우는 것으로 시작했다. 아동은 천자문을 습득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중국을 세계의 중심으로 설정하는 중화주의 담론을 내면화했다. 천자문을 떤 다음 서당에서 일반적으로 배우는 것이 조선 중기 朴世茂가 저술한 『童蒙先習』이다. 여기서도 보편사인 중국사가 먼저 나오고 뒤에 자국사가 본국사의 이름으로 부록처럼 첨부되었다. 요컨대 전근대에서 우리 역사는 중국사라는 보편사의 하위역사로 위치한 ‘동아시아사 속의 한국사’였다.

근대로의 전환은 보편적인 술어로부터 개체적인 주어의 독립을 선언하는 것으로 일어났다. 이러한 독립선언이 데카르트의 “나는 생각한다. 고로 존재한다”는 테제다. 근대에서 주어인 나는 세계를 인식하는 주체가 됨으로써, 술어에 의해 종속되는 개체가 아니라 술어를 규정하는 존재가 되었다. 모든 개체가 주체가 될 때 술어는 더 이상 개체를 종속시키는 보편이 아니라 주체에 따라 전유되는 객체의 위치로 전락한다.

이 같은 주술관계의 전도를 반영해서 개체사와 보편사의 위상변화가 나타났다. 중화세계질서의 해체와 함께 성립한 대한제국은 갑오개혁을 통해 전통 시대 개체와 보편의 관계로 설정된 본국사와 중국사 대신에 본국사와 만국사로 역사교육 체계를 재편성했다. 여기서 본국사가 ‘국사’의 전신이라면 만국사란 세계사의 원형이다. 갑오개혁은 “인민에게 먼저 國史와 國文을 가르칠 것”을 교육개혁의 기본 방향으로 설정함으로써 중국사라는 보편을 해체하고 자국사의 관점으로 세계사를 인식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했다.

한국사학사에서 술어인 중국사로부터 주어인 한국사의 독립을 선언한 역사가는 한국 근대 역사학의 아버지 신채호다. 전근대에서 조선왕조의 정통성은 중국의 천하질서에 종속된 개체라는 것을 책봉 형태로 승인받는 것으로 확보될 수 있었다. 책봉체제란 천자에 대한 예를 체득하는 것을 근간으로 해서 성립하는 도덕 정치(moral politics)다. 아편전쟁에서 패배한 이후 중화세계 질서는 급속도로 붕괴함으로써 약육강식의 권력 정치(power politics)로 작동하는 만국공법 질서에 편입하는 것이 시대적 과제가 되었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근대적인 국민국가로의 전환을 해야 하며, 이 같은 시대적 요청에 부응하여 본국사의 주체성을 확립하는 민족사로서 ‘국사(the National History)’를 확립하는 것이 역사학의 첫 번째 과제가 되었다. 이 같은 문제의식으로 신채호는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정의함으로써, 아의 역사로서 ‘국사와 비아의 역사로서 세계사의 분리가 생겨났다. 신채호의 민족주의 역사학은 한국사의 주체성을 정립하는 성과를 낳았다. 하지만 이를 통해 보편적 문명과의 연관 속에서 자국사를 문명교류사로 파악하는 역사인식 태도는 사대주의 내지는 식민주의사관으로 폄하되어 비판받음으로써, 한국사의 동아시아사적 맥락은 은폐되고 배제되었다.

하지만 세계화시대에서 시대정신은 바뀌어서 “민족주의는 반역이다”라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제기됨과 동시에(임지현, 1999), 문명사의 관점에서 한국사를 재구성해야 한다는 제안이 등장했다(이영훈, 2004). 전근대에서는 왕조사로서 본국사가 중국사라는 보편사에 종속되는 방식으로 현재와 과거의 대화를 하는 의사소통관계를 지향했다면, 근대에서는 민족이라는 주체가 타자로서 세

계와 교류하면서도 갈등을 빚는 방식으로 현재와 과거의 대화를 하는 의사소통관계의 전환이 일어났다. 역사는 돌고 돈다는 말처럼, 민족주의시대가 저물고 세계화시대가 도래하면서 개체와 보편의 전통적인 관계가 복원되는 방향으로 역사가 흘러가고 있다.

전근대에서는 중국 중심의 천하질서가 우리나라[我邦]라는 주어를 종속시키는 술어였다면, 세계화시대에서 한국은 글로벌리티(globality)라는 관계망에 종속되어 있다. “우리는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야 하는지”를 알기 위해서 역사를 연구하고 쓴다면, 우리의 정체성과 나아갈 방향설정은 보편적 관계망 속에서 모색되어야 한다. 오늘날 대한민국의 성공은 보편적 세계문명과 소통의 성과로 이룩된 것이고, 선진국으로의 도약 역시 글로벌 스탠더드에 얼마나 빨리 도달하느냐에 달려 있다. 20세기 초 서구 근대문명이라는 세계사적 보편으로의 진입에 뒤처졌기 때문에 일제식민지로 전락한 우리 역사가 21세기에서는 전 지구화라는 또 다른 보편사적인 도전에 직면해 있다는 것이 지금 우리가 처한 역사현실이다.

세계화시대에서 새로운 문명사적인 도전에 응전해야 한다는 과제를 짊어지고 있는 21세기 한국의 역사학은 민족사적인 “아와 비아의 투쟁”을 강조하는 역사가 아니라 문명교류사적인 ‘문화적 기억’을 상기하는 역사를 써야 한다. 한국사의 맥락에서 이 같은 문명교류사적인 ‘문화적 기억’을 고고학적으로 발굴할 수 있는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가 바로 동아시아사다.

문제는 한국사·동양사·서양사라는 3분과 체제에서 동아시아사의 위치다. 그동안 역사학에서 3분과 체제상의 분류는 다른 전공영역에 관심을 갖는 것을 영역 침범으로 간주하여 경계하고 지탄하는 학문 권력으로 작동했다. 이 같은 현실에서 한국사와 동양사의 경계를 허무는 접변과 교차의 역사로서 동아시아사의 등장은 3분과 체제의 학문 권력에 대한 도전이 될 수 있다.

변화의 바람은 역사학이 아니라 역사교육 쪽에서 불어왔다. 2007년 역사교육과정에 ‘동아시아사’ 교과목이 신설되면서 고등학교 역사교과서는 자연스럽게 한국사·동아시아사·세계사로 나뉘짐으로써, 역사학과 역사교육 사이 분류체제상의 불일치가 발생했다. 결론적으로 말해 세계가 하나의 지구촌을

이루고 사는 세계화시대에서 한국사·동양사·서양사로 역사공간을 나눠서 연구하고 교육하는 것은 시대착오다. 한국사가 전근대에서는 동아시아, 근대 이후에는 세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전개되었다는 것을 고려할 때, 한국의 역사학 분류체계는 한국사·동아시아사·세계사로 재편성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근대 역사학 자체가 근대성의 기호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앞서 딜러이 딜레마로 지적했듯이 “유럽중심주의 밖에는 역사가 없다.” 최근 역사학에서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안으로 탈식민주의,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 전 지구사의 세 가지 흐름이 나타났다. 동아시아사는 한국사의 맥락에서 이 같은 세 가지 흐름을 종합하는 수렴(convergency)을 할 수 있다. 먼저 동아시아사는 탈식민주의 관점을 전유하여 식민지근대성을 밝히는 연구를 할 수 있다(신기욱·마이클 로빈슨, 2007). 식민지근대성이란 근대라는 보편사적 시간 속에서 식민화됨으로써 이룩된 동아시아 근대의 개체성을 역사화하는 개념이다. 다음으로 한국사와 동양사의 융합을 추구하는 동아시아사는 근대 역사학의 ‘국사’ 패러다임을 대체하는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의 전형이 될 수 있다. 전 지구사는 유럽의 세계화 대신에 ‘유럽의 지방화’를 추구하는 방식으로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서려는 노력을 하지만 근대 자체를 문제 삼기보다는 그것을 전제로 삼고 있기 때문에 유럽중심주의를 근본적으로는 극복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진다. 이에 반해 근대의 병리학의 관점에서 식민지근대성을 해명하는 동아시아사는 탈근대의 맥락에서 전통과 근대, 보편과 개체의 새로운 결합태(configuration)를 모색하는 역사적 방법의 실험의 장이 될 수 있다.

우리 역사에서 동아시아는 외부와 내부, 그리고 글로벌과 로컬의 접변지대로 존재한다(신주백, 2010). 이 같은 접변에 위치한 지역세계의 역사로서 동아시아사는 전 지구적으로 역사를 사유하면서 지역적으로 역사를 만드는 ‘글로벌(glocal) 히스토리’의 차원을 열 수 있다. 한국 역사학의 3분과 체제는 역설적이게도 한국사는 민족주의, 동양사는 중국중심주의, 서양사는 유럽중심주의라는 각기 다른 중심주의를 내면화하고 있는 것으로 성립한다. 이에 대해 ‘글로벌 히스토리’를 추구하는 동아시아사는 이 세 가지 중심주의를 넘어설 수 있는 역사적 시야를 열어줌으로써, 역사학의 3분과 체제를 재편성하는 지렛대의 구실

을 함과 동시에, 문명교류사의 관점에서 21세기 한국이 나아갈 방향을 가리켜 주는 나침판의 기능을 할 수 있다. 다음으로 이 같은 동아시아사의 가능성을 우리 역사를 문명사적인 관점에서 시대구분해 보는 방식으로 타진해보고자 한다.

IV. 한국 역사학의 ‘문명사적 전환’

2012년에 새로 마련한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중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 기준”은 한국사란 무엇이며 한국사를 어떻게 서술할 것인지를 다음과 같이 새롭게 규정했다. “원래부터 한국인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우리는 역사를 통해 한국인이 되었다. 이처럼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형성해온 과정을 이야기하는 것이 우리 역사이며, 한국사가 전근대에서는 주로 동아시아, 근대 이후에는 세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전개되었다는 점에 주의를 기울인다.”

위 집필기준에서 강조한 것은 두 가지다. 첫째, 한국인은 태초부터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역사적으로 형성된 정체성이라는 사실이다. 인간의 어느 한 집단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DNA는 무엇보다도 문화다. 우리가 인간이 된다는 것은 모든 인간(everyman)이 되는 것이 아니라 특정한 종류의 인간이 된 것이며, 이러한 특정한 종류의 인간을 주조하는 것이 바로 문화다(기어츠, 1998: 74). 그런데 한국인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유전자인 한국 문화 역시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문명의 도전과 응전을 통해 변해왔다. 생태계에서는 가장 강한 종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종이 살아남는다고 한다. 따라서 한국인의 위대함은 단일민족으로서의 문화적 유전자를 보존해왔다는 것이 아니라 외부 문명의 도전에 대한 응전을 잘 하여 한국인의 문화적 유전자를 진화시켜 왔다는 사실에서 기인한다.

둘째, 집필기준은 한국인이 외부 문명의 도전에 대해 응전을 전근대에서는 동아시아, 근대에서는 세계라는 역사 공간에서 했다는 것을 학생들이 잘 인식할 수 있도록 한국사를 기술할 것을 주문했다. 동아시아 지역세계에서 벗어나 세계를 향해 문호를 개방해야 했던 시기가 근대이며, 이 중요한 시기에 우리가 '문명사적인 전환'을 하는 데 지체했기 때문에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다.

종래의 '국사'는 민족을 주체로 하여 역사를 '아와 비아의 투쟁'으로 파악하는 경향성을 가졌다. 이에 반해 우리 역사를 전근대에서는 동아시아, 근대 이후는 세계와의 연관성 속에서 문명사적으로 파악할 것을 요구하는 이번 집필기준은 역사인식의 프레임을 '탈국사화' 하는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를 지향하라는 주문을 담고 있다. 그런데 역사교육에서의 이 같은 국면 전환을 일으킨 모멘텀이 되었던 것이 동아시아사의 탄생이다.

우리 역사의 무대가 동아시아에서 세계로 바뀌었다는 것이 역사에서 가장 주요한 시대구분인 전근대와 근대의 분기점을 형성한다. 고대·중세·근대라는 역사학 시대구분의 3분법은 전형적인 유럽과 근대 중심주의의 산물이기 때문에 지양되어야 한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시대구분 자체를 폐기하는 것은 역사연구와 역사교육 둘 다에서 득보다는 실이 많다. 중요한 것은 고대·중세·근대의 3분법을 대체할 수 있는 대안을 찾는 일이다.

역사의 3요소가 시간·공간·인간이라고 할 때, 한국사란 무엇인가도 이 3요소 가운데 무엇을 상수로 하여 구성하느냐에 따라 달라진다. 민족주의사관은 민족이라는 인간을 상수로 설정함으로써 역사를 통해 한국인이 누구인가를 이야기하는 대신에 한민족을 주어로 해서 한국사를 선형적으로 규정하는 문제점을 가진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공간을 범주화한 한국사의 정의다. 최초의 한국사 무대는 한반도를 포함하여 요동, 만주 지역이었다. 문화적으로 연결된 이 지역에서 우리 역사 최초의 국가인 고조선이 성립했으며, 고조선이 멸망한 이후에는 고구려가 이 지역을 차지했다. 그러다가 신라의 삼국통일을 전환점으로 한국사의 영역이 한반도로 한정되었다. 이른바 한국 고대사란 이 같은 역사적 과정을 어떻게 서술하느냐의 문제다.

페어뱅크는 동아시아를 중화세계질서(chinese world order)로 파악하고,

그것을 세 권역으로 나눴다. 첫 번째 범주가 내륙 아시아의 유목민들이나 그들이 세운 국가로 이뤄진 ‘내륙 아시아권’이다. 두 번째 권역은 중국의 책봉체제에 포섭된 한국과 베트남, 류큐(오키나와에 있던 왕국)가 속하는 ‘중화권’이다. 세 번째는 상당기간 동안 중화세계질서의 경계선상과 밖에 놓여 있었던 동남아시아와 남아시아의 국가들과 일본이 포함되는 ‘외부권’이다(Fairbank, 1968: 2).

한국사는 고조선과 고구려가 그렇듯이 ‘내륙 아시아권’에서 출발했다고 말할 수 있다. 내륙 아시아권에 속한 정치세력들은 중국과 책봉관계를 맺었지만 끊임없이 패권 다툼을 벌였다. 광개토왕비문에 따르면, 신라와 백제는 한때 고구려의 책봉국이었다. 중국에게 책봉을 받은 고구려가 다시 주변나라에 대해 책봉을 행하는 것으로 한반도의 지배질서가 자리를 잡았다. 이 시기 일본의 위상은 모호하다. 백제와 왜의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 칠지도다(주보돈, 2011). 369년 근초고왕과 그의 아들 근구수가 마한을 정벌하기 위해 남쪽으로 내려갈 때 왜병도 바다를 건너와 전쟁에 참여했다. 이 전쟁에서 백제가 승리하고 그 보답으로 백제의 왕세자가 일본 왕에게 선사한 물건이 바로 칠지도다. 칠지도 명문의 해석을 둘러싸고 백제와 왜 가운데 누가 더 우위에 있었는지에 대한 논쟁이 있지만, 중요한 점은 백제와 왜는 동맹관계에 있었다는 사실이다.

실제로 백제와 왜가 공동운명체임을 보여주는 결정적인 사건이 663년의 백촌강 전투다. 김부식의 『삼국사기』에는 백촌강 전투에 대한 어떤 서술도 없지만, 일본의 역사가들은 백제의 멸망 연대를 660년의 사비성 함락이 아니라 663년의 백촌강 전투로 기록했다. 이 전투에서 패배한 왜는 덴무·지토 천황 시기에 율령 체제를 구축하고 ‘일본’이란 국호를 사용했다. 신라의 삼국통일을 통해 한반도 전체가 당의 책봉체제에 편입됨으로써, 당의 세력이 일본에까지 미칠 것을 두려워 한 일본은 고대국가를 성립하고 중국 황제에 대항하여 제도로서 ‘천황’을 확립했다. 요약하면 고구려의 멸망으로 한국사의 무대가 한반도로 축소되었고, 백제의 멸망으로 한반도에서의 일본의 영향력은 쇠퇴했으며, 신라 삼국통일을 통해 한반도는 중국의 책봉체제에 포섭되었다. 이 같은 역사를 기록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를 동아시아사의 관점에서 보는, 곧 ‘동아시아사

로서 한국사'의 시각을 가져야 한다. 따라서 신라의 삼국통일 이전 우리 역사는 '동아시아사로서 한국사'이고, 삼국통일을 轉機로 해서 한반도 전역이 중국의 책봉체제에 포섭된 것을 계기로 우리 역사는 '동아시아사 속의 한국사'로 전환되었다.

고구려 이후 한반도의 어느 왕조도 한반도를 벗어나 중국과 영역 다툼을 벌이지 않았다. 문명사의 관점에서 보면, 단군조선에서 기자조선으로의 왕권 교체는 한국사가 중화문명권에 포섭되는 전기가 되었다. 현행 한국사 교과서에는 漢四郡에 대한 기술이 없다. 한사군은 한국사에서 최초로 그리고 가장 길게 외세의 식민 지배를 받았던 시기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한국문화는 중화문명을 직접 수용하여 한자문명권에 본격적으로 진입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했다. 동아시아가 한자를 매개로 하여 하나의 의사소통관계를 형성하고, 이것이 토대가 되어 상부구조로서 책봉체제가 관철되었다. 조선왕조에 이르기까지 책봉과 조공의 형식으로 중화세계질서에 포섭되었던 우리 역사는 '동아시아사 속의 한국사'로 서술되어야 한다.

우리 역사의 무대가 동아시아에서 세계로 향하는 근대의 기점은 개항이다. 이 사건을 출발점으로 하여 우리 역사는 '세계사 속의 한국사'로 무대를 확장했다. 이 같은 확장을 통해 문명의 교류망이 대륙에서 해양으로 바뀌었다. 서양이 주도하는 근대문명의 도전에 대한 응전을 제때에 못한 대가로 한국은 일제 식민지로 전락했다. 태평양전쟁에서 일본에 대해 미국과 소련의 연합군이 승리하자 한반도는 해양세력인 미국과 대륙세력인 소련의 대립의 장이 됨으로써 분단되고 말았다.

분단시대에서 문명의 충돌은 자본주의와 사회주의라는 이데올로기 싸움으로 전개되었다. 소련의 멸망으로 탈냉전시대가 도래함과 동시에 대륙세력인 중국이 굴기하고 이른바 한국을 비롯한 아시아의 네 마리 용이 부상하면서 지역세계로서 동아시아의 귀환과 동아시아공동체의 구상이 말해졌다. 그렇다면 앞으로 동아시아가 다시 세계의 중심이 되는 '리오리엔트'가 도래할 것인가? 미국과 중국이 세계의 패권 다툼을 벌이는 G2 시대에서 한반도의 나아갈 길은 무엇인가?

‘동아시아사로서 한국사’, ‘동아시아사 속의 한국사’ 그리고 ‘세계사 속의 한국사’ 이후 한국사는 남북분단과 같은 당면과제를 해결하고 통일국가의 미래 비전을 이루기 위해 다시 동아시아사로 귀환해야 하는가? 미국과 일본의 해양 세력과 중국이라는 대륙세력 사이에 놓여 있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치가 동아시아라는 지역세계를 우리 역사의 운명을 결정하는 장기지속의 구조로 작동하게 만들었다. 한국사의 중대 전환점이 되었던 나당전쟁, 임진왜란 그리고 한국전쟁이 발발했던 구조적 원인은 모두 동아시아사적 맥락과 연관되어 있다. 그리고 가까운 장래에 한반도 통일을 실현할 수 있는 일차적 조건이 중국과 일본의 동의다. 유럽공동체라는 미래 비전이 있었기에 독일 통일이 가능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한반도 통일이 동아시아공동체로 나아가는 발판이 될 수 있다는 믿음을 중국과 일본이 가질 때 한반도 분단모순 극복에 그들이 협조할 것이다. 자동차가 사고 없이 앞으로 계속 잘 달리기 위해서는 끊임없이 백미러를 통해 뒤를 돌아보아야 한다. 마찬가지로 G2 시대에서 한국사의 미래를 열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사로서 한국사’와 ‘동아시아사 속의 한국사’라는 과거에 대한 성찰을 해야 한다는 것이 21세기에서 한국사의 재구성을 위한 방법으로서 동아시아사에 대한 사고의 실험을 하는 이유가 된다.

참고문헌

1. 단행본

- 강철구·안병직 편, 2011, 『서양사학과 유럽중심주의』, 용의 숲
- 고병익, 1969, 『아시아의 역사상』, 서울대학교출판부
- 김기봉, 2006, 『동아시아공동체 만들기』, 푸른역사
- 김부식(1145), 고전연구실 옮김, 2004, 『三國史記』下, 신서원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9,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백영서, 2000, 『동아시아의 귀환』, 창비
- 백영서 외, 2005, 『동아시아의 지역질서 - 제국을 넘어 공동체로』, 창비
- 손승철 외, 2012,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학사
- 신기욱·마이클 로빈슨 엮음, 도면희 옮김, 2007, 『한국의 식민지 근대성. 내재적 발전
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넘어서』, 삼인
- 안병우 외, 2012,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 이상성, 2009,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한길사
- 임지현, 1999, 『민족주의는 반역이다 - 신화와 허무의 민족주의 담론을 넘어서』, 소나무
- 한국서양사학회, 2009, 『유럽중심주의 세계사를 넘어 세계사들로: 우리 시각으로 읽는
세계의 역사』, 푸른역사
- 기어츠, 클리퍼드, 문옥표 옮김, 1998, 『문화의 해석』, 까치
- 니시지마 사다오, 이성시 엮음, 송완범 옮김, 2008, 『일본의 고대사 인식: '동아시아세
계론'과 일본』, 역사비평사
- 다나가, 스테판, 박영재·함동주 옮김, 2004, 『일본 동양학의 구조』, 문학과지성사
- 프랭크, 안드레 군더, 이희재 역, 2003, 『리오리엔트』, 이산

2. 논문

- 박광현, 2009, 「식민지조선에서 동양사학은 어떻게 형성되었는가?」, 비판과 연대를 위
한 동아시아 역사포럼 기획, 도면희·윤해동 엮음, 『역사학의 세기: 20세기 한국과
일본의 역사학』, 휴머니스트, 131~174쪽
- 박원호, 2009,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 구성을 위한 재론」, 『한국사학보』 34
- 백영서, 2007, 「국사와 지역사의 소통: 동아시아인의 역사서술의 성찰」, 『역사학보』

196집

- 신주백, 2010, 「한국 현대역사학의 3분과제도 형성과 역사인식·역사연구방법」, 『동방학지』 149집
- 이영훈, 2004, 「민족사에서 문명사로의 전환」, 임지현·이성시 엮음, 『국사의 신화를 넘어서』, 휴머니스트
- 주보돈, 2011, 「百濟 七支刀의 의미」, 『한국고대사연구』 62

Dirlik, Arif, 1999, “Is There History after Eurocentrism?: Globalism, Postcolonialism, and the Disavowal of History”, *Cultural Critique*, No. 42(Spring)

Fairbank, John K., 1968, “A Preliminary Framework”, in John K. Faribank, ed., *The Chinese World Order: Traditional China's Foreign Relations*, Cambridge, M. A.: Harvard University Press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East Asian History as a Methodology for Reconstructing
History in Korea

Kim Gibong

The faculty division of National history, Asian history, and Western history, which is common in the history departments of Korean universities, is based upon the dual centrism of Europe and the modern. In contrast, secondary history education has been ruptured because the 2007 national standards for history created a new subject, East Asian history. Currently, secondary history education has been reorganized into national history and world histor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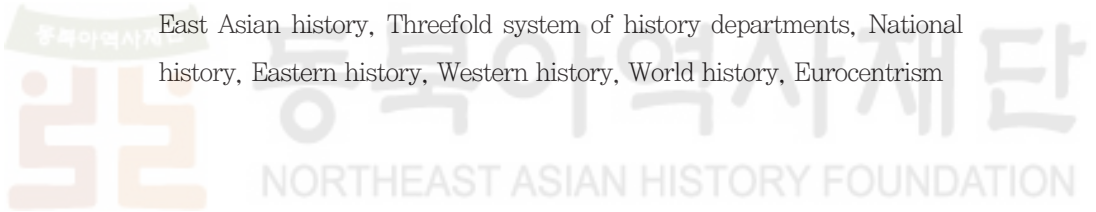
Whereas the categorization of National, Asian, and Western histories follows regional divisions, the categorization of Korean, East Asian, and Western history pursues a concentric extension, not an enumeration. On the one hand, East Asian history overlaps with Korean history. On the other hand, it is a part of World history. First, the location and identity of East Asian history is in question. East Asian history is located in an interactive zone of the internal and the external, as well as of the global and the local. This interactive East Asian history can open up glocal history which reflects on history globally and makes history locally.

Ironically, the threefold system of history departments in Korea is based upon an internalization of three different centrisms: the nationalism of Korean history, the Sinocentrism of Eastern history, and

the Eurocentrism of Western history. East Asian history pursuing glocal history can play the role of a compass for Korea in the twenty-first century by opening up a historical view for overcoming this threefold centrism. Departing from the idea that East Asian history could work like a diastrophism shaking up the faculty system of National, Eastern, and Western history in Korea, this paper addresses suggestions about East Asian history as a methodology for reconstructing history in Korea.

Keywords

East Asian history, Threefold system of history departments, National history, Eastern history, Western history, World history, Eurocentrism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를 보는 방법

- 제국과 근대국가 그리고 지역 -

윤해동 | 한양대학교 비교역사문화연구소 교수



I. 머리말

‘동아시아’라는 ‘지역’은 구체적으로 어디를 지칭하는 것인가? 고등학교에서 ‘동아시아사’라는 역사과 교과목을 운영하고 있는 교육부 혹은 교육부가 만든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기술한 ‘교과서’의 동아시아 지역 규정을 우선 살펴볼 필요가 있을 듯싶다. 학교 교육과정의 특성상 동아시아라는 지역 규정이 다른 연구서나 학술서적보다는 명확하게 드러날 가능성이 높고, 또 대학 입시교육과 관련하여 가장 크고 직접적인 사회적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현재 동아시아사 교육에는 두 종류의 검정 교과서가 출간되어 일선 학교에서 이용되고 있다.¹⁾ 그리고 이는 2007년에 만들어진 교육과학기술부의 「2007년 사회과 교육과정」²⁾에 의거하여 집필된 것이다. 그러나 교과서 검정과정 중

※ 투고일: 2013년 2월 20일, 심사일: 2013년 5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3년 5월 24일

1) 안병우 외, 2012,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손승철 외, 2012, 『동아시아사』, 교학사

2) 교육과학기술부, 2007, 「2007년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인 2009년에 교육과정 변경이 강행³⁾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기준」⁴⁾이 2011년에 새로 발표되었다. 따라서 현행 교과서는 「2009년 교육과정」과 2011년 「집필기준」에 따라 만들어진 새로운 교과서가 사용되기 이전까지만 유효한 ‘시한부 교과서’가 되었다.

동아시아 지역 규정과 관련해서는 「2007년 교육과정」과 「2009년 교육과정」, 2011년 「집필기준」 등 교육부에서 마련한 광의의 ‘지침’과 현행 두 종류의 교과서 사이에는 일정한 차이가 드러난다. 이런 차이는 교육과정이나 「집필기준」이 교과목의 성격과 교육 목표 및 내용을 개괄적으로 규정하는 정도에 머무르는 것인 반면, 교과서에서는 구체적인 시대규정을 마련해야만 하는 현실적인 기능의 편차 때문에 드러나는 문제인 듯싶다.

우선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동아시아사 교과목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동아시아사’ 과목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전개된 인간 활동과 그것이 남긴 문화유산을 역사적으로 파악하여 이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나아가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를 기르기 위해 개설된 선택 과목이다.”⁵⁾ 이 교육과정에는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고, 지역의 공동 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것을 교과목 개설의 목표로 설정하고 있을 뿐, 그 지역이 어디를 가리키는 것인지에 대해서는 함구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는 「2009년 교육과정」⁶⁾ 역시 동일하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내용을 통해 동아시아라는 지역이 대개 한국(북한을 포함), 중국, 일본이라는 세 개의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지칭하고 있음을 짐작할 수는 있겠다. 고대의 불교와 유교, 율령을 기준으로 시대의 성격을 규정한다든지, 북방민족을 부수적으로 취급하고 있는 등등이 그 범위를 짐작할 수

3)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년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4) 교육과학기술부, 2009,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기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이 집필기준은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에 적용하기 위하여 별도로 만들어진 것이다.

5) 교육과학기술부, 2007, 앞의 글

6) 교육과학기술부, 2009, 앞의 글

있는 전형적인 사례다. 북방민족을 포함하는 점에서는 현재의 몽골 공화국을 동아시아 영역으로 추가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현행 두 종류의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는 동아시아 지역 구분이 훨씬 명쾌하게 드러나 있다. 우선 천재교육판 교과서에는 동아시아 지역범주가 다음과 같이 권두에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다. “동아시아사의 무대는 동서로는 일본열도에서 티베트고원, 남북으로는 북부 베트남에서 몽골고원에 이르는 넓은 지역이다. 이 지역은 다시 몽골, 티베트, 중국 본토, 만주, 한반도, 일본열도, 북부 베트남 등의 지역으로 세분할 수 있으며, 오늘날 이곳에는 몽골,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의 나라가 있다.”(「동아시아의 지역 범주」)⁷⁾ 한편 교학사판 교과서에도 위의 교과서보다는 조금 소극적이지만, 동아시아의 지역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이 지역의 사람들은 한자, 유교, 불교, 율령 등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공통의 문화를 형성하였다. 이는 현재 동아시아를 구성하는 한국, 중국, 일본, 몽골과 북방 유목 지역 및 베트남 등의 사회제도, 국가조직, 문화를 설명하는 공통의 요인이 된다.”(「동아시아의 지역범주와 특성」)⁸⁾

단 현행 교과서의 이런 지역규정은 2010년 교육과학기술부에서 나온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역사)」라는 교육과정 해설서에 의거했을 가능성이 크다. 이 해설서에는 “(전략) 공간적으로는 오늘날의 한국, 중국, 일본, 베트남의 영역과 그 외의 동아시아 전 지역에서 활동한 민족과 국가(후략)”⁹⁾라는 방식으로, 비교적 명확하게 동아시아 지역이 규정되어 있다. 이렇게 본다면 「교육과정」이나 「집필기준」과 같은 상위규정이 아니라 교육과정 해설서를 준거로 교과서의 동아시아 지역범주가 규정되었다고 하겠다.

요약컨대 현행 두 종류의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첫째, 한자, 유교, 불교, 율령 등을 중심으로 한 공통의 ‘동아시아 문화권’을 바탕으로, 둘째,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 주변의 5개 국가를 대상으로, 동아시아 지역범주를 설정하고 있다

7) 안병우 외, 2012, 앞의 책, 12쪽

8) 손승철 외, 2012, 앞의 책, 11쪽

9) 교육과학기술부, 201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역사)」, 164쪽

는 점에서 공통점을 갖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이 두 가지 공통점은 각각 심각한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우선 첫째, 네 가지 요소를 중심으로 동아시아 문화권을 설정하는 방식은 1960년대 일본의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가 제기한 ‘동아시아 세계론’을 다분히 의식한 것처럼 보인다.¹⁰⁾ 그러나 니시지마 사다오의 이런 기원의 유사성 문제를 제쳐두더라도, 아래 비판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할 것이다. 한편으로 ‘동아시아 세계론’처럼 몇 가지 주요 요소를 중심으로 공통의 동아시아 문화권을 설정하는 방식은, 기본적으로 유럽적 일체성을 전제로 그와의 유비 속에서 도출된 것이라는 비판이 있을 수 있다.¹¹⁾ 그러나 더욱 문제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런 방식의 문화권론은 주류문화를 중심으로 문화권을 설정함으로써 주변의 비주류문화를 소외시키는 방식 곧 일종의 문화본질주의적 접근방식이 될 수 있다는 점이다. 그보다는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 속에서 상호 갈등하고 길항하면서 지속되어온 다양한 문화의 상호작용을 이해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¹²⁾

둘째, 두 개의 교과서에는 동아시아가 동서로는 일본열도에서 티베트고원, 남북으로는 북부 베트남에서 몽골고원에 이르는 지역을 포함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현재의 국민국가를 기준으로 볼 때, 베트남의 경우에는 북부지역만이 포함되어 있는 데 반해, 몽골의 경우에는 러시아령 시베리아 지역의 몽골 문화 지역이 배제되어 있다. 그리고 같은 중국 국가에 속한다고 하더라도, 청조 지배시기에 중국영역으로 포섭된 티베트와 신장 그리고 내몽골 지역을 같은 문화권으로 간주할 수 있는지도 의문이다. 요컨대 현재의 국민국가 5개를

10) 니시지마 사다오 저·이성시 편·송완범 역, 2008, 『일본의 고대사 인식-‘동아시아세계론’과 일본』, 역사비평사 참조.

11) 이성시, 2012, 「일본 역사학계의 동아시아세계론에 대한 재검토」, 『역사학보』 216집, 57~80쪽

12) 이런 문제의식에 대해서는 테사 모리스-스즈키·임성모 역, 2006, 『주변에서 바라본 근대』, 산치림; 岸本美緒, 2011, 「東アジア史の‘パラダイム轉換’をめぐって」, 國立歴史民俗博物館 編, 『「韓國併合」—00年を問う』, 東京: 岩波書店, 228~239쪽

기준으로 동아시아 지역범주를 설정한다고 할 때, 앞에서 거론한 동아시아 문화권과는 심각한 불일치가 발생한다. 따라서 위의 두 교과서처럼 초역사적인 방식으로 동아시아 지역범주를 설정하려는 시도는 처음부터 불가능한 것일지도 모른다.¹³⁾

물론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이해를 증진함으로써 그 지역의 발전과 평화를 추구한다는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현재의 국민국가를 중심으로 그 역사를 소급하는 방식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설정하는 것이 가장 손쉬운 대안일 수 있다. 그런 방식의 지역 설정은 ‘국민국가’의 주권과 영역을 훼손하지 않는 방식으로 과거의 역사를 재구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교육과학기술부가 동아시아사 교육에서 전제하고 있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은, 국민국가의 주권을 바탕으로 그 지역의 발전과 평화를 도모한다고 하는, ‘미래지향적 가치’를 중심으로 설정된 ‘역사적 지역’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터다.

이처럼 ‘역사적 지역’으로서의 동아시아는 자명하지 않다. 그런 맥락에서는 어떤 측면에서 지역범주 설정이 동아시아사 서술의 관전을 쥐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그렇다면 국민국가의 역사인 한국사(곧 일국사)를 동아시아사(곧 지역사)로 이해할 필요는 어디에 있는가? 동아시아 지역에서도 근대 국민국가 건설과정은 근대 제국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었다. 따라서 국민국가 건설과정을 근대 제국의 형성과 상호작용하는 과정으로 이해하는 것, 곧 동아시아의 제국사와 국민국가사(일국사)의 상호 관련을 해석하는 일이 필요한 것이다. 바꿔 말하면 동아시아 지역의 근대 이행 곧 ‘동아시아 근대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제국과 국민국가 그리고 그 양자의 상호 관련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제국과 국민국가의 상호 관련을 통해 역사적 지역을 이해하는 것, 그리

13) 동아시아 지역범주를 어떤 방식으로든 설정하지 않으면 기술을 시작하기 어려운 동아시아사 통사의 경우와는 달리, 동아시아 근현대사의 경우에는 이런 지역범주 설정의 곤란함으로부터 조금은 벗어나 있는 측면이 있다. 지역범주 설정 자체를 처음부터 제한함으로써 이런 난관을 탈피할 수 있을 것이다. 예컨대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처럼 역사기술의 주체를 제목에 붙여 지역범주를 제한하는 방식이다.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12,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휴머니스트 참조.

고 이런 작업의 필요성을 환기하는 것이 이 글의 목표다.

여기에서는 세 쌍의 은유적 개념을 통하여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를 설명하는 단초를 열어보고자 한다. 첫째, ‘모방과 차이’는 동아시아 지역에서의 제국의 이행 혹은 교체를 은유하는 개념이다. 중국이 근대적 제국을 건설하기 위하여 서구의 제국을 유비적으로 따라 했던 시도, 그리고 일본이 중화질서와 서구의 제국질서를 동시에 배우면서 새로운 근대적 제국을 수립하려 했던 추구를 ‘모방’과 ‘차이’라는 은유로 표현하려 하였다. 둘째, ‘자주’와 ‘종속’이라는 개념은 동아시아에서 제국의 이행과 교체 속에서 조선이 지향했던 바 혹은 위치하고 있었던 바를 나타내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분리’와 ‘통합’이라는 개념은 식민지 시기에 ‘식민국가’로부터 분리되어 기능하고 있던 조선의 ‘사회’를 은유한다. ‘조선 사회’는 일본제국 속에서 혹은 동아시아 지역 속에서 트랜스내셔널 지역사회의 일부로 형성되어 기능하고 있었다. 요컨대 동아시아 지역에서 제국의 이행과 교체, 그 속에서 조선이 차지하고 있던 ‘국가론적’ 위상, 그리고 ‘조선 사회’가 가지고 있던 트랜스내셔널한 성격을 차례로 하향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한국사가 갖는 동아시아사로서의 성격을 드러내려 하는 것이다.

II. ‘모방과 차이’ – 근대 동아시아 제국질서의 구축

이 장에서는 동아시아 지역의 두 제국 곧 청조의 중화제국과 일본의 근대제국 형성과정을 ‘모방’과 ‘차이’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살펴볼 것이다. 그 이전에 우선 제국이란 무엇인가에 대해 살펴볼 필요가 있겠다. 잘 알다시피 탈냉전 이후 전 지구화가 급속하게 진행되고 국민국가의 지위와 기능에 질적인 변화가 심각하게 진행되면서, 새로 대안적 이론으로 부상한 것이 각종의 ‘제국론’이다. 일종의 제국론 붐을 불러온 것은, 전 지구화가 불러온 변화 그중에서도 국경을 넘나드는 상품과 자본 그리고 사람의 이동이 국민의 주권성에 어떤 질적인 변

화를 초래하고 있다는 자각인 것처럼 보인다.¹⁴⁾ 거꾸로 말하면, 현재의 제국 이론이 대체로 ‘세계체제의 제국화’를 중심으로 진행되고 있는 것은, 전 지구화가 세계체제에 질적인 변화를 초래하고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윌러스틴은 세계체제론에서 이른바 ‘장기 16세기’에 세계-제국이 해체되고 세계-경제가 형성된 이후, 18세기 말에 가서야 국민국가를 단위로 세계가 분절화하는 것으로 규정한다. 따라서 그는 장기 16세기 이후 유럽을 세계-제국으로부터 국민국가로 이행하는 과도기로 이해하고, 그때 형성된 절대왕정 국가를 근대국민국가의 프로토타입(prototype)으로 규정한다. 그러나 이 시기의 비유럽 세계는 유럽과는 대조적으로 전근대적인 세계-제국이 할거하는 것으로 묘사한다.¹⁵⁾ 그리고 이는 이 시기의 세계를 중심·주변 관계로 환원하는 유럽중심주의적 발상이라고 비판되어 왔다.¹⁶⁾

제국론의 입장에서 이 시기를 보면, 역으로 글로벌한 제국의 시대로 해석될 수 있다. 절대왕정으로 분립되어 있던 유럽은 제국의 부재가 아니라 ‘불완전한 제국’이 복적거리던 상황으로 볼 수 있으며, 여기에 각 지역에서 지정학적인 중심을 형성하고 있던 러시아공국, 오스만투르크, 무굴제국, 청제국 등 보편성을 분유(分有)하던 지역제국들이 존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 제국들은 제국의 이념을 분유하는 범위 속에서 시스템을 폐쇄하고, 외부와의 교통의 압력을 억압적으로 관리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는 것이다.¹⁷⁾ 이처럼 장기 16세기 이후 19세기 초까지의 시기는 지역제국이 보편성을 분유하면서 각 지역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¹⁸⁾

14) 山下範久, 2006, 「帝國化する世界システム」, 山下範久 編, 『帝國論』, 東京: 講談社, 220~230쪽

15) 이매뉴엘 윌러스틴·나종외 외 역, 1999, 『근대세계체제』 I·II·III, 까치 참조.

16) 대표적으로 안드레 군더 프랑크·이희재 역, 2003, 『리오리엔트』, 이산 참조.

17) 山下範久, 2006, 앞의 글, 220~230쪽

18) 야마시타 노리히사[山下範久]는 장기 16세기 이후 19세기 초까지 존재했던 제국을 ‘근세제국’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근세라는 개념은 일본 학계 특유의 시대구정으로서, 초기근대 정도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山下範久, 2008, 『現代帝國論』,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79~107쪽

그렇다면 지역제국으로서 청조의 통치는 어떤 성격을 가진 것이었던가? 만주족 왕조인 청조는 17세기 이후 자신들의 출신지인 만주만이 아니라, 티베트와 신장 그리고 몽골까지 자신의 지배영역으로 끌어들이고 있었다. 또한 현재의 외몽골 정도를 제외한다면, 청조의 지배영역이 1950년대 이후 현대 중국의 영토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改土歸流’라는 슬로건 아래 이루어진 이런 지배영역 확장은 무슨 근거로 추진되었던 것일까?

청조의 통치는 기본적으로 몽골제국의 통치를 계승하는 성격을 갖고 있었다. 유라시아대륙의 정복에 기초한 몽골적 통치는 중국의 황제를 복수의 세계·보편성을 통치하는 입장으로 변화시켰다. 중국의 황제는 이제 단순히 중화세계의 보편성의 체현자일 뿐만 아니라, 복수의 세계를 메타 레벨의 입장에서 총괄하는 것이 요청되었던 것이다. 건륭제가 ‘중화제국’에서 ‘세계제국’으로 변화하기 위하여, 중화사상을 넘어서 ‘중외일체’의 이념을 내세웠던 것은 이런 이유 때문이었다. 중국 황제는 유교와 불교, 그리고 이슬람교를 등거리의 현실적 통치대상으로 삼는, 다시 말하면 복수의 ‘세계’를 통치하는 논리 위에 서야 했던 것이다.¹⁹⁾

17세기 이래 러시아 세력의 팽창과 티베트 불교의 영향으로 몽골 초원을 둘러싼 역학관계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면서, 청조는 이제 전통적인 관례를 거부해온 지역까지 통합의 대상으로 삼아야 했다.²⁰⁾ 이에 청조는 중화제국이자 동시에 내륙아시아의 제국이 되었다.²¹⁾ 그러나 이런 청조의 제국적 군사 팽창과 영토 확장은 17세기 이후 지역제국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난 현상이었다고 볼 수 있다. 곧 17세기 이후 본격화된 모스크바공국 곧 러시아의 시베리아 진출과 청조의 신장 정복은 연관성이 높으며, 러시아의 영역 확장과 영향을 주고

19) 山下範久, 2008, 위의 책, 79~107쪽

20) 토마스 바펠드·윤영인 역, 2009, 『위태로운 변경』, 동북아역사재단, 537~594쪽

21) 이런 시각은 미국의 新淸史 연구에서 특히 두드러지는 것이다. 김선민, 2010, 「청제국의 변경통치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윤영인 외,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85~124쪽

받은 결과라는 해석이다.²²⁾

이런 해석이 정당하다면, 우리는 이를 청조의 ‘제1차 제국화’ 시도라고 부를 수 있지 않겠는가? 물론 이때의 제국은 16세기 이후 서구의 절대왕정 국가를 중심으로 확장되기 시작한 ‘불완전한’ ‘근대제국’을 지칭하는 것이다. ‘근대제국’이란 전근대 제국의 일반적인 특성과는 달리, 근대국가적 통합성을 목표로 삼아 새로운 지배영역을 통치하는 제국을 말한다.

다른 한편 18세기 산업혁명을 통해 지배력을 확장한 자본주의 세계체제와 본격적으로 접촉하기 시작하면서, 중국의 변경지배도 큰 폭의 변화를 겪게 되었다. 19세기 중반 청조는 신장과 타이완을 포함한 변경지역의 가치를 새로이 논의하기 시작하였다. 海防派와 塞防派의 논쟁은 양자 모두 한중중심주의의 입장에서 변경정책을 검토한 데에 공통점이 있었다. 또한 1884년의 신장성 건립에서 드러나듯, 이 시기 운남, 타이완, 만주 등의 다른 변경지역에서도 성을 건립하거나, 한인을 이주·정착시키고, 유교 교육을 적극적으로 보급하는 정책이 실시되었다.²³⁾

이처럼 1870년대 이후 청의 조야에서는 호전적 분위기가 팽배하였다. 청은 조선을 새로 설치한 東三省 방어를 위한 완충국으로 보전해야 한다는 전략적 판단에 근거하여 조선에 대한 종래의 宗主權을 국제법 질서 속의 從屬관계 즉 실질적인 지배관계로 변화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내었다. 조선이나 베트남의 내정과 외교에 대한 개입은 전통적인 조공·책봉체제로부터의 이탈을 의미하는 것이었다.²⁴⁾ 물론 이런 의도가 일본을 포함한 서구제국의 견제로 그대로 실현되었던 것은 아니지만, 이를 청조의 ‘제2차 제국화’ 시도라고 지칭할 수 있을

22) 피터 퍼듀·공원국 역, 2012, 『중국의 서진』, 길, 27~40쪽; Jane Burbank and Frederick Cooper, 2010, *Empires in World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pp. 185~217

23) 김선민, 2010, 앞의 글, 85~124쪽

24) 김한규, 1999, 『한중관계사Ⅱ』, 아르케, 819~915쪽; 김용구, 2004,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문학과지성사; 이삼성, 2009,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한길사, 263~313쪽; 오카모토 다카시·강진아 역, 2009, 『미완의 기획, 조선의 독립』, 소와당, 77~185쪽 참조.

것이다.

19세기 이전 만주족 왕조의 북방영토 확대 시도는 성공하였고 19세기 후반 주변 조공국에 대한 종속화 시도는 실패하였지만, 두 번에 걸친 청조의 이런 시도는 오랜 전통을 가진 중화세계적 질서관을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였다. 이리하여 19세기 후반 동아시아 지역의 국제질서는 중국 중심의 역사적 질서 곧 중화질서와 국민국가 중심의 공법질서 곧 자본주의 세계체제적 국가 간 질서(inter-state system)가 뒤섞이는 ‘혼란의 세계’로 그 모습을 드러내었다. 서양의 제국주의적 침략으로 중화질서적 위계는 약화되거나 파괴되었고, 일본은 그 틈새를 뚫고 들어감으로써 제국주의적 발전을 수행할 수 있었던 것이다. 이처럼 청조의 ‘제국화’는 중화제국의 해체와 함께 시도되었다.

한편 19세기 후반~20세기 초반(곧 제1차세계대전 전후까지)에 걸쳐 수행되고 있던 일본의 제국주의적 발전은, 국민국가를 기반으로 한 근대화 과정과 중첩된 것이었다. 국민국가적 근대화를 수행하면서 일본은 청일전쟁과 러일전쟁을 계기로 근대 제국으로 성장하고 있었다. 1870년대 이후 일본은 홋카이도와 오키나와는 물론, 두 번의 전쟁을 통하여 타이완과 조선까지 자신의 식민지로 편입시킬 수 있었다. 이를 근대 일본의 ‘제1차 제국화’ 시도라고 부를 수 있겠다. 일본의 제1차 제국화 시도는 한편으로는 유럽의 제국주의적 침략과 지배를 모방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화질서적 지배논리를 비유적으로 차용한 것이기도 하였다. 제국 일본은 동종동문과 같은 슬로건을 통하여 동아시아적 동일성을 강조하는 한편으로, 조공·책봉질서의 잔재를 동원하기도 하였다. 식민지의 새로운 臣民은 내지와 동일한 천황의 적자이므로 一視同仁으로 대우하겠다는 수사는, 중화 중심의 천하관을 근대 제국의 통치에 동원한 것이었다.²⁵⁾ 일본제국이 선사한 한편의 멋진 희화가 아니겠는가?

25) 야마무로 신이치·정재정 역, 2010, 『러일전쟁의 세기』, 소화, 171~189쪽; 윤해동, 2011, 「동아시아 식민주의의 근대적 성격-예로부터 피로의 이행」, 『아시아문화연구』 22집, 88~98쪽 참조.

제1차세계대전 이후 전승국 일본은 독일의 식민지 남양군도를 ‘위임통치령’으로 흡수함으로써, ‘제1차 제국화’ 시도를 마감하고 이른바 ‘공식제국’을 형성하게 되었다. 일본의 공식제국에는 ‘일본본토’와 ‘공식 식민지’가 포함되었다. 다시 일본본토에는 ‘내국식민지’로 메이지유신 이후에 흡수한 홋카이도[北海島], 오키나와[沖繩, 琉球], 오카사와라[小笠原], 지시마[千島] 등이 포함되며, ‘공식 식민지’로는 타이완[臺灣], 사할린 남부[南樺太], 조선 그리고 關東州와 남양군도가 들어가게 되었다. 그리고 일본본토를 공식적으로 ‘내지’로, 식민지를 ‘외지’라고 부르는 관습이 정착하게 되었다.²⁶⁾

일본제국은 1930년대 초반 중국령 만주를 침략하여 ‘만주국’이라는 ‘근대국가’를 건설하였다. 이후 제국적 영토확장을 근대 일본의 ‘제2차 제국화’ 시도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제2차 제국화 시도에는 제2차세계대전 발발 이후 편입시킨 광범한 ‘대동아공영권’ 지역 역시 포괄되었다. 일본의 제2차 제국화는 새로 확장한 영역을 자신의 영토로 포함시키거나 식민지로 끌어들일 수 없는 세계자본주의적·국제정치적 상황에서 시도된 것이었다. 그런 점에서 이 시기에 확장된 제국의 영역은 식민지로 표상되지는 않았다.

일본제국은 이런 제2차 제국화 시도를 통해 ‘비공식제국’을 극적으로 확대하게 되었다. 비공식제국은 다시 滿蒙과 중국 등을 주체로 하는 ‘북방권’의 ‘傀儡政權’ 지배지역과, 동남아시아로 확장된 ‘남방권’의 ‘군사점령지’로 구분되었다. 대동아공영권으로 표상되는 일본제국은 이처럼 ‘남방으로 비대한 제국’이었다. 후발 제국주의 국가 일본은 ‘근린지역’을 공식·비공식 제국으로 흡수해 나감으로써 거대한 제국을 형성할 수 있었다. 또한 ‘동화주의’를 공식 식민정책으로 채택하면서, 나중에는 외지인의 황민화 정책까지 추진하게 되었다.²⁷⁾

이리하여 일본의 식민지배는 이른바 ‘동양주의’와 깊은 관련을 맺게 되었으며, 일본제국이 중심이 되어 새로 형성된 ‘권역’은 이른바 ‘대동아공영권’으로서

26) 山本有造, 2011, 『「大東亞共榮圈」經濟史研究』,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3~44쪽

27) 山本有造, 2011, 위의 책, 3~44쪽

그것은 서양 문명과 대립하는 새로운 문명으로 표상되었다. 물론 이 시기에도 王道樂土라든지 八紘一宇 등과 같은 중화주의적 천하관에 입각한 은유 역시 적절하게 활용되었다.²⁸⁾ 이처럼 근대 일본의 두 번에 걸친 ‘제국화 시도’는 서양제국의 제국주의적 확장을 모방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화질서적 지배의 은유를 폭넓게 동원한 것이기도 하였다. 이런 점에서 근대 동아시아에서 제국질서가 구축되는 과정을 ‘모방과 차이’의 과정으로 부를 수 있을 듯싶다. 물론 그 차이는 모방의 과정에서 드러나는 차이를 말하는 것이다.

Ⅲ. ‘자주와 종속’ - 제국질서와 ‘조선’

여기에서는 ‘자주’와 ‘종속’이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에 형성되었던 제국질서 가운데서 조선이 어떻게 자신을 변용하여 갔던가를 살펴보려 한다. 왕조국가가 식민지로 변화하는 가운데서 조선의 국가론적 위상이 어떻게 바뀌고 있었던가를 이해할 수 있게 될 것이다.

17세기 만주족의 청조가 성립한 이후 중화체제의 주변에서는 이른바 소중화 관념이 뚜렷이 드러나기 시작하였다. 조선, 베트남, 일본, 오키나와 등의 주변지역에서 중화사상을 새로운 방식으로 전유하는 사상적 경향이 나타났던 바, 이를 소중화주의로 일반적으로 지칭하고 있는 것이다.²⁹⁾ 이때 주변지역에서 전유하고 있던 중화는 현실에서 드러나는 청조의 보편성이 아니라, 고대의

28) 윤해동, 2011, 앞의 글, 95~107쪽. 원래 중화주의 역시 주변의 야만사회를 ‘교화’시켜 문명세계로 편입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삼는 것이었던바, 제국 일본이 내세웠던 ‘同化主義’ 이데올로기도 중화주의의 교화 이데올로기와 무관하다고 할 수는 없다.

29) 베트남의 경우 소중화의식이 ‘南國意識’으로 드러났는데, 이 역시 보편국가 의식과 아울러 원초적 민족의식의 이중적 측면을 가지고 있었다. 후루타 토모오[古田元夫], 박홍영 역, 2008, 『베트남의 세계사』, 도서출판 개신, 28~29쪽

성왕에 투사된 추상화된 보편적 이념이었다. 이 이념화된 보편성은 중층적 구조를 가진 것이었다. 겉으로는 각기 자신의 왕조를 정통으로 간주하고 이에 따라 행동하고 있었지만, 내적으로 보편성은 궁극적으로 하나라는 전제에 입각해 있는 것이었다. 이처럼 소중화주의는 하나의 보편성을 강조함으로써 역외 주체와의 소통가능성은 처음부터 주어지지 않은 것이었다.³⁰⁾

소중화 관념이란 전근대의 지역적 보편질서인 중화주의 질서를 왕조단위로 축소하여 내면화한 질서관념이다. 아울러 소중화란 특수와 보편이 상호 모순적으로 결합한 개념으로서, 그 모순적 결합만큼이나 양면성을 함축하고 있다. 곧 소중화 관념은 중화질서가 현실적으로 이완하는 측면을 담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화 관념이 내면적으로 확장 혹은 고착하는 측면도 아울러 드러내고 있는 것이다. 이런 점에서 17세기 이후 중화체제 주변에서 확장되고 있던 소중화 관념은 19세기 후반 도래할 문명사적 전환을 예비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겠다.³¹⁾ 역내의 단일한 보편성을 전제하지만 겉으로는 모두 자신을 정통으로 간주함으로써, 역외 제국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거나 공동으로 대응하는 데에 어려움을 겪게 하였다.

한편 19세기 중반 이후 청조의 제2차 제국화 시도와 맞물리면서, 조선과 청조가 맺고 있던 조공·책봉관계의 정치적 성격을 둘러싼 만국공법(국제법)적 재해석이 논란의 초점이 되었다. “조선이 청과 宗屬관계를 맺고 있지만, 내정과 외교에서는 자주”라는 조선 정부의 입장은, 전자는 중화질서에 그리고 후자는 만국공법 질서에 대응하는 관념을 혼합한 것이었다. 유길준의 ‘양절체제’ 구상 역시 이런 세계관의 변화과정을 적극적으로 수용 혹은 반영하려는 노력의 산물이었다. 요컨대 조선 정부는 혼란스럽게 교체되고 있던 두 개의 질서 혹은 세계관을 효과적으로 활용하려 하였지만, 이는 일본에 의해 ‘모순적인 속국론’이라고 비판되었다.

30) 山下範久, 2008, 앞의 책, 79~107쪽

31) 윤해동, 2007a, 「연대와 배제」, 『식민지근대의 패러독스』, 휴머니스트, 97~120쪽 참조.

문제는 19세기 후반의 동아시아 세계에서 屬國, 自主, 獨立이라는 개념이 상호 모순적인 관련을 맺고 있지 않았다는 점이다. 중화질서 속의 종속관계가 조선 왕조의 자주를 해치는 것이 아니었으며, 만국공법 질서 속의 자주는 독립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혼란 속에서 청조나 조선이 내세우고 있던 '속국자주'라는 관념은, 청일전쟁을 통하여 일본이 주장하고 있던 '독립자주'라는 관념으로 강압적으로 교체·조정되었다.³²⁾

독립자주를 지향하고 있던 대한제국은 동아시아의 제국질서 교체 속에서 어떤 운명을 맞이하였던가? 우선은 '이중국가'로서의 성격을 가진 대한제국·통감부 통치시기를 거치게 되었다. 19세기 후반부터 제국주의 열강이 식민지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국제법상의 이른바 보호국 혹은 보호령(protectorate)은, 제국주의 열강이 군사력을 배경으로 타국의 외교권을 박탈하거나 내정권을 잠식함으로써 통치구조가 이중성을 띠게 된 권력 혹은 국가를 의미한다. 이런 점에서 보호국 또는 보호령은 제국의 일원적 지배가 관철되는 식민지와 결정적으로 구별될 뿐만 아니라, 부분적으로나마 토착권력의 독자성이 보존되고 있었으므로 단순히 괴뢰정권 또는 괴뢰국가(puppet state)로 볼 수도 없다. 1906년 일본의 '보호정치'가 시작된 뒤부터 1910년 한국 강제병합이 이루어질 때까지의 기간은 大韓帝國과 統監府라는 식민권력이 이중적으로 존재했던 시기로서, 대한제국과 통감부의 이중권력을 '이중국가'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시기에 통감부는 대한제국이 보유하고 있던 합법적 폭력 사용권을 박탈함과 동시에 자본주의 경제기구를 구축함으로써 자본주의 국가의 기반을 구축해가려 하였다. 다시 말하면 이중국가로서의 대한제국·통감부 시기는 합법적 폭력 박탈, 민간인 무장 해제를 통하여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고, 재정개혁과 토지소유권 법제를 확정하는 토대를 마련함으로써 식민지에서 근대국가의 기

32) 김한규, 1999, 앞의 책, 819~915쪽; 이삼성, 2009, 앞의 책, 263~313쪽; 오카모토 다카시·강진아 역, 2009, 앞의 책, 77~185쪽; 윤해동, 2011, 앞의 글, 88~95쪽 참조.

반을 구축하는 시기였던 것이다.³³⁾

이런 근대국가적 기반을 바탕으로 조선총독부가 수립되었다. 조선총독부는 국가능력과 국가의 자율성이라는 양 측면에서 볼 때, ‘근대국가’로서의 성격을 잘 갖추고 있었다. 우선 조선총독에게는 ‘土皇帝’라고 불릴 정도로 강력하고 광범위한 권한이 부여되었다. 조선총독은 이를 바탕으로 조선총독부를 자본주의 국가기구로 급속하게 재편하였다. 조선총독부는 강력한 능력을 가진 ‘국가’였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국가능력을 바탕으로 조선총독부는 합법적 폭력을 독점하고, 근대적 관료 행정을 체계적으로 확립하였다. 이를 통해 상품 유통을 원활화하고 자본주의의 발전을 가속화하였으며, 이에 따라 노동의 상품화도 진전되었다. 조선에서의 근대적 자본주의 상품 사회의 재생산은 국가의 권력적 작용에 기인하는 것이었고, 이는 사회적 부를 자본으로 그리고 사회 구성원을 노동력으로 재상품화하는 데 기여하는 것이었다. 이런 과정을 통하여 경제적 영역의 자율성이 강화되었다. 이는 정치에 대한 경제의 승리를 표현하는 것이었다. 이런 점에서 식민권력으로서의 조선총독부는 전통적 의미에서의 ‘자본주의 국가’와 동일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³⁴⁾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조선총독부는 경제영역을 독립시키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창출함으로써, 식민지에도 국가·사회라는 새로운 근대적 역할관계가 출현하였다.

다른 한편 조선총독은 일본 중앙정부의 통제에서 벗어나 독립적으로 총독부를 운영할 수 있는 상당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 1929년 拓務省이 설치될 때, 척무대신이 조선총독부의 사무를 統理한다는 규정에도 불구하고 엄격한 의미에서는 조선총독을 감독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으로 협조하는 관계로 정리되었다. 또 1941년 ‘대동아’ 전역의 제반행정을 일원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고 그 책임을 단일화하기 위하여 ‘대동아성’을 신설하고 ‘내외지 행정일원

33) 서영희, 2003,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운노 후쿠유 · 정재정 역, 2008, 『한국병합사 연구』, 논형; 오가와라 히로유키 · 최덕수 외역, 2012,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병합 구상과 조선사회』, 열린책들 참조.

34) 윤해동, 2007b, 「식민지근대와 대중사회의 등장」, 『식민지근대의 패러독스』, 휴머니스트

화' 정책을 추진함으로써, 조선 행정의 위상은 또다시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그럼에도 조선총독부와 추밀원이 내세운 '조선 특수성론'에 밀려 조선 행정의 단일화 나아가 '내지화'가 강력하게 추진되지는 못했다.³⁵⁾ 또한 일본 본국에서는 조선의 법역을 통합하려는 논의가 진행되기도 하였으나 결국 시행되지 못했다.³⁶⁾

이런 측면에서 조선총독부를 근대국가의 한 형태로서 '식민국가'로 규정하더라도 큰 무리는 없을 것이다.

이처럼 대한제국이 추구하던 '독립자주'는 결국 제국 일본의 지배하에서 '식민국가'로 귀결되었다. 1929년 칙무성 설치 이후 식민지라는 용어를 대신하여 外地라는 용어가 정착되었는데, 외지는 대개 제국헌법 제정(1889) 이후에 편입된 신영토를 지칭하는 것으로서 異法地域 또는 特殊統治地域으로서의 특성을 가지는 것으로 간주되었다.³⁷⁾ 이리하여 조선에 제국헌법이 적용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 역시 계속 논란의 대상이 되었다. 이 문제는 점차 제국헌법이 조선과 같은 외지에도 적용되어야 한다는 적극적 법해석으로 기울어지고 있었지만, 외지가 법적인 측면에서 내지로 편입되지 않는 한 궁극적으로 해소되기는 어려운 문제였다고 하겠다.

앞서 본 바와 같이, 근대의 제국은 국민국가이면서 제국이라는 이중성을 갖는다. 일본의 제국사 연구자 야마무로 신이치(山室信一)는 근대제국의 이런 성격을 근거로, 근대제국을 '국민제국'으로 규정한다. 야마무로는 근대의 제국이 "주권국가 체계하에서 국민국가 형성을 채택한 본국과 이민족·원격지배지역으로 이루어지는 복수의 정치공간을 통합하는 정치형태"이며, 여기에서 그 전형적인 특징이 발생한다고 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야마무로는 국민제국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네 개의 테제로 규정한다. 우선 근대제국은 한편으로 세계 제국을 지향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그것이 국민국가의 확장이라는 형태를 띤

35) 水野直樹, 1997, 「戰時期の植民地支配と'内外地行政一元化」, 『人文學報』 79號

36) 이승일, 2008, 『조선총독부 법제정책-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선민사령』, 역사비평사, 344~365쪽

37) 清宮四郎, 1944, 『外地法序說』, 東京: 有斐閣

다는 점에서, 각각의 벡타는 그 부정으로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는 점을 가장 중요한 특징으로 간주한다(제1테제). 다음으로 국민제국은 그 형성과 추진기반이 사적 경영체로부터 내셔널한 것으로 전화했다고 본다(제2테제). 다음으로 세계체제의 시각에서는 “다수의 제국이 동시성을 가지고 다투면서 결합”한다는 경쟁체제를 형성하며(제3테제), 본국과 지배지역이 격차원리와 통합원리에 기반한 異法域 결합으로 존재한다고 규정한다(제4테제).³⁸⁾

이렇게 본다면 제4테제에서 국민제국의 가장 전형적인 특징이 드러나게 된다. 정치철학자 한나 아렌트도 일찍이 지적한 바와 같이, 근대제국이 새로 편입한 지역을 국민국가적 방식으로 통치한다는 것은 그 피지배민으로 하여금 국민국가적 독립의 열망을 배태시키는 결과를 낳는다는 점에서 지극히 역설적이라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국민제국 속의 피지배지역이 독립하기 위해서는, 국민국가의 형식을 취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것이다.³⁹⁾

이리하여 국민제국 속에서의 국민화 과정이 문제로 부상하게 된다. 조선총독부라는 강력한 식민국가는 조선에 대한 제국주의 지배를 통하여 일종의 ‘국민화 과정’을 지속적으로 수행하였다. 이를 제국주의적 국민화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다면, 다른 한편 이에 저항하는 민중적 국민화 과정 역시 동시적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이를 ‘민중적 국민화 과정’이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점에서 제국 일본의 통치를 담당하고 있던 조선의 식민국가가 역시 근대제국 일반이 부딪치는 딜레마를 공유하고 있었다. 제국의 지배가 진전될수록 국민국가적 독립의 열망은 강렬해졌으며, 이는 조선의 해방으로 그리고 두 개의 국민국가 수립으로 이어졌던 것이다. 이처럼 조선은 ‘자주’ 곧 ‘속국자주’와 ‘독립자주’를 거쳐 식민지 ‘종속’이라는 방식으로, 자신의 국가론적 위상을 변용해 왔던 것이다.

38) 山室信一, 2004, 「國民帝國論の射程」, 『帝國の研究』,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87~128쪽

39) 山室信一, 2004, 위의 글, 87~124쪽

IV. ‘분리와 통합’ – 제국과 ‘식민지 사회’

이 장에서는 ‘분리’와 ‘통합’이라는 개념을 통해서, ‘식민국가’로부터 분리되어 기능하고 있던 조선 사회가 일본제국 혹은 동아시아 지역 속에서 트랜스내셔널 지역사회의 일부로 네트워크화되어 있었던 측면에 대해 살펴보려 한다. 여기서 제국과 식민지에서의 사회의 등장을 주제화하는 것은, 트랜스내셔널 사회사의 문제의식을 제국과 식민지 사회 사이에 적용하기 위해서다.

예컨대 독일의 트랜스내셔널 사회사 연구는 사회문제의 틀이 민족국가의 틀을 뛰어넘는 경우가 많았다는 점을 지적하고, 따라서 사회개념의 보편적 확장이 가능하다고 주장한다. 나아가 포스트 식민주주의의 영향을 더욱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트랜스내셔널 사회사 연구를 ‘상호전이사(Transfergeschichte)’의 시각으로 진전시킬 것을 주장한다. 상호전이사적 전환을 통하여 유럽 외적인 관점과 관계에 대해서도 유럽 내적인 것과 동일한 비중을 부여할 수 있으며, 유럽과 유럽 외부 간의 상호작용으로부터 출발하여 민족국가 중심의 연구 편향성을 극복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이처럼 독일 학계에서의 트랜스내셔널 역사는 기존의 특권화된 민족사에 대한 대안으로 등장한 것으로서, 민족사를 트랜스내셔널 상호관계의 산물로 이해하려는 시도다.⁴⁰⁾

자본주의 국가로서의 조선총독부는 경제영역을 독립시키고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창출함으로써, 식민지 조선에도 국가·사회라는 근대적인 역학관계가 출현하게 되었다. 1910년대 후반 이후 조선에서 형성되는 ‘사회적인 것’과 그를 통한 적대의 발생은, 국가와는 뚜렷이 구분되는 식민지 사회가 부상하게 되었

40) 박혜정, 2009a, 「트랜스내셔널 사회사, 상호전이사, 지구사-독일에서의 민족사 패러다임의 트랜스내셔널 확대 논의」, 『독일연구』 18호, 211~241쪽. 이 글은 역사학자 오스트함멜(Jurgen Osterhammel)과 비르츠(Albert Wirz) 등의 논의를 통해 독일의 트랜스내셔널 사회사 연구 동향을 소개하고 있다. 박혜정의 다음 글도 참조가 된다. 박혜정, 2009b, 「민족적인 것의 경계를 넘어서-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를 통한 민족사 패러다임의 극복 가능성」, 『독일연구』 20호 참조.

음을 의미하는 것이겠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910년대 후반부터 1920년대에 걸쳐 식민지 조선에서는 적어도 다음 여섯 가지 영역에서 ‘사회적인 것’ 곧 하위 사회적 영역이 분화되어 간다. 첫째 행정관료적 영역, 둘째 경제적 영역, 셋째 종교적 영역, 넷째 문화적 영역, 다섯째 집합적 운동의 영역, 여섯째 하위 지역적 영역 등을 전형적인 하위 사회적 부문으로 거론할 수 있을 듯하다.

이런 사회적 영역의 성립에는 두 가지 측면에서 식민국가의 활동이 크게 작용하고 있었다. 첫째, 자본주의 국가기구로서의 식민국가의 활동은 식민지 조선을 자본주의 상품사회로 재편하였다. 이런 식민국가의 활동은 특히 행정관료적 영역과 경제적 영역의 하위 사회가 분화하는 데에 크게 기여하였다. 조선총독부를 통하여 근대적 관료행정이 확립됨으로써 행정관료들의 독립성은 크게 진전되었다. 이와 아울러 경제영역에서는 아직 충분히 분화하지 못한 전문영역에 관변단체가 결성되어 각 영역의 전문성을 제고하는 한편, 그 분야에서의 이익단체적 성격을 강화하고 있었다.

둘째, 근대적 하위 사회의 형성에는 식민국가의 ‘근대화 정책’ 및 근대적 ‘계몽’ 활동이 깊이 작용하고 있었다. 조선종교령, 조선교육령 등의 각종 법령과 아울러 범죄즉결례 등의 각종 사회통제법령을 통하여 식민국가는 식민사회의 근대화와 계몽을 시도하였다. 식민국가는 합법적인 폭력을 독점함으로써 식민사회에 대한 근대화와 계몽활동도 선도적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조선총독부의 이런 활동은 종교적·문화적·집합적 운동 및 하위 지역적 영역에서의 사회분화를 촉진하였다.

위에서 본 사회형성의 첫 번째 동학은 식민국가의 자본주의 국가기구로서의 성격과 특별히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으며, 두 번째 동학은 식민국가의 통제적 측면으로부터 기인하는 측면이 강하다. 따라서 양 측면 모두에서 식민국가는 식민지 사회형성의 토대 역할을 수행하고 있었다고 하겠다. 다른 한편, 식민국가의 역할이 중요했던 것만큼이나 식민지로 이주한 본국인 곧 일본인들의 역할은 사회형성에서 대단히 긴요한 것이었다. 식민사회가 지배민족과 피 지배민족의 혼성적 구성을 취하고 있었다는 점에서, 지금까지 식민지 사회의

형성은 그다지 주목받지 못했다. 그러나 식민지의 사회형성이 식민지민의 일상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한다면, 이제 더 이상 연구의 대상 밖에 방치해두기는 어렵다.

이제 위에서 두 번째 하위 사회적 영역으로 거론했던 ‘경제적 영역’의 성립에 대해, 특히 조선상업회의소의 설립과 활동을 중심으로 그 성격을 살펴보자 한다. 1915년 조선총독부는 ‘조선상업회의소령’을 발포하였던바, 여기에는 크게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의도가 포함되어 있었다. 첫째, 조선인과 일본인이 각각 설립하여 별도로 활동하고 있던 상업회의소를 하나로 통합하는 것, 둘째, 새로 설립되는 상업회의소에 법인 자격을 부여함으로써 이를 바탕으로 조선상공업의 발달을 도모하는 공공단체로 육성하는 것, 셋째, 상업회의소를 일본인을 중심으로 재편하고 이를 통하여 자치단체로서의 역할을 일부 수행하게 하는 것 등이었다. 이 법령을 토대로 각지의 조선인 상업회의소와 일본인 상업회의소는 각각의 절차를 거쳐 지역별 통합 상업회의소로 재편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상업회의소의 운영에서 일본인 상공업자들의 헤게모니가 확립되었다.⁴¹⁾

새로 통합된 경성상업회의소는 제1차세계대전 이후 도래한 불황을 극복하고 중장기적인 산업정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조선총독부에 산업조사위원회를 설치할 것을 요구하였다. 상업회의소가 제출한 자문안을 바탕으로 1921년 개최된 산업조사위원회에서는 ‘산업개발요항’을 작성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상업회의소는 적극적인 ‘산업개발운동의 시대’를 열었다고 선전하였다.⁴²⁾ 조선총독부와 경성상업회의소는 조선의 산업개발을 위한 보급금의 증액을 일본 정부에 청원하기로 하고, 이를 주로 산미증식계획의 갱신과 ‘조선철도망 속성운동(速成運動)’을 위한 예산으로 충당하기로 하였다. 산미증식계획의 갱신을 위한 예산 확보는 주로 총독부가 담당하였으며, 철도망 속성운동은 경성상업회의소가

41) 전성현, 2002, 「일제초기 ‘조선상업회의소령’의 제정과 조선인 상업회의소의 해산」, 『한국사연구』 118호; 조재근, 2005, 「1910년대 상업회의소와 조선인 자본가」, 권태익 외, 『한국근대사회와 문화 II』, 서울대학교출판부, 237~268쪽

42) 四方博, 1941, 『京城商工會議所二十五年史』, 京城: 京城商工會議所, 185~214쪽

관심을 집중하고 있던 분야였다. 재조선 일본인이 중심이 된 경성상업회의소의 철도부설운동에 '제국철도협회'가 가담함으로써 1927년 '조선철도12년계획'이 확정되었다.⁴³⁾ 이는 식민지 조선에 거주하던 자본가들의 이익뿐만 아니라, 일본본국의 경제적 이익과 군사적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한 것이었다.

1920년대 후반 세계대공황의 도래와 함께 경성상업회의소(1930년 상공회의소로 개정)는 중소기업자들의 불만을 대변하는 '중소상공업옹호운동'을 전개하였다. 이 운동은 관변의 공제조합이었던 구매조합을 반대하고, 중소기업자들의 경영법을 개선하는 운동과 함께 '상공업조합'이라는 통제조합을 설치하는 등의 세 가지 활동을 중심으로 구성되어 있었다.⁴⁴⁾ 상공회의소는 이 중소기업옹호운동과 함께 조선미의 일본 이입제한에 반대하는 '鮮米擁護運動'을 전개하였는데,⁴⁵⁾ 이는 조선상공회의소의 활동이 일부 일본인 상공업자들의 이익만을 옹호하는 데 국한되어 있지 않았다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다.

경성상업회의소의 활동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을 것이다. 첫째, 경성상업회의소의 운영에서 비록 일본인 상공업자의 해계모니가 작동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그 구성과 활동에는 조선인 상공업자의 이해도 반영되어 있었다는 점이다. 1930년대에 전개되었던 중소기업옹호운동을 통하여 이런 사실을 확인할 수 있다. 둘째, 일본 정부를 대상으로 보급금의 증액을 청원한다거나, 조선미 이입제한에 반대하는 등의 운동을 전개하였다는 점이다. 이는 경성상업회의소가 자신들의 활동을 통하여 식민지 조선이 일본제국 내에서 차지하는 특수성 혹은 특수사정을 특히 강조하려 하였다는 사실과 깊은 관련을 가진

43) 四方博, 1941, 위의 책, 185~214쪽; 기유정, 2011, 「일본인 식민사회의 정치활동과 '조선주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12~142쪽; 전성현, 2009, 「일제하 조선상업회의소와 '조선철도12년계획」, 『역사와 경계』 71집

44) 四方博, 1941, 위의 책, 251~287쪽; 양지혜, 2009, 「1930년대 전반기 경성상공(업)회의소의 '중소상공업옹호운동」,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45) 四方博, 1941, 위의 책, 281~284쪽; 기유정, 2011, 앞의 글, 159~183쪽; 김제정, 2010, 「대공황 전후 조선총독부 산업정책과 조선인 언론의 지역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47~73쪽

다.⁴⁶⁾ 셋째, 조선의 특수성을 강조하는 경향은 1931년 일본의 만주 침략으로 만주가 일본의 비공식제국으로 흡수되고 난 뒤에 더욱 강화되었다는 점이다. 조선은 일본 자본의 유치를 둘러싸고 만주국과 경쟁을 벌였으며, 만주에의 수출을 늘리기 위해 일본과 경쟁하고 있었다.⁴⁷⁾

한편 '만주국'이 비공식제국으로 편입되고 난 뒤에, 조선과 일본 그리고 만주국의 상호관계는 더욱 긴밀한 관련을 맺게 된다. 1936년 만주국에서 일본인이 그동안 누리던 치외법권을 철폐하는 조치가 단행되었는데, 이는 만주국의 법과 제도가 일본의 주도로 본격적으로 구축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었다.⁴⁸⁾ 다시 말하면 만주국의 '일본화'를 예고하는 것으로서, 이후 '日滿一體'는 가속화되었다. 이런 일본의 '만주 편향'에 대한 우려와 본격적인 만주의 통제경제 실시에 대한 대응으로 등장한 슬로건이 '鮮滿一如'였다.⁴⁹⁾ 이후에도 일본, 조선, 만주 그리고 중일전쟁 이후에는 중국 사이의 상호관계를 설정하는 문제를 두고 각 지역 사이에서 많은 의견이 상호교차하고 있었지만, 공식·비공식 제국을 포함하는 일본제국 내의 트랜스내셔널한 상호관련성은 매우 강화되고 있었다고 할 것이다.

이처럼 경성상업회의소의 활동을 통해 보더라도, 식민시기 경제를 중심으로 한 사회의 하위 영역은 독자적인 영역을 유지하면서 작동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물론 상업회의소가 조선총독부와 깊은 관련을 가지면서 활동하고 있었다고 하더라도, 경제영역의 자율성을 전면적으로 부정할 만한 수준은 아니었다. 그리고 이 경제영역을 중심으로 한 조선의 하부사회는 일본제국 '내지'뿐

46) 김제정은 조선의 특수성을 조선의 '지역성'이라고 표현하였다. 김제정, 2010, 위의 글 참조. 이에 반해 기유정은 '조선주의'라는 개념으로 특수성에 대한 의식을 강조하였다. 기유정, 2011, 위의 글 참조.

47) 四方博, 1941, 앞의 책, 285~287쪽; 김제정, 2010, 위의 글, 91~99쪽

48) 田中隆一, 2007, 『滿洲國と日本の帝國支配』, 東京: 有志社 참조.

49) 임성모, 2009, 「중일전쟁 전야 만주국·조선 관계사의 소묘 - '일만일체'와 '선만일여의 갈등」, 『역사학보』 201집; 송규진, 2005, 「일제하 조선과 만주국의 무역에 관한 연구」, 『중국학보』 52집; 송규진, 2009, 「일제하 '선만관계'와 '선만일여론」, 『한국사연구』 146호

만 아니라, 일본의 비공식제국 내의 영역인 만주국 나아가 중국의 경제와도 깊은 관련을 맺고 있었던 것이다.⁵⁰⁾ 식민국가와 마찬가지로 식민지 조선의 사회는 제국의 지배 속에서 트랜스내셔널한 힘과 네트워크를 통해 형성되어 작동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사회적 관련 곧 사회의 ‘분리’와 ‘트랜스내셔널 사회’의 네트워크를 ‘트랜스내셔널 사회’의 인식대상으로 삼을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지금까지 근대 동아시아에 제국질서가 구축되는 과정, 제국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서 조선의 국가적 위상이 구축되는 과정 그리고 식민지 조선에 ‘사회적인 것’이 형성됨으로써 트랜스내셔널 사회가 만들어지는 과정을 각기 모방과 차이, 자주와 종속, 분리와 통합이라는 한 쌍의 은유 개념을 통해 살펴보았다.

요컨대 16세기 이후 명·청 왕조의 중화질서는 두 번의 ‘제국화 과정’을 거치면서 근대제국으로 팽창하였으나 서구 제국주의의 침략과 함께 결국 중화제국은 해체되고 말았다. 이 공백을 뚫고 성장한 것이 일본제국이었다. 역시 두 번의 제국화 시도를 통해 일본제국은 여러 식민지를 포함하는 공식제국과 여러 ‘괴뢰정권’ 및 ‘군사점령지’로 구성되는 비공식제국으로 이루어진 광대한 제국을 구축하게 되었다. 이는 서양 근대제국의 제국주의적 확장을 모방한 것이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중화질서적 지배의 은유를 동원한 것이기도 했다.

50) 조선의 발권은행이었던 조선은행의 기능과 활동이 만주, 중국에 걸친 트랜스내셔널한 성격을 띠고 있었던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조명근, 2011, 「1920-30년대 조선은행의 금융활동에 대한 조선 내 여론동향」, 『대동문화연구』 제75집; 조명근, 2012, 「1910년대 조선은행의 만주진출과 ‘해외은행’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아세아연구』 55권 4호 참조.

이처럼 동아시아에 제국질서가 형성되는 가운데 조선의 국가적 위상도 크게 변하고 있었다. 애초에 중화제국 밖의 역외주체와의 소통가능성을 차단하고 있던 것이 소중화라는 발상이었다. 소중화주의에 입각해 있던 조선은 중화질서와 새로운 만국공법질서 사이에서 고통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중화질서를 표상하는 ‘속국자주’와 만국공법질서를 드러내는 ‘독립자주’ 사이의 갈등을 돌파하지 못하고, 조선은 ‘이중국가(보호국상태)’ 그리고 ‘식민국가(조선총독부)’로 각기 그 모습을 변용하게 되었다. 제국질서의 변화 속에서 이처럼 조선은 자주로부터 종속으로의 국가론적 위상의 변화를 겪게 되었던 것이다.

자본주의 국가로서 성립한 ‘식민국가’인 조선총독부는 경제영역을 독립시킴으로써 새로운 사회적 관계를 창출하고 있었다. 이러한 근대적 경제영역의 성립은 경성상업회의소의 설립과 활동을 통해 잘 드러나고 있다. 일본인 상공업자의 헤게모니가 관철되고 있었다손 치더라도, 경성상업회의소는 조선이 일본제국 내에서 차지하는 특수성을 강조하였고, 이를 통하여 다른 지역과의 트랜스내셔널 관련을 확대하고 있었다. 이처럼 경성상업회의소는 일정한 의사결정의 ‘자율성’을 확보하고서 조선인과 일본인 중소기업자들의 이익을 옹호하는 각종 활동을 독립적으로 전개할 수 있었다. 나아가 조선에서 형성된 자율적인 경제영역은, 일본 내지 그리고 만주국의 사회적 영역과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었던 것이다. 식민지 조선에서의 사회의 ‘분리’를 통해 일본제국 내의 트랜스내셔널 사회적 네트워크를 살펴볼 수 있었다.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를 살펴보기 위하여 제국, 근대국가(혹은 식민지), 그리고 지역이라는 세 개의 키워드를 설정하였다. 한국의 근대는 동아시아의 제국질서 속에서 트랜스내셔널 네트워크를 통하여 형성되었다. 일본제국의 영역이 확장되면서 공식·비공식제국을 포함하는 일본제국 내의 트랜스내셔널 상호관련은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 근대 한국은 동아시아 제국질서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혹은 그를 거부하는 방식으로 자신의 정체성을 형성해 왔던 것이다. 요컨대 한국사는 제국사의 일부를 구성하거나 그와 길항하고 있었다. 그리하여 한국사는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라는 면모를 가지게 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다시, 한국사에서 동아시아사란 무엇인가? 지역은 단순히 제국적 질서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다가, 혹은 일정한 국민국가의 총합으로 보기는 어렵다. 동아시아는 16세기 이후의 청조 즉 중화제국 그리고 19세기 후반 이후의 일본제국을 중심으로 지역의 소장을 되풀이해 왔다. 물론 청조의 중화제국과 일본제국이 포괄하는 영역이 그대로 동아시아 지역으로 간주될 수는 없다. 하지만 제국의 消長상황을 제쳐두고 동아시아 지역을 운위할 수도 없다. 누차 지적되어 왔듯이, 이런 측면에서 지역이란 대단히 작위적인 개념일 수밖에 없다. 개념의 '작위성'은 '지역'이 지정학적이거나 지경학적인 현실적 맥락을 반영하고 있다는 점을 말하는 것이기도 하다. 지역이 전통적이거나 자연적인 결정의 대상이 아니라고 한다면, 동아시아라는 지역 혹은 지역사로서의 동아시아사란 무엇인가?

동아시아라는 지역은 제국과 근대국가의 지배와 길항 관계 속에서 그 내포를 형성해왔던바, 동아시아 근대사는 제국과 근대국가의 역사가 상호작용하는 트랜스내셔널 역사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동아시아는 현재적 입장과 시각에 따라서 자유로이 신축하는 공간(장소)이고, 동아시아사 역시 마찬가지다.

이 글의 모두에서 본 바와 같이, 현재 한국 사회에서는 일정한 어긋남을 가질 수밖에 없는 몇 개의 국민국가의 총합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규정하려 하고 있다. 단 동아시아 지역 공간의 신축은 제국과 국민국가의 상호작용에 따라 결정되어 왔고, 앞으로도 현실의 정치적 맥락에 따라 그리고 트랜스내셔널 동아시아 시민사회의 힘에 따라 변화하게 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용구, 2004, 『세계관 충돌과 한말 외교사』, 문학과지성사
- 김한규, 1999, 『한중관계사Ⅱ』, 아르케
- 서영희, 2003, 『대한제국 정치사 연구』, 서울대학교출판부
- 손승철 외, 2012, 『동아시아사』, 교학사
- 안병우 외, 2012,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 이삼성, 2009,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2』, 한길사
- 이승일, 2008, 『조선총독부 법제정책 - 일제의 식민통치와 조선민사령』, 역사비평사
- 한중일3국공동역사편찬위원회, 2012, 『한중일이 함께 쓴 동아시아 근현대사』, 휴머니스트
- 니시지마 사다오 저 · 이성시 편 · 송완범 역, 2008, 『일본의 고대사 인식 - '동아시아세계론'과 일본』, 역사비평사
- 안드레 군터 프랑크 · 이희재 역, 2003, 『리오리엔트』, 이산
- 야마무로 신이치 · 정재정 역, 2010, 『러일전쟁의 세기』, 소화
- 오가와라 히로유키 · 최덕수 외 역, 2012, 『이토 히로부미의 한국병합 구상과 조선사회』, 열린책들
- 오카모토 다카시 · 강진아 역, 2009, 『미완의 기획, 조선의 독립』, 소와당
- 윤노 후쿠주 · 정재정 역, 2008, 『한국병합사 연구』, 논형
- 이매뉴엘 윌러스틴 · 나종일 외 역, 1999, 『근대세계체제』 I · II · III, 까치
- 테사 모리스 - 스크키 · 임성모 역, 2006, 『주변에서 바라본 근대』, 산치림
- 토마스 바필드 · 윤영인 역, 2009, 『위태로운 변경』, 동북아역사재단
- 피터 퍼듀 · 공원국 역, 2012, 『중국의 서진』, 길
- 후루타 토모오(古田元夫) · 박홍영 역, 2008, 『베트남의 세계사』, 도서출판 개신
- 기유정, 2011, 「일본인 식민사회의 정치활동과 '조선주의'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박사학위논문
- 김선민, 2010, 「청제국의 변경통치에 관한 연구동향 분석」, 윤영인 외, 『외국학계의 정복왕조 연구시각과 최근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 김제정, 2010, 「대공황 전후 조선총독부 산업정책과 조선인 언론의 지역성」, 서울대학

교 박사학위논문

- 박혜정(2009a), 「트랜스내셔널 사회사, 상호전이사, 지구사-독일에서의 민족사 패러다임의 트랜스내셔널 확대 논의」, 『독일연구』 18호
- 박혜정(2009b), 「민족적인 것의 경계를 넘어서-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를 통한 민족사 패러다임의 극복 가능성」, 『독일연구』 20호
- 송규진, 2005, 「일제하 조선과 만주국의 무역에 관한 연구」, 『중국학보』 52집
- 송규진, 2009, 「일제하 ‘선만관계’와 ‘선만일여론」, 『한국사연구』 146호
- 양지혜, 2009, 「1930년대 전반기 경성상공(업)회의소의 ‘중소상공업옹호운동」, 한양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윤해동(2007a), 「연대와 배제」, 『식민지근대의 패러독스』, 휴머니스트
- 윤해동(2007b), 「식민지근대와 대중사회의 등장」, 『식민지근대의 패러독스』, 휴머니스트
- 윤해동, 2011, 「동아시아 식민주의의 근대적 성격-예로부터 피로의 이행」, 『아시아문화연구』 22집
- 이성시, 2012, 「일본 역사학계의 동아시아세계론에 대한 재검토」, 『역사학보』 216집
- 임성모, 2009, 「중일전쟁 전야 만주국·조선 관계사의 소모-‘일만일체’와 ‘선만일여’의 갈등」, 『역사학보』 201집
- 전성현, 2002, 「일제초기 ‘조선상업회의소령’의 제정과 조선인 상업회의소의 해산」, 『한국사연구』 118호
- 전성현, 2009, 「일제하 조선상업회의소와 ‘조선철도12년계획」, 『역사와 경계』 71집
- 조명근, 2011, 「1920-30년대 조선은행의 금융활동에 대한 조선 내 여론동향」, 『대동문화연구』 제75집
- 조명근, 2012, 「1910년대 조선은행의 만주진출과 ‘해외은행’으로서의 정체성 형성」, 『아세아연구』 55권 4호
- 조재곤, 2005, 「1910년대 상업회의소와 조선인 자본가」, 권태억 외, 『한국근대사회와 문화 II』, 서울대학교출판부
- 교육과학기술부, 2007, 「2007년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년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 교육과학기술부, 2009,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기준」, 교육과학기술부 홈페이지

교육과학기술부, 2010, 「고등학교 교육과정 해설 사회(역사)」

四方博, 1941, 『京城商工會議所二十五年史』, 京城: 京城商工會議所

山本有造, 2011, 『「大東亞共榮圈」經濟史研究』,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山下範久, 2008, 『現代帝國論』, 東京: 日本放送出版協會

田中隆一, 2007, 『滿洲國と日本の帝國支配』, 東京: 有志社

清宮四郎, 1944, 『外地法序說』, 東京: 有斐閣

山室信一, 2004, 「國民帝國論の射程」, 『帝國の研究』, 名古屋: 名古屋大學出版會

山下範久, 2006, 「帝國化する世界システム」, 山下範久 編, 『帝國論』, 東京: 講談社

水野直樹, 1997, 「戰時期の植民地支配と「内外地行政一元化」」, 『人文學報』 79號

岸本美緒, 2011, 「東アジア史の「パラダイム轉換」をめぐって」, 國立歷史民俗博物館
編, 『「韓國併合」—00年を問う』, 東京: 岩波書店

Burbank, Jane and Cooper, Frederick, 2010, *Empires in World History*,
Princeton: Princeton Univ. Press

[ABSTRACT]Understanding “Korean History as East Asian History”
through Empire, Modern State, and Region

Yun Haedong

As a “historical region” the region of East Asia is not a self-evident one. Wherein is the necessity to understand Korean history, which is also a “national history,” as an East Asian history (therefore the history of a region)? In the East Asian region, the modern nation building process has had a close relationship with the modern empire. It is therefore necessary to understand nation building as interacting with the formation of the modern empire, that is, to interpret the interactions between East Asia’s empire history and national history (or the history of one nation-state). Put another way, in order to understand East Asia’s transition to modernity, or “modern East Asian history,” one must first look at empire and the nation-state,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wo. Thus it is necessary to understand a historical region through interactions between empire and the nation-state.

This paper seeks to explain “Korean history as East Asian history” by using three pairs of metaphorical concepts. These are “imitation and distinction,” “autonomy and independence,” and “separation and integration.” First, “imitation and distinction” refer to the transition to or replacement by empire in the East Asian region. China’s attempt to analogously copy the Western empire in constructing its own modern empire and Japan’s pursuit of simultaneously learning both the Chinese

and Western rules of empire while establishing a new modern empire of its own can be expressed in terms of “imitation” and “distinction.” Second, “autonomy and independence” indicate to what Korea had aspired, or the situation it had found itself in with regard to East Asia’s transition to or replacement by empire. While autonomy symbolizes Korea’s position within the pre-modern Chinese(中華) order, independence represents its position within the modern order of the nation-state. Third, “separation and integration” are metaphors for the “society” of Joseon which functioned separately from the “colonial state” during the colonial era. Rather than an independent entity, the “society in Joseon” was a part of the “society of a transnational region” within the Japanese empire or the East Asian region.

Keywords

East Asian History, Empire, Nation-State, Modern State, Region, Chinese Order

동아시아사 교과서 서술 내용에 관한 제언

- 동아시아의 문자 '한자'를 중심으로 -

이근우 | 부경대학교 사학과 교수



I. 머리말

현행 동아시아사 교과서에는 유교와 율령, 불교를 각각 중단원으로 설정하고 있지만, 한자 혹은 동아시아의 언어나 문자에 대한 상황을 설명하는 부분이 없다. 사실 유교, 율령, 불교는 한자를 매개로 하여 동아시아 세계에 전파되었으므로, 한자를 비롯한 동아시아의 문자와 언어에 대한 설명이 교과서에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다. 현실적으로 중국·한국·일본이 언어생활 속에서 한자를 쓰고 있고, 베트남의 경우도 어휘의 60%가 한자에서 유래한 것이다.¹⁾ 또한 일본은 한자의 초서체와 부수를 이용하여 가나를 만들어 문자로 사용하고 있고, 베트남도 한자의 음과 뜻을 이용하여 베트남어를 표현하는 쯔놈[字喃]을 만들어 사용하였다(13~19세기). 우리도 한자를 이용하여 향찰·이두를 만들어 吏

※ 투고일: 2013년 2월 12일, 심사일: 2013년 5월 23일, 게재 확정일: 2013년 5월 24일

1) 김희경, 2008, *A Comparative Study of the Lexicon of Chinese Character in East Asia*, 『이중언어학』 38

文 등에 사용한 바 있다.

물론 근대 식민지 체제와 민족주의의 추세 속에서 베트남은 한자를 거의 사용하지 않으며, 우리도 한자를 중국 문화의 일부로 간주하여 언어생활에서 배제하려고 노력하는 중이다. 그러나 한자와 고전 한문은 중국에서 연원한 것이기는해도, 전통시대에는 동아시아 공통의 문자이자 언어라는 측면을 가지고 있다.

오랜 기간 동아시아 사회 내부의 소통수단이었던 한자와 한문의 사용을 거부하는 분위기 속에서,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도 일국사적인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풍토가 조성되었다. 그러나 한자와 한문은 서양의 라틴문자·라틴어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의 공통문자·공통언어로 이해할 수 있는 여지가 있다.²⁾ 라틴어는 로마의 언어이지만 현재 이탈리아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며, 현재까지도 유럽 전 지역의 지식인들 사이에서 핵심교양의 일부로 교습되고 있다. 마찬가지로 흔히 한문이라고 부르는 고전한문도 현재 중국에서 일상적으로 통용되는 언어가 아니며 일반적인 중국인들은 해독조차 하기 어렵다.

한편 한자·한문을 동아시아 사회 속에서 문화전달과 의사소통의 수단으로 인정하면, 우리의 향찰이나 이두, 일본의 가나, 베트남의 쯤놈은 물론이고, 훈민정음(혹은 그 조형인 諺文)의 창제 목적도 전혀 다른 시각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 사회에서 한자·한문이 전파되고 활용되는 과정을 정리하고 일국사적인 관점에서 이해해온 한자의 전래와 문자의 창안을 동아시아사로 읽어낼 수 있는 가능성을 제시해보고자 한다.

2) 김민수, 1984, 『신국어학사』, 일조각, 109쪽

II. 한자 문화권

중국의 문자 체계가 가지는 또 하나의 이점은 방언의 차이와 또는 그보다 더 근본적인 언어상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문자를 획득하는 중국인은 비록 그들이 서로 이해할 수 없는 방언을 쓴다고 해도, 같은 서적을 읽을 수 있고, 고전 한문은 그들 자신의 언어라는 것을 느낄 수 있다. 중국이 세계에서 가장 큰 민족집단으로 성장한 것은 적어도 부분적으로는 그들의 문자체계로 설명되어야 할 것이다.

동아문명이라고 하는 더 큰 통합체도 또한 주로 이 문자체계에 의거하고 있다. 중국 문자에 대한 애착과 존경이 여러 나라를 결속하는 유대가 되어 왔다. 지난 세기까지 사실상 조선과 월남에서 기술된 모든 책과 일본에서 기술된 많은 책은 중국어였고, 그들 자체의 국어로 된 것이 아니었다. 오늘에 있어서도 교양있는 일본인이나 한국인, 월남인은 최근까지 중국책을 보고 한 눈에 그 제목을 읽을 수 있었다.³⁾

서양인 학자가 관찰한 것처럼 한자는 중국이라는 범위를 벗어나서 한반도, 일본열도, 베트남 북부에서도 널리 사용되었으며, 지식인의 필수적인 교양이자 문화를 공유하는 수단이었다. 20세기까지 이러한 지역들은 분명히 한자문화권이라고 부를 수 있었다.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는 “한자가 중국의 주변지역으로 전파되고 그 지역에 정착하여, 중국을 중심으로 한 한자문화권이 형성된 근저에는 주변민족이 한자를 습득해야만 하는 정치적 사정이 있었다. 따라서 한자의 전파는 문자가 없는 지역에 문자가 전해진다고 하는 이른바 문화전파 일반의 현상으로서 이해해서는 안 된다”고 하였다.⁴⁾ 물론 그는 정치적 사정으로 책봉체제를 들고 있으며, 그 밖에도 외교적인 관계를 위한 문서 작성과 국내 지배를 위한 각

3) 라이샤워·페이뱅크 저, 전해중·고병익 역, 1964, 『동양문화사』 상, 을유문화사, 50쪽

4) 西嶋定生, 1985, 『日本歴史の國際環境』,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중 문서와 장부의 작성, 각종 제도의 수용, 사상과 종교의 수용에도 한자의 습득은 필수적이었다. 그런 의미에서 동아시아문화권이란 한자문화권과 동의어라고 할 수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문화권이 한자를 문자로 공유하는 영역이었던 만큼, 동아시아사 교육에서 한자의 중요성은 반드시 부각시킬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우선 중국에서 기원한 한자가 주변으로 전파되는 과정, 한자를 이용하여 각국의 언어를 표현하기 위하여 고안된 문자, 훈민정음 창제의 근본적인 목적, 근대에 서양 용어를 한자로 번역하는 과정 등을 살펴보고, 이러한 내용을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구체적으로 반영하는 방법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1_ 중국에서 한반도 · 일본열도로

중원에서 탄생한 문자인 한자는 주변지역으로 전파되기 시작한다. 한반도의 경우는 고조선이 가장 먼저 한자의 세례를 입었을 것이고, 고조선의 멸망 이후 한사군이 설치되면서 한자·한문의 사용이 본격화되었을 것이다. 粘蟬縣 신사비나 封泥 등이 한자·한문 사용 상황을 잘 보여준다.⁵⁾ 1992년 임기환은 낙랑 출토 문자자료를 정리한 바 있으며,⁶⁾ 또한 1980년대 이후 북한에서 발굴을 통하여 얻은 문자자료는 윤용구가 정리한 바 있다.⁷⁾ 이에 따르면 『논어』의 내용을 기록한 竹簡, 初元 4년(기원전 45년) 낙랑군 소속 25개 현의 현별 호구수를 집계한 戶口簿 등이 발견되어 낙랑군의 실상이 밝혀지게 되었다.

이 시기 남한지역의 문자생활과 관련된 고고학적인 유물로는 창원 다호리에 발굴된 붓이 있다. 양쪽으로 筆毛가 달린 형태여서 옷칠용 붓으로 보는 견

5) 『朝鮮金石總覽』 □□年四月戊午粘蟬長□□□建丞屬國會陵爲衆□□□□神祠刻石辭曰□平山君德配代嵩□□□□□佑粘蟬興甘風雨惠閔土田□□壽考五穀豐成盜賊不起□□墊藏出入吉利咸受神光(85년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

6) 한국고대사연구소, 1992, 『譯註韓國古代金石文』 1-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7) 윤용구, 2010, 「낙랑·대방지역 신발견 문자자료와 연구동향」, 『한국고대사연구』

해도 있으나, 削刀가 함께 출토되어 일반적으로 필기용 붓으로 보고 있다. 다만 木簡 등이 함께 출토되지 않아서 의문이 남는다.

한반도의 한자 보급에 대한 이러한 단편적인 자료에 대하여, 본격적인 한문의 사용을 보여주는 것은 바로 광개토태왕비문이다(414). 이후 고구려·백제·신라에서 다양한 한자·한문 자료가 출토되고 있다.⁸⁾ 그러나 한사군의 설치 이후 한반도 삼국의 실물 문자자료 사이에는 상당히 큰 시간적인 간격이 있다. 따라서 그 간격은 문헌기록을 통해서 메울 수밖에 없다.

『삼국사기』에는 삼국의 문자기록과 고구려의 『신집』이나 신라의 『국사』와 같은 사서 편찬에 관한 기사가 보인다. 사서 편찬은 단순한 한자·한문의 해독을 넘어서서 그 문자를 통해서 자국의 역사를 편찬하려는 것이므로, 한자·한문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단계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일본열도가 한사군 등을 통하여 중국과 교류하기 시작하는 것은 전한 시대다. 중국의 삼국시대에 이르면 邪馬臺國이 외부와의 교역을 통제하면서 景初 3년 명문이 있는 거울 등 문자가 새겨진 동경(三角緣神獸鏡)을 위나라로부터 입수하게 된다. 동경에는 다양한 명문이 새겨져 있었지만 이 단계에서는 한자는 문양의 일부로 간주되었을 뿐 일반적으로 문자로 인식되지는 못하였다. 360년경에 전래된 백제의 七支刀도 역시 한자로 기록된 문장이 象嵌되어 있어서 열도 사회에 일정한 영향을 주었고 그로부터 100년쯤 뒤에는 칼의 표면에 문자를 상감한 사례가 나타난다(船山古墳大刀銘, 稻荷山古墳辛亥銘鐵劍銘).

칠지도의 전래보다 조금 늦은 시기에는 박사 왕인이 왜에 『논어』와 『천자문』을 전하였다고 한다(『古事記』) 그러나 이때 전래되었다고 하는 『논어』와 『천자문』은 남조 梁에서 만들어진 周興嗣의 『천자문』 1권과 皇侃의 『논어의 소』 10권이며, 박사 제도가 後漢 이후 형해화되었다가 梁武帝가 다시 설치한 점, 왕인에 대한 기록이 시조전승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6세기 초에 백제에서

8) 노중국, 2010, 「금석문·목간 자료를 활용한 한국고대사 연구 과제와 몇 가지 재해석」, 『한국고대사연구』 57

오경박사를 파견하는 시점과 여러 가지 면에서 중첩되어 기사의 신뢰성에 의문이 남는다.⁹⁾

열도 사회에서 한자·한문 사용의 한 획기는 중국의 남조 때다. 이때 다섯 명의 왜왕들은 특히 남조 宋에 여러 차례 사신을 파견하고 상표문을 올려 將軍號와 王號의 除定을 요구하였다. 상표문은 正格 한문체로 손색이 없는 것이다. 그래서 상표문은 중국계의 인물이 작성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전히 한자와 한문은 중국이나 한반도에서 건너온 사람들이 전담하였고 일본열도에 도착하는 단계에 이르지 못하였다. 오히려 토착화는 일본어의 어순에 따른 變體 한문의 등장으로 확인할 수 있다.

宋 이후 일본열도는 직접 중국과 교류하지 않았고, 대신 백제를 통해서 선진문물을 수용하였다. 불교의 전래나 오경박사 파견이 대표적인 사례다. 특히 오경박사 파견은 일본의 한자 사용 환경을 크게 바꾸어 놓은 획기적인 사건으로 평가할 만하다. 그러나 백제가 파견한 오경박사의 성격을 둘러싸고도 일국사적 관점이 강하게 반영되어 있어 동아시아사적인 관점에서 새롭게 검정할 필요가 있다.

우리 학계에서는 대체로 백제에 오경박사제가 존재하였으며 백제의 유학이 크게 발전하였고, 그 결과 왜에 백제의 오경박사가 파견되었다고 보고 있다. 그러나 양무제가 오경박사제를 부흥시켰을 뿐만 아니라, 백제가 양에 사신을 처음 파견한 것은 512년이고 백제가 왜에 오경박사 단양이를 파견한 것은 514년이다. 사신이 왕래하는 데 걸린 시간을 생각하면 백제가 양의 오경박사제를 수용하여 자체적으로 오경박사를 양성하여 파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백제가 양에 毛詩博士를 요청한 사실(『삼국사기』, 『梁書』)이나 講禮博士 陸詡가 백제에 파견되었다가 돌아왔다는 기록(『南史』) 등을 아울러 고려하면, 왜에 파견된 오경박사는 백제인이 아니라 백제가 양의 관인을 요청하여 이를 왜로 보냈다고 보는 편이 옳다.

오경박사의 의의는 열도 사회의 한자 환경을 크게 바꿔 놓았다는 점이다.

9) 이근우, 2004, 「왕인의 논어 천자문 일본전수설 재검토」, 『역사비평』 69

왜냐하면 그들은 중국어의 원어민들이었고, 공교롭게도 동시에 梁代에 편찬된 중요한 서적들을 전래하였기 때문이다. 바로 『천자문』, 『옥편』, 『문선』, 『고송전』처럼 후대까지 지속적으로 널리 읽힌 문헌들이 함께 전래되었기 때문에 오경박사가 체류한 기간은 짧았지만 6세기 전반대의 강남지역 한자음[吳音]이 열도 사회에 정착되는 데 크게 기여하였고, 현재까지도 일본 한자음의 양대 주류를 이루고 있다.¹⁰⁾

宋과의 교류는 몇 차례의 사신 왕래에 그쳤고 이후 600년에 수나라에 사신을 파견할 때까지 130년 가까이 중국 본토와 전혀 교류하지 않았는데도 강남 지역의 음가를 반영하는 한자음 체계가 성립된 것은 오경박사가 중국인이었기 때문이다.

7세기가 시작되면서 왜는 다시 중국에 사신을 파견하였고 수·당과의 교류를 통해서 새롭게 7세기 이후의 중국 북방음을 받아들일게 된다. 이후 200년 동안 13차례 정도 견당사를 파견하였을 뿐만 아니라 학문승과 유학생들이 장기간 체재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으며, 또한 일본열도에 많은 서적을 가져왔기 때문에 새롭게 수·당의 음가를 반영한 새로운 한자음 체계가 성립된다. 이것이 바로 漢音이다.

이렇게 漢代 이래로 수·당대까지 지속적으로 한자·한문에 노출되고 또 이를 수용하면서, 일본열도에서도 한자·한문이 사용이 일반화되어 701년에는 大寶律令이라는 법전을 편찬하게 되고, 720년에는 일본국의 역사를 통사적으로 다룬 『일본서기』가 편찬되기에 이른다.

2_ 향찰과 이두

한대에 전래된 불교가 남북조시대에 다시 주변지역으로 전파·전래되면서, 불경이 동아시아 사회에 유포되었다. 한자의 본격적인 수용은 불경의 이해과정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중국에서는 팔리어 경전 등을 한자로 번역하는 과

10) 이근우, 2010, 「일본서기에 보이는 오경박사와 오음」, 『일본역사연구』 31

정을 거쳐 한역경전을 만들었으나, 한반도나 일본열도에서는 특히 고대의 단계에서는 불경을 번역하려는 노력을 하지 않았다. 오히려 한문으로 된 불경을 그대로 두고 자신들의 언어로 이해하는 句讀法이 발달하게 되었다.

한편으로 불경의 연구와 더불어 한자에 대한 이해가 깊어지면서 비로소 자신들의 언어에 대한 관심도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 한자의 뜻을 이해하려는 노력은 곧 자신들의 언어를 이해하는 작업이기도 하였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 글에서는 한자의 수용과정이 어떻게 자국의 문자 고안으로 이어졌는지를 밝혀 보고자 한다. 한자의 영향 속에 문자를 고안한 한반도와 일본의 사례를 구체적으로 살펴볼 것이다.

한자는 원래 形·音·義라는 세 가지 요소를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山’이라는 글자는 山이라는 글자 형태를 가지고 있고, ‘산’이라는 소리를 가지고 있으며, 우리말로는 ‘피’, 일본어로는 ‘야마’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요소를 이해하고 또 그 특성을 살려서 각각의 언어를 표기하려는 노력이야말로 문자의 창안으로 이어지게 된다. 향찰이나 이두, 혹은 일본어의 만요가나 [萬葉假名] 등은 독자적인 문자에 이르지 못했지만, 독립적인 문자의 직전 단계에 이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단계에 이르는 데도 많은 난관이 있었고 또한 적지 않은 고심을 거듭해야만 했다.

한자를 이해하는 첫 단계는 한문을 해독하는 것이고 다음 단계는 한자를 이용해서 한문을 작성하는 것이었다. 대표적으로 광개토태왕비문이나 칠지도를 들 수 있다. 이들 사례는 중국에서 작성된 한문과 거의 차이가 없는 것이다.¹¹⁾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한문을 사용하면서도 부분적으로 고유 언어가 갖는 어순이나 어법을 반영하고 있는 이른바 韓式 한문이 출현하게 된다. 중원고구려비 등에 보이는 ‘中’은 ‘가운데’라는 뜻으로 쓰인 것이 아니고, 고대

11) 차이점으로 들 수 있는 것은 “其有違令，賣者刑之，買人制令守墓之”에서 앞의 之는 賣者를 가리키는 대명사 혹은 刑이라는 동사를 강조하기 위한 용법으로 한문의 일반적인 용법에 해당하지만, 뒤의 之는 守라는 타동사의 목적으로 墓가 있는데 다시 之를 사용한 점이다. 이러한 文末助字적인 용법은 한문의 일반적인 용법에 벗어난다(沖森卓也, 2009, 『日本古代の文字と表記』, 東京: 吉川弘文館, 37쪽).

한국어의 '에'에 해당하는 뜻으로 사용한 경우가 대표적인 사례다.

또 다른 사례로는 영일냉수리신라비의 '敎'의 용례를 들 수 있다. 냉수리비 내용을 보면, “喙夫智王과 乃智王 이 두 왕이 명령[敎]하시기를, ‘珍而麻村의 節居利로써 증인으로 삼는다. 그로 하여금 재산을 갖도록 하라.’고 명령하셨다 [敎].”라고 하였다. 즉 명령하다는 뜻을 가진 ‘교’를 두 번에 걸쳐 중복적으로 사용하였다. 이러한 용법은 전면에서만 두 차례 더 확인된다. 이는 한문에서는 볼 수 없는 표현법으로, 신라어의 특징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후면에 보이는 ‘소백료사(所白了事)’도 신라어에 입각한 어법으로 생각된다. ‘아될 바를 마친 일’, ‘아될 바를 마칠 사’로 해석하면 ‘아될 바를 마쳤으므로’ 혹은 ‘아될 바를 마쳤습니다’라는 뜻으로 이해할 수 있다. 중국어의 어순 이라면 了가 所白 앞에 와야 할 것이며, 事를 종결의 뜻으로 쓰는 것도 중국 한문에서 흔히 볼 수 없는 어법이다.

임신서기석에서는 보다 뚜렷하게 신라어의 어순을 확인할 수 있다. ‘하늘 앞에 맹서한다’라는 뜻으로 쓴 ‘天前誓’는 중국어라면 ‘誓天前’이라고 써야 하고, ‘지금부터 3년 이후에’라는 뜻으로 쓴 ‘今自三年以後’도 ‘自今三年以後’로, ‘충성스러운 도를 지켜’의 ‘忠道執持’도 ‘執持忠道’로, ‘과실이 없을 것을 맹서한다’의 ‘過失无誓’도 ‘誓无過失’로 써야 한다. 목적어를 동사 앞에 쓴 것은 모두 중국어와 다른 신라어의 어순에 따른 때문이다.

이처럼 전체적으로는 한자와 한문을 사용하고 있지만, 어순에서는 신라어적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하였다. 이를 정리하면 ① 조사적인 성격을 가진 한자의 관용적인 표현, ② 중국어와 다른 구문표현, ③ 신라어의 어법이 반영된 표현, ④ 고유어의 어순이 반영된 표현 등으로 나눌 수 있다.¹²⁾

그러나 교착어인 중국어와 비교하여 굴절어에 해당하는 고대 한국어를 한 자만으로 완전히 표현할 수는 없다. 그래서 굴절어인 언어의 특성을 살리기 위해서 동사어미나 조사를 한자의 본래 뜻이나 소리 등을 적절히 활용하여 나타내기에 이르렀다. 예를 들어 葛項寺石塔記(국립중앙박물관 소재)의 경우를 보

12) 沖森卓也, 2009, 앞의 책, 46쪽

면, ‘戊戌中’의 ‘中’은 신라어의 조사 ‘에’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立在之’와 ‘成在之’의 ‘제’는 존경어미 ‘(이)시’의 뜻으로, 之는 종결사 ‘다’ 혹은 ‘니라’의 뜻으로 사용되었다. 또한 ‘在旡’는 ‘(이)시며’, ‘在也’는 ‘(이)시다’의 뜻으로 쓰였다. ‘在’가 ‘있다’라는 뜻이므로, ‘이시’라는 소리를 갖게 된 것으로 본다면, 이는 한자의 훈을 신라어의 음을 나타내는 데 사용한 것이다. 한편 旡는 한자의 음을 빌려 그대로 신라어의 ‘머’라는 음을 나타낸 것이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고유어의 어휘 자체를 한자의 음과 훈으로 나타내기에 이른다. 이 과정에서도 불경의 번역과정에서 축적한 표기방식이 영향을 끼치게 된다. 예를 들면 스투파(stupa, 산스크리어로 स्तूप)를 卒塔婆, 상가(sangha)를 僧伽 등 한자의 음으로 표기하였다. 지옥을 뜻하는 나라카(naraka)는 奈落으로 표기하였는데, ‘落’은 음뿐만 아니라 의미상으로도 연관성을 갖도록 하였다. 주변제국은 이렇게 한자와 불경을 수용하면서 한자의 뜻에 해당하는 고유어의 뜻을 확정하게 되는데, 이는 고유어의 어휘 그 자체를 발견해가는 과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한자라는 문자와 접촉하면서 동시에 자신들의 고유어에 대해서도 비로소 주목하게 된 것이다.

예를 들면 창녕의 옛이름은 比子伐(창녕 진흥왕순수비), 比斯伐(『삼국사기』 「신라본기」), 比自火(『삼국사기』 「지리지」), 非火(『삼국유사』 「기이」 오가야조), 比自焮(『일본서기』 「신공기」)로 나타난다. 첫 번째 글자인 比와 非는 음이 일치하지만 그 뒤의 글자는 다양한 한자들이 사용되고 있다.

그런데 마지막에 있는 한자는 소리가 벌·발이 많이 보인다. 한편 火의 훈은 불이므로, 마지막 소리는 결국 벌·발·불로 좁혀진다. 창녕의 고명을 나타내기 위해서 소리로 벌·발이라고 하기도 했고 뜻으로 불을 쓰기도 한 것이다. 문제는 가운데 한자다. 子·自와 같이 음이 같은 것이 있는가 하면, 斯라고 한 경우도 있고 가운데 소리를 아예 나타내지 않은 경우도 있다. 전혀 음도 다르고 뜻도 다른 한자를 사용하거나 아예 한자를 사용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결국 독립된 소리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 아니고 첫 번째 소리의 받침을 나타내려는 궁여지책으로 보인다. 즉 가운데 한자를 다 발음하지 않고 앞 글자의 받침을 나타내기 위하여 초성 즉 자음의 음가만 이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렇게 보

면 가운데 글자의 음가는 ㅈ과 ㅉ으로 압축된다. 이를 첫 번째 소리에 받침으로 놓으면 빗 혹은 빚이 된다.

결국 여러 가지 한자표기는 차례대로 빗벌, 빚벌, 빗불, 비불, 빚발이라는 소리를 나타내려고 한 것이다. 빗 혹은 빚은 바로 빚이다. 창녕의 고명은 바로 '빗벌'이고 그 소리를 여러 가지 한자로 표기한 것이다. 그리고 非火(비불)는 받침을 표기하지 않은 것이다. 사용한 한자가 무엇이든 간에 결국 하나의 소리를 근사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편인 것이다. 한자음보다 훨씬 복잡한 받침을 가지고 있는 신라어를 한자로 표기하려고 했던 고대인들의 고투가 눈에 선하다. 그러나 고대 한국어는 첫소리와 받침이 복잡하여 한자의 음만으로는 그 음가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한자를 그대로 이용한 표기에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었다.

이처럼 복잡한 음가를 한자에 용이하게 대응시킬 수 없는 상황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할 수 있는 표기방식이 訓借表記라고 할 수 있다. 한자를 읽을 수 있는 계층 내부에서 한자에 대한 훈이 상당한 정도로 고정되기에 이르렀다고 한다면, 훈을 사용함으로써 고유어를 나타낼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 인명의 경우를 보면 앞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居染夫를 荒宗이라고 표기하는 방식이다. 대다수의 사람이 荒에 대해서 '거칠다', 宗에 대해서는 '마루'라는 훈으로 인식할 수 있다면 이러한 훈차표기도 유용한 도구가 될 수 있다. 그러나 훈에 대한 공통인식이 성립되지 않은 상황이라면 훈을 공유하는 일부의 사람들 사이에서만 통용될 수 있었을 것이다.

이러한 사례를 통해서 한자로 고대 한국어를 표기한 원칙을 보면 다양한 방식이 있음을 알 수 있다. 비사벌과 같이 모두 한자의 음만을 이용한 음차 방식, 황종과 같이 모두 한자의 훈을 이용한 훈차 방식, 비자화나 伊宗과 같이 음차와 훈차를 혼용한 방식 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현재 일본어에서 음차와 훈차를 혼용하고 있는 것과 거의 같은 양상이다.¹³⁾

13) 일본에서는 音借+訓借로 읽는 경우를 重箱(じゅうばこ)読み, 訓借+音借로 읽는 경우를 湯桶(ゆとう)読み라고 한다.

그러나 우리말이 한자음보다도 더 많은 字音韻尾(받침)가 있는 것이 문제가 된다. 수·당시대의 자음운미에는 p, t, k, m, n, ŋ가 있었으나, 고대 한국어에는 d, l, b, s, z, ts, h과 후대에 終聲合用竝書라고 부르는 받침들이 더 있었던 것으로 생각되기 때문에, 한 한자로 한 음절씩 표현하는 것이 불가능하였다. 뿐만 아니라, 聲母 즉 初聲의 경우에도 初聲合用竝書가 있었다.

후자의 예로 角干과 舒伐邯을 들 수 있다. 이 두 가지 한자표기는 동일한 것인데, 각각은 훈차와 음차로, 서별한은 음차만으로 이루어져 있다. 그런데 서별한의 첫 번째 한자인 舒는 온전한 발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그 성모만을 취하여 별과 함께 발음한 것으로 생각된다. 즉 ‘ㅅ+별’ 즉 ‘썰’이라는 음가를 가지도록 한 것이다. 이는 중세 국어에서 角의 훈이 ‘썰’이었던 사실과 대응된다.

따라서 고대 한국어의 경우는 이론적으로 한 음절을 표시하려고 할 때 경우에 따라서는 3~4자의 한자를 사용할 필요도 있었을 것이다. 즉 초성(합용병서), 중성, 받침(합용병서 포함)으로 이루어진 복잡한 발음체계로 인하여 일본의 假名처럼 한자 한 글자에 한 음절씩 대응시키는 방식 자체가 근본적으로 불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3. 가나

이처럼 한자의 훈과 음을 이용하여 고유어를 나타내는 방식은 일본에서도 확인된다. 간단한 예로는 오쓰시[大津市]의 기타오쓰유적[北大津遺跡]에서 출토된 목간에는 ‘贊’이라는 한자에 대하여 ‘타스쿠[田須久]’라고 注記되어 있다. ‘찬’은 일본어로 ‘타스케루’ 즉 ‘도우다’라는 훈을 가지고 있으며, 이의 고행은 ‘타스쿠’이다. 그런데 ‘田須久’ 중에서 田은 ‘타’ 즉 논이라는 한자의 훈으로 읽어야 하고, ‘須久’는 ‘스쿠’ 즉 음으로 읽어야 한다.¹⁴⁾

14) 沖森卓也, 2009, 앞의 책, 50쪽. 이러한 방식은 일본에서 처음 고안된 것이 아니고 한반도에서 정립된 방식을 渡來人들이 일본에 전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萬葉集』에서 폭넓게 나타나기 때문에 만요가나라고 하며, 이를 이용하여 표기된 7세기 중엽부터 8세기 초기의 목간들이 출토되고 있다. 藤原京에서 출토된 목간의 예를 들어 보자.

奈尔皮川尔佐久矢己乃皮奈布由己母利□眞波波留へ止
佐久□□□□□

難波津に咲くやこの花冬こもり春べと
咲く(やこの花)

이 목간에서는 대부분을 한자의 음을 이용하여 바로 倭語의 음절 단위로 표기하고 있다. 그런데 矢를 '야(や)'로, 眞을 '마(ま)'로 읽는 것은 한자의 훈을 이용한 것이다. 이처럼 음을 이용한 것을 音假名(音借假名), 훈을 이용한 것을 訓假名(訓借假名)이라고 한다.¹⁵⁾ 이 과정에서 한자로 표기된 내용이 구체적으로 고유어의 어떤 어휘를 가리키는지를 확정하기 위해서는 좀 더 안정적인 표기방법이 필요하게 된다. 일본의 경우는 만요가나를 통해서 표기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된다. 그리고 그것이 곧 일본의 문자인 가나로 발전하게 된다. 동시에 만요가나는 고대일본어의 어휘를 그대로 보여줄 수 있게 됨으로써 음운자료로서의 가치도 크다. 일본에서 만요가나가 성립되는 과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자.

5세기 후반에 제작된 것으로 보이는 稻荷山古墳鐵劍銘 속에서는 인명과 지명을 한자의 음을 이용하여 표기하고 있다. 예를 들어 乎獲居(ヨウケ), 意富比跪(オホヒコ), 다가리족니(タカリスクネ), 저이가리획거(テヨカリワケ), 다가피차획거(タカハシワケ), 다사귀획거(タサシワケ), 반저비(ハテヒ), 가차피여(カサハヤ), 획가다지로(ワカタケル), 사귀(シキ)와 같이 일본어의 한 음절에 한 자씩 한자를 대응시켜 그 음으로 표기하고 있다. 이때 사용된 한자의 음가

15) 한자 그 자체를 眞名이라 하고, 한자 본래의 용법이 아니라 임시로 빌려서 표기하였다는 뜻에서 假名이라고 한 것이다.

는 흔히 거론되는 오음, 한음, 당음이 아니라 그보다 더 이른 시기에 일본에 전래된 한자음 즉 古音에 의거한 것이다. 이 고음은 원래 중국 한대의 음가에 입각한 것이고 5세기 이전에 낙랑이나 고구려 등을 통해서 한반도에 수용되어 주로 사용되다가 일본열도로 전래된 것으로 생각된다.¹⁶⁾

이 고음은 현재 가나의 음으로 사용되고 있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가치가 있다. 예를 들어 意가 ‘오(오)’, 富가 ‘호(ほ)’, 己가 ‘요(よ)’라는 음가를 나타내는 가 하면, 다른 자료에서는 乃가 ‘노(の)’, 止가 ‘토(と)’, 支가 ‘키(き)’, 川이 ‘츠(つ)’, 委가 ‘와(わ)’, 奴가 ‘나(な)’ 등의 음가를 가지고 있었다.

이처럼 일본에서는 한자의 품으로 일본어 어휘 한 음절씩 표기하는 방식이 출현하였다. 그리고 일본어의 어휘는 대부분 받침이 없는 개음절어이기 때문에 이러한 표기방식이 발전하여 자신들의 문자인 가나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었다.

일본어에 대한 음차의 경우는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문자로서 가나의 전단계라고 할 수 있는 만요가나는 대부분 全音借로 韻尾가 없는 한자를 주로 사용하고 있으나^①, 때로는 운미를 갖는 한자도 사용하고 있는데, 이 경우에 ②③④로 나누어진다.¹⁷⁾

- ① 全音借: 운미가 없는 한자로 한 음절 전체를 표기하는 경우.
사귀(斯鬼) → 시키
- ② 略音借: 운미를 생략한 상태로 한 음절을 표기하는 경우.
능등(能登) → 노토
- ③ 連音借: 운미를 후속 음절의 초성으로 해소한 경우.
획거(獲居) → 와케
- ④ 合音借: 운미에 모음을 더하여 두 음절을 표기하는 경우.
족니(足尼) → 스퀀네

16) 沖森卓也, 2009, 앞의 책, 181쪽

17) 沖森卓也, 2009, 위의 책, 182쪽. 沖森의 분류에 의거하면서 표현은 다소 수정하였다.

〈표 1〉 히라가나와 한자

	아	이	우	에	오
아	あ 安	い 以	う 宇	え 衣	お 於
카	か 加	き 幾	く 久	け 計	こ 己
사	さ 左	し 之	す 寸	せ 世	そ 曾
타	た 太	ち 知	つ 川	て 天	と 止
나	な 奈	に 仁	ぬ 奴	ね 禰	の 乃
하	は 波	ひ 比	ふ 不	へ 部	ほ 保
마	ま 末	み 美	む 武	め 女	も 毛
야	や 也		ゆ 由		よ 與
라	ら 良	り 利	る 留	れ 禮	ろ 呂
와	わ わ	ゐ ゐ		ゑ ゑ	を を
ㄴ	ん 无				

〈표 2〉 카타카나와 한자

	아	이	우	에	오
아	ア 阿	イ 伊	ウ 宇	エ 江	オ 於
카	カ 加	キ 幾	ク 久	ケ 介	コ 己
사	サ 散	シ 之	ス 須	セ 世	ソ 曾
타	タ 多	チ 千	ツ 川	テ 天	ト 止
나	ナ 奈	ニ 仁	ヌ 奴	ネ 禰	ノ 乃
하	ハ 八	ヒ 比	フ 不	ヘ 部	ホ 保
마	マ 末	ミ 三	ム 牟	メ 女	モ 毛
야	ヤ 也		ユ 由		ヨ 與
라	ラ 良	リ 利	ル 留	レ 禮	ロ 呂
와	ワ 와	ヰ 井			ヱ 乎
ㄴ	ン 尔				

훈차 역시 다양한 방식이 확인된다. 이처럼 한자를 통해서 고유어를 표현하려고 하는 다양한 노력 중에서 일본의 경우는 한자를 변형한 가나[假名]를 문자로 채택하였다. 가나에는 히라가나와 카타카나가 있는데, 히라가나는 나라시대에 주로 사용하던 일본어의 음가를 표시하던 차자가, 헤이안시대에 이르러 초서화가 진행되면서 형성되었다. 9세기 후반부터 詩歌 등에 사용되던 히라가나는 10세기 초에는 『古今和歌集』(905)에도 나타나며 10세기 중엽에는 카타카나와 분명하게 구별되었다. 카타카나는 한자의 부수나 획의 일부를 따서 만든 것이다. 카(カ)는 加의 왼쪽 부분을 나타내는 식이다.

이에 대해서 우리의 경우는 口訣에서 멈추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은 구결과 가나의 관련성도 인정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이러한 가나와 구결

은 한자와 불교라는 문화와 접촉하면서 생겨난 산물이라고 할 수 있다. 문자의 경우도 결코 독자적으로 생겨난 것이 아니라 문화교류의 결과임을 다시 한 번 생각할 필요가 있다.

4. 쓰눔

베트남에는 10세기까지 중국의 군현이 설치되는 등 중국의 영향을 강하게 받았다. 그래서 문화적인 면에서 중국과 가까운 면이 많다. 특히 문자나 종교에서도 중국의 한자, 유교, 불교 등의 영향이 강하다. 1975년까지도 월남에서는 중등학교에서 한문을 가르쳤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의 공식기록 등에는 한자가 주로 쓰였다. 베트남의 언어는 중국어와 같은 고립어이고 성조를 갖기 때문에 서로 유사한 측면이 있어서 베트남에서 한자를 쓰는 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은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한편으로 베트남어의 미묘한 뜻을 표현하거나 소리를 표현하기 위해서 한자를 변형시킨 쓰눔이라는 문자를 만들기도 하였다.¹⁸⁾

쓰눔은 크게 나누면 한자를 그대로 차용한 경우와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다시 한자를 차용한 경우에도 한자의 음과 뜻을 거의 그대로 사용한 경우와 음이나 뜻만을 빌려온 경우로 나눌 수 있다.

글자의 음과 뜻을 다 빌려온 유형으로는 才(베트남 한자음이 tài)를 才(tài), 命(menh)을 命(menh), 德(duc)을 德(duc), 符(phu)를 bua, 務(vu)를 mua, 肝(can)을 gan으로 쓴 경우다.

문자만 빌려온 경우는 다시 뜻을 빌린 경우와 음을 빌린 경우로 나눌 수 있다. 뜻을 빌린 경우는 爪(trao)를 爪(vuot), 腋(dich)을 腋(nach)으로 쓰는 경우이고, 음만 빌린 경우는 沒(mot)을 沒(mot)로 쓰는 경우다.

새로운 글자를 만든 경우로는 음+음, 뜻+뜻, 뜻+소리의 세 가지로 나눌

18) 쓰눔의 출현 시기에 대해서는 2세기, 8세기, 10세기, 11세기 등 다양한 견해가 있으나, 빈번하게 쓰인 시기는 13~19세기다(찐 각 마인 저, 응웬 티 히엔 번역, 2009, 「베트남 쓰눔과 베트남에서 쓰눔 문헌의 보관과 연구」, 『규장각』 34, 90~91쪽).

수 있는데, 음+음의 경우는 巴(ba)+賴(lai)를 巖(trai), 巴(ba)+陵(lang)을 巖(trang)으로 쓰는 경우다. 뜻+뜻의 예로는 天(thien)+上(thuong)을 忸(trời), 人(nhan)+上(thuong)을 仝(trum)으로 쓰는 경우를 들 수 있다. 뜻+소리의 경우는 人+碎는 toi라는 음가를 가지며 ‘나’라는 뜻이고, 廚+寺는 chua라는 음가로 ‘절’이라는 뜻이고, 巴+三은 ba라는 음가로 ‘셋’이라는 뜻이다.¹⁹⁾ 이러한 예는 聲符로는 베트남어의 음가를 나타내고 形符로는 의미를 나타내는 방식으로 새로운 문자를 만든 것이다. 한편 婁는 한자에서는 ‘아름답다’는 뜻을 가지고 있지만, ‘엄마’라는 뜻의 글자로 사용되었다. 餒은 an이라는 음가로 ‘먹다’는 뜻이며, 焮는 한자에서 불꽃이라는 뜻이지만 𣎵으로는 ‘불’이라는 뜻이다. 이 경우는 이미 한자에 있는 글자이지만 뜻을 바꾸어 사용한 것이다. 즉 불이라는 뜻으로 화라는 한자를 쓰지 않고 베트남의 음가인 lua를 반영한 글자를 차용하여 사용한 것이다.

뜻과 소리를 결합하는 마지막 방식은 한자의 제자원리인 六書 중 形聲에 가까운 것이며, 그런 점에서 𣎵은 근원적으로 한자에 의해 규제되는 문자라고 할 수 있다. 현재 𣎵이 CJK(Chinese Japanese Korean Characters in Unicode: 중국어 일본어 한국어 유니코드) 확장B에 4,000여 자가 수록되어 있는 것도 한자의 구성원리와 다르지 않기 때문이다. 이처럼 광의의 한자로 분류될 수 있는 문자를 만들 수 있었던 것은 베트남어 어휘가 대부분은 한자와 마찬가지로 단음절이고 또한 언어 자체도 고립어적인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한반도나 일본열도와는 한자를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달랐다고 할 수 있다.

또한 𣎵은 한문·한자에 정통한 지식인이나 문인만이 구사할 수 있는 까다롭고 복잡한 체계였으므로, 일반인에게 널리 보급되지 않았다.²⁰⁾

19) 찌 캅 마인 저, 응웬 티 히엔 역, 2009, 위의 책, 96~97쪽

20) 찌우 티 투튀, 201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론적 대조연구」, 영남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1쪽

5_ 주변 지역의 문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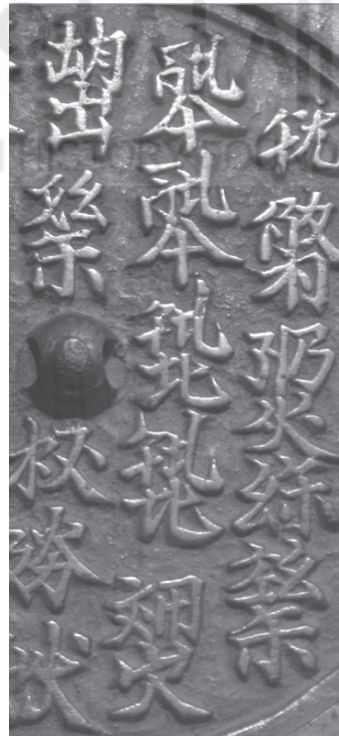
덧붙여 중국 주변의 여러 종족과 국가의 문자를 간략하게 살펴보자. 중국 주변에서 가장 먼저 문자를 가진 것은 突厥(투르크)이었고, 8세기 초부터 사용하였다. 설형투르크문자라고도 불리며 母音이 생략되는 등 서아시아적인 요소를 가지고 있다. 한편 투르크 계통의 위구르족도 비슷한 시기에 소구드어 계통의 문자를 사용하였다. 표음문자인 위구르문자는 17세기까지 사용되었으나, 위구르족이 이슬람교로 개종하면서 아라비아문자로 대체되었다. 위구르문자는 몽골 및 만주의 문자에 영향을 주었다.

티베트인들은 9세기 무렵부터 인도 계통의 표음문자를 사용하였다. 모음

2	二	𐰃	八	天	𐰃	大
3	三	𐰃	萬	祐	𐰃	安
4	四	𐰃	四	民	𐰃	二
5	五	𐰃	千	安	𐰃	年
6	六	𐰃	舍	甲	𐰃	大
7	七	𐰃	利	戌	𐰃	安
8	八	𐰃	黄	五	𐰃	八
9	九	𐰃	金	年	𐰃	年
10	十	𐰃	十	正	𐰃	年
100	百	𐰃	五	月	𐰃	年
1000	千	𐰃	兩	甲	𐰃	年
10000	萬	𐰃	白	戌	𐰃	年
820	年	𐰃	金	十	𐰃	年
		𐰃	五	五	𐰃	年
years		𐰃	十	子	𐰃	年
		𐰃	兩	日	𐰃	年

TANGUT SCRIPT.
With Chinese Equivalents.

〈그림 2〉 서하문자



〈그림 3〉 거란문자

1자(a)와 자음 29자를 이용한 간단한 구조로 현재까지도 사용되고 있다. 티베트문자는 13세기부터 몽골인들이 몽골어를 표기하는 데도 사용하였다. 파스파가 고안하였기 때문에 파스파문자라고도 하였는데, 몽골어를 표기하는 데는 위구르 문자가 적합했기 때문에 이 문자는 곧 사용되지 않게 되었다.²¹⁾ 후에 몽골은 위구르문자에서 파생된 표음문자를 사용하였으며, 이 문자는 다시 만주문자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었다.

10세기경에는 거란[契丹]문자가 출현한다. 거란문자는 표의문자인 大字와 표음문자인 小字 두 종류가 있다. 대자는 漢字를 참고해서 만든 것으로 생각되지만, 한자의 기원이 분명하지 않은 것도 있다. 소자는 위구르문자와 같은 표음문자의 영향 속에서 성립된 것으로 글자의 형태는 한자와 유사하다. 또한 글자를 조합하는 방법도 한자의 扁이나 旁과 비슷하다. 이는 한글에서 자음자와 모음자를 조합하여 음절을 만드는 방식과도 상통한다. 음가를 나타내는 字母는 300~400개 정도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되고 있으며, 이 자모를 2~7개까지 조합하여 소리를 나타내었다. 그러나 대자·소자 모두 제대로 해독되지 않고 있으며, 문자의 성립 과정도 분명하지 않은 것이 많다. 이러한 거란문자는 여진문자에 영향을 주었다.²²⁾

11세기에 성립된 西夏문자는 한자의 구성원리를 이용한 것으로, 특히 한 글자 안에 의미를 나타내는 요소와 소리를 나타내는 요소를 가진 이른바 六書의 形聲과 의미를 모은 會意에 해당하는 것이 많다. 현재 6,000자 정도가 알려져 있으며 西田龍雄의 연구를 통해서 그 음운조직이나 말의 구조가 상당 부분 해명되었다.²³⁾

거란을 멸한 女真族도 거란 및 서하에 맞서려는 듯이 자신들의 문자를 만들었다. 한자와 거란문자를 반영해서 만든 여진문자는,²⁴⁾ 역시 한자를 바탕으

21) 藤枝晃, 1999, 『文字の文化史』, 東京: 講談社, 230~240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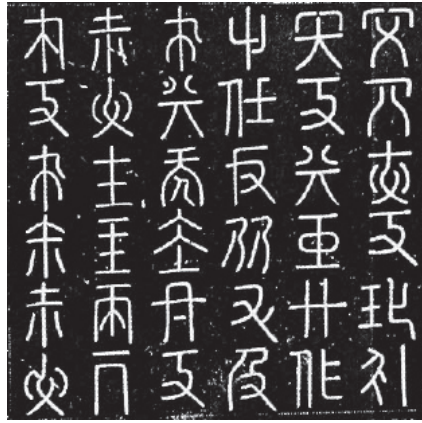
22) 田村實造, 1976, 「契丹·女真文字考」, 『東洋史研究』 35-3, 8~15쪽

23) 藤枝晃, 1999, 앞의 책, 242~244쪽

24) 『金史』 권37, 耶律希尹傳, “金人初無文字, 國勢日強, 與隣國交好, 迺用契丹字. 太祖命希尹, 撰本國字, 備制度. 希尹乃依倣漢入楷字, 因契丹字制度, 合本國語,

로 했기 때문에 표의성을 갖는 글자와 표음성을 갖는 글자를 함께 갖추고 있다. 이를 역시 대자와 소자로 나누며 글자의 형태는 역시 한자에 가까운 것이다.

동아시아 지역에서 마지막으로 성립된 문자가 몽골문자의 영향을 받은 만주문자다. 1632년에 최종적으로 완성된 이 문자는 총 32자로 이루어진 표음문자인데, 모음 6자, 자음 19자이고, 글자 옆



〈그림 4〉 여진문자

에 점과 혹은 둥근 점을 붙여 음을 구분한다. 위치에 따라서 글자 형태가 달라지는 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면 한자 주변에서 생성된 문자는 한자를 참고하여 고안된 문자(거란문자, 서하문자, 여진문자)와 서아시아문자(돌궐문자, 위구르문자, 몽골문자, 만주문자) 및 인도문자(티베트문자, 파스파문자)의 영향 속에서 형성된 문자가 있고, 다시 한자를 참고한 문자 중에는 표의성이 강한 것(거란문자와 여진문자의 大字)과 표음성이 강한 것(일본문자, 거란문자와 여진문자의 小字)으로 나눌 수 있으며, 한 문자 속에 의미를 나타내는 글자와 소리를 나타내는 글자(월남문자)가 공존하는 경우도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이처럼 동아시아 주변 지역의 문자는 실로 다양한 양상을 보인다. 그런데 조선이 만든 문자는 위구르 계통의 문자처럼 표음문자이면서, 거란 및 여진 문자의 소자와는 달리 한자에 의존하지 않고 전혀 독자적인 방식으로 만들어졌다.

Ⅲ. 훈민정음

한국어는 일본어와 같은 교착어이지만 초성(성모)에 합용병서와 같은 음가가 있고 받침도 복잡하므로 한자의 음과 훈을 차용하는 방법으로는 충분하게 말을 표현할 수 없었다. 그래서 한국어를 표현하는 효율적인 수단인 훈민정음의 창제를 기다릴 수밖에 없었다. 그러나 훈민정음의 창제 역시 일국사적인 관점으로만 판단할 수 없으며 동아시아적인 관점에서 생각해보지 않을 수 없다.

1_ 훈민정음 창제 목적을 둘러싼 논란

이승녕은 종래의 훈민정음 제정에 관한 연구를 비판하기를, 세종대왕 개인의 연구와 훈민정음 제정 배경에 대한 고찰이 결여되었으며, 오직 찬사와 비판 없는 서술이 있을 따름이어서 그것으로 진상의 파악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하였다. 그는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이 명의 등장과 홍무정운의 제정에 따른 한자음의 改新과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그것은 결코 민족적인 자각에 기인한 것이 아니라, 당시의 성리학, 음운학 그리고 외교적인 필요성에 입각한 것이라고 역설하고 있다.²⁵⁾ 또한 『훈민정음』의 설명 방식에 의아함을 드러낸 경우도 있다.

반포 당시에 국문자 훈민정음 초성 ㄱ ㅋ ㅇ… 등 글자를 한문자 君 快 業… 등으로 설명해서 이해시키려 노력한 것도 가상하나, 君快樂 등 한문자를 전혀 모르는 ‘愚民’이 어떻게 ‘易習’할 수 있겠는가. 그들에게 글자를 깨우쳐주기 위해서라면 “ㄱ 牙音 如君字初發聲” 식의 설명보다는 차라리 저 用字例의 “初聲 ㄱ 如甘 爲柿 ㄴ 爲蘆, ㅋ 如우케爲未 春稻, 콩爲大豆” 등과 같이 ㄱ는 감 첫소리 ㄴㅌ니라, ㅋ는 콩 첫소리

25) 이승녕, 1958, 「세종의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특히 운서 편찬과 훈민정음 제정과 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아세아연구』 1-2, 29·44쪽

그특나라 등 식으로 엮었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텐데 유감이다.²⁶⁾

이처럼 이동림은 초성의 음가를 우리말의 음가로 나타내려고 하지 않고, 君·快 등의 한자를 예로 든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있다. 이른바 어리석은 백성들은 한문은 물론이고 한자도 해득할 수 없으므로 『훈민정음』(해례본)은 있으나마나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점을 바꾸어 『훈민정음』이 이미 한자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훈민정음의 음가를 알려려고 한 것이라고 보면 그 설명방식을 쉽게 납득할 수 있다.

또한 “國之語音異乎中國，與文字不相流通”의 語音이 우리말의 음가가 아니라 ‘漢字語音’ 즉 한자에 대한 음가가 당시 명나라와 다르다는 뜻으로 보아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어 있다. 만약 어음이 우리말이라면 중국과 다른 것이 당연하고 文字 즉 한자와 서로 통하지 않은 것도 당연한 것이다. 그런 점에서 어음은 우리말을 뜻하는 厶語에 대하여 중국어(語)의 음가를 말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²⁷⁾ 당시에는 문자의 경우도 지금처럼 일반적인 문자를 뜻하는 것이 아니라 한자를 뜻하는 용어였고, 이에 대하여 훈민정음은 諺文이라고 하여 구분하였다.

한편 만약 훈민정음이 우리말을 위한 문자라면 왜 훈민정음 즉 ‘바른 소리’라고 하였을까? 무엇에 대한 바른 소리라는 것일까? 실제로 훈민정음에 제시되어 있는 음가는 당시 우리말의 음가를 올바르게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즉 훈민정음의 자모체계는 우리말을 표기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차라리 동국정운의 편찬을 위한 注音體系라고 할 것이며, 훈민정음과 동국정운은 그 음운체계가 거의 일치한다.²⁸⁾

그래서 우리말 음가에 없는 글자도 훈민정음에 포함되어 있다. 예를 들어 ㄸ(挾字初發聲·影母)의 경우 “初聲 ㄸ與ㅇ相似，於諺可通用也”라고 하여 ㅇ과 비슷하므로 우리말에서는 통용된다고 하였다. 통용될 수 있는 음을 위해

26) 이동림, 1990, 「동국정운 초성 자모 23자의 책정과 그 해석」, 『국어학』 23, 8쪽

27) 강길운, 1972, 「훈민정음창제의 당초목적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5-57, 6쪽

28) 강길운, 1972, 위의 글, 11쪽

두 글자를 다 드러내었다는 것 자체가 쉽게 익혀 쓰도록 하겠다는 원칙에 어긋난다고 할 수 있다.

‘바른 소리’라는 것은 漢字에 대한 ‘바른 소리’ 즉 정확한 음가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야 하지 않을까? 『直解童子習序』에서 “배우는 사람이 진실로 먼저 正音 몇 글자를 배우고 나면, 열흘 안에 漢語에 통할 수 있고, 韻學에 밝아질 것이니 事大를 능히 다할 수 있다.”라고 하였는데,²⁹⁾ 正音 즉 훈민정음이 漢語를 익히고 한자의 음운을 알기 위한 수단으로 간주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洪武正韻譯訓序』에서도 훈민정음의 창제와 관련하여 세종대왕이 “성운의 근원과 말단을 모두 연구하여, 참작하여 재정하니, 7음과 4성의 중황이 모두 바르게 되었다. 우리 동방에서 천년 백년 동안 알지 못하던 바를 열흘이 되지 않아 알 수 있다.”고 하여,³⁰⁾ 한자의 성운을 바로잡았으며, 종래에 제대로 알지 못하던 한자의 음가를 열흘 안에 알 수 있게 되었다고 평가하였다.

이를 통하여 『訓民正音序』에서 “28자로서 전환이 끝이 없으니, 간단하면서도 긴요하고 자세하면서도 널리 통한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아침 나절에 이해할 수 있고, 어리석은 자도 열흘이면 통할 수 있다.”고 한 것은³¹⁾ 훈민정음으로 우리말을 쓰는 방법을 익힌다는 뜻이 아니라, 한자의 정확한 음가를 알 수 있다는 뜻을 확인할 수 있다.³²⁾

그런데 훈민정음의 창제가 한자음의 개신을 위한 것(이승녕)인지 단순히 조선의 한자음가를 注音하기 위한 것(강길운)인지가 문제가 된다. 그 때문에 강길운은 『東國正韻』이 조선의 國俗音 본위의 韻書라고 본 데 대하여, 많은 학자들은 세종이 『홍무정음』을 참고하면서 만들어낸 이상적인 음가 즉 조선의 俗音과는 상당한 거리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29) 『直解童子習序』學者苟能先學正音若干字，次乃於斯，則浹旬之間，漢語可通，韻學可明，而事大之能事畢矣。

30) 『洪武正韻譯訓序』悉究聲韻源委，斟酌裁定之，使七音四聲一經一緯竟歸于正，吾東方千百載所未知者，可不浹旬而得。

31) 『訓民正音序』以二十八字，而轉換無窮，簡而要精而通，故智者不終朝而會，愚者可浹旬而學。

32) 강길운, 1972, 앞의 글, 9쪽

한편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에 대해서는 정다함의 견해를 참고할 수 있다. 그는 훈민정음을 “조선이 中華라는 보편제국의 언어 문자 표준을 수용하는 동시에 조선 스스로의 언어 문자 표준을 확립하는 과정의 결과물”로 보았다. 그의 견해를 발췌해보면 다음과 같다.

홍무제는 『홍무정운』을 정하여 명의 새로운 음운 표준을 제시하는가 하면, 表箋의 모범적인 양식을 정하여 천하에 반포하였다. 이에 따라서 조선의 사신과 역관들은 명의 漢語를 올바르게 구사해야 했고, 명에 보내는 외교문서도 명의 漢吏文의 격식에 따라 작성해야 했다. 실제로 조선이 보낸 표전의 자구를 명 태조가 트집을 잡아 외교문제로 비화되기도 하였다.

그래서 역관뿐만 아니라 문과에서 가장 우수한 성적을 거둔 자들을 외교문서를 담당하는 승문원에 우선적으로 배치하여 한어 및 한이문을 배우게 하고, 양반층의 연소충민한 의관자제, 생원, 진사, 문신들에게 이를 익히게 하는 제도와 관행이 훈민정음 창제 이전인 세종대 초중반에 집중적으로 마련되었다.

나아가서 명이 제시한 한어의 표준을 수용하기 위해서는 한어의 소리를 나타낼 수 있는 표음문자 체계가 필요하게 되었다. 때문에 중국 음운학의 원리를 터득하고 이를 응용하고 보완하여 한자의 표준음을 나타낼 수 있는 표음문자 체계를 고안하게 되었다. 당연히 세종이 훈민정음으로 가장 먼저 착수한 작업이 『홍무정운』의 譯訓이었다(세종 26년 2월경). 또한 한어습득관들이 홍무정운의 표준 한어 발음을 언문 즉 훈민정음을 사용하여 익히게 된다.³³⁾

2_ 세종 이전의 한자음

훈민정음 창제의 주된 목적이 한자 음가를 표시하기 위한 발음기호였는지 우리말을 표현하기 위한 문자였는지는 차치하고라도, 『동국정운』의 완성은 조선

33) 정다함, 2009, 「여말선초의 동아시아 질서와 조선에서의 漢語, 漢吏文, 訓民正音」, 『한국사학보』 36

의 한자 음가를 개신하는 역할을 하였을 것이다. 물론 세종은 『동국정운』의 음가를 강제하지 않고 편의에 따르도록 하였지만,³⁴⁾ 한자의 음가가 문제가 되는 경우에는 『동국정운』이 중요한 기준이 되었을 것이다.³⁵⁾ 그렇다면 세종이 최만리의 상소에 대하여 “너희가 운서를 아느냐! 4성 7운에 자모가 몇 개냐! 내가 운서를 고치지 않으면 누가 바로잡을 수 있겠느냐.”라며 격한 어조로 질책하며, 운서의 편찬, 한자음의 개신에 나설 수밖에 없었던 것은 무슨 까닭일까?

이는 조선 초기의 한자 음가가 하나로 통일되어 있지 않았던 상황에 기인한다. 신숙주는 『동국정운』의 서문에서 그러한 상황을 “聲音이 어지러워져서 경수[溍]와 위수[渭]가 같은 강처럼 인식되고, 옆으로는 四聲의 기준이 없어지고, 아래위로는 七音의 기준이 흔들리니, 가로세로가 서로 맞지 않아 경중이 순서를 바꾸고, 성운의 변화가 심해졌다.”고 인식하였고,³⁶⁾ 『直解童子習序』에서도 “위아래로는 사성의 빠르고 느린 것이 흔들리고, 옆으로는 칠음의 청탁이 없어졌다.”고 하여 같은 내용을 반복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단순한 혼란이 아니다. 우리가 중국 한자음을 받아들인 복잡한 과정과 맞물려 있고, 그 과정 자체가 사실은 한반도의 역사이기도 하다.

우리나라의 한자음은 신라의 통일과 경덕왕대의 한자 지명 제정(757), 고려의 통일과 국자감의 설치(992) 및 지방 학교의 설치 그리고 과거제도의 시행 등을 계기로 10세기쯤에는 일단 그 규범이 잡힌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한자음이 어느 시대, 어느 지역의 음의 영향을 받은 것인지에 대한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그래서 남방 오음설(Maspero), 당대 장안설(가노로 쿠로오[河野六郎], 칼그렌[Karlgren], 박병채, 이기문 등), 송대 개봉음설(아리사카 히데요[有坂秀世])이 제기되어 있으며, 그중에서 당대 장안설이 우리

34) 『世宗實錄』 30년 9월조, “頒布東國正韻于成均館及四部學堂。仍教曰, 本國人民, 熟習俗韻已久, 不可猝變, 勿強教。使學者, 隨意爲之。”

35) 『동국정운』에 규정된 유기음과 유성음이 이후 한자 음가에 반영되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박병채, 1966, 「고대국어의 한자음 연구」, 『아세아연구』 9-2, 16~17쪽

36) 『東國正韻序』 聲音亂而涇渭同流, 橫失四聲之經, 縱亂七音之緯, 經緯不交, 輕重易序, 而聲韻之變極矣.

학계에서는 유력한 듯하다.³⁷⁾ 중국 음운의 전문가들이 이렇게 우리 한자음의 계통을 제대로 잡지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우리 한자음이 단일한 계통을 가질 것이라는 선입견 때문이 아닐까.

역사적으로 보면, 우리의 한자음은 결코 단일할 수가 없다. 먼저 한과 접촉하면서 알게 된 가장 이른 시기의 한자음이 있었을 것이다. 이 음이 고구려, 백제에 특히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그러나 남북조시대에 들면서 고구려는 주로 북조, 백제는 주로 남조와 교통하였다. 아마 삼국통일 이전에는 한자가 고음과 남조와 북조의 음가가 뒤섞인 채로 받아들여졌을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을 바꾸어 놓은 것이 신라의 통일이다. 신라는 당과 오랜 기간 교류하였고, 외교관, 유학생, 승려들이 빈번하게 파견되고 또 오랫동안 체류하는 경우도 있어서 신라는 주로 당 장안의 음가 즉 북방음을 받아들였을 것이다. 다시 고려의 건국과 더불어 송과 통교를 하였을 것인데 남송시대에는 항주(杭州)의 음가도 일부 유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한자 음가의 변화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은 원의 간섭이다. 특히 원의 부마국이 되면서 고려와 원이 통혼을 하였고, 왕자들은 원 황실의 일원으로 오래도록 북경 등에 머물렀다. 약 100년에 이르는 이 기간은 우리 역사상 중국의 왕조와 가장 긴밀하게 접촉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한자 음가도 당연히 몽골어의 영향을 받게 되었을 것이고(元音으로 가칭), 명의 주원장이 그 영향을 받은 고려 사신의 중국어를 용납하지 않았다. 조선에 들어서 명이 제정한 『홍무정운』의 영향을 받게 된 것은 익히 알려진 바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어느 왕조의 지배층이나 왕도에서 받아들였다고 해서 그것이 곧 그 지배영역 전체 혹은 모든 계층에 수용되었을 것으로 보기 어렵다는 점이다. 한자는 일반적인 경우에 한 자 한 자에 대한 음가를 배우기 보다는 어휘로 익히는 경우가 많다. 또한 특수한 영역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래 되어 오는 음가도 있었을 것이다. 특히 불교계에서는 이미 관용화된 음가들이

37) 마숙향, 2002, 「중세한국한자음에 반영된 중고한음의 개음」, 이화여자대학교 석사 학위논문, 16~18쪽

적지 않았을 것이 분명하다. 예를 들어 ‘摩訶般若波羅’는 불교용어로는 ‘마하반야바라’이고, ‘菩提心’은 ‘보리심’이고, ‘阿耨多羅三藐三菩提’는 ‘아녹다라삼막삼보리’이고, ‘道場’은 ‘도량’이다. 이러한 현상은 원래 불교계에만 한정되지 않았을 것이다. 성리학의 경우도 원을 거쳐 도입되면서 중요한 용어들이 원나라의 음가로 읽혔을 가능성을 부정할 수 없다. 지방에 따라서 한자의 음가가 다른 경우도 있을 수 있다.

일본의 한자 음가가 바로 그러한 경우다. 간단한 예를 들면 밝은 명을 들 수 있다. 명은 明治에서 보는 것처럼 일반적인 음가가 ‘메이’(漢音)다. 그러나 金光明經과 같은 불교 용어에서는 ‘콘코오묘오쿄오’ 즉 ‘묘오’로 발음된다(吳音). 그러나 나라 이름 명은 ‘밍’으로 발음된다(唐音).³⁸⁾ 거기에 古音이라고 불리는 한반도에서 형성된 음가도 찾아볼 수 있다.

또한 이미 전술한 바와 같이 비록 현재 일본어 한자음에는 한음이라고 불리는 것이 다수를 차지하지만 그런 상황은 19세기 이후에 만들어진 것이다. 고대 이후 강력한 통일권력이 존재하지 않았던 일본에서는 한자 음가를 통일하려는 주체도 그것을 실현할 수 있는 역량도 갖지 못했던 셈이다.

3_ 『홍무정운』 음가의 중요성

조선의 한자 음가는 단순히 와전된 것이 아니라, 특히 한자 어휘의 기원에 따라서 같은 한자라도 다른 음가로 읽히는 경우가 적지 않았을 것이다. 종래에는 조선 초기의 한자 음가와 중국의 한자음이 다른 경우와 같은 聲符를 가진 글자가 서로 음이 다른 경우를 주로 생각하였으나, 일본의 상황과 마찬가지로 동일한 한자가 서로 다른 음으로 읽히는 경우 즉 한 한자가 복수의 음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상정해야 할 것이다. 즉 『동국정운』의 편찬 목적은 『홍무정운』의

38) 이는 일본에서 쓰는 관용적인 표현이고 실제 왕조와는 전혀 무관하다. 吳音은 6세기 남조의 음가, 漢音은 7세기 이후 隋唐의 음가, 唐音은 宋·元·明 등에서 온 음가다.

음가를 반영하려는 목표와 조선에서 동일한 한자에 대한 음가가 서로 다른 상황을 극복하고 음가를 통일하려는 의도가 동시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의 사료를 통해서 『동국정운』과 『홍무정운』의 의도를 대강 짐작할 수 있다.

본조(本曹)는 의정부(議政府), 사역원 제조(司譯院提調)와 더불어 다소 연소한 문신(文臣)과 의관 자제를 선정하여 원액(元額)에 충당하고 한음(漢音)과 자양(字樣)을 익히려 하니, 청컨대 『증입언문(增入謄文)』, 『홍무정운(洪武正韻)』을 으뜸으로 삼아 배우게 하소서.”하니, 그 대로 따랐다.³⁹⁾

(신숙주는) 정음(正音)을 알고 한어(漢語)에 능통하여 『홍무정운(洪武正韻)』을 번역하였으며, 한음(漢音)을 배우는 자들이 많이 이에 힘입었다.⁴⁰⁾

세종조(世宗朝)에 신숙주(申叔舟)·성삼문(成三問) 등을 보내어 요동에 가서 황찬(黃瓚)에게 어음(語音)과 자훈(字訓)을 질정(質正)하게 하여 『홍무정운(洪武正韻)』과 『사성통고(四聲通考)』 등의 책을 이루었기 때문에,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에 힘입어서 한훈(漢訓)을 대강 알게 되었습니다.⁴¹⁾

임금이 대신과 비국 당상을 인견하였다. 좌의정 한익모(韓翼謨)가 말하기를, “우리나라의 한음(漢音)은 일체 『홍무정운(洪武正韻)』에 따라 정리하였습니다.(하략)⁴²⁾

물론 이러한 발언들이 반드시 전문적인 음운학자들이 한 것은 아니지만, 조선시대의 『홍무정운』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하겠다. 『홍무정운』의

39) 『국역조선왕조실록』 세조 003 02/04/09(무신)

40) 『국역조선왕조실록』 성종 056 06/06/21(무술)

41) 『국역조선왕조실록』 성종 200 18/02/02(임신)

42) 『국역조선왕조실록』 영조 110 44/04/24(신사)

번역은 훈민정음이 창제된 이후 세종이 최초로 착수한 사업이었고, 이후에도 『고금운회거요』의 번역, 『동국정운』의 편찬 등 주요 사업이 모두 음운과 운서에 관한 것이었다는 사실을 간과할 수 없다. 그런 점에서 훈민정음이 한자음의 음가를 표시하기 위한 발음기호라는 측면이 분명히 있다. 훈민정음이 우리말을 표기할 수 있는 문자인 것은 분명하지만, 우리말만을 표기하기 위해서 만든 것이라고 단순하게 이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4. 과거 과목으로서의 『훈민정음』

『훈민정음』은 원래 한문으로 작성된 문헌이다. 그리고 五音의 원리를 五行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음가의 예시도 한자로 되어 있다. 일반 백성들을 위한 것이라면 음가의 예시도 한자가 아니라 우리말 어휘로 했을 것이다. 그런 점에서 『훈민정음』은 애초부터 일반 백성들이 익을 것을 염두에 두지 않은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현재의 일반인들도 子音이 五音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쉽게 이해하기 어렵다. 음운학에 어느 정도의 지식은 있어야 五音을 이해할 수 있다. 또한 새롭게 제정된 자음 중에는 곧 사용되지 않게 된 것도 있다. 이는 우리말의 음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라기보다는 한자의 음가를 표현하기 위한 것이었다고 해야 할 것이다. 『훈민정음』이 일반 백성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은 그 자체가 과거의 시험과목으로 운용되었다는 점에서도 쉽게 짐작할 수 있다.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훈민정음』은 선왕(先王)께서 손수 지으신 책이요, 『동국정운(東國正韻)』·『홍무정운(洪武正韻)』/홍무정운역훈』도 모두 선왕께서 찬정(撰定)하신 책이요, 이문(吏文)도 또 사대(事大)에 절실히 필요하니, 청컨대 지금부터 문과 초장(文科初場)에서 세 책을 강(講)하고 사서(四書)·오경(五經)의 예에 의하여 분수(分數)를 주며, 종장(終場)에서 아울러 이문(吏文)도 시험하고 대책(對策)의 예(例)에 의하여 분수를 주소서.”하니, 그대로 따랐다.⁴³⁾

43) 『국역조선왕조실록』 세조 020 06/05/28(계묘)

매 식년(式年)의 강경(講經)할 때를 당하거든 4서(四書)를 강(講)하고, 아울러 『훈민정음』·『동국정운(東國正韻)』·『홍무정운(洪武正韻)』·이문(吏文)과 또 5경(五經) 및 여러 사서(史書)를 시험하되(후략)⁴⁴⁾

예조(禮曹)에서 아뢰기를, “앞서 있었던 과거(科擧) 때에는 단지 『예부운(禮部韻)』만을 썼으니, 청건대 이제부터는 『홍무정운(洪武正韻)』을 아울러 쓰도록 하고, 역과(譯科)에는 아울러 『동자습(童子習)』을 시험하게 하소서.”⁴⁵⁾

이처럼 『훈민정음』이 『동국정운』이나 『홍무정운』과 더불어 과거 시험의 초장에서 사서오경과 함께 그 내용의 숙지도를 시험하는 과목이었음을 알 수 있다. 『훈민정음』이 과거 시험의 과목이었다고 한다면, 문헌으로서의 『훈민정음』만이 아니라 문자로서의 훈민정음도 이미 한자와 한문을 잘 알고 있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또한 『동국정운』이나 『홍무정운』과 같은 漢字에 대한 韻書와 함께 시험을 본 점에서, 『훈민정음』이 漢字의 音韻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는 점도 확인할 수 있다.

IV. 근대 이후의 한자

일본에서는 명치유신을 전후한 시기부터 서구의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면서 서 번역의 시대라고 해도 좋을 정도로 많은 번역서가 출간되었고, 이와 함께 서양 문물과 관련된 많은 한자를 사용한 번역어도 만들어졌다. 그리고 그러한 한자 번역어들이 현재 우리가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많은 한자어의 출발점이

44) 『국역조선왕조실록』 세조 021 06/09/17(경인)

45) 『국역조선왕조실록』 세조 028 08/06/10(계유)

되었다. 그런 점에서도 한자는 비록 중국에서 생겼지만 중국만의 전유물은 아니며, 특히 서구의 문물이나 개념에 관련된 많은 한자 어휘가 일상적으로 쓰이게 되었다. 서구문화의 번역에서 비롯된 한자어가 홍수처럼 밀려든 것은, 한자문화권의 근대적인 변모라고 할 수 있다.

1_ 서양 문물과 번역

서양 문물의 번역 작업은 전근대 시기에도 있었다. 명대의 마테오 리치의 『天主實意』(1593~1596)나 스키타 겐파쿠[杉田玄白]의 『解體新書』(1774)가 대표적이다. 이들 책에서 유래한 天主, 神經, 軟骨, 動脈, 生殖器 등의 번역어는 현재도 널리 쓰이고 있다. 그러나 이런 책들은 종교, 의학 등 극히 제한된 영역의 번역이었기 때문에 일반인에게 미친 영향은 그리 크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의 아편전쟁과 일본의 명치시대 이후 시작된 서양 문물에 대한 번역 작업은 일반인들의 근본적인 인식틀을 바꾸어 놓았다는 점에서 전혀 새로운 차원이었다고 할 수 있다. 종래에 동아시아에 없었던 물건, 제도, 개념 등이 도입되면서 그에 따른 외국어를 모두 번역할 필요가 생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일본의 경우 서구 열강의 군사력에 가장 민감하게 반응하였기 때문에 근대적인 군사훈련을 위해서 서양에서 군사 고문을 초빙하였다. 그런 점에서 군사 분야의 용어가 가장 먼저 번역되기 시작하였다.⁴⁶⁾ 그 밖에도 선거 제도, 의회제도, 민주주의, 자본주의 등 동아시아 사회에 없었던 정치·경제 제도, 근대적인 군사제도, 방직·방직업을 중심으로 한 근대적인 산업, 서구 건축 관련 용어, 기차와 기선을 중심으로 한 새로운 교통수단, 전화·전보 등의 통신 등과 관련된 한자 용어들이 새롭게 생겨나거나 기존에 있던 용어의 의미를 바꾸어서 쓰게 되었다.

이렇게 생각해보면, 현재는 우리에게 일상적으로 쓰이는 용어들이 근대 초

46)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임성모 역, 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25~26쪽

기에는 모두 번역될 필요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그런데 외래어의 번역에서 신조어를 만든 경우도 있지만 그전부터 있었던 말에 새로운 의미를 부여하여 쓴 경우도 적지 않았다. 幾何學의 경우는 '얼마', '몇' 등의 뜻으로 쓰이는 어휘를 지오메트리(geometry)의 번역어로 쓰게 되었다. 物理學라는 말의 물리도 사물의 이치 등을 뜻하였지만, 피직스(physics)의 번역어로 쓰인다. 福祉라는 말도 신의 가호라는 뜻이었지만 현재는 웰페어(welfare)의 번역어이다. 機關이라는 용어도 과거에는 주로 외부의 자극으로 작동하는 함정이라는 의미였으나, 현재는 엔진(engine), 오거니제이션(organization), 인스티튜션(institution) 등의 의미로 사용된다. 演說이라는 말도 불교용어로 교리를 쉽게 설명한다는 뜻이었지만, 근대에 들어서는 스피치(speech)의 번역어가 되었다. 自由도 마음대로 한다는 부정적인 의미가 강했지만, 프리덤(freedom)의 번역어가 되었다. 이때 자유라는 말 대신 道理라고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한 사람도 있었다.

같은 한자어라도 전통시대와 근대를 사이에 두고 그 내포가 전혀 달라졌기 때문에 어떤 경우에는 양자 사이에 건널 수 없는 심연이 가로놓여 있기도 한다. 가까운 예를 들면 壘라는 말은 堡壘·城壘처럼 흙으로 쌓은 성채, 진지 등의 의미를 가진 말이다. 그런데 이 용어가 野球가 들어오면서 1루·2루·3루와 같이 베이스(base)의 번역어로 사용하게 되었다. 동시에 베이스라는 말은 基礎(신조어), 基地(신조어), 基本, 本部, 本社(신조어), 鹽基(신조어, 화학), 基底(신조어), 基底數(신조어, 수학) 등으로 다양하게 번역되었다. 이는 영어의 베이스가 가지고 있는 의미의 범주를 동아시아인들이 결코 하나의 어휘로 나타낼 수 없었음을 보여준다. 현재의 번역과 똑같은 문제를 당시 사람들도 안고 있었던 것이다. 한편으로 베이스라는 용어가 그 말이 사용되는 각각의 영역에서 거의 독립적으로 번역되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생각된다.

發明이라는 용어도 원래 있었지만 밝혀낸다는 뜻에서 새로운 것을 개발한다는 뜻으로 바뀌었다. 기존의 한자어들 중에는 測量·折衷·橫說豎說·完璧·生産과 같이 의미와 용법이 변화한 것들, 功利·權利와 같이 가치가 뒤바뀐 것들, 자연·본성·사물·도덕·국가·실학·학문과 같이 세계관이 엇갈리는 것들도 나타나게 되었다. 실로 전통과 현대의 단절이라고 할 만한 현상이

한자 용어 속에서 나타났다. 역시 근대에 새롭게 만들어진 哲學(philosophy)이라는 용어를 쓰고 있는 철학 분야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성리학과 같은 전통 철학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⁴⁷⁾ 文明과 같은 용어는 원래 있던 용어였지만, ‘문덕이 빛나는 통치’, ‘세도가 실현된 이상사회’, ‘중화’ 등으로 쓰였다. 그러나 시빌리제이션(civilization)의 번역어가 되면서 가치관의 전도가 일어났다. 먼저 중화문명의 우월성을 주장하던 단계(서양에 대한 夷狄觀)에서 서양문명도 동등한 문명이라고 보는 단계(東道西器)에서, 서양문명만이 문명이 된 단계(西道西器)로 이행하게 된다.⁴⁸⁾

2. 근대 이후의 한자어

서양 문물에 대한 번역 과정은 결코 단선적이지 않았고, 하나의 용어에 대하여 복수의 번역어가 동시에 사용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점차 한 가지로 통일되어 가는 양상을 보인다. 철학이라는 용어가 정착될 때까지, 費祿蘇非亞라는 음역어를 비롯하여 格物窮理之學, 格致學, 性理學, 理學 등도 사용되었다. 이렇게 여러 가지 용어가 경합 혹은 조정되다가 우리나라에서는 1910년대 중반에 이학은 자연과학을 가리키는 용어로 굳어지고 철학이라는 용어가 자리잡게 된다. 경제학도 생계학, 사회학은 大同學, 물리학은 격치학, 윤리학은 修身學 등의 번역어가 있었다.⁴⁹⁾

한편 모던(modern)에 대한 번역어로는 近世·近代·現代가 있고, 소사이어티(society)의 번역어로 社會라는 말이, 인디비듀얼(individual)의 번역어로 個人이 어렵게 탄생되었다.⁵⁰⁾ 權利라는 말도 권력과 이익(재산)이라는 뜻으로 이미 『荀子』에 보이지만, 라이트(right)의 번역어로서 전혀 다른 의미로 쓰이

47) 한형조, 1993, 「동양철학은 왜 이리 어려운가? 어디로 길을 뚫어야 하는가?」, 『정신문화연구』 16-3

48) 이경구 외, 2012, 『개념의 번역과 창조』, 돌베개, 24~26쪽

49) 이경구 외, 2012, 위의 책, 134~142쪽

50) 야나부 아키라 저, 서혜영 역, 2003, 『번역어성립사정』, 일빛, 58~61쪽

고, 義務 역시 그렇다. 비유적으로 말하자면, 현대사회라는 말 자체가 근대 이후의 번역어이며, 이런 번역어가 없었다면 현대사회와 그 속에 사는 개인의 권리와 의무는 존재할 수 없는 셈이다.

분야별로 새로운 용어를 보면, 정치 분야에서는 정부, 관청, 관리, 공무원, 의회, 議員, 議院, 의안, 행정, 시정, 선거, 투표를 들 수 있고, 경제 분야에서는 회사, 기업, 은행, 보험, 신탁, 증권, 부동산, 유가증권, 금융 등을 들 수 있다.

산업 분야에서는 産業⁵¹⁾이라는 표현을 필두로 임업, 광업, 수산업, 전기, 기계,⁵²⁾ 계측, 기획, 입안, 교통과 관련된 철도, 선로, 기차, 열차, 전차, 자동차, 자전거, 비행기, 항공, 우편, 전신, 전보, 전화 등이 있다. 운동과 관련된 것으로도 운동⁵³⁾을 비롯하여 각종 구기와 관련된 용어, 체육, 체조, 육상, 수상, 경기, 경주, 선수, 심판, 구장 등을 들 수 있다.

학문 분야에서는 화학, 생물학, 지질학, 지리학, 海理學, 수산학, 기하, 함수(일본은 關數)와 같이 새로운 학문 분야의 명칭 자체를 비롯해서 그 학문 속에서 통용되는 개념들이 모두 번역어를 필요로 하였다. 지질학의 경우, 지질(geological features)·지층(stratum)·단층(fault)·褶曲(fold)·산맥(range), 화강암(granite)과 같은 각종 암석 이름 등 모든 것이 새롭게 생겨날 수밖에 없었다. 지리학에서도 열대·온대·한대, 동물학의 경우도 분류(categorization)라는 용어가 새로운 쓰임을 얻게 되고, 어류·양서류·조류·파충류·포유류가 모두 신조어로 만들어졌다.

또한 외국과의 통상이 본격화되면서 국제법을 새롭게 이해할 필요가 있었고, 『萬國公法(*Elements of international law*)』이 번역 소개된다. 국제법에 대한 최초의 번역어 중 하나가 만국공법이었던 셈이다.⁵⁴⁾ 아울러 독립(independence), 주권(sovireignty) 등의 용어도 생겨난다. 보다 세부적으로

51) 産業이나 農業은 『史記』 등에서 이미 보이는 표현이지만, 그 의미가 달라졌다.

52) 器械의 경우도 『史記』에 보이는 어휘지만, 주로 武器·道具를 뜻했다.

53) 원래의 의미는 움직인다는 뜻이다. 그러나 근대 이후에는 exercise의 번역어로 쓰이게 된다.

54) 조세현, 2011, 「만국공법에 나타난 해양관련 국제법」, 『역사와 경계』 80

는 출입국 및 관세 징수를 위한 海關(한국과 일본은 稅關)이 설치되었고, 이와 관련한 용어들이 새롭게 등장한다. 현재의 여권과 비자를 합한 개념인 護照를 비롯하여 船鈔(船料), 무게와 관련된 톤(噸, ton) 등이 나타난다.⁵⁵⁾

군사적인 용어로는 군복·군화·군악대·사관·총검, 포병·공병·해병 등 군사 편제, 분대(squad)·소대(platoon)·중대(company)·대대(battalion)⁵⁶⁾·연대(regiment)·여단(brigade)·사단(division)·군단(corps) 등 병력 편성 단위, 소총·대검(bayonet)⁵⁷⁾ 등 근대적인 병기류, 이병·일병·상병·병장 등 군대 계급 등이 나타났다.

중국과 일본에서 만들어낸 많은 번역 한자어들이 조선으로도 유입되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일본의 번역어가 중국으로 유입되기도 하였다. 양계초는 일본어와 중국어가 가깝고 따라서 습득과 번역이 용이하다고 보았다. 張之洞도 일본어 서적을 번역해서 서양사상을 학습하는 것이야말로 ‘노력은 줄이고 효과는 빠른 방법’이라고 하였다. 강유위도 ‘중국의 변법은 일본을 귀감으로 삼으면 모든 것이 족하다.’고 하였다. 이처럼 동아시아와 서양의 만남은 결과적으로 서양의 학문과 동아시아의 학문을 둘러싼 문제로 발전하였고, 중국의 근대와 일본의 근대는 중첩되는 양상을 띠기에 이르렀다.⁵⁸⁾

실제로 일본에서 번역된 용어들이 중국에 채용된 것으로는 패권(supremacy, hegemony), 백금(platinum), 백기(flag of truce), 판화(block print), 반경(radius), 포화(saturation), 보장(guarantee), 배경(background), 比重(specific gravity), 필요(necessity), 변호사(lawyer), 변증법(dialectics), 이론(theory), 이념(idea), 이성(reason), 이지(intellect), 역학(dynamics), 영토(territory), 유체(fluid), 전염병(epidemic), 가정(home)⁵⁹⁾ 등이 있다. 그 밖에

55) 이예지, 2012, 『1880년대 천진해관을 통해 본 조청관계』,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56) 小隊, 中隊, 大隊라는 용어는 『宋史』에 보이지만, 당시는 소대 3인, 중대 9인, 대대 50인 등으로 현재의 편제와 전혀 달랐다.

57) 帶劍은 칼을 찬다는 뜻의 동사+명사의 의미가 강하였다. 소총에 장착하는 칼로서 帶劍이라는 뜻은 근대적이다.

58) 이경구 외, 2012, 앞의 책, 218~225쪽

59) 원래는 집 안의 뜰이라는 의미였다.

도 일상적으로 사용하는 수많은 사례를 찾을 수 있다.⁶⁰⁾

그 밖에도 근대적인 담론의 중심축을 이루는 용어들이 하나씩 모습을 드러낸다. 자연(nature)⁶¹⁾ · 진보(progress) · 진화(evolution)⁶²⁾ · 종교⁶³⁾ · 기독교 · 자본⁶⁴⁾ · 주식(stock) · 민주⁶⁵⁾ · 공산 · 주의 · 관념 등등.

그런데 조선이 일본의 보호국 · 식민지가 되면서 일본의 번역어들이 우리 사회에 전면적으로 유입되었고, 현재까지도 그 영향이 강하게 남아 있다. 특히 행정, 사법, 군사, 기술, 학술용어 등에서 영어로 대체된 부분을 제외하면 거의 그대로 사용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이처럼 한자 용어의 전통적인 의미는 해체되고, 서구의 문물에 기초한 새로운 의미부여 혹은 새로운 번역어 위에 근대의 골격이 형성된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상대적으로 개념어를 쉽게 만들 수 있는 한자야말로 동아시아 사회의 근대로의 전환을 가능케 한 바탕이었던 셈이다.⁶⁶⁾ 또한 한자를 기반으로 만들어진 번역어야말로 현재의 한·중·일의 언어적 공통성을 다시 마련하였다.

60) 高島俊男, 2001, 『漢字と日本人』, 東京: 文藝春秋, 144~168쪽

61) 『老子』 등에 보이는 自然은 스스로 그러한 것, 혹은 저절로라는 의미의 부사로 쓰였다. 정신에 대한 외적 경험 대상의 총체와 같은 뜻은 없었다.

62) 중국에서는 처음 天演이라 하였다.

63) 불교적인 용어로 보이지만, religion이라는 의미는 아니었다. 宗教에 대한 논의는 이경구 외, 2012, 앞의 책, 304~309쪽

64) 밀천이라는 정도의 뜻으로는 사용되었지만, capital의 번역어가 되었다.

65) 원래는 백성의 주인이라는 뜻이었다.

66) 반드시 우리말의 조어능력이 부족해서라기보다는 한자어에 대한 숭배의식이 깔려 있는 점도 간과할 수 없다. 電球를 불알, 아이스크림을 얼음보숭이로 글자의 수까지 맞춰서 번역한 북한의 노력은 그런 점에서 높이 평가할 만하다.

V. 맺음말

이 글은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 한 가지는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내용을 보완하는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고, 다른 한 가지는 한국사 연구에서 보이는 과도한 일국사 관점을 비판하는 것이다.

우선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동아시아문화권의 공통요소로 한자·유교·율령·불교를 들고 있으면서도, 유교·율령·불교만 중단원으로 설정하고 이들 요소를 전달하는 매체이자 동아시아가 공유한 문자라고 할 수 있는 한자를 다루지 않은 것은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다. 무엇보다도 한자에 관한 중단원을 설정하고, 한자가 동아시아의 역사 속에서 차지한 의미를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다.

나아가서 중단원의 내용은 한자의 성립, 한자와 유교·율령·불교의 관계, 한자를 활용해서 각국의 언어를 표현하려는 노력과 그 결과 독자적인 문자가 성립되는 과정, 훈민정음이 『홍무정운』이 정한 한자 음가를 정확히 나타내기 위한 발음기호라는 측면, 현재 각국의 한자 사용 현황 등을 다룰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우리말 어휘의 70%, 일본어와 베트남어의 60%를 한자가 차지하고 있다. 또한 현재 우리가 사용하는 어휘 중에는 근대에 들어서 일본과 중국에서 만들어진 새로운 한자용어가 유입된 것들이 적지 않으며, 그러한 어휘들이 또다시 동아시아문화권의 새로운 공통성으로 기능하고 있다는 점도 설명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세부적인 내용으로 우리나라에 한의 낙랑군이 설치된 이후 한자가 한반도에 전파되는 과정, 삼국에서 한자를 이용하여 고유어를 표현하는 방식, 한 걸음 나아가서 신라어 자체를 한자를 이용하여 표기하려고 한 이두·향찰, 훈민정음의 창제 과정, 근대적인 한자 어휘의 수용, 근대 시기에 일본의 서양문화에 대한 번역의 사용 등을 다룰 필요가 있다.

한국사 속의 과도한 일국사적 관점에 대한 비판으로는 오경박사제가 한무제 때 시작되었지만 삼국시대 이후 폐절되었다가 남조의 양무제 때 부흥된 것

이라는 사실을 간과하고 백제에 오경박사제가 있었고 백제의 오경박사를 왜에 파견한 것으로 논의해온 것 역시 동아시아의 역사 흐름 속에서 오경박사를 이해하지 않고, 백제와 왜의 관계 속에서만 판단함으로써 빚어진 오류임을 지적하였다.

훈민정음의 경우도 명의 등장으로 한자의 음가가 바뀌었고, 명과의 외교를 위해서는 새로운 한자음을 익히고 또 명이 정한 吏文을 구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에 새로운 음가를 나타내기 위한 수단으로 창안된 측면이 있음을 지적하였다. 또한 근대에 들어서는 일본과 중국이 서구의 문물을 수용하는 과정에서 만들어낸 번역어를 거의 그대로 받아들여 사용하였고, 그것이 현재 우리가 쓰는 한자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음을 밝혔다.

이처럼 동아시아사적인 관점은 동아시아 국가 간의 협력이나 동아시아 공동체 같은 거대담론을 떠나서라도, 역사적인 사실을 밝히는 가장 기본적인 방법론이라고 할 만하다. 훈민정음의 경우도 국내적인 요인만으로 해석되는 경향이 지배적이었지만, 동아시아적인 현상의 일부라는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현재 우리가 쓰는 많은 어휘가 근대 이후 서구 문물의 번역어에서 비롯된 것을 생각하면, 한자어는 지금까지도 우리들의 세계에 대한 인식을 규제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한자는 동아시아의 역사를 이해하는 데 가장 기본적인 요소다.

끝으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한자 관련 중단원을 설정하기 위한 구성계획을 제시해두고자 한다. 글이 길어진 것은 교과서에 반영할 내용의 대강을 보여주기 위해 부득이하였음을 밝히고 양해를 구한다.

〈표 3〉 동아시아사 교과서 중단원 구성계획안

세그먼트	소단원명	소주제	주요 학습 요소	자료
	한자의 기원과 전파	한자의 기원과 구성요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갑골문, 금석문 2. 神託과 祭祀를 위한 문자 3. 한자의 구성요소 - 形, 音, 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갑골 및 청동기 등에 보이는 시원전 한자 자료(현재 한자와 형태가 유사한 것을 중심으로) • 갑골문 신탁의 내용을 소개 • 간단한 한자로 구성요소 예시
		한자의 전파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외교, 교역 → 불교, 유교, 율령과 함께 전파 2. 지배를 위한 문자 3. 동아시아의 공통문자-라틴어와 비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한문으로 작성된 외교 문서 제시(百濟 → 宋) • 秦의 한자와 漢의 한자 • 라틴 문자와 한자의 비교
동아시아의 문자	독자적인 문자를 향한 노력	한지를 읽는 방법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구독, 구결, 이두 2. 원문을 그대로 읽는 방법과 토를 붙여서 읽는 방법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불경에 찍힌 구독점
		한자를 이용한 문자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한자의 뜻과 소리를 이용하여 고유언어를 표현 2. 한자를 생략 혹은 조합하여 문자를 만들 - 가나, 쯤놈 	<ul style="list-style-type: none"> • 鄉歌, 萬葉假名 소개 • 가나와 쯤놈 사진 • 거란문자
		훈민정음의 창제 목적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명의 등장과 한자 음가의 변화 2. 한자 음가 통일의 필요성 3. 한자의 발음부호에서 문자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훈민정음해례본 • 홍무정음과 동국정음 • 훈민정음과 언문의 차이
한자와 어제와 오늘	전통시대의 한자 어휘 및 한문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주요 기록은 모두 한자로 기록 2. 필담을 통해서 의사소통 가능 3. 동아시아 전체가 공유하는 어휘가 다수 존재하였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조선왕조실록, 승정원일기 등 제시 	
	번역을 통한 서구문화의 수용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서구문화의 내용을 번역하기 위한 노력 2. 일본의 번역 문화 3. 베트남은 알파벳 사용, 우리나라는 한글 전용, 일본은 한자와 병용 4. 한자의 미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國民, 國語, 哲學, 議會, 政府 등 모두 새로운 번역어 • 각국 거리의 간판 비교 • 간자체, 약자체, 정자체의 비교 	

참고문헌

1. 단행본

『朝鮮王朝實錄』

김민수, 1984, 『신국어학사』, 일조각

이경구 외, 2012, 『개념의 번역과 창조』, 돌베개

한국고대사연구소, 1992, 『譯註韓國古代金石文』 1-3, 가락국사적개발연구원

라이샤워·페이뱅크 저, 전해중·고병익 역, 1964, 『동양문화사』 상, 을유문화사

마루야마 마사오·가토 슈이치, 임성모 역, 2000, 『번역과 일본의 근대』, 이산

야나부 아키라 저, 서혜영 역, 2003, 『번역어성립사정』, 일빛

葛城末治, 1919, 『朝鮮金石總覽』, 京城: 朝鮮總督府

高島俊男, 2001, 『漢字と日本人』, 東京: 文藝春秋

西嶋定生, 1985, 『日本歴史の國際環境』, 東京: 東京大學出版會

沖森卓也, 2009, 『日本古代の文字と表記』, 東京: 吉川弘文館

2. 논문

장길은, 1972, 「훈민정음창제의 당초목적에 대하여」, 『국어국문학』 55-57

김희경, 2008, *A Comparative Study of the Lexicon of Chinese Character in East Asia*, 『이중언어학』 38

노중국, 2010, 「금석문·목간 자료를 활용한 한국고대사 연구 과제와 몇 가지 재해석」, 『한국고대사연구』 57

마속향, 2002, 「중세한국한자음에 반영된 중고한음의 개음」,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윤용구, 2010, 「낙랑·대방지역 신발견 문자자료와 연구동향」, 『한국고대사연구』 57

이근우, 2004, 「왕인의 논어 천자문 일본전수설 재검토」, 『역사비평』 69

이근우, 2010, 「일본서기에 보이는 오경박사와 오음」, 『일본역사연구』 31

이동림, 1990, 「동국정운 초성 자모 23자의 책정과 그 해석」, 『국어학』 23

이승녕, 1958, 「세종의 언어정책에 관한 연구-특히 운서 편찬과 훈민정음 제정과의 관계를 중심으로 하여」, 『아세아연구』 1-2

이예지, 2012, 「1880년대 천진해관을 통해 본 조청관계」, 부경대학교 석사학위논문

- 정다함, 2009, 「여말선초의 동아시아 질서와 조선에서의 漢語, 漢吏文, 訓民正音」,
『한국사학보』 36
- 조세현, 2011, 「만국공법에 나타난 해양관련 국제법」, 『역사와 경계』 80
- 찌우 티 투튀, 2011, 「한국어와 베트남어의 음운론적 대조연구」, 영남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 한형조, 1993, 「동양철학은 왜 이리 어려운가? 어디로 길을 뚫어야 하는가?」, 『정신문
화연구』 16-3
- 찐 각 마인 저, 응웬 티 히엔 번역, 2009, 「베트남 쓰놈과 베트남에서 쓰놈 문헌의 보관
과 연구」, 『규장각』 34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Korean History as East Asian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Chinese Characters

Rhee Kunwoo

Chinese characters, Buddhism, Confucianism, and law codes are always mentioned as the common elements of East Asian culture. But in the East Asian History textbook for high-school students, there is no chapter on Chinese characters despite the fact that Chinese characters deeply influenced the cultures and writing systems in the East Asian countries of Korea, Japan, and Vietnam. Chinese characters spread with Buddhism, Confucianism, and law codes. And they were a vehicle of these cultural elements and the main vehicle for reading and writing in East Asian countries before modern times.

Each of these three countries produced a unique writing system using Chinese characters, such as *idu*(吏讀) in Korea, *kana*(假名) in Japan, and *chunom* in Vietnam. Chinese characters have three aspects, form, sound, and meaning. Japan made simple syllabic scripts using the form. But Vietnam made very difficult characters using the form, the sound, and the meaning of Chinese characters. But these characters were common in using the Chinese characters.

By some measures, *Hunminjeongeum*(訓民正音) was devised as a phonetic alphabet for Chinese characters. It was very difficult for common people to learn *Hunminjeongeum* easily because *Hunminjeongeum* was written in Chinese and was described with phonological theory that

was almost useless for ordinary life and that was above their comprehension. That *Hunminjeongeum* was a subject for state examinations also shows that it was for the educated person. The background for devising *Hunminjeongeum* was the foreign policy and the language policy of Joseon.

Words translated from European languages are still used extensively today, and these words shaped commonalities of culture and language among Asian countries. In particular, words translated in Japan during the Meiji period, such as “philosophy” (哲學), “religion” (宗教), “society” (社會), “individual” (個人), and others, flowed into Korea.

Keywords

Chinese characters, *Hunminjeongeum*, *chunom*, *kana*, China, Korea, Vietnam, Japan

지구사적 관점으로 본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

- 인도양 연구에 대한 비판적 고찰을 토대로 -

박혜정 | 경기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학술연구교수

I. 머리말

지역 평화와 역사 화해에 이바지하겠다는 월대한 목표와 더불어 동아시아사 과목은 2012년도부터 중등교육과정에 신설되었다. 기획 단계부터 실제 교과서 집필에 이르기까지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을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사 과목이 개설되고 난 현재까지도 과목의 차별성과 정당성 자체에 대한 논란은 계속되고 있다. 어처구니 없게도 과목 신설을 주도한 교육계와 동양사학계를 비롯한 학계에 동아시아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에 대한 가장 기본적인 합의조차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사 및 세계사와 연계하여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을 모색한다는 취지하에 개최된 역사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에서도 전체 논의는 동아시아 범주 문제를 좀처럼 벗어나지 못했다.

적어도 현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나타난 동아시아의 범주는 한중일과 베트남을 토대로 하는 니시지마 사다오의 동아시아 세계론의 한자문화권에 직접적

으로 의존하고 있다.¹⁾ 그러나 동아시아 세계론의 동아시아는 한자를 매개로 한 중국문화권에 착목하여 한자, 유교, 불교, 율령 등을 동아시아 고유의 문화적 토대로 삼고 있다. 이는 동아시아 문명이 그 고유한 문화적 기원에서 외부 세계와 구별되는 예외적인 특성을 발전시켰고 동아시아적 가치와 사상의 핵심을 구성하는 본유의 속성을 지속적으로 소유해왔다는 본질주의적 시각을 담고 있다. 문제는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파악하는 기준을 책봉이 아닌 조공관계로만 바꾸어도 당장 나타나듯이 동아시아 세계론이 토대로 삼는 한자문화권이라는 동질적이고 통일적인 경계의 실체가 매우 허약하다는 것이다. 더구나 동아시아 세계론은 그것과 중첩적인 관계에 있는 대동아공영권의 잔재 청산은커녕 이에 대한 논의조차 시작하지 못했다.

동아시아 범주는 선형적인 특정한 문화적 공간으로 상상할 것이 아니라, 실제 역사 공간 속에서 이루어진 경험을 토대로 한 공동체 개념으로 재구성되어야 한다. 한 지역의 역사는 항구적인 지역화(regionalization)의 역사로 존재한다. 동아시아의 경계는 시대에 따라 신축성 있게 이해되어야 하며, 동아시아를 규정하는 특성 역시 본질주의적 이해에 기초하기보다는, 변동적인 국가 간 관계 구조와 더불어 형성, 변화, 발전하는 역동성에 기초하여 새로이 발견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동아시아를 문명적 특성에 따라 작동하는 폐쇄적이고 자율적인 공간이 아니라, 그 주변 지역 혹은 나머지 세계와 접촉, 상호작용, 충돌하는 트랜스문화적 역동성이 문명적 경계를 압도했던 열린 공간으로 이해하려는 시각은 중요하다. 따라서 동아시아사가 민족사 패러다임의 확대판으로서의 지역사가 아니라, 얽힌 역사로서의 공동의 역사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지구사적 시각의 개입은 불가피해 보인다.

물론 지구사라는 서술적 지형도 속에 동아시아사는 현재까지 명확하게 출현하고 있지 않다. 동아시아는 1970년대 이래 동아시아의 경제적 부흥과 맞물

1) 이성시, 2012, 「일본 역사학계의 동아시아세계론에 대한 재검토 - 한국학계와의 대화로부터」,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 - 한국사 및 세계사와 연관하여』, 역사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2012. 10. 6. 26쪽

려서 유럽중심주의 극복을 가장 핵심적인 어젠다로 내세웠던 지구사 논의에서도 중요한 관심 지역으로 부상했다. 동아시아를 관심 지역으로 부상하게 한 주역들로는 무엇보다도 센세이셔널한 반응과 논란을 일으켰던 『리오리엔트』의 프랑크(Andre Gunder Frank)와 『유럽 패권 이전』의 아부루고드(Jannet L. Abu-Lughod)를 꼽을 수 있다. 전자는 중국에, 후자는 인도양에 치중하고 있지만, 이들이 세계사 서술의 중심을 유럽에서 (동)아시아권으로 옮겨 오는 데 선구적 역할을 담당했다고 평가하기에는 손색이 없을 것이다.

그러나 세계사 서술의 지축을 옮겨놓았다고 하는 이들 저작에서도 정작 무게중심은 (동)아시아가 아닌 유럽에 있다. 프랑크는 유럽중심주의를 중국중심주의로 대체하는 과잉 수정의 결과를 낳았고, 아부루고드는 지구사적인 시각에 보다 충실하여 동아시아에 대한 광역적인 접근을 보여주는 했지만 유럽의 근대세계체제를 아시아 지역사에 그대로 도입하려는 무리한 시도를 했다. 프랑크와 아부루고드의 선구작 이후로도 인도양과 중국 및 일본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지역 관련 연구들이 무수히 쏟아져 나오고 있지만, 동아시아는 물론 아시아 지역 전체가 실제로 어떻게 상호작용을 하며 지역화하고 있었는지는 아직도 연구사적으로 충분히 드러나지 않고 있다.

본고는 중국사나 일본사를 지구사적으로 재해석하는 연구자들보다는 최근에 들어와 활발히 진행 중에 있는 인도양 연구에 대한 비판적인 검토를 바탕으로 지구사적 관점에서 동아시아사 서술을 혁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하필 인도양 연구인 이유는 이들 연구가 시도하고 있는 광역적 접근 방식이 본고의 관심인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을 혁신하는 데 기여할 수 있는 바가 크다고 보기 때문이다. 다음 장에서는 우선 지구사의 하위 범주로서 인도양 세계사에서 나타나는 동아시아의 위치와 그 함의를 살펴보면서 인도양 연구에서 나타나는 문제점을 크게 시대적·인식론적 편향성으로 나누어 짚어볼 것이다. 이후의 장들에서는 위에 언급한 두 가지 문제점에서 출발하여 동아시아사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서술 방법론을 단편적으로나마 타진해보고자 한다. 그에 따라 나머지 두 장은 각각 19세기 이후의 동아시아 근대사를 기존의 유럽 제국주의사의 각주 차원에서 독립시켜 서술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하는

문제와 인도양 전체에서와 마찬가지로 동아시아 지역관계에서 상호유리적으로 파악되어 온 교류사와 지역정치사를 보다 긴밀하게 엮어 씌으로써 그간 교류사적 관점에서 간과되어 온 갈등이나 지배 메커니즘의 위치값을 제대로 산정하는 문제를 논하는 데 할애될 것이다.

II. 지구사 패러다임 속의 동아시아사의 위치

맥닐과 더불어 세계사·지구사 패러다임의 기틀을 마련한 아버지로 꼽히는 호지슨(Marshall Hodgson)은 “지역이란 역사적 고려에 따라 그 경계가 정해지는 지리적 영역이고 상당히 대조되는 문화들이 병존할 수 있지만, 상대적으로 소통과 상호교류에 주요한 물리적 장벽이 없는 영역”으로 정의했다. 그의 유동적인 지역 개념은 당시 지배적인 위치에 있었던 지역학(area studies)의 지역 개념을 대적한 것이었다. 호지슨에 따르면 후자는 현재 지향적이고 주로 문화적 유사성과 지리적 분포에 기초하여 분류되기 때문에, 시간적 경계에 대한 고려는 충분하지 않은 것이었다.²⁾ 동아시아사 같은 지역사보다는 트랜스대서양사(transatlantic history)나 인도양 세계사와 같은 트랜스지역사가 지구사의 하위범주로 더 활발히 연구되고 있는 현 추세는 바로 이러한 호지슨의 지역 개념이 이후 지구사 논의 내에서 지속적으로 확대, 계승된 연장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 호지슨의 지역 개념은 특히 동아시아의 경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중원이라는 문화적 공간 자체가 내륙의 북방민족들과의 끊임없는 접촉과 충돌 속에서 형성된 사실이나 동남아시아 곳곳으로 흩어진 중국인들의 오랜 디아스포라 역사만 보더라도 동아시아 역사는 아시아 내의 다양한 지역들과의 오랜

2) 마셜 호지슨, 에드먼드 버크 3세 엮음, 이은정 역, 2006, 『마셜 호지슨의 세계사론. 유럽, 이슬람, 세계사 다시 보기』, 사계절, 425·432쪽

융합과 혼종의 역사였다. 따라서 니시지마 사다오처럼 한자문화권이라는 문명적 핵을 토대로 동아시아 지역의 경계를 정하고 지역의 변동사에 접근하는 것은 중국중심주의를 선형적으로 전제하겠다는 이야기나 다를 바 없다.

인도양을 중심으로 한 물적·인적·문화적 교류망 속에 각 지역의 역사를 엮어 쓰는 인도양 연구는 한자문화권과 같은 중국중심주의적이고도 본질주의적 이해를 벗어나서, 동아시아사를 좀 더 경험적인 토대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조망권을 제공한다. 아부루고드의 『유럽 패권 이전』은 중국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벗어나 동아시아를 서술한 가장 체계적인 시도다. 그녀는 동아시아를 13세기 세계체제의 최동단 하위체제로 위치시킴으로써, 조공무역을 통한 동아시아의 무역 네트워크를 가깝게는 동남아시아, 멀리는 서아프리카까지 연결시켰다. 특히 그녀는 이러한 광역적 연계성에 바탕하여, 오랫동안 중국 근대화의 불발을 설명하는 신드롬처럼 회자되어 왔던 15세기 중반 정화 제독의 해양 원정의 갑작스런 중단에 대해 새로운 설명 모델을 제공해주었다. 즉 원정 중단을 중국 내부의 정치적 변화의 결과로만 보지 않고, 14세기 후반 흑사병 발발, 인도 아대륙에서의 내륙 지향적인 비자야나가르 왕국의 부상, 몽골제국의 약화와 더불어 시작된 ‘13세기 체제’ 자체의 쇠락 차원에서 설명했던 것이다. 이는 한 국가 내에서 발생한 변화라 할지라도 그것의 동인과 영향을 지역사적 내지 세계사적 맥락과 연계시켰다는 점에서 가히 혁신적인 가설이라고 할 수 있다.

브로델의 시공간 이론을 확대, 적용한 차우두리(Kirti N. Chaudhuri)의 저작 『Asia Before Europe』은 더 나아가서 아부루고드의 인도양보다 ‘더 큰 인도양(Greater Indian Ocean)’의 맥락 속에서 동아시아를 다루었다.³⁾ 그의 정교한 비교사는 힌두, 이슬람, 중국 문명 간의 형식적인 차이에도 불구하고 물질적인 삶, 교역, 생산이 떠받치는 더 깊은 통일성의 구조가 존재했고 그런 의

3) Kirti N. Chaudhuri, 1990, *Asia Before Europe. Economy and Civilization of the Indian Ocean from the Rise of Islam to 17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미에서 인도양이란 명칭마저도 매우 임의적이라는 흥미로운 결론을 도출했다. 진짜 존재했던 인도양이란 홍해로부터 남중국해에 이르는 인도양 연안지역뿐만 아니라 중앙아시아의 사막지대까지 포괄하는 훨씬 더 큰 인도양이었다는 것이다. 결국 차우두리는 생산, 교역, 문명의 하위체제들이 서로 묶여 있는 ‘더 큰 인도양’을 통해서 인간이 상호작용하는 간지역적 무대의 공간적 경계를 나누는 문제의 어려움을 다시 한 번 확인시켜 주었다.

동아시아사 과목이 탄생하는 데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국내의 동아시아 담론은 크게 두 가지의 막다른 골목에 직면해 있다. 동아시아는 민족사 패러다임의 지역사적인 확대판이라는 비판과 역사적인 공유의 맥락이 전혀 개재되어 있지 않다는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최근에는 동아시아 담론 내부에서도 동북아 중심주의 내지 한반도 민족주의의 확대판이란 비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동남아시아로까지 담론적 경계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⁴⁾ 그러나 동아시아사가 동남아시아까지 포괄하는 지역사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은 원론적인 합의 수준에 머물러 있을 뿐, 담론의 수위는 동아시아 세계론에서 말하는 한자문화권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모순된 양상을 연출하고 있다. 동남아시아사에 대한 국내의 연구사적 공백이 일차적인 걸림돌이고, 양 지역 간의 연계성을 어떤 방식과 개념 기준을 통하여 다루어야 할지에 관한 구체적인 논의가 부재한 것도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⁵⁾

동아시아 담론이 막다른 골목을 벗어날 수 있는 활로를 모색하기 위해서는 인도양적 시각이 필요하다. 동아시아라는 지역을 인도양 세계 속에서 공중해체시켜야 한다는 극단론을 말하고자 함이 아니다. 혹은 동아시아에서 한자문화라는 문명적 핵심을 상정할 수 없다는 이야기도 아니다. 상호작용적인 지역 개념을 이야기했던 호지슨조차도 서구에 의한 대변동이 균형을 깨기까지 어느

4) 백영서, 2004, 「프롤로그: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 정문길 외 3인 엮음,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16~17쪽

5) 동아시아 담론의 이러한 최근의 방향 전환에 대해서는 신주백, 2011, 「한국의 동아시아사 인식」, 제4회 역사NGO세계대회 내 국제 역사교육 전문가 심포지엄 발표문, 2011. 8. 21~22, 2쪽

정도 문화적 통합을 이루었던 상당히 항구적인 지역들을 추상적으로 상정할 수 있다고 보았고 특히 유교적인 극동을 그의 특별히 적합한 사례로 보았다.⁶⁾ 문제는 한자문화가 곧바로 경계의 기준 역할을 떠맡는 것이다. 왜 우리는 한중일 그리고 베트남만을 대상으로 동아시아사를 논해야 하는가? 그에 대한 정당성은 역사적으로도 현실적으로도 도출되기 어렵다. 인도양적 시각에서 보자면, 동아시아의 범주는 최소한 중앙아시아와 동남아시아까지 확대되어야 하며, 그 밖의 지역과의 긴밀한 관계 속에 재맥락화되어야 한다. 인도양 연구 붐은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 전제로부터 방법과 서술에 이르기까지 새로운 각도에서 이 지역의 역사적 유동성, 역동성, 연계성(connectedness)을 재발견할 수 있는 충분한 자극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화교의 디아스포라 역사를 하나의 씨실로 삼아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엮어 쓴 리드(Anthony Reid)의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는 동아시아의 역사적 맥락을 보다 혼종적이고 풍성하게 해 준 좋은 사례다.⁷⁾

그러나 인도양 연구 역시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안고 있다. 하나는 시대적으로 인도양 연구에서 유럽 패권 이전 혹은 식민화 이전 시대로의 쓸림 현상이 강하다는 것이다. 이는 유럽 제국주의에 의한 이 지역에서의 세계모니를 기정사실화하고 식민지 시대 이후에 대해서는 새로운 연구 가능성을 발견하기 힘들다는 전형적인 유럽중심주의적인 인식 전제의 결과이기도 하다. 아부루고드, 차우두리, 리드의 저작들이 포진해 있는 식민화 이전의 인도양 세계에 대한 연구에 비하면, 19세기 식민지 시대의 인도양 연구는 질적·양적으로 크게 뒤떨어진다. 유럽중심주의의 극복에 대한 지구사적 관심은 유럽 제국주의 국가들의 식민지로 전략하기 이전에 비유럽세계에 존재했던 선진성과 과거의 잃어버린 가능성을 재조명하려는 시도들을 낳았고, 이는 인도양 세계의 이야기를 견인하는 주요 동력이 되었다. 반면에 식민화 이후의 인도양 세계에 대해서

6) 마셜 호지슨, 2006, 앞의 책, 430쪽

7) 두 권으로 구성되어있는 Anthony Reid, 1993,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는 한국어로 번역 중이다.

는 식민제국의 금융, 기술, 정치, 군사적 우월성이 이 지역을 완전히 압도했다는 인식 전제가 오랫동안 지배적이었다. 식민경제에서 근대적 경제부문과 전통적 경제부문이 상호고립적으로 공존한다는 뵈케(Julius H. Boeke)의 '이중 경제 모델'은 고전적인 가정으로 굳어졌다.⁸⁾

식민화가 본격적으로 진행된 19세기 이후에 대한 역사서술은 여전히 서구 제국주의 세력의 지배와 식민지 국가들의 저항이라는 뵈케식의 양분구도 속에 갇혀 있다. 지구사 연구의 가장 평균적인 수준을 보여주는 미국의 대학용 지구사 교과서들 역시 서구 제국주의의 침탈과 비유럽 식민지 세계의 그에 대한 대응과 저항 사례들을 통하여 19·20세기 제국주의를 서술하는 기본 모델에 충실하다.⁹⁾ 중국과 유럽에 대한 호혜적인 비교를 통해서 동아시아사에 관한 새로운 조망권을 확보했다고 평가되는 포메란츠와 왕의 연구도 분기(divergence) 이후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다. 그러나 유럽중심주의의 극복을 위해서 유럽 패권 이전에 아시아가 누렸던 과거의 영광을 복구하는 데만 집중하는 것은 반쪽짜리 극복에 불과할 것이다.

동아시아를 포함한 인도양 연구의 또 다른 문제는 인식적 편향성이다. 국내의 동아시아 담론이 유럽연합에 준하는 내지 이를 뛰어넘는 동아시아 평화 공동체의 건설이라는 노골적인 정치적 목표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동아시아의 개념을 동남아시아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최근에 들어서 제기되고 있지만, 이 역시 동아시아 통합기구의 출범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주축이 된 ASEAN+3를 통해 실현될 가능성이 가장 높다는 현실 정치

8) Julius Herman Boeke, 1953, *Economics and Economic Policy of Dual Societies*,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9) 가장 대표적인 사례로는 Richard Bulliet, et al., 2003, *The Earth and its Peoples, A Global History*, Boston: Houghton Mifflin Company; Jerry Bentley and Herbert Ziegler, 2008, *Traditions & Encounters, A Global Perspective on the Past*, New York: McGraw-Hill; Richard L. Greaves, et al., 1993, *Civilizations of the World, The Human Adventure*, New York: Harper Collins College Publishers를 꼽을 수 있다.

적 이유에 기인하는 바가 크다.¹⁰⁾ 따라서 평화적 공존을 위한 동아시아 공동체를 염두에 둔 동아시아 담론은 그 토대와 당위성을 동아시아 상호관계의 다중심성과 비위계적 구조에서 구하고 이를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데 큰 관심을 가져왔다. 정치학적 관점에서 동아시아사를 분석한 연구서에서는 이러한 관심이 더 노골적으로 드러난다.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관계의 전형은 …… 공식적 위계를 전제하지 약소사회의 내적 자율성을 전제한 제3의 질서”였다고 정의하고 들어가는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가 대표적이다.¹¹⁾

그에 비해 인도양 연구는 직접적인 정치적 목표까지 상정하고 있지는 않더라도, 이 지역의 상호관계를 지나치게 평화롭고 조화로운 체제로 미화시켜 보려는 시각을 종종 드러낸다. 아부루고드는 13세기 세계체제를 기술하는 과정에서 실증적인 자료에 의거해서 체제의 구조적 성격을 규명해내기보다는 그 체제가 다중심적이고 유럽 제국주의와 같은 수준의 폭력과 수탈이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이를 평화롭고 상호존중적인 이상적인 국제질서로 단정 짓는다.¹²⁾ 이러한 아부루고드의 시각은 인도양을 서술하는 하나의 일반적 관점으로 계승되었는데, 무력대립 없이 조화롭고 자율적인 질서에 따라 작동했던 인도양 무역체제에 대한 묘사는 미국 지구사 교과서에서 빠질 수 없는 주요 내용이 되었다. 서발턴 연구자 프라카쉬(Gyan Prakash)가 참여하고 포메란츠가 자료집을 쓴 것으로 유명한 한 대학용 지구사 교과서에 따르면, 근대 초 인도양 무역에서는 서로 다른 인종들이 국가적·제도적 개입과 규제 없이 서로 다른 언어와 통화를 통해 거래했음에도, “상인들과 고객들의 파트너십 구축, 신용서한의 이용, 현지 교역관습에 관한 지식과 현지 화폐를 통해서 인도에서 이루어진 협정이 동남아시아, 이집트, 북아프리카에서도 똑같이 존중될 것으로 확신했다.”¹³⁾ 이러한 시각은 미래지향적인 트랜스내셔널 공간으로 아시아를 재구성하려는

10) 신주백, 2011, 앞의 글, 6쪽 이하

11) 이삼성, 2009,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한길사, 12쪽

12) 자넷 아부루고드, 박홍식·이은정 역, 2009, 『유럽 패권 이전』 11장, 까치

13) Robert Tignor et al., 2008, *Worlds Together Worlds Apart*,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p. 430

두아라(Presenjit Duara)에서 정점을 이룬다. 두아라의 「아시아의 귀환(Asia Redux)」 테제는 아시아에서 일어난 “정체성에 대한 국가적 지배가 부재한 문화유통”에서 그러한 비전의 근거를 찾는다.¹⁴⁾

이하에서는 동아시아사를 보다 광역적이고 비본질주의적인 차원에서 재맥락화할 수 있게 해 줄 인도양 연구의 자극을 추수하면서도, 상술한 두 가지 문제점을 토대로 동아시아사의 새로운 방법과 서술을 모색하고자 한다. 일반론 수준의 논의에 머물지 않기 위해서 각각의 모색은 구체적인 주제 발굴에 초점을 맞추고 그를 위한 논의까지 포괄하였다.

Ⅲ. 대안적 근대성으로 동아시아 근대사 들여다보기

근대 이전에 주로 집중되어 온 인도양 연구에 대한 문제 제기는 단순히 인도양 세계사와 더불어 동아시아사의 시간축을 근대 이후로까지 양적으로 확대하는 차원에 있지 않다. 인도양 연구에 대한 문제제기는 오히려 이 지역의 근대사 서술에서 오래도록 미결상태였던 문제, 즉 유럽 제국주의 역사를 중심축으로 한 양분구도에서 해방되는 방법에 관한 문제다. 즉 동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의 근대사와 근대성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필요로 하는 문제인 것이다. 청화대학의 왕휘(Wang Hui)는 적어도 19세기와 20세기의 아시아란 제국적 지역주의와 반제국주의적 지역화의 산물인 만큼 아시아라는 개념은 항상 유럽, ‘근대성’, 자본주의와의 관계성 속에서 이해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한다.¹⁵⁾ 바로 이것이 13세기의 아시아 개념과 19·20세기의 아시아 개념의 차이이다.

14) Presenjit Duara, 2010a, “Asia Redux: Conceptualizing a Region for Our Tim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9, 4, p. 983

15) Wang Hui, 2010, “The Idea of Asia and Its Ambiguitie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9, 4, p. 985

아시아의 근대사는 19·20세기의 유럽적·식민주의적 근대와의 강제적 조우로 시작된 불명예스럽고 불평등한 역사였다. 따라서 아시아의 근대사는 제국주의 강국들의 식민지 지배가 가져온 파괴의 역사와 그에 대한 저항의 역사를 기록하는 데 치중해왔다. 반제국주의적 역사서술은 제국주의의 헤게모니와 폭력성을 드러내려는 의도를 갖고 있지만, 결과적으로 서구 제국주의를 식민지 역사서술의 주어로 만들어놓고 말았다. 근래에는 동아시아를 중심으로 한 경제적 성공과 탈유럽중심주의 바람을 등에 업고 드디어 반제국주의적 역사서술 구도에서 탈피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근대성의 서사 아래서 억압되고 주변화되어 온 역사적 유산들을 복구하는 차원에서 특히 중국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진행 중에 있는 ‘대안적 근대성(alternative modernity)’에 관한 논의가 그것이다.¹⁶⁾ 그러나 본고는 동일한 이름 혹은 맥락하에서 논의되고 있지만 차별적 인식전제로부터 출발하는 포스트식민주의의 대안적 근대성을 지렛대로 삼아 새로운 동아시아 근대사 서술 가능성을 모색해보고자 한다.

국가의 통제나 제도적 규제 없이 이슬람 판사(qadis)와 같은 상인공동체의 자율적인 감독체계 속에 작동했던 인도양 교역체계가 19세기에 들어와서 식민주의적 교역과 규율체계하에 급속히 편입, 종속된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기존의 역사서술에서 일반적으로 인도양 무역체제는 근대 제국주의의 침탈하에 파괴 내지 미미한 수준으로 축소된 것으로 묘사되어 왔다. 이러한 서술방식에 대한 첫 도전장은 『유럽 패권 이전』에서 나왔다. 아부루고드는 이 지역이 아예 제국주의 세력이 침투해오기 이전인 14세기 후반부터 이미 지역 내부의 자율적인 변동성으로 인하여 쇠퇴하고 있었다고 묘사했던 것이다. 그러나 이후의 새로운 연구들은 오히려 중국, 인도, 유대인 공동체들의 오랜 네트워크가 궁극적으로 제국주의라는 새로운 환경하에서도 살아남았고 그들의 작동체계를 확대시키는 데 성공했음을 보여주었다.

16) 이에 대해서는 Dominic Sachsenmaier, 2011, “Global Perspectives on Global History,” *Theories and Approaches in a Connected Wor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pp. 204~231을 볼 것.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인도양 세계와 동아시아의 식민지나 종속국가들은 결코 제국의 자본주의적 중심지와 완전히 통합되지 않았다. 도량형의 표준화, 화폐 통일, 물리적·교육적 기간시설 등을 포함한 자본주의 시장관계의 통합적 하부구조는 분명히 제국주의적 지역화 흐름에 힘입어 지역 전체에 걸쳐서 확립되었다. 그러나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일어난 이러한 통합은 다분히 이중적인 것이었고, 식민국가, 중심지 자본가, 아시아 역내 금융시장을 지배해온 아시아 상인들 간의 상호작용적 차원에서 발생했다.¹⁷⁾ 아시아 상인들은 주로 유럽의 은행 및 기업계와 아시아의 소규모 행상인 및 소매시장 사이의 간극을 성공적으로 메꾸는 사업양식을 발전시켰다. 이같이 유동적인 아시아 상인공동체가 제공한 금융 및 마케팅 서비스가 없었다면, 유럽의 자본이 이 지역의 내륙지방까지 침투하기 어려웠을 것이다. 20세기에 들어서서 이들은 아프리카 남부와 동남아시아로까지 네트워크를 확대시켰을 뿐만 아니라, 그들 스스로도 근대적 사업가 내지 산업자본가층으로 성장하여 식민지 경제를 독립 이후의 국민경제와 오늘날의 포스트국민경제로 통합해내는 데 일익을 담당했다.¹⁸⁾ 홍콩과 싱가포르는 이러한 지속적인 네트워크의 대표적인 결절점(nodes)들이다.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반)식민지 사회의 이중적 통합은 비단 경제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사회문화적 영역 전반에 적용되는 핵심적인 공통 맥락이었다. 포스트식민주의의 대안적 근대성은 바로 이러한 이중성을 혼종성(hybridity) 내지 이중적 각인(double inscription)의 차원에서 문제화하고 근대성의 본질적 속성으로 주목한 개념이다. 아시아의 자본주의 맹아론이나 내재적 발전론이 여전히 이항대립적 전제를 기초로 하고 있다면, 포스트식민주의의 대안적 근대성은 관계성과 상호작용의 관점에서 근대사를 바라보고자 한다. 포스트식민주의자 발로우(Tanie Barlow)는 이러한 대안적 근대성의 논지를 명쾌하게 제시해주는데, 근대성을 어떤 사물이 아니라 하나의 관계로 보아야 한다는

17) Presenjit Duara, 2010a, 앞의 글, p. 968

18) 이에 대해서는 Rajat K. Ray, 1995, "Asian Capital in the Age of European Expansion: The Rise of the Bazaar, 1800~1914," *Modern Asian Studies*, 29, 3, p. 553

것이다. 이러한 근대성의 재정의가 의도하는 바는 근대화 이론에서 선명하게 분리되어 있었던 근대성과 전통, 진보와 후진성, 발전과 저발전을 근대성이라는 하나의 얼굴로 묶어내는 것이다. 발로우의 대안적 근대성은 더 이상 근대와 전통이라는 이항대립이 아니라 양자의 혼종성으로 관심의 초점을 옮겨놓았다.¹⁹⁾

그러나 이러한 포스트식민주의의 대안적 근대성은 앞서 언급한, 현재 널리 회자되고 있는 대안적 근대성과 구분될 필요가 있는데, 양자는 동일 명칭을 사용하면서도 서로 다른 방향을 바라보기 때문이다. 후자인 대안적 근대성은 1960년대에 아이젠슈타트(Shmuel N. Eisenstadt)가 처음으로 제기한 후에 최근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근대화 추세와 맞물려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다원적 근대성(multiple modernities) 개념을 그 근간으로 삼고 있다.²⁰⁾ 주지하다시피, 다원적 근대성은 차이와 다원성을 내세워서 서구의 단순적 근대성을 비판하지만, 그것은 경로의 다원화를 설정할 뿐 서구적 근대성의 보편성을 여전히 암묵적으로 전제하고 있다. 서구적 근대성의 가치와 실행이 지향하는 궁극적인 목적지와 질적으로 다른 종착역을 제시하거나 그 가능성을 상정하지 않기 때문이다. 포스트식민주의의 대안적 근대성 역시 서구 근대성을 준거점으로 대안적 내지 식민지 근대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그들이 극복하고자 하는 유럽중심주의를 사실상 뒷문으로 재입장시키고 있다는 딜릭(Arif Dirlik)의 날카로운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따라서 딜릭은 다원적 근대성이든 대안적 근대성이든 이들이 기본적으로 자본주의와 유럽근대성에 기초한 전 지구적 근대성의 변종들에 불과하다고 비판한다.²¹⁾

19) Tanie Barlow, 1997, "Introduction," idem, ed., *Formations of Colonial Modernity in East Asia*,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pp. 1~20

20) 양 개념의 동의어적인 사용은 Sachsenmaier(2011)의 중국에서의 대안적 근대성 논의에서도 명확하다. 또한 2012년 4월 27~29일에 개최된 제2회 아시아세계사학회 학술대회가 내건 주제 "Global Exchange Networks of Asia" and "Alternative Modernities in Asia" 역시 관련 발표내용들을 토대로 볼 때 대안적 근대성을 다원적 근대성과 같은 의미에서 이해하고 있다.

21) Arif Dirlik, 2008,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Modernity: A Critical Discussion,"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8, 1, p. 92, 96

그럼에도 포스트식민주의의 대안적 근대성은 딜릭의 낱선 비판에서 구출될 만한 가치가 있는 요소들을 포함하고 있다. 관계성과 혼종성에서 출발하는 대안적 근대성은 제국주의 지배하에서 일어난 식민지 사회 내의 격변을 근대화의 왜곡, 변형, 탈루로서 보지 않고 그 자체를 바로 폭력성과 식민주의를 근간으로 하는 근대성의 완전한 실현으로 바라본다. 대안적 근대성에 대한 이해는 억압적이고 폭력적인 근대성의 관철 속에서 말소되었던 종속적인(반)식민지인들의 역사와 위치를 복구할 것을 촉구한다. 즉, 지배적인 서구의 근대적 주체화에 종속, 은폐되어 있는 하위주체성(subalternity)을 드러낼 것을 촉구하는 것이다. 지배적인 주체와 종속적인 하위주체성은 상호의존적이며 서로의 본질을 구성하는 혼종적 관계에 있다는 것이 포스트식민주의의 대안적 근대성 개념의 핵심이다.

딜릭이 충분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는 대안적 근대성의 또 다른 요소는 근대 비판적인 시각이다. 포스트식민주의의 대안적 근대성은 이항대립적인 전제로부터 출발하는 모든 유의 역전(reverse)을 거부하기 때문에 딜릭이 진정한 대안으로 간주하는 반자본주의적 대안을 명시적으로 제시하지는 않는다. 그것이 목표로 하는 것은 근대와 결합해 있는 근대화론적 함의를 제거하는 것과 근대성에 대한 대안적 이해다. 대안적 근대성의 초점은 오히려 차크라바티(Dipesh Chakrabarty)가 병갈적 근대성을 통해 보여주었듯이 근대성의 역사에 양가성, 모순, 폭력, 아이러니, 비극을 써넣는 데 있다. 따라서 그는 유럽을 지방화하는 것과 동시에 인도 국민국가와 그것의 폭력성과 폭압성을 똑같이 문제 삼았다.²²⁾ 동아시아의 탈중심적인 근대사를 다시 쓰는 데 중요한 것은 딜릭이 제안하는 것처럼 유럽 근대성이 전 지구적 패권을 장악하기 이전인 초기 근대(early modern)로 도주해서 과거의 잃어버린 반자본주의적 '차이'를 복구하는 것이 아니라,²³⁾ 바로 현재와 직접 맞닿아 있는 근대의 시공간에서 관계성

22) Dipesh Chakrabarty, 1992, "Postcoloniality and the Artifact of History: Who speaks for 'Indian' Past?," *Representations*, 37, p. 21

23) Arif Dirlik, 2008, 앞의 글, p. 97. 초기 근대 개념은 전근대(pre-modern)와 달리 유럽적 근대성이 아직 전 지구적으로 관철되지 않았던 단계에서 존재했던 다양한

으로서의 '차이'의 역사로 동아시아 근대사를 다시 쓰는 일이다. 이러한 동아시아 근대사는 무엇보다도 전 지구화된 유럽적 근대성이라는 지배문화에 대한 대안적 차원에서 지배문화와의 상호작용과 체계모니 모두를 보여주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그것은 (반)식민지인들의 하위주체성을 근대화라는 전 지구적 변혁과정에 함께 참여한 주체로 재발견하는 데 그치지 않고, 오늘날의 지구화된 근대성과 그 미래에 대해 공동의 책임을 지는 주체로 확대 이해할 수 있게 해 준다.

포스트식민주의의 대안적 근대성의 관점에서 볼 때, 매판자본(comprador capital)은 제국주의와 식민지, 더 나아가서 근대와 전근대라는 이항대립적 구도에서 벗어난, 보다 혼종적인 동아시아 근대사 쓰기를 시험해 볼 만한 주제이다. 본래 '매판'은 청대에 서양 상인에게 고용되었던 하인직에 대한 총칭으로서, 처음에는 집안 하인이나 배의 선구상(船具商)을 가리켰다. 그러나 나중에는 마카오나 광둥 같은 서양의 특혜적 거류지(concessions) 내에서 당국의 허가를 받고 서양의 독점회사들과 거래하는 중국인 공행(公行)을 가리키는 용어로 확대되었다.²⁴⁾ 이처럼 본래 기술적인 개념이었던 것이 제국주의 세력에 편승하여 민족경제의 근간을 외국자본에 종속시키고 국내의 반봉건적 생산관계를 내버려 두는 외국자본에 의존적인 모든 사회자본을 뜻하는 이데올로기적 일반어로 탈바꿈하게 되었다. 이 과정에는 국공합작 실패에 대한 마오의 사회계급적 분석이 깊숙이 개입해 있다.²⁵⁾

마오의 재해석 이후로 제국주의하에서 살아남은 아시아 역내 상업자본은 대체로 매판자본으로 분류되면서 자생적이고 근대적인 민족자본과 구분되어 왔지만, 그 질적인 경계는 결코 분명하지 않다. 중국의 매판세력은 이미 1880년

방향의 근대성들과 그 단초들을 상정할 수 있는 개념적 공간으로서 유럽사에도 적용될 수 있는 개념이다.

24) Chan Wai Kwan, 1991, *The Making of Hong Kong Society*, Oxford: Clarendon, p. 55

25) 이에 대한 상세한 설명은 여기서의 주된 논지와 무관하므로 생략한다. 이에 대해서는 Shu-Tse P'eng, 1980,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Power*, New York: Monad Press, pp. 63~64를 참고할 것.

대에 이르면 홍콩에서 최고 납세자 비중에서 유럽인들을 앞지르고 1900년대에 오면 자신들만의 상업회의소(Chamber of Commerce)뿐만 아니라 자신들을 위한 수많은 민간기관들을 설립할 정도로 크게 성장했다. 중국의 매판자본가들은 조선이 일본의 식민지로 전락하기 전까지 대조선 무역에서도 일본 상인들을 압도할 정도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했다. 이처럼 막대한 규모와 세력으로 성장한 중국 매판자본은 제1차세계대전으로 유럽 제국주의가 일시적으로 철수하자 상업자본에서 산업자본으로 대거 전환하면서 자본 축적 기반의 확대에 성공했다.²⁶⁾ 국내에서도 식민지 경제의 성격에 대한 유사한 논의가 이미 ‘식민지 근대성’이란 주제하에 활발히 진행 중에 있다. 즉 식민지 경제가 제국주의 본국과 분리된 독자적인 국민경제로 보기 힘들 정도로 민족적·계급적으로 혼성화된 특성을 갖고 있었다는 전제하에서 식민지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을 통해 대립적으로만 인식되어 왔던 수탈과 개발 간의 경계와 관계를 재고하려는 움직임이 그것이다.²⁷⁾

식민지의 자본주의적 이행과 근대화에 걸림돌이라는 낙인을 받아왔던 매판자본은 민족주의적 역사서술 속에서 추방되거나 비하되어 왔다. 그러나 포스트식민주의의 대안적 근대성의 관점에서 보자면, 매판자본이 동아시아 근대사가 통과한 근대화라는 긴 여정에서 담당했던 본질적인 역할을 부인하기 어렵다. 물론 중국의 근대화는 공산혁명을 통한 사회주의적 경로를 통해서 본격화되었지만, 아시아 대부분의 지역에서와 마찬가지로 근대화의 역사는 그보다 훨씬 일찍, 즉 (반)식민지적 조건 하에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매판자본은 근대와 전근대, 즉 제국과 식민지를 잇는 교량의 한가운데 위치해 있었다. 무엇보다

26) Takeshi Hamashita, 2008, "Overseas Chinese financial networks.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Linda Grove and Mark Selden, eds., *China, East Asia and the Global Economy. Region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N.Y.: Routledge, p. 178; James Heartfield, 2005, "China's Comprador Capitalism Is Coming Hom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37, 2, pp. 200~201

27) 윤해동, 2008,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Transnational History)의 가능성-한국사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00, 42~43쪽

다도 매판자본은 동아시아에서 근대가 결코 서구적 근대와 질적으로 역사적으로 차별적이거나 대안적이라 할 만한 방식으로 서구의 근대성을 전유, 번안하지 않았고, 서구적 근대성과의 긴밀한 혼종적 관계 속에서 태동했음을 보여준다는 의미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동아시아 범주와 관련해서도 매판자본이란 주제는 동아시아 근대사에서 의미가 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전근대의 아시아 역내 상인층은 중국에서뿐만 아니라 아시아 각지에서 식민지 시대를 살아남았다. 여기에는 제국주의 시대의 중국계 매판 자본가들의 역할도 컸지만, 말레이시아의 경우 영국의 적극적인 이주정책으로 대거 유입된 인도계의 매판 자본가의 역할도 무시할 수 없다.²⁸⁾ 특히 중국 매판 세력의 경우는, 리드의 연구가 보여주듯이, 1949년 공산혁명 이후 중국을 대거 이탈하기 훨씬 이전부터, 즉 15세기 이래의 오랜 전통의 교역네트워크를 매개로 대규모로 동남아시아로 이주하여 정착해온 사람들이다.²⁹⁾ 이렇게 본다면 중국계 매판 자본가들의 정체성은 리드의 표현대로 체류자(sojourner)이기도 하고 정착민(settler)이기도 했다. 이들은 인도네시아, 필리핀, 타이,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즉 동남아시아의 거의 전역에 걸쳐서 중요한 자본 세력으로 등장하여 서구 제국주의의 대규모 대항 기관과 현지 노동자·농민 대중 사이의 중개인 역할을 수행했다. 중국 매판자본을 통한 현지 시장자본의 통제율은 현재까지도 상당히 높는데, 공산권인 베트남을 제외하면 모두 60% 이상이다. 이들 국가에서의 민족운동의 확산과 더불어 현지의 민족주의 정권과 중국계 상인층 간의 갈등과 후자의 희생은 이 지역의 포스트식민사에서 중요한 주제를 가운데 하나를 차지한다.³⁰⁾ 매판자본을 통해 본

28) Martin Brennan, 1982, "Class, politics and race in modern Malaysi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12, 2, p. 197 이하

29) Anthony Reid, 2001, "Flows and Seepages in the Long-term Chinese Interaction with Southeast Asia," idem, ed., *Sojourners and Settlers. Histories of Southeast Asia and the Chines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p. 33 이하

30) James Heartfield, 2005, 앞의 글, pp. 204~207; Martin Brennan, 1982, 앞의 글, p. 204 이하

동아시아 근대사는 지역, 민족, 계급적 차원에서 놀라울 정도로 중첩적이고 혼종적으로 얽혀 있는 역사의 용모를 드러낸다.

IV. 교류사에 지배, 충돌, 갈등의 역사 써넣기

서울의 한 고등학교 역사교사의 조사에 따르면, 국내 기존 역사교과서들의 동아시아사 관련 내용은 대부분 전쟁, 정복, 긴장관계에 관한 것으로 드러났다.³¹⁾ 그에 비해 올해 새로 나온 세계사 교과서나 동아시아사 교과서들에서는 동아시아 역내의 관계사 및 교류사나 인도양 교역을 포함한 동서교류에 관한 내용 비중이 크게 증가했다. 이러한 변화는 국내에서도 교차문화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지구사 컨셉이 역사교과서 개정의 주된 코드로 등장함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들 교과서는 얼핏 보기에 왕조사 중심의 정치사 서술로부터 간문화적 상호작용을 중시하는 지구사적 서술로 많이 이동해온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양자의 영역을 별다른 관련성 없이 어색하게 병렬 서술하는 또 다른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신주백은 이러한 문제점을 천재교육판 『동아시아사』 교과서 내의 몽골제국 관련 내용을 일례로 날카롭게 지적하고 있다. 즉, 동서교류의 활성화와 지역사적 질서 변동이라는 두 가지 차원이 상호 융합되지 못하고 평행선에 머물고 있다는 것이다.³²⁾

정치사와 교류사를 지역사적·세계사적 차원에서 엮어 쓰는 난제는 비단 국내 동아시아나 세계사 교과서의 문제만이 아닌, 지구사적 서술전략 자체가 씨름하고 있는 일반적인이고 근본적인 난제 중의 하나다. 본장에서 주로 다룰 인

31) 임행만, 2011,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동아시아사-교과서 분석과 학생설문을 중심으로」, 제4회 역사NGO세계대회 내 국제 역사교육 전문가 심포지엄 발표문, 2011. 8. 21~22

32) 신주백, 2011, 앞의 글, 10쪽

도양 연구의 인식적 편향성도 사실상 이러한 난제에 그 뿌리를 두고 있다. 인도양 세계를 대체로 평화롭고 조화로운 문화유통이 이루어진 공간으로 보면 볼수록 ‘상호작용’이라는 핵심어가 교역과 문화적 교류 분야에 국한되어 정치·경제·사회·문화 다방면에서의 복합적인 상호작용과 지역사적 질서의 변동 전체와 연계되지 못하고 외연적 관계에 머물고 있음을 방증할 뿐이다. 식민지 이전시대 아시아에서 일어난 군사갈등에 관한 새로운 연구들도 계속 출간되고 있지만,³³⁾ 현재의 인도양 연구에서는 인도양 세계가 평화로운 해상교역 공간이었다는 것과 끊임없는 정복전쟁을 동반했던 복잡한 지역정치질서였다는 두 개의 주제를 하나로 엮어 쓰는 데 소극적이다. 선명하게 분리된 양 영역의 그림을 이해하는 방식으로 종종 등장하는 것이 해상교역과 중앙 내지 지역정치가 분리되어 있었다는 설명이다. 하버드 대학의 동남아시아사가 보즈(Sugata Bose)는 유럽 제국주의가 바다를 통해 침략해 들어오기 전까지 적어도 인도 지배자들은 해양 통치권에 대한 개념을 결여했다고 주장한다. “해전은 상인들의 사안이지 왕권과 관계가 없다”고 했던 인도의 구하라트 지배자의 진술이야말로 당시 지배자들이 바다 통치권에 대해 갖고 있던 전형적인 이해를 보여주는 말이라는 것이다.³⁴⁾ 16세기 포르투갈 제국주의 세력의 인도양 교역권의 점수에 대한 아부루고드, 월러스틴(Immanuel Wallerstein), 골드스톤(Jack Goldstone)의 설명 방식 역시 모두 이러한 이분법적 설명에 근거를 두고 있다.

양자의 영역이 상당히 분리되어 있었다는 가정에 기초하여 내륙의 정치질서로부터 비교적 독립적인 해상세계의 역사를 재구성하는 일은 간혹 과도한 정치적 상상으로 나아가기도 한다. 두아라의 ‘아시아의 귀환’ 테제는 “느슨한 네트워크 지향적이고 복수적이며 …… 사안에 따른 타협적인 주권 행사”에³⁵⁾

33) Nicola Di Cosmo, 2002, *Ancient China and Its Enemies: The Rise of Nomadic Power in East Asian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34) Sugata Bose, 2006, *A Hundred Horizons: The Indian Ocean in the Age of Global Empir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pp. 44~45

35) Presenjit Duara, 2010b, “Response to Comments on ‘Asia Redux,’”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9, 4, p. 1028

따라 지배되었던 해상교역체제를 토대로 유럽연합과 차별적인 탈근대적 형태의 아시아 지역정치공동체와 미래 지향적인 트랜스내셔널 공간을 상상한다. 그러나 상업적 교역이 지역 정치가들의 주된 관심영역 밖에서 진행되었다면, 상업 교역에서 나타난 자율적인 형식을 이 지역 질서 전체의 본질적 맥락으로 동일시하는 것은 경솔한 상상이 아닐까? 우리가 아직 발굴하지 못한 실제 역사에서는 해상교역과 지역정치가 유럽에서처럼 인도양 공간에서도 긴밀히 결합되어 작동했던 것은 아닐까? 이러한 의문점을 해소하기 위한 기초 작업은 이제까지 상대적으로 간과되어 왔던 갈등이나 권력관계의 메커니즘과 같은 주제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노력에서 시작될 수 있다.

뉴욕시립대학의 인도양 연구 전문가 센(Tansen Sen)의 문제의식과 연구는 이러한 차원에서 주목할 만하다. 그는 서구 제국주의의 진출 이전의 아시아 역내 교역세계에서도 유럽에서와 마찬가지로 무력행사, 상업적 이윤추구, 외교전략, 외세개입, 지역갈등이 똑같이 중요한 요소였지만 무시되어 왔다고 보고 이를 부각시키는 데 진력한다. 그는 아시아 역내 교역에서의 무력적 충돌과 갈등의 존재를 뒷받침할 수 있는 사례로 1025년 동남아시아의 스리비자야왕국에 대한 출라왕국의 정벌전과 명제국의 평화 원정에 주목한다.³⁶⁾ 직접적인 공식 기록도 제대로 남아 있지 않지만 출라 정벌전이 흥미로운 이유는 그것이 적어도 교역에 대한 경제적인 의존도가 높았던 곳에서는 지역의 정치적 질서가 해상교역과 밀접히 연동되어 있었음을 잘 방증해주기 때문이다.

송대 중국이 조공무역을 상업화하고 장려하면서 중국사상 처음으로 외국의 공물 운반선들이 합법적으로 교역을 행할 수 있게 되자, 주변국 상인들 사이에는 교역 이윤 극대화를 두고 경쟁이 심화되었다. 말라카 해협과 남중국해 무역에서 지대한 영향력을 행사하던 스리비자야왕국은 송대 중국과 인도의 남쪽 해안지역 간의 직접적인 외교적·상업적 연계를 차단하려는 노력을 계속하면서 송 조정에서는 그들이 출라왕국의 대표자들인 것 같은 인식을 조장했

36) Tansen Sen, 2010, "The Intricacies of Premodern Asian Connection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9, 4, p. 995

다. 벵갈만을 지배하던 출라왕국은 송대 중국 시장에 대한 진출권을 차지하기 위해서 1025년 정벌을 감행했고, 스리비자야왕국의 사절단이 급감한 것에서 역사학자들은 그것의 성공을 추정하고 있다.³⁷⁾ 물론 출라왕국이나 스리비자야왕국이 지역 전체의 정치질서에 결정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정도의 큰 정치체는 아니었다. 그러나 이들 역시 인도양 세계라는 하나의 교역권에서 중국 못지 않게 중요한 참여자였다고 할 때, 이들 소왕국의 정치적 운명은 지역질서와 해상교역 사이의 파고 속에 사라져간 아직 국가 단위에도 이르지 못했던 무수한 유사한 작은 정치체들 간의 치열했던 외교적·군사적 경쟁의 역사적 흔적을 엿볼 수 있게 해준다.

명대 정화 원정 역시 현재 그 이미지가 굳어진 것처럼 평화적 조공무역을 확대하기 위한 외교 사절단으로만 볼 수 없다. 정화 원정에 대한 최근 연구는 정화 제독과 그의 함대가 관여했던 무력 행사의 목적을 밝혀냈는데, 외국의 통치자를 잡아들이거나 지역 갈등의 조정에 참여하고 심지어 중국에서 멀리 떨어진 지역 균형을 바꾸려 했던 시도 등이 그것이다.³⁸⁾ 명의 정사기록에서는 명 조정의 인정을 받았던 폐위된 왕 알라비딘(Zain al-Abidin)의 요청에 따라 수마트라 북부 소재의 수무데라(Sumudera)의 왕, 세칸다르(Sekandar)를 1415년에 잡아들였다고 말하고 있지만 그것이 이유의 전부는 아니었다. 세칸다르의 체포 이전인 1410년에 정화는 자기방어 차원에서 알라케시와라(Alakeshwara)라는 스리랑카의 통치자를 체포했고, 그의 첫 원정 때부터 캘리컷과 코친 사이의 분쟁에 간여해서 결국 1433년에 이 지역에서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정화 제독이 군사적으로 개입한 이 지역은 예전에 바로 출라왕국과 스리비자야왕국

37) Robert Hartwell, 1989, "Foreign Trade, Monetary Policy and Chinese 'Mercantilism,'" Kinugawa Tsuyoshi, ed., *Collected Studies on Sung History Dedicated to James T. C. Liu in Celebration of his Seventieth Birthday*, Kyoto: Dohosha, pp. 453~488. 그 외에 George Spencer, 1983, *The Politics of Expansion: The Chola Conquest of Sri Lanka and Sri Vijaya*, Madras: New Era도 참고할 것.

38) Edward L. Dreyer, 2007, *Zheng He: China and the Oceans in the Early Ming Dynasty, 1405~1433*, New York: Pearson Longman

이 통치하였던, 해상교역에서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곳으로서 지역 분쟁이 끊이지 않던 곳이다. 벵갈의 술탄국과 그와 이웃해 있었던 인도 북부의 자운푸르(Jaunpur) 간의 갈등에도 정화 함대가 개입해서 평화 협정을 중개했다는 기록이 있다.³⁹⁾ 이렇게 볼 때 정화 함대가 남중국해로부터 인도의 말리바르 해안에 이르는 지역에서 필요할 때는 무력행사도 마다않는 막강한 영향력을 발휘했다는 것은 자명하다. 이에 웨이드(Geoffrey Wade) 같은 동남아시아 연구에서 명망 있는 학자조차 정화 원정의 영향력이 유럽 제국주의의 진출 이전에 이미 우세한 해군력을 앞세워 인도양 무역의 핵심 지역을 지배하는 “원(原)해양 식민주의(proto maritime colonialism)”의 수준에 도달해 있었다는 다소 과장된 주장을 내놓았다.⁴⁰⁾

결국 해상교역과 지역정치는 유럽과 크게 다르지 않게 밀접하게 서로 얽힌 관계에 있었을 가능성이 농후해 보인다. 조공·책봉체제는 중국중심적인 동아시아사로 치우칠 위험을 수반하지만, 이러한 얽힌 역사를 동아시아사적 차원에서 풀어낼 수 있는 좋은 주제가 될 수 있다. 동아시아적 관점에서 보자면 전근대 해상교역이란 곧 조공무역이었다. 이 조공무역체제 역시 명대 초반에서 처럼 자주 무력개입을 동반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도 기본적으로 권력관계의 무중력 상태에서 진행되지 않았다. 즉 인도양에서 남중국해에 이르는 바다공간이 유럽의 지중해나 대서양만큼 격렬한 해전의 무대가 되지 않았다고 해서, 이 바닷길을 둘러싼 지역 정치체들의 관계도 평화로웠다고 볼 수는 없는 노릇이다. 따라서 보다 중요하는 것은 단순히 당시 해상교역에서의 폭력성 여부나 무력충돌의 빈도를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인도양 해상교역을 비롯한 상호교류를 지역정치적 권력구조와 지배관계와의 좀 더 긴밀한 연관관계 속에서 바라보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조공·책봉체제는 중국이라는 중심과 주변 간의

39) Tansen Sen, 2006, “The Formation of Chinese Maritime Networks to Southern Asia, 1200~1450,”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49, 4, pp. 421~453

40) Geoffrey Wade, 2005, “The Zheng He Voyages: A Reassessment,” *Asia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No. 31, p. 10

상호작용뿐만 아니라 중층적인 위계질서에 기초하면서도, 무력이 아닌 의례라는 보다 상징적인 지배장치들을 활용했던 복합적인 지배구조와 불평등한 권력관계까지 모두 드러내 줄 수 있는 좋은 동아시아사 주제로 논의될 수 있다.

그러나 그 방식이 국내 동아시아 담론에서 지배적인 다중심주의론, 특히 동아시아론이 ‘이중적 주변의 눈’으로 선회하면서 새로이 강조하고 있는 ‘소중심(소중화)’적 시각을 매개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심스런 태도가 필요하다. 이러한 다중심주의론이 서구중심주의와 중국중심주의를 모두 극복할 수 있는 관점이자 방법론이라는 주장은 분명 매력적이다. 또한 오늘날 동아시아 각국이 처해 있는 역사적·영토적 갈등이 다자적인 접근과 사고방식을 필요로 한다는 측면에서도 당위성을 갖는다. 그러나 전근대 인도양 해상교역에서 평화롭고 조화로운 모습만을 추출하여 오늘날의 정치 담론에서 반복하려는 태도에 대한 쉐의 비판적 목소리는 동아시아 담론 내의 움직임에 대해서도 유효하다. 중국, 인도, 동남아 등의 역사적 공간에서 다중심적인 구조와 체제가 존재했던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 담론에서 활용 가치가 있는 어떤 평화적이고 분권적인 상호조화의 모델을 동아시아 과거사에서 발견하고 이를 물화시키려는(reify) 태도는 경계되어야 한다.

다중심주의가 탈중심은 아니며, 특정 역사적 공간 속에 존재했던 비교적 평화롭고 분권적인 지역질서의 작동과 존재가 그 지역질서의 성격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규정력을 갖거나 그것이 항구적으로 반복 실행될 수 있는 근거를 보장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단순히 무력개입에 실패한 것과 무력개입을 봉쇄, 제한할 수 있는 상호규제적이고 상호의존적인 체제의 확립은 별개의 문제다. 몽골제국은 분명 해상에서도 내륙에서와 같은 패권을 장악해보고자 오랫동안 시도했고, 몽골제국의 영광을 재현해보려던 영락제 역시 좀 덜 무력적인 형태이긴 했어도 주변국들에 대한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하고자 했다. 중국이나 인도는 해양보다 내륙에 관심을 두었고 국부의 대부분이 내륙경제로 충분히 충당되었기 때문에 굳이 위험한 바다로 나갈 필요가 없었다는 것이지, 평화적인 국제질서를 지향하는 그 어떤 지역정치적 체제가 작동했던 결과로 볼 수는 없는 것이다. 이렇게 볼 때, 동아시아 지역사가 기존의

민족사 패러다임의 확대를 통해서도, 동아시아 국가들 간의 대외교류만 바라 보면서 국내의 내재적 역학을 무시해서도 제대로 서술될 수 없다는 것은 자명하다. 왕(Roy Bin Wong)이 중국과 유럽 간의 분기라는 문제에서 포메란츠(Kenneth Pomeranz)와 달리 중국의 정치체제의 분석으로 되돌아가지 않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었다.⁴¹⁾

서구중심주의의 극복을 중국중심주의를 통해 이룰 수 없다는 것은 프랑크의 사례가 극명하게 보여주었다. 동아시아에서는 이제 중국의 경제적·정치적 영향력의 증대로 인하여 역사서술에서도 중국중심주의가 서구중심주의 못지않은 공공의 적이 되었다. 그러나 다중심주의든 소중심론이든 또 다른 중심론으로 중국중심주의를 극복할 수는 없다. 오히려 중국중심주의든 인도중심주의든 역사 공간 속에 실제로 존재했던 각 중심과 주변 간의 역학적 구조와 상호작용을 보다 철저히 연구의 중심으로 삼을 때 동아시아 지역사라는 전체에 접근할 수 있는 공고한 기초의 단편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의미에서도 동아시아 과거사를 다중심주의적인 틀에 맞게 다시 서술해야 한다는 논리의 비역사성은 경계되어야 한다. 더구나 다중심주의론으로 세 위계론(중심·소중심·주변)을 재검토하려는 의도가 “수백 년간 유지해온 독자의 전통과 문화의 위치를 제대로 회복하고”, “중국이 주도하는 국제질서에 편입되지 않은 채 독자적인 질서와 가치관을 갖고 존재했던 중심”, “바로 독자적 소중심을 말하기 위함”에 있다면 더더욱 그렇다.⁴²⁾

다중심주의와 소중심론이 빠질 수 있는 오류는 각각의 행위자를 또 다른 자율적인 중심으로 설정하면서 독자적인 역사와 문화를 강조하려는 데 있다. 그러나 동남아 국가들에서 활동했던 중국 화교상인들의 경제를 뛰어넘은, 더 나아가서 정치적 영향력은 그 반대를 말하고 있다. 그것은 서구 제국주의 세력이 개입한 근대보다 전근대 시대 공간에서 더 컸으며, 중국이 아니더라도 인도

41) Roy Bin Wong, 1997, *China Transformed: Historical Change and the Limits of European Experie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42) 신주백, 2011, 앞의 글, 10쪽

와의 밀접한 관계까지 부인하기는 더 어렵다. 지구사적인 관점에서 볼 때 중요한 것은 역사적 단위들 간의 체계모니적 상호연관성이지만, 역사적 체계모니를 역전시키기 위한 역사전쟁이 아니다. 전자에 집중하는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이야말로 개별 정치체들 간의 상호교류와 상호영향뿐만 아니라, 브로델적인 표현으로 말하자면 단기지속의 차원에서 출렁이는 너울과 같이 운동하고 있었던 체계모니와 그것의 구조적 실체에도 한 걸음 가까이 다가설 수 있을 것이다.

V. 맺음말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은 동아시아란 무엇인가라는 문제를 먼저 해결한 뒤에야 비로소 가능한 혹은 자동적으로 해결될 수 있는 영역이 아니다. 즉 동아시아의 범주와 개념을 발견, 확정된 다음에 그에 맞춰서 동아시아사를 서술하고 역사적으로 입증해내는 순서를 밟지 않는다. 거꾸로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을 실천함으로써 ‘동아시아’는 새로이 상상되어야 한다. 동아시아의 범주란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을 다각도로 시도하는 행위의 과정 속에서 역사적으로 형성, 발견되어야 할 무엇이기 때문이다. 동아시아사 과목의 탄생에서 산파역할을 한 동아시아 담론은 동아시아 개념을 “지역을 구성하는 주체의 행위에 따라 유동하는 역사의 공간”으로 파악해야 한다는 원칙을 내세우면서도,⁴³⁾ 동아시아 개념의 실체를 역사적으로 입증하는 작업에 실패했다.⁴⁴⁾ 한반도 분단체제와 역사갈등의 지속이라는 과거로부터의 모순과 신자유주의적 지

43) 백영서, 2004, 앞의 글, 14쪽

44) 박원호가 지적한 동양사학자들의 동아시아 담론에 대한 냉담한 평가들을 참고할 것. 박원호, 2012,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한국사 및 세계사와 연관하여』, 역사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2012. 10. 6, 10쪽

구화의 관철, 미국 패권체제의 퇴조, 중국의 등장이라는 새로운 발전추세가 혼재해 있는 동아시아의 유동적인 상황이 지역발전의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동아시아 담론의 위기의식은 뚜렷하고 정당하다. 또한 이러한 위기에 대한 지역적 대안으로서의 새로운 동아시아 협력모델, 즉 트랜스내셔널하고 탈중심적인 신질서로서 동아시아 공동체론의 당위성도 반박하기 어려워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위기의식이나 그에 대한 대응책으로서의 구상물이 실제 이 지역의 역사를 트랜스내셔널하고 탈중심적인 역사로 물화시키는 틀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본고는 동아시아 지역이 공유했던 실제 역사적 맥락을 먼저 발견하고 재구성할 수 있는 방법으로서 지구사적 접근을 선택했다. 지구사가 동아시아사에 대해 직접적으로 접근하고 있지 않다는 것은 단점이기보다는 오히려 장점이다. 동아시아사를 광역적으로 재맥락화할 수 있는 광대한 조망권과 아울러 그 중층적이고 혼종적인 구조와 경계의 문제를 문제의식 속에 포함시키도록 자극하기 때문이다. 아부루고드로부터 두아라에 이르기까지 동아시아를 포함한 인도양 세계가 중심과 주변이 수평적으로 해체된 트랜스내셔널 이상에 가까운 공간으로 인식했던 것은 어쩌면 그들의 특정한 정치적 편견에서라기보다 이 지역이 품고 있는 깊은 상호연계성, 투과성, 혼종성의 장기지속 때문이었는지 모른다. 동아시아 내에 존재하는 다양한 문명적·지리적·정치문화적 경계를 부정할 수는 없지만, 동아시아는 사실상 그 안과 바깥을 구분하는 경계가 무색할 정도로 주변의 중앙아시아, 남아시아, 동남아시아와 역사적으로 매우 본질적으로 연계, 접촉, 상호작용해왔다. 따라서 동아시아사의 지구사적 방법과 서술은 바로 이 지역의 중층성, 투과성, 혼종성을 출발점으로 삼고 이러한 장기지속의 구조적·역사적 실재를 발굴해내는 작업으로 시도될 수 있다.

그러나 인도양 연구라는 지구사 하위범주에서 축적된 연구 성과는 지구사적 시각과 문제의식의 잠재력의 일부만을 소진하는 데 성공했다. 인도양 연구는 동아시아를 인도양이라는 보다 광역적이고 다각적인 네트워크 속에 위치시키는 데에는 성공했지만, 여전히 시대적·인식적으로 편향된 서술패턴을 보이고 있다. 본고는 이러한 인도양 연구의 문제점을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을

혁신할 수 있는 비판적인 토대로 활용했다. 즉 단순히 인도양 연구에 대한 비판에 집중하여 새로운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을 열린 지평으로 남겨두기 보다는, 단편적이고 그 가능성이 확고히 입증되지 않은 수준이라 할지라도 구체적인 주제를 제안하면서 엮어 쓰기로서의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에 관한 논의를 한층 구상화하고자 했다. 이런 차원에서 보고는 한편으로는 포스트식민주의의 대안적 근대성 개념을 활용한 동아시아 식민지 근대사 서술의 혁신을, 다른 한편으로는 해양교역의 평화로운 네트워크와 지역 정치적 차원의 충돌과 갈등관계를 함께 엮어 쓰는 혁신을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얽힌 역사의 실체에 한 걸음 다가설 것을 제안했다.

본문에서 제안한 역사적 주제들은 동아시아의 세계사적 연관성을 높이는 데 유용한 고리로 활용될 만하다. 매판자본의 경우는 동아시아뿐만 아니라 식민지 세계 전체에 존재했고, 외국 자본에 대해 국민경제의 종속성을 높인 원흉으로 지목되어 왔던 주제다. 따라서 제국주의와 반제국주의라는 이분법이 지배해온 민족사 패러다임으로는 제대로 쓸 수 없었던 식민지 국가들의 근대사 쓰기를 동아시아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적인 맥락에서 시도해 볼 수 있는 최적의 위치에 있는 주제라고 본다. 중국 중심의 조공·책봉체제 역시 인도양 교역과 조공무역 간의 중첩성을 통해 바라본다면, 좀 더 광역적인 지역사적 차원에서 해양교역과 지역정치를 엮어 쓸 수 있는 유용한 연결고리가 되어 줄 수 있다고 판단된다. 중요한 것은 중심이 아니라 상호연계성(connectedness)이고, 연결하는 네트워크가 권력의 무중력 상태에 존재하지 않았던 이상 그것은 항상 헤게모니적 상호작용을 수반했기 때문이다.

동아시아가 역사적으로 어떻게 지역화하고 있었는지를 제대로 보여주는 동아시아사 방법과 서술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아직 시작조차 되지 않고 있다. 범주와 개념에서 구체적인 주제를 중심한 동아시아사 논의로 논쟁의 중심점을 옮겨올 때, 동아시아사 방법과 서술은 그 가능한 형태가 보다 뚜렷이 모색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1. 국문자료

- 이상성, 2009, 『동아시아의 전쟁과 평화 1』, 한길사
- 정문길 외 3인 엮음, 2004,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 지성사
- 마셜 호지슨, 에드먼드 버크 3세 엮음, 이은정 역, 2006, 『마셜 호지슨의 세계사론. 유럽, 이슬람, 세계사 다시 보기』, 사계절
- 자넷 아부루고드, 박홍식·이은정 역, 2009, 『유럽 패권 이전』, 까치
- 박원호, 2012,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한국사 및 세계사와 연관하여』, 역사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2012. 10. 6
- 신주백, 2011, 「한국의 동아시아사 인식」, 제4회 역사NGO세계대회 내 국제 역사교육 전문가 심포지엄 발표문, 2011. 8. 21~22
- 윤해동, 2008, 「트랜스내셔널 히스토리(Transnational History)의 가능성-한국사를 중심으로」, 『역사학보』 200
- 이성시, 2012, 「일본 역사학계의 동아시아세계론에 대한 재검토-한국학계와의 대화로부터」, 『동아시아사의 방법과 서술-한국사 및 세계사와 연관하여』, 역사학회 창립 60주년 기념 추계학술대회 발표문, 2012. 10. 6
- 임행만, 2011, 「한국사 교과서에 나타난 동아시아사-교과서 분석과 학생설문을 중심으로」, 제4회 역사NGO세계대회 내 국제 역사교육 전문가 심포지엄 발표문, 2011. 8. 21~22

2. 영문자료

- Boeke, Julius Herman, 1953, *Economics and Economic Policy of Dual Societies*, New York: Institute of Pacific Relations
- Bose, Sugata, 2006, *A Hundred Horizons: The Indian Ocean in the Age of Global Empire*, Cambridge, Mass: Harvard University Press
- Chaudhuri, Kirti N., 1990, *Asia Before Europe. Economy and Civilization of the Indian Ocean from the Rise of Islam to 1750*,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Dreyer, Edward L., 2007, *Zheng He: China and the Oceans in the Early Ming*

- Dynasty, 1405-1433*, New York: Pearson Longman
- Kwan, Chan Wai, 1991, *The Making of Hong Kong Society*, Oxford: Clarendon
- P'eng, Shu-Tse, 1980, *The Chinese Communist Party in Power*, New York: Monad Press
- Reid, Anthony, 1993, *Southeast Asia in the Age of Commerce, 1450-1680*, 2 Vols., New Haven and London: Yale University Press
- Tignor, Robert et al., 2008, *Worlds Together Worlds Apart*, New York: W. W. Norton & Company
- Wong, Roy Bin, 1997, *China Transformed: Historical Change and the Limits of European Experience*, Ithaca and London, Cornell University Press
- Barlow, Tanie, 1997, "Introduction," idem, ed., *Formations of Colonial Modernity in East Asia*, Durham, NC: Duke University Press
- Brennan, Martin, 1982, "Class, politics and race in modern Malaysia," *Journal of Contemporary Asia*, 12, 2
- Chakrabarty, Dipesh, 1992, "Postcoloniality and the Artifact of History: Who speaks for 'Indian' Past?," *Representations*, 37
- Dirlik, Arif, 2008, "Contemporary Perspectives on Modernity: A Critical Discussion," *Sungkyun Journal of East Asian Studies*, 8, 1
- Duara, Presenjit, 2010a, "Asia Redux: Conceptualizing a Region for Our Time,"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9, 4
- Duara, Presenjit, 2010b, "Response to Comments on 'Asia Redux',"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9, 4
- Hamashita, Takeshi, 2008, "Overseas Chinese financial networks. Korea, China, and Japan in the late nineteenth century," Linda Grove and Mark Selden, eds., *China, East Asia and the Global Economy. Regional and historical perspectives*, N.Y.: Routledge
- Hartwell, Robert, 1989, "Foreign Trade, Monetary Policy and Chinese 'Mercantilism,'" Kinugawa Tsuyoshi, ed., *Collected Studies on Sung History Dedicated to James T. C. Liu in Celebration of his Seventieth Birthday*, Kyoto: Dohosha

- Heartfield, James, 2005, "China's Comprador Capitalism Is Coming Home," *Review of Radical Political Economics*, 37, 2
- Ray, Rajat K., 1995, "Asian Capital in the Age of European Expansion: The Rise of the Bazaar, 1800–1914," *Modern Asian Studies*, 29, 3
- Reid, Anthony, 2001, "Flows and Seepages in the Long-term Chinese Interaction with Southeast Asia," idem, ed., *Sojourners and Settlers. Histories of Southeast Asia and the Chinese*, Honolulu: University of Hawai'i Press
- Sachsenmaier, Dominic, 2011, "Global Perspectives on Global History," *Theories and Approaches in a Connected World*, New York: Cambridge University Press
- Sen, Tansen, 2006, "The Formation of Chinese Maritime Networks to Southern Asia, 1200–1450," *Journal of the Economic and Social History of the Orient*, 49, 4
- Sen, Tansen, 2010, "The Intricacies of Premodern Asian Connection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9, 4
- Wade, Geoffrey, 2005, "The Zheng He Voyages: A Reassessment," *Asia Research Institute Working Paper Series*, No. 31
- Wang, Hui, 2010, "The Idea of Asia and Its Ambiguities,"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69, 4

[ABSTRACT]

Searching for a Global Historical Methodology and a
Narrative of East Asian History:
A Critical Review of Indian Ocean Studies

Park Hyejeong

This paper searches for a global historical innovation of the writing of East Asian history. As a departure point, it critically reflects on Indian Ocean studies. The main problems in this historiography may be summarized in two ways. One problem is the periodical inclination of Indian Ocean studies toward the pre-colonial period. This might be another expression of Eurocentrism which takes a strong European hegemony in this region for granted so that all other intra-regional developments are overlooked. The other problem is an epistemological or political inclination. Although researchers of Indian Ocean history do not pursue an explicitly political goal as participants in the East Asian discourse do, they are relatively focused upon a peaceful and harmonious image of the Indian Ocean trade and intra-regional relationships. This is a persistent perspective which continues from Janet Abu-Lughod to PrasenjitDuaara, who recently forwarded the “Asia Redux” thesis.

Based upon critical reflections on these problems, the global historical methodology and the narrative of East Asian history can be searched for in two ways. One is not only extending East Asian history study to the colonial period, but also liberating it from being a footnote

to European imperial history. The post-colonialist concept and its analytical framework can be useful in this context, since it has contributed to reinterpre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metropole and the colony, and, further, to rewriting even the history of the metropole. The other is writing the much-overlooked regional political dynamics and the unequal power relationships into the history of peaceful and harmonious commercial and cultural transactions. The traditional tributary system can serve as an excellent subject to illuminat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rade and the intra-regional political interests, because it entangled numerous East Asian countries with one another so to regulate the inter-state relationship diplomatically and with violence, if necessary.

Keywords

East Asia, Global History, Indian Ocean, alternative modernity, tributary system, comprador capital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기술 내용과 개선 방안

- 2012년판 〈동아시아사〉 전근대 부분을 중심으로 -

박근칠 | 한성대학교 역사문화학부 교수



I. 머리말

〈동아시아사〉는 「2007년 개정 역사과 교육과정」(이하 「2007년 교육과정」으로 약칭¹⁾)에서 처음으로 고등학교 역사과 선택 과목 가운데 하나로 채택되었다.²⁾ 이후 2009년과 2010년에 각각 교육과정 개정과 역사과 교육과정 부분 개정이 진행되었으나, 〈동아시아사〉는 다른 과목과 달리 과목명 변경이나 성취 기준 조정이 없었다.³⁾ 이에 「2007년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된 교과서가 2011년

※ 투고일: 2013년 2월 20일, 심사일: 2013년 5월 23일, 게재 확정일: 2013년 5월 24일

- 1) 후술하듯이 「2007년 개정 교육과정」은 2009년에 다시 개정되지만 〈동아시아사〉의 경우 교육과정에 변화가 없었다. 따라서 2009년에 개정이 진행되기는 했지만 「2007년 교육과정」으로 약칭한다. 이 글에서 < >는 과목을 의미한다.
- 2) 「2007년 교육과정」에 의하여 중등 〈역사〉가 사회과체계에서 독립 과목으로 설정되고, 고등학교 역사과 선택과목으로 〈동아시아사〉가 도입된 내역에 대해서는 정연, 2008,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 체계」, 『동북아역사논총』 19, 7~10쪽 참조.
- 3) 〈동아시아사〉 과목은 2007년 개정 교육과정(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2007. 2. 28],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서 처음으로 도입되었는데, 이에 따른 교

에 검정 과정을 거쳤으며,⁴⁾ 그 결과 2012년부터 두 종류의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학교 현장에서 사용되고 있다.⁵⁾

그런데 현행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검정 중이던 2011년 시점에 '2009년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 적용을 위한 '동아시아 교육 과정의 개정'이 다시 이루어졌고(이하 「2011년 개정 교육과정」),⁶⁾ 이를 근거로 2012년에 새로이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기준」(이하 「집필 기준」)이 발표되었다. 따라서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기술 내용에 대한 개선 방안은 「2007년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두 종류의 <동아시아사>에 대한 분석과 더불어 새로운 교육 과정(「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성취 기준이나 집필 기준에 따라 제작될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기술 방향도 함께 고려하여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의식에서 본고는 우선 「2007년 교육과정」에 따른 현행 두 종류의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비교, 검토해보고자 한다. 특히 교육과정에서 제시한 성취기준이 어떻게 구현되었으며, 그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은 무엇인지에 주목할 것이다. 다만 분석의 내용 범위는 일단 전근대 부분(제1~4단원, 선사시대~19세기)으로 한정하였다.

대체로 현행 두 종류의 검정판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대해서는 '천재교육'의 경우, 동아시아 지역의 상호 연계성을 부각시키기 위하여 주제별로 각국의

과서가 제작되지 않은 상태에서 재차 교육과정 개정 작업이 이루어져서 2009년 개정 교육과정(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09-41호[2009. 12. 23], 『초중등학교 교육과정』)에 따라 비로소 교과서가 제작되었다. 이 과정에 대해서는 정연, 2011,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검토-대단원 I, II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14, 247쪽 참조.

- 4) 국사편찬위원회 공고 제2011-1호(2011. 8. 19), 「2009개정 교육과정에 의한 2011년 교과용 도서 검정 합격 결정 공고」
- 5) 2종의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우선 안병우 외 저, 2012, 『동아시아사』, 천재교육과 손승철 외 저, 2012, 『동아시아사』, 교학사다. 이하 전자는 '천재교육'으로, 후자는 '교학사'로 약칭한다.
- 6)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제2011-361호(2011. 8. 9), 「2009년 개정교육과정에 따른 교과 교육과정」에 따라 진행되었다.

공통점과 차이점을 비교하였으나 내용 요소를 일목요연하게 정리, 전달하지 못한 인상을 주는 점, ‘교학사’의 경우 중국, 한국, 일본 등 국가별로 나누어 서술하여 내용 요소의 전달은 보다 명확했으나 주제어를 매개로 한 기술 내용의 상관성이 다소 부족한 점 등이 지적되고 있다.⁷⁾ 때문에 단원의 성취 기준에 따른 효과적인 구성과 기술 형식에 대한 기준이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2007년 교육과정」과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의 내용을 비교하여 영역(대단원) 구분, 학습내용 성취기준 등에서 개정된 부분을 정리하고 그 의미를 분석해보고자 한다.⁸⁾ 다만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2007년 교육과정」에서 전제한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의 대원칙이라 할 수 있는 ‘주제별 기술’이라는 접근 방식을 연용하고 있기 때문에⁹⁾ 이를 전제로 일부 조정된 내용 요소들을 중심으로 검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의 문제점과 향후 개선 방안을 현행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분석 내용을 토대로 제시해보겠다. 이 경우 각 성취기준에 대하여 제시된 ‘집필 기준’이 이러한 개선 방안을 구현하기에 적절한지도 살펴보고자 한다.

다른 나라에도 아직 유례가 없는 자국사와 세계사를 잇는 지역사로서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우여곡절 끝에 제작되어 학교 현장에서 사용하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현행 〈동아시아사〉의 기술 내용에 대한 현장의 반응이나 그에 대한 평가가 이루어지기도 전에 교육과정에 대한 새로운 개정이 이루어진 점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다만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이 「2007년 교육과정」의 대원칙을 그대로 수용하면서, 현행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기술 내용에 대한 분석을 전제하여 가능한 ‘소폭의 개정’을 시도했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본고

7) ‘천재교육’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서는 정연, 2011, 251쪽 참조.

8)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내용 구성 대강화’의 원칙에 따라 최저 필수 요소만으로 내용 요소를 정선하여 제시했기 때문에 교과서 집필을 위한 해설서(「동아시아사 교육과정 해설서」)가 마련되었다. 본고에서는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9,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343~361쪽의 「부록: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해설서」(이하 「교육과정 해설서」)를 참고하였다.

9) 이러한 개정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동아시아교육과정시간개발정책위원회(2011, 8, 26), 『동아시아개정시간연구결과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내부자료)를 참고하였다.

에서 분석한 현행 <동아시아사>와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지적 사항이 차후 보다 완성도 높은 <동아시아사>를 만드는 데 참고할 만한 자료가 되기를 기대해본다.

II. <동아시아사> 기술 내용에 대한 검토

우선 「2007년 교육과정」에 따라 제작되어 현재 사용되고 있는 두 종류의 교과서 내용을 검토해 보겠다. 현행 <동아시아사> 교과서 전근대사 부분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1) 선사시대~기원전후(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2) 기원전후~10세기(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3) 10~16세기(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4) 16~19세기(국제 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등 4개 영역(대단원)으로 나누어 각 시기의 대표적인 주제를 제시하고 있다. 각 영역별로 제시된 성취기준 내용 가운데 개선이 필요한 부분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이하 교육과정 내용은 <표 1> 「2007년 교육과정」과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의 영역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비교표 참조).

1_ 동아시아의 지역 범위와 자연 환경에 대한 기술

동아시아의 지역범위 설정과 자연 환경에 대한 기술과 관련된 내용이다.¹⁰⁾ 주

10) 개정 교육과정이 고시된 후에도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공간적 범위 설정 문제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논의가 집중되어 왔다(정연, 2008, 10쪽). 이 점은 동아시아의 지역적 범주에 대해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자체에도 '과거부터 지역내 공동체 상호간의 긴밀한 교류를 통해 문화, 사상, 제도 등에서 나름의 정체성을 형성해왔으며, 오늘날 국제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증대되고 있는 역동적인 역사 및 지역단위'라고만 밝힐 뿐 그 구체적인 영역에 대해 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이기도 한데, 이것이 '교과서 집필진의 재량권을 최대한 존중하기 위한 의도'(정연, 2009, 「동아

로 ‘(1)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가운데 ‘㉠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 농경과 목축’ 등 2개 성취기준(중단원)에서 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인데, 대체로 ‘몽골, 티베트, 중국 본토, 만주·한반도, 일본 열도, 북부 베트남 등’의 지역으로 ‘오늘날 몽골,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의 나라가 해당하는 것으로 설정하고 있다.¹¹⁾ 또한 티베트고원부터 동쪽으로 ‘西高東低’의 지형적 특징과 기온, 계절풍, 강우량에 따른 식생, 생업의 차이를 통하여 동아시아 지역의 자연 환경적 특징을 파악하고 있다.¹²⁾ 물론 이러한 규정은 오늘날 동아시아 국가들의 강역과 현재의 생태 환경을 전제한 것으로, 설정된 지역 범위의 내적 조건, 특히 지리적 요소에 천착한 바다. 그런데 그 지리적 범주를 ‘서쪽으로 파미르고원 이 동, 남쪽으로 히말라야산맥 이북, 북쪽으로 몽골초원 동서 이남, 동쪽으로 大 洋(태평양) 이서’로 구별하여 이를 역사적 경험을 공유한 하나의 지역세계로 설정한다면¹³⁾ — 특히 〈동아시아사〉가 역사 과목임을 전제한다면 —, 여타의 지역세계 혹은 문화권과 구별되는 인문지리적 또는 역사지리적 측면에 대한 지적도 필요할 것이다. 예를 들어 파미르고원을 경계한 서쪽의 중앙아시아 지역(이슬람 문화권), 히말라야산맥을 경계한 남쪽의 남아시아 지역(인도 문화권), 몽골고원 북쪽 지역 등과¹⁴⁾ 구별되는 역사지리적 특징에 대한 언급은 비

시아의 자연환경’,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9쪽)라고만 이해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다.

- 11) 「교육과정 해설서」, 343쪽; ‘천재교육’, 12쪽. 이와 관련하여 김택민도 동아시아는 중원, 한반도, 일본열도, 남중국, 베트남, 만주, 몽골, 서역, 티베트 등의 지역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전제하면서 “동아시아사는 각 지역 역사의 총합”이라고 정의하고 있다. 김택민, 2010, 「7-9세기 동아시아의 경제교류와 문화교류」, 『史叢』 70, 86쪽 참조.
- 12) ‘천재교육’, 13~14쪽; ‘교학사’, 12~13쪽
- 13) 이와 관련하여 정연, 2009, 10쪽에는 “(동아시아는) …… 남으로는 카라코룸산맥과 히말라야산맥, 북서로는 툰산산맥, 북으로는 사얀산맥과 아블로노미산맥 등이 자연적인 방벽을 형성하여, 동아시아를 아시아의 다른 지역과 분리시키고 있다”는 사실만을 명기하고 있을 뿐 그러한 지역적 분리가 동아시아 지역세계를 이해하는 데 어떤 의미가 있는지 평가하고 있지 않다.
- 14) ‘교학사’, 10쪽에는 ‘세계의 문화권’ 지도가 제시되어 있는데, ‘동아시아 문화지역’의 주위로 ‘동남아시아 문화지역’, ‘남아시아 문화지역’, ‘중앙아시아 문화지역’, ‘러시아 문화지역’ 등을 명시하고 있다. 다만 이러한 문화지역의 구분이 어떤 기준에 따라

단길, 초원길의 기능과 동아시아의 관계, 불교의 동점(東漸) 과정, 북방 유목민족의 활동 영역 등의 문제와 관련하여 역사적으로 동아시아를 하나의 지역세계로 고찰해야 하는 이유를 보충할 수 있을 것이다. 더욱이 이러한 인문지리적 관점을 전제하고서야 “자연조건과 환경을 다룰 때에는 지리적 지식이나 자연과학적 지식 자체에 천착하기보다 그것이 가진 역사 전개 배경으로서의 의미에 관심을 기울이도록 한다”는¹⁵⁾ 교과서 서술상의 유의점도 충족될 것이다.

한편 전근대사 전체 내용과 관련하여 동아시아의 지역범위에 베트남을 포함시켜야 하는가(현행 ‘천재교육’, ‘교학사’는 모두 포함하고 있음)에 대해서는¹⁶⁾ 일단 논외로 하더라도, 동아시아사에 대한 기술이 주로 중국 본토와 만주·한반도, 일본 열도를 주 대상으로 삼고 있는 점도 재고할 여지가 있다. 이는 일견 한국사와의 관련성을 강조한 결과라 하겠으나, 티베트, 동투르크스탄(현 신강 위구르자치구), 몽골초원 등지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거의 주목하지 않고 있다. 한대 이래 서역남·북로와 천산북로를 통한 동서 문화교류의 양상(불교 전파, 서역 문물 전파 등)만이 아니라 吐蕃, 回紇 등의 성장과 중원왕조의 대외정책 간 관련성(조공·책봉 관계, 당조의 고구려 침략 등),¹⁷⁾ 명대 이래 해상교역로의 부상 등은 해당시기 동아시아 지역세계의 전체상을 파악하는 데 중요한 단서가 될 것이다. 특히 전근대 시기를 통하여 이 지역은 한자, 유교, 불교, 율령 등 이른바 동아시아의 공통 요소를 공유하지 않았던 점도 간과해서는

서 설정된 것인지도 의문이며 이와 관련된 ‘동아시아 문화지역’의 성격에 대해서는 전혀 설명하고 있지 않다.

15) 정연, 2009, 7쪽

16) 이에 대하여 김창석은 “…… 한국 고대국가와 베트남, 중원 왕조 삼자 간에 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으므로 (베트남은) 한국고대사의 역사적 맥락에서 제외하는 ‘동아시아’의 범주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하였다. 김창석, 2010, 「6~8세기의 동아시아와 한중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81쪽 참조.

17) 이와 관련하여 최근의 연구 성과를 전제하여 당과 고구려의 전쟁이나 당과 신라의 전쟁의 경우에도 대체로 북방과 서역의 정세로부터 직간접의 영향을 받았음에 주목한 언급은 특기할 만하다. 임기환, 2011, 「고대 동아시아 국제관계와 조공·책봉」, 『동아시아의 역사 I: 자연환경-국제관계』, 동북아역사재단, 421쪽 참조.

안 될 것이다.¹⁸⁾ 이러한 사실들에 대한 이해를 통해 자국사와 세계사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지역사로서 동아시아사에 대한 기술이 가능할 것이다.

또 지역적 기후 조건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식생과 생활 형식이 조성되고, 이로써 현재 동아시아 지역의 생활 환경을 파악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그런데 현재의 자연 조건만을 언급하다 보니, (1)의 '㉠ 선사 문화의 전개'에서 고대 문명이 발생하던 시기의 실상을 파악하는 데 어려움이 있다. 예를 들어 오늘날 중국에서 가장 척박한 생활 조건을 갖고 있는 황토고원지역의 자연 환경을 전제한다면 '중원지역'에서 중국 고대 문명이 형성된 사실을 쉽게 이해하기 곤란하다.¹⁹⁾

더욱이 (2)-㉠의 10세기 이전 동아시아에서의 인구 이동을 다루면서 기원전 1세기경 만주 북부 송화강 유역에서 부여족이 남하한 사실과²⁰⁾ 후한 말(3세기) 이후 혼란기에 유목민족들이 북쪽 초원지대에서 만리장성 남쪽으로 이주하여 정착한 사실은²¹⁾ 인구 이동의 계기로 기술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인구 이동의 動因에 대하여 “집단적인 인구 이동은 기후 변화, 자연재해, 인구 증

18) 이와 관련하여 '동아시아'의 최소 지역 단위를 '한자문화권' 또는 '유교문화권'으로 잠정적으로 설정하고, 시대에 따라 달라지는 국제정치의 상황에 의해 그 영역이 조금 늘기도 하고 줄기도 하는 신축성을 어느 정도 부여하는 것이 실제로 더욱 맞을 것이라는 지적은(박원호, 2009,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 구성을 위한 再論, 『韓國史學報』 제34호, 247쪽; 박원호, 2012, 「북방민족 歷史像의 復元을 통한 동아시아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歷史教育論集』 제49호, 423~424쪽) 동아시아의 공간적 범주를 융통성 있게 규정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타당성이 인정되지만 자국사의 이해를 전제한 범주 설정이 세계사와의 중간 범주로서 동아시아 지역세계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것인지는 의문이다.

19) 고대 문명의 발상지였던 황하 중유역의 중원과 황토고원 지역이 춘추·전국시대를 거치면서 인구 증가와 산림 파괴로 인해 이전 시대에 비해 8할에 이르는 산림의 비율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생태환경의 커다란 변화가 이루어졌다는 지적은 참고할 만하다(마크 엘빈 지음, 정철웅 옮김, 2011, 『코끼리의 후퇴: 3000년에 걸친 장대한 중국 환경사』, 세계절, 72~103쪽). 이러한 측면에서 '동아시아의 자연환경'을 구성기시대에 국한하여 파악해 본 김정배, 2011,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동아시아의 역사 I: 자연환경-국제관계』, 11~29쪽은 나름대로 의미 있는 서술이라 하겠다.

20) '천재교육', 50쪽; '교학사', 41쪽

21) '천재교육', 51쪽; '교학사', 42쪽

가, 종족 간 또는 종족 내부의 정치적 갈등, 전쟁 등의 다양한 요인에 의해 일어났다”고²²⁾ 하거나 “인구 이동의 주원인은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부족, 이민족의 침략, 국가 간의 영토 다툼으로 인한 전쟁 등이었다”고 지적하는²³⁾ 등 일관된 결론에 그치고 있다. 물론 부여족의 남하나, 5호의 남하가 이후 이주정권과 정주정권 간의 갈등과 전쟁, 이로 인한 사민이나 천도 등을 통하여 연쇄적인 인구 이동이라는 결과를 가져왔지만, 북방 지역민이 남하하게 된 요인은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 파악하기 힘들다. 이와 관련하여 북방 유목민이 농경지대로 이동(남하)하는 계기 중에는 기후 변화라는 생태 환경적 측면이 밀접하게 관계되었음을 ‘동아시아 연평균 기온의 변화 추이’를 통해 설명한 내용은 참고할 만하다.²⁴⁾

이러한 맥락에서 (3)–⑦의 10세기 이후 ‘북방 민족의 성장’에 대하여 ‘천재교육’의 경우 “이 무렵 동아시아 지역의 연평균 기온이 지속적으로 낮아지면서 거란이 남하하였고, 그 뒤를 이어 여진, 몽골 등의 북방 민족도 잇달아 남하하였다”고²⁵⁾ 지적하고 있어 거란과 여진의 등장을 주변 부족의 통일 과정으로만 기술한 ‘교학사’의 경우와 대조를 이룬다. 북방 유목민의 농경민에 대한 침략에 동아시아의 기후 변화가 주요한 요인으로 작용했을 가능성은 이미 여러 연구에서 주목하고 있는 점이기 때문에²⁶⁾ 기후 등 자연 조건의 변화에 대한 이해는 현재 동아시아의 자연 환경만이 아니라 특정시기 전근대 동아시아 역사를 이해하는데도 유용하리라 판단된다.

22) ‘천재교육’, 50쪽

23) ‘교학사’, 40쪽

24) 이근우, 2009, 「지역간 인구 이동과 전쟁」,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49~53쪽; 신성근, 2010, 「10세기 이전 동아시아의 기후 변화와 인구 이동」,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48집 참조.

25) ‘천재교육’, 90쪽

26) 비교적 구독이 용이한 대표적 연구 성과로 유소민 지음, 박기수·차경애 옮김, 2005, 『기후의 반역 - 기후를 통해 본 중국의 흥망사』, 성균관대학교 출판사; 토마스 바필드 저, 윤영인 역, 2009, 『위태로운 변경 - 기원전 221년에서 기원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동북아역사재단 등을 참고할 만하다.

2_ 지역적 다양성과 지역세계의 특성에 대한 기술

다음으로 동아시아의 지역적 다양성을 전제한 지역세계의 특성에 대한 파악과 관련된 문제다. 우선 (1)–㉠ ‘선사문화’에 대한 기술 부분에서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대표적인 유물, 주로 신석기시대 토기와 여러 유형의 청동기를 제시하여 ‘선사문화의 다양성’을 드러내고자 하였다. 특히 신석기시대 토기에 대해서는 농경과 목축이라는 경제 활동이 자연조건에 따라 지역적 양상을 달리함을 전제하여 그 대표적인 유물로서 열거하고 있다. ‘천재교육’의 경우 “동아시아에서는 신석기시대에 큰 강과 해안가를 중심으로 기원과 계통이 다른 여러 문화가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토기를 중심으로 이 문화를 구분한다”고²⁷⁾ 전제하고는 있지만 황허강 유역, 양쯔강 유역, 랴오허강 유역, 한반도, 일본 열도, 베트남지역 등으로 구분하여 제시한 토기들이 어떤 상이한 내용을 나타내고 있는지, 또한 지역의 다양성이 어떤 양상으로 토기에 반영된 것인지 별다른 언급이 없다. ‘교학사’의 경우는 지역별로 계통이 다른 신석기 문화가 전개되었음을 전제하면서 각 지역의 토기들을 아무런 계통성 없이 제시하고 있다.²⁸⁾ 이 점은 신석기시대의 토기가 “그 형태와 문양 등이 시간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선사시대 각종 문화의 시간적 순서를 밝히는 데 유용할 뿐 아니라, 각 지역의 문화적 특징을 우선적으로 알아내는 데도 매우 효과적이고 또한 매 유적에서 다양으로 출토되기 때문에 오래전부터 각지의 선사문화를 밝히는데 첫 번째의 분석 자료로 이용되어왔다”는²⁹⁾ 토기문화에 대한 일반적인 이해를 전제했다면 기술 내용을 좀 더 구체화시킬 수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선사문화’에 대한 기술 내용은 지역적으로 여러 형태의 토기와 청동기가 제작된 사실 자체는 이해되지만 그러한 다양한 유물이 각 지역의 어떤 특징을 반영한 것인지에 대한 설명이 부족하다. 가령 앞서 (1)–㉠에서 언급한

27) ‘천재교육’, 22쪽

28) ‘교학사’, 16~17쪽

29) 임상택, 2011, 「선사문화－신석기시대의 동아시아」, 『동아시아의 역사 I: 자연환경－국제관계』, 92쪽

다양한 자연 환경(예컨대 유목지역과 농경지역의 구분)과 관련된 측면을 설명한 것인지, 혹은 중국 본토, 만주·한반도, 일본 열도, 베트남 등 각 지역의 특성과 관련된 측면을 파악한 것인지 명확한 기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결국 대표적인 선사 유물을 통해서 동아시아 지역 세계에서 활동한 선사시대인의 다양한 생활상을 파악하기란 쉽지 않다. 이러한 문제점은 ‘대표적인 유물을 중심으로 선사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한다’고 전제하여 ‘선사문화의 다양성’을 파악하는 데 주안점을 둔 성취 기준의 제한적 규정에서도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2)-㉔ ‘유교와 율령에 기반한 통치 체제’에 대한 기술에서도 확인된다. 가령 중원 지역에서 만들어진 법률 체계가 동아시아 주변 지역에 전파되었고 각 지역에서 이를 선별적으로 수용하여 ‘지역적 특징’을 나타냈다고 전제하고 있지만 각 지역에서 확인되는 선별의 기준이나 선별된 내용으로 규정되는 사회의 특질은 무엇인지 명확히 언급되어 있지 않다. 당초 중원 왕조에서 일찍이 율령이 출현하게 된 이유가 넓은 지역에 흩어져 사는 많은 사람과 다양한 지역 사회를 통합적으로 다스리기 위해 ‘전국에 걸쳐 적용되는 획일적인 통치 기준’이³⁰⁾ 필요했기 때문이기는 하겠으나 이러한 율령의 수요와 성격이 한대 이후 수·당대까지 그대로 적용되는 것인지 혹은 어떤 변화가 있는지 주의하고 있지 않다.³¹⁾ 따라서 율령과 유교가 한반도와 일본 열도에서 선별적으로 수용되는 과정을 통하여 율령의 어떠한 측면이 부각되었고 그것이 해당 지역사회의 어떤 특질을 반영하고 있는지 명확한 기술이 이루어지지 못하였

30) ‘천재교육’, 70쪽. 이와 관련하여 “유교와 율령이 중원에서 먼저 출현한 것은 넓은 평원에 과다한 인구가 거주하면서 야기하는 많은 문제들, 즉 내란 같은 난세를 극복해야 하는 현실의 절박한 필요에 따른” 것이라는 지적도 참고할 만하다. 김택민, 2009, 「율령과 유교에 기반한 통치체제」,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74쪽 참조.

31) 이와 관련하여 위진남북조와 수·당의 시대적 추이를 전제하여 율령, 통치체제의 변화를 비교하고 이를 삼국 및 통일신라, 고대 일본의 율령수용 과정과 이에 따른 통치체제의 내용에 적용한 전덕재, 2011, 「율령과 유교에 기반한 통치체제」, 『동아시아의 역사 I: 자연환경 - 국제관계』, 308~373쪽은 참고할 만하다.

다. ‘교학사’의 경우 만주와 한반도에 있던 삼국이 국가 제도를 정비하고 왕권을 강화하는 과정에서 울령에 의한 제도를 만들었으며 일본이 울령체제를 수용하여 천황의 위상을 높이고 토지와 백성에 대한 지배력을 강화했다고³²⁾ 지적하는 한편 수·당대 통치제도를 각국이 수용한 개별적인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 각국이 수용한 울령의 특징에 대해서는 다만 베트남의 경우 “당의 제도를 많이 받아들였으나, 고유의 관습법도 유지하였다”는 점을 언급하였다.³³⁾ 이에 비하여 ‘천재교육’의 경우 중원 이외의 지역에서는 수·당의 울령 체제가 전면적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음을 전제하여, 나라마다 통치의 형태, 신분 질서, 백성의 권리 및 이와 관련된 재산권, 남녀의 지위, 결혼 풍습 등이 수·당과 크게 달랐기 때문이라고 그 이유를 밝히고 있다.³⁴⁾ 이에 따라 “수·당의 울령은 한반도와 일본, 베트남 등에서 백성을 다스리기 위한 실제 규범의 측면보다 정부 조직의 측면에 좀 더 영향을 끼쳤고, 정부 조직의 측면에서 받아들여질 때도 각국의 독자적인 전통에 따라 상당히 변형된 형태로 받아들여졌다”³⁵⁾고 결론하고 있다. 그런데 각국에 존재했던 실제의 규범이나 독자적 전통이 어떤 성격인지, 또한 이들이 울령과 더불어 유교를 수용하는 과정에서 어떤 작용을 하였는지 종합적으로 판단할 근거가 명확치 않다. 더욱이 동아시아에서 유교와 ‘울령’의 법률 체계에 기초한 통치제도가 수용·공유되었다면 이들이 공통적으로 지향했던 사회의 모습은 무엇이었는지에 대한 언급도 필요할 것이다. 이러한 문제점 역시 “울령과 유교에 기반한 통치체제가 수립되고, 이를 각국이 수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고 제시하여 울령이 각국에 수용되는 과정으로 기술

32) ‘교학사’, 59쪽

33) ‘교학사’, 61쪽

34) ‘천재교육’, 74쪽. 나라마다의 구체적인 특색으로 신라의 경우 관위나 관직에서 골품제적 고유성을 유지했던 측면, 고려의 경우 왕실 내에서는 근친혼이 일반적이었기 때문에 동성불혼을 위주로 하는 중국적인 친족체계는 수용하기 어려웠던 측면, 일본의 경우 호족의 세력이 상대적으로 강했던 일본 사회에서 울령의 적용에 한계가 있던 측면, 또한 근친혼을 인정하고 모계를 중시하는 친족제의 영향으로 유교적 예제를 전면적으로 수용하지 않았던 측면, 베트남의 경우 부부가 거의 동등한 재산권을 가지고 있어서 부인이 이혼을 요구할 수도 있었던 측면 등을 지적하였다.

35) ‘천재교육’, 75쪽

내용을 제한한 성취기준의 규정에서 기인한 측면도 부정할 수 없다.

또한 (3)-㉔ ‘성리학’의 경우에는, ‘성리학의 성격’과 ‘지역별 특징의 비교’를 기술하도록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성리학의 성격과 관련하여 두 교과서 모두 ‘성리학의 성립과 발전’이나³⁶⁾ ‘성리학의 성립과 특징’이라는³⁷⁾ 소단원을 설정하여 성리학의 원리에 대하여 비교적 구체적으로 기술한 반면 송대 이후 원대, 명대를 통하여 이러한 원리가 정치·사회적으로 어떻게 기능했는지 명시하고 있지 않다.³⁸⁾ 때문에 주변 나라들에 — 한반도, 일본 열도, 베트남 등지 — 확산, 수용된 성리학이 어떤 시기, 어떤 성향을 담고 있는지 구분하기 곤란하며 그 원리의 구체적 내용이나 변화를 파악하는 데도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 이와 더불어 성리학의 지역적 특징에 대하여 두 교과서에서는 “명·청이나 조선에는 큰 영향을 끼쳤으나 일본과 베트남에서는 그 영향이 제한적이었다”고³⁹⁾ 평가하거나 “일본 성리학이 사회에 끼친 영향력이나 학자의 지위는 조선에 미치지 못하였다”⁴⁰⁾고 지적하고 있다. 그런데 이 경우 일본, 베트남에서 성리학의 영향이 제한적이었다는 ‘현상’에 대한 지적과 함께 그 이면에 내재한 일본, 베트남 등지의 사회·문화적 특질에 대한 설명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때문에 성리학(유학)이 지역적으로 상이한 양상으로 전개되는 과정과 그 특징에 대한 접근을 통하여 각 지역 성리학의 성격이나 그에 따라 규정되는 사회의 성격에 대한 파악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상 언급한 몇 가지 주제들은 사실상 전근대시기 동아시아 각국에서 이루어진 문화의 수용과 발전의 양상이 획일적이지 않고 지역적 특성에 따라 다양

36) ‘천재교육’, 120~121쪽

37) ‘교학사’, 101~103쪽. ‘교학사’의 경우 명대 양명학에 대해서는 ‘사회 변화와 새로운 유학의 모색’이라는 별도의 소단원에서 다루고 있다(‘교학사’, 108쪽).

38) 이와 관련하여 강문식, 2011, 「성리학」, 『동아시아의 역사 II: 북방민족-서민문화』, 동북아역사재단, 137~197쪽에서 송대 성리학의 성립 과정 이후를 원대 성리학의 ‘관학화’, 명대 성리학의 ‘교학화’와 양명학의 등장으로 구분하여 서술한 점은 각 왕조에서 유학의 기능을 파악하고자 할 때 참고할 만한 기술 방법이라 하겠다.

39) ‘천재교육’, 124쪽

40) ‘교학사’, 105쪽

하게 이루어졌음을 확인하는 데 유용한 근거임은 분명하다. 그러나 단순히 상이한 현상을 부각시키는 것만으로 각국이 ‘독자의 체제와 전통’을 형성해갔다⁴¹⁾ 결론을 도출하기도 곤란한데다 그러한 현상 이면에 내재한 각 지역의 사회적 특질을 간과하게 될 우려도 있다.

3_ 중국중심주의적 입장의 서술

다음으로 동아시아 각 시대의 주요 특징을 중국중심주의적 입장에서 접근한 측면이다. 현행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전근대사 부분은 중원 왕조의 비중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매우 높게 다루어지고 있다. 이는 물론 동아시아 전근대사가 문화적 선진지역인 중원 왕조와 주변지역 간의 상호 관계를 전제하여 전개되었음을 부정할 수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일부 성취기준의 경우 중원 왕조와 관련된 양상을 지나치게 부각시킨 내용들을 확인할 수 있다.

우선 (1)-㉔에서는 “정치적 갈등과 통합을 통해 국가가 성립,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한다”는 성취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이에 대하여 ‘국가의 성립’과 관련하여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대체로 기원 전후를 기준으로 삼아 그때까지는 국가의 실체를 갖추었던 ‘홍노, 진·한, 고조선, 남월 등’을 다루도록 제안하고 있다.⁴²⁾ 그런데 두 교과서 모두 중원 농경국가(진·한), 유목 국가(홍노), 고조선과 남월 등으로 구분하여 각각의 건국 과정과 상호 교류 내용을 단순 나열

41) 「7차 교육과정」의 ‘4단원 국제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의 4번째 성취기준은 ‘각국이 독자적 체제와 전통을 형성해가는 모습을 비교한다’고 제시되어 있는데, 그 기술 내용에 성리학적 이데올로기에 의한 지배의 연장선상에서 청의 공양학, 조선의 실학, 에도막부의 국학 등을 서술토록 권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서는 현명철, 2009, 「각국의 독자적 전통」,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205쪽; 김문식, 2011, 「서민문화, 각국의 독자적 전통」, 『동아시아의 역사 II: 북방민족-서민문화』, 399~424쪽 등을 참조.

42) 「교육과정 해설서」, 349쪽. 다만 이들 간에도 ‘생산력의 수준과 인구의 규모 등으로 인해 각 지역별로 국가 성립의 시기가 크게 다르고 성립된 국가의 수준도 현격하게 차이가 있다는 점을 전제하고 있다.

식으로 기술하였지만⁴³⁾ 이들 국가들에게서 공유될 수 있는 고대(초기) 국가 성립의 공통된 조건이 무엇인지 분명히 기술되지 못하고 있다. 이른바 고대 국가의 기본적 지표라 할 수 있는 청동기, 도시, 문자 등을 기준으로 국가 성립을 이해하는 방식에 근거한 것인지, 아니면 국가 운영과 관련된 왕권의 성격, 강제력으로서의 군대, 사회 조직 등을 통하여 파악한 것인지 전제되어 있지 않다.⁴⁴⁾ 이는 ‘국가의 성립’을 시기적으로 기원전후까지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기술 내용이 주로 중국의 진·한 제국의 성립과 흉노 제국의 형성에 집중된 반면, 고조선을 제외하고는 고구려·백제·신라 삼국의 고대 국가 성립 과정을 언급하기도 적절치 않은데다 일본의 경우는 시기적으로 이에 전혀 부합되지 않는 사정을 반영하게 된 결과이기도 하다. 따라서 대체로 기원전후 시기까지 ‘국가의 성립’ 문제는 중원 농경 국가가 춘추·전국시대를 거쳐 진·한제국을 형성하는 과정과 유목 국가로 흉노 제국이 흥기하는 내용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3세기 이전 동아시아 여러 지역의 정치 권력은 역사적 경험을 공유하는 하나의 단위로서 파악하기 곤란하며, 이런 까닭에 동아시아에서 국가가 성립되는 단계는 시기적으로 3세기까지 초기 국가에서 출발하여 점차 고대 국가로 변화하는 과정을 통하여 파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은⁴⁵⁾ 경청할 만하다.

(2)-㉔에서는 “동아시아 외교형식인 조공·책봉 관계를 각국의 상호 필요

43) ‘천제교육’, 36~41쪽; ‘교회사’, 28~35 쪽

44) 김병준·조법중, 2009, 「국가의 성립과 발전」,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32쪽. 이와 관련하여 청동기, 도시, 문자 등의 요소가 선사문화에서 문명의 단계로 접어드는 과정을 설명하는 결정적 요소임에는 틀림이 없지만 이들 요소가 ‘국가’의 성립을 대변하는 것은 아니며, 최소한 씨족 질서의 해체와 군주권의 확립, 영역국가, 그리고 관료, 법률, 지방행정의 요소 등이 확인되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김병준, 2011, 「국가의 성립과 발전」, 『동아시아의 역사 I: 자연환경-국제관계』, 176쪽 참조.

45) 김병준, 2011, 173~176쪽. 이 경우 초기 국가는 원시 국가라고도 하며, 기본적으로 초기 문명 지표를 갖춘 단계로서 제사 권력이 중심이 되는 神政 국가를 지칭하는데 비하여 고대국가는 초기 국가 단계에서 神政의 성격이 줄어들고 영토의 확대 및 지배 시스템의 확립 과정이 확인되는 단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는 성취기준을 제시하고 있다. 즉 동아시아의 외교 형식을 ‘조공·책봉 관계’로 제한하여 각국의 상호 관계를 검토하도록 제안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조공·책봉 관계에 대해서 다음과 같은 지적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 책봉·조공 문제는 그동안 정치적 차원에서 동아시아를 묶는 연결고리로 주목되어온 주제다. 「교육과정」에서도 “동아시아 외교형식인 조공·책봉 관계를 각국의 상호 필요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고 밝히고 있다. 하지만 각국의 상호 필요라는 관점이라면 굳이 조공·책봉이라는 주제를 설정할 이유도 없으며, 국제적 역관계론(力關係論)으로 설명하면 충분하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책봉·조공을 통하여 고대 동아시아 국제질서 혹은 국제관계를 파악하려고 할 때에는 단순히 국가 간의 문제만이 아니라, 중국 중심의 책봉·조공 체계가 갖는 보편적 질서의 존재 여부와 성격, 그리고 실제로 전개된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와 책봉·조공 체제상에 표현된 국제 질서의 연관 관계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⁴⁶⁾

즉 고대 동아시아의 국제 관계 혹은 외교 형식을 조공·책봉 관계로 제한할 경우, 이것은 이미 중국 중심의 외교 관계를 전제한 것으로 동아시아 각국 상호 간의 외교 관계는 부수적인 요소로 파악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실제로 두 교과서는 모두 중원 왕조의 교체(한대-남북조시대-수·당대)에 따른 중국과 주변 지역 간의 외교 관계의 변화를 중심으로 기술하고 있다.⁴⁷⁾ 이와 관련하여 고대 동아시아의 역학관계를 조공·책봉 관계로 전제하여 중원과의 관계에 따라 군사·경제 관계가 위주인 지역(몽골·서역·티베트·만주 일부)과 문화 교류의 비중이 높은 지역(한반도·일본 열도·만주 일부·베트남)으로 구분해보려는 시도도 있다.⁴⁸⁾ 그러나 이 경우도 고대 동아시아의 역학관계

46) 임기환, 2011, 「고대 동아시아 국제 관계와 조공·책봉」, 『동아시아의 역사 I: 자연환경-국제관계』, 378쪽

47) '천재교육', 78~81쪽; '교학사', 66~71쪽

48) 김택민, 2010; 김택민, 2011, 「고대 동아시아의 구조」, 김준엽선생기념서편찬위원회

를 중원과 주변 지역으로 구분함으로써 중국 중심주의적 관점을 극복했다고 보기 어렵다. 물론 중국을 제외한 국가 상호 간의 외교나 교류가 완전히 배제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천제교육’의 경우 “동아시아 각국은 자기 나라의 우월성을 과시하기 위해 주변 국가와 관계를 맺을 때 조공과 책봉의 형식을 활용하기도 하였다”고⁴⁹⁾ 기술한 후에 고구려, 백제, 일본, 발해의 경우를 약술하고 있다. ‘교학사’의 경우는 “동아시아의 여러 나라는 당의 문물을 수용하면서도 자국 중심으로 독자적인 교류 관계를 유지하고자 하였다”고⁵⁰⁾ 전제한 후 고구려, 발해, 일본, 통일신라 등의 상호 문물 교류와 관련된 사례들을 기술하였지만, 이러한 각국 간의 교류가 조공·책봉 체제와 어떤 관계에 있는지 설명하고 있지 않다. 결국 동아시아 각국 간에 이루어진 조공·책봉 관계 이외의, 또는 주변 지역 간의 외교 형식이나 의미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⁵¹⁾

이러한 측면은 10~16세기까지 동아시아 지역세계의 내용을 다룬 ‘(3)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라는 대단원에서도 확인된다. 우선 ㉠의 ‘북방 민족’이란 내용 요소를 다룬 부분은 “북방 민족의 등장과 각국의 대응, 몽골 지배의 영향을 파악한다”는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이에 대하여 「집필 안내서」에서는 10~12세기 또는 13~14세기의 역사를 기술할 때 갈등과 대립을 부추길 수 있는 북방 민족의 침략과 그에 대한 저항이라는 관점을 지양하고 동아시아 나라 사이의 교류와 교역의 확대를 서술의 중심에 둘 것을 제안하고 있다.⁵²⁾ 또한 당시의 동아시아 사정을 기술하면서 비록 명목적일지라도 중국(송) 중심의 일원적 국제 질서를 배제함은 물론 대등한 국가 간의 다원적 질서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이루어진 평화적인 교섭(외교)에 중점을 두고 기술할 필요를 강

회편,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아연출판사

49) ‘천제교육’, 81쪽

50) ‘교학사’, 70쪽

51) 이와 관련하여 8세기 동아시아의 국제질서를 조공·책봉 체제의 틀이 아닌 다양한 외교 형식을 전제하여 파악해야 한다는 지적도(이기동 외, 2011, 『8세기 동아시아 역사상』, 동북아역사재단) 참고할 만하다.

52) 이평래, 2009, 「북방민족」,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99쪽

조하고 있다.⁵³⁾ 이러한 전제에서 (3) 단원의 내용 전체를 개관하자면 여러 국가의 병립으로 다원적 국제 관계가 몽골제국의 성립을 계기로 일원적 국제 질서로 재편되는 과정을 거시적 측면에서 파악하는 데 중심이 두어져 있다고⁵⁴⁾ 하겠다. 그런데 이에 대한 교과서의 기술 내용을 보면 ‘천재교육’의 경우 ‘북방 민족의 성장’이라는 중단원에 ‘북방 민족의 성장과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다원화’라는 소단원을 설정했지만 내용은 거란(요), 여진(금)의 등장과 이들의 지배체제(이중지배체제)를 기술하는 것이 중심을 이루고 있으며 이들과 고려의 관계만이 약술되어 있다.⁵⁵⁾ 몽골제국 시대에 대해서도 원의 지배체제와 ‘교역망의 통합’이라고는 하지만 몽골제국하에서의 동서교류가 중점적으로 기술되어 있다.⁵⁶⁾ 한편 ‘교학사’의 경우 ‘북방 민족과 국제 질서의 재편’이라는 중단원에 ‘송의 건국과 북방 민족의 압박’이란 소단원을 설정하여 요, 금이 중원 왕조와 대립하는 정치적 양상을 위주로 기술하고 이어 단지 고려가 ‘실리적 외교’를 펼친 상황만을 설명하였다.⁵⁷⁾ 또한 ‘일원적 국제 질서를 만든 몽골제국’이라는 소단원에서는 ‘천재교육’과 마찬가지로 동서 세계가 몽골제국을 통해 연결되어 유라시아 세계의 동서 문화 교류가 활발히 이루어졌음을 기술하고 있다.⁵⁸⁾

따라서 두 교과서 모두 ‘북방 민족의 성장’ 부분은 주로 중원 지역을 중심으로 오대십국 이후 원대까지 중국사의 변천을 중점적으로 기술하거나 중국 왕

53) 이평래, 2009, 102쪽

54) 「교육과정 해설서」, 351쪽

55) ‘천재교육’, 90~91쪽

56) ‘천재교육’, 92~95쪽

57) ‘교학사’, 76~78쪽

58) ‘교학사’, 80~82쪽. 더욱이 ‘교학사’의 경우는 (3)단원의 제1 중단원인 ‘북방민족과 국제질서의 재편’에서 1. ‘송의 건국과 북방 민족의 압박’, 2. ‘일원적 국제 질서를 만든 몽골 제국’에 이어 3번째 소단원으로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재편’(83~85쪽)이라고 하여 명의 등장, 조선의 건국, 일본 무로마치 막부의 출현 등 정치 세력의 변화와 그에 따른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재편 과정을 기술하고 있다. 이에 비하여 ‘천재교육’은 ‘원의 쇠퇴 이후 동아시아 세계’라는 특집란을 통해 이들 내용을 기술하고 있는데, 이는 (3)단원 첫번째 중단원의 내용을 ‘북방 민족의 성장’으로 한정했기 때문에 생긴 결과로 생각된다.

조의 변화에 따른 주변국의 정세 변화를 다루는 정도에 그치고 있다. 즉 북방 민족의 성장에 따라 이루어지는 다원적 국제 관계의 내용, 가령 형식이나 의례에서도 기존의 조공체제와 근본적으로 다른 외교 관계나⁵⁹⁾ 이를 전제한 주변 각국 간의 국제 관계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술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⁶⁰⁾ 또한 원을 차카타이 칸국, 킵차크 칸국, 일 칸국 등과 함께 몽골제국의 분열된 '4개의 칸국' 가운데 하나로 규정하기보다 일종의 느슨한 울루스들의 연맹으로 몽골제국 전체를 통합적으로 파악하려는 최근의 경향과 그에 따른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양상 변화에 대해서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⁶¹⁾

다음으로 (3) 단원의 두 번째 내용 요소인 ㉠ '농업 생산력의 발전과 소농 경영'에 대한 부분으로 "농업생산력이 발전하고 소농 경영이 정착되는 모습을 이해한다"는 성취기준이 제시되어 있다. 그런데 이 가운데 '소농 경영'에 대해서 '천재교육'의 경우 "5인 정도의 가족에 2, 3인 정도의 노동력을 가진 농가에 맡겨 농사짓게 하는" 형태로 정의하면서⁶²⁾ 송대 이후 농업 생산력이 발달하자 강남 지방을 중심으로 소농 경영이 보편화하였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에 비해 '교학사'의 경우 "소농 경영은 농민이 자기 토지나 소작지를 가족의 노동력만으로 경작하는 방식"이라 규정하고⁶³⁾ 명·청대 생산 관계의 기초가 되었던 지주 전호제가 확대되는 가운데 농업 생산력의 발전으로 소농 경영 형태가 나타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처럼 '소농 경영'이란 용어 자체의 정의도 상이할 뿐

59) 당시의 동아시아 국제 관계에 대하여 북방의 정복왕조와 남방의 한족왕조가 동등하게 인식되었고 2명, 때로는 3명의天子가 동시에 존재하며 한족왕조를 천하의 중심으로 설정한 이전의 허구적 논리는 더 이상 설득력을 갖지 못하게 되었다는 지적은(피터 윤, 2005, 「몽골 이전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 관계」, 『만주연구』 제3집, 49쪽) 주목된다.

60) 북방 민족(특히 요, 금)과 주변국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최근의 연구 경향을 종합하여 정리한 임상선, 2011, 「북방 민족의 발전과 정복왕조」, 『동아시아의 역사 II: 북방민족-서민문화』, 13~28쪽을 참고할 만하다.

61) 이에 대해서는 김호동, 2010,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125~129쪽; 이익주, 2010, 「세계질서와 고려-몽골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165쪽 등을 참조.

62) '천재교육', 102쪽

63) '교학사', 89쪽

아니라 그 적용 시기도 편차가 큰 것에 대하여 다음의 지적은 주의할 만하다.

…… 소농사회론은 아직 가설 수준에 머물러 있다. 무엇보다도 소농사회라는 개념이 체제개념으로 정립되지 못하였고 이 가설을 뒷받침할 실증적 작업이 세세하게 수행되지 못하였기 때문이다. 어느 시기에나 소농민의 경영은 존재하였지만, 소농민의 개념을 어떻게 정의할 것인지, 그리고 소농민 경영이 어느 시기에 지배적 경영형태로 성립하고 존재, 붕괴하였는지, 그리고 그 요인은 무엇인지 등에 관하여는 의견이 일치하지 않고 있다. 더욱이 소농민 경영의 대극에서 성장한 지주제와의 관계를 고려하면 문제는 더욱 복잡해진다.⁶⁴⁾

결국 송대 이후 중국의 경제적 변화상을 설명하기 위한 필요에 따라 제기되었던 용어이지만 아직까지 정의 자체에도 논란이 많은 ‘소농 경영’을 고려, 조선 전기의 농업 경영이나 일본의 장원공령제와 領國경제체제에 무리하여 적용하여 기술하면서 나타난 결과라 하겠다. 특히 일본의 소농 경영이 17세기 일본 사회의 급속한 인구 증가를 가져온 계기로 인식되면서 그 이후에야 일반화되었음이 지적되고 있다.⁶⁵⁾ 이 때문에 10~16세기까지의 농업 경영 방식을 다루면서 주로 토지제도와 그 경영 방식과 더불어 농민의 생활에 천착하여 서술하는 형식도⁶⁶⁾ 참고할 만하다.

이러한 양상은 (4) 단원 ㉔의 “은 유통의 활성화와 동아시아 교역망의 발달, 서구와의 교류를 이해한다”는 성취기준에 제시된 ‘은 유통의 활성화’ 문제에서도 나타난다. 이에 대하여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국제 무역의 결제 수단으로 은이 중심 화폐로 등장하여 은 유통이 활성화된 사실’을 이해하고 이를 전제로 ‘중국과 일본, 중국과 유럽 사이의 교역망이 형성되고 동아시아 각국

64) 안병우, 2009,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소농경영」,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127쪽

65) 고동환, 2011, 「인구 증가와 사회 경제 - 17~19세기 동아시아의 인구 증가와 도시의 성장」, 『동아시아의 역사 II: 북방민족 - 서민문화』, 345~347쪽

66) 조복현, 2011, 「10~16세기 동아시아 사회에서 농업생산량의 발전과 소농경제」, 『동아시아의 역사 II: 북방민족 - 서민문화』, 66~83쪽

사이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교역이 이루어졌음을 살펴보도록 제안하고 있다.⁶⁷⁾ 이에 따라 두 교과서 모두 명·청시대에 중국 사회에서 은을 중심으로 한 경제 체제가 이루어진 사실과 함께 중국을 중심으로 한 동아시아 국가 간의 결계 수단으로써 은의 기능에 대하여 증점적으로 기술하고 있다.⁶⁸⁾ 그런데 정작 이러한 은과 관련된 동아시아 역내 교역망의 형성에 따라 동아시아 각국의 경제적 사정은 어떠한 변화를 보였고 어떠한 영향을 받았는지, 그리고 그것이 각국의 경제 체제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등에 대하여 동아시아 각국의 상황을 균형 있게 다루고 있지 못하다.⁶⁹⁾

결국 ‘조공·책봉체제’나 ‘북방 민족의 성장’, ‘소농 경영’, ‘은 유통의 활성화’ 등의 내용 요소들은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주로 중국사의 시대적 변화를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거나 중국의 시대상을 파악하는 데 유용한 개념을 전제하여 이와 관련된 동아시아 각국의 관계 혹은 대응을 부수적으로 기술하는 방식으로 교과서에 구현되고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외교 형식인 조공·책봉 관계’라는 한정적 의미보다는 조공·책봉 관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다양한 외교 형식이라는 포괄적인 의미로 파악하거나, 단순히 ‘북방 민족의 등장과 각국의 대응’을 이해하기보다는 동아시아 국제 관계의 다원화 과정을 이해하는 단서로 유목 민족의 성장과 각국의 대응 관계를 이해하도록 유도해야 할 것이다. 또한 경제적 양상의 한 요인으로 ‘소농 경영’에 대한 이해보다 지배계층의 등장에 배경이 되는 사회·경제적 요인의 하나로써 포괄적으로 기술하거나, ‘은 유통의 활성화’ 상황을 직접적으로 파악하기보다 은을 매개로 서구와 교류가 활성화되었던 상황을 기술하도록 유도할 필요가 있다.

67) 「교육과정 해설서」, 353쪽

68) ‘천제교육’, 142~147쪽; ‘교학사’, 122~127쪽

69) ‘은 유통과 교역망’에 대한 동아시아 각국 상황의 기술과 관련해서는 조영현, 2013, 「〈동아시아사〉교과서의 ‘은 유통과 교역망’-주제의 설정과 그 의미」, 『동북아역사논총』 39, 169~174쪽의 제언 부분을 참고할 만하다.

Ⅲ.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동아시아사〉 기술 방안

전술한 대로 현행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검정 작업 중이던 2011년에 재차 교육과정 개정이 이루어졌고(「2011년 개정 교육과정」), 이를 근거로 〈동아시아사〉에 대한 「집필 기준」이 발표되었다. 이에 2012년 새로운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제작되어 2013년 현재 교과서 검정 과정을 거치고 있다. 이하에서는 「2007년 교육과정」과 비교하여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은 어떠한 측면에서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 있는지 검토하고, 새로운 교과서의 집필에 어떤 부분을 유념해야 할지에 대하여 살펴보겠다.⁷⁰⁾

1. 개정 교육과정의 〈동아시아사〉 기술 내용 구성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은 일단 6개 영역(대단원) 구분 및 영역별 시기 구분, 그리고 ‘성취기준에 따른 주제별 기술’이라는 「2007년 교육과정」의 구성 원칙 등을 그대로 연용하였다. 다만 수업 부담의 경감이라는 개정의 취지에 따라 전체 3개의 성취기준을 감축하였다(전근대: (1) 단원 1개, 근현대: (5), (6) 단원 각 1개). 이러한 대전제하에서 영역명(대단원명)과 대단원별 성취기준에 대하여, 그리고 일부 내용요소나 용어(예를 들어 목축 사회, 소농 경영, 근대 국민 국가 등)에 대하여 수정, 보완하면서⁷¹⁾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개선 방향을 제

70) 이하 「2011년 개정 교육과정」에 대한 설명은 국사편찬위원회(2011. 6. 30), 『2011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 국사편찬위원회와 동아시아교육과정시안개발정책위원회(2011. 8. 26), 『동아시아개정시안연구결과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내부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다.

71) 「교육과정 해설서」에서는 〈동아시아사〉 과목의 성격에 대해 고등학교 선택 중심 교육과정으로, 국민 공통 기본 교육과정의 역사 영역에서 습득한 개괄적이고 기초적인 역사 이해와 인식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의 역사를 심층적으로 이해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그 내용 선정의 기준에는 고등학생의 이해 수준을 고려하여 너무 지나치거나 광범위한 주제는 배제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교육과정 해설서」, 343·346쪽).

시하고 있다(이하 <표 1> 참조).

우선 영역명(대단원명)의 경우, (1)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이 '국가의 형성'으로, (2)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가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으로, (3)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가 '국제 관계 변화와 지배층의 재편'으로, (4) '국제 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이 '동아시아 사회의 지속과 변화'로 조정되었다. 종래 '인구 이동과 문화 교류',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등은 특정 주제이면서도 사실상 그 영역명에 상응하는 시대상을 파악하는 데 적합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가급적 시대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대안이 필요하였다. 즉 「2007년 교육과정」을 보면 전체 대단원이 (1)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2) '인구이동과 문화교류', (3)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4) '국제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5) '국민국가의 모색', (6) '오늘날의 동아시아' 등 6개로 나뉘어져 있는데, 그 가운데 (1)과 (5), (6)은 시대적 개념이 포괄되어 있는 것에 비하여⁷²⁾ (2), (3), (4)만은 해당시기에서 다루는 내용(주제)을 표출하고 있다. 그런데 (2) '인구이동과 문화교류'에 포함된 내용요소(중단원)에는 '지역간 인구이동과 전쟁', '동아시아 국제관계'를, (3) '생산력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에는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소농경영'과 '문신과 무인'을, (4) '국제 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에는 '17세기 전후 동아시아의 전쟁'과 '서민문화, 각국의 독자적 전통' 등을 포괄하고 있다. 따라서 대단원(영역) 명칭이 그 단원에 포함된 4개의 내용요소 가운데 2개를 축약하여 드러낸 것에 해당하여 해당시기의 시대상을 대변하거나 특징지을 수 있는 용어(개념)인지 명확하지 않다. 물론 「교육과정 해설서」에 제시된 내용 조직의 원리 가운데 "대단원명은 '고대, 중세', '형성, 발전' 등과 같은 시대구분적 성격이 강한 용어를 피하고 해당시기에서 다룰 내용을 함축하는 용어를 사용하도록 제안하고 있는데"⁷³⁾ 이는 지역마다 사회 발전의 정도가 다른 점이 감안되었기 때문이기도 할 것이다. 그

72) 역사의 시작=고대[上古], 국민국가=근대, 오늘날=현대 등의 시간적 개념을 내포하고 있다고 파악할 수 있다.

73) 「교육과정 해설서」, 347쪽

럼에도 전술했듯이 (4) 대단원의 제목을 ‘독자적 전통의 형성’이라 한 것은 근대 국가 이전의 상황을 전제해서 서양 제국주의 세력의 침략 이전 동아시아 사회를 상정하여 설정된 개념이라는 개연성을 부정하기 어렵다. 이와 관련하여 반드시 시대구분적 발상이라 한정하지 않는다면 대단원 명칭 자체에 시대적 흐름에 따른 계기적 변화를 인식할 수 있는 용어(개념)의 설정이 무의하다고만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 ‘동아시아 사회의 지속과 변화’ 등 해당 시기의 역사상을 파악할 수 있는 주제이면서도 전체적으로 시대의 흐름을 감안한 단원명이 제시되었다. 다만 ‘근대 국가 수립의 모색’ 이전, 즉 근대 이전의 동아시아사를 파악하는데, ‘성립’→‘지속과 변화’라는 역사적 계기성을 부각시킨 단원명과 함께, ‘국가의 형성’, ‘국제 관계의 변화와 지배층의 재편’처럼 주제사를 도출한 영역명이 공존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다음으로 영역별 성취기준(중단원)의 경우는 제시된 성취기준들이 가급적 한 대단원 안에서 분야별로(정치, 대외관계, 사회·경제, 사상·학술, 문화교류 등) 일정한 체계를 이룰 수 있도록 재조정하였고, 첫 번째 중단원에는 해당 시기의 정치적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주제사를 제시하고 있다.

(1) 단원의 경우,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성취기준이 되는 내용요소가 ‘동아시아의 자연조건’과 ‘농업과 목축’(생업)의 2개 부분으로 구분되어 있었는데(㉠과 ㉡), 농경과 목축이 특별히 동아시아 사회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결정적 요인인지에 대한 의문, ‘농경과 목축의 시작’이 신석기시대상과 겹친다는 지적 등에 근거하여,⁷⁴⁾ 2개 기준을 (1) 단원의 ①로 합쳐서 제시하고 있다.

(2) 단원은 성취기준의 분야별 체계성을 고려하여 재배치하고 있는데, ① ‘인

74) 실제로 「교육과정 해설서」 348쪽에서는 “성취기준의 배치 순서에 시간적 선후 관계는 없지만 성취기준 ㉡은 ㉠과 ㉡에 비해 늦은 시기에 해당된다”고 명시하고 “동아시아사 전개의 배경이 되는 자연환경, 다양한 선사문화, 농경과 목축으로 대별되는 생산경제, 국가의 성립과 발전 등을 차례대로 다루도록” 제안하고 있다. 결국 ‘농경과 목축’은 국가 성립 이전, 즉 고대 문명 단계의 생업에 국한하여 기술하게 되어 있다.

구 이동과 전쟁'에 대해서는 현행 두 교과서에서 실제로 지엽적인 인구 이동의 사례만을 제시하는 경우도 있어, '여러 국가와 정치 집단이 분열·통합되는 과정'과 관련하여 기술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② 대외관계와 관련된 내용을 「2007년 교육과정」에서는 '동아시아 외교 형식인 조공·책봉 관계'로 한정하였기 때문에 여타의 외교 관계를 포괄할 수 없었다. 이에 '조공·책봉 관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다양한 외교 형식'으로 조정하여 동아시아 지역세계의 외교 관계를 다각적으로 기술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③ '울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제'의 수용에 대해서는 단순히 '수용하는 과정'에 그치지 않고 '수용한 양상'을 비교하도록 유도하고 있다. ④ 불교에 대해서도 종래 불교의 '전파 양상과 그 영향'을 파악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나치게 교리나 종파 등 종교적 측면에 대한 기술에 치중되었기 때문에 불교의 사회, 정치적 역할을 살펴볼 수 있도록 '그 역할과 영향'을 탐구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3) 단원은 영역 내의 성취기준 간 연계성이나 내용요소에 대한 개념 규정 상에 모호한 측면이 확인되어 이에 대한 조정이 요구되었다. 북방 민족, 소농 경영 등의 내용요소에 대해서, 우선 '북방 민족'이란 용어가 지나치게 중국중심적인 사고를 반영하고 있거나 '북방 민족의 등장'에 초점을 맞추다 보니 거란, 여진, 탕구트, 몽골 등 각 유목민족 왕조의 성장과 지배 체제에 국한된 기술이 이루어졌다. 이에 ①에서는 '동아시아 국제 관계가 다원화되었음'이라는 조건을 통하여 유목 민족의 성장을 파악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또 '소농 경영'과 관련하여 해당시기의 고려·조선과 일본의 경제 상황에 직접 적용하는 데는 여러 논란점이 있다거나 일본의 '장원공령제'에 대한 기술에 사실적 오류도 확인되는 등 고등학교 교육과정에서 다루는 것이 적절한 것인지에 대한 반론도 제기되었다. 물론 '생산력의 발전'이라는 내용요소는 새로운 지배층인 '문신과 무인'이 등장하는 배경으로 당연히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문신과 무인의 성격을 비교하여 그 차이점을 기술한 부분에는 각 지역 사회의 특징적 성격에 대한 내용이 구체적으로 기술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이유에서 「2007년 교육과정」 중 (3) 단원의 ㉠과 ㉡으로 나누어 제시한 성취기준을 하나로 합쳐서 (3) 단원의 ②로 제시하고 있다. 또한 ③ '성리학'에 대하여 「2007년 교육과정」

에서는 ‘성리학의 성격’과 ‘지역별 특징’을 비교하도록 제시하였는데 ‘천재교육’, ‘교학사’ 모두 성리학의 철학 체계에 대해서는 지나치게 천착한 반면 성리학의 사회적 의미는 상대적으로 소홀히 다루고 있다. 이러한 이유에서 성리학이 ‘정치 질서와 사회 규범, 일상 생활에 미친 영향’에 주목하도록 조정하고 있다. ④는 몽골제국의 형성으로 유라시아 세계에서 상호 직접적인 교류가 이루어졌다는 측면과 이후 명 중기까지 동아시아 지역 내·외의 교류 양상이 다음 단원인 (4)의 17세기 동아시아 사회의 변화를 이해하는 데 전제가 된다는 의미에서 새로운 성취 기준을 추가하고 있다.

(4) 단원에서는 ‘은 유통의 활성화’ 문제를 어떻게 파악할 것인가가 가장 논란이 된다. 사실 16~19세기를 대상으로 할 때, 은 유통망의 확립은 중국의 경우 국내 사회·경제적 상황만이 아니라 유럽과의 교역 관계를 이해하는 데도 중요한 내용이지만, 조선과 일본의 경우 은을 매개로 한 ‘동아시아 교역망의 발달’과 긴밀한 관계를 갖고 있었다고 판단하기는 곤란하다. 따라서 17세기를 전후한 동아시아 전쟁 이후 비교적 안정된 사회 상황에서 동아시아의 각 지역 사회에서 경제적·문화적 발전이 이루어졌음을 기술하도록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되었다. 더욱이 ㉔에서 이 시기 각국에서 형성된 ‘독자의 체계와 전통’을 성취기준으로 제시했지만 기술 내용은 사실상 ‘교학사’의 경우, 서민문화의 발달이라는 내용을 언급하거나⁷⁵⁾ ‘천재교육’의 경우 청, 조선, 에도막부, 베트남의 사회상을 개별적으로 소개하는 정도 이상의 내용을 확인하기 어렵다.⁷⁶⁾ 따라서 ①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 ② 사회·경제적 발전상, ③ 학문, 과학기술 및 서민문화 발전으로 정리하고 ④에서 동아시아 지역 내 교역 관계의 변화와 은을 매개로 한 서구와의 교류를 서술하도록 정리하고 있다. 이는 다음 (5) 단원의 제국주의 침략과 개항으로 이어지는 국제 관계의 변화에 대한 전제로써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상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은 「2007년 교육과정」을 근거하여 제작된 ‘천

75) ‘교학사’, 138~143쪽

76) ‘천재교육’, 164~168쪽

재교육'과 '교학사' 두 교과서에 대한 분석과 평가를 바탕으로 개정된 것이다. 각 영역(대단원)의 시기 구분이나 그에 해당하는 영역명(대단원명)이 동아시아 지역세계의 역사를 개관하는 데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면서 적절한 기준으로 설정되었는지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란의 여지가 많다. 더욱이 「2007년 교육과정」의 내용이 비교적 다년간의 준비와 논의를 통하여 작성된 데 비하여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은 상대적으로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지 못하고 진행되었던 사실도 부정할 수 없다. 다만 「2007년 교육과정」에 따른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교육과정상 처음 제작되어 일선 교육 현장에서 사용된 것이기 때문에 「2007년 교육과정」을 마련할 당시 실제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들을 예상할 수 없었다. 따라서 이상의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은 교육과정의 개정이라기보다 '개선'이란 측면에서 보다 유익한 교과서 제작에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2_ 개정 교육과정의 「집필 기준」 검토

한 가지 덧붙여 둘 사실은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의 경우 각 성취기준에 대하여 구체적인 교과서 「집필 기준」을 제시하고 있는데, 전술한 바와 같은 교육과정 개정의 결과로 마련된 성취기준의 기술 방향이나 내용이 「집필 기준」과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새로운 교과서의 집필 과정에서 유의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이것은 교육과정 개정 작업 진행 중에 발생한 일련의 불미스런 사건과 교육과정 개정 담당 기관의 행정적 편의에 따라 교육과정 및 성취기준의 개정 작업을 진행했던 연구위원들과 집필 기준을 마련한 연구위원들이 서로 달랐던 데서 기인한 바이기도 하다. 물론 새로이 마련된 「교과서 집필기준」에 대한 공청회가 이루어지기는 했지만⁷⁷⁾ 여기서도 <동아시아사>에 대해서는

77) '고등학교 역사 교과서 집필기준(안) 공청회'가 2011년 12월 16일(금) 오전 9시 30분 부터 12시 30분까지 평일 오전시간을 할당하여 국사편찬위원회 대강당(국서관 3층)에서 진행되었으나 고등학교 한국사, 세계사, 동아시아사 각 과목당 15분간의 발표와 이에 대한 50분간의 종합 토론이라는 지극히 요식적인 형태로 진행되었기

적절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 따라서 「집필 기준」의 몇 가지 내용들은 새로운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 논의된 바와는 취지를 달리하는 부분들이 발견된다.

예를 들어 (3) '국제 관계의 변화와 지배층의 재편'의 경우는 당초 ① '동아시아 국제 관계가 다원화되었음을 유목 민족의 성장과 각국의 대응 관계를 통하여 이해한다'는 성취기준에 따라 거란, 여진, 탕구트, 몽골 등 유목 민족의 성장에서 명 중기까지의 정치사를 서술하게 하고, ④ '몽골제국 성립 이후에 전개된 동아시아 지역 내·외의 교류에 대해 탐구한다'는 성취기준에 따라 몽골제국부터 명 중기까지 동아시아 지역 내·외의 교류를 다루는 것으로 설정하였다. 그런데 「집필 기준」에서는 ①에서 몽골제국 이전, ④에서 그 이후로 나누어 서술하도록 제시하고 있다. 이럴 경우 ②, ③의 기술 범위가 송대까지로 국한되어 새로운 지배층(조선의 사대부 등)이나 성리학의 영향을 파악하는데 제한이 생긴다. 물론 이것은 일차적으로 개정된 성취기준 ①이 '유목 민족의 성장과 각국의 대응 관계'를 '동아시아 국제 관계가 다원화되었음'을 이해하기 위한 전제로 제시한 데서 기인한 문제이기도 하지만 「집필 기준」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성취기준' 개정 작업의 취지가 제대로 반영되지 못했기 때문이기도 하다. 게다가 「집필 기준」에 "동아시아 각국의 대응 방식과 고려의 능동적 외교 활동을 이해할 수" 있도록 기술할 것을 제시하고 있는데, 이것은 〈동아시아사〉가 지향했던 자국사 중심주의로부터의 탈피라는 점과 일면 배치되는 내용이라 하겠다.

또한 전술한 교육과정 개정 작업에서 논의되었던 내용을 반영하지 못한 사례도 확인된다. 주로 용어 사용면에서 보자면 (3) 단원의 ②에서 "사대부와 무사가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피고, 각 사회의 특징을 비교한다"고 하여 기존에 논란이 되었던 '소농 경영'이란 용어의 사용을 지양하려 했으나, 「집필 기준」에는 "소농 경영이 안정되었음에 유의한다"는 단

때문에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았을 뿐 아니라 그마저도 〈한국사〉의 기술 문제에 대한 논쟁에 할애되어 〈동아시아사〉에 대해서는 거의 논의가 진행되지 않았다.

서를 제시하고 있다. 또한 (4) 단원의 ③에서 “학문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서민문화가 성장하였음을 이해한다”는 성취기준을 제시하여 종래 명확한 개념 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던 ‘독자적 전통의 형성’이란 표현의 사용을 가급적 피해보고자 하였다. 그런데 「집필 기준」에서는 다시 “이 시기 동아시아 각국에서 발전한 새로운 학문과 서민문화의 성장으로 독자적 전통이 형성되었음에” 유의할 것을 제시하고 있다. 덧붙이자면 (1) 단원 ②의 성취기준에 대한 「집필 기준」에 ‘둥베이 지역’이라 지칭한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한 지역 개념으로 마땅히 ‘만주 지역’으로 고쳐야 할 것이다. 이 외에 제시된 성취기준과 「집필 기준」의 내용이 서로 크게 상반된 경우는 특별히 확인되지는 않지만, 그렇다고 「집필 기준」에 교육과정 개정의 취지가 적합하게 반영되었다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부분들이 남아 있다. 이러한 내용들은 실질적인 교과서 집필 과정에서 다시 논의되어야 할 부분이라 생각하며, 차후 이에 대한 재검토가 이루어지기를 바란다.

IV. 맺음말을 대신하여

두 차례의 교육과정 개정을 통하여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에 적합한 기준을 마련하려는 작업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동아시아사> 전체의 구성과 관련하여 특히 전근대 부분을 선사시대~기원전후까지, 기원전후~10세기까지, 10~16세기까지, 16~19세기까지 등 4시기(4단원)로 구분한 구성이 동아시아 지역사만에 국한되지 않고 한국사나 세계사를 학습하는 데 적합, 유용한지에 대해서는 향후 보다 심도 있는 검토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더욱이 동아시아의 전근대사에서 중국중심주의적인 내용 구성이나 기술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나, 한국의 고등학교 교과목으로 교육되는 <동아시아사>에서 한반도와 만주의 전근대시기 역사가 대륙의 주변부 또는 주변사로 인식되지 않도록 기술

하기 위한 방안 등이 본격적으로 모색되어야 할 것이다.

주지하듯이 교육과정에서 제시된 ‘성취 기준’이나 그에 대한 ‘집필 기준’은 실제 교과서의 제작과 내용의 기술 과정에서는 ‘금과옥조’와 같이 여겨지는 요소들이고, 특히 교과서의 사활과 관련된 검정 작업에서는 반드시 엄수해야 할 조건이기 때문에, 그 개정 작업에는 마땅히 충분한 작업 기간과 공정한 작업 절차가 담보되어야 한다. 실제로 국내 학계에서 〈동아시아사〉에 기술된 각 시대의 관련 내용에 대하여 여러 이론이 존재하고, 그럼에도 학문적 검토와 논의를 통해 정합적인 결론을 도출하기에는 아직도 미숙한 단계에 있음을 감안한다면 보다 나은 교과서 제작을 위한 제반 조건들이 마련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무엇보다 절실하다고 하겠다.

〈표 1〉 「2007년 교육과정」과 「2011년 개정 교육과정」의 영역 및 학습내용 성취기준 비교표

2007년 교육과정	2011년 개정 교육과정
(1)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동아시아사 학습의 중요성과 함께 동아시아의 환경이 역사 전개에 미친 영향을 살펴본다. 동아시아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문명이 발생하고 국가가 성립하였음을 이해한다. 시기는 대체로 선사 시대부터 기원 전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1) 국가의 형성 동아시아사 학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동아시아의 자연환경과 사람들의 삶에 대해 파악한다. 동아시아의 여러 지역에서 다양한 신석기 문화가 발달하고 각 지역에서 국가가 성립, 발전해가는 과정을 이해한다. 시기는 대체로 선사 시대부터 기원 전후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 동아시아 지역의 사람들이 어떤 자연 조건과 환경 속에서 살았는지 알아본다.	① 동아시아의 자연환경과 그와 관련된 사람들의 삶을 농경과 유목을 중심으로 파악한다.
㉡ 대표적인 유물을 중심으로 선사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한다.	② 동아시아 신석기 문화의 다양성을 대표적인 유물을 중심으로 설명할 수 있다.
㉢ 농경과 목축의 시작과 발전을 알아보고, 그것이 동아시아 사회에 끼친 영향을 파악한다.	
㉣ 정치적 갈등과 통합을 통해 국가가 성립,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③ 각 지역에서 국가가 성립하고, 상호 교섭을 통해 발전하는 과정을 이해한다.

2007년 교육과정	2011년 개정 교육과정
<p>(2)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p> <p>각 지역에서 여러 국가와 정치 집단이 분열하고 통합되는 과정에서 전쟁과 인구 이동이 일어났음을 이해한다. 조공·책봉 관계의 내용과 의미를 파악하고, 각국이 불교, 율령, 유교를 받아들인 이유와 과정을 이해한다. 대체로 기원 전후부터 10세기까지의 시기를 대상으로 한다.</p>	<p>(2)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p> <p>동아시아 각국은 정치적 갈등과 전쟁을 거듭하는 동안에도 다양한 형태의 국제 관계를 유지했으며, 문화 교류도 활발했음을 이해한다. 각국이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제, 불교 등을 공유하게 되었음을 인식하고 그러한 문화 요소들이 각국에 수용된 양상을 탐구한다. 시기는 대체로 기원 전후부터 10세기까지를 대상으로 한다.</p>
<p>㉠ 지역 간에 인구 이동이 활발히 전개되고, 전쟁이 빈번하게 일어났음을 이해한다.</p>	<p>① 여러 국가와 정치 집단이 분열하고 통합되는 과정을 인구 이동과 전쟁을 중심으로 이해한다.</p>
<p>㉡ 불교가 각 지역에 전파되는 양상과 그 영향을 비교한다.</p>	<p>② 조공·책봉 관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다양한 외교 형식을 각국의 상호 필요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p>
<p>㉢ 율령과 유교에 기반한 통치 체제가 수립되고, 이를 각국이 수용하는 과정을 살펴본다.</p>	<p>③ 율령과 유교에 기초한 통치 체제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를 각국이 수용한 양상을 비교한다.</p>
<p>㉣ 동아시아 외교 형식인 조공·책봉 관계를 각국의 상호 필요라는 관점에서 파악한다.</p>	<p>④ 불교가 각 지역에 전파된 과정을 살펴보고, 그 역할과 영향을 탐구한다.</p>
<p>(3)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p>	<p>(3) 국제 관계 변화와 지배층의 재편</p>
<p>여러 국가가 병립하면서 생긴 국제 관계의 변화와 몽골제국의 성립이 갖는 의미를 파악한다. 문신, 무인 등으로 불리는 새로운 지배층이 형성되고, 소농경영을 중심으로 농업생산력이 발전하며, 새로운 지배 이념으로 성리학이 대두하였음을 이해한다. 시기는 대체로 10~16세기까지를 대상으로 한다.</p>	<p>유목 민족의 성장에 따른 국제 관계의 변화 양상과 몽골제국의 성립이 갖는 의미를 파악한다. 사회경제적 변화를 배경으로 사대부와 무사가 새로운 사회지배층으로 성장하고 성리학이 새로운 지배 이념으로 대두하였음을 이해한다. 시기는 대체로 10~16세기까지를 대상으로 한다.</p>
<p>㉠ 북방 민족의 등장과 각국의 대응, 몽골 지배의 영향을 파악한다.</p>	<p>① 동아시아 국제 관계가 다원화되었음을 유목 민족의 성장과 각국의 대응 관계를 통하여 이해한다.</p>

2007년 교육과정	2011년 개정 교육과정
㉠ 농업 생산력이 발전하고 소농 경영이 정착되는 모습을 이해한다.	② 사대부와 무사가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하게 된 사회경제적 배경을 살피고, 각 사회의 특징을 비교한다.
㉡ 문신과 무인이 새로운 지배층으로 등장한 배경을 알아보고, 그 차이점을 비교한다.	
㉢ 성리학의 성격을 살펴보고 지역별 특징을 비교하여 설명한다.	③ 성리학이 각국의 정치 질서와 사회 규범, 일상생활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④ 몽골제국 성립 이후에 전개된 동아시아 지역 내·외의 교류에 대해 탐구한다.
(4) 국제 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4) 동아시아 사회의 지속과 변화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과 국제 질서의 변화를 이해한다. 동아시아 교역망의 발달과 각국의 사회경제적 변화, 서민문화의 성장에 대해 파악하고, 각국이 독자적 전통을 형성해가는 모습을 이해한다. 시기는 대체로 16~19세기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17세기를 전후한 시기에 동아시아에서 일어난 전쟁이 각국의 정치, 사회와 국제 질서를 크게 변화시켰음을 이해한다. 장기 간의 평화가 지속되는 가운데, 상공업의 발달과 도시화를 배경으로 각국에서 서민문화가 발달하고 서구와의 교류도 진전되었음을 이해한다. 시기는 대체로 16~19세기까지를 대상으로 한다.
㉠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의 전개 양상과 국제 관계에 미친 영향을 알아본다.	① 17세기 전후 동아시아 전쟁이 동아시아 국제 관계와 각국의 정치·사회에 미친 영향을 설명할 수 있다.
㉡ 은 유통의 활성화와 동아시아 교역망의 발달, 서구와의 교류를 이해한다.	② 상공업 발달과 인구 증가, 도시화의 진전에 따른 사회 변동의 양상을 파악한다.
㉢ 인구 증가와 도시화의 촉진, 서민문화의 발달상을 탐구한다.	③ 학문과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서민문화가 성장하였음을 이해한다.
㉣ 각국이 자신의 체제와 전통을 형성해가는 모습을 비교한다.	④ 동아시아 지역 내의 교역 관계가 변화하고, 은을 매개로 서구와 교류하였음을 이해한다.

참고문헌

- 김준엽선생기념서편찬위원회 편, 2011,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아연출판사
- 김호동, 2010, 『몽골제국과 세계사의 탄생』, 돌베개
- 동북아역사재단 편, 2009,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2011, 『동아시아의 역사 I: 자연환경-국제관계』, 동북아역사재단
- 동북아역사재단 엮음, 2011, 『동아시아의 역사 II: 북방민족-서민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손승철 외, 2012, 『동아시아사』, 교학사
- 안병우 외, 2012,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 이기동 외, 2011, 『8세기 동아시아 역사상』, 동북아역사재단
- 이익주 외, 2010,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 유소민 지음, 박기수·차경애 옮김, 2005, 『기후의 반역-기후를 통해 본 중국의 흥망사』, 성균관대학교 출판사
- 국사편찬위원회, 2011, 『2011 역사 교육과정 개정(안) 공청회』, 국사편찬위원회
- 동아시아교육과정시안개발정책위원회, 2011, 『동아시아개정시안연구결과보고서』, 국사편찬위원회(내부자료)
- 마크 엘빈 지음, 정철웅 옮김, 2011, 『코끼리의 후퇴: 3000년에 걸친 장대한 중국 환경사』, 사계절
- 토마스 바필드 저, 윤영인 역, 2009, 『위태로운 변경-기원전 221년에서 기원후 1757년까지의 유목제국과 중원』, 동북아역사재단
- 강문식, 2011, 「성리학」, 『동아시아의 역사 II: 북방민족-서민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고동환, 2011, 「인구 증가와 사회 경제-17~19세기 동아시아의 인구 증가와 도시의 성장」, 『동아시아의 역사 II: 북방민족-서민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김문식, 2011, 「서민문화, 각국의 독자적 전통」, 『동아시아의 역사 II: 북방민족-서민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김병준, 2011, 「국가의 성립과 발전」, 『동아시아의 역사 I: 자연환경-국제관계』, 동북아역사재단
- 김병준·조법중, 2009, 「국가의 성립과 발전」,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

북아역사재단

- 김정배, 2011,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동아시아의 역사 I: 자연환경 - 국제관계』, 동북아역사재단
- 김창석, 2010, 「6~8세기의 동아시아와 한중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 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 김택민, 2009, 「울령과 유교에 기반한 통치체제」,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김택민, 2010, 「7-9세기 동아시아의 경제교류와 문화교류」, 『史叢』 70
- 김택민, 2011, 「고대 동아시아의 구조」, 김준엽선생기념서평찬위원회 편, 『동아시아 국제관계사』, 아연출판사
- 박원호, 2009,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 구성을 위한 再論, 『韓國史學報』 제34호
- 박원호, 2012, 「북방민족 歷史像의 復元을 통한 동아시아사의 새로운 패러다임」, 『歷史教育論集』 제49호
- 신성근, 2010, 「10세기 이전 동아시아의 기후 변화와 인구 이동」, 『동아시아 문화연구』 제48집
- 안병우, 2009, 「농업생산력의 발전과 소농경영」,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이근우, 2009, 「지역간 인구 이동과 전쟁」,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이익주, 2010, 「세계질서와 고려-몽골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 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 이평래, 2009, 「북방민족」,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임기환, 2011, 「고대 동아시아 국제 관계와 조공·책봉」, 『동아시아의 역사 I: 자연환경 - 국제관계』, 동북아역사재단
- 임상선, 2011, 「북방 민족의 발전과 정복왕조」, 『동아시아의 역사 II: 북방민족 - 서민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임상택, 2011, 「선사문화 - 신석기시대의 동아시아」, 『동아시아의 역사 I: 자연환경 - 국제관계』, 동북아역사재단
- 전덕재, 2011, 「울령과 유교에 기반한 통치체제」, 『동아시아의 역사 I: 자연환경 - 국제관계』, 동북아역사재단
- 정연, 2008, 「고등학교 <동아시아사>의 성격과 내용 체계」, 『동북아역사논총』 19

- 정연, 2009, 「동아시아의 자연환경」,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정연, 2011,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한국사 서술 검토-대단원 I, II를 중심으로」, 『역사교육연구』 14
- 조복현, 2011, 「10~16세기 동아시아 사회에서 농업생산량의 발전과 소농경제」, 『동아시아의 역사 II: 북방민족-서민문화』, 동북아역사재단
- 조영현, 2013,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은 유통과 교역망’-주제의 설정과 그 의미」, 『동북아역사논총』 39
- 피터 윤, 2005, 「몽골 이전 동아시아의 다원적 국제 관계」, 『만주연구』 제3집
- 현명철, 2009, 「각국의 독자적 전통」,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ABSTRACT]The Descriptive Contents in 〈East Asian History〉 Textbooks
and Means of Improvement

Park Geunchil

〈East Asian History〉 has been recently selected as an optional history subject of the high school syllabus in the Revised National Curriculum 2007. Therefore, two types of textbooks for 〈East Asian History〉 have been used in high school education from 2012. But the Revised National Curriculum 2007 was revised again in 2011, and the new writing standards in 〈East Asian History〉 textbooks were announced in 2012.

This paper analyzes the organization and the description methodology of pre-modern history in two textbooks for 〈East Asian History〉. The review of the descriptive methodology of 〈East Asian History〉 textbooks progressed in three aspects: first, regarding East Asia's regional boundaries and its natural environments; second, regarding the relationship between East Asia's regional varieties and its characteristic aspects in its regional world; and third, regarding the descriptive methodology of China-centered views in 〈East Asian History〉. Also, this paper will make clear the purport and points about the organization and the alteration of the Revised Curriculum 2011 in 〈East Asian History〉 textbooks.

In academic circles of historical studies, there is no common consensus regarding the descriptive methodology in 〈East Asian History〉 textbooks. For writing better contents for an East Asian history

textbook, continued concern and efforts to develop the circumstances of producing textbooks are required.

Keywords

〈East Asian History〉 textbooks, the Revised National Curriculum 2007, new writing standards in 〈East Asian History〉 (2012), pre-modern history in 〈East Asian Histor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아시아 지역사 서술의 현황과 과제

- 고등학교 『동아시아사』(2012) 근현대 부분을 중심으로 -

유용태 ■ 서울대학교 역사교육과 교수



I. 머리말

제2차세계대전 이후 지금까지 한중일 3국은 자국사·세계사의 2분 체제로 역사교육을 진행해왔다. 그런데 1990년대 이래 탈냉전과 글로벌화의 추세를 타고 자국사의 자국중심주의와 세계사의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해야 한다는 역사교육 혁신 요구가 점점 커지고 있다. 그 방안의 하나로 지역사를 하나 더 도입 하자는 논의가 진행되었는데, 이는 유럽의 지역사인 『유럽의 역사』(1992)로부터도 영향을 받았다. 이에 한국 정부는 한중일 3국의 역사인식 갈등을 완화한다는 현실적 필요도 고려하여 2006년 말 고등학교 선택과목에 동아시아사를 도입하기로 결정하였다. 그 결과 2012년 3월 『동아시아사』 교과서(교학사·천재교육, 이하 ‘교학판’·‘천재판’으로 약칭)가 출간되었다.¹⁾ 이는 세계 최초의 동아시아사 교과서다. 이로써 한국의 역사교육은 국가사·지역사·세계사의

※ 투고일: 2013년 2월 20일, 심사일: 2013년 5월 21일, 게재 확정일: 2013년 5월 24일

1) 안병우 외, 2012,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손승철 외, 2012, 『동아시아사』, 교학사

3분 체제를 수립하였다. 이는 동아시아 차원의 역사교육 혁신을 촉진할 계기로 작용할 수 있다.

이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위한 교육과정은 당초 ‘2007년 교육과정’으로 공포되었다. 그러나 이듬해 정권교체 후 역사과 교육과정이 개정됨에 따라 동아시아사도 내용상의 변화 없이 ‘2009년 교육과정’으로 재공포되었다. 그에 따라 교과서 집필이 시작되었고 2011년 검정 작업이 진행되었다. 그런데 교과서가 나오기도 전인, 바로 그 도중에 교육과정이 다시 개정되었다. 그러니 이는 당연히 ‘2011년 교육과정’이라 해야 옳지만 정부는 이를 여전히 ‘2009년 교육과정’이라 부르고 있다.²⁾ 이 글에서는 혼란을 피하기 위해 이를 ‘2011년 교육과정’이라 호칭하겠다. 교육과정이란 시행을 통해 문제점이 확인될 경우 개정되는 것이 상례인데, 이 같은 몰상식한 개정작업은 주로 한국사 교과서에 대한 이른바 ‘좌경 논란’ 때문에 일괄적으로 단행되었다. 2011년의 경우 교과목의 성격과 목표 등은 그대로 둔 채 내용체계의 일부(영역의 제목과 순서, 내용요소의 수)가 조정되었다. 따라서 이제 곧바로 교과서가 다시 집필되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2012년판 『동아시아사』 교과서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여 지역사 서술의 현황을 점검하고 극복·보완되어야 할 과제를 확인하는 작업은 필요하고도 의미 있는 일이다. 이를 위해 교육과정에 의거하여 두 교과서를 비교하면서 구성체제와 서술내용을 검토하고 이를 다시 한국사·세계사 교과서와 비교하기로 한다. 그리하여 자국중심주의의 한국사 인식 및 유럽중심주의의 세계사 인식과 구별되는 지역사 인식의 성취와 한계를 드러냄으로써, 지역사를 어떻게 구성하고 서술해야 좋은지에 관해 논의를 집중할 것이다. 분석 대상의 범위는 근현대사에 해당하는 V~VI단원을 중심으로 하되 IV단원도 필요에 따라 언급하기로 한다.

2) 교육인적자원부, 2007, 「동아시아사」,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09, 「동아시아사」, 『사회과 교육과정』; 교육과학기술부, 2011, 「동아시아사」, 『사회과 교육과정』

II. 동아시아 지역사의 의미와 필요성

동아시아사의 범위는 교육과정에 따르면 시간적으로 “선사시대부터 현대까지”이며 “공간적으로는 오늘날의 중국, 한국, 일본, 베트남, 그리고 그 외의 동아시아 전지역”이다.³⁾ 거기에 동남아까지 포함되는지는 불명확하지만, 교과서의 실제 서술에서는 더욱 좁혀져 한중일 3국(교학판) 혹은 거기에 베트남만 추가된(천재판) 협의의 지역으로 한정되어 있다. 한자문화권 혹은 유교문화권으로 한정된 셈이다. 그러나 자세히 보면, 중국만 해도 청대 이래 한자·유교 문화권 바깥의 티베트, 몽골, 위구르 등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을 하나의 문화권으로 규정할 수 없다. 따라서 문화권 중심의 접근은 이들 ‘주변’을 배제한 ‘중심’의 시각에 불과하다. 결국 동아시아의 범위는 시대를 초월해 고정된 것이 아니므로 시대별로, 그리고 인식주체의 필요에 따라 탄력적으로 신축될 수 있다. 가령 근대 이전에는 동남아와 동북아 사이의 교류와 상호영향이 극히 적었으므로 동북아에 한정할 수 있고 근대 이후에는 동남아까지 포함하는 것이 적절하다.

대상범위를 협의로 모든 광의로 모든 동아시아사란 일국사와 세계사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사로서 양자를 매개하면서 부분적으로 포함한다. ‘국가’와 ‘세계’의 중간에 위치한 ‘지역’을 단위로 하는 지역사는 따라서 기본적으로 세계사의 구성단위다. 교육과정 해설에서도 동아시아사는 “한국사보다는 넓고 세계사보다는 좁은 범주의 지역사”로서 “민족사의 범주를 넘어서되 서양을 중심으로 하던 세계와는 구분되는 지역세계사”라고 규정되었다.⁴⁾

그러나 이 정도로는 지역사로서의 동아시아사가 왜 필요한지, 그리고 그 의미는 무엇인지가 분명히 드러나지 않는다. 지역사는 “세계사적 시각에서는

3) 교육과학기술부, 2009, 「2009년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해설」, 『사회과 교육과정』, 164쪽

4) 교육과학기술부, 2009,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해설」, 『사회과 교육과정』, 165쪽. 이 해설은 2007년 교육과정 개발팀의 견해를 옮겨 놓은 것이며, 개발지침의 시안은 거의 수정 없이 2007년 교육과정으로 수용되었다.

농칠 수밖에 없는 동아시아 지역사회 공동의 경험을 이해하고 미래를 전망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는⁵⁾ 의미를 당연히 갖는다. 하지만 그보다 중요한 의미는 자국사와 세계사의 인식체계를 상대화하고 재구성하는 구실을 담당하는 데서 찾아야 한다. 기존의 자국사와 세계사는 국민국가를 역사의 도달점으로 파악하는 관점에 의거해 구성된 나머지 국민국가와 그 확장인 국민제국의 억압성을 당연시하는 역사인식을 내면화한다. 그로 인해 당연시되어 온 역사인식에는 중심주의 외에도 근대주의·대국주의 등 각종 승자 위주의 편향된 가치관이 내재되어 있다. 지역사는 이런 인식체계에 맞서 싸우고 성찰하는 사고의 실험실이 될 수 있다.⁶⁾

이와 같은 지역사의 의미를 살리기 위해서는 구성주체들이 중심·소중심·주변으로 위계화된 사정을 감안하여 주변의 시각을 도입함으로써 중심에 맞춰진 일변도의 시각을 상대화하고 다원화할 필요가 있다. 그 안에서 각국의 위계는 시대에 따라 변할 수 있다. 또 동시대 안에서도, ‘소중심’은 ‘중심’과의 관계에서는 주변이지만 ‘주변’과의 관계에서는 중심이라는 양면성을 갖는다. 심지어 ‘중심’조차도 서양열강 같은 역외의 대국에 대해서는 더 이상 중심일 수 없다. 이를 직시함으로써 우리는 “이중적 주변의 시각”을 획득할 수 있고 이로써 각 위계 간에 작동하는 지배관계를 드러내야 한다. 즉, 중심에서 자신에게 가해지는 차별·억압을 문제삼을 뿐만 아니라 자기 스스로도 그보다 더 주변적인 대상을 차별·억압한다는 억압이양의 구조를 자각하여 이로부터 다시 중심의 지배를 문제삼는 것을 말한다. 주변의 시각을 갖는다는 것은 “지배관계에

5) 안병우, 2009, 「동아시아사의 의미」, 『2009년 하계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교재』, 동북아역사재단, 16쪽

6) 유용태, 2005, 「다원적 세계사와 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김한중 외,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함께, 338~339쪽. 일본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일본 역사를 동아시아 지역사 속에서 파악함으로써 일본의 예외성을 강조하는 탈아입국적 일본사상을 상대화하려는 시도가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 후 1995년에 ‘동아시아사’를 고교 과목으로 신설하자는 제안도 나왔지만 아직 제도화에 이르지 못하고 있다. 이에 관해서는 鈴木哲雄, 2006, 「歴史教育再構成の課題－歴史教育科目「東(北)アジア史の可能性」」, 『歴史評論』 679號; 今野日出晴, 2009, 「東アジア史で考える－歴史教育にわたるということ」, 『岩手大學文化論叢』 7・8輯 참조.

대한 도전이요 투쟁”이다.⁷⁾

이런 의미를 살려서 지역사를 구성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 상호 관련성의 정도를 기준으로 보면 그것은 국제관계사나 교류사처럼 낮은 단계의 구성에서 시작할 수 있다. 서로에 대한 편견을 줄이고 서로의 개성을 존중하기 위해서는 상대국 역사발전의 독자성을 이해해야 하는데, 교류사와 관계사만으로는 이런 필요에 부응하기 어렵다. 여기에 비교사의 도입이 필요해진다.⁸⁾ 이와 병행하여 직접적·단기적 상호 관계를 다루는 관계사에서 한 걸음 나아가 구조적·장기 지속적 상호 연관성을 파악해 드러내는 연관사에 도달해야 한다. 연관사는 관계사를 포함하면서도 그것을 능가하는 더 높은 수준의 체계적 사유 영역이다. 그러므로 지역사의 이름에 걸맞은 구성방법은 ‘연관과 비교’의 방법이라고 할 수 있다. 비교의 방법이 지역사의 필요조건이라면 연관의 방법은 그 충분조건이다. 연관의 방법을 통해 역사주체들 간의 직간접적인 상호 연관성을 드러내는 한편 비교의 방법으로 구성주체들의 독자성을 드러냄으로써 사고의 실험을 깊고 풍부하게 만들 수 있다. 요컨대 연관과 비교의 지역사는 상호 의존과 공존의 경험 및 가치를 파악하는 동시에 타자의 독자성을 인정하는 역사인식을 증진하는 데 유용하다.⁹⁾

그렇다면 지역사로서 동아시아사는 자국사나 세계사와 같은 하나의 인식·서술 단위로 확립될 만한 학술적 기반을 갖추고 있는가 하는 의문이 뒤따

7) 백영서, 2007, 「자국사와 지역사의 소통: 동아시아인의 역사서술의 성찰」, 『歷史學報』 196집; 백영서, 2004,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 정문길 외 편,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16~19쪽

8) 김성보, 2007, 「민족·국가사와 동아시아사의 접맥: 동아시아 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모색」, 『역사와실학』 32집, 821쪽. 관계사와 비교사를 중심으로 동아시아사 속의 한국사를 재구성하자는 주장은 박원호, 1987, 「한국 동양사학의 방향-독자적인 동아시아 역사상의 형성을 위한 제언」, 『제30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에서 제기되었으며, 박원호, 2009,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 구성을 위한 재론」, 『韓國史學報』 34호로 이어졌다.

9) 유용태, 2009, 「동아시아사의 의미: 연관과 비교의 지역사」, 『2009년 하계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교재』, 동북아역사재단, 26~28쪽. 이 연관과 비교의 방법은 유용태·박진우·박태균, 2010·2011,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1·2, 창비에서 실제 서술에 적용되었다.

를 수 있다.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개발팀도 “역사의 한 분야로 성립될 수 있는지 검토해야 한다”고 하여 이런 문제를 제기하였다. 그러나 “하나의 역사로서 동아시아사는 아직 그 정체성을 분명히 하지 못한 상태”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¹⁰⁾ 실제로 학술적 준비는 이론과 방법 면에서든 사실의 재구성 면에서든 모두 부족한 상태다.

하지만 이를 세계사의 경우와 비교해보면 하나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원래 19세기에 만들어진 세계사는 사실상 유럽사로 구성된 유럽의 팽창사였으니 당연히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세계사라 할 수 없다. 제2차세계대전 후 비로소 유럽중심을 벗어난 세계사의 구성이 적극 모색되었다. 동양사(=아시아사)와 서양사를 따로 가르쳐온 한중일 3국도 바로 그때 이 양자가 합쳐진 세계사를 교과목으로 수용했다. 그에 따라, ‘통일적 세계사’를 추구하는 학계의 문제의식이 제기되었고 그 영향 속에 ‘통일적 동양사’도 모색되었다.¹¹⁾ 그리하여 그동안 세계사와 동양사의 구성은 많이 진화되었지만 통일적 구성이란 목표는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 필자는 통일적 동아시아사를 구성하는 것이 통일적 동양사나 통일적 세계사를 구성하는 것보다 상대적으로 용이하다고 보며, 그것을 위한 노력은 그보다 넓은 범주의 역사인 세계사와 동양사를 통일적으로 구성하는 디딤돌로서 기여할 것으로 믿는다.

동아시아 지역사를 교과목으로 가르쳐서 얻고자 하는 교육적 효과, 바꾸어 말하면 종래의 자국사·세계사 교육과 비교되는 새로운 목표는 무엇인가? 교육과정에는 하나의 총괄목표와 네 개의 하위목표가 제시되어 있다. 동아시아사는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안목과 자세’, 그리고 거기에 ‘능동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자질’을 기르기 위해 개설된 과목이다. 이를 위

10) 안병우 외, 2007,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 동북아역사재단 학술연구과제 연구보고서, 7쪽

11) ‘통일적 세계사’와 ‘통일적 동양사’에 대한 한국 학계의 문제의식은 李能植, 1948, 『近代史觀研究』, 同志社, 178~180쪽; 李東潤, 1953, 『東洋史概說』, 동아문화사, 5~12쪽 참조. 이에 관해서는 유용태, 2008, 「한국의 동아시아 인식과 구성: 동양사연구 60년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사」,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구소 편, 『한중일 동아시아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선인, 20~29쪽에서 검토되었다.

해 “이 지역의 특성과 과제를 올바르게 인식하는 데 목표를 둔다”고 하였다. 전자는 태도 측면의 목표이며 후자는 지식 측면의 목표이므로 양자는 유기적으로 연결된 하나의 총괄목표로 파악될 수 있다. 이는 이 지역의 공통적 경험이자 여타 지역과 비교되는 특징적 경험이 강조된 셈인데 2000년대 들어 증대된 한중일 3국 간의 역사 갈등을 극복하고 미래의 지역협력을 강화하는 과제를 염두에 두고 설정된 목표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총괄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네 가지 하위목표는 ① 주체적으로 역사를 이해하는 안목, ②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 ③ 문제해결의 자세, ④ 역사적 사고력을 기른다는 것이다.¹²⁾

이들 하위목표는 기존의 국사와 세계사에서도 강조되어 온 일반적 역사교육의 목표들과 겹친다. 하지만 국사든, 동아시아사든, 세계사든 모두 ‘역사로 써’ 이런 목표들을 가르친다는 역사교육의 본래 의미를 상기하면 이것이 문제가 될 수는 없다. 다만 동아시아 각국이 공유해온 특유의 중화주의 전통으로 인해 이웃나라를 홀시하고 그로 인해 갈등을 빚고 있는 현실을 감안하면 ‘②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의 함양이 특별히 강조될 필요가 있다.

‘타자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기르기 위해서는 우선 동아시아사의 공통된 특징을 파악하는 데 그치지 말고 ‘각국이 이룩한 독자적 역사발전을 함께 이해’해야 한다. 이는 교육과정의 교수·학습 방법에서 강조된 내용인데, 이를 방해하는 장애요인들과 직접 대면하지 않으면 안 된다. 교육과정 해설은 동아시아가 상호 교류를 통해 긴밀한 관계를 유지해왔으면서도 여러 가지 갈등요소를 안고 있다면서 다음 세 가지를 꼽았다. ① 경제성장과 국제적 위상 강화에 따른 일부 국가의 패권추구, ② 국가체제와 이념의 차이로 인한 상호 불신, ③ 국가주의와 과도한 민족주의가 낳은 우경화 등이 그것인데, 그 “갈등의 배경은 역사로까지 소급되기도 한다”고 지적하였다. 현실을 통해 조성된 갈등과 역사 속에서 형성된 갈등은 분명히 구별되어야 하지만 양자 사이의 상호작용

12) 교육과정에는 그 밖에 “각 시기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적이거나 연관성 있는 요소를 주제별 접근방식으로 이해한다”가 두 번째 목표로 제시되어 있으나 이는 목표가 아니라 방법에 해당한다고 보아 논외로 하였다.

에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위에 말한 세 갈등 중 ①은 일본과 중국의 제국성을 지칭하는 것으로 보이며 역사 속의 제국경험과 상호작용을 일으킨다. ③은 꼭 일본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한국과 베트남도 포함하는 각국이 공통적으로 안고 있는 문제다. ②는 냉전시대 동아시아 각국이 이념과 체제의 차이로 인해 두 진영으로 갈라져 열전을 벌이면서 장기간 대치한 독특한 경험을 가리킨다. 이때 미·일과 중·소가 서로 상대에게 제국성(empireness)을 보인 것은 물론이지만, 미국 진영의 최전선인 한국 같은 소국도 진영논리를 내면화한 채 베트남전쟁에 참전함으로써 미국의 제국성에 편승하였다. 그런 점에서 나는 위의 세 가지 갈등을 관통하는 키워드는 제국성이며 제국성에 대한 자기성찰이야말로 동아시아 지역의 출발점이자 귀착점이라고 믿는다.¹³⁾ 유일한 총괄목표인 동아시아 지역의 공동발전과 평화를 추구하는 자세는 그 위에서만 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교과서 필자들은 이상과 같은 지역의 의미와 필요성을 이해하고 집필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두 교과서는 머리말에서 이에 관해 설명하였다. 교학관은 교육과정의 관련 내용을 거의 그대로 옮겨놓은 듯이 상술하였다. 천재관은 총괄목표를 제시한 후 지역 내 국가·민족들 사이의 차이를 이해하는 것을 또 하나의 세부목표로 제시하였다. 그리하여 “동아시아사를 공부하게 되면 동아시아라는 지역세계 속에서 한국과 한국사가 차지하는 모습을 좀 더 객관적으로 볼 수 있게 될 것”이고 “아울러 이웃한 다른 나라들의 역사에 대한 보편적 이해도 가능할 것”이라고 하였다.

13) 여기서 말하는 제국성이란 異域과 異族을 포함하는 광역적 지배체제인 帝國(empire)을 형성, 유지, 확장하려는 성향과 그로 인해 나타나는 객관적 형상을 지칭한다. 이때의 제국은 전통적 제국과 근대적 제국을 모두 포괄하며, 후자에 해당하는 독점자본주의 단계의 제국과 제국주의(Imperialism)로 한정되지 않는다. 우리는 양자의 차이를 잊지 않되 그 연속성에도 유의해야 한다. 帝國의 개념에 대해서는 이삼성, 2011a, 「帝國」개념의 고대적 기원: 한자어 '帝國'의 서양적 기원과 동양적 기원, 그리고 일본서기, 『한국정치학회보』 45권 1호; 이삼성, 2011b, 「帝國」개념과 19세기 근대일본, 『국제정치논총』 51권 1호; 山本有造, 2004, 『帝國の研究』, 名古屋大學出版會 참조.

Ⅲ. 구성체제: 무엇을 선정하여 어떻게 구성하나?

무엇을 학습내용으로 선정하여 어떻게 제시할 것인가? 이에 대해 2007·2009·2011년 교육과정은 동아시아의 ① 각 시기 사회와 문화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적이거나 연관성 있는 요소, ② 동아시아 역내의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 ③ 교류와 갈등 요소 등 세 가지를 주요한 선정기준으로 제시하였다. 그리고 이들을 주제별 접근방식으로 구성해 학습하도록 하였다. 필자는 몇 년 전부터 동아시아사를 “연관과 비교의 지역사”로 구성하자는 제안을 한 바 있고 일부 시도해보기도 하였다. ①은 연관사에 ②는 비교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으며, ③은 관계사·교류사에 해당한다. 교육과정은 동아시아사를 이들 세 가지 기준·방법에 의거해 내용을 구성하고자 한 것이다.

교육과정의 ‘내용체제’는 이런 기준과 방법에 따라 선정된 주제들로 구성되었다. ‘내용체제’는 ‘영역’과 ‘내용요소’로 구성된다. ‘영역’은 교과서의 단원명이 되고 ‘내용요소(=성취기준)’는 교과서의 장 명칭이 되었으므로, 교과서는 6단원, 26장으로 구성되었다. 따라서 절과 항목은 집필자의 자유로운 판단에 맡겨

〈표 1〉 2007·2009·2011년 교육과정 중 근현대 부분 내용체제

2007·2009년 교육과정	2011년 교육과정
V. 국민국가의 모색 1. 개항과 근대 국민국가 수립 2. 제국주의 침략 3. 민족주의와 민족운동 4. 평화를 지향한 노력 5. 서구문물의 수용과 변화 VI. 오늘날의 동아시아 1. 전후처리 문제 2. 동아시아에서의 분단과 전쟁 3. 각국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 4. 갈등과 화해	V. 근대국가 수립의 모색 1. 근대화운동과 국제관계 변동 2. 제국주의 침략과 민족운동 3. 침략전쟁의 확대와 국제연대 4. 서구문물의 수용 VI. 오늘날의 동아시아 1. 전후처리와 동아시아의 냉전 2. 경제성장과 교역의 활성화 3. 정치·사회의 발전 4. 갈등과 화해

져 있다. 물론 장도 어느 정도까지는 집필자의 판단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

여기서는 단원과 장을 중심으로 시간과 공간 범위, 각 주제와 사건 및 인물의 인식을 검토하되 개념어와 관련지어 그 유기적 상호관계를 거시적으로 살피기로 한다.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근현대 부분은 2개 영역(단원), 9개 내용요소(장)다. 2011년 교육과정에서는 내용요소가 한 개 줄고 주제와 용어가 일부 조정되었다. 이를 정리하면 <표 1>과 같다.

먼저 V단원 “국민국가의 모색”은 19세기 중엽 개항 이후부터 1945년 제2차세계대전 종결까지를 시간범위로 하여 그 사이의 국민국가 수립 노력을 다루도록 하였다. 이는 세계사 교과서가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모색을 제1차세계대전 직전까지로 한정해서 다루어온 결과 일본의 성공과 여타 국가들의 실패를 당연시한 구도에서 벗어난 의미가 크다.¹⁴⁾ 그런데 장의 배치를 보면 “국민국가 수립”이란 핵심주제가 1장에만 한정됨으로써 2~3장의 제국주의 침략을 물리치는 민족운동과 분리되는 문제를 안고 있다. 2011년 교육과정은 이를 시정함으로써 근대화운동과 민족운동을 거쳐 근대국가가 수립되는 과정을 드러낼 수 있게 되었다.

2011년 교육과정은 그 밖에도 달라진 점이 몇 가지 더 있다. 우선 단원명이 “국민국가”에서 “근대국가”로 바뀐 점이 눈에 띈다. 6개 단원 중 ‘근대’와 같은 시대명칭으로 설정된 제목은 이것이 유일해서 불균형한 느낌을 준다. 근대사 교육은 근대의 성취를 위한 노력과 함께 그 극복을 위한 전망도 함께 살필 수 있게 해야 하는데, “근대국가”, “근대화운동”이 단원과 장 제목으로 강조됨으로써 근대주의적 시각이 두드러진 것이다.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적 노력에 대한 관심(비자본주의적 발전에 대한 구상)은 2009년 교육과정에도 거의 없었지만 2011년 교육과정에서는 더욱더 편향된 시각을 보여준다.

이는 VI단원 “오늘날의 동아시아”의 성취기준 설명에서, 전후의 “이념 대립

14) 필자는 일찍이 이 문제를 지적하고 그 시정을 요구한 바 있다. 유용태, 2001, 「역사교과서 속의 아시아 국민국가 형성사」, 『역사비평』 57호; 유용태, 2006, 「한국 역사교과서 속의 동아시아 국민국가 형성사」, 『환호 속의 경종』, 휴머니스트, 445~446쪽

과 분단에 대하여 파악한다”고 한 것을 2011년 교육과정이 삭제한 데서 알 수 있다. 한국 현대사 서술이 좌경논란에 휘말리면서 줄속으로 단행된 교육과정 개정의 불통이 동아시아사 과목에서 이렇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념대립과 분단”을 삭제한 것은 냉전시기 동아시아의 핵심문제에 대해 눈을 감게 만드는 퇴행이 아닐 수 없다. Ⅶ단원은 우선 “오늘날의 동아시아”라는 맥 빠지는 단원 제목부터 바로잡아야 하는데, 이때 냉전시기와 탈냉전시기를 구분하여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동아시아의 냉전은 유럽의 그것과 달리 중국의 국공내전, 한국전쟁, 베트남전쟁 등 30년 동안의 열전과 함께 진행되었고 그로 인해 냉전적 진영대립도 더욱 첨예화되었음에 유의해야 한다. 그리고 전후의 이념대립과 분단은 전후의 국제관계에 따라 일차적으로 규정되었지만 전전의 국민국가 수립을 위한 모색과정에서 장차 수립할 국가모형을 둘러싸고 체제·이념 경쟁이 나타난 전사와 관련지어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러려면 Ⅴ단원의 민족운동 서술에서 이를 반영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Ⅶ단원이 Ⅴ단원에서 다른 국민국가 형성이라는 미완의 과제의 연장선에서도 계기적으로 파악될 수 있도록 해야 함을 의미한다.

그다음 Ⅴ단원 1장에서 전에 없던 “국제관계 변동”을 추가한 것도 주목되는 변화다. 조약체제가 등장하면서 조공에 의거한 전통적 국제관계가 변화하는 과정을 다룰 필요에 부응하는 조정이다. 이는 2007·2009년 교육과정의 Ⅳ단원 “국제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이 17세기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변화”를 지나치게 강조한 문제점을 인정하고 시정한 의미가 있다. 그때 국제질서가 변화된 것은 거의 없고 단지 淸國 중심의 중화질서가 조선·일본·베트남의 소중화질서로 인해 이완되기 시작하는 정도였다. 그 대신 전통적 국제질서를 다룰 단원이 있어야 하므로 이를 Ⅲ단원에 넣어서 “국제관계 변화와 지배층의 재편”으로 조정하였다. ‘질서’에 비해 ‘관계’는 규범화 수준이 낮은 차이가 있지만 큰 문제는 없어 보인다. 문제는 이러한 조정을 통해 Ⅳ단원 제목을 “동아시아 사회의 지속과 변화”로 바꾼 데 있다. 지속과 변화란 어느 시대에나 보이는 현상이어서 이 제목으로는 17~19세기 전반의 특징을 담아내기 어렵기 때문이다.

한편 “평화를 지향한 노력”은 V단원에만 한정되어 있고 다른 내용이 극히 적다는 문제가 있었는데, 2011년 교육과정은 이를 아예 삭제하였다. VI단원 4장 “갈등과 화해”에서 1945년 이전과 이후를 모두 아울러서 다루어도 되므로 큰 문제는 아니다. 그 대신 제국주의의 침략을 만주사변 이전의 “침략”과 군국주의 대두 이후 “침략의 확대”로 나누어 각 단계의 민족운동을 다루도록 하였다. 이는 일본의 침략전쟁 범위를 만주사변 이후로 한정해온 중·일·미 학계의 통설과 달리 우리의 주체적 시각을 드러내는 구성이라 하겠다.

이처럼 교육과정이 시행도 되기 전에 개정되었는데, 그 결과 시급히 만들어진 탓에 피할 수 없었던 2007년 교육과정의 불비함은 그대로 2009년 교육과정에 이어졌고, 그중의 일부가 2011년 교육과정에서 개선되었으나 오히려 개악된 부분도 있다. 향후에는 연구와 논의를 거쳐 숙고한 이후에 개정되기를 바란다.

이때 일본의 동아시아 침략에 대한 우리의 주체적 시각을 보강하려면 제국화에 대한 새로운 인식이 필요하다. 흔히 근대 일본의 제국화는 淸國의 팽창에 대한 대응적 조치로 간주되며 그 기점은 청일전쟁이라고 한다. 전쟁 결과 일본이 타이완을 영유하게 됨으로써 광역적 다민족 지배체제라는 식민제국의 면모를 갖추게 되었고 이로써 제국주의를 곧 문명화로 여기는 서양 열강들의 대열에 끼게 되었다는 것이다.¹⁵⁾

그러나 이러한 인식은 결과론에 치우친 유럽중심주의일 뿐이다. 근대의 제국을 서구열강들에서 보이는 독점자본주의의 대외팽창이라는 시각에서만 접근함으로써 일본제국의 특수성을 직시할 수 없게 만든다는 점, 일본이 자국의 불평등조약을 개정해 주권평등을 실현해야 비로소 제국이라는 관점에서 서구열강과의 관계만을 중시하고 동아시아 이웃 나라에 대한 침략을 간과한다는 점이 그렇다. 근대 일본은 청일전쟁 때 불평등조약 개정에 성공하고 러일전쟁 직후 비로소 독점자본주의를 확립하였지만 그 이전에 동아시아 이웃 나라에

15) 미타니 히로시 외 편, 강진아 옮김, 2011, 『다시 보는 동아시아 근대사』, 까치, 347~348쪽

대해 군사적 대외침략을 선행하는 군국주의적 특징을 보였다. 따라서 근대 일본이 동아시아의 평화를 파괴한 군사행동을 제국화의 기점으로 삼아야 한다. 그래야 서구중심주의는 물론 결과론적 역사인식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

근대 일본의 제국화는 1874년 타이완 침공을 기점으로 명확히 구체화되어 개시되고 진전되었다. 앤드루 고든에 따르면 일본이 외교 면에서 아시아의 이웃 나라 위에 군림하려는 고압적이고 오만한 태도를 처음으로 뚜렷이 보인 것은 조선 침략(정한론)을 주장한 1873년부터다. 이는 이듬해 타이완 침공으로 표출되었다. 메이지 정부는 당초 타이완에 군사식민지를 건설함으로써 원주민을 문명화하는 극비의 장기계획을 세웠지만 청국과의 전쟁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보아 중도에 포기하였다. 그러나 타이완 침공 과정에서 제국화의 전기가 마련되었으니, 砲艦外交의 선례를 남긴 것이 그것이다. 약간의 보상금을 받고 琉球王國에 대한 지배권을 확보하였을 뿐 아니라 아시아 여타지역을 문명화시키는 것이 일본의 사명이라는 관념을 천명하였다.¹⁶⁾ 1875년의 운요호사건은 타이완 침공에서 실행된 포함외교의 재현이다. 그래서 민두기도 “군부가 먼저 일을 저질러 놓고 정부가 이를 추인하고 이용하는, 후일의 일본의 제국주의적 침략전의 기본형태”가 이때 이미 나타난 것으로 보았다.¹⁷⁾

그리고 그에 앞서 메이지 정부가 단행한 北海道 병합과 그 직후의 유구 병합도 제국화의 중요한 표지가 아닐 수 없다. 일본은 1854년 미일화친조약에서 이미 자국을 “일본제국”으로 명기하여 서구열강과의 관계에서 국위를 과시하려 했으나 아직 제국의 실질을 갖추기 전이었다. 이렇게 대두한 제국화 욕망이 유신을 거쳐 타이완 침공에서 현실화되었으니 이를 계기로 1870년대 중반에

16) 앤드루 고든, 김우영 옮김, 2005, 『현대 일본의 역사: 도쿠가와 시대에서 2001년까지』, 이산, 152~153쪽. 1874년 유신정부 내부에서 淸國과의 전쟁을 목표로 총력 전체제를 구축하려던 움직임에 관해서는 坂野潤治, 1997, 『近代日本の國家構想』, 東京, 岩波書店, 9~15쪽 참조.

17) 민두기, 1977, 『일본의 역사』, 지식산업사, 225~227쪽. 메이지유신 주도세력은 1868년 내전이 수습되자 곧바로 하시모토 사나이와 요시다 쇼인의 이웃 나라 병합론을 따라 조선 침략 계획을 세웠다. 이는 조선과의 국서문제가 제기되기 전의 일이다.

‘帝國’이란 용어가 급속히 일반화된 것은 결코 우연이 아니다.¹⁸⁾ 야스쿠니 신사에는 유신 이래 제2차세계대전 종전까지 내전 및 대외 군사행동의 전사자가 합사되어 있는데 후자의 첫 사례가 타이완 침공인 것은 일본제국의 팽창 기점이 언제인지를 웅변하는 상징이 아닐 수 없다.¹⁹⁾

한편 淸國이 근대적 식민제국을 향해 발걸음을 내딛기 시작한 것은 1880년대 초부터이며, 이는 1874년 이래 제국화하는 일본과 일본에 제국화 모델을 제공한 서구열강에 대한 대응적 조치였다.²⁰⁾ 청국의 제국화는 임오군란 직후 조선에 대한 예속화정책(이른바 속방화 정책)으로 나타났다. 당시 청국과 일본은 특히 조선에 대한 자국의 팽창정책을 상대국에 대한 ‘대응적 방어’일 뿐이라고 변호하지만 둘 다 명백히 근대적 제국화이며 ‘경쟁적 침략’이 아닐 수 없다.²¹⁾ 교육과정과 교과서는 일본제국의 침략에 치중한 나머지 이에 대해 마땅히 기울여야 할 관심을 두지 않고 있다.



-
- 18) 이삼성, 2011b, 앞의 글, 69~70쪽. 그러나 이삼성도 일본의 본격적 제국건설은 1890년대의 일이라는 서구중심주의 시각을 견지하고 있다.
- 19) 야스쿠니 신사[靖國神社]는 1869년 천황의 명으로 성립된 東京招魂社로부터 1879년 개명되었는데, 1945년 8월까지 군당국(병부성, 육군성, 해군성)의 관할하에 있었다. 아카자와 시로, 박화리 옮김, 2008, 『야스쿠니 신사』, 소명출판; 일본의전쟁책임자료센터 편, 박환무 옮김, 2011, 『야스쿠니신사의 정치』, 동북아역사재단
- 20) 최근 18세기 淸國의 영토확장을 당시 유럽 절대왕정의 식민주의와 유사한 滿淸植民主義로 파악하는 견해가 대두하고 있다. 유장근, 2009, 「滿淸식민주의」를 둘러싼 중외학계의 논의, 유장근 외,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참조.
- 21) 유용태, 2012a, 「서평: 미타니 히로시의 편, 『다시 보는 동아시아 근대사』」, 『중국 근현대사연구』 54집, 248~250쪽; 유용태, 2012b, 「중국의 지연된 근대외교와 한중관계: 동아시아 지역사의 시각」, 『한중인문학연구』 37집, 6~8쪽

IV. 서술내용: 내용요소를 어떻게 서술하나?

교육과정은 “각 시기의 특징을 드러낼 수 있는 공통적이거나 연관성 있는 요소를 주제별 접근방식으로 이해한다”고 이해의 방법을 제시하였다. 공통적이거나 연관성 있는 요소를 중심으로 내용을 구성하는 것이므로 교과서 서술에서도 연관의 시각을 중시하지 않으면 안 된다. 동시에 타자를 이해하는 태도를 기른다는 목표를 위해서는 그 안에서도 각 국가·민족의 특징이 드러나도록 하는 비교의 시각이 견지되어야 한다.

천재관 필자들은 이 점을 잘 인식하고 집필에 임한 것으로 보인다. 그들은 머리말에서 “지역세계사를 지향하는 이 과목의 성격을 충실히 구현하기 위해 가능한 국가별 서술을 지양하고 지역단위의 통합역사를 구성하려고 노력하였다”고 밝혔다.²²⁾ 그래서 절 없이 곧바로 주제 중심의 항목을 두어 형식상 국가별 서술을 극력 피하였다. 이와 달리 교학관은 주제 중심의 절을 설정하고 그 밑에 국가별로 항목을 나누어 서술하였다. 동아시아 지역사의 취지에 비추어 볼 때 국가별 서술의 교학관보다는 통합적 서술의 천재관이 더 바람직한 것은 당연하다. 연관과 비교의 관점에서 서술하기가 용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그럴 만한 연구역량이 뒷받침되지 않는 한 실질적인 효과를 충분히 거두기는 어렵다. 실제로 천재관도 내용서술에서는 하나의 항목 안에서 어쩔 수 없이 국가별 사정을 나열하는 식으로 서술하는 데 그쳐서 하나의 주제에 관한 연관과 비교의 이해는 독자 스스로 생각해보아야 할 영역으로 남겨졌다. 이는 장차 집중적으로 보강되어야 할 과제다.

이와는 조금 다른 차원에, 교과서 서술양식이라는 문제가 있다. 본문을 줄이고 각종 자료를 많이 제시하며 그 짧은 본문은 집필자가 철저히 감춰진 채 해석의 필요도 여지도 없어 보이는 문장들로 채워져 있다. 그 결과 학생들이

22) 더구나 천재관의 머리말은 ‘국가’라 해야 문맥이 통하는 곳에서 이를 모두 ‘지역’으로 대체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역’의 ‘지역’과 혼동을 일으키게 되었다.

본문을 읽고나서도 해당 주제에 대한 맥락을 파악하기 어렵고 주어진 자료들과 연관지어 파악하거나 어떤 의문을 제기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깝다. 이 같은 서술양식을 벗어나려 노력하지 않는 한 문제를 발견하고 제기하는 일은 교사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²³⁾ 서술방식과 분량 면에서 본문을 읽고 해당 주제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가능하도록 조정될 필요가 있다.

1_ 국민국가의 모색

국민국가는 V단원의 주제로 중시되고 있으므로 그 개념에 유의하여 내용을 서술할 필요가 있다. 교학관은 국민국가의 개념에 대한 어떠한 설명도 하지 않았으며, 근대화를 문명화와 같은 의미로 혼용하기도 하였다. 반면 천재관은 그에 관해 주석과 만회를 활용해 상세히 설명하였다. 국민국가는 세계사 교과서에서도 매우 중시되는 개념어이지만 아무런 설명 없이 쓰이고 있음에 비추어 볼 때 이는 획기적이라 할 만하다.

“국민국가의 모색”을 시기적으로 제1차세계대전 전까지 한정해서 다룬 점은 크게 아쉬운 부분이다. 두 교과서 모두 “국민국가 수립”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도 있지만 이는 미완의 과정을 드러내기에 부적절하다. 두 교과서 모두가 주제를 제1장에서 개항과 관련지어 다루고 시기적으로 1910년 전후에서 그쳤다. 그 결과 제1차세계대전 직전까지로 한정해온 세계사 교과서의 구성체제를 되풀이하고 말았다. 그 후의 전개과정은 3장 민족운동에서 따로 다룰 수밖에 없지만 반제운동 중심의 서술에 치중되어 장차 수립하고자 하는 국가모델을 둘러싸고 나타난 여러 구상 및 그들 간의 경쟁·타협은 간과되었다. 이제라도 민주와 공화의 제도화 노력에 대해 좀 더 관심을 기울여야 한다. 교학관은 건국준비에 관한 항목을 설정하고서도 이를 본문에 서술하지 못한 채 한국·

23) 서술방식과 자료제시의 유형에 관해서는 양호환, 2012, 「역사교과서의 서술양식과 학생의 역사이해」; 「역사서술의 주체와 관점: 역사교과서 읽기와 관련하여」, 『역사교육의 입론과 구상』, 책과함께, 152~154·180~184쪽; 김한중, 2006,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선인, 421~432쪽 참조.

베트남의 관련 자료만 제시하였는데, 중국의 그것까지 포함시켜야 상호관련지어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결국 국민국가 수립 노력을 1945년까지 이어서 살핀다는 단원의 취지는 1장과 3장으로 분절된 채 살리지 못했다.

필자는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2009)에서, 동아시아 국민국가의 모색을 크게 두 단계로 나누어 설명할 것을 제안한 바 있다. 1단계(개항~제1차세계대전)에는 자본주의형 국가모형을 추구하였으나 2단계(제1차세계대전 직후~제2차세계대전)에는 비자본주의형 국가모형을 추구하는 세력이 등장하여 양자 간의 경쟁이 벌어졌다. 국가체제와 그것을 뒷받침하는 이념을 둘러싼 경쟁은 사유재산을 절대시하는 영미식 자본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세력과 사유재산을 부정하는 소련식 사회주의 국가를 추구하는 세력을 양 극단으로 하여 전개되었다. 그러나 1930년대 중반 이후, 시행착오 속에 양자의 타협과 절충에 따라 혼합경제(기간산업의 국유, 기타 산업의 사유와 협동조합 소유의 병행)를 바탕으로 하는 새로운 국가형태가 제시되었고 이를 선호하는 여론이 압도적으로 높았다. 그런 상태에서 제2차세계대전 종전을 맞이하였는데, 불행하게도 그 후에 미·소를 중심으로 하는 냉전체제가 등장함에 따라 혼합경제 유형의 국가는 양 극단의 국가모형이 절대화되면서 억압되고 왜곡되었다.²⁴⁾ 이러한 두 단계의 맥락을 무시한 채 1단계의 스토리만 제시해서는 V단원의 국민국가 모색이란 주제는 물론 VI단원의 분단과 냉전 속의 열전도 역사적으로 이해할 수 없게 된다.

“제국주의 침략”(2장)은 전쟁의 피해를 “평화를 지향한 노력”(4장)과 상호 상응할 수 있도록 적극 관련지어 줄 필요가 있다. 천재판은 청일·러일전쟁을 모두 제국주의 침략전쟁의 범주 안에서 서술했음에도 당시 일본군의 민간인 학살에 관해서는 일체 간과하고 전쟁피해를 1931년 만주사변 이후에 한정시켜

24) 유용태, 2009, 「개항과 근대 국민국가 수립」,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221~235쪽. 그 후 실제로 이를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1의 5장(새로운 국민국가의 모색)에서 적용해보았다. 이 주제에 관한 한, 교과서 필자들은 집필 안내서를 참고한 것 같지 않다. 특히 안내서와 교과서 양쪽의 집필에 참여한 사람들도 있어서 더욱 이해하기 어렵다.

버렸다. 교학관은 청일·러일전쟁을 국민국가 수립을 다룬 1장에서 서술했으니, 당시의 전쟁 피해에 대해 언급하지 않은 것은 어쩌면 당연하다. 평화를 향한 노력을 천재관은 독립된 장에서 다루었고 교학관은 장을 따로 설정하지 않고 본문이 아닌 자료란에 관련 자료만 제시하는 것으로 대신하였다. 그러나 양자 모두 이를 전쟁의 피해에서 드러나는 참혹함과 연결지어 주지는 못하였다.

“평화를 지향한 노력”에서는 침략전쟁과 저항전쟁을 구분하여 서술할 필요가 있다. 모든 전쟁에 반대하는 근본주의적 시각은 저항전쟁의 의의와 필요성을 약화시키는 논리로 이어질 수 있다. 오히려 저항전쟁의 평화수호 의미는 따로 주목하도록 서술되어야 하며 그 안에서 평화에 대한 사색이 함께 병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침략전쟁이든 저항전쟁이든 전쟁 주도세력이 내세우는 ‘국익’ 이데올로기에 대한 성찰적 탐색이 이루어지도록 유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서구문물의 수용”(5장)에서 두 교과서 모두 각종 문물을 소개하면서도 근대 동아시아 각국의 국경을 넘어 서로 긴밀하게 연결해 준 수단인 기선과 전신을 간과한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 특히 기선(여객선, 화물선)의 정기노선은 개항장과 개항장 사이의 인적·물적·문화적 연결을 만들어내는 중추였다. 기선은 바다 출입을 금한 개항 이전의 海禁시대가 종식되고 열린 새 시대의 엔진이라 할 만하다.

“민족주의와 민족운동”(3장)에서는 사회주의가 수용되면서 나타난 변화가 주목되었다. 사회주의는 민족운동의 필요에 따라 수용되었으며, 그 후 운동의 질적 발전과 갈등을 동시에 초래하였다. 그럼에도 전자는 흡수되었고 이념적 차이로 인한 대립과 갈등은 중국, 일본, 베트남에서도 마찬가지였는데 유독 조선에 대해서만 부정적으로 서술되었다. 친일협력의 문제가 다루어지지 않은 것도 개선될 필요가 있다.

국제관계사는 각 장에서 고루 다루어져야 할 사항이다. 이에 대해서는 교학관이 많은 관심을 두어 서술하였다. 가령 조공에서 조약으로 바뀌는 변화는 V단원 1장 3절에서 “동아시아 전통질서의 변화”란 제목 아래 “동아시아의 전통적 국제관계가 동요하다”, “청일전쟁으로 전통적 국제관계가 재조정된다”는

두 항목으로 나누어 서술하였다. 전자에서는 청일수호조규와 조일수호조규가, 후자에서는 시모노세키조약이 조공관계에 의거한 중국 중심의 지역질서를 동요·붕괴시키는 사정이 서술되었다. 이에 비해 천재판은 근대적 개혁의 추진과 혁명을 강조할 뿐 국제질서의 변화에 대해서는 관심을 두지 않았다. 특히 청일수호조규에 대해서도 언급하지 않았는데, 이는 타이완 침공, 조일수호조규, 유구 병합 등 상호 연관된 일본의 침략적 대외활동을 청국과 대등한 지위에서 추진하도록 만들어준 디딤돌이어서 극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천재판은 한청통상조약에 대해서도 그냥 지나쳤다. 뒤의 일이지만 워싱턴체제, 곧 제1차세계대전 후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재편에 대해서도 교학판만이 관심을 두어 서술하였다.

국제관계의 변화에서 1880년대 조선에 대한 청·일의 정책이 중요한데 특히 청의 조선 정책에 관한 서술은 교학판에서만 보인다. 교학판은 1장의 전통적 국제관계의 변동을 다룬 항목에서 갑신정변을 계기로 청의 간섭이 강화되었고 “위안스카이를 내세워 조선의 외교권을 실질적으로 장악하였다”고 서술하였다. 그리고 일본은 조선의 정치문제에 직접 간여하지 않는 대신 친일세력을 확대하고 경제침투에 힘을 기울이면서 청과의 대결에 대비하여 군비를 확충하였다고 대비시켰다. 이어서 청일전쟁을 서술하였으므로 조선을 둘러싼 청일 경쟁의 전후 맥락이 잘 연결되었다. 이에 비해 천재판의 서술은 1장이 아닌 2장 “제국주의 침략과 피해”에서 “조선을 둘러싼 청일 양국의 대립은 임오군란과 갑신정변을 거쳐 청일전쟁으로 발전하였다”는 한 문장이 전부다.

국민국가의 모색과정에서 꼭 다루어졌으면 하는 주제 중 소수민족과 이주민의 문제가 있다. 예를 들면 신해혁명 직후 독립을 선언한 외몽골이 우여곡절 끝에 독립을 지켜냄으로써 오늘날 동아시아 국민국가의 하나로 존재하게 되었는데, 이를 교학판이 언급한 것과 달리 천재판은 간과하였다. 중화민국은 그것을 부인하고 계속 지배하에 두려고 하였으나 알타협정에 따라 1946년 1월 뒤늦게 승인하였다.

이주민에 대한 관심은 두 교과서 모두 거의 보이지 않았다. 제국의 팽창에 따라 식민된 일본인은 패망과 함께 귀환하였으나 조선, 타이완, 중국, 베트남

의 이주민은 자의로 타의로 이주하였다가 해방 이후 귀국한 일부를 제외하면 다수가 여전히 현지에 정착하여 살아가고 있다. 동북항일연군 등의 항일운동을 서술하면서도 군대나 단체의 활동만 언급할 뿐 그들의 활동을 뒷받침한 사회경제적 기반인 현지 이주민 사회에 대한 관심이 기울여지지 않은 문제는 개선되어야 한다. 특히 만주지역의 조선인은 종래 불가능하였던 수도작 벼농사를 현지에 보급시킴으로써 일제의 앞잡이라는 비난 속에서도 만주의 새로운 역사를 일구어냈다.²⁵⁾ 재일조선인 문제와 달리 재만조선인(1952년 이후 중국에서는 이를 “조선족”이라 부른다) 문제는 관심 밖에 놓여져 있다. 그들의 역사는 항일운동, 중국의 국공내전, 한국전쟁 등 동아시아사의 중요한 사건들과 긴밀하게 연관되어 있는 만큼 비중 있게 다루어져야 한다.²⁶⁾

국민국가 형성과정에는 국제적 요인 못지않게 자국의 전통, 곧 전근대와의 연관성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한다. 그런 점에서 개항 이후 역사를 각국의 17~19세기 역사와 상호 관련지어 파악할 수 있도록 서술할 필요가 있다. IV단원에서 강조된 “독자적 전통”(2009 교육과정)이든 “지속과 변화”(2011 교육과정)이든 그것은 자연스럽게 개항 이후의 근대화화 및 민족운동을 포함하는 국민국가 형성과정에 긍정·부정의 양면에서 ‘과거의 힘’으로 작용한다. 이를 연결해 주려는 의식적인 노력이 있어야 비로소 역사적 사고를 자극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음에도 두 교과서 모두 이에 관해 거의 관심을 두지 않은 것 같다. 문인사대부 국가와 무사국가 사이에는 재정운동의 구조와 지배엘리트의 권력기반이 달랐으며, 이는 국민국가를 향한 개혁을 추진할 때 중대한 차이를 낳았다.²⁷⁾

조약체결 과정에서도 전통적 중화사상에 의거하여 ‘황제’ 및 그와 관련된 용어의 사용을 둘러싸고 혹은 국가 간의 상하 위계를 둘러싸고 치열하게 경쟁

25) 金穎, 2004, 『近代 滿洲 벼농사 발달과 移住 朝鮮人』, 국학자료원

26) 이에 관해서는 염인호, 2010, 『또 하나의 한국전쟁: 만주조선인의 조국과 전쟁』, 역사비평사; 李海燕, 2009, 『戰後の滿洲と朝鮮人社會-越境, 周縁, アイデンチチ』, 東京: 御茶の水書房 참조.

27) 이에 관해서는 유용태 외, 2010, 앞의 책, 2~3장 참조.

하였다.²⁸⁾ 이에 관한 과거와 현재의 연관성을 드러내기 위해서는 먼저 IV단원에서 明·淸 교체 이후 분명한 조선·일본·베트남의 중화주의를 서술하고 V단원에서도 이를 환기시켜 주는 게 좋다. 교과서의 서술은 후자에 대해서는 말할 것도 없고 전자에 대해서도 불충분하다. 특히 산만하게 흩어져 있어 비교사의 관점을 자극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2_ 오늘날의 동아시아

VI단원 “오늘날의 동아시아”의 핵심 주제는 화해와 평화다. 이를 위해 전후처리, 분단과 전쟁, 산업화와 민주화, 갈등과 화해 등이 성취기준으로 제시되었다.

일본의 전후처리에 관해서는 두 교과서 모두 미국의 필요에 따라 좌우되었다고 보아 동아시아 역내의 연관성을 간과하였다. 1943년 카이로회담 이래 중국이 4대국의 하나로서 일본의 전후처리에 대해서 상당한 권한과 책임을 갖게 되었음을 고려해야 한다. 루스벨트가 천황제의 존폐 여부를 물었을 때, 장제스 [蔣介石]는 “원한은 덕으로 갚아야 한다(以德報怨)”는 명분하에 일본인 자신의 결정에 맡기도록 요청하였다. 나아가 일본 점령을 위해 중국군의 파병을 요청하였음에도 그는 내전에 대비해 이를 거부함으로써 일본의 전후처리를 미국 뜻대로 조절할 수 있도록 방치하였다.²⁹⁾ 이 같은 동아시아 역내의 상호 연관성이 주목되어야 비로소 지역사의 취지에 부응할 수 있다. 오키나와의 독립 혹은 귀속문제도 여기서 함께 다루어져야 한다.

국교회복은 동아시아의 새로운 국제질서의 형성과 관련해 중요한 주제다. 분단국들이 많았던 이 시기, 동아시아 각국은 열전과 냉전으로 인해 보편외교를 펼치기가 극히 어려운 여건에 처해 있었다. 두 교과서는 냉전기의 일본과 중화민국(타이완)의 수교, 한일수교, 중화인민공화국과 미일의 수교, 탈냉전기

28) 유용태, 2012b, 앞의 글, 9·15쪽

29) 유용태, 2006, 앞의 글, 272~276쪽

의 한·중 수교 등을 서술하였다. 천재판과 달리 교학판은 일본의 몽골·베트남과의 수교, 한국의 베트남·라오스·캄보디아와의 수교까지 언급하였다. 그러나 어느 쪽도 1949년 1월 한국이 중화민국과, 그리고 그해 10월 북한이 중화인민공화국과 국교를 수립한 사실에 대해서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다. 이는 대한제국이 청조 중국과 대등한 조약을 맺은 1899년 이래 50년 만의 일이다. 교과서는 19세기 말~20세기 초의 한중 외교관계에 대해서는 상세히 서술하면서도 그 이후의 맥락에 관해서는 무관심하다.

분단정부의 수립과 전쟁에서도 연관성은 당연히 주목되어야 한다. 중국의 내전과 한반도의 분단은 상당한 연관성을 갖고 있다. 그럼에도 국공내전에 대한 교과서의 서술은 너무 소략하다. 중국과 한반도의 경우 신국가 건설을 둘러싼 내전으로 시작되었으나, 미소가 개입하면서 냉전적 진영대립을 격화시켰고 베트남의 경우 독립전쟁이 시작된 후 중·소와 프·미가 개입하면서 냉전체제 속의 진영대립을 격화시켰다.

베트남전쟁에 대한 교과서의 인식은 전에 비해 진전되었다. 두 교과서 모두 베트남전쟁이 독립전쟁으로 시작되었으나 냉전체제의 진영대립으로 인해 나중에 이념전쟁의 성격도 부가된 것으로 파악하였다. 종래에는 자유수호론의 시각에서 이념전쟁의 성격을 강조할 뿐이었다. 한국군의 파병동기와 결과에 대해서도, “전쟁특수를 확보하여 경제성장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하였다”(천재판)거나 “파병을 통해 경제건설 자금을 마련”하였다고 서술하여(교학판) 종래의 자유수호론을 벗어난 점에서 주목된다.³⁰⁾ 두 교과서가 전쟁으로 통일·독립을 이룩한 베트남민주공화국이 이웃 캄보디아·라오스를 침공하여 친베트남 정권을 수립한 사실을 지적한 것, 천재판이 미국 시민의 베트남전 반대 평화운동에 관한 자료를 제시한 것 등은 각각 베트남과 미국의 제국성에 대한 비

30) 천재판은 “베트콩의 지하땅굴”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였는데, 이는 이념전쟁론을 벗어나지 못했음을 말해 주는 예다. ‘베트남 코뮤니스트’의 약칭인 ‘베트콩’은 자유수호의 이념전쟁 논리에 따라 미국인이 만든 용어다. 자기와 적대하는 모든 세력을 오직 이념의 잣대로 재단하여 공산주의자로 단정하는 폭력이 담긴 용어를 그대로 사용하는 것은 피해야 한다.

관적 시각을 제공한다.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자국의 제국성에 대한 성찰이다. 經濟特需論도 자유호론과 마찬가지로 자국중심주의의 시각에 의거하고 있다는 점에서는 다르지 않다. 한국군의 피해(사상자와 고엽제 피해자)를 언급하였으되 미 제국의 진영대립 논리에 편승해 베트남의 독립전쟁에 적대하고 민간인을 학살하는 등 가해의 측면에 대해서는 일체 함구한 것도 그렇다.³¹⁾ 전쟁을 베트남인의 입장에서 이해하려는 자세가 취약하다 보니 이러한 한계가 남겨진 게 아닌가 한다.

여기서 세 전쟁 간의 상호관계, 그리고 그것과 동아시아 각국의 상호관계, 지역질서의 형성과 변화에 미친 영향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베트남과 한국의 독립운동 세력은 중국에서 활동하면서 이념과 체제를 달리하는 중국의 두 정치세력인 국공양당의 지원을 받았으므로 국공내전의 형세로부터 자국 내 건국경쟁에서 심대한 영향을 받게 되었다. 가령 조선의용군은 6만여 명으로 확대 편성되어 국공내전에 참전하였고 만주지역의 형세를 뒤집는 데 중대한 역할을 담당한 후 대부분 북한으로 귀국하여 6·25전쟁 당시 북한 군대의 핵심 역량이 되었다.³²⁾ 이에 관해서는 교학판에만 언급되었다. 중국군의 참전은 그 중요성에 비추어 너무 소략하게 다루어졌다. 베트남민주공화국 군대의 핵심 지도자들은 중국공산당의 長征에 참여한 경력을 갖고 있을 정도로 끈끈한 유대관계를 맺고 있다. 그들이 내전에 승리한 직후 베트남민주공화국을 지원하고 나선 것은 당연하다. 한국전쟁의 휴전으로 중국은 베트남 지원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고 그 결과 1954년 디엔비엔푸의 승리를 가능하게 만들었다. 1965년부터 미국의 전면 개입과 한국군의 파병으로 확대된 베트남전쟁은 한반도의 남북대립을 자극하여 무장계렬라의 남파와 북파를 극대화하였다. 1968년 1·21사태(일명 김신조 사건)가 그 절정이다.³³⁾

31) 한국의 베트남전쟁 성격에 대한 이해가 2001년 전후에 변화한 사정에 대해서는 유용태, 2010, 『한국의 베트남전쟁 인식과 역사화해의 길』,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역사화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참조.

32) 염인호, 2010, 앞의 책 참조.

33) 유용태, 2006, 『동아시아의 베트남전쟁: 남북 삼각동맹의 대응』, 『환호 속의 경

베트남전쟁에 한국군이 파병된 사실은 두 교과서에 모두 언급되었으나 중국군의 파병은 교학판에만 언급되었다. 양국은 1965~1973년 같은 기간에 같은 수의 32만 명을 파견하여 각각 남북 베트남을 지원하였다. 직접 교전하지는 않았지만 한중 양국의 적대관계는 이로써 더욱 증폭되고 지속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전쟁이 종결되는 1975년까지 동아시아의 냉전은 열전과 함께 첨예화되었고, 따라서 그 종전 이후 급속히 완화되어 갔다. 3년 뒤 중국의 개혁개방 정책이 나타난 것은 이런 국제적 조건이 있어서 가능하였다. 1966~1976년의 문화대혁명은 베트남에서 두 진영의 대결로 인해 조성된 국가위기를 외인으로 하여 진행되었다. 당시 한국과 타이완의 군사정권도 그런 배경에 의지하여 존속할 수 있었다.

“각국의 경제성장과 정치발전”에 관해 두 교과서는 각국의 사정을 서술하는 외에 동아시아 역내 교류에 따로 주목하였다. 이때 한일의 경제성장의 초기 조건을 설명하는 두 교과서의 시각은 사뭇 다르다. 천재판이 정부의 정책(산업 육성, 수출장려) 외에 미국의 지원과 전쟁특수 등 외인을 중시한 데 비해 교학판은 이런 외인들에 앞서 각국의 토지개혁이라는 내인을 강조하였다. 토지개혁에 관해서는 한일의 사정뿐만 아니라 북한과 중국의 사정까지 비교해 볼 수 있도록 자료를 제시하였다. 그 대신 타이완의 경제성장에 대해서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았다. 천재판은 타이완의 경제성장에 대해서도 설명하였으며, 이들 3국의 경험을 “동아시아형 발전모델”로 강조하였다.

사회주의권의 경제발전 에 대해서는 계획경제와 대중동원에 따른 발전전략이 실패로 돌아가고 중국·베트남이 개혁개방을 통해 시장경제를 도입하는 과정과 그 결과 이룩된 고도성장이 서술되었다. 이때 중국과 북한이 사유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 경제체제를 수립한 시점에 관해 천재판이 1950년대로 본 데 비해 교학판은 건국 직후로 보았다. 그 시차는 불과 몇 년밖에 안 되는 짧은 기간이지만, 전자의 시각에서는 신민주주의라는 과도기를 인정할 수 있고 후자의 시각에서는 이를 인정할 수 없다는 점에서 크게 다르다. 당초 중국도 북한

도 곧바로 사회주의 체제를 실행할 물질적 조건이 결여되어 있음을 인정하고 혼합경제와 연합정부(각 당파의 공동정부)를 축으로 하는 신민주주의의 과도 단계를 설정하고 있었다. 그 후 한국전쟁을 비롯한 내외의 요인으로 인해 초기에 포기되었다.³⁴⁾ 이 사실이 주목되어야 왜 국가사회주의 체제가 단기간에 개혁개방으로 나아갈 수밖에 없었는지를 이해할 수 있다.

개혁개방 이후 중국과 베트남의 고도성장을 설명하면서는 “동아시아형 발전모델”로 알려진 일본, 한국, 타이완 등의 경험이 어떻게 활용되었는지에 관해 관심을 둘 필요가 있음에도 두 교과서 모두 그러지 않았다. 실제로 중국은 덩 샤오핑의 지시에 따라 1978년부터 중국사회과학원 산하의 조선경제연구회를 통해 한국의 수출주도형 발전전략을 면밀하게 연구하고 차용하였다.³⁵⁾ 물론 유고슬라비아, 타이완, 일본의 경험도 검토되어 취사선택되었을 것이다. 중국이 이웃한 동아시아 각국의 경험을 연구해 학습하고 이를 국가발전 전략의 일부로 삼았다는 사실은 역사적으로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이 과정에서 중국과 이들 동아시아 각국에는 쌍방향의 상호의존과 협력이 이루어졌다. 하나는 한·일의 자본과 기술이 화교자본과 함께 중국의 급속한 경제 성장에 기여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1970년대 말 오일쇼크로 어려워진 일본·한국 경제가 1980년대에 이내 회복되었다는 것이다. 교과서는 후자의 배경을 바로 그 때 급성장하기 시작한 중국 시장과 관련지어 설명하지 못한 채 각국의 경제성장을 따로 서술하였다. 그런 다음 “동아시아 경제권의 형성” 혹은 “지역 내 경제교류의 활성화”란 별도의 항목에서 이에 관해 어느 정도 서술하였으나 과정이 생략된 결과론으로 비치지 않을까 우려된다. 그러나 교학판의 경우는 너무 소략하다.

각국의 정치 민주화와 사회변화에 관해서는, 일본의 55년체제와 한국·타이완의 군사독재체제 속에서 집권당에 의한 사실상의 1당체제가 장기 지속되

34) 이에 관해서는 유용태, 2013, 「신민주주의, 20세기 중국의 정치유산」, 『역사와 현실』 87집, 93~96쪽; 이남주, 2010, 「마오쩌둥 시기 급진주의의 기원: 신민주주의론의 폐기와 그 함의」, 『동향과 전망』 78호 참조.

35) 정재호, 2011,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58~59쪽

었고 1997년 이후 선거를 통해 재야당의 정권으로 교체되는 과정이 서술되었다. 이는 산업화에 따른 사회의 다원화 및 시민사회세력의 성장과 함께 탈냉전의 국제적 조건 위에서 비로소 일어날 수 있었던 변화이므로 이런 국내외적 요인과의 관련 속에서 이해될 수 있도록 상호관련지어 주어야 한다. 중국, 베트남, 북한 등 사회주의권의 정치에서 공산당 일당체제가 성립되는 과정과 중국·베트남의 개혁개방으로 인한 변화를 서술하였으나, 1989년 천안문 민주화 시위를 제외하면 모두 앞 장의 경제발전에서 다른 내용의 중복서술이다.

그 결과, 정작 정치와 사회의 변화에 대한 서술은 거의 없다. 다만 천재판이 “한국, 일본, 중국의 사회변화”라는 항목을 두어 이농과 도시화, 핵가족화, 노인인구 증가 등을 다룬 정도다. 정치변화는 일당제가 유지되므로 크지 않지만 중국에서는 최고 지도자의 임기제, 기초단위[鄉鎮]의 행정책임자·인민대표의 직접선거, 각종 민간단체의 입법·조례제정 참여 등의 진전을 보이고 있다. 그에 비해 사회변화는 심대하며 특히 NGO를 비롯한 각종 민간단체들의 활성화는 주목되는 만큼 이에 대한 서술이 필요하다. 그리고 정치개혁을 둘러싼 논쟁도 소개하고 이를 역사적 맥락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안내할 필요가 있다.

몽골인민공화국도 사회주의국가였다. 하나였으므로 이에 포함시켜 다루어야 하는데 두 교과서 모두 이에 관심을 두지 않았다. 몽골은 1988년 “시네츠렐(쇄신)”을 결정하고 시장경제와 복수정당제를 도입하여 경제체제는 물론 정치체제까지 전환하였다.³⁶⁾ 따라서 이는 가장 변화하지 않은 북한과 대비되는 가장 크게 변화한 예로 주목될 만하며 그 귀추는 중국·베트남의 정치개혁에 긍정·부정의 양면에서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을 것이다. 몽골에 대한 시야가 닫혀 있는 것은 타이완의 정치와 민주화를 천재판만이 언급한 것과 함께 교과서

36) 강톨가, 이평래 옮김, 2009, 『몽골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393~429쪽. 1990년 다당경쟁의 자유선거가 실시되어 몽골인민혁명당의 일당독재체제가 민주화되었는데, 이를 “민주혁명”이라 부른다. Tsedendambyn Batbayar, 2002, *Modern Mongolia: A Concise History*, Ulaanbaatar, Mongolian Center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pp. 81~84

의 시야가 너무 좁게 한정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동아시아의 (역사)갈등과 화해”에서는 각종 갈등요인을 다룬 후 화해를 위한 노력을 소개하였다. 먼저 일본 역사교과서 문제와 중국 동북공정을 중심으로 한 역사분쟁, 섬과 바다의 영유권을 둘러싼 영토분쟁이 다루어졌다. 분쟁의 현황을 서술하는 데서 나아가 분쟁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관심을 자극하는 서술이 필요하다. 여기에는 전후처리의 불철저, 내셔널리즘, 전통적 중화사상 등 여러 요인이 작용하였다.

이때 한중일과 베트남에서는 역사가,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드문 특별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에도 유의할 필요가 있다. 한중일과 베트남은 일찍부터 집권국가를 형성하고 유교의 華夷思想을 공유하면서 자신을 中華로 여기고 이웃 나라를 夷狄으로 멸시해왔다. 이런 ‘과거의 힘’이 오늘날 이 지역의 국가 정체성에 미치는 영향은 근대의 내셔널리즘 못지않게 지대함에도 흔히 후자의 문제에 대해서만 관심을 둔 채 전자를 홀시하곤 한다.³⁷⁾ 미국 같은 외부에서 보기에 이들 4국의 국가정체성은 전근대 유교문화의 유산과 결합되어 있으며 그 문화는 실용주의에 반대하는 도덕적 순결주의와 대국지향이 강렬하다. 이러한 화이론적 국가정체성은 대외정책에서 주권 강화와 영토 극대화를 추구하는 데 기여하며 이 과정에서 역사는 늘 그것을 정당화하는 기제로 작용해왔다.³⁸⁾ 그런 만큼 역사가 현실정치와 미분화된 채 현실의 필요에 따라 자의로 해석되기 일쑤다. 이를 방지할 경우 보편가치와 괴리된 국가정체성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 이때의 보편가치가 꼭 서구적 기준에 의거한 것일 이유는 없다. 우선 동아시아 역내에서 상대국에게 수용되어 소통될 수 있는 정도의 것이면 좋다.³⁹⁾ 역외의 미국에서는 다르게 보지만, 가령 한중일 3국의 시민사회가 공

37) 이에 대한 문제제기는 Yu Yongtae, 2007, “The Logic of Historical Disputes and Their Origins in Northeast Asia: Reflection for Communication”,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Seoul), Vol. 4-2, Dec. 참조.

38) Gilbert Rozman, ed., 2012, *East Asian National Identities: Common Roots and Chinese Exceptionalism*, Stanford University Press, pp. 10~11, 16

39) 백영서, 2007, 앞의 글, 120쪽

유할 수 있는 가치라면 역외에서도 통하지 않을 리가 없다.

교학관이 이 장의 서두에서 갈등을 다루기에 앞서 먼저 “동아시아, 새로운 국제관계를 모색하다”라는 항목을 두어 아세안(+3), 동아시아 정상회의 등과 같은 지역협력 체제의 형성과 모색을 다룬 것은 의미 있는 시도다. 지역협력의 기초 위에서 갈등과 화해의 문제를 파악하자는 시각인 것이다. 이 교과서가 역사문제에 그치지 않고 특이하게도 “해결해야 할 환경 문제”라는 항목을 두어 대기오염, 에너지, 사막화 등에 이어서 한·중·일·러·몽골이 참여한 동북아 환경협력회의(1992년 성립)를 다룬 것도 이런 문제의식과 연관되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생태학적 지속 가능성이야말로 역사해석에도 적극 도입되어야 할 후기 산업사회의 문명적 가치다. 바로 그것을 공유할 때 우리는 국경을 넘어 지역차원에서 서로 소통할 수 있는 기준과 원칙에 합의할 수 있을 것이다.

두 교과서는 모두 화해를 위한 노력으로 국가 간 대화, 특히 역사대화를 강조하였다. 한일 간의 역사대화는 정부차원의 공동연구와 민간차원의 교과서 대화로 다원화되고 있다. 한중 간에도 그에 상응하는 공동연구와 대화를 만들어야 한다. 현재 불거진 문제들로 보아 한일·한중 간의 역사대화에서 한국은 피해자의 입장에 서게 된다. 그러나 정작 동아시아 지역사가 추구하는 취지, 곧 자국의 제국성에 대한 성찰에 충실하려면 한국이 가해자로서 나서야 하는 역사대화에도 관심을 기울여 적극 나서지 않으면 안 된다. 그 주요 대상이 되는 주제는 다름 아닌 한국이 참전한 베트남전쟁에 대한 인식이다. 이에 관해서는 천재판만이 어느 정도 관심을 두어, “한국은 베트남전쟁에 참여하여 베트남 인들과 전쟁을 한 경험이 있다. 그래서 최근에는 과거에 대한 화해를 모색하고 베트남과의 경제협력을 긴밀히 하고 있다”고 하였다.

여기서 전쟁과 관련한 “과거에 대한 화해”는, 집필자의 자기검열 탓인지 아니면 문제의식 자체의 미흡함 탓인지 너무나 애매모호한 표현이다. 한국군은 주로 중부 5개 성에서 작전을 전개하였는데, 그곳은 호치민 루트를 통해 남하하는 북베트남군이 통과해야 하는 핵심 요충지여서 전투가 가장 극렬한 전장에 속했다. 그런 만큼 한국군의 피해도 컸지만 전선이 없는 게릴라전의 특성도 반영되어 현지 주민들과의 긴장이 특별히 첨예하였고 그로 인해 민간인 피해

와 민간인 학살이 다수 발생하였다.

그러나 한국 정부는 진상을 조사하지도 않은 채 1999년부터 그런 마을들을 특별히 선정하여 학교와 병원을 지어 주었다. 한국의 시민단체들은 이것이 진실규명과 사죄를 덮으려는 시혜행위라고 보아 스스로 진실을 밝히려고 노력하였지만 반대세력의 비판과 공격에 밀려 힘을 잃고 침체되었다. 2001년 김대중 대통령이 베트남 국가주석에게 참전과 관련해 포괄적으로 사과한 것이 그나마 한국 사회가 민주화와 더불어 진행한 화해노력의 성과다.

V. 맺음말

동아시아사 교육과정은 내용선정의 기준으로 공통적이거나 연관성 있는 요소, 다양성을 보여줄 수 있는 요소, 교류와 갈등 요소 등 세 가지를 제시하였다. 교과서는 이를 내용서술에 얼마만큼 관철하였으며, 그리하여 국사·세계사 교과서와 얼마만큼 다른 모습을 보였는가? 천재판의 경우, 주제별로 관련된 내용을 모아서 제시함으로써 독자 스스로 적어도 한중일 3국의 사정을 연관지어 보거나 비교해 볼 수 있게 한 점에서는 일단 진전이라 할 만하다. 다만 그런 시각을 실제 서술에 직접 드러냄으로써 학생들의 사고를 직접 자극할 수 있게 한 예는 드물다. 교학관은 각국사로 나누어 서술하였으나 그 속에서 국제관계사를 증시하여 일국사의 한계를 보완하려 한 것이 아닌가 한다.

이를 세계사 교과서와 비교해보면 후자의 결함을 일부 극복한 면도 있고 여전히 반복하고 있는 면도 있다.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건설운동을 종전과 마찬가지로 개항부터 제1차세계대전 직전까지를 다름으로써 일본의 성공과 다른 나라의 실패를 결과론적으로 대비시키는 구도를 견지한 것은 반복의 예다.⁴⁰⁾ 한

40) 검토된 세계사 교과서는 김형중 외, 2012, 『세계사』, 금성출판사; 김덕수 외,

편 세계사 교과서는 제1차세계대전 이전 동아시아를 각국사의 합으로 구성해서 중국사는 중국사로, 일본사는 일본사로만 제시될 뿐 연관성(국가 간의 상호 영향, 인식, 학습, 외교관계)에 대하여 거의 관심을 두지 않았으며, 제1차 세계대전 이후 동아시아에 대해서는 유럽중심의 구성 탓에 분절되고 파편화된 채 흩어진 모습으로 서술하였다. 이러한 세계사와 달리 동아시아사가 국가 간의 상호관계에 관심을 기울이기 시작하였고 각국사의 줄기를 파악할 수 있게 서술한 점은 극복의 예다. 한국사 교과서에는 한국의 외교와 국제관계조차 누락된 경우가 적지 않은데⁴¹⁾ 이런 점들은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분명히 개선되었다. 특히 자국중심주의를 상대화하려 노력하기 시작하였다는 점이 주목된다.

이로써 볼 때, 동아시아사 서술은 한중일 3국사를 균형 있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되 연관사·비교사나 관계사·교류사를 가능한 곳에서 약간씩 가미하여 내용을 구성하는 수준에 와 있다. 나아가 한국사를 지역의 맥락 속에서 이해하도록 함으로써 국사와 세계사의 이분법을 넘어설 토대를 마련하였으며 화해와 평화의 역사인식을 배양하는 데 의미 있는 진전을 보였다. 그런 점에서 지역사로서의 기본 틀은 갖춘 셈이다. 내용서술에서 연관과 비교의 수준을 높이고 각 주제에 이 시각을 확대 적용하여 나아가는 것이 앞으로 큰 과제다.⁴²⁾

이런 제한된 성과라도 단기간에 이룩해 낼 수 있었던 데는 집필자의 분투 외에도 동아시아 각국 중 제국주의와 제국성이 가장 적은 한국의 조건이 작용했을 것이다. 중국중심주의의 문제는 근현대사의 경우 거의 없으며, 어떤 경우에는 중국 및 그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좀 더 관심이 기울여져야 할 정도로 간

2012, 『세계사』, 천재교육; 강택구 외, 2012, 『세계사』, 더텍스트다.

41) 가령 한철호 외, 2012, 『한국사』, 미래엔 컬처그룹; 도면희 외, 2012, 『한국사』, 비상교육; 이인석 외, 2012, 『한국사』, 삼화출판사는 한중 간 최초의 근대적 조약인 한청통상조약조차 언급하지 않았다.

42) 이를 위해 교과서 분량을 다소 늘리는 것도 필요하다. 현재 교학판은 256쪽, 천재판은 286쪽에 불과하다. 세계사 교과서의 분량도 이보다 많지 않다. 모두 선택과목으로서 몸집 줄이기 경쟁을 벌인 결과다. 400쪽이 넘는 한국사 교과서와 비교된다.

과된 면마저 보인다. 구미모델의 부국강병론에 기댄 강자의 논리를 당연시하는 역사인식, 곧 제국의 논리는 우리 스스로 동아시아를 소외시키고 인간다운 삶의 조건을 억압해온 주범인데, 이를 성찰하는 작업은 여전히 큰 과제로 남아 있다.

역사화해란 결국 가해자가 속한 국가와 사회의 자기성찰이며 그 반대세력과의 내부투쟁 속에서만 진전될 수 있다. 일본군의 각종 침략전쟁, 중국군의 한국전쟁 참전, 한국군의 베트남전쟁 참전을 둘러싼 역사인식의 갈등도 그 본질은 마찬가지로 자국 내에서 자국의 제국성을 성찰하려는 쪽과 이를 자학이라며 비판하는 쪽 간의 대립에 있다. 해당 국가 바깥에서의 비판과 자국은 하나의 보조구실밖에 되지 않는다. 일본의 황국식민사관과 중국의 중화민족사관에 의거한 역사인식의 문제점은 우선 일본과 중국 안에서 토론과 대화를 통해 이견을 좁힐 때 해결의 실마리가 풀릴 수 있다. 한국의 국가주의 사관도 그러하다. 동아시아 지역사가 거기에 밖으로부터 하나의 자극을 주면서 ‘희생자 경쟁’을 ‘성찰경쟁’으로 바꿔 나가는 분위기를 북돋아 줄 수 있으면 최선이다.

한국사 전공자로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개발에 적극 나선 안병우는 “지금까지 한국사 교과서는 세계사와의 관계를 거의 고려하지 않고 서술하였지만 동아시아사와는 그럴 수 없을 것이며 자연스럽게 한국사 교과서 서술에 변화를 초래할 것으로 예상된다”⁴³⁾ 필자도 공감하는 바이며 세계사 교과서 서술에도 이런 변화가 일어나기를 고대한다. 다만 동아시아사의 취지와 구성방법이 국사·세계사 서술에도 모종의 영향을 미치려면 시간이 필요할 듯하다. 물론 국사·세계사가 새롭게 구성되어 동아시아사의 진전을 자극하는 쌍방향의 영향을 기대할 수 있다면 더욱 좋다.

동아시아사 서술의 원칙과 방향은 바람직하게 설정되었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수정보완작업을 지속해나간다면 지역사의 이름에 값하는 교과서로 발전시킬 수 있을 것이다. 그러려면 무엇보다 역사연구에서 일본제국에서 창안하여 한중 양국도 공유해온 ‘동양사’의 체계와 논리를 직시하고 이를 대신할 ‘(동)

43) 안병우, 2009, 앞의 글, 9쪽

아시아사'의 정립을 향해 노력해야 한다. 탈아론적 '동양사'의 극복은 새로운 '(동)아시아사'의 전제가 아닐 수 없다. '돌'은 이미 던져졌으니 이를 갈고 닦아 '옥'으로 만드는 일은 우리 모두가 함께 감당할 몫이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 교육인적자원부, 2007, 『사회과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2009, 『사회과교육과정』
- 교육과학기술부, 2011, 『사회과교육과정』
- 강택구 외, 2012, 『세계사』, 더텍스트
- 김덕수 외, 2012, 『세계사』, 천재교육
- 김형중 외, 2012, 『세계사』, 금성출판사
- 도면희 외, 2012, 『한국사』, 비상교육
- 이인석 외, 2012, 『한국사』, 삼화출판사
- 한철호 외, 2012, 『한국사』, 미래엔 컬처그룹
- 손승철 외, 2012, 『동아시아사』, 교학사
- 안병우 외, 2012, 『동아시아사』, 천재교육
- 金穎, 2004, 『近代 滿洲 벼농사 발달과 移住 朝鮮人』, 국학자료원
- 김한중, 2006, 『역사교육과정과 교과서 연구』, 선인
- 민두기, 1977, 『일본의 역사』, 지식산업사
- 안병우 외, 2007, 『동아시아사 교육과정 시안 개발』, 동북아역사재단 학술연구과제 연구보고서
- 양호환, 2012, 『역사교육의 입론과 구상』, 책과함께
- 염인호, 2010, 『또 하나의 한국전쟁: 만주조선인의 조국과 전쟁』, 역사비평사
- 유용태 · 박진우 · 박태균, 2010 · 2011, 『함께 읽는 동아시아 근현대사』 1 · 2, 창비
- 유용태, 2006, 『환호 속의 경중: 동아시아 역사인식과 역사교육의 성찰』, 휴머니스트
- 李能植, 1948, 『近代史觀研究』, 同志社
- 李東潤, 1953, 『東洋史概說』, 동아문화사
- 일본의전쟁책임자료센터 편, 박환무 옮김, 2011, 『야스쿠니신사의 정치』, 동북아역사재단
- 정재호, 2011, 『중국의 부상과 한반도의 미래』,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 강톨가, 이평래 옮김, 2009, 『몽골의 역사』, 동북아역사재단
- 미타니 히로시 외, 강진아 옮김, 2010, 『다시 보는 동아시아 근대사』, 까치
- 아카자와 시로, 박화리 옮김, 2008, 『야스쿠니 신사』, 소명출판

앤드루 고든, 김우영 옮김, 2005, 『현대 일본의 역사: 도쿠가와 시대에서 2001년까지』,
이산

楊軍·張乃和 主編, 2005, 『東亞史: 從史前至20世紀末』, 長春出版社

山本有造, 2004, 『帝國の研究』, 名古屋大學出版會

李海燕, 2009, 『戰後の滿洲と朝鮮人社會-越境, 周縁, アイデンチチ』, 東京: 御茶の
水書房

坂野潤治, 1997, 『近代日本の國家構想』, 東京: 岩波書店

Rozman, Gilbert, ed., 2012, *East Asian National Identities: Common Roots and
Chinese Exceptionalism*, Stanford University Press

Tsedendambyn Batbayar, 2002, *Modern Mongolia: A Concise History*,
Ulaanbaaar, Mongolian Center for Scientific and Technological Information

김성보, 2007, 「민족·국가사와 동아시아사의 접맥: 동아시아 역사인식 공유를 위한
모색」, 『역사와실학』 32집

박원호, 1987, 「한국 동양사학의 방향-독자적인 동아시아 역사상의 형성을 위한 제
언」, 『제30회 전국역사학대회 발표요지』

박원호, 2009, 「『동아시아사로서의 한국사』 구성을 위한 재론」, 『韓國史學報』 34호

백영서, 2004, 「주변에서 동아시아를 본다는 것」, 정문길 외 편, 『주변에서 본 동아시아』, 문학과지성사

백영서, 2007, 「자국사와 지역사의 소통: 동아시아인의 역사서술의 성찰」, 『歷史學報』
196집

안병우, 2009, 「동아시아사의 의미」, 『2009년 하계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교재』, 동북
아역사재단

유용태, 2001, 「역사교과서 속의 아시아 국민국가 형성사」, 『역사비평』 57호

유용태, 2005, 「다원적 세계사와 아시아, 그리고 동아시아」, 『역사교육과 역사인식』,
책과 함께

유용태, 2008, 「한국의 동아시아 인식과 구성: 동양사연구 60년을 통해서 본 동아시아
사」, 아시아평화와역사교육연구소 편, 『한중일 동아시아사 교육의 현황과 과제』,
선인

- 유용태, 2009, 「동아시아사의 의미: 연관과 비교의 지역사」, 『2009년 하계 동아시아사 교원연수 교재』, 동북아역사재단
- 유용태, 2009, 「개항과 근대 국민국가 수립」, 『동아시아사 교과서 집필 안내서』, 동북아역사재단
- 유용태, 2010, 「한국의 베트남전쟁 인식과 역사화해의 길」,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의 역사화해』, 유네스코한국위원회
- 유용태, 2012a, 「서평: 미타니 히로시의 편, “다시 보는 동아시아 근대사”」, 『중국근현대사연구』 54집
- 유용태, 2012b, 「중국의 지연된 근대외교와 한중관계: 동아시아 지역사의 시각」, 『한중인문학연구』 37집
- 유용태, 2013, 「신민주주의, 20세기 중국의 정치유산」, 『역사와 현실』 87집
- 유장근, 2009, 「‘滿淸식민주의’를 둘러싼 중외학계의 논의」, 유장근 외, 『중국 역사학계의 청사연구 동향』, 동북아역사재단
- 이남주, 2010, 「마오쩌둥 시기 급진주의의 기원: 신민주주의론의 폐기와 그 함의」, 『동향과 전망』 78호
- 이삼성, 2011a, 「‘帝國’개념의 고대적 기원: 한자어 ‘帝國’의 서양적 기원과 동양적 기원, 그리고 일본서기」, 『한국정치학회보』 45권 1호
- 이삼성, 2011b, 「‘帝國’개념과 19세기 근대일본」, 『국제정치논총』 51권 1호
- 今野日出晴, 2009, 「‘東アジア史’で考える - 歴史教育にわたるといふこと」, 『岩手大學文化論叢』 7・8輯
- 鈴木哲雄, 2006, 「歴史教育再構成の課題 - 歴史教育科目“東(北)アジア史”の可能性」, 『歴史評論』 679號
- Yu Yongtae, 2007, “The Logic of Historical Disputes and their Origins in Northeast Asia: Reflection for Communication”,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Seoul), Vol. 4-2

[ABSTRACT]

Narrating the Regional History of East Asia in Korea's
Recent Textbooks:
The Present Situation and Tasks

Yu Yongtae

In this article the Korean high school textbooks for “History of East Asia” published in 2012 and their curriculum were analyzed to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 and the task of narrating regional history with a focus on modern history. The main purpose of regional history is to foster a historical consciousness which regards highly coexistence and peace by overcoming a dichotomy of the national history and world history, and by simultaneous understanding of a mutual association within the region of East Asia and the distinctiveness of each nation. The curriculum of East Asian history presented three elements as criteria for selecting contents. These were common or correlated elements, elements showing diversity, and elements of exchange and conflict.

Two textbooks show different narrations of the above elements. The textbook published by Chunjae Education Inc. presents thematically related contents together, which allows readers to connect or compare the situations of Korea, China, and Japan by themselves. The textbook published by Kyohak Publishing Co. shows narration divided by each country with an emphasis on the history of international relations which attempts to complement a limitation of a single country's history.

These textbooks include the history of the native country as a part of the regional history, which led to an opportunity to relativize a native-country-centrism, which is a new aspect that was not seen in the existing textbooks of world history and Korean history. It would be the best if Korea's East Asian history can boost the atmosphere that changes "victims competition" into "introspection competition" in each country.

These two textbooks still have a long way to go to provide more appropriate contents as regional history. This can be achieved by emphasizing the following three tasks. First, narrate the formation process of a nation-state by extending it to the end of World War Two, but do not limit the time before World War One. The second task is to enhance the level of connection and comparison and to have expanded applications of this view simultaneously when narrating each topic. The third task is to face the expansion-aimed empire which alienates East Asia and is the principal offender that has suppressed human living conditions, and to overcome it.

When the principles and the direction of narrating East Asian history are desirably set, the textbooks can be improved by continued modification and supplementation to develop proper regional history textbooks. The historical research should proceed toward overcoming the structure and logic of the "Oriental history" (J. *Tōyōshi*) originated by the modern empire of Japan. One may expect that Korean East Asian history education can establish an "(East) Asian history" which will replace the "Oriental history" that has been shared by Korea and China.

Keywords

East Asian history textbooks, regional history, empire, Oriental history(*J. Tōyōshi*), introspection competition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동아시아사와 세계사 연계 방안

강선주 | 경인교육대학교 사회교육과 교수

I. 머리말

한국에서 동아시아 담론은 냉전 체제가 붕괴되면서 부각되었다. 그리고 자본주의 체제의 지구적 확산을 배경으로 국가 단위를 넘어서는 다른 ‘체제’, ‘사회’ 혹은 ‘공동체’를 구상하는 과정에서 심화되었다. 그런데 ‘전 지구화 담론’과 ‘동아시아 담론’을 교육적으로 어떻게 고려할 것인가에 대한 학계의 본격적인 고민이 시작되기도 전에 정치적 판단으로 고등학교 동아시아사 과목이 탄생하였다. 따라서 역사학계, 역사교육계가 과목으로서 동아시아사를 어떻게 정의해야 하는지, 또 중·고등학교의 세계사 과목에서 ‘지역 세계’라는 개념으로 다루는 동아시아사와는 어떻게 구별하여 접근해야 하는지 등에 대한 준비가 제대로 되기 전에 학교에서는 동아시아사를 가르치게 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과 ‘2009 개정 교육과정’에 따르면 동아시아사는 “국사와 세계사의 중간적 역사 단위”로서 국가보다는 크고 지구보다는 작은 역사

분석의 단위다. 이렇게 역사 분석 단위의 측면에서 접근하면 세계사 속에서 동아시아사를 지역 세계의 하나로 학습하는 것과 구별하기 쉽지 않다. 그런데 교육과정은 이 과목을 통해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 구현”까지 모색한다.¹⁾ 그렇다면 세계사와는 다른 접근이 가능하다. 문제는 우리가 동아시아인으로서 사고하고 행위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가에 대한 숙의가 충분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동아시아인으로서 정체성을 가질 수 있게 중요한 사건을 선정하고 해석하는 것은 한국인으로서 그렇게 하는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다.

‘한국사와 세계사의 중간에 위치하는 역사 단위’로서 동아시아사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한국사나 세계사와 어떻게 연계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중학교에서 한국사와 세계사를 함께 가르치는 ‘역사’는 필수 과목이지만, 고등학교에서는 세계사, 동아시아사, 한국사는 선택 과목이다. 동아시아사를 선택한 학생은 중학교에서 학습한 한국사를 동아시아사의 맥락에서 심화 학습할 기회가 있다. 그렇다면 중학교에서 학습한 세계사는 어떻게 관련지어 학습하게 할 수 있을까?

사실 교육과정이나 집필기준이 동아시아사를 세계사와 연계할 것을 요구하지는 않기 때문에 필수적인 사항은 아니다. 다만 동아시아사를 ‘지역’보다 더 큰 단위에서 조망하게 함으로써 지역주의를 경계하고 동아시아사를 상대화할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다는 점에서 동아시아사 교과서와 세계사를 연계하는 방안에 대해 고려해 볼 만하다.

현재 사용되는 두 권의 동아시아사 교과서는 ‘세계사’적 맥락에서 동아시아사를 검토할 수 있는 몇 개의 장치를 사용하였다.²⁾ 이 글에서는 현재 사용되는 동아시아사 교과서들이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어떻게 연계하였는가에 대해 분석하고 개선 방안을 제안해보고자 한다. 개선 방안은 학생들이 중학교에서 학습한 세계사와 동아시아사를 보완·심화하는 방향, 또 동아시아사나 세계사

1) 교육과학기술부, 2011, 8, “동아시아사”, 『2009 개정 교육과정(2011 개정 교육과정) 별책7』, 교육과학기술부고시 2011-361호, 94쪽

2) 안병우 외, 2011, 『동아시아사』, 천재; 손승철 외, 2011, 『동아시아사』, 교학사

와 관련된 최근 학계의 문제의식을 교육에 반영하는 방향에서 궁리해보고자 한다. 요컨대 학생들의 공적인 선행 학습 지식과 학문적 담론의 측면을 고려하여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세계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고자 한다.

II.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세계사 연계 방안

1. '세계사'를 제시하는 형식³⁾

두 권의 동아시아사 교과서가 세계사를 다루는 형식에는 큰 차이가 있다. 안병우 외는 『동아시아사』에서 별도의 읽기 자료를 제시하여 동아시아와 세계사를 적극적으로 연계하려 하였다. 손승철 외의 『동아시아사』에서는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의도적으로 연계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는 않았다. 그러나 두 권은 공통적으로 몇몇 주제의 경우에는 본문에서 동아시아사를 설명하기 위해 다른 지역의 역사를 언급하기도 하였다.

안병우 외는 '그 때 세계는'이라는 별도의 읽기 자료를 중단원 단위로 제시하여 동아시아사와 관련된 세계사를 적극적으로 끌어왔다. 예를 들면 대단원 1의 중단원인 '4. 국가의 성립과 발전'에서 비슷한 시기 인도와 지중해 지역에 통일 제국(마우리아 왕조, 로마 제국)이 들어섰던 점을 '그 때 세계는'을 통해 설명하였다. 내용은 다음과 같다.

3) 교과서들이 '세계'라고 제시하는 부분을 '세계사'라고 볼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지가 있다. 이 글에서는 논의의 편의를 위해 교과서 분석 시 교과서 저자들이 정의한 동아시아사 범주 이외의 지역의 역사에 대해 다루는 경우 세계사를 다루는 것으로 보고 분석하였다.

기원전 3세기 동아시아에서 고조선이 발전하고 진·한 통일 제국이 들어서던 시기에 세계 각 지역에서는 통일의 기운이 무르익던 시기다. 인도에서는 마우리아 왕조가 북인도를 통일하였다, 지중해에서는 도시 국가 로마가 주변 여러 소국을 누르고 이탈리아 반도를 통일하였다, 기원전 1세기에는 유럽, 아시아, 아프리카의 3대륙에 걸친 대제국으로 성장하였다.⁴⁾

또 동아시아에서 ‘인구이동과 교류의 증대’를 다루면서 ‘유럽에서 게르만족의 이동’에 대한 읽기 자료를 제시하기도 하였다. ‘그 때 세계는’에서는 대체로 동아시아의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과 관련된 혹은 비슷한 다른 지역의 역사적 사건이나 현상을 다루었다. 중단원별 구체적인 ‘그 때 세계는’의 내용은 <표 1>과 같다.

<표 1> ‘그 때 세계는’ 구성 (안병우 외, 2011)

대단원	중단원	소주제 본문 내용	‘그 때 세계는’ 내용 관련 지역	
			제목	관련 지역
I. 동아시아 역사의 시작	1. 동아시아와 동아시아사 학습			
	2. 선사문화의 전개	• 청동기 문화의 발전	• 고대 문명의 성립	• 4대 문명지
	3. 농경 사회와 목축 사회	• 농경과 농경 사회	• 서아시아- 보리, 밀, 말, 낙타 • 아메리카- 옥수수, 감자, 라마	• 서아시아 • 아메리카
	4. 국가의 성립과 발전	• 고조선 • 진·한 통일제국	• 통일의 기운: 마우리아(인도), 로마의 이탈리아 통일, 로마 제국(지중해)	• 인도 • 유럽

4) 안병우 외, 2011, 앞의 책, 37쪽

대단원	중단원	소주제 본문 내용	'그 때 세계는' 내용 관련 지역	
			제목	관련 지역
II. 인구 이동과 문화의 교류	1. 인구이동과 교류의 증대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부여족의 이동과 고구려 • 선비, 흉노 등 5호의 남하 • 한반도 주민의 일본 열도로 이주 	• 게르만족 이동	• 유럽
	2. 불교의 전파와 토착화	• 대승 불교 성립 발전	• 이슬람교의 성립과 확산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서아시아 • 북아프리카 • 인도 동남 아시아
	3. 율령체계의 수용			
	4. 국제 관계와 외교 활동			
III. 생산력의 발전과 지배층의 교체	1. 북방 민족의 성장	• 몽골 제국	• 십자군 전쟁	• 유럽
	2. 농업의 발전과 소농 경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송 • 고려, 조선 • 일본 헤이안 시대 말기 	• 유럽에서 삼포제 확산, 말 이용, 농업 기술 발달	• 유럽
	3. 새로운 지배층의 등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중국의 오대십국 • 한반도, 후삼국, 고려 무신 정권 • 가마쿠라 막부 	• 유럽의 봉건사회	• 유럽
	4. 성리학의 성립과 확산	• 송 대와 조선 등의 성리학	• 스콜라 철학 발달	• 유럽
IV. 국제질서의 변화와 독자적 전통의 형성	1. 17세기 전후의 동아시아 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명 • 조선 •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통일 	• 성 바르톨롬메오의 대학살(30년 전쟁)	• 유럽
	2. 교역망의 발달과 은 유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6세기 동아시아 교역망 발달 • 은 유통 	• 아즈텍 문명의 파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남아메리카 • 유럽

대단원	중단원	소주제 본문 내용	'그 때 세계는' 내용 관련 지역	
			제목	관련 지역
	3. 인구의 증가와 도시화	<ul style="list-style-type: none"> • 17~18세기 청 • 조선 • 일본의 인구 증가 	• 18세기 유럽에서 극심한 식량위기에 감자와 옥수수가 재배되었다	• 유럽
	4. 전통 사회의 완성	• 청대의 중국 사회와 조공·책봉 체제	• 프랑스 혁명	• 유럽
V. 국민 국가의 수립	1. 개항과 국민국가 수립 노력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양무운동 • 메이지 유신 • 조선의 강화도조약 	• 제국주의 국가 간의 충돌(아프리카 분할)	• 유럽
	2. 제국주의 침략과 피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일본 제국주의 • 제2차세계대전 	• 전제주의의 확산(히틀러와 무솔리니)	• 유럽
	3. 민족주의와 민족 운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화단 • 5·4운동 • 3·1운동 • 베트남 유신회 	• 러시아에서 혁명이 일어나다	• 유럽
	4. 평화를 향한 노력			
	5. 서구 문물의 수용과 사회 변화	• 여성의 권리 신장과 여성 교육	• 여성 해방의 효시 인형의 집	• 유럽
	1. 전후 처리와 국교 회복			
VI. 오늘날의 동아시아	2. 냉전과 전쟁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공내전 • 6·25 전쟁 	• 마셜 정책이 시행되고 코메콘이 성립하다	• 유럽
	3. 경제 성장과 역내 교역 활성화			
	4. 민주화와 사회 변화	• 사회주의 체제의 변화	• 동유럽의 사회주의 정권이 무너지다	• 유럽
	5. 동아시아의 갈등과 화해			

또 안병우 외는 ‘동아시아 사람들’이라는 별도의 읽기 자료(칼럼 형식)를 중단원 단위로 제시하였는데, 여기에서 동아시아인 이외에 몽골제국 시기 야율 초재, 마르코 폴로, 장순룡, 16세기에 박연, 마테오 리치, 알렉상드 드로드 신부, 윌리엄 애덤스 등의 인물을 다루기도 하였다. 동아시아의 크리스티교, 그리고 서양 제국주의와 일본 제국주의를 비교하는 읽기 자료도 제시하였다.⁵⁾

안병우 외와 손승철 외는 공통적으로 몇몇 주제에서 다른 지역의 역사적 사건을 동아시아사의 배경 지식으로 제시하였다. 예를 들면 ‘불교의 전파와 토착화’라는 중단원에서는 인도에서 불교가 어떻게 성립되고 변화하였는지, 그리고 어떻게 중국에 전파되었는지에 대해 설명하는 소단원을 두었다. 이러한 방식의 본문 구성은 16세기 이후의 동아시아사에서 두드러진다. 16세기 동아시아 교역망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유럽(포르투갈, 에스파냐, 네델란드 등) 상인이 동남아시아와 동아시아에 ‘진출’했던 사건을 제시하기도 하였고,⁶⁾ 제국주의의 동아시아 침략을 설명하기 위해 19세기 제국주의 시대를 개관하기도 하였다.⁷⁾ 예를 들면 손승철 외는 16~17세기 동아시아 경제 발전의 배경으로 16세기 ‘유럽의 진출’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서술하였다.

세계의 은이 중국으로 모이다.

1498년 포르투갈이 인도로 오는 항로를 개척한 이후 유럽 선박들은 동아시아로 밀려들었다. 이 무렵 스페인이 남미에서 잉카와 아즈텍 문명을 무너뜨린 이후 …… 후추 등 향신료를 구하기 위해 동아시아 해역까지 진출했던 포르투갈 상인들은 마카오를 거점으로 중개 무역을 시작하였다. 그들은 중국에서 비단과 도자기, 생사 등을 구입하여 유럽으로 가져가거나 일본 등지에서 중개하였다. 그 과정에서 국제 통화로 주목된 것이 은이었다.⁸⁾

5) 안병우 외, 2011, 위의 책, 194·200쪽

6) 안병우 외, 2011, 위의 책, 144~145쪽

7) 손승철 외, 2011, 앞의 책, 188쪽

8) 손승철 외, 2011, 위의 책, 122쪽

요컨대 2007 개정 교육과정의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세계사를 다루는 형식은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다. 세계사를 연계하려는 적극적인 장치를 두는 것과 동아시아사의 배경지식으로 필요할 때 본문 속에서 다루는 것이다. 동아시아사 전 시기를 통하여 세계사를 본문 속에서 녹여 연계하려고 하면 동아시아사와 세계사의 구분이 모호해져 동아시아사라는 과목 자체의 성격이 훼손될 수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본격적으로 세계사를 연계하고자 한다면 안병우 외의 『동아시아사』처럼 별도의 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적절해 보인다.

2. '세계사' 내용과 관점

안병우 외는 '그 때 세계는'에서 특정 시기 동아시아와 여타 지역에서 일어난 사건을 '단순 비교' 할 수 있게 하였다. '단순 비교'란 유사성과 차이성을 확인하게 하는 방식으로 왜 비슷한지 혹은 왜 다른지에 대해 설명을 제공하거나 분석할 기회를 주는 것은 아니다. 학습자의 '경험' 확대라는 측면에서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그런데 문제는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내용이 유럽사에 치중되어 있다는 점이다. 특히 '그 때 세계는'의 전체 내용을 엮으면 세계사가 하나의 이야기로 완성되는데 유럽사가 중심을 이루고 가끔 그 밖의 지역의 역사가 양념으로 가해진 듯한 구조다. 필자들이 의도하지 않았어도 '유럽사'를 중심으로 '세계사'를 개념화하거나 '세계'를 '동아시아'와 '유럽'이라는 이분법적 구도에서 이해하게 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또 프랑스 혁명 이전까지는 동아시아와 유럽의 '비슷한 역사적 현상'들을 설명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18세기경까지는 두 지역의 역사가 같은 경로, 적어도 비슷한 경로를 통해 발전했다고 이해하게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또한 안병우 외는 '동아시아인'이라는 읽기 자료에서 동아시아에서 활동했거나 동아시아에 크고 작은 변화를 자극했던 '비동아시아' 인물들도 다루었다. 예를 들면 '몽골제국 시대의 국제인'과 '서구의 과학 기술을 전한 유럽인'이 동

아시아 관련 지식을 다른 지역으로 확산시키는 데 기여하였고, 또 다른 지역에 대한 지식을 동아시아에 제공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⁹⁾ 그런데 이러한 ‘국제인’과 ‘유럽인’을 ‘동아시아인’이라는 표제하에 소개한 것이 독특하다. 필자들이 무엇을 의도하였든 이 부분은 몽골 제국인 혹은 유럽인이면서 동시에 동아시아인인, 중층적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에 대해, 아니면 동아시아 경계 밖에 있는 동아시아인에 대해 생각해 볼 여지를 주었다. 이는 중학교 세계사에서 추구하는 ‘지역 세계’라는 개념과는 다른 방식으로 동아시아를 상상해 볼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즉 동아시아사와 동아시아인의 개념을 확장시키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동아시아인’은 동아시아사와 세계사를 연계한 장치라기보다는 동아시아를 다른 각도에서 개념화하게 하는 장치로 봐야 할 것이다.

동아시아사 교과서들은 동아시아의 고유한 정치·경제·사회·문화적 전개 과정을 대체로 내부의 역동성을 중심으로 설명하였다. 그런데 내부적 요인만으로 동아시아 사회의 변화를 설명할 수 없는 경우 다른 지역의 역사를 본문에서 배경지식으로 다루었다. 그리하여 동아시아를 폐쇄적 공간이 아닌 다른 지역과 상호 교류를 하면서 변화를 자극받았던 개방적인 공간으로 상상할 수 있게 하기도 하였다. 그런데 이러한 방식으로 다룬 주제들은 인도의 불교를 제외하면 대체로 16세기 이후 ‘유럽인의 활동’, 특히 교역 활동에 대한 것이다.

동아시아사 교과서들은 16세기 이전 동아시아와 다른 지역 간의 상업적 혹은 문화적 교류에 대해서는 거의 다루지 않았다. 교육과정 상의 요구가 없기 때문이기도 하다. 그런데 16세기 이후 ‘유럽의 진출과 교역망의 확대’는 중요한 주제로 다루었다.¹⁰⁾ 17세기와 18세기의 경우는 ‘전통사회 완성’이라는 주제에 초점을 맞추어 청, 조선, 에도 시대 일본에 대해 설명하였다. 따라서 동아시아 내의 경제적 발전과 인구증가, 도시화, 문화발전 등이 중심 내용이다. 그러나

9)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사 교육과정과 교과서에서 ‘서구’라는 용어를 사용한 경우에만 ‘서구’라고 표기하였다.

10) 안병우 외, 2011, 앞의 책, 144~147쪽(본문), 150~151쪽(주제탐구); 손승철 외, 2011, 앞의 책, 122~123쪽(본문)

교과서들은 이 시기 '신대륙의 작물'이 수입되어 식량 증산에 이바지한 점과 '서구 크리스트교'의 자극이 있었다는 점 등 유럽과의 직간접적 교류에 대해 언급하였다. 19세기에는 유럽 제국주의의 침략과 동아시아의 '서구문물 수용'에 대해 다루었다.

요컨대 동아시아사 교과서들이 세계사로 제시한 별도의 읽기 자료와 교과서 본문의 내용이 유럽중심적이라는 점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단순히 '세계사'로서 유럽을 많이 다루었다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세계사가 마치 유럽사인 것처럼 다른 지역을 가시화하지도 않았을 뿐 아니라 유럽의 독보적 역동성만을 부각시켰다는 점이다. 또한 동아시아와 유럽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세계를 상상하게 한다는 점도 문제라고 할 수 있다.

III.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세계사를 연계하기 위한 관점 설정

1_ 학생들의 '공직'인 선행 학습 지식과 세계사 내용 선정

고등학교 동아시아사가 지역적 편협성의 늪에 빠지지 않게 '세계사'와 연계하려면 어떤 점을 고려해야 할까? 먼저 동아시아사를 학습하게 될 학생이 공식적으로 학습한 세계사 선행 지식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학생이 중학교에서 학습한 세계사를 단순히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보완·심화시킬 수 있게 고등학교 세계사의 내용을 선정하고 조직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이다.

2007 개정 중학교 역사 교육과정은 국사와 세계사를 상호연결하여 궁극적으로는 '통합'하여 가르칠 것을 강조한다. 그러나 교육과정의 단원 구성을 보면 '역사가 한국사와 세계사를 별개의 내러티브로 추구한다는 점을 알 수 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을 개발할 당시 개발인들은 세계사 영역에서 유럽중심

주의와 중국중심주의라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고심하였다. 중국중심주의의 핵심 문제는 아시아사에서 중국사의 비중이 너무 크다는 것이었다. 개발인들은 서아시아사, 동남아시아사 등 지역사의 비중을 확대하고 이 지역의 세계사적 공헌이나 문화적 특색을 강조하면서, 동시에 중국사의 비중을 축소하는 방향에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였다. 그러나 후술하겠지만, 유럽중심주의의 문제 해결에 집중하면서 중국의 세계사적인 역동성은 좀 더 강조되었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이 무엇보다 중점을 둔 문제는 유럽중심주의의 축소다. 2007 개정 교육과정 이전에 중학교 세계사에서 관철된 유럽중심주의는 크게 두 가지 측면에서 분석할 수 있다.¹¹⁾ 하나는 ‘근대’를 유럽의 내적 발전의 결과로 보는 시각에서 내용을 선정하고 단원을 구성하였다는 점이다. 즉 유럽을 다른 지역 세계와 구분되는 독특한 문화권이자 문명으로 이해하게 대단원을 크게 유럽사와 아시아사로 이분하여 구성하였다. 아시아사라는 대단원에는 동아시아, 서아시아, 인도와 동남아시아 등이 중단원으로 편입되어 유럽보다 작은 문화권으로 상상되었다.¹²⁾ 그리하여 결과적으로 유럽의 독특한 문화적 특징과 정치·경제적 구조가 고대에서 중세를 거쳐 논리적으로 전개된 결과 유럽이 ‘근대’를 창안할 수 있었다는 내러티브가 구축되었다. 다른 하나는 근대화론이다. 이 이론에 기초한 근대사는 비유럽 지역에서는 유럽이 창안한 근대적 사상, 문화, 정치·경제·사회 체제를 따라 하여 근대를 이룰 수 있었다는 내러티브로 조직된다. 이러한 유럽의 내적 발달에 의한 근대 창안론, 근대화론은 매우 오랫동안 중·고등학교 세계사 교육과정과 교과서의 내용을 조직하는 기본적인 틀이 되어왔다. 벤틀리(Jerry Bentley)가 정의한 ‘이데올로기적 유럽중

11) 제1차 교육과정 이후 한국 세계사 교육에서 관철된 두 가지 유럽중심주의의 문제에 대한 자세한 논의는 Kang Sun Joo, 2012, “Conceptions of Modernity in the Middle School World History Curriculum in the Republic of Korea: Adopting Theories of European Inherited Modernity and Modernization,”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2) 참고할 수 있다.

12) 유럽과 아시아의 이분법적 대단원 구성의 문제는 강선주, 2003, 「세계사 교육의 ‘위기’와 ‘문제’: 역사적 조망」, 『사회과교육』 42-1에서 논하였다.

심주의'가 세계사 교육에서 관철되어 온 것이다.¹³⁾

한국 역사학계는 2000년대 서양사나 세계사 연구에서 유럽중심주의를 본격적으로 문제화하였다.¹⁴⁾ 세계사의 유럽중심주의를 비판하면서 이슬람 세계나 동아시아(중국) 등의 세계사적 공헌과 역동성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을 제기하였다.¹⁵⁾ '새로운 세계사', '지구사', '세계체제론' 등의 이론들을 적용하여 유럽중심주의 축소 가능성에 대해 검토하기도 하였다.¹⁶⁾ 또 체제론의 시각에서 19세기 전반까지 유라시아에 서로 비견될 수 있는 발전을 보인 여러 중심 지역이 있었다는 이론이나, 경계를 넘는 '접촉과 교류'를 보여줌으로써 '근대'를 유럽의 고립적이고 독자적인 정치·경제·문화적 전개 과정의 필연적 산물로

-
- 13) 제리 벤틀리는 유럽중심주의를 단순 유럽중심주의, 이데올로기적 유럽중심주의, 구조적 유럽중심주의로 구분하였다. 벤틀리의 구분에 따르면 유럽의 내적 발달에 따른 유럽의 근대 창안론과 근대화론은 '이데올로기적 유럽중심주의'다. 벤틀리가 제시한 유럽의 내적 발달에 따른 근대 창안의 논리의 대표 주자에는 마르크스나 베버 등이 있다. 한국 세계사 교과서가 제시한 유럽의 내적 발달에 따른 근대 창안 논리는 벤틀리가 제시한 내용과는 차이가 있으나, 근본적인 내러티브 구조의 측면에서 동일하다 할 수 있다. 최근 역사학계는 '구조적 유럽중심주의'의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있다. 벤틀리의 정의에 따르면 "구조적 유럽중심주의는 근대적·자본주의적·산업적·제국주의적 유럽에서 나온 모든 생각 구조와 분석 범주를 의미하는 것으로 역사가와 다른 학자들이 특정한 관점에서 세상을 이해하도록 만든다." 벤틀리는 구조적 유럽중심주의에 문제를 설득력 있게 제시한 역사학자로 차크라바르티(Despesh Charkrabarty)와 딜릭(Arif Dirlik)을 꼽았다. 제리 벤틀리, 2010, 「다양한 유럽중심의 역사와 해결책들」, 조지형·김용우 역음, 『지구사의 도전』, 125쪽. 한국 세계사 교육에서 이데올로기적 유럽중심주의의 문제는 2000년대 초부터 본격적으로 지적되었다. 강선주, 2004, 「참여와 상호작용의 세계사 내용 구성 방안」, 『歷史教育』 92, 2쪽. 그러나 세계사 교육에서 이데올로기적 유럽중심주의는 여전히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로 보인다.
- 14) 한국 역사학계에서 논의되는 유럽중심주의도 매우 다층적이다. 195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한국 역사교육계는 세계사 교육에서 '단순 유럽중심주의'의 문제를 지적해 왔다. 2000년대에는 이데올로기적 유럽중심주의와 함께 구조적 유럽중심주의를 문제화하는 경향도 보인다.
- 15) 최갑수, 2000, 「서양사: 유럽중심주의의 극복과 대안적 역사상의 모색」, 『역사비평』 52; 이민호, 2000, 「세계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유럽중심주의 사고의 극복을 위하여」, 『역사비평』 60
- 16) 조지형, 2002, 「새로운 세계사와 지구사: 포스트모던 시대의 성찰적 역사」, 『歷史學報』

서가 아니라 여러 지역 간의 상호작용에 따른 유연한 결과라는 이론에 입각하여 역사를 구체적으로 서술한 외국 저작을 소개하기도 하였다.¹⁷⁾

2007 개정 교육과정은 세계사 교육의 유럽중심성 문제를 검토하고 새로운 이론을 부분적으로 받아들여 유럽의 내적 발전에 따른 근대 창안이라는 논리적 구조에서 탈피하려는 몇 가지 시도를 하였다. 종래 유럽과 아시아로 대별되는 대단원 구성 방식을 폐기하고, 유럽도 아시아의 다른 지역 세계들과 같은 단위의 문화권 혹은 문명으로 볼 수 있게 대단원과 중단원을 구성하였다. 또 아프로-유라시아의 지속적인 상호교류를 보여줌으로써, '지역 세계'를 닫힌 공간이 아닌 '간헐적'이더라도 상호접촉하고 상호작용했던 공간으로 그리려고 하였다. 또 10~18세기 사이 동아시아와 서아시아 등의 문화·경제적 발전을 강조하고 '지역' 단위를 넘어선 상호교류의 역할을 강조함으로써 유럽의 근대 창안에서 동아시아와 서아시아의 경제·문화적 발달이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이해할 수 있게 중단원들을 배치하였다.

이러한 대단원과 중단원 구성 방식은 유럽인만이 창조적 능력을 가졌다는 인종주의적 편견을 타파하기 위해 다른 민족들의 역동성을 보여주고 근대 창안의 공헌을 여러 민족들에게 분산시키려는 의도적인 노력의 산물이다. 그렇다고 2007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세계사가 유럽중심주의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 유럽의 내적 발달에 기초한 근대 창안이라는 논리적 구조는 깨졌으나, 근대화론의 그림자가 여전히 세계사의 근대 시기 서술을 지배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유럽중심주의를 부분적으로 축소할 수 있는 길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중국의 세계사적인 역동성이 크게 부각되었다. 아프로-유라시아 내에서는 물론 그 단위를 넘어서는 '접촉과 교류'를 자극했던 원천을 주로 중국에서 찾으려는 중국중심주의가 심화된 것이다.¹⁸⁾ 그리하여 16세

17) 안드레 군더 프랑크, 이희재 역, 2004, 『리오리엔트』, 이산; 로버트 B. 마르크스, 윤영호 옮김, 2007, 『다시 쓰는 근대 세계사 이야기』, 코나투스 등

18) 서아시아의 페르시아나 이슬람 세계의 역할도 중요하게 다루기도 하였지만, 교류를 자극한 원천의 측면에서는 전 시기적으로 중국이 부각되었다고 할 수 있다.

기 이전에는 중국이, 그리고 이후에는 유럽이 세계사적인 역동성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

그런데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유럽중심주의 ‘극복’을 내걸며 확대하였던 ‘상호교류’ 관련 주제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 축소되었다. 2007 개정 교육 과정에 기초한 교과서의 개발이 완성되기도 전에 2009 개정 교육과정 개발 작업이 시작되었다. 개정을 서둘렀던 가장 큰 명분은 학습량의 감축이었다.¹⁹⁾ 세계사에서는 학습량 감축의 방법으로 ‘익숙하지 않은 지역 세계 — 서아시아, 인도와 동남아시아, 아프리카, 아메리카 — 의 역사와 교류사를 줄였다.’²⁰⁾ 특히 “교류를 강조하면서 나타나는 역기능”으로서 “각 지역 문명의 발전에 미친 ‘내적’ 요인이 상대적으로 경시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명분을 강조하였다.²¹⁾ 2009 개정 교육과정 개발진은 교류사를 강조하면서 나타난 “역기능의 전형적인 사례”로 2007년 현재 사용 중인 중학교 역사(상) 교과서 9단원 “교류의 확대와 전통 사회의 발전”을 제시하였다.²²⁾ 2009 개정 교육과정 개발

-
- 19) 오수창도 학습량의 20% 감축을 역사 교육과정 개정의 중요한 방향으로 제시하였다. 오수창, 2011, 「2011 역사 교육과정 개정 방향」, 역사교육과정개발정책연구위원회, 『2011 역사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 2011. 6. 30, 국사편찬위원회대강당, 8쪽
- 20) 몇몇 논자들은 세계사에서 ‘익숙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축소를 주장한다. 그런데 누구에게 ‘익숙하지 않은 것인가’라는 질문을 할 필요가 있다. 중학생은 공식적으로는 세계사를 처음 학습한다. 이들에게는 인도와 동남아시아, 서아시아뿐 아니라 동아시아와 유럽도 익숙하지 않다. 단 교과서가 여러 지역들에 대한 너무 피상적인 지식을 나열하는 방식으로 서술되면서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하게 고민하여 해결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 21) 차미희, 2011, 「중학교 역사 개정(안) 내용」, 역사교육과정개발정책연구위원회, 『2011 역사 교육과정 개정 공청회』, 2011. 6. 30, 국사편찬위원회대강당, 28쪽. 사실 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났는가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가 필요하다. 2007 개정 교육과정이 공표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왜 2009년, 2011년에 다시 교육과정을 개정하게 되었는지, 또 2007년과 2009년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사 영역에 내용 선정 및 조직에 어떤 담론들이 영향을 미쳤는지, 개발 주체들이 개정 과정에서 무엇을 고민하고 논의했는지 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 시기 급격한 세계사 영역의 내용 변화에 대해, 공청회 자료나 교육과정 등에 드러나지 않는 부분까지 해명할 필요가 있다.
- 22) 차미희, 2011, 위의 글, 28쪽

진은 “교류’의 강조로 인해 경제 영역의 비중이 확대되었고, 동아시아의 경우 예컨대 통치이념으로서 성리학의 발전 같은 중요한 요소가 상대적으로 간단하게 처리되었다”고 비판하고 “정치사와 문화사 중심의 통사 체제라는 기본 원칙”에 따라 세계사 내용도 구성하면서 교류사를 축소한 것이다.²³⁾ 그리하여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전통사회의 발전과 변모”라는 대단원에서는 송·원·명 시기 경제 발전과 ‘동서교류’에 대한 내용의 비중을 대폭 줄이고, 대신 일본사와 유럽사의 비중을 늘렸다.²⁴⁾ 유럽사에서는 르네상스를 중심으로 유럽의 내적 발전이 ‘근대’를 이루는 데 중요한 요인이었다는 점을 파악하게 하였다. 또한 신헌로 개척과 대서양 무역을 유럽과 아메리카의 경제적 발전의 중요한 배경으로 이해할 수 있게 하면서 변화의 주체로서 유럽의 역동성을 부각시켰다.

사실 중학교 역사를 정치사와 문화사 중심으로 조직한다는 원칙은 초등학교나 고등학교에서 학습하는 한국사 내용의 반복을 피하겠다는 취지로 상당히 오래전에 설정되었다. 그런데 이러한 원칙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이미 여러 학자들이 반복하여 지적해왔다. 또한 이러한 계열화 원칙은 ‘한국사’를 중심

23) 차미희, 2011, 위의 글, 28쪽

24)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⑨ 교류의 확대와 전통사회의 발전이라는 대단원에 ① 송대의 경제 발전과 아시아 해상 교역의 확대 과정을 관련지어 파악한다. ② 몽골 제국의 성립으로 세계사의 단초가 열렸음을 안다. ③ 오스만 제국을 비롯한 서아시아 이슬람 국가의 발전과정을 파악한다. ④ 무굴 제국의 성립과 동남아시아 각국의 정치 발전을 지역별로 파악한다. ⑤ 신헌로 개척과 국제 무역의 확대를 배경으로 유럽에서 절대왕정이 형성되었음을 이해한다. ⑥ 명, 청 제국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다른 지역과의 교류 상을 파악한다. 등의 성취기준이 포함되었다. 교육인적자원부, 2007, 『사회과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3], 21쪽. 그런데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전통사회의 발전과 변모”라는 대단원의 내용 표준은 다음과 같이 개정되었다. ① 송으로부터 청에 이르는 중국의 정치적 변화 과정을 설명하고 몽골 제국이 동서 교류의 확대에 미친 영향을 파악한다. ② 일본에서 무사 정권이 출현하는 과정을 이해하며 임진왜란을 동아시아 국제 질서의 변모라는 맥락에서 파악한다. ③ 서아시아와 남아시아 이슬람 국가들의 성립과 발전 과정을 파악하고, 이 지역에서 여러 민족과 종교의 공존을 지향하는 정책이 펼쳐졌음을 살펴본다. ④ 르네상스로 인한 유럽 사회의 변모를 이해하고, 신헌로 개척과 대서양 무역의 확대가 유럽과 라틴아메리카 세계 양쪽에 미친 변화를 파악한다. ⑤ 서유럽과 동유럽의 절대왕정을 비교하여 그 차이를 이해한다. 교육과학기술부, 2011, 앞의 글, 39쪽

으로 설정된 것이다. 세계사는 한국사와 달리 중학교에서 단 한번 필수로 학습하기 때문에 그러한 특수성을 고려하여 원칙을 독자적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세계사 영역을 보면, 개발 과정에서 종래 세계사 교육의 유럽중심성의 문제에 대해 숙의가 제대로 이루어졌는지, 또 학생들이 세계사를 중학교에서 단 한번만 필수로 학습한다는, 세계사 교육의 특수성을 적극 고려하여 내용 선정의 원칙을 설정했는지 의문스럽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요컨대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중국의 내적 발전에 주목하면서 중국의 세계적인 역동성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아시아사에서 일본사의 비중을 늘렸다. 또 2007 개정 교육과정에서 유럽적인 현상으로 한정하려 하였던 몇몇 유럽의 ‘근대적 진보’는 2009 개정 교육과정에서는 다시 세계사적으로 중요한 변화인 것으로 강조되었다. 결과적으로 2009 개정 중학교 교육과정의 세계사는 제7차 교육과정의 세계사와 유사하게 16세기 이전에는 몇 개의 지역 세계들이 고립적이고 독자적으로 발달하다가 16세기 이후 유럽의 역동성으로 전 세계가 통합의 길로 들어선 것이라는 내러티브가 구조화되었다. 근대 창안과 확산의 업적은 다시 유럽만의 것이 되었다.

중학교에서 이러한 유럽중심적 세계사를 학습하고 온 학생들에게 동아시아사에서 세계사를 어떻게 연계하여 가르칠 것인가? 적어도 현재 사용되고 있는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처럼 동아시아와 유럽의 이분법적 사고를 강화하거나 동아시아 이외의 지역을 다룰 때 유럽을 부각시키는 방식은 지양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2_ 학계의 동아시아사 구상과 세계사 내용 선정

최근 20년 동안 동아시아사는 무엇인가에 대한 논의가 개념, 시각, 연구 방법 등의 측면에서 심화되었다. 특히 동아시아사가 고등학교의 과목으로 성립되면서 그 논의는 교육적 차원으로 확대되고 있다. 그러나 이 글은 그러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다루는 것을 목적으로 하지는 않는다. 다만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어떤 ‘세계사’를 어떤 방식으로 담을 것인가, 즉 동아시아와 다른 지역(세계)과

의 관계를 어떻게 구상할 것인가라는 질문에 대답하고자 한다. 이러한 점에 초점을 맞추어 동아시아사 구상의 몇 가지 원론적 측면을 검토하면 다음과 같은 주장이 눈에 들어온다.

동아시아 3국 문명의 동질성도 타문명과의 융합·변용 과정에서 개방적인 다면성을 갖는다는 점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²⁵⁾

동아시아적 담론을 주관적으로 절대화함으로써 세계를 서구와 비서구—비서구는 어느덧 동아시아로 여겨진다—로 나누는 단순 논리의 유희를 되풀이하고 있지는 않은지 성찰해야 한다. 우리 자신을 규정하기 위해 …… 서구와의 대조에만 치우쳐서 수많은 비서구와 비동아시아의 실체를 사상시키거나 동양중심적 논리와 언어로 왜곡하는 오류를 더 이상 범해서는 안 된다. 자신을 찾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수많은 타자라는 거울을 통해서 우리의 다양성을 비춰봐야 하기 때문이다.²⁶⁾

동아시아는 어디까지나 한편으로 서구중심적이며 다른 한편으로 자본주의적인 근대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이어야 한다. 그것도 동아시아에 한정된 상대적인 것으로서 말이다. 남아시아에는 남아시아대로, 중동에는 중동대로, 아프리카에는 아프리카대로 각자의 방법이 있을 것이다. 그것들은 모두 서로 다르면서도 서구적 근대를 극복하고 자본주의 너머로 넘어가기 위한 방법이라는 점에서는 같다. 어느 곳도 중심이 아니고 역으로 모두가 다 중심이다. 그것들 사이의 대화와 소통 그리고 연대는 물론 가능할 것이고 또한 추구되어야 할 것이다.²⁷⁾

학계에서는 중국이나 일본 제국주의가 시도하였던 자기중심적·패권주의적 ‘동아시아 공동체’ 구상의 한계를 넘어 새로운 동아시아상을 추구한다. 또

25) 조병한, 1999, 「'90년대 동아시아 담론의 개관」, 정재서 편저, 『동아시아 연구 글쓰기에서 담론까지』, 살림, 153쪽

26) 김광역, 1999, 「동아시아 담론의 실패—그 분석과 해석」, 정재서 편저, 위의 책, 174쪽

27) 성민엽, 1999, 「같은 것과 다른 것: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 정재서 편저, 위의 책, 244~245쪽

동아시아를 폐쇄적 공간이 아닌 다른 지역과 상호 교류를 하면서 ‘융합’, ‘변용’을 자극하고 또 자극받았던 “개방적인 다면성”을 가졌던 공간으로 이해할 것을 요구한다. 엄격한 분리를 가정하기보다는 세계가 혼합, 이주, 겹침의 세계라는 점을 이해할 수 있게 해야 한다는 것이다.

과목으로서 동아시아사도 이러한 학계의 요구에 부응하여 폐쇄적 지역주의를 경계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동아시아를 다른 지역과 상호 연결되어 자극을 서로 주고받았던 개방적인 공간으로 상상할 수 있게 세계사를 연계시킬 필요가 있다. 또한 동아시아 교과서에서 은연중에 추구되었던 동아시아와 유럽이라는 이분법적인 단순 구도와 논리가 되풀이되지 않도록 경계할 필요도 있다. 다면적 ‘인간성’의 그림을 통해 인간 이해의 폭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인종과 민족주의적 편견을 경계하는 교육적 목적의 측면에서도 중요하다.

또 최근 동아시아 학계뿐 아니라 세계사 학계에서도 ‘대안적 근대’, ‘근대성’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다. 유럽중심적 자본주의적인 근대를 해체하면서 동시에 그 대안을 모색하려고 노력하는 것이다. 다수의 근대를 상상하고, 그러한 근대에 접근하는 방법으로서 지역이나 사회에 주목하는 연구들도 있다. 이러한 논의는 벤틀리의 용어를 빌리자면 ‘구조적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하려는 방향에서 진행된다.

차크라바르티는 벵골의 근대성에 대한 연구를 통해 유럽적 범주의 역사연구에 저항하며 유럽을 ‘변방화’하려 한다.²⁸⁾ 즉 유럽의 근대를 삶을 조직하는 여러 방법 가운데 하나로 전락시키려 한 것이다. 차크라바르티는 다수 근대성과 근대성을 조직하는 범주를 상상하고 유럽이 만든 근대와 다른, 지역 특정적 근대 구축에 초점을 맞추으로써 ‘근대성’을 지역화하려 한다. 딜릭은 이러한 방법의 문제는 유럽이 자본주의, 국민국가, 과학 등을 이용하여 세계를 재구축한 결과—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진보로 간주되든 후퇴로 간주되든—에 대한

28) Despesh Charkrabarty, 2000, *Provincializing Europe: Postcolonial Thought and Historical Difference*, Princeton

역사적 의미를 축소하는 것이라고 비판한다.²⁹⁾ 유럽이 만든 근대적 기획의 영향력이 탈근대적 현재에도 전 지구적 차원에서 현실적으로 중요하게 다가오고 있다는 점을 부정하기 어렵기 때문에 차크라바르트식의 대안적 근대 논의가 ‘대안적’으로 다가오지 않는 측면도 있다.

딜릭은 유럽적 근대성이 전 지구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가져온 물리적·이념적 결과를 지워버리는 것은 비역사적이라고 주장한다.³⁰⁾ 나아가 대안적이고 복수적인 근대성을 논하는 것 자체가 유럽을 표준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설득력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단일한 지구사, 세계사를 보편주의적 역사와 동일시하는 시각에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고 비판하고 그것의 배척을 주장한다.

최근 탈식민주의적 시각은 자본주의적 근대를 극복하는 방법으로 자본주의보다는 식민주의, 정치·경제보다는 문화에 초점을 맞추어 근대를 논하는 경향을 보인다. 특히 이질적인 문화 사이의 상호작용이 만들어낸 ‘혼종(hybridity)’ 혹은 ‘번역된 문화(translated cultures)’ 등에 주목한다.³¹⁾ 물론 자본주의적 근대를 넘어서 새로운 범주와 다른 차원에서 근대를 정의하려는 시도들이 계속될 필요는 있다. 딜릭도 지적하였듯이 지구적인 자본주의 경제 구조에 참여하면서도 ‘서구적 가치(“Western” values)’에 거리를 두는 것이 가능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³²⁾ 그럼에도 지구화되고 있는 자본주의 자체가 하나의 사회구조나 문화를 대변한다는 점도 부정할 수는 없다. 물론 그 문화가 다른 사회적 맥락

29) 아리프 딜릭(Arif Dirlik), 2010, 「탈중심화하기: 세계들과 역사들」, 조지형·김용우 역음, 160쪽

30) 아리프 딜릭, 2010, 위의 글, 160쪽

31) Nestor Garcia Canclini, 1995, *Hybrid Cultures: Strategies for Entering and Leaving Modernity*, tr. by Christopher L. Chiappati and Sylvia L. Lopez,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Wang Ning, 2000, *Translated Modernities: Literary and Cultural Perspectives on Glamorization and China*, Ottawa: Legas

32) Arif Dirlik, 2012, “Thinking Modernity Historically: Is “Alternative Modernity” the Answer?”, Keynote Addresses, 제2회 아시아세계사학회 국제학술대회(The Second Congress of the Asian Association of world Historians), 서울, 76쪽

으로 전이되면서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으나, 자본주의 자체가 그것이 기원한 사회적 맥락의 문화적 유산을 전수하는 수단이 되기 때문이다.³³⁾

한국의 동아시아 학계도 대안적 근대, 다수 근대성에 대한 논의의 필요성을 역설하고 또 대안을 제시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동아시아만의 고유한 특성을 중심으로 동아시아적 자본주의 근대성의 형성과 발전을 설명하려고 하기도 한다. 또 한편 유럽의 헤게모니 속에서 자본주의적 근대가 만들어진 것을 인정하면서 그것이 다른 지역으로 퍼져 나가면서 혼종을 만들었다는 시각에서 대안적 근대를 모색하기도 한다.³⁴⁾ 상호침투를 거쳐 혼종 잡종 체제가 되었다는 시각에서 유럽적 근대성을 상대화하지는 것이다. 이는 유럽적 근대가 확산되었다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동시에 각 민족이나 지역이 독자적인 근대를 이루었다는 주장에 기초한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유럽의 근대를 여러 근대 가운데 하나로 상상하고자 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이러한 방법도 결국 ‘암묵적으로’ ‘유럽적 근대’를 보편적 근대의 ‘우월한’ 모델로 제시한다는 점에서 유럽중심주의라는 비판에서 자유롭지는 못하다. 그러나 현재 전 지구적 자본주의 확산 분위기에서 ‘구조적 유럽중심주의’를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주장에도 주의 기울일 필요가 있다.³⁵⁾

세계사나 동아시아사 교육에서 근대사는 매우 오랫동안 ‘서구화’와 근대화를 동일시하는 근대화론의 틀에서 구상되었다. 근대화론의 틀은 중학교나 고등학교 세계사와 동아시아사에서 거의 반복적으로 적용되고 있다. 안병우 외의 『동아시아사』도 이러한 틀 속에서 양무운동이나 메이지 유신을 설명하였다. 안병우 외는 ‘개항과 국민 국가의 수립 노력’에서 양무파 관료들이 “서양의 군사력과 과학기술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였지만 “서양의 기술만 받아들이는 중체서용의 관념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등의 한계”가 있었다고 지적하였다.³⁶⁾

33) Arif Dirlik, 2012, 위의 글, 76쪽

34) 이에 대한 논의는 김성보, 2007, 「탈중심의 세계사 인식과 한국근현대사 성찰」, 『역사비평』을 참고할 수 있다.

35) 제리 벤틀리, 2010, 앞의 글, 133쪽

36) 안병우 외, 2011, 앞의 책, 178~179쪽

이후 청 정부도 변법을 추진하기는 했지만 보수파의 반대로 실패하고, 반면 일찍부터 서양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는 문명개화 정책, 즉 서구화를 추진하던 일본은 “아시아에서 근대화에 성공한 나라”가 되었다고 서술하였다.³⁷⁾ 결국 이 시기 ‘서구화’만이 근대화를 이룰 수 있었던 방법이었던 것처럼 각인된다.

그런데 손승철 외는 근대화의 성공과 실패를 서구화 정도에 비추어 평가하는 방식의 서술을 지양하였다. 손승철 외는 양무운동을 “중국의 고유한 의식과 제도를 유지하면서 서양의 선진 기술을 수용하려는 자강운동이었다”고 평가하고 그 실패 원인을 중체서용의 사상이 아니라 청 내부 보수파의 문제에서 찾았다. 중체서용이라는 방향도 내부 권력 관계의 문제가 아니었다면 성공할 수 있었을 것이라는 함의를 읽을 수 있다. 손승철 외는 일본 메이지 정부의 개혁에 대해 설명할 때도 일본의 개혁 방향을 ‘서구화’로 표현하지는 않았다. “서구 12개국을 시찰”하고 여러 분야에 대해 조사한 후 “개혁에 참조하였다”, “서구의 학문과 교육 제도를 받아들여 소학교 의무 교육제를 실시하고 대학도 설립하였다”라고 하면서 표면적으로는 오히려 전면적이 아니라 부분적으로만 ‘서구 문화’를 수용한 것처럼 서술한 것이다. 그런데 일본의 개혁 내용에 대한 서술을 보면 봉건적 신분제 폐지, 징병제 실시, 입헌 군주제 실시 등이 있다. ‘서구의 제도’라는 용어를 직접적으로 사용하지 않았을 뿐, 결국 일본이 서구의 제도와 문물을 적극적으로 수용하여 개혁한 것으로 서술한 것이다.

근대화론의 시각은 은연중에 우리가 현대 세계의 특징과 과제를 보는 시각과 틀을 한계 지으며, 사회 문제를 해결하고 새로운 문화를 창조할 수 있는 창의력을 제한한다. 현재 우리 세계사 교육에서 ‘이데올로기적 유럽중심주의’, ‘구조적 유럽중심주의’를 ‘극복’까지는 못하더라도 ‘축소’하는 것을 중요한 과제라고 본다면 혼종 잡종 체제에 주목하여 유럽적 근대성을 상대화하려는 최근 논의의 주의 깊게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문제의식을 받아들인다면, 19세기 서양과의 접촉 과정에서 추구된 변화(변혁)를 ‘서구화’ 혹은 ‘서양(서구) 문물의 수용’이라는 제목하에 아무런 문

37) 안병우 외, 2011, 위의 책, 180~182쪽

제나 변형도 없이 문물을 수입한 것처럼 제시하는 방식의 서술은 지양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이질적인 문화 집단과 접촉하는 과정에서 어떤 정치·문화적 갈등이 있었고, 어떤 저항, 수용, 혼합 등이 왜 있었으며 그 과정에서 어떤 새로운 문화나 제도, 체제가 만들어졌는지 등, 혼종의 역사적 과정과 특징까지 심층적으로 이해 혹은 탐구할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손승철 외의 동아시아의 '서구문물의 수용'과정에 대한 서술은 참고할 만하다. 손승철 외는 '민국공법'이나 '사회 진화론' 같은 서구 사상의 수용과정을 설명할 때, 민국공법이나 사회 진화론에 대한 서구의 해석과 활용 방식을 먼저 설명하고, 청, 일본, 조선 등이 자국의 이해관계나 전통 사상에 기초하여 이러한 사상을 어떻게 번역하고 활용하였는지를 제시하였다.³⁸⁾ 손승철 외는 이러한 서술 방식을 통해서 문화 번역의 과정을 간단하게라도 이해할 수 있게 하였다. 이 외에 철도, 시계, 시간, 도시 등의 서구 문물의 수용과정에 대해서도 정치·문화적 저항이 있었다는 점을 서술하여 이질적인 문화 사이의 접촉이 파생시킬 수 있는 정치 권력·문화적 갈등에 대해 생각해 볼 기회를 주었다.³⁹⁾ 물론 여전히 단편적이기는 하지만, 손승철 외의 '서구문물의 수용' 과정에 대한 서술은 정치·문화적 수용(따라하기)과 저항(구별짓기), 그리고 혼합(섞기), 변용(다른 의미 부여하기) 등의 역사 과정을 감상할 수 있는 기회를 주었다는 점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할 수 있다.

38) 손승철 외, 2011, 앞의 책, 180~181쪽

39) 손승철 외, 2011, 위의 책, 184~185쪽

IV.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세계사 연계 개선 방안

1_ 네트워크의 확대로서 세계사 내러티브 구조화

동아시아사가 고등학교 심화 선택 과목이라는 특성을 고려한다면, 비록 ‘부가’하는 내용일지라도 세계사의 큰 그림을 그릴 수 있게 세계사 내용을 구조화할 필요가 있다. 하나의 방법은 안병욱 외의 『동아시아사』가 추구했던 ‘그 때 세계는’의 형식으로 ‘세계사’를 내러티브화하여 제시하는 것이다. 즉 중단원 단위에서 제시하는 ‘그 때 세계는’을 엮으면 하나의 이야기 구조가 되게 한다는 것이다.

내러티브화는 두 가지 방향에서 생각해 볼 수 있다. 하나는 동아시아사의 내러티브를 보완하는 방향에서 여타 지역과의 상호작용에 초점을 맞추는 방법이고 다른 하나는 ‘지구사’의 문제의식과 시각을 반영하여 세계사 속에서 동아시아를 조망해 볼 수 있게 조직하는 방법이다.

첫째, 동아시아사의 내러티브를 보완하는 방안은 동아시아의 내적 역동성 이외에 다른 지역과의 상호작용이 만든 작고 큰 역동성에도 주목하는 것이다. 동아시아 문화가 타문화와 융합하고 타문화를 변용하면서 형성되었다는 점, 또 동아시아 문화도 다른 지역으로 흘러들어가 혼합되거나 변용되어 새로운 문화 창조에 기여했다는 점을 이해할 수 있도록 세계사의 내용을 구조화하는 것이다.

2007 개정 동아시아사 교과서들은 동아시아와 다른 지역 간의 상호작용을 본격적으로 다루지는 않았다. 그러나 몽골제국 시기 네트워크의 성장 과정에서 동아시아 내의 경제적 변화가 자극한 여타 지역의 경제적 변화를 부분적으로 다루기도 하였다. 이 외에도 동아시아와 다른 지역의 문물이 상호 교환되는 것을 언급한 부분들이 있다.⁴⁰⁾

40) 예를 들면 안병욱 외의 『동아시아사』에 “유럽의 진출과 교역망의 확대(145쪽)”의

같은 방식에서 다를 수 있는 주제는 종교다. 동아시아에 들어온 불교만이 아니라 크리스티교와 이슬람교까지 다를 수 있다. 이슬람 세계의 과학적 지식이나 유럽의 지식이 동아시아 세계에 주었던 자극과 그에 대한 저항, 변용, 혼합 등도 다를 수 있다. 또 현재 중학교 역사 교과서들이 간단하게 언급하고 있는, 다른 지역으로 퍼져나가 크고 작은 역동성을 발휘했던 당·송, 몽골제국, 명, 청 시기 중국 문물에 대한 지식 등을 다를 수도 있다.⁴¹⁾

그런데 이 경우 동아시아 중심으로 내용을 선정하면서 동아시아사를 '세계사'적 맥락에서 조망해본다는 의미는 퇴색되고 오히려 동아시아의 역동성이 세계사의 중심이 되기 쉽다. 즉 세계사가 아니라 확장된 동아시아사를 구축하여 패권적 동아시아 중심주의를 심화시킬 수 있다. 또한 이러한 세계사에서는 종래 동아시아 밖으로 '전파'된 — 그것이 단순하게 다른 지역의 상품이 되었든, 문화적 변용을 자극하였든, 동아시아 세계에 대한 탐험을 자극하였든 — 동아시아 문물 가운데 중국의 문물이 다수를 차지하면서 중국만이 창의적이고 역동적이었다는 인상을 줄 수도 있다.

동아시아사 내에서는 동아시아의 조공과 책봉체제를 여러 민족 간의 다층적 이해관계로 해석하고, 동아시아의 주변의 시각에서 중국의 제국주의적 전 통을 다루며, 갈등과 분쟁을 부각시킬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와 여타 지역과의 상호관계 및 상호작용을 다룰 때는 19세기 전반까지 중국이 대체로 동아시아 역동성의 중심이었다는 점을 축소하기는 어렵다.

본문 서술 내용에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 “동남아시아 무역이 활성화되면서 동남아시아에는 여러 나라 사람들이 거주하는 항구 도시가 출현하였고, 이슬람교와 크리스티교도 본격적으로 전래되었다. 또 아메리카로부터 고추, 감자, 고구마, 옥수수, 담배 등이 아시아에 전해졌다. 명·청과 일본의 도자기가 유럽에 대량으로 판매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유럽에서는 도자기의 복제 기술이 발달하였다.”

- 41) 최근 유럽의 근대 이전 시기를 '중국'의 역할과 경제적 또 문화적 영향을 중심으로 재구성한 연구물들이 많이 출판되었고, 한국 세계사 교육과정과 교과서에도 영향을 주었다. 예를 들면 캘리포니아 학파의 연구자들의 저작들을 포함하여, J. J. 클라크, 장세룡 역, 2004, 『동양은 어떻게 서양을 계몽했는가』, 우물이 있는 집; 존 M. 홉슨, 정경옥 역, 2004, 『서구 문명은 동양에서 시작되었다』, 예코리브르 등이 있다.

그런데 만약 동아시아사 과목에서 '정체성'을 공유하는 '동아시아 공동체'라는 시각을 견지한다면 '중국중심주의'를 문제로 삼을 수 없다. 중국중심주의를 문제로 삼는 것은 중국을 타자화하는 것에서 출발하기 때문이다. 중국, 일본, 한국, 베트남 등의 '국가'의 경계가 만드는 정체성을 약화시키고 동아시아라는 한층 큰 틀에서 정체성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중국도 '우리'라는 의식으로 봐야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한국, 일본, 베트남 등이 최근 중국의 정치·경제적 부상을 동아시아인의 정체성에 기초하여 단순하게 환호할 수만은 없는 상황이다. 또 중국이 역사적으로 중화주의 틀 속에서 패권적 동아시아를 구상해왔고, 현재 한국은 그와는 다른 방향에서 동아시아 공동체를 추구하고자 하기 때문에 중국중심으로 동아시아를 형상화하는 것을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따라서 동아시아사를 보완하는 관점에서 세계사의 내러티브를 조직하고자 할 때는 여타 지역과의 관계에서 동아시아를 어떻게 형상화할 것인가, 중국의 역동성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고민도 필요하다. 이 문제는 한층 근본적으로 접근하여 교육과정에서 추구하는 '동아시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이란 어떤 것인가에 대한 논의로부터 다시 출발하여 해결해야 한다.

둘째, 지구사의 문제의식과 시각을 적극 적용하여 세계사의 내러티브를 조직하는 방안이 가능하다. 지구사의 관점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구사를 정의해야 한다. 여러 학자들이 지구사를 다르게 정의하지만, 방법론으로서 '경계'와 '구분'을 넘어선 상호작용과 상호관계에 주목한다는 점은 비슷하다.⁴²⁾

2009 개정 교육과정의 중학교 세계사는 '16세기 이전 지역 세계의 발전과 16세기 이후 지역 세계의 통합'이라는 내러티브를 추구했다. 중학교가 16세기 이전 각 지역 내부의 발전과 역동성에 초점을 맞추었다면, 고등학교에서는 다른 각도에서 지역 경계를 넘는 상호관계나 상호작용을 중심으로 내러티브를 조직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이와 같은 관점에서 맥닐과 맥닐(John McNeal and William McNeal), 그

42) 조지형, 강선주 외, 2008,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세계사』, 혜안

리고 퍼듀(Peter C. Perdue) 등이 웹(web)이나 네트워크(network)를 중심으로 지역 내의 공동체들, 지역과 지역 사이의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세계사를 서술했던 방식도 참고할 만하다.⁴³⁾ 예를 들면 선사시대 이후 경계를 넘는 다양한 접촉(전쟁, 상업적 교역, 여행(순례), 이주 등)을 통한 네트워크의 형성, 단절, 결합, 확대를 다루는 것이다.

여기에 아프로-유라시아, 후에 아메리카까지 포함하여 여러 지역에 남아 있는 벽화를 포함한 유물이나 유적, 지도, 그림, 문자 자료 등을 보조 자료로 활용하여, 존재했을 만한 교류 네트워크의 범위와 참여했을 만한 집단들의 범위를 상상해보게 하고, 나아가 각 집단이 타집단(지역)과의 관계를 어떻게 형성화하였는지 등에 대해서도 추론해 볼 수 있게 자료를 제시할 수도 있다. 물론 남아 있는 자료 자체가 제한적이기 때문에 다룰 수 있는 내용에 한계는 있다.

또는 네트워크의 확대 과정에서 일어난 이질적인 정치·문화 집단들 간의 갈등, 논쟁, 교환 등에 대해 설명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특정 시기 등 여러 제국들을 중심으로 한 다중심적 네트워크들을 상상하고, 네트워크들 사이의 결합과 연결 과정에서 이루어졌던 종교나 문화를 둘러싼 ‘충돌’, ‘논쟁’, 문화 교환이나 혼합 등에 대해 개관할 수도 있다.

이러한 방향의 세계사는 역사적으로 지속적인 접촉을 통해 상호인식이 확대 심화되었던 공간으로서, 혹은 문화 혼합 과정이 새로운 문화 창조를 자극했던 공간으로 세계의 밑그림을 그리게 하고, 그 그림 속에서 동아시아사의 위치를 이해하게 한다는 데 초점이 있다. 물론 이러한 내러티브로 세계사를 구축하는 것의 한계는 명확하다. 세계사의 여러 국면 가운데 일부에 초점을 맞추며 제한된 역동성을 보여준다는 것이다. 특히 교과서의 제한된 쪽수 내에서 설명을 해야 하기 때문에 설명이 피상적으로 제시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도 있다. 그럼에도 동아시아사 교과서에 부가되는 세계사라는 점을 고려한다면 ‘망라주

43) 존 맥닐과 윌리엄 맥닐, 유정희·김우영 옮김, 2007, 『휴먼 웹: 세계화의 세계사』, 이산; Peter Perdue, 2008, “Eurasia in World History: Reflections on Time and Space,” *World History Connected* 5(2)

의에서 탈피할 수 있게 해준다는 점과 동아시아를 세계사적 구도에서 상대화할 수 있게 하고, 종래 학생들의 세계사 선행 지식을 보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찾을 수 있다.

2_ 역사적 과정에 대한 주제탐구의 장으로서 세계사

경계를 넘어 이루어진 역사적 과정에 대해 심층적으로 탐구할 수 있게 세계사를 조직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안병우 외의 『동아시아사』의 ‘주제탐구’와 같은 형식으로 탐구 자료와 과제를 제시하는 방안이다.⁴⁴⁾ 안병우 외는 중단원을 마무리하면서 ‘주제탐구’를 두 쪽에 걸쳐 제시하였다. ‘주제탐구’에서는 학생들이 중단원에서 학습한 내용을 사료, 사진, 이미지, 그래프 등의 자료에 기초하여 과제를 해결하면서 학습을 마무리하게 하였다.

예를 들면 “교역망의 발달과 은의 유통”이라는 중단원의 ‘주제탐구’에는 다음과 같은 자료가 제시되었다. “〈자료 1〉 은의 유통과 조선의 상황”, “〈자료 2〉 동아시아에 온 유럽인(청 대 광저우의 외국 상관과 에도 시대 나가사키의 네덜란드 상관 사진)”, “〈자료 3〉 국외로 이주한 중국인과 일본인(그래프와 지도)”, “〈자료 4〉 동아시아에 전래된 작물(옥수수, 고구마, 토마토, 고추, 땅콩, 담배 등의 사진)”, “〈자료 5〉 세계 지도와 인식의 변화(혼일강리역대국도와 곤여만국전도 이미지)” 등이다. 그리고 다음의 네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보게 하였다.⁴⁵⁾ ① 조선의 은 수요량이 〈자료 1〉과 같이 늘어나게 된 이유를 본문에서 찾아보자. ② 〈자료 4〉의 작물들의 전래가 동아시아 사회에 끼친 영향은 무엇일까? ③ 〈자료 5〉의 두 지도에서 오늘날의 지도와 다른 점을 각각 찾아보자. ④ 〈자료 1〉~〈자료 5〉를 바탕으로 은의 유통과 교역망의 확대가 동아시아 사회에 끼친 영향을 정리해보자. ①과 ③은 본문에서 ‘찾기’ 활동이다. ②나 ④도 사

44) 사실 ‘그 때 세계는’과 같은 형식의 이야기와 ‘주제탐구’ 형식, 두 가지를 모두 활용하는 방법도 가능하겠지만, 이 경우 부가되는 세계사가 너무 많아질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45) 안병우 외, 2011, 앞의 책, 150~151쪽

실 본문에서 찾아 확인할 수 있는 내용이다.

주제탐구의 형식을 통해 세계사를 동아시아사와 연계시킨다면 탐구활동은 ‘찾기’, ‘본문에서 확인하기’를 넘어서, 자료에 기초한 추론, 심화된 정보 수집, 분석과 종합의 활동으로 구성해야 한다.

탐구 주제는 본문에서 다른 동아시아사 주제나 시기를 세계사적 맥락에서 조망해 볼 수 있게 선정할 수 있다. 여기서도 지구사의 문제의식과 시각을 수용한다면 본문에서 다른 동아시아사와 관련된 시기에 지역의 경계를 넘어서 이루어졌던 ‘교환’, ‘충돌’, ‘논쟁’, ‘혼합’ 등의 역사적 과정을 보여주는 사건들을 선택할 수 있다.

사실 교역로를 통한 문물의 교환과 이질적 문화 집단 간의 충돌이 자극한 문화 혼합의 사례는 2009 개정 중학교 세계사에서도 다루었다. 예를 들면 실 크로드를 통해 중국의 비단이나 차가 상품으로 교환되었고 인도의 불교가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에 전파되었으며, 알렉산드로스의 원정 과정에서 헬레니즘 문화가 탄생했다는 것은 중·고등학교 세계사에서 상당히 오랫동안 반복적으로 가르쳐왔다. 그러나 대체로 단순히 교환된 문물을 알려주거나 새로 등장한 문화를 제시하는 데 그칠 뿐, 이질적 문화 집단 간의 접촉 과정에서 일어난 교환, 충돌, 논쟁, 접침, 혼합 등을 역사적 과정이나 문화 과정으로 분석해 볼 장을 제공하지는 않았다.

동아시아사 교과서의 주제탐구 형식을 통한 세계사는 중학교와 같은 주제 일지라도 다른 차원에서 심층적으로 탐구해보게 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⁴⁶⁾ ‘차

46) 필자는 「문화적 접촉과 교류의 역사」라는 글에서는 고등학교 선택 과목으로서 ‘문화적 접촉과 교류의 역사’를 상정하고 이 과목의 내용 선정 및 조직의 기본 원칙과 학습(탐구)을 조직할 수 있는 개념들을 제시한 적이 있다. 강선주, 2008, 「문화적 접촉과 교류의 역사」, 조지형·강선주 외, 2008, 241~274. 이 글에서 제시한 원칙들은 동아시아사에서 세계사를 주제탐구의 형식으로 조직하고자 할 때 참고할 수는 있지만, 그대로 적용할 수는 없다. 동아시아사와 연계하는 세계사에 배당되는 쪽 수는 매우 적을 것이기 때문이다. 다만 동아시아사와 연계하는 세계사에서 차용 거부, 문화적 혼합과정, 문화적 번역 등은 버크(Peter Burke)가 제시한 혼종성이라는 개념과 함께 탐구를 조직하는 개념으로 사용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피터 버크, 강상우 옮김, 2012, 『문화 혼종성』, 이음

용 거부', '동화', '문화적 번역', '문화 혼합 과정' 등을 조직개념으로 활용하여 역사적 과정의 메커니즘을 개념적으로 분석하게 할 수도 있다. 그런데 혼합 혹은 혼종성의 개념은 버크(Peter Burke)도 지적하였듯이 개별 행위주체를 배제하고 기계적인 과정에 초점을 맞추어, 결과물을 식물 표본인 것처럼 보이게 할 수 있다.⁴⁷⁾ 또한 문화적 과정에만 초점을 맞추면 이러한 과정에 작용하는 거대한 문화 권력적 구조와 관계, 그리고 역사적 맥락을 누락시켜 그 과정의 역사성을 사상시킬 수도 있다.

그러므로 주제탐구 형식을 통한 세계사에서는 이질적인 문화 집단 간의 접촉이 어떤 방식으로 이루어졌는지, 접촉 과정에서 어떤 논쟁이나 충돌이 있었는지, 또 어떤 방식으로 문화가 번역되고, 문화 차용 거부나 문화 차용, 혼합이 이루어졌는지는 물론, 그러한 문화 과정이 일어났던 역사적 맥락과 조건은 어떤 것인지, 또 어떤 정치·문화 권력적 관계가 그러한 과정을 어떻게 통제했는지 등을 심층적으로 분석해보게 해야 한다.

예를 들면 본문에서 동아시아의 국민국가 수립 운동을 다룰 때 주제 탐구에서는 인도나 오스만 제국 등 다른 지역의 국민국가 수립 운동 사례를 심층 탐구하게 할 수 있다. 사실 근대를 이해하는 데 자본주의와 국민국가 체제가 중요하다고 여긴다면 자본주의나 국민국가가 전 지구적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혼종이나 잡종 체제에 초점을 맞추어 탐구해보게 할 수 있다. 그런데 자본주의의 확산은 중·고등학교 세계사에서 유럽의 근대를 다룰 때에만 중요하게 다루었고, 비유럽 지역에서는 피상적으로 다루어졌다. 동아시아를 비롯한 비유럽 지역의 근대화 설명에서는 국민국가 수립 운동, 제국주의에 저항하는 민족운동, 서구 문물의 수용 등이 중심 주제가 된다. 그러므로 국민국가 수립 운동에 초점을 맞추어 비동아시아 지역의 국가들의 근대화 과정을 탐구해보게 할 수 있다.

탐구할 때는 어떤 조건과 맥락, 그리고 권력 관계 속에서 서구의 제도나 사상, 문물이 그 사회의 고유한 제도, 사상, 문물과 만나게 되었으며, 어떤 갈등

47) 피터 버크, 강상우 옮김, 2012, 위의 책, 87쪽

이나 혼합을 통해 새로운 제도, 사상, 문물이 탄생하게 되었는데 초점을 맞추게 할 수 있다. 그러나 동아시아사에 부가되는 세계사의 범위 내에서 국민 국가 수립 운동을 ‘혼종’이라는 개념적 틀에 기초하여 탐구하게 하기는 쉽지 않을 수도 있다. 그런데 손승철 외가 동아시아의 ‘서구 문물의 수용’에서 서술했던 것과 비슷한 수준의 작은 문화나 기술의 수준에서는 가능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19~20세기 초 특정 지역에 사회 진화론이나 민권 등의 사상이 어떻게 문화 번역되어 들어가 어떤 새로운 갈등이나 담론을 만들었는가? 철도, 전화 등과 같은 문물이나 서구의 과학적·의학적 지식이 종래 전통적인 문물이나 지식들과 어떤 충돌이나 갈등을 만들었으며, 문화나 관계에 어떤 변화를 가져왔는가? 등과 같은 주제를 역사적으로 탐구해보게 하는 것이다.



V. 맺음말

이 글에서는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세계사를 연계하는 방안을 형식과 내용 면에서 제안하였다. 형식면에서는 안병우 외(2011)의 『동아시아사』처럼 별도의 읽기자료나 주제탐구를 제시하는 방안이 동아시아사에 부가되는 세계사로서의 성격에 부합할 것으로 보인다. 중요하고 어려운 것은 내용을 선정하는 문제다. 제한된 분량에서 세계사를 다루는 것이 결코 쉽지 않기 때문이다.

동아시아 교과서의 본문은 250~260쪽 정도다. 세계사를 중단원마다 1~2쪽으로 다룬다면 24개의 중단원이므로 24개의 세계사 주제를 24쪽, 많으면 48쪽 내에서 다루어야 한다. 48쪽에 어떤 세계사를 담을 수 있을까? 결국 특정 주제를 선택하면서 다른 주제들을 배제시켜야 한다. 확실한 것은 중학교 세계사처럼 여러 지역의 역사를 모두 담을 수는 없다는 것이며, 현행 동아시아사 교과서처럼 유럽사를 중심으로 다루어 세계를 동아시아와 유럽의 이분법적 구도에서 이해하게 하는 것도 지양해야 한다는 것이다.

세계사 내용 선정의 원칙을 설정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세계사를 연계하고자 하는 의도, 그리고 동아시아사나 세계사를 통해 학생들에게 제시하고자 하는 현재의 과제와 미래의 사명에 대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편협한 지역주의에 빠지지 않게 하면서 동아시아사를 좀 더 큰 시야와 맥락에서 통찰할 수 있게 가르치고자 한다면 아프로-유라시아, 세계를 닫힌 공간이 아닌 간헐적으로라도 상호접촉하고 상호작용했던 공간으로 그릴 필요가 있다. 여러 지역인들이 역사적인 접촉을 통해 서로 논쟁을 펼쳤고, 때로 충돌하기도 했지만 교류하기도 했던 공간으로서 세계의 밑그림을 그릴 수 있게 하는 것이다.

또한 학생들이 학습한 유럽중심주의나 중국중심주의 세계사가 여타 지역인의 창의성과 역동성을 억압해온 것을 문제라고 생각한다면 다수의 역사적 주체들이 상호교류를 통해서 문화적 변용이나 융합을 서로 자극했던 과정으로 세계사를 이해하게 할 필요가 있다.

동아시아사 교과서에서 세계사는 별도의 읽기 자료를 통해 내러티브 방식으로 부가하는 방법도 가능하고 주제탐구 형식으로 제시하는 방법도 가능하다. 세계사를 내러티브로 제시하는 것의 장점은 학생들이 부담 없이 세계사를 읽고 선택적으로 학습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학생들이 오만한 내러티브의 늪에서 헤어나오기 쉽지 않을 것이라는 문제가 있다. 세계사를 주제탐구 형식으로 제시하는 경우 대학 입시라는 현실적인 문제 앞에서 교사와 학생에게 큰 부담이 될 수 있으며, 따라서 세계사 학습 자체가 생략될 수도 있다는 문제가 있다. 그러나 잘 활용된다면 학생들이 과거나 현재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배우고 익힐 수 있는 유용한 장이 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참고문헌

- 교육과학기술부, 2007, 『사회과교육과정』, 교육인적자원부 고시 제2007-79호 [별책3]
- 교육과학기술부, 2011, 『2009 개정 교육과정(2011 개정 교육과정) 별책7』, 교육과학기술부 고시 2011-361호
- 손승철 외, 2011, 『동아시아사』, 교학사
- 안병우 외, 2011, 『동아시아사』, 천재
- 조지형·강선주 외, 2008, 『지구화 시대의 새로운 세계사』, 해안
- 조지형·김용우 외, 2010, 『지구사의 도전』, 서해문집
- 강선주, 2003, 「세계사 교육의 '위기'와 '문제': 역사적 조망」, 『사회과교육』 42-1
- 강선주, 2004, 「참여와 상호작용의 세계사 내용 구성 방안」, 『歷史教育』 92
- 김광역, 1999, 「동아시아 담론의 실패-그 분석과 해석」, 정재서 편저, 『동아시아 연구 글쓰기에서 담론까지』, 살림
- 김성보, 2007, 「탈중심의 세계사 인식과 한국근현대사 성찰」, 『역사비평』
- 성민엽, 1999, 「같은 것과 다른 것: 방법으로서의 동아시아」, 정재서 편저, 『동아시아 연구 글쓰기에서 담론까지』, 살림
- 이민호, 2000, 「세계사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유럽중심주의 사고의 극복을 위하여」, 『역사비평』 60
- 조병한, 1999, 「90년대 동아시아 담론의 개관」, 정재서 편저, 『동아시아 연구 글쓰기에서 담론까지』, 살림
- 조지형, 2002, 「새로운 세계사와 지구사: 포스트모던 시대의 성찰적 역사」, 『歷史學報』
- 최갑수, 2000, 「서양사: 유럽중심주의의 극복과 대안적 역사상의 모색」, 『역사비평』 52
- 로버트 B. 마르크스, 윤영호 옮김, 2007, 『다시 쓰는 근대 세계사 이야기』, 코나투스
- 안드레 군터 프랑크, 이희재 역, 2004, 『리오리엔트』, 이산
- 존 맥닐과 윌리엄 맥닐, 이정희·김우영 옮김, 2007, 『휴먼 웹: 세계화의 세계사』, 이산
- 존 M. 홉슨, 정경옥 역, 2005, 『서구 문명은 동양에서 시작되었다』, 에코리브르
- J. J. 클라크, 장세룡 역, 2004, 『동양은 어떻게 서양을 계몽했는가』, 우물이 있는 집
- 피터 버크, 강상우 옮김, 2012, 『문화 혼종성』, 이음

- 아리프 딜릭, 2010, 「탈중심화하기: 세계들과 역사들」, 조지형 · 김용우 엮음, 『지구사의 도전: 어떻게 유럽중심주의를 넘어설 것인가』, 서해문집
- 제리 벤틀리, 2010, 「다양한 유럽중심의 역사와 해결책들」, 조지형 · 김용우 엮음, 『지구사의 도전』, 서해문집
- Canclini, Nestor Garcia, 1995, *Hybrid Cultures: Strategies for Entering and Leaving Modernity*, tr. by Christopher L. Chiappati and Sylvia L. Lopez, MN: University of Minnesota Press
- Wang Ning, 2000, *Translated Modernities: Literary and Cultural Perspectives on Glamorization and China*, Ottawa: Legas
- Charkrabarty, Despetch, 2000, *Provincializing Europe: Postcolonial Thought and Historical Difference*, Princeton
- Dirlik, Arif, 2012, “Thinking Modernity historically: Is “Alternative Modernity” the Answer?”, Keynote Addresses, 제2회 아시아세계사학회 국제학술대회(The Second Congress of the Asian Association of world Historians), 서울
- Kang, Sunjoo, 2012, “Conceptions of Modernity in the Middle School World History Curriculum in the Republic of Korea: Adopting Theories of European Inherited Modernity and Modernization,” *The Journal of Northeast Asian History*, The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9(2)
- Perdue, Peter, 2008, “Eurasia in World History: Reflections on Time and Space,” *World History Connected* 5(2)

[ABSTRACT]

Incorporating World History in the High School East Asian History Textbook

Kang Sunjoo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suggest strategies for how to incorporate world history in the high school East Asian history textbook. Students study world history together with Korean history in a required course in middle school and study world history, East Asian history, or Korean history as an elective in high school. The high school course in East Asian history requires students to focus on East Asian history, but does not ask them to put it in a world history context. However, to help students transcend parochialism, the textbook writers could incorporate world history into the East Asian history textbook.

How can the writers bring a world history context into East Asian history in their East Asian history textbook? To answer this question, I analyzed two East Asian history textbooks in terms of their strategies for incorporating world history and their organizing themes and narrative structures of world history added onto East Asian history.

I pointed out problems of Eurocentrism in the narrative of the 2009 revised middle school world history curriculum and suggested different organizing themes of world history that could be added to high school East Asian history by reducing Eurocentrism. In addition, I examined current issues and questions in the area of East Asian history and suggested an intercultural perspective to organize world history and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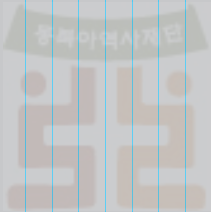
East Asian history.

In sum, I suggested that the world history added onto high school East Asian history could be organized from a global history perspective in a narrative format or an inquiry activity format. In particular, I emphasized that intercultural interaction transcending cultural or ethnic barriers could be the focus of world history.

Keywords

East Asian history, world history, East Asian Community, history textbook, Eurocentrism, cultural exchange, hybridity, middle school history, high school history, 2007 amended history curriculum, 2009 amended history curriculum

논문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魏晉南北朝時期 中華意識의 변용과 동아시아 국제질서

홍승현 | 서강대학교 사학과 강사

I. 머리말

본 연구는 魏晉南北朝時期 華夷思想이 중국¹⁾의 주변 종족 및 국가에 의해 변용된 모습을 복원하고 그를 근간으로 수립된 다면화된 동아시아 국제질서의 특징을 탐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통해 다양한 지역질서가 중층적으로 존재하던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현상을 보다 정확하게 설명하고, 그 본질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흔히 中華主義로 불리는 화이사상은 중국이 주변과 자신을 분리하여 사고하면서 등장한 것으로 ‘중국인이 스스로를 중화 또는 華夏라고 하여 자신을 존대하고, 주변 종족에 대해서는 夷狄·蠻夷라고 비하하는 관념’이다.²⁾ 즉, 화이

※ 투고일: 2013년 2월 21일, 심사일: 2013년 5월 22일, 게재 확정일: 2013년 5월 24일

1) 여기서 말하는 ‘중국’이란 김한규가 규정한 역사공동체를 말한다. 김한규는 역사공동체를 특정한 생활공간과 고유한 문화, 동류의식을 갖는 인적 집단, 계승관계를 갖는 일련의 국가체제 등의 요소를 갖춘 것으로 파악하였다.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9쪽

2) 홍승현, 2011, 「漢代 華夷觀의 전개와 성격」, 『동북아역사논총』 31, 191쪽

관은 중국의 우월성을 바탕으로 한 주변 종족에 대한 중국인의 차별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군사적으로 중국이 이적에 대해 열세를 면하지 못했던 春秋末~戰國時期에 형성된 관념이다. 문화적으로 周公·仲尼의 道를 따르고, 정치적으로는 先王의 유산을 계승하였다고 자부한 북중국의 중국인들은³⁾ 이적에 대한 자신들의 우월감을 주로 문화·정치적인 면에서 확인하고자 하였다.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적이라 불리는 주변 종족들에게 북중국이 점유되었던 '五胡十六國時期'에는 이 화이사상이 더 이상 중국인의 전유물이 아니었다. 전통적인 의미의 '中原'을 차지한 이적들은 자신들을 중화의 嫡子로 인식하였고, 심지어 남쪽의 東晉을 자신들이 제압해야 하는 이적, 즉 南蠻으로 치부하였다. 몇몇 胡族王朝 안에서는 이러한 인식이 근거하여 동진을 복속시키려는 의지를 南蠻校尉의 설치로 표현하였다. 당시 남만교위의 설치는 대체로 자신을 천하의 지배자로 인식하는 天下觀의 정립, 皇帝號의 사용, 年號의 채용, 五德 추이에 따른 왕조 계승설의 표방과 같은 일련의 조치와 연동되어 진행되었다. 요컨대, 그것은 자신을 중화로 인식하는 관념하에서 설치되었던 것이다.

그 결과 오호십육국시기 동안 북중국에는 복수의 중심이 존재하게 되었고, 그 중심이 주변을 변방화하면서 다층의 질서가 공존하게 되었다. 다양한 중심과 변방, 그리고 그들이 만들어낸 다각화된 질서가 수립되게 된 것이다. 연구는 우선 이 과정을 복원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즉 전통적으로 이적이라 불리며 중국에 모멸의 대상이었던 이들이 어떻게 자신을 중심으로 위치시키며, 더 나아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가는지 살펴보고자 한다.

그런데 이러한 복수의 중심, 그리고 그에 따른 다양한 세력권의 공존은 오

3) 『孟子』, 「滕文公上」, “吾聞用夏變夷者, 未聞變於夷者也. 陳良楚產也. 悅周公仲尼之道, 北學於中國. 北方之學者, 未能或之先也, 彼所謂豪傑之士也. 子之兄弟, 事之數十年, 師死而遂倍之. …… 今也, 南蠻駟舌之人, 非先王之道, 子倍子之師而學之.” 밑줄은 필자

호십육국시기, 중국에만 국한된 현상일까? 이 글의 두 번째 목적은 중국 안에서 발생한 중화의식의 변용이 중국 밖의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주지 않았을까 하는 점을 규명하는 것이다. 隋 煬帝 大業 3년(607) 倭王 다리시히코[多里思比孤]는 수에 遣使하여 國書를 전달하는데, 이때 국서는 “해 뜨는 곳의 천자가 해지는 곳의 천자에게 보낸다”⁴⁾라는 내용으로 시작한다. 우리는 이것을 통해 당시 왜왕이 실제로 자신을 중국 황제와 동일 반열로 사고했는지 알 수는 없으나, 스스로를 단지 일국의 왕으로만 국한시키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그렇다면 이러한 왜왕의 자신감은 어디서 나왔을까? 『宋書』 「倭國傳」에 실린 表文을 보면 “동으로 毛人 55개국을 정벌하고, 서로 衆夷 66개국을 복속시켰으며, 바다 건너 海北의 95개국을 평정하였다”⁵⁾고 하여, 왜국이 주변 이적을 복속하여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를 구축한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러한 현실로 인해 왜의 국왕은 은연중에 자신을 명실상부한 천하의 지배자로 말했던 것이다. 명문에 등장하는 “治天下獲□□□齒大王”, “吾左治天下”⁶⁾는 바로 왜왕이 중심임을 자신하는 표현에 다름 아닐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이미 4세기부터 高句麗에서 발견된다. 광개토왕릉비에 등장하는 ‘皇天’, ‘四海’, ‘屬民’, ‘朝貢’⁷⁾ 등의 표현들은 고구려 역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를 구축하고 있음을 알려주고 있다. 이것을 왜나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이 여전히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었거나, 중국이 국제질서를 수립하는데 사용했던 방식으로 자신의 세계를 구축하였다면, 중국 안에서 발생한 중화

-
- 4) 『隋書』 卷81, 「東夷 倭國傳」, “日出處天子致書日沒處天子.”
 - 5) 『宋書』 卷97, 「夷蠻 倭國傳」, “東征毛人五十五國, 西服衆夷六十六國, 渡平海北九十五國.”
 - 6) 차례대로, 東京國立博物館, 1993, 『江田船山古墳出土 國寶 銀象嵌銘大刀』, 東京: 東京國立博物館, 62쪽; 埼玉縣教育委員會, 1979, 『稻荷山古墳出土鐵劍金象嵌銘概報』, 浦和: 埼玉縣教育委員會, 12쪽
 - 7)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廣開土王陵碑〉, 7~16쪽. 이하 金石文의 인용은 모두 이 책을 이용하였다. 구체적인 쪽수는 생략한다.

의식의 변용이 중국 밖의 주변 국가에도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을 적극적으로 생각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 그렇다면 그 영향은 어떤 계기를 통해 이루어졌을까?

마지막으로 고찰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이 이러한 복수의 국제질서를 중층적으로 존재시켰는가 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 중층적 지역질서를 가능하게 한 구심이 무엇이었는가 하는 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최근의 연구는 이러한 다원적 지역질서가 지리적으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던 중국을 매개로 하여 이루어졌다고 하였다.⁸⁾ 그러나 중국을 단순히 매개로만 이해한다면 동진에 우호적이었던 前涼의 張重華가 慕容皝보다 낮은 封爵을 받은 것에 대해 분노하지 않았을 것이고,⁹⁾ 北涼은 정치적 승부수를 두면서까지 宋으로부터 세자의 敍正을 실현시키려 하지 않았을 것이다.¹⁰⁾ 또한 자신이 만들어낸 세계질서 안에서 중국이 단순히 매개라면 왜는 무엇 때문에 송에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六(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의 봉작을 반복적으로 요구하고, 그 配下에게 將軍號를 서정해 줄 것을 요구였는지가¹¹⁾ 설명되

- 8) 김병준은 중국이 '넓은 영역을 차지하면서 동시에 지리적으로 가운데에 위치하고 있었'기에, 이를 매개로 다수의 지역질서가 연결되어 있었다고 보았다. 김병준, 2010, 「3세기 이전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중관계 - 조공·책봉의 보편적 성격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 - 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52쪽
- 9) 『資治通鑑』 卷99, 「晉紀十九」 穆帝永和3年條, “冬, 十月, 乙丑, 遣侍御史俞歸至涼州, 授張重華侍中·大都督·督隴右關中諸軍事·大將軍·涼州刺史·西平公. 歸至姑臧, 重華欲稱涼王, 未肯受詔, 使所親沈猛私謂歸曰: 「主公奔世爲晉忠臣, 今曾不如鮮卑, 何也? 朝廷封慕容皝爲燕王, 而主公才爲大將軍, 何以褒勸忠賢乎! 明台宜移河右, 共勸州主爲涼王, 人臣出使, 苟利社稷, 專之可也.」”
- 10) 南北朝時期 초, 北涼이 北魏와 宋 사이에서 정치적 줄타기를 하며 자국의 정치적 지위를 상승시킨 것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이다. 북량은 북위에도 조공하고, 송에도 조공하는 방식으로 두 국가의 대립을 교묘하게 이용하였다. 그 결과 423년 송으로부터는 서열 2위인 驃騎大將軍을 배수받았고, 북위로부터는 15년 동안 9차례의 사신 방문을 받는다. 元嘉 9년(432), 송에서 世子の 敍正을 받은 것도 이러한 맥락에서 이해할 수 있다. 『宋書』 卷98 「氏胡 大且渠蒙遜傳」, “六年, 蒙遜征枹罕, 時乞佛熾槃死矣, 子茂蔓大破蒙遜, 生禽興國, 殺三千餘人. 蒙遜贖興國, 送穀三十萬斛, 竟不遺. 蒙遜乃立興國母弟菩提爲世子, 朝廷未知也. ……九年, 以菩提爲冠軍將軍·河西王世子.”
- 11) 『宋書』 卷97, 「夷蠻 倭國傳」, “自稱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秦韓慕韓六國

지 않는다. 또한 고구려와 백제가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자신 배하의 왕들에 대한 서정을 요구한 것도¹²⁾ 설명하기 힘들다. 중국에 의한 책봉과 그에 대한 조공이 항상 실제적인 힘의 역관계를 설명하고 군신관계를 표현하는 방법이 아님은 분명하나, 책봉·조공이 갖는 질서유지 장치로서의 역할을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

이 글은 이와 같이 첫째 복수의 중심을 등장시켰던 원인인 중화의의식의 변용을 고찰하고, 둘째 그로 인해 발생한 다원적 국제질서가 가진 특징을 살피며, 셋째 그것이 주변 세계에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가를 살피고자 한다. 또한 마지막으로 다원적 국제질서를 중층적으로 존립시켰던 장치는 무엇이었는가를 고찰하여 중심과 변방이 상호작용 속에서 만들어낸 고대 동아시아 질서의 특징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고자 한다. 이와 같은 작업을 통해 이 글이 고대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보다 진전된 작업가설을 수립하는 데 일조하기를 바란다.

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 表求除正, 詔除安東將軍·倭國王, 珍又求除正倭隋等十三人平西·征虜·冠軍·輔國將軍號, 詔並聽。”

- 12) 『南齊書』卷58, 「東夷 高麗傳」, “隆昌元年, 以高麗王樂浪公高雲爲使持節·散騎常侍·都督營平二州諸軍事·征東大將軍·高麗王·樂浪公. 建武三年, …… 伏願恩愍, 聽除所假. 寧朔將軍面中王姐瑾, 歷贊時務, 武功並列. 今假行冠軍將軍·督將軍·都漢王. 建威將軍·八中侯餘古, 弱冠輔佐, 忠效夙著, 今假行寧朔將軍·阿錯王. 建威將軍餘歷, 忠款有素, 文武列顯, 今假行龍驤將軍·邁盧王. 廣武將軍餘固, 忠效時務, 光宣國政, 今假行建威將軍·弗斯侯.”; 『南齊書』卷58, 「東夷 百濟傳」, “牟大又表曰: 「臣所遣行建威將軍·廣陽太守·兼長史臣高遠, 行建威將軍·朝鮮太守·兼司馬臣楊茂, 行宣威將軍·兼參軍臣高邁等三人, 志行清亮, 忠款夙著, …… 伏願天監特愍除正, ……」 詔可, 竝賜軍號, 除太守.”

II. 五胡政權의 中華意識 형성과 표출

五胡十六國時期 胡族임에도 명실상부한 황제국가를 꿈꿨던 이는 苻堅이었다. 그는 자신을 中華로 이해하였고, 華夷를 하나로 하는 混一된 세계의 유일한 지배자가 되고자 하였다.¹³⁾ 夷狄 군주가 스스로를 화이가 공존하는 六合의 최고 통수권자로 위치시킨 특별한 상황에 대해 많은 연구자들이 주목하였다.¹⁴⁾ 북중국을 통일하고 東晉을 병합의 대상으로 인식하여,¹⁵⁾ 淝水戰이라는 세계대전을 일으킨 부견에 대한 주목은 어쩌면 당연한 일일 것이다. 연구자들은 부견의 이 같은 인식과 행위를 통일천자에 대한 욕망으로,¹⁶⁾ 또는 명실상부

- 13) 苻堅이 스스로를 中華로 자처했다는 직접적인 기사는 없다. 그러나 “朕이 바야흐로 은혜와 믿음으로 戎狄를 회유하고자 한다(『資治通鑑』卷101, 「晉紀二十三」 穆帝升平4年條. 朕方以恩信懷戎狄)”는 기사, “짐이 바야흐로 六合을 섞어 一家를 만들려고 함에 夷狄를 赤子和 같이 보고자 한다(『資治通鑑』卷103, 「晉紀二十五」 孝武帝寧康元年條. 朕方混六合爲一家, 視夷狄爲赤子)”는 기사 등을 통해 자신이 이적이 아님을 분명히 하였다. 또한 당시 前秦의 陽平公 苻融의 “용적들은 사람의 얼굴을 하고 있으나 짐승과 같은 마음을 지녀서 仁義를 알지 못한다(『資治通鑑』卷101, 「晉紀二十三」 穆帝升平4年條. 戎狄人面獸心, 不知仁義)”는 諫言은 부씨 집단 안에 자신을 중화로 인식하는 관념이 있었음을 알려준다.
- 14) 부견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을 참조. 朴漢濟, 1985, 「前秦苻堅政權의 性格-胡漢體制와 統一體制의 구축과정과 관련하여」, 『東亞文化』 23; 韓國磐, 1986, 「苻堅略論」, 『歷史研究』 1986-1; 林探, 1986, 「苻堅略論」, 『民族研究』 1986-1; 松下洋巳, 1997, 「前秦苻堅政權의 性格について」, 『史苑』 57-2; 姜文皓, 1997, 「前秦苻堅의 政治와 帝權」, 『中國學報』 37; 高昕, 2008, 「對苻堅民族政策的思考」, 『宜賓學院學報』 2008-2; 趙越, 2008, 「苻堅民族關係思想初探」, 『煙臺大學學報』(哲社版) 2008-4; 홍승현, 2009, 「부견(苻堅)의 ‘六合’ 개념과 귀속민 통치」, 『漢城史學』 24; 李方, 2010, 「前秦苻堅의 中國觀與民族觀」, 『西北民族研究』 2010-1
- 15) 『晉書』 卷114, 「苻堅載記下」, “今天下垂平, 惟東南未殄. 朕忝荷大業, 巨責負歸, 豈敢優游卒歲, 不建大同之業.”
- 16) 朴漢濟, 1988,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一潮閣, 91쪽; 原載: 1985, 앞의 글. 박한제는 부견이 당시 이적 출신의 군주가 통일 천자가 될 수 없다는 前秦 조정 및 胡漢 민중들의 사고에 정면 대결하고자 하는 욕망이 있었다고 분석하였다.

한 황제지배체제의 구현으로¹⁷⁾ 설명하였다.

다소의 차이는 있을지 몰라도 이러한 분석은 황제 이념의 실현이라는 것이 결국에는 화이라는 종족적·문화적 차이를 막론하고 최고 통수권자에게 실현되어야 하는 정치적 이념이었음을 인정한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이것은 비단 부견만의 의식, 욕망은 아니었을 것이다. 부견에 대한 특별한 관심이 자연스러운 현상이라 여기면서도, 한편 부견의 사고와 행위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것이 불편한 것은 부견의 그것들을 특별한 개인의 현상으로 강조하면서 그를 시대와 역사 속에서 돌출변수로 이해할 수 있는 가능성을 만들었기 때문이다. 과연 호족군주 중에 부견만이 화이가 하나 된, 혼일된 세계의 지배자, 胡人天子를 지향했을까? 혹 부견의 이러한 의식을 개인의 의식이 아닌 호족의 의식 변화의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할까? 이 장에서는 이러한 의문을 오호 각 정권의 華夷觀을 살펴보는 작업을 통해 해명해보고자 한다.

1_ 오호정권의 중화의식 형성

기록에 따르면 오호십육국시기 호족군주 중 제일 먼저 호인천자를 지향했던 이는 漢(이후 前趙)의 劉淵이었다. 그는 “무릇 帝王의 출생에 항상됨이 있겠는가! 大禹는 西戎에서 났으며 文왕은 東夷에서 태어났으니 오직 하늘이 德을 준 것에 달린 것이다”¹⁸⁾라고 하며 제왕이 되는 데 고정된 원칙이 있을 수 없다고 선언하였다. 요컨대 그는 오직 천명을 받은 受命의 유무에 따라 제왕이 될 수 있다고 하여 호족임에도 중화의 天命意識을 드러낸 것이다. 뿐만 아니라 呼韓邪單于의 업적을 회복할 것을 諫言하는 從祖 劉宣 등에게 대장부라면 호한야선우가 아니라 마땅히 漢高祖나 魏武帝를 본받아야 한다고 한 것¹⁹⁾ 역시

17) 홍승현, 2009, 앞의 글, 142~144쪽

18) 『晉書』卷101, 「劉元海載記」, “夫帝王豈有常哉, 大禹出於西戎, 文王生於東夷, 顧惟德所授耳.”

19) 『資治通鑑』卷85, 「晉紀七」惠帝永興元年條, “劉宣等諫曰: 「晉人奴隸御我, 今其骨肉相殘, 是天棄彼而使我復呼韓邪之業也. 鮮卑·烏桓, 我之氣類, 可以爲

천하통일에 대한 의지를 드러낸 것이라 할 것이다. 또한 漢王에 즉위한 후 蜀 漢의 劉禪을 孝懷皇帝로 추존하고 한의 三祖와 五宗을 神主로 하여 제사지내며,²⁰⁾ 자신이 명실상부한 한왕조의 후예임을 자처하였다.

유연의 이러한 인식과 행위가 配下에 유입된 漢族을 포섭하려는 의도의 산물이었다고 분석할 수도 있겠으나,²¹⁾ 이후 한(전조)정권에서 지속적으로 보이는 중화사상은 유연의 위와 같은 의식이나 행위가 특정한 목적을 가진 한시적인 조처만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 ① 천하라 하는 것은 高祖(劉淵)의 천하이니 형이 죽으면 아우가 이어 받는 것이 어찌 안 된다는 말입니까?²²⁾
- ② 위대한 한은 장차 하늘에 감응하여 命을 받았기 때문에 폐하를 위하여 스스로 서로 몰아내고 제거하였던 것이니, 이는 거의 하늘의 뜻이지 사람이 한 일이 아닙니다.²³⁾

②기사가 포로로 잡힌 西晉 懷帝가 漢主인 劉聰에게 한 말이라 다분히 정치적 수사라 치부해도, 제위 계승을 두고 간언하는 光祿大夫 單沖에게 太弟인 劉乂가 말한 ①의 기사를 통해 흉노족 내부에서 자신을 중화로 여기는 인식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옛날 전한인들이 사용한 ‘천하는 고향제의 천하’²⁴⁾

援, 奈何擊之!」淵曰:「善! 大丈夫當爲漢高·魏武, 呼韓邪何足效哉!」”

- 20) 『晉書』卷101, 「劉元海載記」, “昔我太祖高皇帝以神武應期, 廓開大業. 太宗孝文皇帝重以明德, 升平漢道. 世宗孝武皇帝拓土攘夷, 地過唐日. 中宗孝宣皇帝搜揚俊乂, 多士盈朝. …… 我世祖光武皇帝誕資聖武, 恢復鴻基, 祀漢配天, 不失舊物, 俾三光晦而復明, 神器幽而復顯. 顯宗孝明皇帝·肅宗孝章皇帝累葉重暉, 炎光再闡, …… 昭烈播越岷蜀, 冀否終有泰, 旋軫舊京.” 이에 따르면 三祖는 太祖 漢高祖, 世祖 後漢光武帝, 蜀漢昭烈帝고, 五宗은 太宗 孝文帝, 世宗 孝武帝, 中宗 孝宣帝, 顯宗 孝明帝, 肅宗 孝章帝다.
- 21) 朴漢濟, 1988, 앞의 글, 15쪽
- 22) 『資治通鑑』卷88, 「晉紀九」懷帝永嘉5年條, “天下者, 高祖之天下, 兄終弟及, 何爲不可!”
- 23) 『資治通鑑』卷88, 「晉紀十」懷帝永嘉6年條, “大漢將應天受命, 故爲陛下自相驅除, 此殆天意, 非人事也!”
- 24) 『漢書』卷93, 「佞幸 董賢傳」, “天下乃高皇帝天下.”

라는 표현을 빌려 ‘천하는 고조의 천하’라고 하며, 유연이 受命天子임과 천하가 한에 귀속되었음을 강조하고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의식은 시간이 갈수록 보다 정교해지는 모습을 보인다.

水德으로 썸의 金德을 계승하여, 국호를 趙로 칭한다. 犧牲은 黑色을 숭상하고 旗幟는 玄色을 숭상하며, 冒頓을 天에 配祀하고 光文皇帝를 上帝에 배사하라. 경내의 사형 이하의 죄에 대해서는 크게 사면하라.²⁵⁾

이것은 太興 2년(319) 劉曜가 내린 조서의 내용이다. 여기서 우리는 유요가 수명천자답게 권력의 정통성을 드러내는 제도적 장치를 완비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것은 일찍이 『春秋繁露』에서 역설한 것으로, 새로운 왕은 正朔을 바꾸고 의복의 색깔을 교체하며, 禮樂을 제정하여 천하를 통일시켜야 하기 때문이다.²⁶⁾ 이러한 역사적 순환론의 채택은 호족들 스스로에게는 물론이고, 일반 인민들에게 자신들을 외부로부터 중원을 침략한 이적왕조 또는 정복왕조가 아닌 중화의 명맥을 잇는 정통왕조로 이해하게 하는 유효한 도구가 되었을 것이다. 이러한 의식은 흉노정권 안에서만 보였던 것은 아니다. 그 뒤를 이었던 羯族의 石氏 집단 역시 자신들이 썸의 金德을 계승한 水德의 왕조임을 천명하였다.²⁷⁾

이것은 어쩌면 자신을 魏武帝나 西晉의 宣帝보다 위대한 군주로 생각하며, 後漢 光武帝에 겨룰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²⁸⁾ 石勒을 통해 예견

25) 『晉書』 卷103, 「劉曜載記」, “以水承晉金行, 國號曰趙, 牲牡尚黑, 旗幟尚玄, 冒頓配天, 元海配上帝, 大赦境內殊死已下.”

26) 『春秋繁露』, 「三代改制質文」, “王者必受命而後王, 王者必改正朔, 易服色, 制禮樂, 一統於天下, 所以明易姓非繼人, 通以己受之於天也.”

27) 『晉書』 卷105, 「石勒載記下」, “侍中任播等參議, 以趙承金爲水德, 旗幟尚玄, 牲牡尚白, 子社丑臘, 勒從之.”

28) 『資治通鑑』 卷95, 「晉紀十七」 成帝咸和7年條, “勒笑曰: 「豈不自知! 卿言太過, 朕若遇漢高祖, 當北面事之, 與韓·彭比肩; 若遇光武, 當并驅中原, 未知鹿死誰手. 大丈夫行事, 宜礪礪落落, 如日月皎然, 終不效曹孟德·司馬仲達欺人孤兒·寡婦, 狐媚以取天下也.」”

할 수 있었던 상황일 것이다. 아니, 그가 “吳와 蜀이 아직 평정되지 않았으니 나는 후세가 나를 수명천자로 받아들이지 않을까 걱정이다”²⁹⁾라고 한 것에서 우리는 석륵이 자신을 천하의 유일한 권력자로 위치시키고자 함을 알 수 있다. 요컨대 부견에게 나타난 화이를 망라하는 육합의 유일한 지배자를 자처하는 호족군주의 의식은 돌출적인 것이 아니라 이상과 같은 의식의 흐름 속에서 형성된 결과물이었던 것이다.

실제로 이적의 군주가 中夏의 주인이 될 수 있고, 이들에 의해 천하가 통일 될 수 있다는 의식은 당시 호족정권 안에 만연하고 있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 ③ 吳 신하들이 말하였다. “위대한 燕이 受命하니 위로는 광휘로운 북방의 帝 黑精之君을 계승하여 命運이 전승되어 서로 연결되었으므로 진의 금덕을 대신하게 되었습니다. 역법은 夏曆을 사용하시고, 복식은 周의 것을 따르시고 旗幟는 흑색을 숭상하고, 희생은 玄色을 쓰는 것이 마땅할 것입니다.” 慕容儁이 의견을 따랐다.³⁰⁾
- ④ 趙가 중원을 차지한 것은 오직 人事만이 아니라 천명이기도 합니다. 하늘이 실제로 그들에게 준 것이지, 사람이 탈취한 것이 아니니 신은 삼가 [진의 금덕을 계승하여 수덕을 천명하는 것이] 불가하다고 말씀드립니다. 또한 위대한 연의 왕업의 자취는 震卦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易』에 따르면 진괘는 靑龍을 상징합니다. 수명한 초기에 용이 도성 위에 나타났습니다. 용은 木德이니, 은밀히 부합하는 징조입니다.³¹⁾

위의 기사는 前燕 조정에서 오행의 位次를 결정하는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처음 전연 조정에서는 서진을 계승한 수명왕조로 자처하며, 진의 금덕에

29) 『資治通鑑』卷95, 「晉紀十七」成帝咸和7年條, “勒曰:「吳·蜀未平, 吾恐後世不以吾爲受命之王也。」”

30) 『晉書』卷110, 「慕容儁載記」, “羣下言:「大燕受命, 上承光紀黑精之君, 運曆傳屬, 代金行之後, 宜行夏之時, 服周之冕, 旗幟尚黑, 牲牡尚玄,」儁從之.”

31) 『晉書』卷110, 「慕容儁載記」, “趙有中原, 非唯人事, 天所命也. 天實與之, 而人奪之, 臣竊謂不可. 且大燕王迹始自於震, 於易, 震爲靑龍. 受命之初, 有龍見於都邑城, 龍爲木德, 幽契之符也.”

대신하여 수덕을 천명하고자 한다(기사 ③). 그러나 韓桓은 현재 중원을 차지하고 있던 後趙가 천명을 받은 왕조임을 들어, 전연이 계승해야 하는 왕조가 진이 아닌 후조임과³²⁾ 더불어 전연이 후조를 계승하여 木德을 천명할 것을 주장한다(기사 ④). 이 논의는 호족왕조들이 점차 의식적으로 화이의 구별을 중시시키고 자신들을 중화의 적통으로 이해하게 되었음을 보여준다. 특히 지난 날 慕容廆가 東晉에 대해 燕王으로의 관직 승급을 요청하고자 했을 때 진조에 대한 충성으로 승급요청을 반대했던³³⁾ 한족 사대부 한항마저도 후조를 계승해야 하는 정통왕조로 이해하였다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³⁴⁾ 전연의 경우 위와 같이 오덕의 추이에 대한 이론이 있기는 했지만 결국 후조를 적통왕조로 인정하고 그의 수덕을 계승하게 된다. 그리고 慕容暉時기가 되면 아무런 이견 없이 石氏를 계승하여 목덕을 표방한다.³⁵⁾

후조를 적통왕조로 인식하고 오행의 위치에 따라 계승하고자 한 것은 전연

- 32) 이것은 石氏를 천하의 주인으로 표현하며, 그들로부터 천하를 빼앗아야 한다는 기사를 통해서도 확인할 수 있다. 『資治通鑑』卷98, 「晉紀二十」穆帝永和5年條, “中國之民困於石氏之亂, 鹹思易主以救湯火之急, 此千載一時, 不可失也。自武宣王以來, 招賢養民, 務農訓兵, 正俟今日, 今時至不取, 更復顧慮, 豈天意未欲使海內平定邪, 將大王不欲取天下也?”
- 33) 『晉書』卷110, 「慕容儁載記」, “咸和中, 宋該等建議以廆立功一隅, 勤誠王室, 位卑任重, 不足以鎮華夷, 宜表請大將軍·燕王之號, 廆納之, 命羣僚博議, 咸以爲宜如該議, 桓駁曰: 「自羣胡乘間, 人嬰荼毒, 諸夏蕭條, 無復綱紀, 明公忠武篤誠, 憂勤社稷, 抗節孤危之中, 建功萬里之外, 終古勤王之義, 未之有也, 夫立功者患信義不著, 不患名位不高, 故桓文有寧復一匡之功, 亦不先求禮命以令諸侯, 宜繕甲兵, 候機會, 除羣凶, 靖四海, 功成之後, 九錫自至, 且要君以求寵爵者, 非爲臣之義也。」廆不平之, 出爲新昌令。”
- 34) 池培善은 한항이 천명을 증시하여 木德을 주장하였다고 하였는데, 인용문에 따르면 목덕의 징표가 나타난 것을 진조를 계승할 수 없다는 자신의 견해 증거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池培善, 1994, 「韓桓에 대하여」, 『東方學誌』 86, 115쪽. 즉, 목덕의 상징이 출현하여 목덕을 표방하고자 한 것이 아니라, 후조를 계승해야 한다는 입장에서 목덕을 표방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후에 慕容暉의 조정에서 모용위의 鍾律郎인 郭欽이 石季龍의 水德을 계승하여 연이 목덕을 표방해야 함을 주장함에서도 알 수 있다. 『晉書』卷111, 「慕容暉載記」, “暉鍾律郎郭欽奏議以暉承石季龍水爲木德, 暉從之.”
- 35) 『晉書』卷111, 「慕容暉載記」, “暉鍾律郎郭欽奏議以暉承石季龍水爲木德, 暉從之.”

만이 아니다. 前秦 역시 목덕을 채용하여 후조의 수덕을 계승했다. 그리고 後秦의 姚萇은 다시 전진의 목덕을 계승하여 火德을 천명하며 자신을 적통왕조로 위치시킨다.³⁶⁾ 이렇게 호족왕조가 다른 호족왕조를 적통의 왕조로 위치시키는 행위는 자신을 중원의 적통왕조로 규정하는 행위임과 동시에 동진을 일개 할거정권으로 전락시키는 효과를 갖는다.³⁷⁾ 그래서 후조는 동진을 ‘患’이라고 표현하였고,³⁸⁾ 모용위는 ‘遺燼之虜’로 표현하였으며,³⁹⁾ 苻堅은 동남 한귀퉁이의 ‘未賓王化’의 땅이라 불렀다.⁴⁰⁾

한편, 호족왕조가 자신들을 정통왕조로 이해했다는 것은 자신들을 중심으로 인식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지금까지 중국의 주변이었던 호족왕조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를 구상하기 시작했음을 의미하는 것이다. 자신을 중화로 주변을 이적으로 표현하는 사례는 대표적으로 전연정권에서 발견된다. 처음 遼西에서 발흥하였으나 宇文部에 밀려 遼東으로 이주한 모용집단은 모용외시기 강성해지기 시작하였다. 이후 국세를 비약적으로 신장시키는 慕容皝時期, 주변 우문부와 段部를 격퇴하고 夫餘 및 高句麗와 요동을 다투게 된다.

두 오랑캐들은 아무런 공로를 세우지 못하고 돌아가는 것을 수치로 생각하고 반드시 다시 올 것이니 마땅히 柳城 주위에 매복을 하고 그들을 기다려라.⁴¹⁾

36) 『晉書』卷116, 「姚萇載記」, “自謂以火德承苻氏木行, 服色如漢氏承周故事.”

37) 胡族王朝 안에서 五德位次說이 유행한 것을 何茲全은 玄學에 몰두했던 士族들이 江左로 渡江한 이후 북방이 儒學天下가 된 결과로 보았다. 그러나 이것은 학문적 성향의 결과기보다는 정치적 필요가 만들어 낸 결과일 것이다. 何茲全, 1990, 「十六國時期的儒學和五德終始思想」, 『紀念顧頡剛學術論文集 上』, 成都: 巴蜀書社, 22~23쪽

38) 『晉書』卷106, 「石季龍載記上」, 2771쪽

39) 『晉書』卷111, 「慕容暉載記」, 2850쪽

40) 『晉書』卷114, 「苻堅載記下」, 2911쪽

41) 『晉書』卷109, 「慕容皝載記」, “二虜恥無功而歸, 必復重至, 宜於柳城左右設伏以待之.”

成帝 咸康 2년(336) 모용황은 단부의 段遼가 보낸 段蘭과 그를 성원하는 우문부의 宇文逸頭歸를 맞아 柳城을 지키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단란과 우문일두귀 모두가 제대로 싸워보지도 못하고 대패하게 된다. 모용황이 諸將들을 모아 놓고 이후 전투에 대해 계획을 세우는데, 당시 모용황은 단란과 우문일두귀를 모두 오랑캐로 표현한다. 전연집단이 오랑캐로 표현하는 집단이 단부와 우문부에 국한된 것은 아니었다. 모용황의 동생인 建威將軍 慕容翰은 고구려 정벌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역시도 오랑캐로 표현하였다.⁴²⁾ 이것은 자신을 중심, 즉 중화로 설정함으로써 가능한 인식이다.

그렇다면 이와 같은 의식이 등장할 수 있었던 원인은 무엇이었을까? 이러한 의식이 갑작스럽게 등장한 것은 아닐 것이다. 무엇보다도 후한시기부터 시작된 華夷의 雜居로부터 촉발되었을 것이다. 서진 초, 과장이 섞였더라도 ‘관중 인구 백여만 중 戎狄이 반’⁴³⁾이라는 표현은 당시 화이의 잡거가 일반화된 현상이었음을 알려준다. 이러한 잡거 속에서 이적들 안에서도 중국의 학술과 문화에 정통한 이들이 등장하였다. 유연이 젊어서 낙양에서 한인 지식인들과 교류를 나누며, 중국 문화에 심취했던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⁴⁴⁾ 유연의 아들 유충 역시 經典과 史書を 두루 섭렵하고 문장에 뛰어났으며, 弱冠의 나이로 洛陽에 유학하였을 때는 名士들 중 그와 사귀지 않았던 이가 없었다고 한다.⁴⁵⁾

그러나 이와 함께 당시 한인 사인들의 의식변화 역시 하나의 원인이 되었

42) 『資治通鑑』卷97, 「晉紀十九」成帝咸康8年條, “虜以常情料之, 必謂大軍從北道, 當重北而輕南, 王宜帥銳兵從南道擊之, 出其不意, 丸都不足取也, 別遣偏師出北道, 縱有蹉跌, 其腹心已潰, 四支無能爲也.” 밑줄은 필자.

43) 『晉書』卷56, 「江統傳’, “卷且關中之人百餘萬口, 率其多少, 戎狄居半, 處之與遷, 必須口實.”

44) 『晉書』卷101, 「劉元海載記’, “幼好學, 師事上黨崔游, 習毛詩·京氏易·馬氏尚書, 尤好春秋左氏傳·孫吳兵法, 略皆誦之, 史·漢·諸子, 無不綜覽.”; 『晉書』卷101, 「劉元海載記’, “明刑法, 禁姦邪, 輕財好施, 推誠接物, 五部俊傑無不至者, 幽冀名儒, 後門秀士, 不遠千里, 亦皆遊焉.”; 『資治通鑑』卷80, 「晉紀二」武帝咸寧5年條, “爲任子在洛陽, 王渾及子濟皆重之, 屢薦於帝, 帝召與語, 悅之.”

45) 『資治通鑑』卷85, 「晉紀七」惠帝永興元年條, “淵子聰, 驍勇絕人, 博涉經史, 善屬文, 彎弓三百斤; 弱冠游京師, 名士莫不與交.”

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당시는 “예로부터 胡人으로 천자가 된 사람은 없었다”⁴⁶⁾라고 하여 호족은 천자가 될 수 없다는 의식이 팽배해 있었다. 그러나 유연 이래 호인천자 곁에는 天下一統을 주장하는 한인관료들이 있었다. 다른 왕조에 비해 한인 사대부의 참여가 저조했다던 전조조정에는 陳元達이 있었고, 後趙에는 張賓과 徐光, 前燕에는 裴嶷과 封裕가 있었다.

지금 진의 남은 무리들이 서쪽으로는 관중을 점거하고 남쪽으로는 장강의 밖에서 제멋대로 하고 있으며, 李雄은 바와 蜀 지역을 차지하고 있고 王浚·劉琨은 우리의 肘腋을 엿보고 있습니다. 또한 石勒·曹嶷이 진공품을 보내오는 일이 드물어졌는데, 폐하께서는 이 문제에 대해 손을 놓고 걱정하지 않으시며 마침내 다시 中宮을 위하여 전각을 지으시니 어찌 눈앞에 닥친 급한 일이겠습니까?⁴⁷⁾

사실 전조조정에서 진원달이 어떤 활약을 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진 것이 거의 없다. 여러 번 충성스런 말을 진언하였으나 물러나면 상주한 초고를 번번이 삭제하여 자제들조차 그 내용을 알 수 없었다고 하여,⁴⁸⁾ 그의 구체적인 행적을 복원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전조의 황제 유충이 항상 두려워했다는 기록과⁴⁹⁾ 자신에게 진언하는 대신들에게 유충이 “여러 아이들이 진원달에게 이끌려 드디어 명칭이 되었구나”⁵⁰⁾라고 말한 것을 통해 전조조정에서 그가 가진 영향력을 짐작할 수 있다.

위의 기사는 진원달이 유충이 貴賓 劉娥를 황후로 삼고 그녀를 위해 鷓鴣

46) 『資治通鑑』卷90, 「晉紀十二」元帝太興元年條, “自古無胡人爲天子者.”

47) 『資治通鑑』卷88, 「晉紀十」愍帝建興元年條, “今有晉遺類, 西據關中, 南擅江表; 李雄奄有巴·蜀; 王浚·劉琨窺窬肘腋; 石勒·曹嶷貢稟漸疏. 陛下釋此不憂, 乃更爲中宮作殿, 豈目前之所急乎!”

48) 『晉書』卷103, 「劉聰載記 陳元達」, “在位忠謇, 屢進讜言, 退而削草, 雖子弟莫得而知也.”

49) 『晉書』卷103, 「劉聰載記 陳元達」, “聰每謂元達曰: 「卿當畏朕, 反使朕畏卿乎?」”

50) 『資治通鑑』卷89, 「晉紀十一」愍帝建興4年條, “聰以表示沈等, 笑曰: 「群兒爲元達所引, 遂成癡也.」”

殿을 짓자, 간언한 내용이다. 우리는 이 진언 속에서 진원달이 전조에 의한 통일된 중국을 목표로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그가 유충에게 간언한 내용 속에서도 알 수 있는데, 진원달은 유충에게 광무제를 본받아 후한과 같은 덕을 천하에 펼칠 것을 요청하였다.⁵¹⁾ 따라서 우리는 당시 진원달이 비록 유씨가 호족이기는 하지만 중원을 통일하는 황제가 될 수 있고, 되어야 한다고 여겼음을 알 수 있다. 아마도 부패한 서진 귀족이 아닌 호족에게서 중국의 미래를 봤던 한족 사대부의 새 시대에 대한 바람이 만들어 낸 현상이 아닐까 한다.⁵²⁾

이것은 후조의 장빈에게서도 발견된다. 스스로를 張子房에 비견하며 高祖와 같은 군주를 기다리던 趙郡 中丘 출신의 장빈은 石勒에게 출사하는데, 그는 호족이라 할지라도 오직 석륵만이 大事를 이룰 것이라 여겼다.⁵³⁾ 후조에서 장빈과 같이 호인이라 할지라도 중국을 통일하여 명실상부한 천자가 될 수 있다고 여겼던 이로는 徐光을 빼놓을 수 없을 것이다. 그는 석륵을 한고조 유방에 비견하였는데, 무력과 모략에서는 오히려 유방을 앞선다고 하였다.⁵⁴⁾ 물론 이것이 정치적 수사임은 분명하지만 서광 역시도 호족천자의 등장과 그에 의한 천하통일을 염두에 두고 있었음이다. 이것은 서광의 다음과 같은 말에서도 알 수 있다. “폐하께서 두 개의 도읍을 포괄하고, 여덟 주를 평정하고 계시니 제왕의 정통이 폐하에게 있지 않다면 누구에게 있단 말입니까?”⁵⁵⁾ 기왕의 연구를 통해 지적되었던 것처럼 후조정권은 전조정권과는 다르게 한인 士人들의

51) 『晉書』卷103, 「劉聰載記 陳元達」, 「臣聞師臣者王, 友臣者霸. 臣誠愚闇無可採也, 幸邀陛下垂齊桓納九九之義, 故使微臣得盡愚忠. 昔世宗遙可汲黯之奏, 故能恢隆漢道; 桀紂誅諫, 幽厲弭謗, 是以三代之亡也忽焉. 陛下以大聖應期, 挺不世之量, 能遠捐商周覆國之弊, 近模孝武光漢之美, 則天下幸甚, 羣臣知免。」及其死也, 人盡冤之.”

52) 朴漢濟, 1988, 앞의 책, 21쪽

53) 『晉書』卷105, 「石勒載記下 張賓」, “吾歷觀諸將多矣, 獨胡將軍可與共成大事.”

54) 『資治通鑑』卷95, 「晉紀十七」成帝咸和7年條, “陛下神武謀略過於漢高, 後世無可比者.”

55) 『資治通鑑』卷95, 「晉紀十七」成帝咸和7年條, “陛下苞括二都, 平蕩八州, 帝王之統不在陛下, 當復在誰!”

참여가 활발했던 왕조다.⁵⁶⁾ 그 결합의 원인이 무엇이든 간에 후조정권의 한인 사인 우대는 많은 한인들의 후조에의 투항 및 의부현상을 만들어냈고, 그 속에서 호족천자에 대한 기대와 가능성은 점점 더 높아져 갔을 것이다.

호족천자의 등장에 대한 기대가 증원을 차지한 왕조에게서만 나타났던 것은 아니다. 전연의 경우 증원을 차지하지 못했던 왕조였으나, 전연에 투항한 한인 사인들 역시도 호족천자의 기대를 드러냈다.

배역이慕容廆에게 말하였다. “진의 황실이 쇠퇴하고 미약해져 단지江表에 머물러 있고, 위엄과 덕망이 먼 곳까지 미치지 못하고 있으니 증원의 혼란은 밝으신 공이 아니면 구원하지 못합니다. 지금 여러 부족들은 비록 각기 군사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탐욕스럽고 어리석은 사람들이 모인 것이니, 응당 점차 합병하여 빼앗아 서방을 토벌하는 자본으로 삼아야 합니다.”⁵⁷⁾

이것은 배역이 모용외에게 한 말로, 그 역시 증원 평정과 통일의 대업을 호족인 모용씨에게 기대하고 있었던 것이다. 흥미롭게도 이러한 배역의 건의에 대해 모용외는 처음에는 “내가 미칠 수 있는 바가 아니다(非孤所及)”라 하여 사양한다.⁵⁸⁾ 그러나 한인 사인들의 보좌는 곧 호족군주들로 하여금 “공을 세우고 일을 성사시키는 것에는 오직 志略의 여부만이 문제이지, 화이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⁵⁹⁾라는 인식을 하게 하였다. 따라서 이 시기 호족군주에게서 보이는 중화의식은 이적 스스로의 변화만이 아니고, 오랜 기간 동안 진행된 화이 잡거의 결과이며 이적에 대한 한인의 의식 변화, 그리고 이적왕조에게 중국의 미래를 걸었던 한인 사대부들의 활동이 원인이 되어 등장한 것으로 봐야 할 것이다.

56) 朴漢濟, 1988, 앞의 책, 24~30쪽

57) 『資治通鑑』卷90, 「晉紀十二」元帝太興元年條, “裴嶷言於廆曰:「晉室衰微, 介居江表, 威德不能及遠, 中原之亂, 非明公不能拯也. 今諸部雖各擁兵, 然皆頑愚相聚, 宜以漸並取, 以爲西討之資.」”

58) 『資治通鑑』卷90, 「晉紀十二」元帝太興元年條

59) 『資治通鑑』卷91, 「晉紀十三」元帝太興2年條, “夫立功立事, 惟問志略何如耳, 華·夷何足問乎!”

2_ 오호정권의 중화의식 표출

이상과 같은 호족왕조의 중화의식은 그들의 국가를 명실상부한 황제국가로 전환시켰다. 특히 그중에서도 皇帝號 및 天王號의 사용과 年號의 채용이 두드러지는 현상이며, 앞에서 살펴본 五德說에 대응한 왕조교체설의 채용, 타집단을 복속대상으로 하는 領護軍官職⁶⁰⁾의 설치도 동일하게 나타난다. 여기서는 앞서 살펴본 오덕설에 근거한 왕조교체설의 채용 문제 외의 영호군관직 설치와 황제호 및 천왕호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1) 領護軍官職의 설치와 성격

서진을 멸망시킨 匈奴를 비롯한 羯·氏·羌·鮮卑의 오호는 북중국을 분할하고, 특정 지역을 확보하며 세력을 확장해갔다. 각 호족집단은 정벌을 통해 자신의 관할 영역을 확보하였고, 그곳에서 정권을 수립하였다. 정벌 과정을 통해 많은 타 종족, 타 부족이 각 호족정권 안으로 흡수되어, 북중국은 바야흐로 종족 대융합의 시대를 맞는다. 이때 각 정권은 정벌과 융합 과정 속에서 새롭게 통치의 대상으로 편입된 종족, 혹은 앞으로 정벌하여 통합할 종족을 전담하는 軍官職을 설치하였다.⁶¹⁾ 현재 연구자들은 이들 군관직에 대해 내속해온 집단을 황제의 명령을 받아 統領, 보호한다고 하여 '持節領護官'으로 부르거나,⁶²⁾ 다른 민족을 통제한다고 하여 '異民族統御官'으로 지칭하고 있다.⁶³⁾

60) 여기서는 漢代 이래 내외의 여러 민족을 관리하는 일을 '領護'라고 표현한 것에 착안하여 이적 전담 군관을 '領護軍官'이라고 칭한 李周鉉의 입장을 따라 '영호군관직'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자 한다. 李周鉉, 2008, 『魏晉南北朝의 東夷校尉』, 『한중관계 2000』, 소나무, 84쪽

61) 최초의 군관직은 障塞內에서 종족 고유의 사회조직을 가지고 占住한 蠻夷를 監守하는 관으로 출발하였다. 竹園卓夫, 1977, 『後漢安帝以後における刺史の軍事に關する覺え書き』, 『集刊東洋學』 37, 96쪽

62) 小林聰, 1989, 『後漢の少數民族統御官に關する一考察』, 『九州大學東洋史論集』 17, 96쪽

63) 三崎良章, 1991, 『五胡諸國の異民族統御官と東晉-南蠻校尉·平吳校尉の設置』

이적을 영호하는 군관직 중 제일 먼저 문헌에 등장하는 것은 前漢 武帝時期 설치한 護烏桓校尉だ. 車騎將軍 霍去病이 흉노를 격파하고 오환을 上谷 외 5개 郡 塞外로 이주시켜 흉노의 동정을 살피게 하고자 하였는데, 이때 한이 오환을 통솔하고 관련 업무를 총괄시키기 위해 설치한 것이다.⁶⁴⁾ 즉, 내속한 또는 지배하에 있는 이적을 관할하고 통제하기 위한 전담부서가 설치된 것이다. 이것은 서진시기를 기점으로 점차 내속해온 이적뿐 아니라 아직 내속하지 않은 이적을 통어하거나, 그들 집단을 정벌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관으로 성격이 변화하게 된다.⁶⁵⁾ 이러한 영호군관직의 제도화는 서진시기 이적 문제가 왕조의 항존하는 문제가 되었음을 의미한다.⁶⁶⁾

그런데 애초에 한인이 주변 이적을 통어하기 위해 설치한 영호군관직이 호족왕조에 의해 설치되었다는 것이 주목된다. 십육국시기 거의 모든 국가에서 발견되는 영호군관직은 애초의 설치 목적이 내속한 이적을 감시하고 통어하는 것이었다. 특히 통어하는 이적의 이름을 冠帶함으로 인해, 내속한 이적이 중국과 분리되어 있음을 분명히 하였다. 다시 말해 그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차등적인 세계질서의 수립과 유지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그래서 이러한 성격의 영호군관직을 그대로 호족왕조들이 채용하였다는 것은 그들 스스로가 자신을 중심으로 설정하였음을 말해주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이것은 다름 아니라 호족왕조가 스스로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타 종족을 주변으로 인식했다는

を中心として, 『東方學』 82, 43쪽

- 64) 『後漢書』 卷90, 「烏桓傳」, “及武帝遣驃騎將軍霍去病擊破匈奴左地, 因徙烏桓於上谷·漁陽·右北平·遼西·遼東五郡塞外, 爲漢偵察匈奴動靜. 其大人歲一朝見, 於是始置護烏桓校尉, 秩二千石, 擁節監領之, 使不得與匈奴交通.”
- 65) 西晉 武帝는 南蠻校尉를 비롯하여 西戎校尉와 南夷校尉를 각각 襄陽과 長安, 그리고 寧州에 설치하였다. 또한 護匈奴·羌·戎·蠻·夷·越中郎과 더불어 平越中郎將도 廣州에 설치하여 남일을 監護하게 하였다. 『晉書』 卷24, 「職官志」, “案武帝置南蠻校尉於襄陽, 西戎校尉於長安, 南夷校尉於寧州. …… 護匈奴·羌·戎·蠻·夷·越中郎將, 案武帝置四中郎將, 或領刺史, 或持節爲之. 武帝又置平越中郎將, 居廣州, 主護南越.”
- 66) 미사키 요시아키는 군관직의 제도화라는 현상을 오호십육국에 연결되는 사회 현상이 시작된 것을 시사하는 것이라 보았다. 三崎良章, 2002, 『五胡十六國-中國史上の民族大移動』, 東京: 東方書店, 20쪽

〈표 1〉 16국시기 諸國의 영호군관직 일람

국가	시기	담당자	영호군관직	典據	비고	
前趙	劉聰時期	赫連武	丁零中郎將	『晉』* 卷130, 3201쪽		
	유충시기	石勒	東夷校尉	『진』 권104, 2718쪽	幽州牧	
	劉曜時期	楊難敵	寧羌中郎將	『진』 권103, 2691쪽	領護南氏校尉, 益寧南秦三州牧	
	유요시기	張茂	護氏羌校尉	『진』 권103, 2695쪽	涼州牧	
後趙	石勒時期	王勝	西夷中郎將	『진』 권105, 2742쪽		
	석륵시기	董幼	南蠻校尉	『진』 권105, 2744쪽		
	石虎時期	苻洪	護氏校尉	『資』** 권95, 2989쪽		
	石祗時期	姚襄	護烏丸校尉	『진』 권116, 2962쪽	豫州刺史	
前秦	苻洪時期	苻洪	護氏校尉	『自』 권87, 2751쪽	自稱	
	苻堅時期	미상	西戎校尉	『진』 권113, 2861쪽		
	부견시기	姚萇	西蠻校尉	『진』 권113, 2897쪽	寧州刺史	
	부견시기	鄧羌	護羌校尉	『十』*** 권34, 269쪽		
	부견시기	梁熙	護西羌校尉	『진』 권113, 2898쪽	涼州刺史	
	부견시기	梁成	護南蠻校尉	『진』 권113, 2901쪽	荊州刺史	
	부견시기	姜宇	南巴校尉	『진』 권113, 2901쪽		
	부견시기	王顯	平吳校尉	『진』 권113, 2902쪽	揚州刺史	
	부견시기	苻洛	平夷校尉	『진』 권113, 2902쪽	益州牧	
	부견시기	石越	護鮮卑中郎將	『진』 권113, 2903쪽	平州刺史	
	부견시기	韓胤	赤沙中郎將	『진』 권113, 2903쪽		
	부견시기	王騰	護匈奴中郎將	『진』 권113, 2903쪽	并州刺史	
	부견시기	裴元略	西夷校尉	『진』 권114, 2911쪽	巴西梓潼二郡太守	
	부견시기	呂光	西域校尉	『진』 권114, 2923쪽		
	부견시기	苻丕時期	梁苟奴	護羌中郎將	『진』 권115, 2946쪽	
	부견시기	苻登時期	苻碩原	滅羌校尉	『진』 권115, 2951쪽	
前燕	慕容廆時期	陽耽	東夷校尉	『진』 권111, 2860쪽		
	慕容皝時期	封抽	東夷校尉	『진』 권109, 2816쪽		

	慕容眇時期	慕容儁	東夷校尉	『진』 권110, 2831쪽	
	慕容儁時期	悅綰	領護匈奴中郎將	『진』 권110, 2840쪽	并州刺史
	慕容暉時期	皇甫眞	領護匈奴中郎將	『진』 권111, 2847쪽	并州刺史
	모용위시기	慕容垂	領護南蠻校尉	『진』 권111, 2847쪽	荊州刺史
	모용위시기	袁眞	領護南蠻校尉	『진』 권111, 2854쪽	揚州刺史
後秦	姚弋仲時期	姚弋仲	護西羌校尉	『진』 권116, 2959쪽	雍州刺史, 自稱
	姚萇時期	姚碩德	領護東羌校尉	『진』 권116, 2967쪽	秦州刺史
	姚興時期	姚碩德	領護東羌校尉	『진』 권117, 1977쪽	秦州刺史
	요흥시기	乞伏熾磐	行西夷校尉	『진』 권125, 3123쪽	興晉太守
	요흥시기	禿髮傉檀	領護匈奴中郎將	『진』 권126, 3149쪽	涼州刺史
前涼	張天錫時期	索泮	典戎校尉	『진』 권115, 2954쪽	西都武威太守
後涼	呂光時期	呂光	護羌校尉	『진』 권122, 3056쪽	涼州刺史
후량	여광시기	여광	領護匈奴中郎將	『진』 권122, 3057쪽	涼州牧, 自稱
北涼	沮渠蒙遜時期	沮渠犖	護羌校尉	『진』 권129, 3195쪽	秦州刺史
	저거몽손시기	沮渠益子	護羌校尉	『진』 권129, 3195쪽	秦州刺史
成漢	李特時期	李含	西夷校尉	『진』 권120, 3027쪽	
	李雄時期	李恭	南蠻校尉	『華』**** 권9, 485쪽	荊州刺史
	이웅시기	李鳳	南夷校尉	『화』 권9, 485쪽	寧州刺史
	이웅시기	李壽	西夷校尉	『진』 권121, 3039쪽	
	李期時期	李壽	東羌校尉	『진』 권121, 3056쪽	梁州刺史
	이기시기	李保	西夷校尉	『화』 권9, 497쪽	汶山太守
	李壽時期	解思明	知東羌校尉	『화』 권9, 500쪽	梁州刺史
	이수시기	李奕	西夷校尉	『화』 권9, 500쪽	
이수시기	李權	南夷校尉	『화』 권9, 500쪽	寧州刺史	
冉魏	冉閔時期	桑坦	南蠻校尉	『진』 권107, 2793쪽	
後燕	慕容寶時期	慕容德	領南蠻校尉	『진』 권127, 3162쪽	冀州牧

*『晉』: 『晉書』, **『資』: 『資治通鑑』, ***『十』: 『十六國春秋』, ****『華』: 『華陽國志』

것을 보여주는 증거이기 때문이다.⁶⁷⁾

따라서 영호군관직의 설치 상황을 살펴보는 것은 당시 호족왕조의 중화의식을 확인하는 데 유효할 것이다. 이들 영호군관직은 오호십육국시기 대부분의 국가에서 발견된다. 이를 <표 1>과 같이 정리해보았다.

그중에서도 주목할 만한 것이 南蠻校尉다. 남쪽 오랑캐로 흔히 일컬어지는 남만에 대한 통어를 목적으로 설치된 남만교위는 西晉 武帝時期 襄陽에 설치된⁶⁸⁾ 이후 주로 남쪽의 義陽蠻·五鷄蠻 등을 토벌하는 일을 담당하였다.⁶⁹⁾ 그러나 후조, 전진, 전연, 後燕 등에서 설치한 남만교위는 이들 남만에 대한 군사작전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동진에 대한 군사작전을 담당하였다. 즉, 호족국가들은 동진을 자신들 중심의 세계질서 속에서 이적으로 취급하였던 것이다. 자신을 중화로 이해하면서 주변 종족 전체를 이적 취급하는 한인의 전통적인 화이관이 전복되었을 뿐 아니라, 호족왕조들이 그것을 고스란히 차용하여 자신들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 구축에 사용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모습은 東夷校尉 속에서도 발견된다. 308~318년까지 전조의 동이교위는 석록이었다. 그 기간 동안 특정 동이 관련 기사를 확인할 수 없어, 구체적으로 그가 동이교위로서 어떤 역할을 담당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다. 그런데 그는 이 시기 지금의 山西 일부와 河北省 일대를 경영하여, 전조의 막강한 세력으로 부상하였다. 따라서 우리는 전조의 동이가 특정한 종족이기보다는, 산서와 하북성 일대에 존재하는 반전조 세력 전체를 의미하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 요컨대 지난날 한족들이 자신을 중심으로 사방에 이적이 존재

67) 미사키 요시아키는 한족이 소수민족을 통어하기 위해 설치했던 이민족통어관을 호족들이 스스로 설치하는 것을 倒錯現象이라 칭하였다. 三崎良章, 1991, 「五胡諸國の異民族統御官と東晉-南蠻校尉・平吳校尉の設置を中心として」, 『東方學』 82, 43쪽

68) 『晉書』 卷24, 「職官」, “武帝置南蠻校尉於襄陽.”

69) 『晉書』 卷4, 「惠帝紀」, “五月, 義陽蠻張昌舉兵反, …… 六月, 遣荊州刺史劉弘等討張昌于方城, 王師敗績.”; 『晉書』 卷66, 「陶侃傳」, “(杜)弼將王貢精卒三千, 出武陵江, 誘五谿夷, 以舟師斷官運, 徑向武昌. 侃使鄭攀及伏波將軍陶延夜趣巴陵, 潛師掩其不備, 大破之, 斬千餘級, 降萬餘口.”

함을 표현하였던 五方の 개념이 전조에서도 발견되는 것이다.

전연의 경우도 동일하다. 전연의 초대 황제 모용황은 345년 더 이상 동진의 연호를 사용하지 않고, 자립하여 황제가 된다. 이것은 전연의 정치·군사적 성장을 통해 가능했던 것인데, 이 시기 전연은 주변 段部(338)와 宇文部(344)를 멸망시켰고 고구려(342)와 부여(346)마저 격파하며 성장하였다. 이 과정에서 뛰어난 활약을 보였던 이가 바로 모용준임은 잘 알려져 있는 사실인데, 바로 그의 관직이 동이교위였다. 따라서 우리는 전연의 경우 고구려와 부여를 동이로 인식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영호군관직의 설치는 그것을 설치한 왕조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의 수립 정도를 보여주는 척도가 될 수도 있으며, 이를 잘 보여주는 사례는 전진이다. 실제로 우리는 표를 통해 가장 많은 영호군관직을 설치한 호족국가가 전진이며, 그 대부분이 부견시기에 설치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부견이 화이를 망라하는 제국을 수립하고자 했던 것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2) 황제호 및 천왕호의 사용

秦始皇이 황제호를 발명한 이래 중국 왕조의 모든 군주는 자신을 황제로 칭하였다. 郡國制라는 비정상적인 황제국가의 체제를 출범시킨 漢高祖 劉邦마저도 황제호를 취하였다. 이것은 황제라는 칭호가 유일한 권력을 설명하기 위해 발명된 것과 관련 있을 것이다. 따라서 호족왕조의 군주들이 황제호를 취한 것은 자신을 중국의 유일 권력으로 위치시키려는 의도의 산물이라고 이해할 수 있다.

유연은 元康 말년 成都王 司馬穎의 表에 따라 서진의 行寧朔將軍·監五部軍事に 임명된 후에, 永安 원년(304)에는 사마영에게서 北單于·參丞相軍事を 배수받게 된다. 그리고 같은 해 從祖 劉宣과 그의 무리들에 의해 大單于에 추대되었고, 永興 원년(304) 漢王에 즉위하고, 永嘉 2년(308) 황제위에 오른다. 하지만 유연의 황제위 즉위는 이미 그 전부터 예정되었던 일이라고 봐야 할 것이다. 그 단서를 주는 것은 다음의 기사다.

晉이 無道하여 우리를 노예처럼 부려먹으니, 이로써 右賢王 劉猛이 그 분한 마음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러나 진의 紀綱은 아직 없어지지 않아 이로 인해 大事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우현왕이 참사를 당한 것은 선우의 치욕입니다. 지금 사마씨가 부자형제끼리 서로 잔인하게 살해하고 있으니, 이것은 하늘이 진의 德을 싫어하여, 진을 우리에게 준 것입니다. 선우께서 덕을 몸에 쌓으시니 진나라 사람들이 信服합니다. 바야흐로 마땅히 우리 부족을 흥성하게 하시고, 呼韓邪單于의 업적을 회복해야 합니다. 鮮卑와 烏丸은 취할 수 있는 대상입니다. 어찌 그들과 떨어지고 원수를 취하려 하십니까!⁷⁰⁾

이상은 사마염을 위해 선비와 오환을 치려고 하던 유연을 향해 유선이 했던 말이다. 여기서 눈길을 끄는 것은 유선이 유연에게 기대한 두 가지 사항이다. 유선은 유연에게 흉노부족의 흥기와 호한야선우의 업적을 회복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두 가지는 흉노의 중흥을 의미하는데, 유연의 입장은 달랐던 것 같다. 유연은 유선의 이와 같은 간언에 대해 “대장부란 마땅히 한나라의 고조나 위나라의 무제처럼 되어야지 어찌 호한야선우를 본받을 만하다고 하는 것이요?”라고 오히려 반문한다. 이것은 유연의 최종 목표가 흉노 중흥에 그치는 것이 아닌 중화의 황제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사실 선우라는 표현은 서진에서 배수받았다는 점에서 이미 그 권위가 하락된 상태였다. 따라서 서진에서 천하를 취해 명실상부한 최고 권력자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선우라는 군주호를 버릴 수밖에 없었을 것이다. 실제로 이후 호족왕조 안에서 선우의 칭호를 가지고 군주호를 삼았던 이들을 찾아보기는 힘들다.⁷¹⁾ 그렇다면 모든 호족 군주들이 황제호를 통해 자신의 권력과 권위를 표현하였을까?

70) 『晉書』 卷110, 「劉元海載記」, “晉爲無道, 奴隸御我, 是以右賢王猛不勝其忿, 屬晉綱未弛, 大事不遂, 右賢塗地, 單于之恥也, 今司馬氏父子兄弟自相魚肉, 此天厭晉德, 授之於我. 單于積德在躬, 爲晉人所服, 方當興我邦族, 復呼韓邪之業, 鮮卑·烏丸可以爲援, 奈何距之而拯仇敵!”

71) 『資治通鑑』 卷99, 「晉紀二十一」 穆帝永和8年條에 따르면 당시 호족왕조 안에서 單于는 貊蠻族을 하나로 통일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져, 華夷를 망라하여 지배하는 천자가 마땅히 관장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는 관념이 존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且言單于所以統壹百蠻, 非天子所宜領, 以授太子叢.”

〈표 2〉 호족 군주들의 군주호 변화⁷²⁾

국명	칭호
漢·前趙	漢王(劉淵, 304) → 皇帝(유연, 308) → 황제(劉聰, 310) → 황제(劉曜, 318)
後趙	趙王(石勒, 319) → 趙天王·行皇帝事(석륵, 330) → 황제(석륵, 330) → 居攝趙天王(石虎, 335) → 大趙天王(석호 337) → 황제(석호, 349)
前燕	鮮卑大單于(慕容廆, 永嘉初) → 燕王(慕容皝, 337) → 연왕(慕容儁, 349) → 황제(모용준, 352) → 황제(慕容暉, 360)
前秦	大單于三秦王(苻洪, 연대미상) → 天王(苻健, 351) → 天王大單于(부견, 351) → 황제(부견, 352) → 황제(苻生, 356) → 大秦天王(苻堅, 357) → 황제(苻丕, 385) → 황제(苻登, 386)
後秦	大將軍(姚襄, 北魏 昭成帝 建國18년) → 大將軍·大單于·萬年秦王(姚萇, 384) → 황제(요장, 386) → 황제(姚興, 394) → 천왕(요흥, 399) → 황제(姚泓, 416)
成漢	大都督·大將軍(李流, 연대미상) → 大將軍·益州牧·成都王(이류, 302) → 성도왕(李雄, 304) → 황제(이웅, 305) → 황제(李班, 334) → 황제(李期, 334) → 황제(李壽, 338)
前涼	涼州刺史(張軌, 301) → 都督·平西將軍·涼州牧·西平公(張茂, 320) → 大將軍·涼州牧·西平公(張駿, 연대미상) → 大都督·大將軍·假涼王(張重華, 345) → 大都督·大尉·涼州牧·西平公·假涼王(장중화, 346) → 大司馬·校尉·刺史·西平公(張曜靈, 연대미상) → 大都督·大將軍·涼州牧·涼公(張祚, 연대미상) → 涼王(장조, 연대미상) → 황제(장조, 354) → 大都督·大將軍·校尉·涼州牧·西平公(張玄靖, 357) → 大將軍·大都督·督隴右關中諸軍事·護羌校尉·涼州刺史·西平公(張天錫, 太和初)
北涼	建康公(段業, 397) → 涼王(단업, 399) → 大都督·北涼州牧(沮渠蒙遜, 401) → 涼州牧·張掖公(저거몽손, 401) → 河西王(沮渠牧犍, 412)
後涼	酒泉公(呂光, 384) → 涼州刺史(여광, 385) → 三河王(여광, 389) → 天王(여광, 396) → 천왕(呂紹, 399) → 천왕(呂纂, 399) → 천왕(呂隆, 401)
翟魏	大魏天王(翟遼, 388) → 대위천왕(翟釗, 391)

72) 〈표 2〉는 『晉書』, 『宋書』, 『魏書』, 『資治通鑑』, 『十六國春秋』 등을 이용하여 작성하였다. 구체적인 쪽수는 생략하였다. 특별한 언급이 없는 한 이하 모든 표는 동일한 방식에 따라 작성한 것이다.

後燕	大將軍·大都督·燕王(慕容垂, 383) → 皇帝(모용수, 386) → 황제(慕容寶, 396) → 長樂王·攝天子(慕容盛, 398) → 황제(모용성, 398) → 庶民天王(모용성, 400) → 서민천왕(慕容熙, 401) → 황제(慕容雲, 407)
南涼	大將軍·大單于·西平王(秃髮烏孤, 397) → 武威王(독발오고, 398) → 무위왕(秃髮利鹿孤, 399) → 河西王(독발리록고, 401) → 涼王(秃髮辱檀, 402)
南燕	燕王(慕容德, 398) → 황제(모용덕, 405) → 황제(慕容超, 405)
西秦	大將軍·大單于·秦河二州牧(乞伏國仁, 385) → 대장군·대신우·河南王(乞伏乾歸, 388) → 西秦王(걸북건귀, 409) → 秦王(걸북건귀, 409) → 하남왕(乞伏熾磐, 412) → 진왕(걸북치반, 414)
北燕	天王(馮跋, 395) → 燕王(풍발, 409) → 大燕天王(풍발, 409) → 천왕(馮弘, 430)
夏	天王(赫連勃勃, 407) → 大單于·大夏天王(赫連발발, 407) → 皇帝(赫련발발, 418) → 황제(赫連昌, 425) → 황제(赫連定, 428)

〈표 2〉를 살펴보면 호족 왕조들 안에서 황제라는 칭호도 사용되었지만, 꽤 많은 국가에서 천왕이라는 칭호가 사용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한의 유연을 비롯하여 전조의 왕들과 연의 모용씨들이 황제를 칭한 것과 달리 다른 호족 왕조의 군주들은 천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하였다. 이 천왕이라는 칭호는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우선 천왕이라는 칭호를 사용했던 호족 군주를 일람해 보자.

〈표 3〉 천왕호를 취한 호족 군주들 일람⁷³⁾

호족군주	왕조	즉위년	칭호	분류	왕의 존재	進號	병칭
靳準		318	漢天王	王號	○		大將軍
石勒	後趙	330	趙天王	왕호	○	황제	行皇帝事
石虎	후조	335, 337	居攝趙天王, 大趙天王	君主號	×	대조천왕, 황제	

73) 〈표 3〉은 內田昌功, 2008, 「東晉十六國における皇帝と天王」, 『史朋』 41, 3쪽의 附表 天王一覽表를 참조하여 잘못된 부분을 수정·재작성한 것이다.

苻健	前秦	351	天王	군주호	×	황제	大單于
苻堅	진진	357	大秦天王	군주호	×		
翟遼	翟魏	388	大魏天王	군주호	×		
翟釗	적위	391	대위천왕	군주호	×		
呂光	後涼	396	천왕	군주호	×	太上皇帝	
呂紹	후량	399	천왕	군주호	×		
呂纂	후량	399	천왕	군주호	×		
呂隆	후량	401	천왕	군주호	×		
姚興	後秦	399	천왕	군주호	×		
慕容盛	後燕	400	庶民天王	왕호	×		
慕容熙	후연	401	서민천왕	왕호	×		
高雲	高燕	407	천왕	군주호	×		
赫連勃勃	夏	407	천왕, 大夏天王	군주호	×	대하천왕, 황제	대선우
馮跋	北燕	409	천왕, 大燕天王	군주호	×	대연천왕	
馮弘	북연	430	천왕	군주호	×		

천왕호를 취했던 호족군주들은 <표 3>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후조, 진진, 적위, 후량, 후진, 후연, 고연, 하, 북연 등이다. 이들 왕조는 연이나 북량처럼 서진이나 동진에서 책봉호를 받은 적이 없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이들은 흉노의 한·전조처럼 그 성립과 존립의 근거를 劉邦의 漢에서 채용하지도 않았다.⁷⁴⁾ 즉, 천왕호를 사용한 군주들을 살펴보면 모두 전통적인 중화적 질서에서 비껴나 있거나 또는 중화적 질서의 직접적인 계승자를 자처했던 이들과는 다소 다른 입장을 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천왕호는 비록 그것이 황제호와 동렬의 지위와 권위를 표현한다 해도, 결국 비중화적 표현임을 알 수 있다.

74) 內田昌功, 2008, 앞의 글, 8쪽

사실, 애초에 천왕은 분명 皇帝位 아래에 위치하였다.⁷⁵⁾ 대표적으로 斬準의 경우, 劉粲을 살해하고 스스로 大將軍·漢天王이라 하며 稱制하고 百官을 설치하였지만,⁷⁶⁾ 사자를 진왕실에 보내 藩臣을 자처한다.⁷⁷⁾ 따라서 그의 천왕호는 황제를 전제로 한 황제호 아래의 칭호임을 알 수 있다.⁷⁸⁾ 이것은 석륵의 경우도 동일하다. 成帝 咸和 5년(330) 2월 신료들의 황제 즉위 간청에도 불구하고, 석륵은 趙天王에 올라 行皇帝事한다.⁷⁹⁾ 그러다 9월 결국 황제의 자리에 오르게 된다.⁸⁰⁾ 즉 천왕이 황제가 되기 위한 일시적인 방법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러한 일련의 모습은 천왕이 황제 아래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려준다. 또한 천왕이라는 칭호의 사용이 호인이 천자가 될 수 없다는 당시 관념과 관련 있음을 알려주는 것이기도 하다.⁸¹⁾

그러나 부견부터 천왕이 황제로 가기 위한 임시적인 지위가 아님을 알 수 있다.⁸²⁾ 화이를 망라한 육합의 유일한 통치자를 꿈꾸었던 부견이 호인이 천자

75) 혼이덴 기쿠시는 최초의 天王은 王號의 범주였다고 보았다. 本位田菊士, 1981, 「古代日本の君主號と中國の君主號-「大王」號·「天皇」號の成立をめぐって」, 『史學雜誌』, 90-12, 7쪽

76) 『資治通鑑』 卷90, 「晉紀十二」 元帝太康元年條, “準自號大將軍·漢天王, 稱制, 置百官.”

77) 『晉書』 卷102, 「劉粲載記」, “遣使稱藩于晉.”

78) 斬準이 취한 천왕호가 황제호 아래에 있던 것임은 근준이 胡嵩에게 한 다음의 말에서도 알 수 있다. “옛날부터 胡人으로 천자가 된 사람은 없었다. 지금 傳國璽를 네게 주니 진왕실로 돌아가거라(『資治通鑑』 卷90, 「晉紀十二」 元帝太康元年條, 自古無胡人爲天子者, 今以傳國璽付汝, 還如晉家).” 즉 근준은 자신을 황제에 위치시키고자 하지 않았다.

79) 『資治通鑑』 卷94, 「晉紀十六」 成帝咸和5年條, “二月, 後趙羣臣請後趙王勒卽皇帝位; 勒乃稱大趙天王, 行皇帝事.”

80) 『資治通鑑』 卷94, 「晉紀十六」 成帝咸和5年條, “趙羣臣固請正尊號, 秋, 九月, 趙王勒卽皇帝位.”

81) 이것을 다니가와 미치오는 ‘躊躇’의식으로 표현하였다. 谷川道雄, 1971, 「五胡十六國·北周における天王の稱號」, 『隋唐帝國形成史』, 東京: 筑摩書房, 328쪽; 原載, 1966, 『名古屋大學文學部研究論集』 41

82) 기존 연구 중 다니가와 미치오는 천왕을 사실상 황제로 보았지만, 왕 → 천왕 → 황제 또는 왕 → 居攝天王 → 천왕 → 황제라는 도식을 설정하여 천왕이 황제로 가는 과정의 한 단계로 이해하였다. 盧泰敦 또한 천왕을 稱帝를 전제로 하는 과도적인 조처로 이해하고, 강문호 역시 천왕을 호족군주들이 황제로 칭호를 변형시켜 나가

가 될 수 없다는 기존 관념에 굴복해 황제위보다 아래 천왕위에 만족했을 것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실제로 전진의 군주호 변천을 살펴보면 이러한 추측이 잘못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전진의 경우 처음 天王·大單于를 사용하고(351), 352년부터 황제를 칭한다. 이후 357~384년까지 大秦天王을 칭하고, 385년부터 멸망하는 394년까지 황제호를 사용한다. 그렇다면 천왕의 칭호가 사용된 357~384년은 누구의 통치시대인가? 다름 아닌 부견의 재위기간이었다. 전진왕조를 통틀어 가장 막강한 세력을 가지고 있던, 일시적이거나 북중국을 통일하고 전 중국의 통일을 꿈꾸었던 유일한 시기에 전진의 군주는 황제호가 아닌 천왕호로 자신을 표현하였던 것이다.

이것은 후진 姚興의 사례에서도 살펴볼 수 있다. 기록에 따르면 요흥은 부친 姚萇의 황제호를 계승하여 394년 황제에 즉위한다. 그러나 399년 천재지변을 이유로 천왕으로 降號한다.⁸³⁾ 그러나 천왕이 과연 황제로부터의 강호인가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요흥은 393년 12월 부친 요장이 長安에서 사망한 것을 비밀로 부친 채 始平에서 苻登을 격파한 후, 394년 5월 司平槐里에서 황제에 즉위한다. 그 후 7월 요흥은 涇陽에서 부등을 공격하여 참수하고, 섬서 서부 渭水 상류의 제 세력을 평정한다. 396년에는 西燕의 故地 河東을 획득하고, 399년에는 동진 지배하의 낙양을 공격하여 함락하고 더하여 淮水·漢水 이북 지역을 획득한다. 400년에는 西秦을 공격하여 일시적이거나 서진을 복속시킨다. 401년에는 姑臧을 공격하여 後涼을 복속하였으며, 403년에는 南涼·北涼을 공격하였다. 이를 통해 서량·남량·북량은 후진에게 入貢하였고, 404년 남량은 후진에 대해 스스로 신하를 자처하며 복종해왔다. 바야흐로 요흥의 통치시기, 특히 그중에서도 399년부터는 후진이 涼州를 중심으로 그 세력을 확고히 하는 때였다. 이때는 후진의 최고 전성기에 해당하는

는 과정에서 나타난 과도적 칭호로 이해하였다. 차레대로 谷川道雄, 1971, 위의 글, 327쪽; 盧泰敦, 1988, 「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人の 天下觀」, 『韓國史論』 19, 55쪽; 강문호, 1999, 『中國中世政治史研究』, 국학자료원, 53쪽

83) 『晉書』 卷117, 「姚興載記上」, “興以日月薄蝕, 災眚屢見, 降號稱王.”

시기로 인구만 해도 약 3백만에 달했다.⁸⁴⁾

즉 후진도 전진과 마찬가지로 가장 극성기시기에 천왕호가 등장하고, 천왕호를 통해 군주의 권위가 표현되었던 것이다. 그렇다면 요흥의 천왕호를 단순히 천재지변에 대응하는 조치로만 보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이다. 세력 확장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양주지역의 최고 권력으로 등장한 후진이 譴責性의 군주호를 유지하였다고 보기는 힘들기 때문이다.

따라서 부견시기 이후 천왕은 황제보다 하위의 지위를 표현하기보다는 이 적에게는 허용되지 않는다고 세간에서 믿고 있었던 황제라는 칭호를 거부한, 호족군주의 자기 정체성의 표현이라고 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이다.⁸⁵⁾ 아니 어쩌면 천왕은 중국(황제가 다스리는 공간)과 이적(선우가 다스리는 공간)을 망라하는 유일한 통치자의 모습을 표현하는 칭호일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처럼 호족왕조들은 너나 할 것 없이 자신들의 독특한 군주제인 선우제를 폐기하고, 혹자는 황제호를, 또 혹자는 천왕호를 사용하며 자신들을 중화와 천하의 유일한 주인으로 위치시켰던 것이다.

III. 다원적 · 중층적 국제관계의 출현

앞에서 살펴본 일련의 조치들을 통해 胡族王朝들은 명실상부한 중국적 황제 국가로 변화해갔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호족왕조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새로운 華夷觀을 수립하였다. 자연스럽게 이러한 화이관에 입각한 국제질서가 뒤를 이어 만들어졌다. 이제 호족왕조들은 스스로 책봉의 주체가 되어 책봉·조공질

84) 三崎良章, 2003, 앞의 책, 116쪽

85) 天王號에 대해 미사키 요시아키는 천왕은 황제보다 한 단계 아래의 칭호기는 하지만, 위로 황제의 존재를 전제로 한 왕과는 달리 至上的 지위에 있다는 점에서 황제의 범주에 포함된다고 하였다. 三崎良章, 2003, 위의 책, 177쪽

서를 수립하였고, 다원적 국제질서를 수립하였다. 대표적으로 前趙와 後趙의 국제질서를 들 수 있을 것이다. 논의의 편의를 위하여 아래와 같은 간단한 표를 작성해보았다.

〈표 4〉 전조의 책봉 일람

대상	연도	책봉호	비고
楊難敵	322	使持節·侍中·假黃鉞·都督益寧南秦涼梁巴六州隴上西域諸軍事·上大將軍·益寧南秦三州牧·領護南氏校尉·寧羌中郎將·武都王	
姚弋仲	323	平西將軍·平襄公	
張茂	323	使持節·假黃鉞·侍中·都督涼南北秦梁益巴漢隴右西域雜夷匈奴諸軍事·太師·領大司馬·涼州牧·領西域大都護·護氏羌校尉·涼王	加九錫
張駿	324	上將軍·涼州牧·涼王	『十六國春秋』에는 大將軍으로 표기

〈표 5〉 후조의 책봉 일람

대상	연도	책봉호	비고
張駿	330	征西大將軍·涼州牧	加九錫 받지 않고 사자를 억류 후에 조공함
翟斌	330	龜町王	
苻洪	333	光烈將軍·護氏校尉 → 龍驤將軍·流民都督	
姚弋仲	333	奮武將軍·西羌大都督	
楊初	337	仇池公	自稱 후 稱臣
부흥	338	使持節·都督六夷諸軍事·冠軍大將軍·西平郡公	
요익중	345	持節·十郡六夷大都督·冠軍大將軍	
요익중	349	西平郡公	陞爵

부흥	349	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都督雍秦諸軍事·雍州刺史·略陽郡公	陞爵
부흥	349	都督關中諸軍事·征西大將軍·雍州牧·領秦州刺史	
姚襄	350	驃騎將軍·豫州刺史·新昌公	
苻建	350	都督河南諸軍事·鎮南大將軍·開府儀同三司·兗州牧·略陽郡公	
宇文逸豆歸	未詳	未詳	貢獻

〈표 4〉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전조는 藩屬을 칭했던 氏族 楊難敵을 使持節·侍中·假黃鉞·都督益寧南秦涼梁巴六州隴上西域諸軍事·上大將軍·益寧南秦三州牧·領護南氏校尉·寧羌中郎將·武都王으로 삼았고, 羌族의 姚弋仲을 西平將軍·平襄公에 책봉하였다. 또한 323년 28만의 대군을 이끌고 前涼을 침공하여 張茂로부터 항복을 받아낸 후 稱臣하는 장무를 使持節·假黃鉞·侍中·都督涼南北秦梁益巴漢隴右西域雜夷匈奴諸軍事·太師·領大司馬·涼州牧·領西域大都護·護氏羌校尉·涼王으로 책봉하였다. 장무가 사망한 다음 해에는 張駿을 上將軍·涼州牧·涼王에 책봉하였다. 즉, 전조는 권력을 확장해가는 과정 속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를 수립하였던 것이다.

이후 이것은 후조에게 계승되어, 후조는 전량의 장군을 征西大將軍·涼州牧으로 삼고 九錫을 더해주었다. 또한 丁零 翟斌을 龜町王으로 삼았으며, 氏族 苻洪을 光烈將軍·護氏校尉, 강족 요익중을 奮武將軍·西羌大都督으로 삼았다. 또한 段部 토벌이라는 정치적 필요에 따른 것이기는 하지만 前燕의 慕容皝 역시 잠시나마 번속을 칭하였다.⁸⁶⁾ 이러한 현상은 전조와 후조가 스스

86) 이에 대해서는 『晉書』와 『資治通鑑』의 기술에 차이가 있다. 『晉書』 卷109, 「慕容皝載記」, 「皝以段遼屢爲邊患, 遣將軍宋回稱藩于石季龍, 請師討遼。」; 『資治通鑑』 卷95, 「晉紀十七」 成帝咸康3年條, “段遼數侵趙邊, 燕王皝遣揚烈將軍宋回稱藩於趙。” 여기서는 『晉書』 卷106, 「石季龍載記」의 “慕容皝與段遼有隙, 遣使稱藩于季龍”에 따라 『晉書』의 기록을 취했다. 이에 대해서는 陳勇, 2010, 『資治

로 중심으로 자처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고, 그 주변의 또 다른 정치집단들이 그들을 중심으로 이해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었다.⁸⁷⁾ 당시 호족왕조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를 수립하고자 하였고, 실제로 수립했던 것이다. 또한 그것은 그 질서에 소속되어 있던 이들에게 인정받았다.

물론 후조의 모든 책봉이 '주인이 없음에, 강한 자에게 운명을 의탁'⁸⁸⁾해야 하는 상황 속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다. 대표적으로 349년에 부흥을 책봉한 것은 秦州와 雍州의 流民들 10만여가 부흥을 주군으로 삼자, 부흥을 회유하기 위해서였다.⁸⁹⁾ 350년에 苻建을 책봉한 것 역시, 부견이 晉의 征西大將軍·都督關中諸軍事·雍州刺史를 自稱하며, 동진조정에 敍正을 요청했기에 급히 그를 都督河南諸軍事·鎮南大將軍·開府儀同三司·兗州牧·略陽郡公으로 삼은 것이었다.⁹⁰⁾ 요컨대 당시 책봉·조공제도는 복수의 정치권력들 사이에서 때로는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의 구현방식으로, 혹은 정치적 협력자를 구하는 회유의 방식으로, 때로는 강한 적과의 관계에서 자구의 방법으로 선택적으로 이용되었던 것이다. 특히 이것이 절대적인 힘의 우위에 따른 지배와 복종의 군신관계가 아님을 보여주는 단적인 예는 동진의 책봉·조공제도 운용이다. 당시 호족 및 한족정권은 복수의 힘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자신들의 정치적 입지를 提高할 요량으로 이 제도를 이용하였다.

동진의 책봉에 대해 살펴보자. 이 시기 동진은 여전히 중화의 적자로 자처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수립하였다. 그러나 그 책봉 대상이 전조와 후조에서 책봉을 받은 이들 대부분이라는 점은 동진이 운영한 책봉·조

通鑑》十六國資料釋證 漢趙·後趙·前燕國部分』, 北京: 社會科學, 309쪽을 참조.

87) 예를 들어 310년 京兆人 王呂·侯脫과 馮翊人 嚴嶷 등은 西晉의 군대를 공격하고 자립한 후 漢(前趙)의 藩國임을 자칭하였고, 337년의 仇池王 楊初도 스스로 後趙에 대해 稱臣하여 당시 제 집단들이 전조와 후조를 중심으로 이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88) 『資治通鑑』卷100, 「晉紀二十二」 穆帝升平2年條, “民既無主, 強則託命.”

89) 『資治通鑑』卷98, 「晉紀二十」 穆帝永和5年條

90) 『資治通鑑』卷98, 「晉紀二十」 穆帝永和6年條

〈표 6〉 동진의 책봉 일람

대상	연도	책봉호	비고
慕容廆	317	都督遼左雜夷流民諸軍事·龍驤將軍·大單于·昌黎公	固辭한 후에 받음
모용외	318	龍驤將軍·大單于·昌黎公	받지 않음
모용외	320	監平州諸軍事·安北將軍·平州刺史	增邑二千戶
모용외	321	使持節·都督幽·平二州·東夷諸軍事·車騎將軍·平州牧·遼東郡公	邑一萬戶, 常侍·單于並如故, 丹書鐵券, 承制海東
張駿	327	大將軍·涼州牧	自稱
慕容皝	333	平北將軍·平州刺史	
楊毅	334	龍驤將軍·左賢王·下辨公	自稱 藩邦을 自請
장준	334	大將軍·都督陝西雍秦涼州諸軍事	
모용황	334	鎮軍大將軍·平州刺史·大單于·持節	
장준	334	大將軍·都督陝西·雍·秦·涼州諸軍事	
모용황	341	使持節·大將軍·都督河北諸軍事·幽州牧·大單于·燕王	
張重華	347	侍中·大都督·督隴右·關中諸軍事·大將軍·涼州刺史·西平公	
楊初	347	使持節·征南將軍·雍州刺史·仇池公	藩屬을 自請
慕容儁	349	使持節·侍中·大都督·督河北諸軍事·幽平二州牧·大將軍·大單于·燕王	『晉書』 「慕容儁載記幽」, “冀并平四州牧”
苻洪	350	氏王·使持節·征北大將軍·都督河北諸軍事·冀州刺史·廣川郡公	
苻建	350	假節·右將軍·監河北征討前鋒諸軍事·襄國公	晉의 征西大將軍·都督關中諸軍事·雍州刺史를 自稱
姚弋仲	351	使持節·六二大都督·督江北諸軍事·車騎大將軍·開府儀同三司·大單于·高陵郡公	
姚襄	351	持節·平北將軍·都督并州諸軍事·并州刺史·平鄉縣公	
장중화	353	涼州牧	

공제도 역시 원론적인 군신관계를 표현하는 외교양식으로 작동하지 못했음을 말해 준다. <표 6>은 동진이 책봉한 대상을 정리한 것이다.

동진의 책봉 관련기사를 보면 우선 전연에 대한 책봉이 두드러진다. 317년慕容廆에 대한 책봉부터, 334년부터는慕容皝에 대한 책봉이 서술되어 있다. 또한 349년에는慕容儁에 대한 책봉이 이루어져 352년 모용준이 황제를 칭할 때까지 동진과 전연 사이에는 책봉·조공관계가 성립하였다. 이러한 관계 지속의 원인으로는 전연의 정치적 선택을 들 수 있을 것이다.

지금 兩京이 함락되었고 천자가 蒙塵하였는데, 琅邪王이 江東에서 承制하여 四海로 하여금 속하게 하였습니다. 明公께서 비록 한 지방에서 응거하고 있으나, 여러 部에서는 오히려 군사로 저항하면서 아직 항복하지 않고 있으니, 무릇 官位가 왕명에 따른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의당 냥야왕에게 使者를 보내 大統을 잇도록 권고하고, 연후에 詔命을 받들어 죄 지은 사람을 토벌하면 누가 감히 좇지 않겠습니까?⁹¹⁾

이 기사는 317년 동진의 元帝가 모용외에게 都督遼左雜夷流民諸軍事·龍驤將軍·大單于·昌黎公의 관작을 내렸으나, 모용외가 받지 않자 그의 征虜將軍 魯昌이 유세한 내용을 적고 있다. ‘비록 진왕조가 쇠약해졌다고 해도 천명이 아직 고쳐지지 않았기에⁹²⁾ 진의 위세를 이용하여 세력을 확장할 것을 간언하고 있다. 또한 이것은 중원의 혼란을 피해 遼西와 遼東으로 피난한 漢族을 유인하기 위한 대책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⁹³⁾ 따라서 이 시기 책봉·조공

91) 『資治通鑑』卷90, 「晉紀十二」元帝建武元年條, “今兩京覆沒, 天子蒙塵, 琅邪王承製江東, 爲四海所繫屬. 明公雖雄據一方, 而諸部猶阻兵未服者, 蓋以官非王命故也. 謂宜通使琅邪, 勸承大統, 然後奉詔令以伐有罪, 誰敢不從!”

92) 『資治通鑑』卷90, 「晉紀十二」元帝建武元年條, “晉祚雖衰, 天命未改.”

93) 다니가와 미치오는 東晉이慕容廆에게 내린 都督遼左雜夷流民諸軍事 중 流民이 중원에서 遼西·遼東으로 유입된 漢族이라고 설명하였다. 谷川道雄, 1971, 앞의 책, 70쪽. 그렇다면 모용외는 당시 한인 유민의 보호자를 자처하던 王浚, 崔暉 등과 경쟁관계에 있었을 것이므로, 동진의 관작은 모용외에게 이들과의 경쟁에서 유리한 입지를 제공하였을 것이며, 특히 한인의 정권 내로의 유입을 촉진하는 보충으로 작동하였을 것이다. 당시 燕政權에 협력했던 漢人 士族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관계의 모습은 전연이 적극적으로 동진으로부터 책봉을 받으려는 노력으로 표현되었다.

그러나 321년 모용외에게 遼東郡公의 작위를 제수할 당시의 상황을 보면, 동진과 전연 사이에 행해진 책봉·조공의 성격이 변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모용외는 당시 功臣의 특권을 보장해 주는 丹書鐵券을 받음은 물론이고, ‘承制海東’이라 하여 遼西와 遼東의 실질적 지배자임을 인정받게 된다.⁹⁴⁾ 즉, 이 시기에 이르면 외형적으로 전연이 동진의 藩國의 모습을 갖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동진의 책봉은 북중국의 새로운 실력자로 전연을 인정하는 절차의 성격을 갖게 된다고 할 수 있겠다.⁹⁵⁾ 이는 『建康實錄』에서 320년 모용외를 燕王으로 표현한 것에서도 어느 정도 추측할 수 있다.⁹⁶⁾ 이후 349년 모용준에 대한 책봉은 사실상 전연을 독립국으로 인정한 것이다. 동진 측에서는 책봉을 통해 형식적인 군신관계라도 유지하고 싶었던 것이다.

다음은 전량에 대한 책봉을 살펴보자. 전량에 대한 책봉은 334년 이루어진다. 전량이 한족왕조였다는 점에서 비교적 늦은 책봉이 아닐 수 없다. 기사에 따르면 장준은 그의 부친인 張寔이 그랬던 것처럼⁹⁷⁾ 동진 中興 후에도 西晉의 연호인 建興을 사용하였다.⁹⁸⁾ 장씨정권이 河西의 사실상의 독립세력이었음에도 서진의 正朔을 받던 것은 위의 전연과 마찬가지로 그의 관작이 진에서 발생했음을 드러낼 필요가 있었기 때문일 것이다.⁹⁹⁾ 그러나 현실의 위협에는 어쩔

羅新, 1997, 「五燕政權下的華北士族」, 『國學研究』 4에 잘 나와 있다.

94) 『晉書』 卷108, 「慕容廆載記」, 2807쪽

95) 池培善은 이 당시 東晉과 前燕의 관계는 전연의 역할이 북중국에서 증대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 새로운 차원으로 변화되었다고 보았다. 池培善, 1997, 「東晉과 前燕의 관계에 대하여」, 『東洋史學研究』 62, 8쪽

96) 『建康實錄』 卷5, 「中宗元皇帝」, “(太興三年)三月, 燕王慕容廆奉送玉璽三紐.”

97) 『晉書』 卷86, 「張寔傳」, “是歲, 元帝即位于建鄴, 改年太興, 寔猶稱建興六年, 不從中興之所改也.”

98) 『晉書』 卷86, 「張駿傳」, “太寧元年, 駿猶稱建興十二年.”

99) 이에 대해 이춘호는 그의 관작이 晉朝의 합법적인 任命에 따른 것임을 드러낼 필요와 더불어 추락한 진조의 권위를 대신해 스스로의 威望을 세우는 일에도 奉晉正朔이 필요한 행위였다고 분석하였다. 이춘호, 2012, 「4세기 초 河西지역 張氏政權(301-332)의 출현과 그 성격」, 『역사학보』 214, 96쪽

수 없어 323년 전조의 번속이 되어 관작을 받기도 하였다. 그러다 327년 전조가 후조에게 패배하게 되는데, 장준은 후조 승리의 소식을 듣고 진의 관작을 자칭하며 후조와 대립각을 세우게 된다. 그것은 포기했던 河南을 획득하고자 하는 군사적 목적하에 치밀하게 계획된 것이라 하겠다.¹⁰⁰⁾ 이때 사용한 진의 관작이란 서진 愍帝로부터 받은 것으로 그때까지 동진과의 관계는 수립되지 않았다.¹⁰¹⁾ 오히려 石勒의 강성함에 굴복하여 330년 후조로부터 관작을 제수 받는다.

전량과 동진의 관계가 수립되는 시기는 <표 6>에서와 같이 334년이다. 金大良은 이때 수립된 책봉·조공관계가 建興年間(313~317)부터 시작된 전량측의 노력의 결과인 것처럼 서술하고 있지만,¹⁰²⁾ 330년대 들어 하서지역의 확실한 독립세력인 전량의 위세를 동진이 인정해 준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전량은 동진에 대해 稱藩하였지만, 여전히 동진의 정삭을 받들지는 않으며, 자립성을 보였다. 전량은 후조에 대해서 칭번하면서, 다른 한편 成漢에 대해서도 칭번하여 후조를 견제하였는데, 또 다시 동진에 대해서도 칭번하였지만 독립세력으로서 국제정세를 잘 이용하는 모습을 보인다.

부흥에 대한 동진의 책봉은 철저히 부흥 쪽의 정치적 승부수의 결과라고 할 수 있다. 349년 후조의 石遵이 부흥을 모함하는 石閔의 말을 듣고, 부흥에게서 都督의 직책을 파직하게 된다. 화가 난 부흥은 동진에게 항복을 청하고, 결국 동진은 다음 해 350년에 부흥을 책봉한다. 즉 부흥은 후조에 대한 정치적 승부수로서 동진에 항복을 요청한 것이다. 따라서 부흥에 대한 동진의 책봉도 힘의 우위에 근거한 군신관계를 수립하는 방법이라 할 수 없다. 이렇듯 당시 책봉·조공제도를 힘의 일방적인 우위에 근거한 신속관계의 구체적인 표현으로 보기는 힘들다. 오히려 당시 책봉·조공제도는 상호균형과 견제의 의미가

100) 『晉書』卷86, 「張駿傳」, “及石勒殺劉曜, 駿因長安亂, 復收河南地, 至于狄道, 置武衛·武衛·石門·候和·潞川·甘松五屯護軍, 與勒分境.”

101) 前涼政權이 西晉의 연호를 채용한 것은 서진에 대한 충성심 때문이 아니라 東晉으로부터의 독자성을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102) 金大良, 1989, 「前涼與晉的關係研究」, 『南都學壇』1989-2, 62쪽

내포되어 있는 외교적 억제력의 기능을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¹⁰³⁾ 그것은 힘의 역학관계를 통해 조정되는 국제질서였던 것이다.¹⁰⁴⁾

이것은 당시 지역의 절대 강자들만이 독자적인 국제질서의 주인이 아니었다는 점에서도 알 수 있다. 전조와 후조에서 차례대로 책봉을 받아 신속하였으며, 이후 동진에게 신속했던 전량의 장씨 정권은 황제국가로의 정체성을 수립하지 못했음에도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국제질서를 만들어냈다.

- 서역 諸國이 汗血馬 · 火浣布 · 犍牛 · 孔雀 · 巨象 및 여러 진기한 물품 200여 점을 바쳤다.¹⁰⁵⁾
- 또 그 장군 楊宣이 무리를 이끌고 사막을 건너, 龜茲 · 鄯善을 정벌하니 이에 서역이 더불어 항복하였다. 선선왕 元孟이 여자를 바치니 美人이라 하고 賓遐觀을 세워 그곳에 거처하게 하였다. 焉耆 · 前部와 于賓王이 더불어 사신을 보내 방물을 바쳤다.¹⁰⁶⁾
- 장준이 장군 양선을 파견하여 구자 · 선선을 정벌하니, 이에 서역 여러 나라 언기 · 우전의 무리들이 姑臧에 와서 조공하였다. 장준이 고장 남쪽에 五殿을 지으니, 관속이 모두 稱臣하였다.¹⁰⁷⁾
- 永和 원년 겨울 12월 …… 涼州牧 장준이 언기를 정벌하여 항복시켰다.¹⁰⁸⁾

기사와 같이 전량은 서역의 龜茲, 焉耆, 于賓, 鄯善 등의 국가들로부터 조

103) 梁起錫, 1983, 「4~5C. 高句麗 王者의 天下觀에 對하여」, 『湖西史學』 11, 30쪽
 104) 홍승현, 2009, 『중국과 주변-중국의 확대와 고대 중국인의 세계 인식』, 혜안, 262~263쪽
 105) 『晉書』 卷86, 「張駿傳」, “西域諸國獻汗血馬 · 火浣布 · 犍牛 · 孔雀 · 巨象及諸珍異二百餘品.”
 106) 『晉書』 卷86, 「張駿傳」, “又使其將楊宣率眾越流沙, 伐龜茲 · 鄯善, 於是西域並降. 鄯善王元孟獻女, 號曰美人, 立賓遐觀以處之. 焉耆前部 · 于賓王並遣使貢方物.”
 107) 『資治通鑑』 卷95, 「晉紀十七」 成帝咸康元年條, “(張)駿遣將楊宣伐龜茲 · 鄯善, 於是西域諸國焉耆, 于賓之屬, 皆詣姑臧朝貢. 駿於姑臧南作五殿, 官屬皆稱臣.”
 108) 『晉書』 卷8, 「穆帝紀」, “(永和元年)冬十二月, …… 涼州牧張駿伐焉耆, 降之.”

공을 받았다. 장준은 咸化 2년(327) 叛將 趙貞을 사로잡고 高昌郡을 설치한 이후로 구자·선선을 정벌하며 서역으로 영역을 확대하였고, 345년 언기까지 정벌하며 沙州를 설치하여¹⁰⁹⁾ 타림분지 동부지역까지를 지배하게 된다.¹¹⁰⁾

또한 다른 국가가 만든 세계질서 속에 소속되어 있으면서도 한편으로 자신이 중심이 된 세계질서를 만드는 경우도 발견된다. 전연의 경우 동진의 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으면서도 고구려를 책봉하여 朝見을 받았다.¹¹¹⁾ 앞의 <표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전연은 모용준이 황제가 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동진에서 관작을 제수받아 번속으로 존재하였다. 그러다 345년 동진의 정삭을 받들지 않으며 독립국으로서 자립하게 되는데, 그 전인 342년 고구려를 격파하여 고구려로부터 조공을 받았다.¹¹²⁾ 이렇듯 당시 형성된 국제질서는 단순화하기 힘든 다양한 요구들의 결과물이었으며, 그것을 작동시키는 원인 역시 다양하였다.

IV. 동아시아 각국의 天下觀과 국제질서

살펴본 것처럼 중국 내 호족왕조들의 중화의식 변용과 그에 따른 독자적인 국제질서의 수립은 또 다른 중심과 변방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이러한 변용된 중

109) 余太山, 2011, 『兩漢魏晉南北朝與西域關係史研究』, 北京: 商務, 167~169쪽

110) 三崎良章, 2003, 앞의 책, 81쪽

111) 『資治通鑑』 卷97, 「晉紀十九」 康帝建元元年條, “高句麗王釗遣其弟稱臣入朝於燕, 貢珍異以數千. 燕王慕容皝乃還其父尸, 猶留其母爲質.”

112) 에바타 다케시는 전연과 고구려 사이의 책봉조공은 규제력을 동반하지 않은 관계로 파악하였다. 그에 따르면 이 관계는 고구려의 美川王 遺骸와 王母의 반환 요구와 남방 진출을 모색하던 전연의 후미 안정이라는 양자의 필요에 따라 만들어졌다. 江畑武, 1974, 「四~六世紀の朝鮮三國と日本-中國との冊封をめぐって」, 『古代の日本と朝鮮』, 東京: 學生社, 110쪽

화익식 혹은 천하관, 그에 따른 독자적인 국제질서의 수립은 중국 내지에서만 발견되는 것은 아니다. 이 장에서는 고대 동아시아 안에서 확인되는 중화익식의 전파라는 현상을 고찰해보고자 한다.

1_ 고구려의 太王號와 천하관

이미 많은 연구 성과가 말해주는 것처럼¹¹³⁾ 고구려에도 자신을 중심으로 수립된 천하가 존재하고 있었다. 〈廣開土王陵碑〉를 비롯한 〈中原高句麗碑〉, 〈牟頭婁墓誌〉 등에서는 고구려의 독자적인 천하관을 전하는 ‘天帝之子’, ‘皇天之子’, ‘四海’, ‘天下’, ‘四方’, ‘屬民’, ‘朝貢’, ‘臣民’, ‘奴客’, ‘東夷’, ‘太王’ 등의 용어들이 등장한다. ‘天帝之子’, ‘皇天之子’가 그 가계의 신성성을 粉飾하기 위한 용어라면, ‘四海’, ‘天下’, ‘四方’과 같은 용어들은 고구려왕의 통치가 미치는 통치범위를 표현하는 용어라고 할 수 있다. 한편 ‘屬民’, ‘朝貢’, ‘臣民’, ‘奴客’, ‘東夷’ 등은 고구려를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를 설명하는데, 특히 ‘동이’와 같은 표현은 전형적인 華夷觀의 변형을 보여준다. 또한 ‘태왕’이라는 용어는 왕의 권력을 초월한 군주권을 표현하며, 특히 ‘(百濟)殘主’나 ‘新羅寐錦’이라는 용어

113) 高句麗 天下觀에 대한 연구로는 다음의 글들을 참조하였다. 坂元義種, 1978a, 「古代東アジアの〈大王〉について—百濟大王考補論」,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東京: 吉川弘文館; 坂元義種, 1978b,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大王」の成立をめぐる」, 같은 책; 李丙燾, 1979, 「中原高句麗碑에 대하여」, 『史學志』 13-1; 梁起錫, 1983, 앞의 글; 盧泰敦, 1988, 앞의 글; 武田幸男, 1989, 「高句麗「太王」의國際性」, 『高句麗史と東アジア』, 東京: 岩波書店; 李成市, 1994, 「表象としての廣開土王碑文」, 『思想』 842(여기서는 이성시 지음·박경희 옮김, 2002, 「표상으로서의 광개토왕비문」, 『만들어진 고대』, 삼인을 이용); 朴性鳳, 1996, 「廣開土好太王」王號와 世界觀」, 『고구려발해연구 廣開土好太王碑研究 100年』 2; 權五曄, 1999, 「廣開土王碑文의 세계」, 『論文集』(忠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26-2;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4, 「高句麗의 太王號와 太王家認識의 確立」, 『韓國史研究』 125; Pankaj Mohan, 2005, 「광개토대왕릉비에 보이는 고구려 왕권과 정당성」, 『高句麗研究』 21; 윤상열, 2008, 「고구려 中期 天下觀의 推移」, 『高句麗渤海研究』 30; 여호규, 2010, 「高句麗 太王號의 제정과 國岡型 왕릉입지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35

와의 비교 속에서 고구려가 주변 국가에 대한 우월의식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많은 연구자들은 이러한 고구려의 자존적 천하관념을 중국의 천하관 및 화이관의 변형으로 이해하였다.¹¹⁴⁾ 고구려와 신라 사이에 보이는 책봉·조공의 모습 역시 전통적인 중국의 책봉·조공제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념들을 차용하여 구현하고 있다는 점에도 동의한다. 다만 4~5세기 고구려에서만 보이는 태왕호의 존재 의미(美稱 및 독자성 여부), 출현 시기 등에 대한 문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존재하는 것 같다. 이 장에서는 중화의식의 변용이 중국 밖의 주변 국가에 어떤 계기를 통해 영향을 주었을까 하는 점에 초점을 맞추어 이 문제를 해명해보고자 한다.

고구려의 태왕호를 고구려 세력권의 독자성을 나타내는 상징으로 처음 파악한 이는 다케다 유키오[武田幸男]다. 그는 태왕호가 국내적으로나 국제적으로 기반을 갖고 제도적으로 존속한 것이 아니기에 관습적으로 사용한 美稱으로 보았다. 다만 태왕호가 1차적인 王爵과 무관하고, 책봉체제 내에서도 통용되던 호칭이 아니었기에 고구려 독자성을 보여주는 칭호라 하였다.¹¹⁵⁾ 태왕호를 미칭으로 보는 것과 관련해서는 미야자키 이치사다[宮崎市定]의 주장이 있지만,¹¹⁶⁾ 중국에서도 왕이라는 최고 권력자를 지칭하는 개념이 있었던 戰國時期, 타국보다 강력해진 자국의 군주권을 표현하기 위해 齊와 秦에서 기원전 288년 왕보다 상위의 帝라는 용어를 사용했던 것을 기억하면,¹¹⁷⁾ 태왕호를 미칭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아 보인다.¹¹⁸⁾

기존의 군주호인 왕호가 있던 상태에서 이와는 다른 태왕호를 사용하게 되

114) 고구려인의 천하관을 專論으로 다룬 최초의 연구라 할 수 있는 梁起錫의 글부터 이러한 입장은 계속 견지되어 왔다.

115) 武田幸男, 1989, 앞의 글, 256~269쪽

116) 宮崎市定, 1978, 「天皇なる稱號の由來について」, 『思想』 646, 1~4쪽

117) 『史記』 卷5, 「秦本紀」, “(昭襄王)十九年, 王爲西帝, 齊爲東帝, 皆復去之.”

118) 太王號에 대한 가장 이른 연구를 발표한 사카모토 요시타네 역시 백제왕 이하의 諸王들로 인하여, 왕을 초월한 大王號의 존재를 주장하였다. 坂元義種, 1978, 「五世紀の〈百濟大王〉とその王・侯」, 앞의 책, 67쪽

었다면, 이것은 고구려 조정 안에서 기존 명호로는 군주의 현재적 위상과 위엄을 보이기 힘들다고 판단한 결과일 것이다. 요컨대 국내적인 전기든¹¹⁹⁾ 국제적인 계기든¹²⁰⁾ 기존 군주권으로부터 성장이라는 점이 작용한 것임은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¹²¹⁾ 다만 문제는 언제, 왜 중국에서 사용한 황제호나 천왕호가 아닌 태왕호인가 하는 점이라 생각된다.

태왕호의 출현과 관련해서 美川王時期로 추정하는 견해가 있다.¹²²⁾ 4세기 초 왕위에 올라 西安平을 함락시키고, 樂浪·帶方 두 郡을 축출한 미천왕시기 영토적 자신감이 고구려 천하관에 영향을 미쳐 칭호가 격상되었다고 보는 입장이다. 미천왕시기 고구려가 낙랑·대방의 축출로 중국과의 관계에서 적극적인 모습을 취할 수 있었고, 이후 남쪽에 대한 經略을 모색할 수 있게 되었다는 점에서 태왕호로의 칭호 격상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미천왕의 경우 현존하는 금석문 안에서 태왕호의 사용을 확인할 수 없다는 점과 지배영역이 확대되었다고 하나 독자세력권을 구축했다고 보기 어려운 점¹²³⁾ 등은 미천왕시기 처음 태왕호가 사용되었다는 주장에 언뜻 동의하기 어렵게 한다.

이번에는 故國原王時期에 태왕호가 처음 사용되었다는 주장을 살펴보자. 우선 이 주장은 현존하는 사료를 통해 고국원왕이 최초로 태왕호를 썼을 것으로 본다.¹²⁴⁾ 미천왕의 왕권 강화를 바탕으로 중앙집권적이고 일원적 통치체제를 구축한 왕이자,¹²⁵⁾ 국란을 이겨내고 끝끝내 전연과의 전쟁에서 국가를 수호

119) 여호규, 2010, 앞의 글

120) 坂元義種, 1978b, 앞의 글

121) 실제로 국제적 계기설을 주장한다고 분류되는 사카모토 요시타네의 경우도 고구려의 태왕호가 ①지배영역의 확대, ②중앙집권체제의 정비라는 국내적 요인을 배경으로, 인접국가의 신속·조공, 그리고 그 군주에 대한 책봉과 같은 국제적 계기를 통해 성립된 것이라 주장하였다. 坂元義種, 1978b, 위의 글, 175~176쪽

122) 武田幸男, 1989, 앞의 글, 257쪽; 朴性鳳, 1996, 앞의 글, 627쪽; 姜賢淑, 2001, 「古墳을 통해 본 4·5세기대 高句麗의 集權體制」, 『한국고대사연구』 24, 53쪽; 윤상열, 2008, 앞의 글, 19쪽

123) 여호규, 2010, 앞의 글, 13쪽

124) 武田幸男, 1989, 앞의 글, 257~258쪽; 임기환, 2002, 「고구려의 王號의 변천과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28, 29쪽

125) 金英珠, 1997, 「高句麗 故國原王代의 對前燕關係」, 『北岳史論』 4, 30~40쪽

하고 전연의 멸망을 지켜본¹²⁶⁾ 고국원왕은 왕의 권위를 넘어서는 태왕호의 주인공이 될 만했을 것이다.

중국과의 관계를 고려해도 미천왕시기보다는 고국원왕시기에 태왕호가 사용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고구려 천하관의 독자성을 인정한다 해도 그것이 중국의 천하관 및 화이관에서 변형되었던 것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일 것이다. 따라서 고구려의 천하관과 그에 연동하는 태왕호의 사용은 중국과의 관계 속에서도 고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다. 미천왕시기 漢郡縣 세력을 소멸시키면서 고구려는 중국과 직접적으로 교섭하게 된다. 그 과정에서 오호십육국시기 胡族王朝로부터 중국적 천하관의 변용, 혹은 새로운 君主號에 대한 정보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 특히 기존 單于號로부터 격상된 천왕호의 채용은 이제 막 지배영역을 확대하고 독자적인 세력권을 구축하려고 하는 고구려에는 시사하는 바가 컸을 것이다. 그러나 중국의 호족국가에게서 선우호를 넘어서는 천왕호가 보편적으로 사용되는 것은 330년 後趙 石勒時期부터로 (<표 2> 참조), 이는 미천왕 재위 마지막 해에 해당한다. 이상의 사실로 미루어 미천왕시기 기존 왕호를 넘어서는 태왕호의 사용을 상정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

그럼 이번에는 고국원왕시기 새로운 군주호의 채택을 생각해보자. 우선 중국적 천하관의 수입에 대한 문제다. 고구려가 355년 전연과 맺은 책봉·조공의 관계가 다분히 방편적이었다고 해도,¹²⁷⁾ 370년까지 고구려가 전연에 대해 納質했던 것은 이 관계가 일시적인 것만은 아님을 알려준다. 요컨대, 고구려는 중국적 幕府體制에 따라 운영되었던 한중관계를 모용씨의 전연과의 관계에서

126) 李道學, 2006, 「高句麗의 國難과 故國原王象」, 『高句麗研究』 23, 18~19쪽

127) 지금까지 대부분의 한국 측 연구는 고구려가 전연과 맺은 책봉·조공관계를 일회적·형식적·방편적 외교관계로 이해하였다. 그러나 최근 여호규는 고구려와 전연이 책봉·조공관계를 맺은 후 양국관계가 우호적·안정적으로 바뀐 점, 이 관계가 전연 멸망 시까지 유지되었던 점, 당시 두 국가의 위상에 차이가 있었던 점 등을 들어 일시적이고 형식적인 외교 전략으로 보기 힘들다고 주장하였다. 여호규, 2006, 「高句麗와 慕容燕의 朝貢·冊封關係 연구」, 『한국 고대국가와 중국왕조의 조공·책봉관계』, 동북아역사재단, 21~45쪽

처음 시작한 것이다. 그렇다면 이 시기 중국 외교질서의 模式과 더불어 그 질서를 구성하는 천하관 역시 전연을 통해 고구려로 들어왔다고 이해할 수 있을 것 같다. 전연이 고구려에 강요한 신속관계의 내용은 稱臣朝貢·貢物貢納·納質이었고, 고구려에 준 관작은 征東將軍·營州刺史·樂浪公·高句麗王이었다. 이것들은 전통적인 중국의 책봉·조공제도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개념들로, 전연은 중국의 화이론적인 천하관을 고구려에 변용하여 적용한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이때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중국의 천하관,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하는 화이론적 외교양식이 고구려에 확대되게 되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하지만 그 관계가 아무리 방편적이었다고 해도 慕容儁에게서 책봉을 받은 시기 왕호를 초월한 태왕호가 사용되기는 힘들지 않았을까?

이 문제는 전연의 멸망과 그에 따른 국제질서의 변화와 관련지어 생각해보자. 전연은 360년 모용준 사후 서서히 쇠락하더니, 367년 慕容恪 사후 급속도로 쇠퇴하게 된다. 모용준 사후 계속된 지배층 내부의 혼란은 모용각시기 잠시 정리되는 것 같았지만, 전성기의 세력을 회복하지 못하고 결국 모용각 사후 368년 동진 桓溫의 침략을 받아 前秦의 도움으로 동진을 겨우 물리치게 된다. 그러나 武牢의 할양 문제로 전진과 재차 전쟁을 하게 되고, 결국 370년 전진에게 패망한다.¹²⁸⁾ 전연의 멸망은 요동지역에서 고구려의 패권이 사실상 멀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이렇게 변화한 정치 역학은 고국원왕에게 지난 시기를 넘어서는 더 큰 위엄과 권위의 상징을 필요로 했을 것이다. 아마도 이때 채용한 것이 천왕호로부터 자극받은 태왕호가 아닐까 한다.

이것은 고구려가 전연을 견제하기 위해 관계를 맺었던 후조와의 관계를 생각하면 더욱 설득력을 갖는다. 고구려는 전연과의 대결을 위해 330년 후조와 교통하게 된다.¹²⁹⁾ 이후 후조는 慕容皝과의 싸움에서 패배한 것을 만회하기 위해 338년 3백 척의 배를 동원하여 고구려에 곡식을 운반하여 두기도 하는

128) 『晉書』卷113, 「苻堅載記」, 2891~2893쪽

129) 『三國史記』卷17, 「高句麗本紀五」美川王31年條, “三十一年, 遣使後趙石勒, 致其楛矢.”; 『晉書』卷105, 「石勒載記下」, “時高句麗·肅慎致其楛矢, 宇文屋孤並獻名馬于勒.”

등¹³⁰⁾ 두 국가 사이의 협력은 후조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 따라서 당시 고구려의 대중국 외교에서 가장 비중 있는 국가는 후조였을 것이고, 후조로부터 중국 문화의 전파는 자연스러운 현상이었을 것이다. 그중 330년 석륵시기부터 348년의 石虎時期까지 사용되었던 천왕호는(〈표 2〉 참조) 고구려에도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 이처럼 왕호를 넘어서는 군주호로서의 태왕호는 이적으로서 중원을 차지하며,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인 세계질서를 세웠던 후조로부터 영향받았을 것을 충분히 상정할 수 있겠다.

그렇다면 고구려는 왜 황제호를 사용하지 않았을까? 일찍이 이것과 관련하여 황제호가 중국 자체를 지배함과 직결되어 있었기 때문이라는 탁견이 있었는데,¹³¹⁾ 이것을 전진과의 관계 속에서 살펴보자. 370년 전연의慕容評이 고구려로 도주하며, 전연은 전진에게 멸망당한다. 당시 고구려는 모용평을 전진에게 압송함으로써, 전진과 우호관계를 맺게 된다.¹³²⁾ 이후 고구려는 전진의 영향을 통해 내정의 정비를 급진전시키게 된다. 그런데 당시 전진은 오호십육국시기의 혼란함 속에서 중원을 일시적이거나 통일하는 위업을 세우는데, 화이를 망라하는 유일한 지배자를 자처했던 苻堅은 황제가 아닌 천왕을 칭하게 된다(〈표 2〉 참조).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이 시기 천왕은 더 이상 황제로 가기 위한 과도적 지위가 아니었다. 그것은 중국과 이적을 모두 다스리는 새로운 힘의 존재로써, 이적 황제가 자신의 정체성을 표현하기 위해 선택한 새로운 帝號로 격상된 상태였다. 대내외적으로 강력한 국가로 성장해 가던 고구려가 이에 영향을 받았을

130) 『晉書』卷106, 「石季龍載記上」, “季龍謀伐昌黎, 遣渡遼曹伏將青州之衆渡海, 戍蹋頓城, 無水而還, 因戍于海島, 運穀三百萬斛以給之. 又以船三百艘運穀三十萬斛詣高句麗, 使典農中郎將王典率衆萬餘屯田于海濱.”

131) 盧泰敦, 1988, 앞의 글, 56쪽. 이와는 달리 혼이텐 기쿠시는 황제호의 채용이 침략의 구실이 되었던 역사적 경험에서 고구려가 고의적으로 왕호의 범주에 있던 태왕호를 이용하여 효과적으로 권위를 표현했다고 보았다. 本位田菊士, 1981, 앞의 글, 10쪽

132) 『三國史記』卷18, 「高句麗本紀六」故國原王40年條, “四十年, 秦王猛伐燕破之. 燕太傅慕容評來奔. 王執送於秦.”

것임은 쉽게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자신만의 천하와 사방을 설정하고, 그 안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독자적 세계질서를 수립하고 있었던 고구려로서는 중원 내 호족군주들의 천왕호를 통해 새로운 명호의 필요를 절감했을 것이다. 즉, 우리는 당시 중국 중심의 국제질서 밖에서 독자적인 국제질서를 운영했던 고구려가 그 세계 속에서 그 권위와 실력을 표현할 수 있는 명호를 사용하고자 했음을 충분히 설정해 볼 수 있을 것이다. 특히 그것이 중국과는 별개로 만들어진 독자적인 세계였기에, 그 명호 역시 중국의 책봉호와는 구별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을 것이다.

2. 倭의 大王號와 천하관

4세기 고구려에서 독자적인 군주호인 태왕호가 사용되고, 그것을 가능하게 하였던 자존적인 세계관이 존재하였음을 살펴보았다. 그것은 고구려가 강력한 고대국가를 형성하고 국제사회에서 세력을 확장하며, 타국에 대해 우위를 가졌던 시기에 출현할 수 있었다. 그렇다면 고구려의 발전과정 속에서 직간접으로 고구려의 성장과 변화를 체험했던 주변국으로, 고구려의 이러한 독자적 군주호와 자존적 세계관이 영향을 미쳤음은 충분히 예측할 수 있는 일이다.¹³³⁾ 특히 일본의 경우 고대국가 형성에 한반도로부터의 영향을 전제하지 않을 수 없기에 이러한 추정은 타당하다 할 것이다.¹³⁴⁾

일본 역시 독자적인 군주호와 자존적 세계관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 근거 자료는 다음과 같다. 일본 사이타마현[埼玉縣]의 아나리아마[稻荷山] 고분에서 발견된 鐵劍과 구마모토현[熊本縣] 후나야마[船山] 고분에서 발견된 鐵刀에는 다음과 같은 銘文이 새겨져 있다.

133) 武田幸男, 1989, 앞의 글, 272~273쪽

134) 李在碩은 한반도의 존재 및 그와의 관계를 捨象하고는 일본열도의 국가 성립 과정 그 자체가 설명되기 곤란할 정도라고 보았다. 李在碩, 2005a, 「4-6세기 왜국의 對外危機論과 그 실제」, 『文化史學』 23, 8쪽

- ① 辛亥年 7월 중에 기록한다. 臣 오와케[乎獲居], 선조의 이름은 오호
 히코[意富比垢]. 그 아들의 이름은 다카리노스쿠네[多加利足尼].
 그 아들의 이름은 데요카리와케[呂己加利獲居]. 그 아들의 이름은
 다카하시와케[多加披次獲居]. 그 아들의 이름은 다사키와케[多沙
 鬼獲居]. 그 아들의 이름은 하테히[乎呂比]. 그 아들의 이름은 가사
 하요[加差披余]. 그 아들의 이름은 신 오와케. 대대로 杖刀人の 수
 장이 되어, 봉사하여 지금에 이르렀다. 와카타케루[獲加多支齒]大
 王의 朝廷이 시키[斯鬼]宮에 있을 때, 우리는 천하를 다스리는 것을
 도왔다. 이 百鍊의 날카로운 칼을 만들게 하여, 우리가 봉사한 근원
 을 기록한다.¹³⁵⁾
- ② 천하를 다스리는 와카타케루대왕의 치세에 典曹에서 봉사하였던
 자, 이름은 무리테[无利呂]다. 8월 중에 큰 가마술과 4척의 廷刀를
 이용하여 80번을 누이고, 90번 두드려 3촌의 날카로운 칼을 만들었
 다. 이 칼을 차는 이는 장수할 것이고, 자손은 영원히 王恩을 얻으
 리라. 그 다스리는 곳을 잃지 않을 것이다. 칼을 만든 이의 이름은
 이타카[伊太和], 글을 쓴 이는 張安이다.¹³⁶⁾

①의 명문 중 신해년은 531년으로 추정되기도 하지만, 일반적으로 471년의

- 135) 埼玉縣教育委員會, 1979, 『稻荷山古墳出土鐵劍金象嵌銘概報』, 浦和: 埼玉縣
 教育委員會, 12쪽. “辛亥年, 七月中記. 乎獲居臣, 上祖名意富比垢, 其兒多加利
 足尼, 其兒名呂己加利獲居, 其兒名多加披次獲居, 其兒名多沙鬼獲居, 其兒半
 呂比, 其兒名加差披余, 其兒名乎獲居臣. 世世爲杖刀人首, 奉事來至今. 獲加多
 支齒大王寺, 在斯鬼宮時, 吾左治天下, 令作此百鍊利刀, 記吾奉事根原也.” 銘
 文의 해석은 原島禮二, 1979, 「埼玉稻荷山古墳出土の鐵劍銘文について」, 『歷
 史評論』 346, 4~9쪽; 金井塚良, 1980, 「稻荷山古墳出土辛亥銘鐵劍をめぐっ
 て」, 『古代東國史の研究: 稻荷山古墳出土とその前後』, 浦和: 埼玉新聞社,
 107~112쪽. 原載, 1979, 『高校通信東書國語』 182; 川本芳昭, 2007, 『『宋書』倭
 國傳에 보이는 倭武王의 上表文과 高句麗-古代 東아시아의 歷史的 展開에서
 본』, 『동아시아 속에서의 高句麗와 倭』, 景仁文化社, 56쪽을 참조하였다.
- 136) 東京國立博物館, 1993, 『江田船山古墳出土 國寶 銀象嵌銘大刀』, 東京: 東京國
 立博物館, 62쪽. “治天下獲□□□(加多支)齒大王世, 奉事典曹人名无□(利)呂,
 八月中, 用大鑄釜, 并四尺廷刀, 八十鍊, □(九)十振, 三寸上好□(刑)刀, 服此刀
 者, 長壽, 子孫洋洋, 得□恩也, 不失其所統, 作刀者名伊太□(和), 書者張安也.”
 괄호 안은 동경국립박물관의 추정문. 명문의 해석은 같은 책, 62~68쪽; 川本芳
 昭, 2007, 앞의 글, 57쪽을 참조하였다.

로 이해되고 있다. 471년은 일본 21대 천황 雄略天皇의 치세에 해당한다. ②의 명문에 등장하는 獲□□□鹵大王 즉 와카타케루대왕 역시 웅략천왕으로 보는데 이견이 없다.¹³⁷⁾ 웅략은 456~479년을 치세로 갖는 왕으로, 그의 시대는 흔히 대외적으로 대중국 외교를 적극적으로 벌이면서 내적으로 왕권의 신장을 도모했던 시대로 알려져 있다. 특히 이 시기를 기점으로 고대 일본의 초월적 전제왕권이 형성되었다는 견해가 지배적이다.¹³⁸⁾

웅략기를 획기적인 시대로, 초월적 전제왕권이 성립된 시기로 볼 수 있는가의 문제는 현재 연구자마다 이견이 존재한다. 그러나 비록 웅략기를 초월적 전제왕권이 성립된 시기로 파악하지 않는다 해도 연구자들은 이 시기가 지배영역이 확대되고, 왕권이 강화된 시기였음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요컨대 그것이 웅략기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니라 해도, 5세기 왜국에서 지배영역의 확대, 인접 諸國의 복속, 왕권의 강화와 연동하여 대왕호가 출현하는 것을 부정하지는 않는다. 그런데 이러한 내용은 대내적 원인들로, 이 외에도 국제적 계기가 작동하였을 것이다. 그것은 한반도와의 밀접한 관계 속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인데, 고구려의 태왕호 그리고 백제의 대왕호는 직간접적인 영향을 주었을 것이다.¹³⁹⁾ 특히 그중에서도 고구려의 태왕호가 큰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되는데, 5세기 왜왕들이 고구려와의 전쟁을 통해 열도 각지의 諸세력의 결집을 이끌어 내며 왕권의 신장을 도모했을 것이라는 연구는 주목된다.¹⁴⁰⁾ 따라서 왜왕의 대왕호는 고구려의 태왕호와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리고 이 독자적 군주호인 대왕호는 고구려가 그랬던 것처럼 왜국의 독

137) 井上光貞 외, 1979, 『シンポジウム鐵劍の迷と古代日本』, 東京: 新潮社, 119~121쪽

138) 雄略天王時期에 대한 지금까지의 연구 경향은 李在碩, 1999, 「日本 古代 雄略朝의 歴史像」, 『日本史研究』 9에 잘 정리되어 있다. 이제석은 이 글에서 웅략기를 초월적 전제왕권이 형성되었던 획기적 시대로 이해하는 일련의 연구에 대해 반박하고 있으나, 본 글에서 다루고자 하는 내용과는 거리가 있어 소개하지 않는다.

139) 백제의 大王號와 天下觀에 대한 연구는 양기석, 2011, 「百濟 武寧王代의 自尊的 天下觀」, 『중원문화연구』 16·17집을 참조.

140) 李在碩, 2005b, 「日本 古代 王權 發達の 諸段階」, 『文化史學』 24, 194쪽

자적 천하관과 연동하고 있다.

옹락천왕은 중국에 조공한 다섯 명의 왕, 즉 倭五王 중 마지막 왕으로 흔히 武로 불린다. 『宋書』에 따르면 그는 478년 劉宋 順帝에게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之 관작을 요구한다. 그는 관작을 요구하는 上表文에서 다음과 같이 자신이 중국 황제의 藩臣으로, 天極(송조정)으로부터 편벽된 邊隅에 위치하고 있음을 말하고 있다.

[지희가] 책봉된 國은 먼 곳에 치우쳐져, 밖에서 藩國을 이루고 있습니다. 예부터 저의 선조들은 갑옷과 투구를 걸치고 산과 내를 건너 누비느라 편안히 거처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동으로 毛人의 55국을 정벌하였고, 서로는 衆夷 66국을 복종시켰으며, 바다 건너 海北 95개국을 평정하여 王道를 화락하고 편안하게 미치게 하였으며, 영토를 넓혀 왕기를 아득히 하였습니다. [또한] 여러 대에 걸쳐 조공하기를 해마다 여긔나는 일이 없었습니다. 신 비록 우매하나 선조의 뒤를 이어 다스리는 곳을 이끌고 天極(宋朝廷)을 존중하고자 합니다.¹⁴¹⁾

즉, 자신이 중국 중심의 세계의 일부를 구성하고, 외곽에서 그 세계를 확장하는 노력을 했음을 설명한다. 그러나 우리는 앞의 ①, ② 명문의 ‘治天下’라는 구절을 통해 왜국왕 무가 천하를 다스리는 자로 묘사됨을 알 수 있다. 즉,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세계질서를 전제로 하면서도 왜국 나름의 독자적 천하가 존재함을 알 수 있다.

이 천하의 범주를 어떻게 설정할 것인가와 관련하여 니시지마 사다오[西嶋定生]는 그것을 야마토[大和] 정권의 지배영역으로 보았다.¹⁴²⁾ 위의 인용문에 따르면 그 영역은 毛人 55국, 衆夷 66국, 海北 95국이 포함된 곳이다. 그러

141) 『宋書』卷97, 「夷蠻 倭國傳」, “封國偏遠, 作藩于外, 自昔祖禰, 躬擐甲冑, 跋涉山川, 不遑寧處. 東征毛人五十五國, 西服衆夷六十六國, 渡平海北九十五國, 王道融泰, 廓土遐畿, 累葉朝宗, 不愆于歲. 臣雖下愚, 忝胤先緒, 驅率所統, 歸崇天極.”

142) 西嶋定生, 1985, 『日本歷史と國際環境』, 東京: 東京大學, 77쪽

나 왜왕 무가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을 자칭하고 또 그것에 대한 敍正을 중국 측에 요구했던 것을 고려하면, 그의 천하를 아마도 정권의 실지배 영역으로만 국한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을 것 같다.¹⁴³⁾ 오히려 그의 자칭을 통해 그것은 왜국이 영향력을 미치고 싶어 하는 지역까지를 포함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미 기왕의 연구는 왜왕이 요구한 군사권이 미치는 공간 중 이미 존재하지 않는 국명이 포함된 것을 지적하며, 이 칭호가 가진 허상을 지적하였다.¹⁴⁴⁾ 따라서 그 지역을 일본의 영향력이 미쳤던 공간으로 파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우리는 왜왕 무의 상표문을 통해 사실 여부를 떠나 당시 일본이 역시 독자적인 천하관을 수립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冊封朝貢體制와 동아시아 국제질서 - 맺음말에 대신하여

현재 고대 동아시아의 국제질서에 관한 연구는 니시지마 사다오의 ‘동아시아 세계론’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하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이다. ‘책봉·조공체제’를 매개로 하여 ‘한자문화’, ‘유교’, ‘율령제’, ‘한역불교’ 등의 문화적 공통성을 가진 완결적이고 자율적인 역사세계인 ‘동아시아’를 발견한 니시지마 사다오는 중국 고유의 정치질서가 대외적으로 확대되고 그 정치질서와 함께 중국 문화가 전파되는 과정을 동아시아 세계의 성립과정이자 동아시아 문화권의 형성과정으로 파악한다.¹⁴⁵⁾

143) 川本芳昭, 2002, 「漢唐間における「新」中華意識の形成－古代日本・朝鮮と中國との關連をめぐって」, 『九州大東洋史論集』 30, 4쪽

144) 江畑武, 1974, 앞의 글, 66~76쪽

145) 西嶋定生, 1962, 「6~8世紀の東アジア」, 『岩波講座 日本歴史 2』, 東京: 岩波書

이러한 ‘동아시아 세계론’은 동아시아 자체를 세계사 속에서 발견했다는 의의와 고대 동아시아에서 전개된 역사적 사건들을 공간적으로 총합하여 하나의 이론적 세계를 그려냈다는 의의를 지닌다.¹⁴⁶⁾ 또한 일국사의 한계를 벗어나 비교사의 관점을 견지하고, 공통의 문화권 형성의 배경으로 정치적 질서를 주목하였으며, 국제정치의 역관계를 통해 문화의 확산과 수용을 파악한 것 역시 장점일 것이다.¹⁴⁷⁾ 그러나 현재 니시지마 사다오의 ‘동아시아 세계론’에 대한 비판은 거세다. 그 이유는 이미 오랜 기간 동안 꾸준히 지적되었던 것처럼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문화권의 공통점을 지나치게 강조하여, 동아시아 각국이 지닌 개별성을 사장한다는 것이다.¹⁴⁸⁾ 또한 동아시아 세계가 중국 중심의 일원적 국제질서가 아닌 다원적 국제질서로 구성되어 있었다는 사실을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이다.¹⁴⁹⁾

확실히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동아시아에 존재했던 집단들이 만들어 낸 다양한 관계, 특히 자신을 중심으로 하여 독자적인 정치 블록을 구축했던 다원적이며, 중층적인 상황들에 대해서는 니시지마 사다오의 ‘동아시아 세계론’이 무력한 것이 사실이다. 그래서 최근 ‘동아시아 세계론’에 대한 다양한 의견들의 등장하고 있다. 이것은 동아시아 세계를 보다 정확히 이해하기 위한 노력이라 할 것이다. 많은 연구자들이 지금까지와는 달리 중국 주변 민족 사이의 상호관계를 주목하며 중국 중심의 세계관에서 벗어나고자 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서는 특히 한국 학계의 연구가 두드러진다. 이것은 한국사가 지닌 특수성과 무관하지 않을 것이다. 우선은 역사적으로 한반도 역대 왕조가

店; 西嶋定生, 1970, 「總說」, 『岩波講座 世界歴史 4』, 東京: 岩波書店 참조.

146) 金翰奎, 2005, 『天下國家-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 소나무, 29쪽

147) 김창석, 2010, 「6~8세기 동아시아와 한중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74쪽

148) 堀敏一, 1963, 「近代以前の東アジア世界」, 『歴史學研究』 281 참조.

149) 다케다 유키오에 따르면 ‘책봉체제론’의 가장 큰 문제는 중화의식을 전제로 한 일원론으로부터 중국 황제와 주변 국가의 수장들 사이의 관계를 개별적이며 직접적인 군신관계로 파악한 것이다. 이 때문에 주변 국가들 사이에 존재하는 다양한 관계양식이 사장되었다고 보았다. 武田幸男, 1980, 「五~六世紀東アジア史の一視點」,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4』, 東京: 學生社, 58~59쪽

중국 왕조와 책봉·조공의 관계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일 것이다. 일본의 경우 중국과의 관계는 지속적이기보다는 단절적이었다. 그러나 지정학적 위치로 인하여 한반도 국가들은 중국 왕조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게 되었고, 특히 고구려의 경우 요동을 두고 중국의 증원왕조 및 胡族王朝와 대결과 타협을 거듭하는 과정에서 책봉·조공이라는 외교질서를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어느 지역보다도 책봉·조공의 관계가 장기간, 비교적 뚜렷하게 지속되었다. 그 결과 책봉·조공을 매개로 동아시아 세계를 설정한 ‘동아시아 세계론’에 누구보다도 민감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

또 다른 이유는 최근 뚜렷하게 모습을 보이는 중국 학계의 ‘藩屬理論’ 때문이라고 생각된다.¹⁵⁰⁾ 피책봉국을 藩屬이라는 후대적 개념으로 해석하여, 중국의 지방정권임을 입증하려고 했던 변속이론은 중국과 외교관계를 맺은 것을 일괄 귀속으로 설명하고자 하였다.¹⁵¹⁾ 따라서 최근 한국 학계의 연구는 고대 동아시아 세계가 다수의 지역 국제질서가 중층적으로 존재하고 있었음을 논증하는 경향이 강하다. 그중에는 고대 동아시아에서 중국은 넓은 영토와 지리적으로 가운데 존재하였던 결과 지역질서의 매개 역할만을 담당했다는 주장도 있고,¹⁵²⁾ 동아시아를 외교교섭과 문화교류 그리고 경제교역 등이 이루어지는 하나의 네트워크로서 이해하면 중심과 주변을 설정할 이유가 없다는 주장도 나왔다.¹⁵³⁾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오호십육국시기 호족왕조들은 물론이고 고

150)李大龍, 2006, 『漢唐藩屬體制研究』, 北京: 社會科學; 黃松筠, 2008, 『中國古代藩屬制度研究』, 長春: 吉林人民을 참조.

151) 藩屬理論에 대한 분석과 비판은 다음의 글들에 잘 정리되어 있다. 정병준, 2006, 「중화인민공화국의 藩屬理論과 그 비판」, 『동북공정과 한국 학계의 대응논리』, 학고재; 정병준, 2007, 「중화인민공화국의 변속이론과 고구려 귀속문제」, 『고구려연구』 29; 이석현, 2010, 「중국의 변속제도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국 변속이론과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방향숙, 2010, 「한대의 세계인식과 변속제도」, 『중국 변속이론과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김성한, 2010, 「당대의 세계 인식과 변속제도」, 『중국 변속이론과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152) 김병준, 2010, 앞의 글, 62쪽

153) 김창석, 2010, 앞의 글, 30~32쪽

구려와 같은 주변 국가들은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천하관을 수립하고 그것에 근거한 독자적인 세력권을 형성하여 다원적 국제질서를 만들어내기도 하였지만, 여전히 중국의 책봉·조공질서 안에 포함되어 있었다. 무엇 때문일까? 혹은 모용씨가 동진에서 책봉을 받지 못했던 세력 확장 초기에 자신의 권력이 왕명으로부터 나오지 않은 것을 걱정했던 것에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중국식 칭호나 제도의 사용이 당시 지배권의 정통성을 보장하고 더 나아가 동아시아 세계에서 국제사회의 위계를 표현했기 때문은 아닐까?¹⁵⁴⁾ 혹은 자신이 중국의 국제질서 속에 포함되어 있는 것이 자신을 중심으로 한 또 다른 국제질서를 구축하는 데 유리하게 작동한 것은 아닐까?

5세기 왜왕들은 공통적으로 자칭한 칭호에 대해 송에 敍正을 요구하였다. 使持節·都督倭百濟新羅任那(加羅)秦韓慕韓(七)六國諸軍事·安東大將軍·倭國王이 그것이다. 또한 자신의 配下의 신하들에 대해서도 장군호를 요청하였다.¹⁵⁵⁾ 이 칭호에 대하여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극히 형식적이라는 데 의견을 같이한다. 앞서 언급한 것처럼 都督○○諸軍事가 실질적 군사권을 표현하지 못함은 물론이고, 칭호에 보이는 진한과 모한의 경우 당시 실재하지 않았던 국명이라는 것도 지적되었다. 한국 학계에서도 고대 동아시아에서 책봉·조공관계는 중국과 주변 국가 사이에 상하관계를 만들어내지 못했음은 물론이고 최소한의 통합적 질서마저 만들어내지 못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주변 수장에게 제수한 관직이 허호였음은 물론이다.¹⁵⁶⁾ 그러나 이렇게 이해하면, 고구려왕이 혹은 백제왕이 자신의 배하에 대해 서정을 요구하는 일을 설명하기 힘들 것이

154) 5세기 왜왕들이 요구했던 '都督百濟諸軍事'를 宋이 끝내 인정해주지 않았던 것은 이것이 虛封이라 해도 중국 나름의 원칙이 견지되고 있었던 것으로 봐야 할 것이며, 그것은 다른 아닌 중국을 중심으로 한 국제질서 안에서의 서열 표기라고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155) 왜왕 珍은 倭隋 등 13인에게 平西·征虜·輔國將軍 등을 서정해 줄 것을 요구하였고, 濟 역시 배하 23인에게 將軍號와 太守號를 요청하고 있다.

156) 李成珪, 1996, 「中國의 分裂體制模式과 東아시아 諸國」, 『韓國古代史論叢』 8, 268~273쪽

다.¹⁵⁷⁾ 따라서 중국을 중심으로 하는 책봉·조공질서가 실질적인 지배와 피지배의 관계를 설명하지는 못했다 해도, 그것이 국제관계 안에서 일종의 질서 유지 장치이자 의례적 서열을 표현하는 방법으로 작동했던 것은 아닐까 한다.

또한 그것이 동아시아 제국의 군주들에게 자국 안에서 유효하였던 점도 무시할 수는 없을 것 같다. 일본의 경우 왜왕 진부터 무까지 지속적으로 자칭한 칭호를 공식화해 줄 것을 송왕조에 요구한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이에 대해 이재석은 칭호의 자칭 및 송왕조의 공인이 왜왕의 권위를 높여주는 역할을 하였다는 점과 칭호에서 보이는 반고구려 정서가 왜왕으로 하여금 제제의 결속을 도모하고 강화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분석하였다.¹⁵⁸⁾ 즉 중국 황제의 권위를 이용하는 것이 자신의 정권에 유리했다는 것이다.

고대 동아시아 세계의 다수의 국제질서 안에서 중심과 주변이 확인되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을 것이다. 대표적으로 앞에서 살펴본 광개토태왕릉비에서 보이는 ‘屬民’, ‘朝貢’, ‘奴客’ 등의 용어는 분명히 중심과 주변의 구별 속에서만 가능한 표현이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우선 동아시아 세계를 단순한 네트워크로만 이해할 수는 없을 것이다. 그리고 동아시아 다수의 국제질서 안에서 각 중

157) 『南齊書』卷58, 「百濟國傳」, “假行寧朔將軍臣姐瑾等四人, 振竭忠效, 攘除國難, 志勇果毅, 等威名將, 可謂扞城, 固蕃社稷, 論功料勤, 宜在甄顯, 今依例輒假行職. 伏願恩愍, 聽除所假. 寧朔將軍·面中王姐瑾, 歷贊時務, 武功竝列, 今假行冠軍將軍·都將軍·都漢王. 建威將軍·八中侯餘古, 弱冠輔佐, 忠效夙著, 今假行寧朔將軍·阿錯王. 建威將軍餘歷, 忠款有素, 文武列顯, 今假行龍驤將軍·邁盧王. 廣武將軍餘固, 忠效時務, 光宣國政, 今假行建威將軍·弗斯侯.”; 『南齊書』卷58, 「百濟國傳」, “臣所遣行建威將軍·廣陽太守·兼長史臣高達, 行建威將軍·朝鮮太守·兼司馬臣楊茂, 行宣威將軍·兼參軍臣會邁等三人, 志行清亮, 忠款夙著. 往泰始中, 往泰始中, 比使宋朝, 今任臣使, 冒涉波險, 尋其至效, 宜在進爵, 謹依先例, 各假行職. 且玄澤靈休, 萬里所企, 況親趾天庭, 乃不蒙賴. 伏願天監特愍除正. 達邊效夙著, 勤勞公務, 今假行龍驤將軍·帶方太守. 茂志行清壹, 公務不廢, 今假行建威將軍·廣陵太守. 邁執志周密, 屢效勤效, 今假行廣武將軍·清河太守.”

158) 李在碩, 2001, 「5세기 倭王之對南朝外交와 통교 단절의 요인」, 『日本歷史研究』 13, 16~17쪽

심이 주변과의 관계를 확인하는 방법으로 중국이 주변과 맺었던 방식을 사용하고, 중국의 권위를 이용하였다면 동아시아 국제관계 속에서 중국을 매개로만 이해하는 것도 부족한 점이 있다. 따라서 동아시아 세계의 다층적인 면을 인정하면서도 책봉·조공에 대해 어떤 식으로든 세계질서로의 역할과 의미를 부여하고 설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참고문헌

1. 사료

『建康實錄』, 2009, 北京: 中華書局

『南齊書』, 1997, 北京: 中華書局

『孟子』, 1999, 北京: 北京大學(十三經注疏本)

『三國志集解』, 2009, 上海: 上海古籍

『宋書』, 1997, 北京: 中華書局

『隋書』, 1997, 北京: 中華書局

『十六國春秋』, 1936, 上海: 商務印書館

『元和郡縣圖志』, 1995, 北京: 中華書局

『魏書』, 1997, 北京: 中華書局

『資治通鑑』, 1997, 北京: 中華書局

『晉書』, 1997, 北京: 中華書局

『春秋繁露』, 1994, 濟南: 山東友誼

『漢書』, 1997, 北京: 中華書局

『後漢書』, 1997, 北京: 中華書局

韓國古代社會研究所, 1992, 『譯註 韓國古代金石文』, 駕洛國史蹟開發研究院

2. 연구서 및 연구논문

강문호, 1999, 『中國中世政治史研究』, 국학자료원

김한규, 2004, 『요동사』, 문학과지성사

金翰奎, 2005, 『天下國家－전통시대 동아시아 국제질서』, 소나무

朴漢濟, 1988, 『中國中世胡漢體制研究』, 一潮閣

姜文皓, 1997, 「前秦苻堅의 政治와 帝權」, 『中國學報』 37

姜賢淑, 2001, 「古墳을 통해 본 4·5세기대 高句麗의 集權體制」, 『한국고대사연구』 24

權五曄, 1999, 「廣開土王碑文의 세계」, 『論文集』(忠南大學校 人文科學研究所) 26-2

김병준, 2010, 「3세기 이전 동아시아 국제질서와 한중관계－조공·책봉의 보편적 성격
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
재단

- 김성한, 2010, 「당대의 세계 인식과 변속제도」, 『중국 변속이론과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 金英珠, 1997, 「高句麗 故國原王代の 對前燕關係」, 『北岳史論』 4
- 김창석, 2010, 「6~8세기 동아시아와 한중관계」, 『동아시아 국제질서 속의 한중관계사-제언과 모색』, 동북아역사재단
- 盧泰敦, 1988, 「5세기 金石文에 보이는 高句麗人의 天下觀」, 『韓國史論』 19
- 朴性鳳, 1996, 「『廣開土好太王』 王號와 世界觀」, 『고구려발해연구 廣開土好太王碑研究 100年』 2
- 朴漢濟, 1985, 「前秦苻堅政權의 性格-胡漢體制와 統一體制의 구축과정과 관련하여」, 『東亞文化』 23
- 방향숙, 2010, 「한대의 세계인식과 변속제도」, 『중국 변속이론과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 시노하라 히로카타, 2004, 「高句麗의 太王號와 太王家認識의 確立」, 『韓國史研究』 125
- 梁起錫, 1983, 「4~5. 高句麗 王者의 天下觀에 對하여」, 『湖西史學』 11
- 양기석, 2011, 「百濟 武寧王代의 自尊的 天下觀」, 『중원문화연구』 16·17
- 여호규, 2010, 「高句麗 太王號의 제정과 國岡型 왕릉입지의 성립」, 『역사문화연구』 35
- 윤상열, 2008, 「고구려 中期 天下觀의 推移」, 『高句麗渤海研究』 30
- 李道學, 2006, 「高句麗의 國難과 故國原王象」, 『高句麗研究』 23
- 李丙燾, 1979, 「中原高句麗碑에 대하여」, 『史學志』 13-1
- 이석현, 2010, 「중국의 변속제도 이론에 대한 비판적 검토」, 『중국 변속이론과 허상』, 동북아역사재단
- 李在碩, 1999, 「日本 古代 雄略朝의 歷史像」, 『日本史研究』 9
- 李在碩, 2005a, 「4-6세기 왜국의 對外危機論과 그 실체」, 『文化史學』 23
- 李在碩, 2005b, 「日本 古代 王權 發達の 諸段階」, 『文化史學』 24
- 李周鉉, 2008, 「魏晉南北朝의 東夷校尉」, 『한중관계 2000』, 소나무
- 이춘호, 2012, 「4세기 초 河西지역 張氏政權(301-332)의 출현과 그 성격」, 『역사학보』 214
- 임기환, 2002, 「고구려의 王號의 변천과 성격」, 『韓國古代史研究』 28
- 정병준, 2006, 「중화인민공화국의 '藩屬理論'과 그 비판」, 『동북공정과 한국 학계의 대응논리』, 학고재

- 정병준, 2007, 「중화인민공화국의 변속이론과 고구려 귀속문제」, 『고구려연구』 29
- 池培善, 1994, 「韓恒에 대하여」, 『東方學誌』 86
- 池培善, 1997, 「東晉과 前燕의 관계에 대하여」, 『東洋史學研究』 62
- 川本芳昭, 2007, 「『宋書』倭國傳에 보이는 倭武王의 上表文과 高句麗-古代 東아시아의 歴史的 展開에서 본」, 『동아시아 속에서의 高句麗와 倭』, 景仁文化社
- 홍승현, 2009, 「부견(侍堅)의 '六合' 개념과 귀속민 통치」, 『漢城史學』 24
- 홍승현, 2011, 「漢代 華夷觀의 전개와 성격」, 『동북아역사논총』 31
- Pankaj Mohan, 2005, 「광개토태왕릉비에 보이는 고구려 왕권과 정당성」, 『高句麗研究』 21
- 이성시 지음·박경희 옮김, 2002, 「표상으로서의 광개토태왕비문」, 『만들어진 고대』, 삼인
- 埼玉縣教育委員會, 1979, 『稻荷山古墳出土鐵劍金象嵌銘概報』, 浦和: 埼玉縣教育委員會
- 東京國立博物館, 1993, 『江田船山古墳出土 國寶 銀象嵌銘大刀』, 東京: 東京國立博物館
- 三崎良章, 2002, 『五胡十六國-中國史上の民族大移動』, 東京: 東方書店
- 西嶋定生, 1985, 『日本歴史と國際環境』, 東京: 東京大學
- 井上光貞 외, 1979, 『シンポジウム鐵劍の迷と古代日本』, 東京: 新潮社
- 谷川道雄, 1971, 「五胡十六國・北周における天王の稱號」, 『隋唐帝國形成史』, 東京: 筑摩書房
- 宮崎市定, 1978, 「天皇なる稱號の由來について」, 『思想』 646
- 金井塚良, 1980, 「稻荷山古墳出土辛亥銘鐵劍をめぐって」, 『古代東國史の研究: 稻荷山古墳出土とその前後』, 浦和: 埼玉新聞社
- 內田昌功, 2008, 「東晉十六國における皇帝と天王」, 『史朋』 41
- 武田幸男, 1980, 「五~六世紀東アジア史の一視點」, 『東アジア世界における日本古代史講座4』, 東京: 學生社
- 武田幸男, 1989, 「高句麗「太王」の國際性」, 『高句麗史と東アジア』, 東京: 岩波書店
- 本位田菊士, 1981, 「古代日本の君主號と中國の君主號-「大王」號・「天皇」號の成立をめぐって」, 『史學雜誌』 90-12
- 三崎良章, 1991, 「五胡諸國の異民族統御官と東晉-南蠻校尉・平吳校尉の設置を中

- 心として」, 『東方學』 82
- 西嶋定生, 1962, 「6~8世紀の東アジア」, 『岩波講座 日本歴史 2』, 東京: 岩波書店
- 西嶋定生, 1970, 「總説」, 『岩波講座 世界歴史 4』, 東京: 岩波書店
- 小林聰, 1989, 「後漢の少数民族統御官に関する一考察」, 『九州大學東洋史論集』 17
- 松下洋巳, 1997, 「前秦苻堅政權の性格について」, 『史苑』 57-2
- 原島禮二, 1979, 「埼玉稻荷山古墳出土の鐵劍銘文について」, 『歴史評論』 346
- 竹園卓夫, 1977, 「後漢安帝以後における刺史の軍事に関する覚え書き」, 『集刊東洋學』 37
- 川本芳昭, 2002, 「漢唐間における「新」中華意識の形成 - 古代日本・朝鮮と中國との関連をめぐる」, 『九州大東洋史論集』 30
- 坂元義種, 1978a, 「古代東アジアの〈大王〉について - 百濟大王考補論」,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東京: 吉川弘文館
- 坂元義種, 1978b,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 「大王」の成立をめぐる」, 『古代東アジアの日本と朝鮮』, 東京: 吉川弘文館
- 余太山, 2011, 『兩漢魏晉南北朝與西域關係史研究』, 北京: 商務
- 李大龍, 2006, 『漢唐藩屬體制研究』, 北京: 社會科學
- 陳勇, 2010, 『《資治通鑑》十六國資料釋證 漢趙・後趙・前燕國部分』, 北京: 社會科學
- 黃松筠, 2008, 『中國古代藩屬制度研究』, 長春: 吉林人民
- 高敏, 1992, 「十六國前秦・後秦時期的“護軍”制」, 『中國史研究』 1992-2
- 高昕, 2008, 「對苻堅民族政策的思考」, 『宜賓學院學報』 2008-2
- 金大良, 1989, 「前涼與晉的關係研究」, 『南都學壇』 1989-2
- 羅新, 1997, 「五燕政權下的華北士族」, 『國學研究』 4
- 李方, 2010, 「前秦苻堅の中國觀與民族觀」, 『西北民族研究』 2010-1
- 林探, 1986, 「苻堅略論」, 『民族研究』 1986-1
- 趙越, 2008, 「苻堅民族關係思想初探」, 『煙臺大學學報』(哲社版)2008-4
- 何茲全, 1990, 「十六國時期的儒學和五德終始思想」, 『紀念顧頡剛學術論文集 上』, 成都: 巴蜀書社
- 韓國磐, 1986, 「苻堅略論」, 『歷史研究』 1986-1

[ABSTRACT]

The Transformation of Sinocentrism in the Wei, Jin, Nan,
and Bei (魏晉南北朝) Period and the Regional Dynamics of
East Asia

Hong Senghyun

This study aims at recovering how Sinocentrism was influenced and changed by neighbor tribes and countries during the Wei, Jin, Nan, and Bei period, and examining the regional dynamics of East Asia that were newly established by the transformed Sinocentrism. To this end, the following was discussed.

First, how Sinocentrism was established among the Wu Hu (五胡), or the “Five Barbaric Tribes,” was examin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underlying spirit. This examination found that the Sinocentrism expressed by rulers of the barbarians was not only transformed by themselves, but was also influenced by Han people who had long lived and mixed together with neighboring tribes and had changed their view of the tribes. Second, how Sinocentrism evolved into specific policies or measures by the tribal rulers was examined. The monarchs established a “Principle of Kingdom Alternation,” in opposition to the “Five Virtue Principle,” so that they became legitimate kingdoms, and adopted the titles of “Emperor” and “King” to strengthen their authority. In addition, they called themselves “Center” (中華) while looking down upon other tribes, and established military offices to oversee other tribes. Building upon such a series of policies and measures, all the monarchs believed

that they had established the central, legitimate kingdom and the tribute and investiture system centering on themselves, resulting in multi-centered and multi-layered regional dynamics.

The transformation of Sinocentrism by the rulers and the accompanying change in regional dynamics created new centers and peripheries, which helped spread Sinocentrism. This is demonstrated by Koguryo's and Japan's independent titles for the monarch and their unique views of the world. The two countries separately and independently created their own systems regarding the regional dynamics, but were still included in the tribute and investiture system of China. This was because adopting Chinese titles and systems represented their international standing within East Asia and helped domestically reinforce the respective ruler's power. Accordingly, although the Sinocentric tribute and investiture system cannot explain the actual ruling-ruled relations, it is clear that the system served as a mechanism to maintain the order within the regional dynamics and to express the ritual ranks of each country.

Keywords

sinocentrism(中華主義), regional dynamics of East Asia(동아시아 國際秩序) Wu Hu (五胡; Five Barbaric Tribes), barbarian(夷狄), center(中華), periphery(주변), five virtue principle(五行)

간도의 조선인 축구

- 마을과 학교에서 민족으로 -

이동진 | 경북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I. 머리말: 민족 표상으로서의 스포츠 경기

스포츠 경기가 인기를 끄는 중요한 이유는 그것이 집단을 표상하기 때문이다. 스포츠 경기는 선수와 관중을 경기와 응원의 공동체로 결속시킴으로써 집단주의를 배태한다. 관중은 다시 미디어를 통해서 경기장 바깥으로, 다시 집단적인 기억을 통해서 경기 이후로 확대된다. 스포츠 경기가 표상하는 집단 가운데서 가장 강력한 집단이 국가다. 이는 가장 인기가 높은 스포츠 경기가 국가대항의 성격을 띠는 것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그런데 대부분 스포츠 경기가 성행하기 시작했던 식민지 시기에는 스포츠 경기가 표상하는 집단은 국가라기보다는 민족이었다. 그 단적인 예는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서 손기정 선수의 시상식을 찍은 사진에서 여운형이 사장으로 있던 《조선중앙일보》와 송진우가 사장으로 있던 《동아일보》가 '일장기를 말소한 사건'에서 생생하게 드러났다.¹⁾ 손기정은

※ 투고일: 2012년 11월 22일, 심사일: 2013년 3월 8일, 게재 확정일: 2013년 5월 24일

1) 최인진, 2006, 『손기정 남승룡 가슴의 일장기를 지우다』, 신구문화사

일장기를 달고 일본 선수로서 올림픽에 출전하였지만 조선인에게는 일본인이 아니라 조선인으로 표상되었다.

식민지 시기에 조선인은 조선내지뿐만 아니라 일본이나 만주에도 많이 살고 있었다. 이 가운데 만주에 있는 조선인은 일본제국의 신민인 동시에 만주제국의 신민이라는 이중적 위치에 놓여 있었으며 다시 일본제국의 신민 — 법적인 일본인 — 내에서 ‘내지인’과는 다른 ‘반도인’이라는 위치에 놓여 있었다. 만주국의 조선인이 스포츠 경기에서 민족을 표상하는 방식은 조선인 선수단이나 조선인 선수를 통해서 가능했다. 아예 대부분의 선수와 관중이 조선인인 경우도 있을 수 있었는데 조선인 학교의 운동회나 씨름, 그네뛰기와 같은 민속경기가 그것이었다. 그리고 만주에는 예외적으로 한 지역 전체의 스포츠 경기가 조선인 민족을 표상할 수 있는 지역이 하나 있었다. 그것은 만주에서 유일하게 조선인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었던 간도 지역이었다.

이 글에서는 간도의 스포츠 경기 중에서 축구를 통해 민족주의가 배태되는 사실을 살펴보고자 한다.²⁾ 만주에서 조선인 축구는 학교를 통해서 발전했다. 초기에는 초등학교에서 시작하여 나중에는 중학교 축구가 성행했다. 중학교 축구와 거의 같은 시기에 사회인 축구도 발전했는데 그것은 중학교에 진학하지 못하는 사람들은 바로 사회인이 되기 때문에 중학생과 사회인이 거의 같은 수준을 이루었기 때문이었다.

이 글에서는 만주의 조선인 축구의 발전 과정을 세 시기로 구분해서 살펴볼 것이다. 첫 번째 시기는 1910년대 전반기~1920년대 전반기까지의 시기로 조선인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운동회에서 축구가 하나의 종목으로 발전한 시기였다. 학생들이 졸업한 후에는 학우회와 청년회 조직을 통해서 마을과 학교 대

2) 축구는 다른 어떤 스포츠보다도 많은 국가가 참가하는 구기종목(대항경기)이며 인기(응원 열기)가 뜨겁다. 이 때문에 영국에서 축구가 클럽축구로 발전했으며 오늘날 국내와 국제의 스포츠 리그로 발전해왔다. 축구는 또한 다른 스포츠와 비교해서 적은 비용으로 참가할 수 있다는 점에서 대중적인 스포츠로 발전하였다. 축구 중추국인 영국에서 축구는 19세기 후반이 되면 학생이 아니라 노동자의 스포츠로 자리잡게 되었다.

항 경기로 발전해 갔다. 1910년대 전반기의 ‘간민교육회’와 1920년대 전반기의 ‘청년회’의 사례에서 알 수 있듯이 대체로 중국 지방 당국과 우호적인 상황 아래서 조선에서와 마찬가지로 연합운동회를 통해서 민족주의를 배태할 수 있었다.³⁾

두 번째 시기는 1920년대 후반기와 1930년대 전반기로 1925년 ‘간도체육회’가 설립해서 간도축구대회를 개최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도 첫 번째 시기의 마을과 학교 대항 경기대회가 지속되는 가운데 간도 지역을 아우르는 간도체육대회를 개최함으로써 간도라는 정체성, 곧 민족 정체성을 강화할 수 있었다. 이 시기는 일본영사관이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개입을 함에 따라 중국 지방 당국이 조선인 배척정책을 실시하던 시기다. 이에 간도체육회는 민족성과 친일성이라는 양면성을 띠고 있었다. 간도체육회를 주도한 사람들은 일본 영사관과 우호적인 관계를 유지하였지만 그 활동을 통해서 조선인이 마을과 학교를 넘어서서 조선인 정체성을 확장하는 데 기여하였다.

세 번째 시기는 1930년대 후반기와 1940년대 전반기(사실상 1942년까지)로 조선인 축구 선수들이 간도성 대표로 만주국축구대회에 참가한 시기다. 1934년에 간도성이 길림성에서 분리되어 신설되고 1935년에는 1935년 ‘만주제국체육연맹(이하 만주체육연맹)’을 설립하고 간도성공서 산하에 ‘간도성사무국협의회(이하 간도성사무국)’를 설립하고, 1937년에 민간단체였던 간도체육회를 비롯한 각지의 체육회를 해산시켰다. 이는 체육 활동에 대한 국가의 통제를 강화하는 — 다시 말하면 만주국이라는 국가 정체성을 창출하는 — 것이지만, 조선인은 만주국의 체육 행사에 참가하면서 조선인의 정체성을 확장할 수 있었다. 이 시기에 만주에서 간도를 비롯한 인근 지역에서 조선인 축구 선수들이

3) 일본은 1908년 8월 26일 칙령 제62호로 사립학교령을 공포하여 각 사립학교에서 근국교육에 제재를 가하였다(《대한매일신보》, 1908. 9. 20; 이학래, 1990, 『한국 근대 체육의 연구』, 지식산업사, 82쪽). 일본은 병식체조를 학교체조로 전환하고, 운동회 또는 연합운동회에 대해 탄압을 가하였다(이학래, 1990, 위의 책, 83~87쪽). 1912년 5월 10일에 청파정에서 개최된 경성부내 8개 사립학교(경신, 배재, 보성, 오성, 중앙, 청년회관, 휘문의숙)의 연합운동회 이후 사회체육 성격을 갖는 연합운동회는 영원히 폐지되었다(이학래, 1990, 위의 책, 98~99쪽).

뛰어난 성적을 거두었다. 조선인 축구 선수들은 만주국의 길림성, 목단강성, 신경 등에도 분포되었으며, 만주팀의 조선인 선수가 교류한 일본팀, 조선팀, 중국팀 속에서도 조선인 선수를 만날 수 있을 정도로 조선인 축구 선수가 널리 분포되어 있었다.

이 글에서는 간도에서의 조선인 축구 발전 — 물론 조선인 축구는 조선에서 가장 발전하였다. 그것이 만주에서의 조선인 축구가 발전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다. 간도의 조선인 축구는 조선의 조선인 축구와 교류하고 있었다. 만주의 우수한 선수가 조선으로 축구를 배우러 가거나 조선의 우수한 선수가 만주에 스카웃되었다 — 의 배경에 조선인 민족주의가 배태되어 있었음을 살펴보고자 한다.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한국 체육의 역사를 설명하는 것은 사실 한국 체육사의 주류적인 입장이라고 할 수 있다.⁴⁾ 이 연구는 축구라는 단일 종목의 역사에서, 그리고 간도라고 하는 지역에서의 사례를 통해서 축구의 발전과 민족주의의 배태성을 살펴본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⁵⁾

이 글은 1992년에 출판된 『연변조선족축구운동사』를 주요한 자료로 이용

4) 이하래, 1990, 위의 책. 일본의 경우에는 中村敏雄 外, 1978, 『スポーツナショナリズム』, 大修館書店을 참조.

5) 만주에서 가장 오랜 기간 식민지 상태에 있었던 대련에서도 축구는 민족 — 그리고 물론 성별 — 을 표상했다. 대련의 중국인 초·중등 학생들은 신체적으로 학교에서의 체조 훈련(建國體操)과 각종 의례 참가(허리를 굽혀 절을 하는 鞠躬)를 통해서는 복종을 경험하였지만, 그것과는 대조적으로 거리(지역으로는 중국인 거주지인 西崗子와 중국인과 일본인의 공동 거주지인 沙河口, 그리고 장소로는 老虎公園[현재의 勞動公園]이 중심지였음)에서의 축구 경기를 통해서 저항을 경험할 수 있었다. 1920년에 결성된 중국청년회가 1921년에 중화청년회팀[中青隊]을 발족시켰다. 중화청년회는 1922년부터 중화육상운동대회를 개최하였는데 1926년부터 축구가 종목에 포함되었다. 이때부터 대련의 중국 축구팀이 현지의 영국, 일본, 기타 외국의 축구팀들을 물리치기 시작했다. 중국 축구팀 중에는 工華隊, 隆華隊 등도 있었다. 융화대는 원래 명칭은 正隆銀行中國隊였다. 이들 축구팀 명칭에 나오는 ‘華’는 민족색채를 나타내고 있었다. 1932년에는 대련시축구연맹이 설립되었다. 朱元寶, 1992, 『大連足球運動史料』, 大連市總工會印刷廠; Zheng, Tiantian, 2007, “Embodied Masculinity: Sex and Sport in a (Post) Colonial Chinese City”, *The China Quarterly*, Vol. 190(June); 張洗星, 2000·2001, 「大連足球運動史話(連載)」, 『足球世界』, 2000(24), 2001(1), 2001(3)

하였다(이하 이 책의 인용은 특별히 출처를 밝히지 않고 면수만 표기한다).⁶⁾ 이 책은 연변 조선족의 축구에 관한 자료를 집대성해 놓긴 하였지만 전문적인 연구서는 아니고 공동 저작이기 때문에 체계적이지 못한 점도 있다. 또 1998년에 출판된 『체육사(중국조선민족문화사대계 11)』의 축구 부분의 자료를 보충적으로 이용하였다.⁷⁾ 이 연구에서는 우선 간도 조선족 축구의 발전 과정을 정리하고(2·3·4장) 그것이 어떻게 민족주의를 배태하였는가를 별도의 장에서 설명할 것이다(5장).

II. 1910년대와 1920년대 전반기의 간도의 조선인 축구

한국에서 최초로 축구를 한 사람들은 1882년 6월에 처음으로 인천 제물포에 입항한 영국군함 플라잉 피시호⁸⁾ 승무원들이었다. 이들은 공을 두고 갔는데 이때 아이들이 공을 주워 영국인들의 흉내를 내었다. 7월에는 영국군함 앵가운드호가 다시 입항하여 한성에 들어왔다가 훈련원 공지에서 축구를 했다. 이때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 공차기 놀이를 신기하게 구경하였다. 영국인들이 구경하던 사람들에게 공을 주었다.⁹⁾

한국인들은 학교에서 체육활동을 배워서 운동회에서 시연했다. 일본에서

6) 연변조선족축구운동사편사조, 1992, 『연변조선족축구운동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7)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체육사』, 북경: 민족출판사

8) 플라잉피시(Flying fish)호는 측량선이었는데 6월 9일 임오군란이 발생하자 공사관을 탈출한 일본 공사 하나부사 일행이 6월 12일 새벽에 이 배에 승선해서 나가사키로 갔다(최덕수, 2004, 『개항과 조일관계』, 고려대학교출판부, 102쪽).

9) 이 이야기는 한국 최초의 축구 심판원인 서병의가 부친인 관찰사였던 서승원에게서 직접 들었다고 한다(오재인, 1992, 『미주 땅에 뒹구는 한국인 축구』,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축구협회; 이충삼, 2004, 「국내 축구 도입시기와 전개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3-1, 7쪽).

도 운동회는 먼저 학교 제도의 하나로 자리를 잡았으며 처음에는 花柳(소풍)에서 시작해서 연합운동회를 거쳐 개별 학교의 단독운동회로 발전했다.¹⁰⁾ 조선과 간도의 경우도 대체로 유사하였다. 기록에 나타나는 최초의 운동회는 1895년 4월 18일에 일본어와 체조 등을 가르쳤던 乙未義塾의 6개 학교 학도 300여 명이 훈련원에서 개최한 대운동회였다.¹¹⁾

이보다 더 주목되는 운동회 기록은 1896년 5월 20일 동소문 밖 三仙坪 들판에서 개최된 관립영어학교의 ‘꽃놀이(花柳)’였다. “영어학교 교사와 학도들이 이달 잇흔날 동소문 밖기로 화유를 나갔다가 운동을 하였다.”¹²⁾ 전통적으로 이웃 서당끼리 봄가을에 화류놀이를 벌여 장치기, 줄다리기, 바가지 밟기 등 각종 경기를 겨루었다.¹³⁾ 관립영어학교는 1894년 11월에 육영공원이 발전한 학교인데, 영국에서 교장을 역임한 허치슨이 총교사(교관)였고, 1895년 5월부터 영국인 헬리팩스가 부교사(부교관)로 근무하였다. 1896년 봄부터는 영국인 박스웰이 학생들에게 병식체조를 가르쳤다. 이 운동회가 주목되는 것은 영어 학교에서는 영국에서 발전한 근대 스포츠 종목을 가르쳤는데 그중에는 축구도

- 10) 오성철, 2011, 「운동회의 기억: 해방이후 초등학교 운동회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2-1, 200쪽
- 11) 이 기록은 김윤식의 일기인 『續陰晴史』에 나온다(손환·박상석, 2009, 「한국 최초의 운동회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8-6, 21쪽). 을미의숙은 일본인이 설립한 학교였다(김경미, 1998, 「을미의숙 성격 규명에 관한 소고」, 『한국교육사학』 20). 대일본해외교육회가 1896년 4월에 설립한 경성학당이 1897년 4월에 개최한 운동회의 종목을 보면 달리기, 운동하며 노래하기, 체조 등이 있었다(《독립신문》, 1897. 4. 15, 논설; 김성학, 2009, 「근대 학교운동회의 탄생: 화류에서 훈련과 경쟁으로」, 『한국교육사학』 31-1, 74쪽).
- 12) 《독립신문》, 1896. 5. 5; 설갑석, 1990, 「근대학교체육의 특성 연구: 민족체육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29-1, 143쪽
- 13) 이규태, 1987, 『배짱의 한국인』, 기린원, 1987, 153쪽; 김성학, 2009, 앞의 글, 64쪽. 배재학당의 교사와 학생들이 일주일 빠른 4월 25일에 강가에 ‘화류’를 갔다. 그러나 이때는 소풍 외에 운동을 했다는 기사가 없다(《독립신문》, 1896. 4. 28). 을미의숙이 개최한 운동회를 제외하고 ‘운동회’의 명칭이 가장 먼저 등장하는 것은 5월 31일 훈련원에서 개최된 관립소학교의 연합운동회였다(《독립신문》, 1896. 6. 2; 이태웅, 2005, 「구한말 최초운동회에 대한 이설」, 『한국체육학회지』 44-4, 37쪽).

있었기 때문이다.¹⁴⁾

1897년 6월 16일에 훈련원에서 개최된 영어학교의 대운동회는 최초의 대규모 운동회였다.¹⁵⁾ 이 운동회는 훈련원(현 서울운동장)에서 개최되었으며 총을 멘 학생들이 연병장에서 행진을 한 후에 경기가 시작되었다. 경기 종목은 육상과 여흥적인 것으로서 사람 둘이 세다리 달리기(2인 3각), 동아줄끌기(줄다리기, 12인조) 등이 있었다. 각종 경기가 끝난 후에는 학생들의 군사 조련이 있는 후 대청 앞에서 수상식이 거행되었다. 학생들은 황제폐하를 위하여 만세삼창을 불렀고 학교선생님과 내빈들을 위하여 갓을 벗고서 천세를 불렀다. 이를 보면 우리나라 최초의 학교운동회가 일종의 ‘국가예례’로서 ‘국민’을 만든다고 하는 정치적인 프로그램 측면을 가지고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¹⁶⁾

최초의 축구 경기 형태는 ‘亞式 축구’였다. 1902년 배재학당 특별활동 기록에 따르면 아식 축구는 “인원은 몇 사람이든지 제한이 없고 골문의 높이나 넓이도 명확한 규정이 없이 문지기의 키를 표준으로 했으며 시간제한도 설정되지 않고 있다. 또한 기술에 대한 인식도 없이 차는 것을 잘하는 기술로 알았다.” 평양에서는 1901년에 창립된 평양장로회 신학교가 축구를 가장 먼저 시작하였다.¹⁷⁾ 1906년 3월에 현양운(군내부 예식원 주사, 신봉후, 한상우 등 30명 축구동호인이 대한체육구락부를 창립하여 6월에 동문 밖 永道寺에서 운동회를 개최하였고, 12월에 황성기독교청년회(1903년에 창립됨)와 축구[競毬] 시합을

14) “영어학교 학도들은 근일에 발 공치는 법을 배화 오후면 운동장에서 공을 치는데 …… 《독립신문》, 1896. 12. 3. 논설; 김성학, 2009, 앞의 글, 81쪽)”

15) 관중들은 ‘감격하여 눈물을 흘릴’ 정도로 큰 충격을 받았다(《독립신문》, 1897. 6. 19, 잡보). 대한체육회는 이 운동회를 최초의 운동회라고 한다(대한체육회, 1965, 『대한체육회사』, 39쪽).

16) 김성학, 2009, 앞의 글, 90쪽. 황제 앞에서 체조 또는 운동을 시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다. 한 해 전인 1896년 5월 25일과 6월 23일에 육영공원(영어학교?) 교사 3명과 학생 98명, 그리고 러시아어학교와 프랑스어학교 학생들이 각각 러시아공사관에 가서 고종 앞에서 체조와 운동(육영공원은 체조)을 시연하였다. 육영공원 학생들은 복장과 체조에 대해서 칭찬을 받았고, 러시아어학교와 프랑스어학교 학생들은 체조와 운동을 잘한다는 칭찬과 함께 부상으로 학생마다 부채 2개씩을 받았다. 《독립신문》, 1896. 6. 18, 잡보, 6. 25, 잡보; 이태웅, 2005, 앞의 글, 37쪽

17) 이하래 외, 1994, 『한국근대체육사』, 지식산업사, 191~192쪽

가졌고, 1907년 3월에도 동소문 밖 삼선평에서 운동회를 개최하였다.¹⁸⁾ 1908년에는 보성소학교가 개교 4주년 기념운동회에서 축구경기를 포함했다.¹⁹⁾

1906년 이후에 학교 운동회가 급증하였다. 전 시기와는 다르게 사립학교의 운동회(69%)와 지방에서 개최된 운동회(54%)가 더 많은 비율을 차지했다.²⁰⁾ 이러한 조선에서의 운동회 붐은 간도에서도 약간의 시차를 두고 나타났다. 간도에서는 조선인 사립학교가 설립되면서 축구가 도입되기 시작했다. 1908년에 설립된 명동학교(지신향 장재촌 명동)는 조선에서 온 교원이, 그리고 같은 해 설립된 昌東學校(지신향 장재촌 와룡동)와 1910년에 설립된 彰東學校(덕신향 장동)에서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온 교원들이 축구를 가르쳤다(17쪽).

간도에서는 주로 단오절에 조선인 사립학교가 참가하는 연합운동회를 개최하였다. 최초로 기록에 나타나는 운동회는 1912년 봄 용정에서 동남으로 5리쯤 떨어진 대교동에서 개최된 제1차 간도학생운동대회였다.²¹⁾ “명동학교 수백명 학생들이 북을 치고 나팔을 불면서 줄지어 대회장에 들어서면서 애국가를 높이 불렀다. 이에 호응하여 수천명의 학생과 군중들이 따라 합창하였다.”

1913년 단오날인 음력 5월 5일과 5월 6일에는 명동학교를 비롯하여 32개의 조선인 사립학교에서 국자가 모래사장에서 연합운동회를 개최했다. 이 연합운동회에서는 남자부에서 와룡동의 창동학교가, 여자부에서 명동촌의 명동여학교가 각각 우승을 차지하였다.²²⁾ 다음 기록을 보면 운동회가 어떻게 민족

18) 《대한매일신보》, 1906. 6. 13, 1906. 12. 13, 1907. 5. 29; 이학래, 1990, 앞의 책, 78쪽

19) 이학래 외, 1994, 앞의 책, 192쪽

20) 김성학, 2011, 「근대 학교운동회의 팽창: 그 실태와 동인」, 『한국교육사학』 33-1, 8~9쪽

21) 리홍준, 1993, 「청말 조선인이 꾸린 사립학교(6): 반일민족교육의 선봉 명동학교」, 『연변문사교육사료전집 5』, 徐絃一·東巖 편저, 『間島史新論-선구지와 '친일파'들과의 싸움(1869~1945)』, 우리들의편지사, 176쪽

22) 정예지, 2011, 「1910년대 북간도 조선인학교의 연합운동회」, 『만주연구』 12, 142~144쪽. 원사료는 다음과 같다. 「간도총영사대리가 외무대신에게 올린 보고」, 1913. 9. 11; “북간도 한인학생”, 《국민보》, 1913. 10. 11; “북간도의 대운동회”, 《권업신문》, 1913. 6. 29

적 축제로서 성황리에 개최되었으며 중국 지방 당국의 지원 속에서 이루어졌는가를 알 수 있다.²³⁾

“명동중학교는 80리나 되는 거리를 5월 4일에 도보로 출발하여 다음날 국자가에 도착하였으며 원근 각처에서 모인 중·소학교 학생과 군중이 무려 1만 5천명이나 되어 대성황을 이루었다. 더욱 장관을 이룬 것은 수십교에서 曲呼手(나팔수)와 소고와 대고가 동원되어 그 수가 4백여 명이었다. 넓은 모래사장에는 각 학교가 지정된 자리에 자리잡고 정렬하였다. …… 개회함에 있어 먼저 광복가(애국가를 일부 고친 것)를 제창하고 회장(김영학, 부회장은 명동학교 교장인 김약연이었음)의 개회사가 있는 후 곡호수와 洋鼓手(북치는 사람)들을 선두로 중·소학교 학생들이 대회장을 행진하며 돌았다. 이때 곡호수들이 軍曲(행진곡)을 취주하였는데 관중들이 흥에 겨워 춤을 추며 환호성을 올렸다. …… 입장식이 끝나고 경기가 시작되자 사면에서는 응원가를 목이 터져라 불렀다. 때로는 학도가와 한산도가를 불렀다. …… 폐회식은 국자가 시가 행진을 마치고 거행하기로 하여 …… 곡호수와 대고수가 선두에 서서 군곡을 불며 행진하는 뒤를 학생들이 보무도 당당하게 행진하였고 관중들은 어깨춤을 추며 이를 따랐다. 중국 상인들은 폭죽을 터뜨리며 화답하여 주었다. …… 행렬이 연길현공서 앞에 이르렀을 때 현장이 참석한 가운데 명년에도 이 대회를 개최할 것을 결의하였다.”

1914년에도 연길 국자가에서 수백 명의 교사와 학생이 참가하는 운동대회를 개최하였다. 조선인 학생들은 한복을 입고 참가했다.²⁴⁾ 이 시기 운동회의 성격에서 민족성이 두드러지는 것은 운동회를 소집한 주체가 일종의 조선인 자치기관이었던 ‘간민교육회’였기 때문이다. 1915년(을묘년) 3월 20일에 간민교

23) 국사편찬위원회, 1983, 『한국독립운동사』 1, 524쪽; 설갑석, 1990, 앞의 글, 147쪽

24) 리진, 1993, 「민국초기 관립학교(2): ‘5·4운동’ 이전의 연길교육」, 『연변문사교육사료전집 5』, 徐紘一·東巖 편저, 앞의 책, 176쪽. 1914년 11월 통계에 따르면 연길현 국자가에는 중국인학교 5개소, 사숙 5개소, 조선인 사립학교 13개소, 사숙 16개소에 학생이 포함 807명이었다.

육회가 간도의 각 학교에 보낸 통지서를 보면 다음과 같다.²⁵⁾ “5월 5일 단오를 기회로 하여 전 간도 조선족학생 운동회를 국자가에서 개최하오니 귀교에서도 이 운동회에 참가하여 주시기를 바랍. 운동종목은 여하함. 보도경주, 멀리뛰기, 높이뛰기, 장대높이뛰기, 2인 3각, 3인 4각, 탈모경주, 장애물경주(18쪽).”

운동회에서 진행된 운동 종목은 경기성보다는 유희성에 치중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운동회가 단오라는 민족 명절에 개최된 데서 알 수 있듯이 운동회 참가자 사이의 민족적인 결속을 강화하기 위한 것이었다. 그런데 이 결속은 자주 반일 감정으로 표출되었다. 운동회장에 걸린 만국기에는 일장기가 없었다. 1914년 운동회의 한 종목이었던 포대 공격 경기에서는 일본군을 남군, 조선군을 북군으로 삼아 북군이 통쾌하게 승리하는 장면을 연출했다.²⁶⁾

1916년 단오절에는 용정 수신촌 학교의 운동회에서 그네뛰기, 씨름, 널뛰기 등과 함께 축구가 운동 종목에 포함된 것이 확인된다. 구경꾼이 많이 모인 기회를 틈타 운동장은 반일선전의 장이 되었다(21쪽). 1917년에는 용정촌과 두도구로 나뉘어 연합운동회를 개최하였다. 용정촌운동회에는 모두 16개 학교가 참가하였다. 일본 헌병대의 조사에 따르면 확인이 가능한 7개 학교 가운데 명동, 창동, 청호, 양성, 광동학교는 개신교 학교였고, 흥동, 덕흥학교는 천주교 학교였다. 두도구 운동회에는 모두 27개 학교가 참가하였다. 23개 학교는 제1사립소학교, 제2사립소학교 등과 같이 중국식 학제에 따른 명칭이었고 조선식 학교 명칭은 영신, 영실, 승신, 광신, 광성학교 등 5개 학교였다. 이 중에서 영신, 영실, 광성학교는 개신교계이고 운동회에서 우승을 차지한 광신학교는 천주교계로 확인된다.²⁷⁾ 학교운동회의 열기는 1930년대까지도 계속되었고,²⁸⁾ 운

25) 김중, 『간도 15만원사건』(소련 출간); 연변조선족축구운동사편사조, 1992, 앞의 책, 18쪽. 간민교육회는 1910년에 설립되어 1913년 2월에 간민회로 발전하였다가 1914년 3월에 공교회가 설립한 농무계와 충돌하여 해산되었다. 1915년 단오절 운동회를 주최한 간민교육회는 확인할 수 없다.

26) 정예지, 2011, 앞의 글, 145쪽

27) 정예지, 2011, 위의 글, 141~142쪽

28) “1935년에 6도구운동장에서 개최된 안동조선인학교의 운동회에도 수천명의 관람자가 모였다”(『盛京時報』, 1935, 5. 26;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체육사』,

동 종목도 그다지 변하지 않았다.²⁹⁾ 그러나 점차 체육 행사에서 유희성보다는 경기성이 강조되어 갔다. 대표적인 경기 종목이 육상과 축구였다.

1915년에 연길도윤 陶彬이 ‘劃一墾民教育辦法’을 시행함에 따라 조선인 학교는 중국 교육당국의 통제를 받게 되었다. 그런데 그 규정 중에는 과외체육 활동 장려, 체육정관 제정, 체육부 설립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조선인 학교에서 축구가 발전하는 데 유리한 환경으로 작용하였다. 당시 학생들은 흰 광목천으로 머리를 질끈 동여매고 축구를 하였다(20쪽). 혼춘에서는 1917년 설립된 북일중학의 소재지인 대황구가 축구 발전의 중심지가 되었다(21쪽).

1920년 ‘경신대토벌’로 용정의 명동중학교가 불에 타지만 이듬해에 재건되었다. 1920년대 초에 용정에는 여러 개의 중학교와 여자중학교가 설립되어 간도 교육의 메카가 되었다. 이들 학교는 은진중학교(1920, 캐나다장로회),³⁰⁾ 영신중학교(1921, 캐나다장로회),³¹⁾ 동흥중학교(1921, 천도교),³²⁾ 대성학교(1921, 대성유교공교회) 등이었다.³³⁾ 1924년에 영신중학교는 일본 정토종단체인 광명회가 인수하여 광명중학교로 개명하였다.³⁴⁾

북경: 민족출판사, 15쪽).

- 29) 하나의 예를 보자. 1925년 10월 15일에 광명회가 주최한 광명중학교와 영신중학교의 연합운동대회에서의 운동종목은 도수체조, 가발 빼앗기, 달리기 굴렁쇠돌리기 릴레이, 풍금체조, 소식전달경기, 실 감기, 등교경기, 눈 가리고 사람 맞히기, 대포 릴레이, 인형의 노래, 계산 경주, 과자 따기 경주, 枯木生花, 비둘기경쟁, 공을 연락하며 이어달리기, 물건 줍기 경주, 기마경주, 눈가리고 공 줍기, 증량물운반경기 등이었다(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위의 책, 16쪽).
- 30) 같은 캐나다장로회 계통의 여학교로 1913년에 설립된 명신여학교가 있었다.
- 31) 1912년에 캐나다장로회가 1909년에 설립한 광동의숙을 인수하여 영신학교로 개명하고, 1914년에 부설 영신여학교를 설립했다. 竹中憲一, 2000, 『滿洲』における教育の基礎的研究』, 東京: 柏書房, 204쪽
- 32) 1913년 천주교계 학교로 동흥학교를 설립하였는데 1921년 4월에 천도교가 인수하여 천도교총리원으로 하고 우선 동흥소학교를 설립하고 부설로 중학강습반을 두었다가 10월에 동흥중학교를 주로 하고, 동흥소학교를 부속으로 했다(竹中憲一, 2000, 위의 책, 208쪽).
- 33) 竹中憲一, 2000, 위의 책, 210쪽
- 34) 광명회는 1922년에 광명여학교와 광명여학교, 광명유치원 등을 설립하였고 1923년에는 광명학원사법부를 설치하였다. 이 외에 수양단, 여자청년회, 일요아동회를 조직하여 사회교육을 실시하였다. 1931년에 재단법인 광명학원을 설립하고 7개 학

1922년부터는 간도에서 사회주의운동이 발전하기 시작하면서 조선족이 모여 사는 마을에서는 학교의 학우회 설립과 더불어 국자가청년회, 동진청년회, 기양청년회, 약수청년회, 두도구청년회, 대흥청년회 등 16개 청년회가 조직되었다. 나중에 연변대학교 총장을 역임한 임민호가 1922년에 동흥중학에다 동구(東球)청년회를 설립하고 문예활동과 체육활동을 전개하였는데 축구운동회에서는 반일성격을 띤 응원가를 마음껏 부르게 하고 운동회를 이용해서 반일 선전 활동을 전개하였다고 한다(23쪽).

1923년 5월 20~21일까지 조선일보사 지국의 주최로 용정에서 7개 사립학교가 참가하는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참가한 학교는 해성중학(1915년 화룡 대립자에 독일인 가톨릭 신부가 설립), 동흥중학, 대성중학, 명동중학, 구산중학, 은진중학, 영신중학 등이었다. 은진중학교와 영신중학교가 결승전에 올랐는데 경기 도중 영신중학교팀이 심판의 결정에 불복하고 난동을 피우자 경찰이 출동하여 일본영사관에서 우승기를 보관하였다. 다음 날 우승기를 넘겨받은 은진중학교 교원과 학생들이 대열을 지어 관악대를 앞세우고 우승기를 들고 시가행진을 하였다. 이 소식을 듣자마자 영신중학교 학생들이 거리에 뛰쳐나와 은진중학교 행렬과 충돌하였다. 유혈폭행사건이 발생하여 수명의 학생들이 주모자로 경찰에 체포되었다(29쪽).

화룡현에서 개최된 운동회는 대체적으로 2개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하나는 현립학교 계통의 운동회로 쌍십절에 대립자(지신항 소재지이며 현소재지)에서 개최되었다. 다른 하나는 사립학교 계통의 운동회로 대부분 팔도하자(화룡육항)에서 개최되었다. 각 운동회에는 다른 계통의 학교들도 참가하였다. 사립학교 계통의 운동회는 1921년부터 연속 3년이나 거행되었다. 제1차 운동회는 대립자에서 거행했고 그 후의 두 차례의 운동회는 모두 팔도하자에서 거행하였다. 두 계통의 실력을 비교하면 사립학교 계통이 더 뛰어났다.³⁵⁾

교를 사범부, 중학부, 소학부, 실천여학부, 고등여학부, 어학부로 통합해서 운영했다. 중학교, 고등여학교, 소학교는 제외지정교의 인가를 받았다(竹中憲一, 2000, 앞의 책, 107~110쪽).

35) 리봉구, 1993, 「청말 조선인이 꾸린 사립학교(2): 동신학교 35년」, 『연변문사자료

1923년 6월에는 대립자에서 화룡현축구대회가 개최되어 명동학교, 현립제1소학, 해성학교, 덕흥학교, 현립제7소학(장동학교) 등이 참가하여 현립제7소학이 우승하였다(30쪽). 이해 8월에 용정의 신흥청년단과 靑友獎學會가 각각 축구팀을 조직하여 조선의 나남과 북청에 원정하여 우승기를 들고 귀향하였다.³⁶⁾ 같은 용정에 있는 명동학교와 장동학교(창동학교?)는 매년 두 차례 친선 경기를 갖기도 했다. 창동학교와 명동학교가 자웅을 겨루는 경우가 많았는데 대체로 창동팀이 이길 때가 많았다.³⁷⁾ 운동회가 있을 때마다 소년팀 축구경기가 구경꾼을 가장 많이 끌었다.³⁸⁾

III. 1920년대 후반과 1930년대 전반기의 간도의 조선인 축구

1924년에 중국 정부가 만철부속지의 교육권 회수를 명목으로 '조선족학교폐제 조례'를 공포하여 조선족 사립학교를 제한하거나 폐교시킨다는 방침을 정하였다. 이에 간도의 조선족사립학교들은 '획일간민교육관법'의 규정대로 중국인 교원을 초빙하고, 중국 정부가 편찬한 교과서를 사용하며 조선인교육독찰원을 두고 학교를 향공립으로 고칠 수밖에 없었다.³⁹⁾ 이 과정에서 명동중학교(1924년 갑자년 흥년으로 1925년 폐교됨) 등 일부 학교는 문을 닫고 일부 학생들은

5 교육사료전집』, 徐紘一·東巖 편저, 앞의 책, 153쪽

36)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앞의 책, 60쪽

37) 장골(長洞) 앞고개 너머에 있는 장재촌에 명동학교가 있었다(김광희, 「청말 조선인이 꾸린 사립학교(5): 창동학교의 지난날을 그리며」, 『연변문사자료 5 교육사료전집』, 徐紘一·東巖 편저, 앞의 책, 162쪽). 1935년 용정에서 개최된 제5회 전간도 축구대회에서 장골(창동학교)팀이 우승을 한 것은 이런 실력과 전통이 있었기 때문이었다(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앞의 책, 12쪽). 다른 자료에는 4월에 간도 체육회가 간도성축구대회를 개최했다고 한다(56쪽).

38)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위의 책, 12쪽

39) 이 조례는 동북 지방정부가 국민당의 북벌에 호응하면서 취소되었다(33쪽).

중국 정부에서 설립한 관립, 현립, 향립 등 학교에 진학하게 되었다. 이런 이유로 1924년에는 축구운동회는 중지되지 않으면 안되었다(30~31쪽).

1925년에 연길도운 도빈이 '조선족학교폐제조례'를 적극적으로 실시하려고 하자 조선인들은 반폐제·반구축운동을 전개하였다. 나중에 동북지방정부가 국민혁명군의 북벌에 호응하게 되면서 조례가 취소될 때까지 조선인과 중국 지방 당국이 갈등을 겪었다(33쪽). 간도에서의 조선인 체육 행사는 중국 지방 당국과 간도일본영사관의 양쪽의 허가를 받아야 했다. 1925년 6월 24일(800명 참가)과 25일(1,600여명 참가)에 노두구에서 9개 학교의 423명 선수가 참가한 연합운동회를 마치고 26일에는 씨름경기가 개최되었는데, 간도영사관경찰서가 마적을 체포한다는 구실로 강압적으로 경기를 중단시킨 일이 있었다.⁴⁰⁾

그러나 간도일본영사관 세력은 조선인과 충돌만 한 것이 아니었다. 그들은 중국 정부 당국과 조선인 학교가 충돌하는 틈을 타서 사립학교보다 조건이 우월한 보통학교를 각지에 설립하고, 곤경에 빠지게 된 산간벽지의 일부 학교들에 대해서는 '보조'를 제공해주었다. 이러한 일본의 유화정책으로 인해서 조선인 사회가 일시적으로 안정을 유지할 수 있게 되었으며 이것이 학교에서의 축구 발전에 일부 유리한 조건으로 작용하기도 했다(31쪽).⁴¹⁾

체육활동은 학교에서 운동회 형태로 시작해서, 청년회가 주최하는 운동회로 발전하고, 다시 체육회가 주최하는 체육대회로 발전하였다. 마을 사이에 청년회를 통해서 진행되던 체육교류 활동을 토대로 해서 1925년 초에 용정에서 '간도체육회'가 설립되고 같은 해 5월에는 연길에서 '연길체육회'가 각각 설립되었다. 간도체육회의 회장에는 간도홍업주식회사(만주국 수립 이전 간도에서

40) 《間島新報》, 1925. 6. 30;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앞의 책, 15쪽

41) 하나의 예를 보자. "조선인 측에서는 돌아오는 음력 단오절을 계기로 연중행사의 하나인 씨름대회를 개최해야 하며 총영사관 경찰서와 상부국 공안국에 허가서를 제출하였는데 총영사관 경찰서측에서는 허가하였지만 상부국 공안국에서는 계절로 인하여 용납하기 어렵다고 허가하지 않았다(《간도신보》, 1929. 6. 21; 김경춘·김영웅, 2009, 「일제강점기 간도 체육 및 스포츠 변천과정-간도신보의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20-1, 870쪽).

가장 큰 조선인 금융기관이었음) 사장인 강재후가 취임하고 비서에는 유명한 이 취임했다(28쪽). 이후 간도체육회가 주로 단오절 시기에 축구·육상·씨름·그네뛰기를 중심으로 하는 대회를 주최하였다.⁴²⁾

1925년 5월에 간도체육회가 연길 국자가에서 제1회 간도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⁴³⁾ 대회는 키를 기준으로 하여 청년조와 소년조로 나누어 진행하였다. 소년조에서는 영신소학교팀이, 청년조에서는 국자가간민학생친목회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6월에는 용정에서 청우장학회가 주최하는 간도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 이 대회에는 소년조에는 영신소년팀, 예수교영신소년팀, 동흥소년팀, 보광소년팀 등이 참가하여 영신소년팀이 우승을 차지하고, 사회청년조에는 영신청년팀, 국자가청년팀, 영신졸업생학우팀, 동흥교우회팀, 동흥대성연합회학우회팀, 동산팀, 은진학우회팀 등 7개 팀이 참가하여 동흥교우회팀이 우승을 차지했다(31·35쪽). 같은 해 대립자에서 개최한 축구대회에서는 동신학교가 현립 제2소학교(양정학교)를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⁴⁴⁾ 단오절(6월 25일)에는 왕청현 백초구에서 13개 팀이 참가한 사회축구대회가 개최되어 의란구팀이 우승을 차지했다(36쪽).

1926년 단오절(5월 26일)에 간도체육회가 용정시민운동장에서 제2회 간도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대회조직은 회장, 심판부, 사교부, 경기부, 위생부 등으로 조직되었다. 소년부에 10개 팀, 청년부에 5개 팀이 참가했다. 29일에 동흥 대 명신의 여자농구와 동흥 대 은진의 남자농구가 끝난 뒤 열린 청년부 결승전에서 동흥이 은진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 30일에는 장남소년팀(남양평)과 영신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했다.⁴⁵⁾ 소년조에는 동산소년팀, 국자가

42) 김경춘·김영웅, 위의 글, 870쪽

43) 의란구 북동 고성자 소재지의 한 중국인학교(공립학교)의 운동회에서는 교장, 조선 인교원 3명, 남학생 70명, 여학생 8명이 부근에서 모여든 300여 명의 관중들과 중국인 교원 유지원의 선창으로 독립가를 높이 불렀다(《間島新報》, 1925. 7. 1;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앞의 책, 15~16쪽).

44) 리봉구, 1993, 앞의 책, 154쪽

45)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앞의 책, 12~13쪽. 간도체육회는 축구대회 외에도 많은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예를 들면 1927년에 제2회 간도육상경기대회와 남

승신소년팀, 광일소년팀, 동아소년팀, 영신소년팀, 연일소년팀, 영실소년팀, 동룡소년팀, 현립제2소학교팀 등 10개 팀이, 그리고 청년조에는 영신학우회 팀, 대동학교팀, 경성동우친목회팀, 은진학교팀, 국자가사범팀 등 6개 팀이 참가하였다(32쪽).⁴⁶⁾

우승팀인 동흥중학교 축구팀(25명, 김영화 감독, 김구현 간사)은 1926년 6월 15일에 평양관서체육회가 주최하는 제2회 조선축구대회에 참가하였다.⁴⁷⁾ 이들은 6월 22일 첫 경기에서 평양광성고등학교팀에게 1대 3으로 패하여 탈락했다. 이후 동흥학교팀은 안주, 정주, 선천, 신의주 등 지방을 돌아다니며 친선 경기를 하고 서울 휘문중학교 운동장에서 전조선축구팀과 친선경기를 가져 2대 2로 비겼다(32쪽).⁴⁸⁾

1927년 5월 16일부터 18일까지 용정청년연맹이 여러 학교 사이의 단결을 도모하기 위해서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청년조에서는 은진중학, 대성중학, 영신중학(영신중학은 1924년에 광명학원에 인수되어 광명중학이 됨), 동흥중학, 성립 제4사범학교, 연길직업학교 등이 참가하여 성립 제4사범이 우승을 차지하였다(34쪽).

1928년 5월에 연길체육회가 연길에서 국자가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소년조에는 봉명소학, 창동소학, 동흥소학, 투도소학 등이 참가하였고, 청년조에는 대성중학, 동흥중학, 화전, 소방조, 산시 등이 참가했다. 소년조에서는 창동소

녀중학교농구대회를 동시에 개최하였다. 1931년에는 전간도농구선수권대회를, 1932년에는 전간도정구대회를, 1935년 제1회 마라톤대회를, 1937년에는 제1회 전간도빙상경기대회를 각각 개최하였다(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위의 책, 12~13쪽).

46) 같은 6월에 '이란구구통령시민회'가 개최한 축구대회에서는 사립진명학교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이 대회에는 이란구민회립학교팀, 현립학교팀, 조선인학교팀, 현립제3소학교팀 등이 참가했다. '백초구청년회'가 개최한 축구대회에는 소년조에는 9개 팀이, 청년조에는 4개 팀이 출전하여 소년조는 소백초구북부소년팀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청년조 경기는 대혼란 속에서 끝내 결과를 보지 못하였다(33쪽).

47)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앞의 책, 43쪽

48) 동흥중학교는 '간도축구단', '간도동흥군'으로 지칭되었다(《시대일보》, 1926. 7. 9; 7. 12).

학교팀이 제비뽑기를 하여 우승을 차지하고, 청년조에서는 대성중학팀과 동흥중학팀이 결승전을 치르는 중 동흥중학팀이 심판 판결에 불복하여 경기가 중단되자 대회 측이 대성중학팀에 우승기를 수여했다(34쪽).⁴⁹⁾

동흥중학팀(15명, 엄정덕 감독)은 1927년 9월에도 조선을 친선 방문하여 세 차례 친선경기를 가졌다. 22일에는 연희전문팀에게 3대 4로 지고, 24일에는 배재중학팀에게 2대 3으로 지고, 25일에는 경신중학교팀과 0대 2로 전패를 당하였다(46쪽). 그러나 동흥중학팀이 상대로 한 조선의 팀들이 당시 조선 최고의 팀임을 감안하면 상당한 수준이었음을 알 수 있다.⁵⁰⁾

간도체육회가 용정시민운동장에서 1929년 추석과 1930년 단오절에 간도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1930년 축구대회는 사회조, 중학조, 소년조를 나누어서 진행하였는데 사회조는 명동팀이, 중학조 우승은 은진중학팀이, 소학조 우승은 동흥학교팀이 각각 차지하였다. 삼성동, 대립자, 고령위자, 국자가, 소영자, 훈춘 등 농촌 각지에서도 민간단체가 주최하는 단오절 축구대회가 개최되었다(55쪽). 1931년 단오절에는 용정체육회(간도체육회?)가 사회조와 중학조가 참가하는 전간도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44쪽).

이와 같이 큰 규모의 축구경기는 간도체육회가 주최하고, 마을과 학교 단위의 소규모 축구경기는 청년회, 시민회, 학우회 등에서 주최하였다.⁵¹⁾ 학생들이 상급학교로 진학하고 다시 사회에 진출함에 따라서 축구경기가 소년조, 중

49) 같은 해 추석에는 화룡현 학교계통의 축구대회가 개최되었고, 같은 9월에는 '남양평조선인주민위원회'가 10개 팀이 참가하는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명동팀이 청년조에서, 호천팀이 소년조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35쪽).

50) 동흥중학축구팀 선수는 정태록, 강의현, 최기남, 이춘민, 김우호, 이영광, 김정구, 강주호, 송세송, 윤출길, 김성세, 박근복이었다(46쪽).

51) 청년회 등이 주최하는 농촌에서의 축구대회의 사례를 보자. 1926년 2월에 두도구 청년회가 축구대회를 개최하였고, 9월에는 남양향가시민회가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 대회에는 9개 팀이 참가했는데, 남양촌축구팀이 우승을 차지하고, 구룡평동진청년회팀이 준우승을 차지했다. 1928년 5월 화룡현석건향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하였고, 단오절에는 대립자에서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1929년 3월에는 송신학교 졸업식을 계기로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는데 국자가점원회축구팀과 간민학우회 축구팀의 경기에서 심판 문제에서 말썽이 생겨 경기가 중단되었다(36쪽).

학조, 사회조(청년조)로, 다시 말하면 학교에서 사회로 파급되었다. 축구경기의 중심지는 학교가 몰려 있는 도시였다. 청년회 체육부 등도 여전히 각종 체육대회를 개최했다. 하나의 예를 들면 ‘근우회 용정지부’가 1930년 단오절에 대성학교 운동장에서 간도에서 최초로 그네뛰기경기를 개최하였다.⁵²⁾

이렇게 된 데에는 간도 조선인의 민족 정체성의 형성과 함께 1925년 무렵부터 나타나는 조선총독부와 일본외무성의 이중적인 관할을 받는 간도의 일본 영사관의 개입이 있었음을 지적할 필요가 있다. 간도체육회가 설립되던 시기는 중국인 당국과 조선인이 대립하던 시기였으며 이에 일본 정부가 조선인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만주에 개입하던 시기였다. 일본영사관은 자금을 많이 투여하여 만주 도처(주로 간도와 만철부속지)에 보통학교를 설치하고 조선인 사립학교에 대해서도 재정 보조를 실시하였다. 이는 1924년 중국 정부가 만철부속지의 교육권을 회수하는 것을 이유로 간도 각지의 조선족 학교들을 제한하거나 폐교시킨 데 대한 대응이었다.

만주국 수립 이후에도 한동안 간도체육회 등이 주최하는 체육대회 형식은 그대로 유지되었다. 이미 간도체육회 자체가 친일인사로 구성된 친일단체로 분류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용정체육회(간도체육회?)가 1932년 단오절에 용정에서 간도성 제1차 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용정시민팀과 용정학생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10월에는 간도체육회가 용정시민운동장에서 천도학생대표팀 등 5개 팀이 참가하는 축구대회를 개최하였다. 10월 15일에는 용정체육회가 중·소학교축구대회를 개최했다(45쪽). 1933년에 개최된 간도성축구대회에서는 연길시민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1935년은 간도체육회와 연길체육회가 각각 창립 10주년을 기념하는 간도 체육대회와 간도성축구대회를 각각 개최하였다. 추석에 개최한 간도체육대회의 임원을 보면 회장은 용정총영사관 영사, 부회장은 간도일보사사장, 총무는

52) 근우회의 하부조직인 용정(여)우회 주최로 6월 2일부터 3일간 진행되었다. 김경훈·김영웅, 2009, 앞의 글, 874쪽. 용정의 김성숙(25세)이 1등을 하고 동흥촌의 박현(연)숙(28세)이 2등을 하였다(13쪽). 《間島新報》, 1930. 6. 13;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앞의 책, 12쪽

대부분 일본에 아첨하는 자, 심판부는 체육교원으로 구성되었다. 씨름과 그네 뛰기 종목에서 조선인이 모두 우승을 차지한 것은 당연했다.⁵³⁾ 간도성축구대회는 10월 26일부터 27일까지 연길보통학교 운동장에서 개최되었다. 소년조 6개 팀을 포함하여 모두 11개 팀이 참가했는데 명진학교팀이 소년조에서 우승을 차지하고 용정팀이 청년조에서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46·58쪽).

조선인 축구가 발전하게 된 토대는 조선인 마을과 학교에서 축구 열기가 높았기 때문이었다. 축구경기는 주로 민족의 명절인 단오와 추석에 각 마을에서 개최되었다. 그런데 마을 간 경쟁이 비교적 심하였던 탓에, 자기 마을의 명예를 위하여 도시와 학교의 우수한 선수들을 초빙해 오기도 했다(36쪽). 마을 대항은 또한 초등학교 대항이기도 했다.⁵⁴⁾ 경기의 규모는 대항 단위의 규모에 따라서 커졌다. 도시에서는 주로 중학교 간 대항전이 벌어졌다. 특히 조선인 중학교가 집중되어 있는 용정에서 축구경기가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었다. 하나의 예를 보면 만주사변 후 간도의 축구장 시설을 보면 용정에 16개, 화룡에 10개, 도문에 5개, 왕청에 5개, 훈춘에 3개, 안도에 1개, 연길에 2개가 있었다(43쪽).

53)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위의 책, 73쪽

54) 1933년에 토문자학교에 입학한 한 사람의 회고를 보자. “누군가가 축구공 하나를 학교에 기부해서 우리는 매일 축구를 즐겼다. 거의 맨발로 공을 치는 것이었다. 이 웃마을에서 축구대회를 열고 초청해서 우리 학교도 소년팀을 조직하여 참전했다. 그런데 가서 대회 축구공을 보니 우리가 차던 공보다는 좀 작은 공이었다. 알고 보니 우리가 차던 공은 축구공이 아니라 농구공이었다. 농구공을 연습한 것이 도움되었는지 우리 팀은 잘 차고 잘 뛰고 해서 우승을 해 우승기를 받아가지고 돌아왔다(이상철, 2010, 『열린 세계를 가진 나그네』, 기독교장로회출판사, 앞의 책, 31쪽).”

IV. 1930년대 후반기와 1940년대 전반기의 간도의 조선인 축구

간도에서 간도체육회가 활동한 것은 간도의 조선인은 만철부속지의 일본인이거나 조선인과 마찬가지로 만주국에서 치외법권을 인정받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1934년 3월 만주국을 만주제국으로 고쳐 부르고 1934년 12월에 간도성을 설치한 후인 1935년 4월에는 간도성공서 산하에 ‘만주체육연맹 간도성사무국’을 설립하였다. 간도총영사가 회장을, 간도일보사 사장 선우일이 부회장을 역임하였으며, 친일세력이 총무부직을 맡고, 체육교사들이 심판부직을 맡았다(42쪽). 1937년 5월에는 각지의 민간체육회를 해체시키고,⁵⁵⁾ 관변체육회로 대체하였다. 관변체육회에는 현장 또는 참사관, 가장 또는 부가장이 임원을 담당했다.

간도성사무국이 1935년 추석에 제2차 간도성축구대회를 용정시민운동장에서 개최하였다.⁵⁶⁾ 비호단, 자운단, 동흥중학, 은진중학, 동흥중학 등 5개 팀이 참가하여 동흥중학이 우승을 차지하였다. 이 대회에서는 다른 대회와는 달리 참가팀이 5원을 기금으로 납부해야 했다. 동흥중학팀은 1936년 9월에 경성을 방문하여 연희전문과 3대 4로 지고, 배재중학에 2대 3으로 지고, 경신중학에 0대 1로 졌다.

1936년 9월 30일부터 10월 1일까지 용정에서 제3차 간도성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이 경기에서는 사회조와 중학조를 합쳤는데 대성중학A팀이 은진중학을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예선 경기에서는 은진중학이 연길시민팀을 2대 1로 이기고, 국방청년팀이 도문팀을 3대 1로 이기고, 팔도하자팀이 동흥중학팀을 3대 0으로 이기고, 대성중학A팀이 우시장팀을 7대 6으로 이기고, 대성중학

55) 1937년 4월에는 간도체육회, 용정체육협회, 도문체육협회 등을 해산시켰다(《間島新報》, 1937. 4. 27;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앞의 책, 19쪽).

56) 간도성사무국이 아니라 간도체육회가 주최했다는 자료도 있다(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위의 책, 13쪽). 그렇다면 앞서 간도체육회가 개최한 간도체육대회와 동일하다.

B팀이 제비뽑기로 돈화팀을 이겼다. 준결승전에서는 은진중학팀이 국방청년팀을 3대 2로 이기고, 대성중학A팀이 팔도하자팀을 2대 1로 이기고, 은진중학이 대성중학B팀을 이겼다. 대성중학교팀은 10월 10일에 조선방문을 마치고 귀국한 동흥중학팀과 경기를 가졌다(46·58쪽).

1938년 8월에는 부산소학교 운동장에서 간도성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중학조에서는 동흥중학이 우승을 차지했다. 1940년 9월에는 용정체육협회가 광명국고 운동장에서 용정지구축구대회를 개최했다. 중학조에서 광명국고가, 그리고 사회조에서 용정학우팀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만주국 수립 이후에는 체육행사는 단오절 무렵에 각지에서 개최되는 건국기념대운동회와 가을에 신경에서 개최된 만주국체육대회로 대별되었다. 전자는 운동회의 형식인 반면에 후자는 선수권전이었다. 그리고 전자는 후자에 출전할 선수를 선발하는 선발전의 의미도 띠고 있었다.⁵⁷⁾ 두 체육 대회에 모두

〈표 1〉 역대 간도성축구대회 성적

개최 날짜	우승 팀
1935. 6. 5~7	회령팀(초청팀, 청년조), 대성중학(중학조)
1936. 6.	청진팀(초청팀)
1937. 6. 14	연길시민팀(사회조), 광명중학(중학조), 해성소학교(소학조)
1938. 6	용정시민팀
1939. 6	두도구팀(사회조), 연길국민고등학교(중학조)
1940. 6. 1	용정 장동팀(사회조), 광명국민고등학교(중학교)
1941. 5	기록 분실
1942. 6	연길팀(사회조)

출전: 연변조선족축구운동사편사조 편, 1992, 『연변조선족축구운동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46~48쪽, 60쪽, 62~63쪽.

주: 연길 부산소학교운동장에서 개최되었음.

57) 1935년에 개최된 간도성건국기념대운동회의 축구 경기를 예로 들면 경기 결과 최동현, 강학운, 최세홍, 황동수, 이길덕, 김춘식, 정수일, 박주환, 최창선, 박경민, 박광춘, 박동규, 김응호 등이 간도성 축구선수로 선발되었다(57쪽).

축구 종목이 있었다.⁵⁸⁾ 먼저 간도성건국기념대운동회 일환으로 개최된 역대 간도성축구대회의 성적으로 살펴보자. 현재 확인되는 성적은 <표 1>과 같다.

1940년에는 간도성사무국과 민생청이 공동으로 개최했다. 청년단 10개팀, 중학단 9개팀이 참가했다.⁵⁹⁾ 청년단에서는 장동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장동팀은 1938~1940년에 팔도하사에서 개최된 축구대회에서도 번번이 우승을 차지하는 강팀이었다(60쪽). 중학단에서는 광명국고가 은진중학을 물리치고 우승을 차지하였다(62쪽).⁶⁰⁾

이제 전국대회에 대해서 살펴보자. 먼저 만주제국축구협회가 개최한 만주도시대항축구대회(또는 도시선수권대회)에서의 간도팀의 성적을 살펴보자. 간도팀은 1935년 제2회에서 1937년 제4회까지 3연패를 차지했다(<표 2>).

<표 2> 만주도시대항축구대회에서의 간도팀의 성적

개최 날짜	예선전	준결승	결승
1935. 6. 29~30		하얼빈(5:4)	심양(1:0)
1936. 7		하얼빈(5:4)	봉천(1:0)
1937. 8. 4	하얼빈(2:1)	길림(9:0)	대련(3:0)

출전: 연변조선족축구운동사편사조 편, 1992, 『연변조선족축구운동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57·60쪽.

주: 신경 남명운동장에서 개최되었음.

제2회 대회는 신경, 하얼빈, 간도, 안동, 봉천, 길림 등 6개 팀이 참가하였다. 다른 팀의 성적을 보면 심양이 길림을 3대 0으로 준결승전에서 눌렀다. 대회 직후인 8월에 만주국체육연맹 초청으로 와세다대학팀이 만주에 와서 간도성팀, 신경팀과 시합을 가졌는데, 간도성팀과 신경팀이 6대 0과 4대 0으로 각각 참패를 당하였다. 이를 보면 만주국의 축구 실력이 조선은 물론 일본과도

58) 1935년에 개최된 간도성건국기념대운동회의 경우에는 종목이 10개가 있었다.

59) 《滿鮮日報》, 1940. 6. 5, 5쪽

60) 광명학원 중학부는 1939년 1월부터 성립고등국민학교로 되었다. 竹中憲一, 2000, 앞의 책, 111쪽

큰 격차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3회 대회와 다른 팀의 성적으로 보면 준결승에서 봉천이 길림을 3대 0으로 이겼다.

제4회 대회에는 대회 3연패를 이루기 위해서 간도체육연맹후원회(연길조선인민회회장인 최윤주가 회장이고 사무소도 연길조선인민회에 두었음)가 조직되었다. 연길에 4,500원, 용정에 3,500원, 도문에 3,000원, 혼춘에 2,000원, 기타 지방에 2,000원씩 분배하여 기금을 모금하였다.⁶¹⁾ 다른 팀의 성적으로 보면 예선전에서 대련이 봉천을 5대 2로 이기고, 신경이 삼강을 12대 1로 이기고, 길림이 용강을 3대 1로 이겼다. 준결승전에서 대련이 신경을 3대 1로 이겼다. 이 대회는 다음 해 명칭신궁대회에 참가할 만주국대표팀 선발전을 겸하였는데 만주국대표팀에 간도성축구팀의 정수일과 김응호가 선발되었다.⁶²⁾

간도팀은 1941년 6월 만주국체육연맹이 심양 치요다[千代田]운동장에서 개최한 제6회 도시대항축구대회에서도 우승을 차지했다. 성적으로 보면 예선전에서 신경을 3대 2로 이기고(대련이 길림을 1대 0으로 이김), 준결승전에서 심양을 2대 0으로 이기고(대련이 안동을 3대 1로 이김), 결승전에서 대련을 6대 3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했다.⁶³⁾ 간도팀의 인솔자는 연길인쇄공장 지배인 아사모리(조선인)이고, 선수로는 박노석, 최기남, 김호익, 류시준, 양송원, 이원국, 강태현, 박동규, 박송림, 이진기, 박창일 등이 있었다(62~63쪽).

간도성축구대회 중학조 우승팀은 1935년 만주국체육연맹이 창설된 후에 매년 개최한 만주국중등전문학교축구대회의 출전 자격을 얻었기 때문에 경쟁이 치열하였다. 이 때문에 조선에서 선수 스카우트를 격렬하게 벌였다.⁶⁴⁾ 1938년부터 간도성중등학교팀이 3연패의 금자탑을 쌓았다(〈표 3〉).

61) 박혁우·김용철, 1996, 앞의 책, 54쪽

62) 조선인 선수가 2명만 선발된 것은 만주국 정부 측의 민족적 편견 때문이었다(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앞의 책, 72~73쪽).

63) 1940년 4월에 개최된 제5회 대회에서 대련팀이 우승을 차지했다. 결승전에서는 목단강팀이 2대 1로 석패했다. 대련팀은 당시 남만의 축구패왕으로 불렸다(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앞의 책, 74~75쪽).

64) 동흥중학교는 박동규, 김응호, 이혜봉 등을, 대성중학교는 엄봉춘, 박광춘 등을 스카우했다(73쪽).

〈표 3〉 만주국중등전문학교 축구대회에서의 간도팀의 성적

개최 날짜	우승팀	준결승전	결승전
1938. 8	동흥국민고등학교	대련상업(4:1)	여순고공(4:2)
1939. 7. 31	연길고교	대련상업(3:2)	심양사도(3:2)
1940. 9. 15	광명고교	봉천제5중학	신경공학

출전: 연변조선족축구운동사편사조 편, 1992, 『연변조선족축구운동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47~48쪽; 《滿鮮日報》, 1940년 9월 2일, 4면

주: 신경 중앙은행운동장에서 개최되었음

간도성팀은 간도, 동안, 북안, 목단강이 참가하는 동만4성체육대회에서도 1941년과 1942년 등 여러 차례 축구종목에서 우승을 거머쥐었다. 각 팀의 선수 대부분이 조선인이었다.⁶⁵⁾ 1940년 4월에 개최된 제5회 도시대항축구대회에 참가한 팀 중에는 간도팀 외에도 조선인 선수들이 많이 뛰고 있었다. 조선인 선수들은 신경팀에 5명이, 하얼빈팀에도 여러 명이 뛰고 있었고, 길림팀과 목단강팀은 대부분이 조선인 선수였다. 결승전에서 뮌 목단강팀은 모두 조선인 선수로만 구성되었다.

1932년부터 개최된 만주국체육대회의 축구 종목(만주국축구대회)에서의 성적을 보자, 대련(1933·1935·1938년)과 길림(1939·1940·1942년)이 적어도 세 차례 우승을 차지하였고, 간도가 적어도 두 차례(1937·1941년) 우승을 차지하였으며 신경이 적어도 한 차례(1934) 우승을 차지하였다.⁶⁶⁾

1942년 7월 24일부터 26일까지 신경 고다마[兒玉]공원에서 개최된 제11회 만주국체육대회 겸 동아대회선발전 축구 경기는 사회조에서 길림이, 중등학교조에서 은진중학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⁶⁷⁾ 사회조를 보면 준결승전에서 길

65)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앞의 책, 76~77쪽

66) 滿洲帝國政府 編, 1965, 『滿洲建國十年史』, 東京: 原書房, 887쪽

67) 중등학교조를 보면 예선전에서 길림제6국민고등이 안동신흥학교를 2대 0으로 이기고, 장춘공학원이 장춘실무학교를 1대 0으로 이기고, 준결승전에서 은진중학이 길림제6국고를 5대 2로 이기고, 통화1과 장춘이 2대 2로 비겨서 제비뽑기로 통화1이 이기고, 결승전에서 은진이 통화1을 7대 0으로 이기고 우승을 차지하였다(48~49쪽).

림이 간도를 1대 0으로 이기고, 신경이 봉천을 3대 0으로 이기고, 결승전에서 길림이 신경을 1대 0으로 이겼다. 간도성축구팀은 준결승전에서 길림팀에게 패함으로써 “역사 이래 처음으로 큰 수모를 당하였다.”⁶⁸⁾ 이 경기는 보슬비가 내리서 진흙탕이 된 운동장에서 진행했는데 간도팀의 골키퍼가 공을 막으려는 순간에 길림팀의 오용준 선수가 골키퍼의 허리끈을 잡아당기는 바람에 공을 먹었는데 일본인 심판이 골로 인정했다. 이후 길림팀이 전면적인 밀집방어를 해서 승리를 거두었다(64쪽).

마지막으로 국제대회에서의 조선인 선수들의 활약에 대해서 살펴보자. 1939년 8월 18일~20일까지 경성운동장에서 제2회 조만대항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축구경기에 참가한 조선팀은 모두 조선인들로 구성되었고, 만주팀은 일본인 5~6명(2회전의 경우는 5명)을 제외하고는 모두 조선인 선수로 구성되었다. 조선인 선수로는 이치호, 박돌, 홍정적, 김실무 등이 있었다.⁶⁹⁾ 9월 초에 신경과 봉천에서 일만중 친선경기대회가 개최되었다. 조선인 선수가 일본팀에 김용식(경신중학, 보성전문 출신),⁷⁰⁾ 이유형(송실중학, 연희전문 출신, 함흥축구단 주장), 배종호(보성전문 출신, 와세다대팀 주장), 김성간(연희전문 출신)

68) 이 서술은 과장된 것이다. 길림팀은 1939년과 1940년에 개최된 만주국체육대회 축구경기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1940년의 제9회 대회에서는 봉천팀을 2대 3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 당시 길림팀에는 조선인 선수가 8명이 있었으며, “만주국 축구무대에서 간도성팀 다음으로 좋은 성적을 냈다(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앞의 책, 76쪽).”

69) 조선팀은 모두 조선인으로 구성되었다. 《매일신보》를 보면 박돌은 1회전에는 출전했지만, 2회전에는 출전하지 않았고, 축구 1회전에는 이치호 등은 출전하지 않았다(《每日新報》, 1939. 8. 19, 3쪽).

70) 김용식은 1936년 베를린올림픽에 일본대표로 선발되었다. 김용식이 소속된 전경성군은 1935년에 개최된 전일본선수권대회와 명치신궁대회에 우승을 차지하였다. 그런데 일본축구협회는 일본인만 참가하는 동서학생대항전을 중심으로 올림픽 대표팀을 구성하였다. 최종 엔트리에서 김용식은 선수로, 김영근이 후보 선수로 발표되자 선수단에서 이탈하였다. 일본 대표 선수 16명 중 11명이 와세다대팀 출신이었다. 김용식은 우승 후보 스웨덴과의 1회전에 기용되어 도움주기로 결승골을 넣었다. 일본이 전반에서 2대 0으로 뒤지다가 후반에 3골을 넣어 승리를 거두었다(윤경현·최창신, 1997, 『국기축구 그 찬란한 아침』,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92~101·218·278~279·282쪽).

등 4명, 중국팀에 이해봉(문지기, 연희전문 출신, 만주를 거쳐 중국내지로 감), 정용수(연희전문 출신) 등 2명, 만주팀에는 조만대항경기대회에 참가한 조선인 선수들이 있었다.⁷¹⁾

1940년은 체육대회가 많이 개최된 해였다. 이해 축구대회에서 활약한 조선인 선수들을 보면 제11회 명치신궁대회에 참가한 만주국대표팀에 최승준(광명국고), 이석용, 김승호, 윤성창, 김상은(대성중학), 최영준, 김병호, 류시민 등이 있었고(52·62쪽), 제1회 동아대회와 제3회 선만경기대회에 참가한 만주국대표팀에는 정수일, 정수일, 김응호, 홍정덕, 기기명, 이치호, 김승호, 이원호, 박돌, 김실무 등이 있었다.⁷²⁾

1942년 제2회 동아경기대회 축구경기에 참가한 만주국팀에는 간도팀에서 6명, 길림팀에서 5명, 신경시에서 2명이 선발되어 만주국대표팀 17명 중 조선인 선수가 도합 13명을 차지했다. 간도팀에서 선발된 조선인 선수는 박노석,⁷³⁾ 박송림, 박동규, 장한숙 등이었고, 길림팀에서 선발된 조선인 선수는 김응세, 송희규, 차순옥 등이었다. 대회에서는 일본이 중국을 6대 1로 이기고, 일본이 만주를 3대 1로 이기고, 만주가 중국을 3대 1로 이기고, 일본이 몽골을 12대 0으로 이기고, 만주가 몽골을 10대 1로 이겼다. 일본팀에도 김용식, 민병대, 배종호, 이용일, 김성환, 김희수, 이유영 등 7명의 조선인이 포함되어 있었다(65쪽).

도문체육협회가 주최한 간도와 인접한 조선과의 지역적인 축구교류전인 선만국제친선축구대회에서도 간도팀의 실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 1941년 6월에 개최된 1회 대회에는 사회조에는 조선의 청진, 주을, 아오지, 나남, 남양 등

71)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앞의 책, 74쪽

72)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위의 책, 75쪽

73) 박노석은 용정 용강촌 출신으로 1927년 용정 중앙소학교를 졸업하고 비호단에서 활동하였으며, 1933년 영신중학에 입학하였다가 18세에 중퇴한 후 1939년부터 1940년 2년간 길림에 가서 축구팀에서 활동하다가 1940년에 다시 연변에 와서 간도성축구팀에 선발되어 도시대항축구대회에서 우승을 차지했다. 영림서의 초청으로 두 차례 선만대회에 출전하고, 만주국대회에도 출전하여 1942년에 만주국대표팀에 선발되었다(66~67쪽).

팀이 참가하였고, 간도에서는 도문시, 용정시, 왕청영림서 등이 참가하여 왕청 영림서팀이 우승을 차지했다(63쪽). 1942년 9월에 개최된 제2회 대회에서는 중학조에서 용정2팀이 우승을 차지하고, 사회조에서 왕청영림서팀이 우승을 차지했다(49쪽, 65쪽). 이제 간도팀이 하나의 지역팀으로서는 조선의 지역팀을 앞서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V. 간도 조선인 축구와 민족 표상

만주에서 간도의 조선인 축구가 날리고 있었듯이 일본에서도 조선내지의 축구가 날리고 있었다. 1941년에 개최된 제12회 명치신궁대회 축구 일반부에서 평양의 일곡(日穀)팀이 우승을 차지하자,⁷⁴⁾ 조선인 동포들이 운동장 안으로 뛰어들어 와서 축하를 한 데 대해서 신성한 신사봉찬의 대회 위엄을 파괴하였다고 문제를 삼았다. 그러나 축구단 자체는 민족 주체성을 드러내는 팀이 아니었다. 선수들은 조선체육협회가 파견한 감독이나 축구협회이사의 명령을 무시하였으며 경기장에서는 감독에게 목례조차 하지 않았다.⁷⁵⁾ 이 서술을 보면 당시의 감독은 일본인이거나 일본인의 의중대로 움직이는 인물로 짐작된다. 여기서 축구가 가지는 양면성이 드러난다. 이는 간도의 조선인 축구에도 해당이 된다.

74) 일본곡물산업이라는 개인회사인데, 선수는 모두 조선인이었다. 결승전에서 히다치[日立]에 3대 2로 승리를 거두었다. 1939년에 개최된 제23회 전일본 중등부 축구 선수권대회에서 보성중학이 우승을 차지했고, 1940년(제11회)과 1941년(제12회)에 개최된 명치신궁대회 중학부에서 중동중학과 보성중학이 각각 우승을 차지했다. 1939년(제10회, 전경응에 6대 0으로 승리함)과 1940년에 개최된 명치신궁대회 일반부에서 함흥이 2연패를 달성했다. 이 시기에는 “축구하면 조선이다”이라는 말이 절로 나왔다(윤경현·최상신, 1997, 앞의 책, 176쪽).

75) 이하래, 1990, 앞의 책, 214쪽

1925년 이후에는 간도체육회를 통해서 간도의 조선인 체육이 발전해 왔다. 1921년 조선총독부와 일본외무성의 후원으로 용정에서 발간된 『間島新報』의 1925년에서 1937년까지의 기사 면수를 살펴보면 1936년부터 체육기사가 급증함을 알 수 있다. 1935년 이전 시기에는 1928, 1932년에 체육기사가 많았다.⁷⁶⁾ 가장 많이 보도된 스포츠 종목은 야구(17.36%), 무도(7.1%), 축구(6.71%), 스모(6.46%), 정구(5.93%)의 순서였다. 이 외에 씨름(2.67%), 스케이트(2.38%), 경마(2.17%), 유도(2.16%), 검도(1.68%), 농구(1.5%), 자전거(1.1%), 그네뛰기(0.36%) 등이 보도되었다. 일본적인 스포츠로 알려진 무도, 유도, 검도, 궁도, 스모의 기사를 합치면 18.14%에 달하였다. 올림픽 관련 기사가 올림픽이 개최된 해를 중심으로 14.89%에 달하였다.

체육대회의 주최 단체를 보면 일본영사관(198건), 간도체육회(185건), 학교(156건)의 순서였다.⁷⁷⁾ 《간도신보》는 일본의 선전지라는 점에서 조선인 체육활동을 모두 반영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조선인 체육행사를 알기 위해서는 한글로 발행된 《間島日報》을 보아야 하고 중국인 체육행사를 알기 위해서는 중국어 신문인 《民聲報》를 보아야 할 것이다.⁷⁸⁾ 그러나 《간도신보》의 기사는 일본이 조선인 체육활동에 적극적으로 개입하였음을 확인해 준다.

그렇다면 일본은 왜 체육대회를 장려하였을까? 한 연구자는 이에 대해서 “체육운동에 대한 양보정책도 실시하여 군중을 마비시키고 태평세월이라는 가상을 보이려 하였다”라고 해석하였다.⁷⁹⁾ 이 시기를 다루는 연구를 보면 민족체육 현상으로서 YMCA와 청년회의 체육활동, 활쏘기·그네뛰기·씨름경기 등

76) 김경춘·김영웅, 2009, 앞의 글, 867~868쪽. 《간도신보》는 1938년에 만주신문사에 매수되었다.

77) 김경춘·김영웅, 2009, 앞의 글, 868~870쪽

78) 김경춘·김영웅, 2009, 위의 글, 875쪽

79) 박혁우·김용철, 1996, 앞의 책, 51쪽. 《간도신보》의 체육 기사를 분석한 연구에서는 유도, 검도, 스모 등 일본적인 스포츠 종목과 야구, 정구와 같은 일반 종목들에서도 차츰 조선인들이 참가하기 시작했고, 체육 행사를 개최하기 위해서는 만주국 건국 이전에는 일본영사관의, 그리고 만주국 성립 이후에는 만주국체육연맹의 승인을 받아야 했고, 조선인들의 체육 활동은 대부분 만주국의 정책에 이용되었음을 지적했다(김경춘·김영웅, 2009, 앞의 글, 875쪽).

의 부활, 운동경기에서 일본인선수들을 제압하여 민족의식을 고취한 점을 들고, 민중체육 현상으로서 씨름, 보건체조, 역도 등을 들었다. 그리고 민중체육을 주창한 사람들이 국민체육향상, 체육 민중화의 이상을 일제말기 군국주의 체육정책의 이상과 동일시함으로써 일본군국주의의 지배정책에 협조하는 체육으로 전락하게 된 점을 지적하였다.⁸⁰⁾ 이를 보면 민족 또는 민중 체육과 ‘친일’이 서로 꼬여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

1937년에 창간된 『滿洲體育』이라는 잡지에서는 1936년 단오절에 열린 연길현체육대회에 대해서 “중국인(원문은 만족), 일본인, 조선족 관민들이 남녀 노소가 일심으로 단합되어 각종 경기에 참가하여 민족단결정신이 실현된 대회였다”라고 선전하였다. 그러나 이 대회는 축구, 씨름, 널뛰기, 그네뛰기, 육상 경기 등을 진행한 것으로 보아,⁸¹⁾ 사실상 조선인 남녀노소가 단합되는 축제의장이었을 것이다. ‘규율주의’라든지 ‘국가의 전시를 통한 국민통합’이라든지 하는 국가의 의도가 효과가 없었다는 것은 아니다. 그것은 그것대로 어떤 효과를 창출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국가의 의도와는 달리 실제 스포츠 경기에서 나타났던 것은 국가보다는 민족이 더 강력하였다. ‘축구의 조선’이라고 불릴 정도로 일본과 만주국에서 조선인 축구가 약진한 것에는 분명 축구가 민족을 표상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축구는 민족만 표상한 것은 아니었다. 마을 대항 축구경기거나 학교 대항 축구경기에서 자주 경기가 ‘과열’되었던 것은 축구경기가 바로 마을과 학교를 표상하였기 때문이었다. 지역 대항 축구경기도 마찬가지였다. 만주국에서 지역은 민족을 표상할 수 있었다. 스포츠 경기에서의 조선인 선수들의 실력은 조선인의 체력을 표상하고, 조선인의 체력은 다시 조선인의 우수성을 표상할 수 있었다.⁸²⁾ 다음의 서술을 동일한 맥락에서 읽을 수 있다. “1935년부터

80) 이학래 외, 1994, 앞의 책, 270~271쪽

81) 박혁우 · 김용철, 1996, 앞의 책, 50쪽

82) 1936년 올림픽경기에서 손기정이 마라톤에서 금메달을 딴 것은 우연이 아니었다. 이 시기에 축구 종목에서도 조선인의 약진이 있었다. 육상과 축구 이외에도 스피드 스케이트, 자전거, 농구, 권투 등과 같이 조선인은 바로 하는 운동에서 우수한 면모

10여년은 연길·용정 등 각 학교의 체육운동이 가장 흥성하던 시기이다. 우리 조선민족은 체육운동을 민족의 기량을 크게 과시하는 무대로 생각하고, 전민이 단결하여 간고하고도 치열한 경쟁 속에서 민족의 기개를 발휘하기에 노력하였다.”⁸³⁾

조선인 학교는 우수한 축구선수를 배출하는 요람이었다.⁸⁴⁾ 간도에서 조선인 학교 사이에서 축구경기가 과열되게 된 데에는 또 다른 원인이 있었다. 그것은 간도의 조선인 학교가 반일민족단체가 설립한 학교, 종교계통에서 설립한 학교, 중립적인 학교 등으로, 또는 공립, 향립, 사립, 보통, 교회학교 등으로 그 기원이나 유형이 다른 학교로 나누어져 있었다는 점이었다. 이 때문에 조선인 학생들은 축구경기에 참여하면서 일정한 정치적 색채를 띠게 되었다(30쪽).⁸⁵⁾

1939년에 은진중학교에 입학한 사람은 용정의 조선인 학교의 성격을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⁸⁶⁾ “인구가 5만 명이 채 못 되는 용정시에 네 남자중학교와 두 여자중학교가 있었다. (중략) 은진남자중학교와 명신여자중학교는 캐나다 선교부와 조선인 교회들과 기독교 지도자들이 설립 운영하는 학교였다. 광명남자중학교와 광명여자중학교는 세칭 친일파 인사들이 주축이 되어 운영하는 학교였다. 동흥남자중학교는 그 지역의 조선인 민족주의 진영이 설립 운영하

를 보였다.

83) 박혁우·김용철, 1996, 앞의 책, 50~51쪽

84) 각 학교가 배출한 축구 선수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동흥중학교 출신으로는 김응호, 이영광, 최중남, 차금돌, 류시울, 김천을, 허죽산, 박동규가 있었고, 광명중학교 출신으로는 이종갑, 최승준, 김응세, 오용준, 장두열, 신성식, 최승필이 있었고, 은진중학교 출신으로는 박익환, 김호주, 전치권, 노광진, 김진규, 김지성, 박장송, 남중남, 최죽송이 있었고, 대성중학교 출신으로는 오봉희, 박광준, 엄봉춘, 강성철, 조남기, 송휘규, 이진귀, 김상은이 있었고, 연길국민고등학교 출신으로는 박송림, 지광겸, 배상길이 있었다(50쪽).

85) 민족주의를 배태한 개신교계의 명동학교가 1928년에 공산주의를 신봉하는 학생들로 인해서 교장 김약연이 용정으로 이주함으로써 교회의 운영을 취소하게 된 사건에서 간도 조선인 학교에서의 정치성의 일단을 확인할 수 있다(리홍준, 1993, 앞의 책, 177쪽).

86) 이상철, 2010, 앞의 책, 45쪽

는 학교였다. 대성남자중학교는 공산주의자들이 창설하여 운영하는 학교였는데 만주국 치하에서 폐교조치를 당하고 동흥중학교에 흡수가 되었다.” 이와 같이 용정에 있는 조선인 중학교들은 그 성격이 다른 만큼 경쟁도 치열했다. 축구경기가 그 경쟁의 중요한 표상의 하나였다.

이러한 사정은 사회 축구에서도 마찬가지였다. 사회 축구의 배경에 있는 단체들도 시민회, 학우회, 청우회, 비호단 등으로 정치적 색채가 다른 단체, 곧 반일사상단체, 본위주의단체, 친일단체 등으로 매우 다양하였다. 이 때문에 경기 중에 심판의 판정을 따르지 않고 퇴장하거나 우승기를 서로 빼앗아가려는 일이 더러 발생하였다. 이러한 사태는 경찰의 개입을 불러왔다. 1935년부터 간도성축구대회에서는 경찰이 본부석에 앉아 있었고, 헌병이 권총을 차고 심판을 보고, 경찰이 관중석에 앉아서 감독하였다(54쪽).

운동경기 중에 응원대의 활약이 대단했다. 교장이 먼저 전교 교원과 학생들 앞에서 격려 연설을 하고 선수들은 전교 교원과 학생들 앞을 지나 경기장으로 입장하였다. 학생들은 종이꽃을 흔들며 악대의 연주에 맞추어 교가와 응원가를 힘차게 불렀다. 응원대장이 고깔모자나 삿갓을 쓰고 여러 가지 색깔의 천으로 만든 응원복을 입고 응원을 조직했다. 연길에서 간도성축구대회가 개최되면 용정에 소재하는 동흥, 광명, 은진 등 중학교의 졸업생들이 연길거리에서 우승을 격려하는 표어를 붙이고, 용정의 각 중학교 학생들은 점심밥을 싸가지고 연길까지 걸어와서 응원하였다(49쪽).

이러한 응원단의 응원에 힘입어서 경기장에서 선수들도 사기가 대단했다. 1935년 4월 용정에서 개최된 간도성축구대회에 참가한 장동팀은 경기 후에도 국수 한 그릇조차 먹지 못했으며, 1941년 심양에서 열린 만주국축구대회(도시대항경기)의 결승전에 간도팀은 비빔밥 한 그릇 먹고 대련과 결승전을 벌였다(69쪽). 간도팀은 전반에서 3대 0으로 지고 있다가 후반전에 6대 0으로 역전시키는 투지를 보였다(71쪽).⁸⁷⁾

87) “그들은 결승전에 뛰어들기 전에는 비빔밥 한 그릇씩 먹고 우승한 후에는 국수 한 그릇씩 먹어보았다. 그들의 우승은 우리 백의민족의 가슴깊이 민족의 자부심을 심

이러한 간도의 조선인 축구가 어떻게 민족주의와 연결되는가에 대해서는 강경애가 1933년 12월에 『신가정』에 발표한 소설 「축구전」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⁸⁸⁾ 주인공 승호가 S공원 백양나무숲에서 정자, 희숙과 만났다. 1년 전 바로 이때(가을) 학교에서 검거가 일어나 무수한 그의 동무들이 영사관으로 잡혀 들어갔다. 어두컴컴한 수림 속으로 약간씩 보이는 저 전등불은 마치 그의 동무들이 이 Y시에 섞여 있는 듯이 그렇게 드물었다. 그러나 저 불이 마침내 이 공원을 정복할 때가 멀지 않은 것 같았다(473~474쪽). 토의사항은 축구대회 참가 건이었다. 승호 동무들은 축구대회에 참가하여 자신들의 존재감을 대중들에게 알려 주고자 했다. “이번 ××회 주최로 열리는 축구대회에 우리 학교도 참가하는 것이 좋을 듯한데 동무의 생각은 어떠합니까. 표면만이 ××회 주최이지 그 실은 이 Y시 안의 온갖 ××들이 주최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들이 그들 틈에 섞여서 뛰는다더라도 과오만 범치 않으면 됩니다. …… 우리 학교가 작년 검거사건 이래 너무나 죽은 듯한 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출전하는 것은 하필 승리를 거두어보겠다는 것보다도 우리들의 꺾이지 않은 존재를 대중에게 알려 주고자 함이외다. 지금과 같은 반동기에 있어서는 지배계급의 적극적인 탄압에 대중이 낙망을 하고 비관하게 됩니다(475쪽).”

이들은 축구대회에 참가하기 위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해서 남자들은 길회선 철도공사 인부로 들어가서 며칠 일하기로 하고, 여자들은 축구대회와 동시에 개최되는 경마대회(축구장서 바라보이는 바로 정거장 앞벌에서 개최)에서 임시 여급으로 일을 하기로 했다. 그리고 내일 학우회에서 출전여하문제를 정식으로 결정하기로 했다.

축구대회 당일 희숙이와 그의 동무들은 경마장 우편 바라크 속에서 경마권증을 팔며 혹은 사람들에게 찾잔을 나르면서 마음은 축구장에 가 있었다. “차

어주었다(박혁우·김용철, 1996, 앞의 책, 52쪽).”

88) 같은 시기에 강경애는 「異域의 달밤」이라는 수필을 발표했는데, 말미에 33년 11월 용정촌에서라고 적었다. 강경애는 이 수필에서 “붓을 들고 쓰지 못하는 이 가슴! 입이 있고도 말을 못하는 이 마음!”이라고 탄식하고 있다(이영미, 2011, 「재만조선인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강경애 재론」, 『한중인문학연구』 32, 46쪽).

완을 들고 이리 가고 저리 가면서도 마음만은 축구장으로 설 새 없이 달아났다. 이젠 운동이 시작되었나, 우리 선수들이 어느 학교 팀과 시합이 되었나 혹은 되지 않았나 벌써 골을 먹지 않았나 하는 불안과 초조로 발길이 허둥거렸다. 그들은 저 지화를 바라보며 이때까지 느껴보지 못한 어떤 욕심을 부쩍 느꼈다. 저것을 가지면 선수들이 신고 싶어하는 축구화도 살 수 있고 쌀밥도 해서 배가 부르도록 먹일 터인데, 그러면 이번에는 꼭 승리를 할 터이지 하며 아침에 조밥을 먹고 출전한 동무들의 그 모양이 애처롭게 떠오른다. 글썄 조밥을 먹고야 어찌 이긴담 그 헤어진 지까다비를 신고야 어찌 볼을 찬담 …… 축구화를 신은 적에게 ……(478쪽)”

회숙이가 지나가는 한 부인에게 “D학교가 어떻게 되었습니까?”하고 물었더니 “졌소꼬마 볼은 잘 차터구먼도 왜 퍽퍽 꺼꾸러지기를 잘해, 아마 먹지를 잘 못했는지 아이 그게야 애처로워서 어디 보겠더라고, 저편 선수들은 무엇을 잘 먹이는 모양이두면, 그냥 운동장에서까지 뭘 자꾸 먹이두면 그래, 그런데 이편은 냉수만 들이키어 아이 볼 수 없어, 다리를 채어 피가 흐르고 한 학생은 골이 터져서 ……”라는 말을 들었다. 이어서 소설의 마무리는 다음과 같이 서술되어 있다.

“부인은 눈살을 찌푸리며 머리를 흔든다. …… 그들은 졌다는 말에 그만 온전신이 하사분해서 다시 두말도 못하고 멍하니 서 있었다(479쪽). 그들은 울음이 북받쳐 어쩔 줄을 모르다가 부인이 앞을 떠나감을 알았을 때 휘끈 돌아보니아주 남루한 옷을 입은 부인임을 새삼스럽게 발견하였다.⁸⁹⁾ 그들은 순간에 어떤 힘을 불쑥 느끼며 축구장으로 달려왔다. 벌써 동무들은 행렬을 지어 한끝은 시가로 향하였다. 행진곡이 쿵쿵 울린다. 얼핏 바라보니 승호가 깃발을 쥐고 앞장섰다. 행진 그 뒤로는 군중이 물밀듯 따라섰다. 머저 넘어가는 햇빛에 D학

89) 부인을 만나서 물어보는 부분 직전에는 다음과 같은 서술이 있었다. “오늘 저 축구장에는 세상이 다 죽은 것으로 알았던 자기들의 동무가 씩씩한 용자로 나타나서 맘껏 볼을 차는데, 그 볼은 이 Y시 하늘 위에 까맣게 높이 떴을 터인데, 그 축구장을 지나쳐온 저들 그 볼을 무심히 바라본 저들 아아 저들은 과연 자기들과는 딴 인종 같았다. 아니 딴 인종이다.” 여기서 ‘딴 인종’은 민족 내부의 차이를 표현하는 말이다.

교의 깃발은 피같이 붉었다(480쪽).”

곧 학교 간 대항은 계급적 대항을 드러내고 있었다. Y시의 D학교는 가난한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였다. 그렇다면 ‘저편’은 부유한 조선인들이 다니는 학교였을 것이다. 물론 Y시는 용정시이고, D학교는 대성중학교이고, 저편 학교는 광명중학교였을 것이다.

VI. 맺음말

만주 조선인 사회에서 축구는 마을, 학교, 지역의 행사로 발전하면서 결국 민족 행사로까지 발전했다. 이는 곧 축구가 민족 정체성을 강화시켜 주었음을 뜻한다. 1920년대 중반과 1930년대 중반에 조선인의 축구활동이 한 단계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만주의 조선인 사회가 처한 정치적 상황과 이 정치적 상황 속에서의 조선인의 대응을 함축하고 있었다. 만주국 조선인 축구의 발전의 발판은 1910년대부터 시작된 학교운동회였다. 학교운동회는 학생뿐만 아니라 마을 주민이 함께 하는 행사였다. 운동회가 다시 체육대회(대항경기대회)로 발전하면서 선수와 응원단으로 이루어지는 집단 정체성이 확장되었다. 체육대회에서 가장 인기 있는 종목의 하나가 축구경기였다.

축구대회는 처음에는 소년부 경기가 중심이 되었다가 점차 중학부, 청년부 경기로 발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축구는 마을 정체성, 학교 정체성, 도시 정체성, 지역 정체성, 나아가 민족 정체성, 곧 민족주의를 배태하였다. 각 정체성은 반드시 경합적인 것이 아니라 상위 정체성의 아래에 하위 정체성이 통합될 수 있었다. 만주의 정치상황을 반영하여 학교(학우회)의 대항이나 마을(청년회)의 대항은 정치적 대항의 성질을 띠었다. 이것이 축구경기의 열기를 강화시키는 하나의 요인이 되었다.

학생들이 졸업함에 따라서 점차 청년회와 같은 단체가 발전하게 되었다.

청년회는 체육행사를 조직하였는데 이러한 활동이 토대가 되어 더 큰 규모의 체육대회를 개최하는 체육회로 발전하였다. '간도체육회'는 간도체육대회를 통해서 간도라는 지역 정체성을 창출하는 데 기여하였다. 그런데 간도라는 지역 정체성은 곧 민족 정체성이기도 했다. 조선인 축구선수의 활약이 뛰어나자 조선인 축구선수는 간도를 넘어서 확장되어 갔는데, 이는 조선인 축구선수를 매개로 하는 조선인 민족 정체성의 확장을 가져왔다.

이와 같은 아래에서 위로의 축구와 정체성의 발전과 동시에 국가를 통해서 위에서 아래로의 정체성의 발전이 기도되었지만, 축구가 강화시키려고 하는 국가 정체성 형성의 장에서 조선인 축구는 다시 민족 정체성으로 분절되었다. 조선인은 축구경기를 통해서 지역을 넘어서는 민족을 상상할 수 있게 되었다. 이것이 1930년대 후반에 만주국 축구계에서 조선인 선수가 맹활약을 하게 되는 배경이었다.

간도의 축구 발전은 간도의 조선인 사회의 발전과 무관하지 않았다. 간도의 조선인은 축구를 통해서 민족적 긍지를 가질 수 있었다. 축구는 좁게는 마을과 학교라는 정체성을 제공해 주었고, 넓게는 민족(지역)이라는 정체성을 제공해 주었다. 일상생활 속에서 조선인은 식민지의 피해자로서 살아가면서 축구를 통해서 하나의 민족을 상상할 수 있었고, 축구대회에서 조선인 축구팀의 승리를 통해서, 그리고 조선인 선수들의 활약을 통해서 민족의 긍지와 민족이 표상되는 감각을 배양할 수 있었다.

이처럼 만주국 시기의 조선인 스포츠 경기는 민족이라는 상위집단과 지역 또는 학교라는 하위집단을 표상하면서, 결국 하위집단을 상위집단으로 포섭하는 효과를 가져왔다. 스포츠 경기는 대항 경기에서 자기편의 선수와 관중이라는 집단을 표상할 뿐만 아니라 나아가 경기에 참가하는 모든 선수와 관중이라는 집단을 표상하기도 한다. 그 고전적인 사례가 고대 그리스의 올림픽이었으며 근대 올림픽이 창설된 이유이기도 했으며, 일본이나 조선, 만주국, 그리고 간도성에서 스포츠 경기를 장려한 이유이기도 했다. 이와 같이 스포츠 경기는 복합적인 집단을 표상한다는 점에서 경기장은 또한 다양한 집단이 각축을 벌이는 표상의 경기장이기도 했다.

만주에서의 조선인 체육활동의 경우에도 다양한 정체성과 체육 이념이 상호교차하고 있었다. 그러나 조선인 체육활동의 저수지는 조선인의 일상의 생활이었고 이 일상의 생활은 다시 체육활동을 통해서 영향을 받았다. 국가의 개입이나 의도 - 국가는 일차적으로는 국민의 체위향상과 신체의 규율에 관심을 가지며 나아가 체육행사를 국가적 축제로 만듦으로써 국민을 통합하려고 한다. 국가적 축제는 곧 국가의 위엄을 전시하고 나아가 이 위엄을 국민에게 공유시킴으로써 국가를 일종의 금지의 공동체로 만드는 장치이다 - 가 어떠한 간에 조선인 체육활동은 민족적 축제로서 민족적 정체성을 만들어내었다. 이것이 간도와 그 인근 지역에서 축구가 성행하였던 이유였다.⁹⁰⁾

90) 단오절에 개최된 봉천조선인대운동회에 대한 다음의 진술을 보면 조선인 체육활동이 어떻게 국가와 조선인의 일상 속에 놓여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다. 이 진술에서는 국가와 민족이 뒤섞여 있다. “태양력의 통일시행으로 조선 내에서는 그 그림자를 찾기가 어려운 경우에 이르고 있다 할 수 있으나 이양 후의 작은 휴식을 재만동포로 하여금 만주에서 지키게 되는 것은 만주인과의 협화와 만주에 있는 조선인의 문화의 발휘와 향상 때문이다.” 이 진술의 발화자는 친일파(국가)임에도 불구하고 이 진술의 효과는 민족에 경사되어 있다. 첫째 날은 육상경기를 개최하고 둘째 날은 씨름과 그네뛰기를 개최하였다. 관중이 무려 만명에 달하여 재봉조선인의 세대가 얼마나 증가하였는가를 알 수 있게 했고, 의장의 차림으로 보아 생활이 얼마나 안정되었는가를 알 수 있게 했다. 식전 행사는 다음과 같은 순서로 진행되었다. 일만양곡기 계양, 황거요배, 황궁요기, 서탑과 복시장의 양 보통학교생의 연합체조, 동광중학과 공업학원 양교생의 짜짜한 자세 …… 가장행렬에서 지원병 역할을 했다. “넓은 봉천을 동서로 헤어져 살던 동포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각 구역의 대표가 그 구역의 명예를 지고 감투하는 것은 흥미가 있는 일이면서, 위대한 정신교육도 되는 것이다. 향토애가 애국애를 낳는다는 말도 있다. …… 그네뛰기, 씨름은 우리의 금지한 경기인 만큼 관중이 비상한 긴장 속에서 지나는 것은 무귀한 일이다(『재만조선인통신』 4-7, 1939, 47쪽).” 동광학교는 1937년 4월에 흥아협회가 설립한 친일파 학교였다. 1939년 1월에 동광학교 학생들은 봉천 일선만중등학교(日鮮滿中等學校) 연합건국체조(聯合建國體操)에 깃발을 들고 참여해 “우리는 일본의 황국신민이다”라고 외쳤다. 그 모습을 보고 일본인들은 “동광학생들은 일본인이다”며 감탄했다고 한다(전갑생, 2003, 「황군 양성소로 변질된 만주 조선인 동광학교」, 《오마이뉴스》, 2003. 10. 12).

참고문헌

《間島新報》

《滿鮮日報》

《每日申報》

《盛京時報》

《在滿朝鮮人通信》

강덕상, 1970, 『현대사자료』 27

강준만, 2006, 『축구는 한국이다 - 한국축구 124년사』, 인물과사상사

국사편찬위원회, 1983, 『한국독립운동사』 1

김윤식, 1960, 『續陰晴史』, 한국사학회

대한체육회, 1965, 『대한체육회사』

동북조선민족교육과학연구소, 1998, 『중국조선족학교지』,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류연산, 1999, 『혈연의 강들(하)』, 연변인민출판사

박주신, 2000, 『간도한인의 민족교육운동사』, 아세아문화사

박혁우 · 김용철, 1996, 『중국 연변조선족 자치주 체육활동의 역사와 현황』, 대경

북경대학조선문화연구소, 1998, 『체육사』, 북경: 민중출판사

손기정, 1983, 『나의 조국 나의 마라톤』, 한국일보출판국

연변민족교육연구소교육사연구실, 1989, 『연변조선족 교육사』, 논장

연변조선족축구운동사편사조 편, 1992, 『연변조선족축구운동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오재인, 1992, 『미주 땅에 뛰구는 한국인 축구』, 미국 로스앤젤레스 한인축구협회

요시미 순야 외 지음, 이태문 옮김, 2007, 『운동회: 근대의 신체』, 논형

윤경현 · 최창신, 1997, 『국기축구 그 찬란한 아침』,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

이규태, 1987, 『배짱의 한국인』, 기린원

이상철, 2010, 『열린 세계를 가진 나그네』, 기독교장로회출판사

이학래, 1990, 『한국 근대체육의 연구』, 지식산업사

이학래 외, 1994, 『한국근대체육사』, 지식산업사

중국조선족교육사 집필소조, 1991, 『중국조선족교육사』, 동북조선민족교육출판사

최덕수, 2004, 『개항과 조일관계』, 고려대학교출판부

- 최인진, 2006, 『손기정 남승룡 가슴의 일장기를 지우다』, 신구문화사
- 허청선 외, 2002, 『중국조선민족교육사료집』 1, 연변교육출판사
- 강경애, 1933, 「축구전」, 『신가정』(이상경 편, 1999, 『강경애전집』, 소명출판)
- 김경미, 1998, 「을미의숙 성격 규명에 관한 소고」, 『한국교육사학』 20
- 김경춘·김영웅, 2009, 「일제강점기 간도 체육 및 스포츠 변천과정-‘간도신보’의 기사 분석을 중심으로」, 『체육과학연구』 20-4
- 김광희, 「청말 조선인이 꾸린 사립학교(5): 창동학교의 지난날을 그리며」, 『연변문사자료 5 교육사료전집』, 徐紘一·東巖 편저, 『間島史新論-선구자와 ‘친일파’들과의 싸움(1869~1945)』, 서울: 우리들의편지사
- 김성학, 2009, 「근대 학교운동회의 탄생: 화류에서 혼련과 경쟁으로」, 『한국교육사학』 31-1
- 김성학, 2011, 「근대 학교운동회의 팽창: 그 실태와 동인」, 『한국교육사학』 33-1
- 리봉구, 1993, 「청말 조선인이 꾸린 사립학교(2): 동신학교 35년」, 『연변문사자료 5 교육사료전집』, 徐紘一·東巖 편저, 『間島史新論-선구자와 ‘친일파’들과의 싸움(1869~1945)』, 우리들의편지사
- 리진, 1993, 「민국초기 관립학교(2): ‘5·4운동’ 이전의 연길교육」, 『연변문사교육사료전집 5』, 徐紘一·東巖 편저, 『間島史新論-선구자와 ‘친일파’들과의 싸움(1869~1945)』, 우리들의편지사
- 리홍준, 1993, 「청말 조선인이 꾸린 사립학교(6): 반일민족교육의 선봉 명동학교」, 『연변문사교육사료전집 5』, 徐紘一·東巖 편저, 『間島史新論-선구자와 ‘친일파’들과의 싸움(1869~1945)』, 우리들의편지사
- 박기동 외, 2012, 「일제강점기 중국 조선족의 체육활동」, 『한국체육사학회지』 17-1
- 설갑석, 1990, 「근대학교체육의 특성 연구: 민족체육을 중심으로」, 『한국체육학회지』 29-1
- 손춘일, 2008, 「중국 조선족 민족과정과 간민회」, 『북간도지역 한인 민족운동: 명동학교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손환·박상석, 2009, 「한국 최초의 운동회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학회지』 48-6
- 오성철, 2011, 「운동회의 기억: 해방이후 초등학교 운동회를 중심으로」, 『아시아교육연구』 12-1
- 이동진, 2004, 「민족과 국민 사이: 1940년의 체육행사에서 나타나는 만주국, 조선인,

- 공동체], 『만주연구』 1
- 이동진, 2006, 「표상으로서의 스포츠: '조만대항경기대회'를 사례로」, 『만주연구』 4
- 이동진, 2008, 「신경(新京)의 조선인-‘신경실무학교(新京實務學校)’를 사례로」, 『대동문화연구』 60
- 이영미, 2011, 「재만조선인을 바라보는 다른 시선: 강경에 재론」, 『한중인문학연구』 32
- 이충삼, 2004, 「국내 축구 도입시기와 전개 양상에 관한 연구」, 『한국체육과학회지』 13-1
- 이태웅, 2005, 「구한말 최초운동회에 대한 이설」, 『한국체육학회지』 44-4
- 張洗星, 2001, 「大連足球運動史話」, 『足球世界』, 2001(1), 2001(3)
- 정예지, 2011, 「1910년대 북간도 조선인학교의 연합운동회」, 『만주연구』 12
- 朱元寶, 1992, 『大連足球運動史料』, 大連市總工會印刷廠
- 최봉룡, 2008, 「북간도 간민회의 조직과 활동 및 성격」, 『북간도지역 한인 민족운동: 명동학교 100주년 기념』, 독립운동기념관 한국독립운동사연구소
- ‘滿洲國’教育史研究會 監修, 1983, 『滿洲·滿洲國’教育資料集成 12: 少數民族教育』, 東京: エムテイ出版
- 滿洲帝國政府 編, 1965, 『滿洲建國十年史』, 東京: 原書房
- 竹中憲一, 2000, 『滿洲’における教育の基礎的研究 5: 朝鮮人教育』, 東京: 柏書房
- 中村敏雄 外, 1978, 『スポーツナショナリズム』, 大修館書店
- 吉見俊哉, 1994, 「運動會の思想-明治日本と祝祭文化」, 『思想』 11

Zheng, Tiantian, 2007, “Embodied Masculinity: Sex and Sport in a (Post) Colonial Chinese City”, *The China Quarterly*, Vol. 190(June)

인터넷 자료

- 플라마, 2007, 중국 ‘축구의 고향(足球之鄉)’ 연변을 아십니까? (<http://sports.media.daum.net/soccer/news/breaking/view.html?newsid=20070305170206662>, 검색일: 2013. 1. 11)
- 전갑생, 2003, 「‘황군 양성소’로 변질된 만주 조선인 동광학교」, 오마이뉴스 2003. 10. 12(http://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A0000148028, 검색일: 2013. 1. 10).

[ABSTRACT]

Soccer Games among Koreans in Gando: From Villages and Schools to Ethnicity

Lee Dongjin

The soccer games in Gando's Korean society developed into a village event, a school event, and then a district event, and eventually became a national event. This indicates that the soccer game strengthened the national identity of these Koreans. Such development of the soccer events in Gando's Korean society from the mid-1920s to the mid-1930s implies both the political situation the Koreans in Manchuria faced and the reaction they showed against it. The foothold of the development was the school sports events that began in 1910. The school athletic event was for villagers as well as for students, and gave birth to games like soccer matches. With the heat of the sports events leading to the development of sports matches, those games solidified the identity of groups which were comprised of players and cheering squads. Reflecting the politics in Manzhouguo, the soccer matches in a school and a village took on a political movement, and this in turn raised the temperature of the games. As the students graduated, they formed groups such as youth associations, and these associations organized sports events, and then a group specializing in athletic games was born: an athletic association. This association then organized sports events on a larger scale, resulting in forming the identity of a district beyond schools and villages. The identity of the district was none other than the ethnic

identity in Gando where most of the citizens were Koreans. Through soccer matches, Koreans in Gando could imagine ethnicity beyond their region. This is also why Korean players came to the front in Manchuria's world of soccer.

Keywords

sports, competitive representations, soccer games, Koreans in Gando, village and school, ethnicity



동북아역사재단
NORTHEAST ASIAN HISTORY FOUNDATION

[연구윤리위원회 구성·운영 규칙]

제정 2007. 9. 21. 규칙 제19호

개정 2010. 5. 28. 규칙 제43호

제1조(목적) 이 규정은 동북아역사재단 연구윤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를 제안, 수행하거나 연구결과를 발표하는 과정에서 행하여진 위조, 변조, 표절 등 연구의 진실성을 침해하는 다음의 행위를 말한다.
 - 1) '위조'라 함은 자료나 연구결과를 허위로 만들고 이를 기록하거나 보고하는 행위를 말한다.
 - 2) '변조'라 함은 연구와 관련된 자료, 과정 및 연구결과를 사실과 다르게 변경하거나 누락시켜 진실에 부합하지 않도록 하는 행위를 말한다.
 -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과정 및 연구결과 등을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연구에 사용하거나 자신이 이미 발표한 연구결과를 적절한 인용 표시 없이 부당하게 발표하는 행위를 말한다.
2. '연구부적절행위'(이하 '부적절행위'라 한다)라 함은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학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기타 이유로 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3. '제보자'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를 인지한 사실 또는 관련 증거를 위원회에 알린 자를 말한다. 다만,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당해 주장이나 증언에 반하는 사실을 간과한 자는 제보자로 간주하지 않는다.
4. '피조사자'라 함은 제보 또는 위원회의 인지에 의하여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조사 대상이 된 자 또는 조사 수행 과정에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추정되어 조사의 대상이 된 자를 말한다.

5. '예비조사'라 함은 본 조사 실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제보된 사실에 대한 관련 정보를 수집하고 예비적인 사실 확인 절차를 수행하는 것을 말한다.

6. '본조사'라 함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한다.

제3조(기능) 위원회는 재단 소속의 연구자와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 및 재단 학술지에 원고를 게재한 자 등의 연구윤리와 관련된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1. 연구윤리 관련 제도의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의 예방조치에 관한 사항
3. 예비·본조사의 착수 및 조사결과의 승인에 관한 사항
4. 예비조사위원회, 조사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5. 제보자 보호 및 피조사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6. 조사결과의 처리, 후속조치 및 재심의의 처리에 관한 사항
7.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4조(구성)

1. 위원회는 사무총장, 독도연구소장, 역사연구실장, 법률자문관(이하 '당연직 위원'이라 한다)을 포함하여 7인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사무총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논총편집위원장이 수행한다.
2.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3. 당연직 이외의 위원은 재단 부연구위원 이상의 연구직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하며, 그 임기는 2년으로 한다.
4. 위원회의 원활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연구직 직원 중에서 이사장이 임명한 자를 간사로 한다.
5. 위원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전문위원을 위촉할 수 있다.

제5조(회의)

1. 위원회의 회의는 필요한 경우에 위원장이 소집하고 주재한다.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성립하며 출석위원 3분의 2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3.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위원이 아닌 자를 회의에 참석시켜 의견을 들을 수 있다.
4. 회의는 비공개를 원칙으로 한다.

제6조(제보 및 증거보전)

1. 제보자는 위원장에게 구술·서면·전화·전자우편 등 가능한 모든 방법으로 제보할 수 있으며 실명으로 제보함을 원칙으로 한다.
2. 위원회는 제보에 대한 증거보전을 위하여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한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7조(검증시효)

1. 제보의 접수일로부터 만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에 대해서는 이를 접수하였더라도 처리하지 않음을 원칙으로 한다.
2. 5년 이전의 부정행위 및 부적절행위라 하더라도 재단의 운영상의 장애를 초래하거나, 재단의 위상을 심각하게 훼손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이를 조사할 수 있다.

제8조(예비조사위원회)

1. 위원회는 제6조 제1항에 의한 제보를 접수한 경우 예비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3인 이내의 위원으로 예비조사위원회를 구성한다.
2. 예비조사는 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조사 착수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완료하여 위원회의 승인을 받도록 한다.
3. 예비조사에서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검토를 실시한다.
 - 1) 제보내용이 부정행위와 부적절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2) 제보내용이 구체성과 명확성을 갖추어 본조사를 실시할 필요성과 실익이 있는지 여부
- 3) 제보일이 시효 기산일로부터 5년을 경과하였는지 여부
4. 예비조사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본조사 실시 여부 및 판단의 근거
 - 4) 기타 관련 증거 자료

제9조(본조사 착수 및 기간)

1. 본조사는 위원회의 예비조사결과 승인 후 30일 이내에 착수되어야 하며, 이 기간 동안 본조사 수행을 위한 위원회(이하 '조사위원회'라고 한다)를 구성하여야 한다.
2. 본조사는 판정을 포함하여 조사 착수일로부터 90일 이내에 완료하여야 한다.
3. 조사위원회가 제2항의 기간 내에 조사를 완료할 수 없다고 판단될 경우 위원회에 그 사유를 설명하고 기간연장 요청을 하여야 한다.

제10조(조사위원회의 구성)

1. 조사위원회는 5인 내지 7인의 조사위원으로 구성하며 당해 연구 분야에 전문적인 지식 및 경험이 풍부한 자를 3인 이상 포함시켜야 한다.
2. 조사위원으로 전문성과 객관성을 가진 외부 인사를 2인 이상 위촉함을 원칙으로 한다.
3. 당해 조사 사안과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조사위원으로 위촉할 수 없다.

제11조(기피·제척·회피)

1.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 또는 조사위원에게 공정성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때에는 그 이유를 밝혀 위원회에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2. 당해 안전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안전의 심의·의결 및 조사에 관여할 수 없다.
3. 제1항 또는 제2항의 사유가 있다고 판단하는 위원 및 조사위원은 위원회에 회피를 신청할 수 있다.
4. 기피 또는 회피 신청에 대한 결정에 기피신청된 위원이나 회피신청한 위원은 참여할 수 없다.

제12조(조사위원회의 권한과 책무)

1. 조사위원회는 조사과정에서 제보자·피조사자 및 참고인에 대하여 출석과 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조사위원회는 연구기록이나 증거의 상실, 파손, 은닉 또는 변조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상당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3. 조사위원회는 조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조사대상 연구와 연구자에게 부당한 피해가 가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13조(진술 기회의 보장) 조사위원회는 혐의 사실에 대해 피조사자에게 의견을 제출하거나 해명할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4조(결과보고서의 제출)

1. 조사위원회는 조사 완료 후 10일 이내에 조사결과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2. 조사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 1) 제보의 구체적인 내용 및 제보자 신원정보
 -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 혐의 및 관련 연구과제
 - 3) 해당 연구과제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 4)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주장 내용과 그에 대한 판단 및 처리결과
 - 6) 조사위원 명단

제15조(조사결과에 따른 조치)

1. 위원회는 재단 소속 연구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징계 및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여야 한다.
2. 위원회는 재단을 통하여 연구비를 지원 받은 자의 행위가 부정행위 또는 부적절행위에 해당한다는 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를 승인한 때에는 이사장에게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하고 소속 기관장에게 조사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3. 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진실과 다른 제보를 하거나 연구윤리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자에 대해 이사장에게 징계 또는 상당한 제재조치를 건의할 수 있다.

제16조(결과의 통지) 위원장은 조사결과에 대한 위원회의 결정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지체 없이 피조사자 및 제보자에게 통지한다.

제17조(재심의) 피조사자 또는 제보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할 경우 전조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이유를 기재한 서면으로 위원회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제18조(비밀유지의 의무 등)

1. 위원회와 조사위원회는 제보자를 보호하고 피조사자의 명예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제보·조사·심의·의결 및 건의 등과 관련된 일체의 사항은 비밀로 하되 상당한 공개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공개할 수 있다.
3. 위원, 조사위원, 조사에 직·간접적으로 참여한 자, 이사장 및 관계 임직원은 심의·의결·조사 기타 직무수행 과정에서 취득한 정보를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 직을 그만둔 후에도 같다.

제19조(경비)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급할 수 있다.

제20조(운영지침) 기타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별도로 정한다.

부 칙<제19호, 2007. 9. 21>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제43호, 2010. 5. 28>

이 규칙은 이사장의 승인을 받은 날부터 시행한다.

동북아시아역사재단
DONGBUK ASIA HISTORY FOUNDATION

[편집위원회 규정]

1. 편집위원회는 동북아역사 관련 고대·중세·근현대 연구 영역의 전문연구자로 구성하고,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이다.
 2. 편집위원회는 위원장, 편집위원으로 구성한다. 위원장은 동북아역사재단(이하 재단)의 역사연구실장이 수행함을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이사장이 지명할 수 있다. 편집위원장은 재단소속 편집위원 중에서 실무총괄담당자를 임명한다.
 3. 편집위원의 유고 시 편집위원회는 차기 호 논문 심사가 있기 전에 새로운 편집위원을 선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의 편찬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
 - 2) 논총에 게재하기 위한 일체의 논문류에 대한 심사
 - 3) 논총 게재 기획논문, 자료소개, 서평, 설립 등에 대한 기획과 심사
 - 4) 기타 논총 관련 사업에 대한 기획과 심의
 5. 편집위원장은 편집위원회의 회의를 주재하고 논총의 편집과 간행을 총괄한다.
 6. 재단 소속 편집위원은 논총의 편집과 간행에 따른 실무를 담당한다.
 7. 편집위원회는 논총 발간 전에 개최하고, 편집위원회의 진행절차는 편집 및 토의사항을 중심으로 하여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논의한다. 실무총괄 담당자는 편집위원회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 참고자료 및 보고사항을 사전에 준비하고 회의록을 작성한다.
- ※이 편집위원회 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편집위원회 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개최된 동북아역사논총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개정되었고, 2010년 4월 15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논총 간행 및 논문 심사 규정)

1. 논총에는 다음과 관련된 특집, 논문, 설립, 자료소개, 서평 등의 글을 게재한다.
 - 1) 한국사(문화) 및 동아시아사(문화)와 관련된 문제
 - 2) 독도 및 영토 관련 문제
 - 3) 본 재단의 목적에 부합하는 논문
2. 논총은 3월 31일, 6월 30일, 9월 30일, 12월 31일 매년 4회 간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3.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원고를 다음과 같은 과정과 내용으로 심사한다.
 - 1) 편집위원회는 투고된 모든 원고를 논문 제목, 형식요건, 원고분량의 적절성, 재단 목적에 대한 부합성 등을 기준으로 1차 심사하고, 참석 편집위원 과반수 통과 판정을 얻어 2차 심사에 회부한다.
 - 2) 편집위원회는 투고원고 중 논문류의 경우 편당 학계 전문가 3인의 심사자를 선정하여 2차 심사가 이루어지도록 한다. 2차 심사 때에는 공정성을 위해 필자명을 반드시 지운 뒤 심사한다.
 - 3) 심사위원은 심사 의뢰된 논문을 편집위원회의 정해진 양식에 따라 '수정 없이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심사(C)', '게재 불가(D)'의 네 등급으로 판정한 후 편집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 중 B·C등급의 경우 수정사항이, D등급의 경우에는 게재 불가 이유가 반드시 명시되어야 한다.
 - 4) 편집위원회는 심사 통과 논문 편수가 논총의 일반적인 분량을 초과할 경우 편집위원회의 기획과 심사 성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우선 게재 순위를 정한다.
4. 편집위원회는 심사위원과 심사과정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일체를 대외비로 한다. 이외 투고자는 게재가 결정된 논문이라 할지라도 심사위원의 보완 요구가 있을 경우 이를 최대한 존중하여야 한다.

5.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투고자에게 서면 등의 방법으로 통보한다. 논문은 아래와 같은 항목에 의하여 심사한다.

- 1) 논문 제목의 적절성
- 2) 형식요건 및 체제의 정연성
- 3) 논리성 및 독창성
- 4) 학술적 가치
- 5) 인용자료의 적절성
- 6) 분량의 적절성
- 7) 요약문의 적절성

6. 편집위원회는 논총에 투고된 일체의 원고에 대해 심사 종료 후 돌려주지 않는다.

※이 심사규정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규정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논문 심사 내규)

1. 편집위원회는 심사 결과를 다음의 네 가지로 처리한다.

1) 게재 가 : 3인 모두 A로 판정하는 경우 예 : (A, A, A)

2) 수정 후 게재 : 3인 모두 B 이상으로 판정한 경우 / 2인이 A로,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A, B) (A, B, B) (B, B, B) (A, A, C)

3) 수정 후 재심사 : 2인이 A와 B 이하로 판정하고 나머지 1인이 C로 판정한 경우 / 1인이 A나 B로 판정하고 2인이 C로 판정한 경우

예) (A, B, C) (B, B, C) (A, C, C) (B, C, C)

4) 심사위원 교체 재심사 : 2인이 B 이상으로 판정하였는데 1인이 D로 판정한 경우, D 판정 1건에 대해서만 심사위원을 교체하여 재심사함

예) (A, A, D) (A, B, D) (B, B, D)

5) 게재 불가 : 2인 이상이 C나 D로 판정한 경우(A, C, C와 B, C, C는 제외) / 1인이 D로 판정하였는데 A가 포함되지 않은 경우

예) (A, C, D) (A, D, D) (B, C, D) (C, C, C) (C, C, D) (D, D, D)

2. 편집위원회는 논문 편수가 논총의 수록 분량을 초과하거나 또는 편집위원회의 기획 상의 우선순위 등의 사정에 따라 심사 통과 원고 가운데 일부를 필자의 양해 하에 차기 호 또는 차차기 호에 실을 수 있다. 이 가운데 단순히 논총 수록 분량 초과만이 원인일 때에는 심사 성적 순위로 해당 호 게재를 결정한다.

3. 심사 결과 통보는 심사위원이나 과정을 대외비로 한 상태에서 심사 결과와 수정 제의 및 게재 불가 사유를 통보한다.

※ 이 심사 내규는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심사 내규를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고, 2011년 10월 7일 편집위원회에서 재개정되었음

(투고 요령)

1. 동북아역사논총(이하 논총으로 약함)은 전문적인 학술지로서 논문, 설립, 서평, 자료소개 등이 게재된다. 투고하고자 하는 원고는 논총 발간 전 투고신청서와 함께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2. 원고는 반드시 컴퓨터 파일로 작성하여야 한다. 원고 제출방식은 본문의 경우 동북아역사논총 대표메일(nonchong@historyfoundation.or.kr)로, 그림과 사진의 경우 심사용 각 3부를 동북아역사논총 편집위원회 앞으로 보내야 한다. 또한 최종 원고 제출 시 사진은 해상도 300dpi 이상으로 하여 별도 제출한다.
3. 원고분량은 200자 원고지 150장 내외를 기준으로 하되 충분한 논지 전개를 위해 부득이한 경우 70장가량 초과할 수 있다. 그림과 사진의 수량은 논지 전개를 위해 필요한 최소한으로 제한한다.
4. 원고는 제목, 필자(소속기관, 직위), 머리말, 본문, 맺음말, 영문 초록, 영문 주제어, 참고문헌(필요 시)의 순서로 구성한다.
5. 논문의 목차와 소제목은 머리말로부터 순서에 따라 I>1>1)>(1)로 번호 매김을 한다.
6. 인용문헌은 가급적 각주로 표기하되 부득이한 경우에는 참고문헌의 방식을 활용할 수 있다.
7. 각주에서 현대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필자”, “연도”, “논문”, “서책(출판사)”, “쪽수”의 순서로 한다. 앞서 인용한 문헌을 재인용할 때에는 바로 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위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바로 위 이전의 문헌을 인용할 경우에는 “필자”, “연도”, “앞의 글(책)”, “쪽수”의 순서로 인용한다.

예) 동북인, 2006, 「동북아사와 동북문화에 대하여」, 『동북아역사논총』 1호, 1~10쪽

동북인, 2006, 위(앞)의 글(책), 1~10쪽.

8. 각주에서 고중세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작자(필요 시)”, “서책”, “편목”, “인용대문”의 순서로 한다. 이중 고중세문헌은 필요할 경우 판본명이나 영인본명을 밝힐 수 있고, 인용대문 중 전략 중략 후략 등은 “……”로 표기한다. 이외 본문 중의 인용문은 문장 가운데에 삽입되는 경우 “ ” 표시로 묶고, 인용문이 길어 문단을 나눌 경우에는 “ ” 표기 없이 서술한다.

예) 東北人, 『東北集』(東北文化社影印本). “東北有高士, 東北公賢齋鶴擁, 是人也”

9. 서양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책명은 이탤릭체, 논문은 큰따옴표로 표기하고 다음과 같은 순서와 방식으로 인용한다.

예) V. G. Childe, 1932, “Chronology of prehistoric Europe : a review,” *Antiquity* 6, pp. 206~212.

10. 참고문헌을 활용하는 경우에는 본문의 인용처를 밝히고자 하는 곳에 괄호를 치고 그 안에 필자와 인용문헌의 간행연도 및 필요 시 인용 쪽수를 표기한다. 예) (동북인, 2006 : 24)

※이 투고 요령은 2004년 12월 24일 제정된 북방사논총 투고 요령을 승계하여, 2006년 11월 22일 동북아역사재단에서 개최된 제1차 편집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되었음.



前 北方史論叢

동북아역사논총 40호(2013. 6)

초판 1쇄 인쇄 2013년 6월 24일

초판 1쇄 발행 2013년 6월 30일

펴낸이 김학준

펴낸곳 동북아역사재단

등록 제312-2004-050호(2004년 10월 18일)

주소 서울시 서대문구 통일로 81 임광빌딩

전화 02-2012-6065

팩스 02-2012-6189

ISSN 1975-7840

비매품

이 책의 출판권 및 저작권은 동북아역사재단이 가지고 있습니다.
저작권법에 의해 보호를 받는 저작물이므로 어떤 형태나 어떤 방법으로도
무단전재와 무단복제를 금합니다.

